

第8代
議政白書



全州市議會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의 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전주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는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6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8대 의회 기간 중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정우성·최찬욱 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제9대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과 감시, 협력과 동반자의 상생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능한 개혁의회로 가기 위한 열쇠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것이며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전주시의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산적인 정치문화 확립과 지방의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가 지방의회사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1세기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9.

전주시의회 의장 조 지 훈

祝刊辭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제8대 전주시
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 속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열심히 활동해 오신 제8대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전주시의회
의 발전상을 이 의정백서에 담아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은 물론 역사에 남을 기록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발전의 역사도 함께 하고 있어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모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만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한 차원 높은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과 협력은 지역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굼직힌 지역 현안 사업에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
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제8대 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보하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전주시의회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전주시장 송 하 진

第8代 의회 개원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 회가 구성되었다.

- 1949. 7. 4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법률 제32호)
- 1952. 4. 25 초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21명)
- 1956. 8. 8 제2대 전주시의회 의선 선거(16명)
- 1960. 12. 19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18명)
- 1961. 5. 16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
- 1990. 12. 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법률 제4301호)
- 1991. 3. 26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5. 6. 27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5명)
- 1998. 6. 4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40명)
- 2002. 6. 13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5명)
- 2006. 5. 13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 2010. 6. 2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34명)





역대의회 화보



제1대 전주시의회 본회의 장면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제3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제6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제7대 전주시의회 의원 기념촬영





初代 全州市議會 議員

제1구 : 전동, 교동, 고사동, 선북동, 서인동, 대동



전 동
梁 容 泰



교 동
白 南 浙



고사동
權 彛 謙



제5구(동완산동)
議長 金 德 培



선북동(중앙2가)
金 泰 俊



서인동(다가3가)
吳 祥 槿



대 동(다가4가)
柳 壽 福

제3구 : 인후동, 덕진동, 검암동



인후동
柳 詳



덕진동
林 鍾 勳



검암동(금암동)
吳 壽 桓



서신동
李 錫 攢

제4구 : 중화산동,

(1952. 5. 1 ~ 1956. 8. 10)



제1구(고사동)
副議長 李 競 鎬

제2구 : 태평동, 서노송, 중노송동



태평동
曹 東 善



태평동
李 漢 圭



중노송동
崔 正 基



서노송동
印 海 昇



서노송동
張 海 天

서신동, 진북동



진북동
鄭 鎭 浩

제5구 : 서학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서완산동
朴 相 文



서학동
金 奉 大



서학동
宋 錫 斗



第2代 全州市議會 議員

제1구 : 중앙동, 전동



중앙동
崔 二 岩



중앙동
盧 承 煥



전 동
李 仁 石



제4구(서신동)
議長 李 錫 欦

제3구 : 태평동, 덕진동, 금암동,
인후동



금암동
吳 壽 桓



인후동
柳 譔



중화산동
丁 永 麟



제2구(다가동)
副議長 金 榮 坤

제6구 : 풍남동, 교동, 경원동



경원동
金 煥 在



교 동
白 南 浙



상관면(동서학동)
白 盛 基



우전면(평화동)
朴 宗 主

(1956. 8. 20 ~ 1960. 12. 18)

제2구 : 고사동, 다가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孔 炳 獻



서노송동
梁 管 變



중노송동
崔 東 範

제5구 : 서학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제5구(서학동)
副議長 宋 宗 葉



동완산동
張 海 天
('56. 8. 20 ~ '58. 3)



서학동
徐 俊 容
('58. 8. 1 ~ '60. 12. 18)



서완산동
朴 相 文
('56. 8. 20 ~ '58. 2)



서완산동
李 漢 則
('58. 8. 1 ~ '60. 12. 18)

완주군 면의원에서 전주시의원으로 편입(1958. 2. 1)



우전면(평화동)
李 春 根



용진면(우아동)
全 三 同



초포면(전미동)
趙 鉉 準



초포면(전미동)
金 吉 洙



초포면(송천동)
裴 路 童



第3代 全州市議會 議員

제1구 : 중앙동, 교동, 풍남동, 전동



풍남동
李永文



전동
李仁石



제6구(서서학동)
議長 徐俊容

제3구 : 인후동, 금암동, 우아동



인후동
李順信



금암동
鄭忠模

제5구 : 고사동, 다가동, 태평동



고사동
金順成



다가동
金榮坤



태평동
鄭海舟

제6구 : 동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동완산동
李秀昌

(1960. 12. 25 ~ 1961. 5. 30)

제2구 : 경원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서노송동



제2구(남노송동)
副議長 裴 鉀 齊



경원동
李 亨 求



중노송동
朴 石 圭

제4구 : 덕진동, 송천동, 전미동, 호성동



덕진동
李 相 煥



송천동
裴 路 童

제7구 : 서완산동, 중화산동,
서신동, 진북동



서완산동
李 漢 則



중화산동
丁 永 麟

제7구 :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팔복동



평화동
崔 龍 雲



효자동
李 明 坤



第4代 全州市議會 議員



중앙동
楔大圭
(‘91. 4. 15~’93.12.2)



중앙동
姜忠求
(‘94. 3. 30~’95.6.30)



경원동
金永俊



다가동
金俊完



고사동
林永賢



남노송동
慎致範



동완산동
文洪烈



서완산동
林秉模



동서학동
金榮近



풍남동
전반기議長 姜桔求



삼천동
朴大坪



삼천동
柳永振



효자1동
金南田



효자2동
金哲永



인후2동
전반기副議長 盧承錫
(‘91. 4. 15~’92. 6. 9)



인후1동
裴昌坤



인후2동
文幸龍
(‘91. 4. 15~’94. 11. 18)



인후3동
金泳濟



덕진동
權永吉



진북2동
전반기副議長 張判植
(‘92. 9. 3~’93. 4. 14)



팔복동
姜五錫



우아동
張大鉉



우아동
金龍植



호성동
呂誠奎

(1991. 4. 15 ~ 1995. 6. 30)



교 동
南京春



대평1동
梁昌鎬



대평2동
金鍾軒



중노송1동
金鎮煥



중노송2동
林平植



인후1동
후반기議長 崔振鎬



서서학동
李忠河



중화산동
韓鐘南



서신동
金鎮洵



명화동
金有福



전 동
후반기副議長 鄭鳳玉



효자2동
崔洙皖



남고동
李德承



서노송동
趙龍德



진북1동
成重基



덕진동
梁載坤



금암1동
鄭遇成



금암2동
梁雙樹
('91. 4. 15 ~ '93. 8. 27)



금암2동
崔贊旭
('94. 3. 18 ~ '95. 6. 30)



전미동
李義奉



송천동
康大淳



조촌동
姜漢奎



동산동
姜大璇



第5代 全州市議會 議員



중앙동
姜忠求



풍남동
姜桔求



진동
金漢中



다가동
朱宰民



고사동
尹錫根



남노송동
慎致範



동완산동
李熙洙



서완산동
崔明哲



동서학동
李錫煥



인후1동
전후반기議長 崔振鎬



평화동
金有福



삼천1동
李在天



삼천2동
朴大坪



삼천2동
李宰均



경원동
전반기副議長 金成根



남고동
李德承



서노송동
朴鍾憲



진북1동
朴鍾允



진북2동
崔東男



금암2동
崔贊旭



팔복동
朴相喆



우아동
張大鉉



호성동
呂誠奎



송천동
李昌淵

(1995. 7. 1 ~ 1998. 6. 30)



교 동
南京春



대평1동
金東成



대평2동
韓東錫



중노송1동
金鎮煥



중노송2동
崔台浩



서서학동
李忠河



중화산동
崔洛雲



서신동
文喜柱



명화동
朴永基



전미동
후반기副議長 李義奉



효자1동
沈永培



효자2동
朴昌洙



효자3동
趙炯徹



효자3동
崔洙皖



인후2동
李元植



인후3동
林鍾煥



덕진동
黃萬吉



금암1동
金成泰



송천동
吳正禮



조촌동
宋柱炳
('95. 7. 1 ~ '96. 6. 14)



조촌동
姜漢奎
('96. 7. 20 ~ '98. 6. 30)



동산동
金奉基



第6代 全州市議會 議員



중앙동
朱宰民



풍납동
金成根
(‘98. 7. 1 ~ ‘01. 11. 20)



교동
南京春



태평동
金東成



중노1동
金鎭煥



중화산1동
曹志訓



중화산2동
柳昌熙



평화1동
朴永基
(‘98. 7. 1 ~ ‘99. 12. 31)



평화1동
鄭成哲
(‘00. 6. 15 ~ ‘01. 6. 1)



남노송동
전반기議長 慎致範



삼천3동
朴寅奎



효자2동
朴昌洙



효자3동
朴榮子



효자4동
崔洙暉
(‘98. 7. 1 ~ ‘99. 9. 3)



인후2동
전반기副議長 李元植



인후1동
崔振鎬



인후3동
金炳文



덕진동
太光鎬



금암1동
鄭遇成



호성동
姜熙鳳



송천2동
吳正禮
(‘98. 7. 1 ~ ‘00. 2. 9)



송천2동
李義奉
(‘00. 6. 15 ~ ‘02. 6. 30)

(1998. 7. 1 ~ 2002. 6. 30)



중노2동
崔台浩



동완산동
文洪烈



서완산동
林秉吾



동서학동
李錫煥



서서학동
金光守



인후2동
후반기議長 李元植



평화2동
金有福



서신동
李完九



삼천1동
李在天



삼천2동
李宰均



효자1동
후반기副議長 沈永培



효자4동
李鎭完
('99. 12. 18 ~ '02. 6. 30)



서노송동
李彰倫



진북1동
朴鍾允



진북2동
崔東男



금암2동
金鍾潭



판복동
尹重祚



우아1동
張大鉉



우아2동
金龍植



송천1동
金南圭



조촌동
柳泳來



동산동
金奉基



第7代 全州市議會 議員



풍남,교동
金永春



태평동
韓東錫



중노1,2·남노
金眞煥
('02. 7. 1 ~ '06. 5. 11)



동·서완산동
林秉吾



동서학동
朴炳述



서신동
李完九
('02. 7. 1 ~ '06. 5. 16)



삼천1동
高成宰



삼천2동
李宰均
('02. 7. 1 ~ '06. 3. 17)



삼천3동
張泰榮



서노, 진북1동
전반기議長 朴鍾允
('02. 7. 1 ~ '06. 3. 20)



효자3동
朴賢圭



효자4동
成完基



인후1동
崔炳喆
('02. 7. 1 ~ '04. 5. 26)



인후1동
李明衍
('02. 11. 1 ~ '06. 6. 30)



중화산2동
전반기副議長 柳昌熙
('02. 7. 1 ~ '05. 5. 3)



금암2동
崔贊旭



팔복동
尹重祚



우아1동
金明志



우아2동
鄭在彥



호성동
呂誠奎

(2002. 7. 1 ~ 2006. 6. 30)



서서학동
崔周萬



중화산1동
曹志訓



중화산2동
朴世佯
('04. 6. 6 ~ '06. 6. 30)



평화1동
朴星川



평화2동
金州年



중앙동
후반기議長 朱宰民



효자1동
沈永培
('02. 7. 1 ~ '04. 5. 5)



효자1동
全炯直
('04. 11. 1 ~ '06. 6. 30)



효자2동
金哲永
('04. 11. 1 ~ '06. 6. 30)



효자2동
朴昌洙
('02. 7. 1 ~ '04. 5. 6)



진북2동
후반기副議長 崔東男



인후2동
李元植



인후3동
金鍾徹



덕진동
黃萬吉



금암1동
鄭遇成



송천1동
金南圭



송천2동
金成泰
('02. 7. 1 ~ '04. 11. 8)



조손동
姜漢奎



동산동
金奉基
('02. 7. 1 ~ '05. 9. 27)



第8代 全州市議會 議員



가선거구(중앙, 풍남, 노송동)
韓 喆 林 東 燦



나선거구(완산구, 중화산1·2동)
白 炫 圭



다선거구(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金 光 守 崔 周 萬
('06. 7. 1 ~ '10. 4. 5)



('06. 7. 1 ~ '10. 3. 18)



바선거구(삼천2,3동)
張 泰 榮



사선거구(서신동)
姜 永 洙 具 聖 恩



아선거구(효자3,4동)
金 相 暉
('06. 7. 1 ~ '10. 4. 23)



다선거구(덕진, 금암1,2동)
전반기議長 鄭 遇 成
('06. 7. 1 ~ '10. 5. 27)



차선거구(인후1,3, 우아2동)
徐 潤 權 李 明 衍



카선거구(우아1, 호성동)
金 明 志 呂 誠 奎
('06. 7. 1 ~ '10. 3. 16)



다선거구(덕진, 금암1,2동)
전반기副議長 崔 贊 旭



하선거구(우아1, 호성동)
柳 永 國
('06. 7. 1 ~ '10. 4. 1)



權 貞 淑



비례대표
朴 惠 淑
('06. 7. 1 ~ '10. 5. 7)

(2006. 7. 1 ~ 2010. 6. 30)



라선거구(평화2동)
金州年



李源澤
('06. 7. 1 ~ '08. 12. 22)



마선거구(삼천1, 효자1, 2동)
金哲永



劉載權
('06. 7. 1 ~ '10. 1. 28)



바선거구(삼천2, 3동)
金賢德
('06. 7. 1 ~ '10. 4. 23)



다선거구(덕진, 금암1, 2동)
후반기議長 崔贊旭



아선거구(효자3, 4동)
朴賢圭



자선거구(진북, 인후2동)
金昌吉



南官祐



차선거구(인후1, 3, 우아2동)
金鍾徹
('06. 7. 1 ~ '10. 4. 1)



나선거구(완산, 중화산1, 2동)
후반기副議長 曹志訓



鞠朱榮恩



파선거구(송천1, 2동)
金南圭



梁龍模



하선거구(팔복, 조촌, 동산동)
宋尚俊



宋京泰



비례대표

吳賢淑



의정화보



본회의 장면



개원3주년 기념행사



운영위원회(회의장면)



행정위원회(회의장면)



복지환경위원회(회의장면)

문화경제위원회(회의장면)





의정화보



도시건설위원회(회의장면)



행정위원회(현장활동)



복지환경위원회(현장활동)





문화경제위원회(현장활동)



도시건설위원회(현장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면)





의정화보



행정사무감사



가나자와시의회 방문



가나자와시의회 방문





가나자와시의의회 방문



의원 · 직원 연찬회

전라선특별위원회
(철도공단 방문)





의정화보



참여예산제 정책세미나



김천 전주
한마음체육대회



노사화합 청원한마당



시군의원 체육대회



전주시의회 친선체육대회



전주시의회 체험교실





의정화보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전주쌀 팔아주기
협약체결식



전주·완주통합관련 기자회견



성명	강영수 (姜永洙)		
선거구	서신동	생년월일	1951.12.26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e편한세상@ 105/402		
학력 및 경력	- 전주 공업대학 사회체육과 졸업 -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부회장 - 전주비전대학 태권도과 겸임교수		



성명	구성은 (具聖恩)		
선거구	서신동	생년월일	1971.01.19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쌍용@ 602/404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민주당 전북도당 부대변인 - 제8대 행정위 부위원장(후반기)		



성명	국주영은 (鞠朱榮恩)		
선거구	송천1,2동	생년월일	1965.11.11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21-1 한양@ 111/1102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제8대 행정위 부위원장(전반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국철(鞠 喆)		
선거구	중앙, 풍남, 노송동	생년월일	1954.09.10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		
학력 및 경력	-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		



성명	권정숙(權 貞淑)		
선거구	비례대표	생년월일	1945.11.19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남양황실@ 1/1704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이수 - 대한주부클럽 전북지부 이사 - 한중문화협회 여성분과부회장		



성명	김광수(金 光守)		
선거구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생년월일	1958.06.11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 602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완산중학교총동창회장 - 전북행정개혁 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성명	김남규 (金南圭)		
선거구	송천1,2동	생년월일	1958.10.07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현대2차 204/106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졸업 - 제8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후반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성명	김명지 (金明志)		
선거구	우아1,호성동	생년월일	1963.05.26
주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8번지력키 2동402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지방자치학석사) - 제8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전반기) -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 객원연구원		



성명	김상휘 (金相暉)		
선거구	효자3,4동	생년월일	1960.06.16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 103/1506		
학력 및 경력	- 전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도시계획전공) - 전북소설가협회장 - 민주당 완산을 전략기획 위원장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김 종 철 (金 鍾 徹)		
선거구	인후1,3,우아2동	생년월일	1961.05.29
주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58-2 아중현대 107동 503호		
학력 및 경력	-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정동영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성명	김 주 년 (金 州 年)		
선거구	평화2동	생년월일	1958.01.27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59 삼성강남 1/1007		
학력 및 경력	- 원광 보건대학 졸업 -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 - 소년원지도위원 부회장		



성명	김 창 길 (金 昌 吉)		
선거구	진북, 인후2동	생년월일	1966.08.18
주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53-3 융성연립 나동 206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졸업 - 전라북도의회 의장 비서(前) - 전북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장(前)		





성명	김철영 (金哲永)		
선거구	삼천1,효자1,2동	생년월일	1962.09.19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83-6		
학력 및 경력	-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민주당 완산을 의원협의회장, -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8대 전반기) - 제1회 매니페스트 약속대상 수상(우수상)		



성명	김현덕 (金賢德)		
선거구	삼천2,3동	생년월일	1956.02.03
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56-5		
학력 및 경력	- 인천 체육대학 졸업 - 전주시체육회 이사 - 전라북도태권도협회 부회장		



성명	남관우 (南官祐)		
선거구	진북,인후2동	생년월일	1958.10.06
주소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진북동 우성아파트 109동 1103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 경영대학원 수료 - 전라신문사 사장(前) - 제8대 복지환경위부위원장(후반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박현규 (朴賢圭)		
선거구	효자3.4동	생년월일	1964.06.09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51 삼성효자 102동 1505호		
학력 및 경력	-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효자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 제8대 사회복지위원장(전반기) -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성명	박혜숙 (朴惠淑)		
선거구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2.08.05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주공@ 105/1303		
학력 및 경력	- 전주기전대학 졸업 - 전라북도노인복지연구원 사무부총장 - 제8대 문화경제위 부위원장(전반기)		



성명	백현규 (白炫圭)		
선거구	완산,중화산1.2동	생년월일	1956.08.13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새한그린파크 2111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8기 수료 - 전주완산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회장 - 유네스코전북연맹 이사		





성명	서 윤 근 (徐潤權)		
선거구	인후1.3, 우아2동	생년월일	1971.04.05
주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359번지 우정신세계아파트101동 2016호		
학력 및 경력	- 우석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진보신당 전북도당 운영위원 - 전주 비정규 노동네트워크 이사		



성명	송 경 태 (宋京泰)		
선거구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1.01.27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광진산업@ 104/1303		
학력 및 경력	- 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 전북장애인신문사 사장 -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		



성명	송 상 준 (宋尙俊)		
선거구	팔복, 조촌, 동산동	생년월일	1961.02.14
주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93번지		
학력 및 경력	- 우석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평통전주시협의회 덕진지회장 - 제8대 운영위 부위원장(후반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양용모 (梁龍模)		
선거구	송천1,2동	생년월일	1953.05.20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 126/1001		
학력 및 경력	- 한국 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송천뜨란채아파트 대표회장 - 한국방송대학교 전북지역 후원회 자문위원장		



성명	여성규 (呂誠奎)		
선거구	우아1,호성동	생년월일	1946.07.07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51 진흥더블파크 2차 201/302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의회의원과정 수료 - 전주가나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지역발전연구소(아카데미)정치·경제팀장		



성명	오현숙 (吳賢淑)		
선거구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9.01.24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900 주공@ 210/103		
학력 및 경력	- 김제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 - 전주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성명	유영국 (柳永國)		
선거구	팔복,조촌,동산동	생년월일	1952.05.05
주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69 제일@ 103/1508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원 섬유공학과 졸업 - (주)삼양사, Hrvs 총무부장(前)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성명	유재권 (劉載權)		
선거구	삼천1,효자1,2동	생년월일	1955.01.08
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10 세창 짜임@ 108/503		
학력 및 경력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 - 제8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 제8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명	이명연 (李明衍)		
선거구	인후1,3,우아2동	생년월일	1965.08.13
주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029번지 한신휴플러스@ 110동 102호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8대 행정위원장(후반기) - 가톨릭 전주교구청 유향검회 회장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명	이원택 (李源澤)		
선거구	평화2동	생년월일	1970.01.25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우미@ 101/1901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졸 - 시민행동21 사무처장 - 제8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명	임동찬 (林東燦) [개명전:임병오]		
선거구	중앙,풍남,노송동	생년월일	1956.09.30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 105/204		
학력 및 경력	- 전주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전주대학교총동창회 부회장 -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장		



성명	장태영 (張泰榮)		
선거구	삼천2.3동	생년월일	1965.10.04
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2동 1412호		
학력 및 경력	- 2008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정치학석사) -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현) - 민주화운동유공자 및 명예회복		





성명	정우성 (鄭遇成)		
선거구	덕진,금암1,2동	생년월일	1946.04.25
주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20-35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제8대 전주시의회 의장(전반기) - 전주시 생활체육 보디빌딩협회 회장		



성명	조지훈 (曹志訓)		
선거구	완산,중화산1,2동	생년월일	1968.09.30
주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29 현대1차@ 101/102		
학력 및 경력	- 전북대학교 상과대 졸업 - (사)전북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사 - 제6대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 (전반기)		



성명	최주만 (崔周萬)		
선거구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생년월일	1958.03.20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77-1 대승아파트 102동 1506호		
학력 및 경력	-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국회의원 신건 조직강화특별위원장 - 소년원지도위원 부회장, 문화경제위원장 (전반기)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프로필

성 명	최 찬 욱 (崔 贊 旭)		
선 거 구	덕진,금암1,2동	생년월일	1950.07.01
주 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21-185		
학 력 및 경 력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경영대학원 수료 - 제8대 전주시의회 의장(후반기) - 제5대 전주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후반기)		



議政白書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일반현황	53
1. 전주시 연혁	53
2. 전주시 현황	56
제2절 역대 전주시의회 현황	57
1. 제1대 전주시의회	57
2. 제2대 전주시의회	58
3. 제3대 전주시의회	59
4. 제4대 전주시의회	60
5. 제5대 전주시의회	62
6. 제6대 전주시의회	64
7. 제7대 전주시의회	67
제3절 제8대 전주시의회 현황	70
1. 의회기구 및 조직	70
2. 의장단 현황	70
3. 상임위 조직현황	71
4.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71
5. 의회사무국 현황	71

제2장 제8대 의회의 개원

제1절 제8대 의원선거 결과	75
제2절 제8대 의회개원	78
1. 의장단	78
2. 전반기 원구성	78
3. 후반기 원구성	78



제3장 의정활동

제1절 의정활동	81
1. 회기별 회의 개최현황	81
2. 연도별 의안 처리현황	82
3. 청원 처리현황	82
제2절 본회의 운영	83
제 234회 임시회	83
제 235회 임시회	85
제 236회 제1차 정례회	87
제 237회 임시회	89
제 238회 임시회	91
제 239회 제2차 정례회	92
제 240회 임시회	95
제 241회 임시회	97
제 242회 임시회	99
제 243회 임시회	100
제 244회 임시회	101
제 245회 제1차 정례회	103
제 246회 임시회	105
제 247회 임시회	107
제 248회 제2차 정례회	109
제 249회 임시회	111
제 250회 임시회	113
제 251회 임시회	114
제 252회 임시회	116
제 253회 임시회	118
제 254회 임시회	120
제 255회 임시회	122
제 256회 제1차 정례회	123
제 257회 임시회	125
제 258회 임시회	127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129
제 260회 임시회	132
제 261회 임시회	134
제 262회 임시회	136
제 263회 임시회	138
제 264회 제1차 정례회	140
제 265회 임시회	142



제 266회 임시회	144
제 267회 제2차 정례회	146
제 268회 임시회	148
제 269회 임시회	150
제 270회 임시회	152
제3절 상임위원회 운영	154
1. 의회운영위원회	154
2. 행정위원회	159
3. 사회복지(복지환경)위원회	169
4. 문화경제위원회	179
5. 도시건설위원회	186
제4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197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7
2.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200
3.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202
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04

제4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7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07
2. 부서별 처리내용	208
제2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19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19
2. 부서별 처리내용	220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27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27
2. 부서별 처리내용	228
제4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39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39
2. 부서별 처리내용	240

제5장 시정에 대한 질문

제1절 시정에 대한 질문 총괄표	251
제2절 회기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252
제236회 제1차 정례회	252
제239회 제2차 정례회	287
제241회 임시회	337
제246회 임시회	384
제248회 제2차 정례회	421
제251회 임시회	468
제257회 임시회	484
제259회 제2차 정례회	520
제261회 임시회	552
제265회 임시회	586
제267회 제2차 정례회	610
제269회 임시회	650

제6장 5분자유발언

제1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현황	659
제2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660
제235회 임시회	660
제236회 제1차 정례회	664
제237회 임시회	669
제238회 임시회	675
제239회 정례회	677
제240회 임시회	683
제241회 임시회	692
제242회 임시회	694
제243회 임시회	699
제244회 임시회	704
제245회 정례회	711
제246회 임시회	718
제247회 임시회	721
제248회 임시회	726
제249회 임시회	730
제250회 임시회	736
제251회 임시회	739



제252회 임시회	744
제253회 임시회	747
제254회 임시회	755
제256회 정례회	761
제256회 정례회	767
제257회 임시회	773
제258회 임시회	778
제259회 정례회	785
제260회 임시회	791
제261회 임시회	799
제262회 임시회	805
제263회 임시회	814
제264회 정례회	823
제265회 임시회	831
제266회 임시회	836
제267회 정례회	844
제268회 임시회	850
제269회 임시회	859
제270회 임시회	863

부 록

1.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명단	867
2. 의회사무국 직원명단	869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전주시 연혁
2. 전주시 현황

제2절 역대 전주시의회 현황

1. 제1대 전주시의회
2. 제2대 전주시의회
3. 제3대 전주시의회
4. 제4대 전주시의회
5. 제5대 전주시의회
6. 제6대 전주시의회
7. 제7대 전주시의회

제3절 제8대 전주시의회 현황

1. 의회기구 및 조직
2. 의장단 현황
3. 상임위 조직현황
4.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5. 의회사무국 현황

제1절 일반현황

1. 전주시연혁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였으며, 전주이씨의 발상지이고, 전라도(전남북,제주)를 통괄하는 전라 감영의 소재지였고, 현재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이다.

~1000 ● ● ●

~ 3세기(삼한시대)북방 20km 지점에 마한이 도읍함.

~ 6세기말(백제시대)완산이라 부름.

660년 (의자왕 20년) 나당군, 백제왕도를 함락함

685년 (신라 신문왕 5년)완산주를 둠.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완산주를 전주라 개칭함.

892년 (신라 진성왕 6년)전환이 도읍하여 [후백제]라 부름

1000 ~ 1999 ● ● ●

1018년 (고려 현종 9년)강남, 해양, 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라 하고 전주는 안남대도호부라 부름.

1388년 (고종 신우왕) 최유경 전주 부성을 쌓음.

1392년 (조선조 태조 원년)완산 유수부를 둠.

1403년 (조선조 태종 3년)전주부라 부름.

1410년 (조선조 태종 10년)이태조 어용진전을 창건 (동양 12년 진전이라 부름)

1439년 (조선조 세종 21년)전주 실록각을 설치

1442년 (조선조 세종 24년)진전을 경기전으로 개칭

1473년 (조선조 성종 1년)전주사고 건립

1592년 (조선조 선조 25년)태조 영정, 사고전적을 묘향산으로 옮김.

7월, 이치, 웅치에서 왜병을 막음

1597년 (조선조 선조 30년)8월 왜군이 입성, 경기전 등 파괴됨.

1614년 (조선조 광해군 6년)경기전 중건

1675년 (조선조 숙종 원년)위봉산성 창축

1734년 (영조 10년)부성의 개축,남문을 명건루라 부름.

1767년 (영조 43년)정해년 대화로 성문루 소실, 남문 서문 중건 풍남문 패서문으로 고침.

1771년 (영조 47년)조경묘 창건, 이씨 시조 위패를 봉안.

1775년 (영조 51년)완동문 공복문 준공

1812년 (순조 12년)남고산성 중건

1894년 (고종 31년)동학혁명군 전주점령.

1906년 (광무 10년)부성을 철거함.

1914년 10월 1일 전주면을 설치.

1930년 6월 26일 완주군 상관면중 9개리를 전주로 편입.

1931년 4월 1일 부령 제 103호(1930.12.29공포)로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승격.



- 1935년 10월 1일 부령 제112호(1935.9.28공포)로 전주읍이 전주부 승격되어 완주군에서 분리.
-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 32호(1949.7.4공포)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전주시로 개정.
-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 453호(1957.11.6공포)로 완주군 초포면,우전면의 일원,
조촌 용진 상관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
-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공포)로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중 일부를 우아동에 편입
-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색장리 일원과 용진면 산정리중 815필지를 전주시에 편입.
-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공포)로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
- 1988년 7월 1일 시 조례 제1541호(1988.6.30공포)로 전주시에 출장소 설치(완산,덕진).
-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57호(1988. 12. 22공포)로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금상리 및
구이면, 중인리, 용복리, 석구리, 원당리를 전주시에 편입.
-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1591호(1989.3.28공포)로 구제 실시 완산구,덕진구 설치.
- 1990년 7월 1일 시 조례 제1681호(1990.5.18공포)로 효자동을 효자 1동과 효자2동으로 행정동분동(39개동)
- 1990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3046호(1990.7.9공포)로 완주군 이서면 상림리,
중리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중동으로 편입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836호(1992.4.14공포)로 효자2동과 효자3동으로 행정동분동(40개동)
- 1994년 8월 8일 시 조례 제1940호(1994.8.8공포)로 삼천동을 삼천 1동과 삼천 2동으로 행정동분동
(41개동)
- 1994년 12월 1일 시 조례 제1962호(1944.11.24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덕진동 일부를 완산구 경원동,
서신동, 남노송동 일부를 경원동, 중화산동 일부를 서신동, 서신동일부를 덕진동,
동산동, 고랑동, 송천동 일부를 팔복동4가, 고랑동 일부를 전미동으로 구, 동간 경계조정
-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 14434호(1994.12.22공포)로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강흥리, 도덕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으로 편입
- 1995년 4월 12일 시 조례 제 1994호 (1995.4.12공포)로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를 효자동,덕진구 전미동,
호성동 동간경계 조정
- 1995년 4월 20일 시 조례 제1981호(1995.3.28공포)로 완산구 서신동, 삼천 1,2동, 효자1,2,3동을
관할하는 효자출장소 설치
- 1996년 2월 26일 시 조례 제 2024호(1996.2.26공포)로 완산구 평화동을 평화 1동과 평화 2동으로
행정동 분동(42개동)
- 1996년 3월 4일 시 조례 제 2031호(1996.3.4공포)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중노송 2동, 태평2동 일부를
다가동, 동완산동 일부를 서서학동으로 편입 동간 경계 조정.
- 1996년 9월 1일 시 조례 제 2043호(1996.9.1공포)로 완산구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을 중앙동, 경원동,
풍남동, 전동을 풍남동, 태평1동, 태평2동을 태평동으로 통합. 완산구 중화산동을
중화산 1동.중화산 2동,덕진구 우아동을 우아 1동.우아2동, 송천동을 송천 1동.송천2동
으로 효자 출장소 효자3동을 효자3동.효자4동, 삼천2동을 삼천2동.삼천3동으로 행정동
분동.
- 1996년 9월 2일 시 조례 제 2051호(1996.9.2공포)로 완산구 경원동 일부를 풍남동, 평화동(후석골)일부를
서서학동, 덕진구 진북 1동 일부를 금암2동, 금암1동 일부를 덕진동, 우아동 일부를
인후3동으로 동간경계 조정.
- 1997년 10월 4일 시 조례 제2136호(1997.10.4공포)로 완산구 서완산동, 삼천 1동 일부를 완산구 효자 1동
으로 완산구 효자 1동 일부를 완산구 삼천 1동으로 동간 경계조정.



- 1998년 7월 1일 시 조례 제2187호(1998.5.15공포)로 완산구 중노송 1동 일부를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일부를 효자 1동으로 완산구 중화산2동 일부를 서신동으로 완산구 서신동 일부를 중화산2동으로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 일부를 인후3동으로 덕진구 우아2동1가 일부를 우아2동 2가로 덕진구 우아2동2가 일부를 산정동으로 덕진구 산정동 일부를 우아2가로 완산구 평화동1가 일부를 평화동2가로 완산구 평화동 2가 일부를 평화동 1가로 동간 경계조정.
- 1998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187호(1998.8.1공포)로 효자출장소 폐지.
전주시 조례 제2190호(1998.8.1공포)로 행정동 통합.
▶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동 → 동서학동/ ▶ 덕진구 전미동, 송천2동 → 송천2동

2000~ ● ● ●

- 2000년 2월 21일 전주시 조례 제2280호(2000.2.21공포)로 완산구 효자동 1가 일부를 완산구 삼천동1가로 완산구 효자동2가 일부를 완산구 효자동 1가로 완산구 중동 일부를 완산구 상림동으로 경계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552호(2005.7.15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덕진구 진북동 일부를 완산구 태평동으로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완산구 전동 일부를 완산구 중앙동 4가로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를 완산구 평화동 2가로 덕진구 인후동 2가 일부를 덕진구 금암동으로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를 덕진구 인후동1가로 덕진구 송천동2가를 덕진구 송천동1가로 덕진구 도도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남정동으로 덕진구 남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도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덕진구 성덕동 일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구 · 동간 경계 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2553호(2005.7.15공포)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조정
- 2005년 8월 1일 전주시 조례 제 2555호(2005.7.15공포)로 행정동 통합
- 완산구 중앙동+완산구 태평동 → 중앙동
 - 완산구 풍남동+완산구 교동 → 풍남동
 - 완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남노송동+서노송동 → 노송동
 - 완산구 동완산동+완산구 서완산동 → 완산동
 - 덕진구 진북1동+덕진구 진북2동 → 진북동

2. 전주시현황

가. 위치

전주시는 완주군으로 둘러싸여 그 경계의 동쪽은 용진, 소양, 상관면과 서쪽은 이서면과 남쪽은 구이면, 북쪽은 삼례읍과 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구역은 행정구역의 확장과 더불어 일부 지역은 도시화되고 있다.

나. 가구수 및 인구 (2010. 7. 1 현재)

- 인구 : 641,549명(229,243세대)
 - 남 : 316,282 - 여 : 325,267

다. 면적 : 206.28km²

라. 행정구역 및 기구

- 행정구역 : 2구 33동(1,320통)
- 행정기구 : 2구, 4국, 3담당관, 50과, 2직속기관, 8사업소, 33동
 - 공무원 수 : 1,831명

다. 재정규모 : 10,140억원

- 일반 : 8,149 - 특별 : 1,991

제2절 역대 전주시의회 현황

1. 제1대 전주시의회

가. 개요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다음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발발한 동란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5일이었다. 이에따라 전주, 이리, 군산 등 3시와 6개읍 그리고 161개면에서 동시에 실시된 전북지방의 시읍면의원 선거는 총 유권자 837,877명중 762,619명이 투표에 참여해 91.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주를 비롯한 3시의 전체 인구중 40%정도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이중 85,01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전북의 이번 선거에 당선된 의원정수는 전주를 비롯한 3개시가 61명, 6개읍에 91명, 그리고 면의회가 1,976명이었으며, 그 중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21명이다.

제1대 전주시의회 의원중 의장에는 국민당 소속의 김덕배의원, 부의장에는 무소속 이경호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그 밖에 의원 당선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제1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제1구	白南錫	44	회사원	소졸	회사원 1년	무소속
"	李競鎬	49	공 업	중졸	동장	무소속, 부의장
"	梁容泰	29	회사원	대졸	회사원 3년	"
"	權彝謙	44	정미업	소졸	정미업 13년	"
"	吳祥謹	41	회사원	중졸	회사원 15년	"
"	金泰俊	44	상 업	소졸	동장 3년	"
"	柳壽福	37	상 업	중졸	동장 7년	한 청
제2구	印海昇	43	농 업	"	동장	무소속
"	曹東善	45	직조업	"	동장 3년	"
"	催正基	59	농 업	한문수학	동장 3년	"
"	李漢圭	38	회사원	중졸	회사원 5년	자유당
"	張海天	31	상 업	대졸	회사원 3년	무소속
제3구	吳壽植	41	인쇄업	소졸	공무원 6년	자유당
"	柳祥	42	농 업	중졸	동장 1년	무소속
"	林鍾述	32	"	소졸	동장 2년	한청
제4구	李錫吉	38	"	중졸	동장	국민회
"	鄭鎭浩	33	"	소졸	동장	국민당
제5구	金德培	53	"	중졸	동연합회장 2년	국민당, 의장
"	宋錫斗	39	"	소졸	한청 3년	한청
"	金泰大	54	공 업	한문수학	철공업 30년	무소속
"	李相文	58	상 업	소졸	동장 6년	국민회



2. 제2대 전주시의회

가. 개요

1952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총선거에 대비,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해 7월 8일 다시 그 일부가 개정되어 8월 8일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종래 시·읍면장은 각 시·읍면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나, 이를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는 점이었으며, 또한 선거방법이 1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다는 점이다.

이 중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96,613명으로 투표율이 86%정도 되었다. 한편, 전주를 비롯한 3개시의회의 의원정수는 46명이고, 이에 총 125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소속당별 당선자를 살펴보면 자유당 21명, 민주당 10명, 국민회 1명이고, 나머지 14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의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정당별 분포를 보면, 총 16명중 자유당 4명, 민주당 6명, 국민회 1명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제2대 전주시의회 의원중 의장에는 민주당소속 이석찬의원, 부의장에는 자유당소속 김영근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그 밖에 의원 당선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 제2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제1구	최인호	43	상업	중퇴	선구부단장	자유당
"	노승환	40	"	"	인성고 이사장	민주당
"	이인석	37	"	중졸	성심여중사친회이사	"
제2구	최동근	38	무	전문졸	동장	"
"	김영균	38	회사원	대졸		자유당, 부의장
"	양관섭	37	농업	중졸	공무원	민주당
"	공명현	42	"	"	동장	무소속
제3구	유경	46	"	"	동장	민주당
"	오수직	46	출판업	소졸	시의원 4년	자유당
제4구	이석찬	42	농업	중졸	"	민주당, 의장
"	정영련	34	"	"	공무원	무소속
제5구	송완섭	42	제조업	"	주조업 경영	"
"	장해천	35	농업	대졸	시의원 4년	무소속
"	이상운	61	"	소졸	"	국민당
제6구	백남석	49	상업	소졸	"	무소속
"	김환재	36	제조업	대동공전	제조업 경영	"

3. 제3대 전주시의회

가. 개요

1960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4일 각급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자유당에 의하여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같은해 12월 26일 법률 제501호가 공포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되었으나, 각급 지방의회의원은 대체적으로 1960년 8월에야 그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선거는 4.19의거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하게 되었다.

새로이 1960년 11월 1일 공포된 법률 제 563호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같은해 12월 12일 도의회 의원 선거, 12월 19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12월 26일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 도지사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연령이 종전 21세로 낮아졌으며, 따라서 인구대비유권자의 비율도 52.5%로 되었다는 점이다.

전주를 비롯한 3개시의 경쟁률은 의원정수가 48명인데 입후보자가 145명이 등록되어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국 경쟁률 또한 3대 1정도였다.

또한 투표율을 보면 3개시의 총 유권자 154,132명중 103,78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67.3%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전주시의 경우 의원정수가 18명이었는 바, 정당별 당선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1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신민당이 3명, 기타 무소속이 4명이었다.

의장에는 민주당의 서준용의원이, 부의장에는 신민당의 배갑제위원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그 밖의 의원 당선자의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제3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제1구	이영문	37	무	중졸		민주당
"	이인석	40	상업	"	중학사친회장	"
제2구	박석규	25	무	고졸	"	신민당
"	이순재	43	"	국졸	동장	"
"	배갑제	32	"	농업학교	교사	신민당, 부의장
제3구	정충모	35	공업	중졸	공무원3년	민주당
"	이순신	31	언론인	소졸	언론계14년	무소속
제4구	이상오	36	농업	대졸	서중강사	"
"	배로중	51	"	전주농교	전주시의원	"
제5구	정해주	45	무	중학중퇴	봉천건설 임원	민주당
"	김순성	38	"	중졸	교육위원	"
"	김영료	36	"	대졸	전주시의원	무소속
제6구	서준용	37	"	중졸	전주시의원	민주당, 의장
"	이수창	47	상업	상업학교	동완산동장	"
제7구	이한칙	43	무	소졸	전주시의원	"
"	정영린	37	"	중학중퇴	전주시의원	"
제8구	이명균	37	농업	상업학교	전주수조평의원	"
"	최용운	33	무	국졸	민주당 청년부장	"



4. 제4대 전주시의회

가. 개요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법률 제4301호)으로 이듬해인 1991년 실시된 시·군의회의원 선거는 30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역사적인 선거였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1991. 2. 21 전라북도 조례 제2011호)가 제정·공포되어 267개 선거구와 280명의 의원정수가 확정되었다.

투표구는 인구수 증가 등으로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 4. 26)때의 1,202구에서 26구가 증설된 1,228구가 되었다.

이번 선거는 1991년 3월 8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같은해 3월 26일 선거가 실시되었다(대통령공고 제112호)

이번 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1,306,100명으로 전체 인구 2,075,540명의 62.9%였으며 이중 남자는 636,309명, 여자는 669,79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3,482명이 더 많고 지난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 4. 26)의 1,300,208명보다 5,892명이 많은 0.5%가 증가되었다.

전주시는 의원정수가 45명(완산구 25명, 덕진구 20명)인데 입후보자가 111명(완산구 66명, 덕진구 45명)이 등록되어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라북도 경쟁 또한 2.6대1 정도였다.

또한 투표율로 보면 완산구가 유권자 147,349명중 77,97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52.9%의 투표율을, 덕진구가 유권자 142,535명중 71,99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50.5%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전주시의 경우 당선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1명, 50대가 11명, 30대가 8명, 60대 이상이 3명, 20대가 2명이며, 최고 득표자는 완산구의 효자2동 김철영의원(5,293표 56.6%)과 덕진구의 전미동 이희봉 의원(913표 65.8%)이 각각 주인공이 되었다.

제4대 전주시의회의의원중 전반기 의장에는 강길구의원이, 부의장에는 노승석·장판식의원이, 후반기 의장에는 최진호의원이, 부의장에는 정봉옥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의원당선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4대 전주시의회의의원 당선자 현황 ◇

〈완산구〉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중앙동	설 대 규	38	정당인	대학원제	평민당지역자치제대책위원
경원동	김 영 준	49	제과점	대졸	경원동마을금고이사
풍남동	강 길 구	31	무	대졸	전주시자문위원
전동	정 봉 옥	61	체육관장	대학원제	평민당전주을지구부위원장
다가동	김 준 완	52	상업	대학원수료	우진상사대표
고사동	임 영 현	56	약사	대졸	완산구의보직능대표
교동	남 경 춘	27	정당인	대졸	전주·완주지구당청년지부장
태평1가동	양 창 호	42	상업	중졸	전주누비상사대표
태평2가동	김 종 헌	35	건설업	대졸	평민당중소기업대책위원
중노송1가동	김 진 환	41	제과점	대학원졸	뉴-코아제과소운영
중노송2가동	임 평 식	46	상업	중졸	평민당완산지구당 빈민대책위원장
남노송동	신 치 범	45	사업	대학원졸	전북우병협회전주지부회장
동완산동	문 홍 렬	44	상업	대졸	평민당지방자치대책위원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서완산동	임 병 오	34	정당인	대학3년제	평민당 전주, 완산지구총력원
동서학동	김 영 근	63	관광여행사	중졸	인후2동장 역임
서서학동	이 충 하	36	회사원	대학3년제	한국방송대전북법우회부회장
중화산동	한 종 남	60	양봉업	대학원제	한국기독교장로회총리감사
서신동	김 진 순	57	정치인	고졸	평민당 지방자치대책위원
평화동	김 유 복	55	농업	대학원졸	평민당 전주완산구부위원장
삼천동	유 영 진	35	교육운동가	대학원졸	전교조 전주, 완주지회장
삼천동	박 대 평	46	농업		모악금고 이사장
효자1동	김 남 전	48	한약업	대학원수료	양촌당 건재한약방 대표
효자2동	김 철 영	28	정당인	대졸	평민당(전주시을)청년부장
효자3동	최 수 완	58	농장	대졸	완주군운영위원
남고동	이 덕 승	56	농업	대졸	유한회사영일지질이사

〈덕진구〉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서노송동	조 용 덕	34	사업	대학원수료	평민당 전주갑지구당 운영위원
진북1동	서 중 기	49	토건업		성동개발 대표이사
진북2동	장 판 식	53	건설업	대학원수료	평민당 전주갑지구당 운영위원
인후동1가동	최 진 호	41	동원공사대표이사	대학원수료	전북씨름협회이사
인후동1가동	배 창 곤	57	상업	초등학교졸	평민당전주갑지구당 운영위원장
인후동2가동	노 승 석	55	무	대학원수료	평민당창당발기인
인후동2가동	문 행 용	50	약사	중앙대졸	전주시 모래내 약학회 회장
인후동3가동	김 영 제	44	사업	대학원수료	평민당 전주갑지구운영위원
덕진동	권 영 길	49	정당인	대졸	평민당전주갑지구당수석부위원장
덕진동	양 재 곤	55	농업	대퇴	평민당전주갑지구운영위원
금암1동	정 우 성	44	건설업	대학원수료	전주고교 육성회장
금암2동	양 쌍 수	49	건축업	대학원수료	평민당갑지구당운영위원
팔복동	강 오 석	46	자영업	대학1년퇴	전북여객 경리과근무
우아동	장 대 현	38	대송중기 대표이사	대학원재	동신국고 지역협의회 회장
우아동	김 용 식	48	농업	고졸	전주농협 대의원
호성동	여 성 규	44	농업	중졸	새마을 지도자
전미동	이 희 봉	44	미광산업대표이사	대학원수료	평통자문위원
송천동	강 대 순	56	토건업	대학원수료	한국중소주택협회 전북지회장
조촌동	강 한 규	50	농업	고2년퇴	평민당 갑지구당 부위원장
동산동	강 대 선	53	농업	고졸	평통자문위원



5. 제5대 전주시의회

가. 개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1994. 3. 16 제정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1995. 6. 27 실시됐다.

전북 도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1명, 시장·군수 14명 등 지방단체장 15명과 도의원 58명(지역구52, 비례대표6), 시·군의원 283명 등 지방의회의원 341명을 한꺼번에 선출하였다.

투표구는 총 1,093구가 설치되었으며, 선거 지원인력 현황으로는 총 386명(선거사무지원 300명, 단속지원 86명)이 활동하였다.

이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1,360,350명으로 전체인구 2,002,242명의 67.9%였으며 이중 남자는 663,078명, 여자는 697,272명으로 '91. 3. 26 시·군의원선거대비 54.250%가 증가되었다.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45명(완산구 28명, 덕진구 17명)으로 입후보자는 142명(완산구 81명, 덕진구 61명)이 등록되어 평균 3.1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주시의 경우 당선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세 이하 3명, 35세 이하 6명, 40세 이하 5명, 45세 이하 8명, 50세 이하 8명, 55세 이하 7명, 60세 이하 3명, 61세이상 5명이며, 최고 득표자는 완산구 평화동 김유복의원(4,677표)과 덕진구 우아동 장대현의원(7,077표)으로 기록되었으며 최고 득표율은 완산구 중노송동 1동 김진환의원(69.4%), 덕진구 진북1동 박종윤의원(76.8%)로 각각 선출되었다.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중 전반기 의장에는 최진호의원, 부의장에는 김성근의원, 후반기 의장에는 최진호, 부의장에는 이희봉의원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그 밖의 의원 당선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5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

〈완산구〉

선거구별	성명	당시연령	직업	학력	경력
중앙동	강충구	52	상업	대학원제	전민자당원
경원동	김성근	59	상업	대학원졸	국제와이즈맨한국호남지부총재
풍남동	강길구	69	무	대졸	삼우중학교 교장, 시의원
전동	김한중	49	상업	대졸	전북배드민턴협회 이사
가동	주재민	36	정당인	대학원졸	지방자치대책특위다가동위원장
고사동	윤석근	72	상업	고졸	생활체육전주시협의회부회장
교동	남경춘	35	정당인	대졸	성균관청소년유도회전북본부사무장
태평1동	김동성	65	제조업	대졸	전주시 호성·우아·태평1동장
태평2동	한동석	32	광고대행	대졸	장영달국회의원 비서
중노송1동	김진환	50	정당인	대학원수료	뉴-코아 제과 운영
중노송2동	최태호	66	상업	대졸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장
남노송동	신치범	53	시의원	대학원수료	제6대 전주시의회전반기 의장
동완산동	이희수	49	상업	고졸	전주시초등교육연합회장
서완산동	최명철	43	상업	대졸	전주소년원방문지도위원
동서학동	이석환	46	학원강사	대졸	학원강사 11년 5개월
서서학동	이충하	45	시의원	대재	민주당 완산지구당 상무위원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중화산동	최락운	59	건축사	대졸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평화동	박영기	45	원광학원장	대졸	지방자치평화동협회회장
평화동	김유복	64	농업	대학원졸	민주당 완산지구당 부위원장
남고동	이덕승	65	농업	대졸	전주시의회 의원
서신동	문희주	53	회사원	고졸	민주당 완산지구당 중앙위원
삼천1동	이재천	39	무	대졸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장
삼천2동	박대평	55	농업	대학원졸	전주시의원
삼천3동	이재균	36	건설업	고졸	(주)제일토건상무이사
효자1동	심영배	45	전주대강사	대학원수료	전주대 지역연구원
효자2동	박창수	36	종교인	대재	민주당 완산지구당 지방자치효자2동위원장
효자3동	조형철	35	건설업	대졸	금강일보 기자
효자4동	최수완	67	농업	대졸	전주시의원

〈덕진구〉

선거구별	성 명	당시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서노송동	박종현	41	양식업	대졸	민주당 서노송동선거 대책위원장
진북1동	박종윤	49	건축사	대졸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립(주)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진북2동	최동남	52	회사원	대학원수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장
인후동1동	최진호	49	건설업	대학원수료	전주시의회 의장
인후동2동	이원식	52	사업	대학원졸	제6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의의장 전주시 태권도협회 회장
인후동3동	임종환	52	섬유제조업	대졸	기린국교육성회 고문
덕진동	황만길	56	사업	대학원수료	덕진동개발위원
금암1동	김성태	32	정당인	대졸	민주당지방자치발전협의회회지역회장
금암2동	최찬욱	49	건설업	대학원수료	(주)제일 대표이사
팔복동	박상철	61	사업	대졸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장
우아동	장대현	47	정당인	대재	민주당 덕진지구당 정책실장
호성동	여성규	53	무	대학원수료	호성동지역사회개발센터
전미동	이회봉	52	회사경영	대학원수료	민주당전북도지부 사무처차장
송천동	이창연	59	농업	고졸	송천새마을금고 이사
송천동	오정례	32	여성운동가	대졸	민주당 전주시덕진지구당 여성특별위원장
조촌동	송주병	59	정당인	대퇴	민주당 덕진지구당 수석부위원장
동산동	김봉기	59	정당인	대학원수료	민주당 덕진지구당 사무국장



6. 제6대 전주시의회

가. 6대 전주시의회 의원선거 개요

(가) 선거일 : 1998. 06. 04

(나) 의원정수 : 40명(완산구 23명, 덕진구 17명)

(다) 투표현황

구	구 분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완산구	100	208,567	89,589	118,978	43.0
	덕진구	89	184,454	76,592	107,862	41.5

(라) 부재자 투표현황

구	구 분	부재자 신고인수	부재자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완산구	6,372	5,627	745	88.3
	덕진구	5,532	4,952	580	89.5

(마) 전주시의회 최고령 · 최연소 당선자 현황

최 고 령			최 연 소		
선 거 구 명	당 선 자 명	나 이	선 거 구 명	당 선 자 명	나 이
전주시 효자4동	최 수 완	66	전주시 덕진동	태 광 호	29

(바) 무투표 당선자 현황

시 · 군 명	선 거 구 명	선 거 인 수	당 선 자	비 고
	계	224,148		
전주시	교 동	4,491	남경춘	
	중 노 송 1 동	6,340	김진환	
	남 노 송 동	4,712	신치범	
	동 서 학 동 · 남 고 동	9,395	이석환	
	삼 천 1 동	11,035	이재천	
	효 자 1 동	11,366	심영배	
	진 북 1 동	4,596	박종윤	
	진 북 2 동	13,986	최동남	
	인 후 1 동	12,950	최진호	
	인 후 2 동	14,401	이원식	
	팔 북 동	11,127	윤중조	
	동 산 동	11,779	김봉기	

◇ 제6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

〈완산구〉

선거구명	성명	당시연령	직업	학력	경력
중앙동	주재민	35	시의원	대학원졸	전북도지부 부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완산지구당정책실장
풍남동	김성근	57	상업	대학원수료	전주시의회 의원 국제와이즈맨한국남부지소총재
교동	남경춘	34	시의원	대졸	제4대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결산감사위원
태평동	김동성	63	시의원	대학원졸	전주시 호성동·우아동·태평1동장 전주시의회 의원
중노송1동	김진환	48	뉴코아제과	대학원졸	전주시의회 4,5대 의원 우체국근무, 뉴코아제과 경영
중노송2동	최태호	64	상업	독학	전주시의회 의원 사단법인 한국목욕업중앙회부회장
남노송동	신치범	52	시의원	고졸	제4대 전주시의회내무위원장 역임 새정치국민회의전주완산지구당부위원장
동완산동	문홍렬	51	회사원	대졸	새정치국민회의제15대대선상황실장
서완산동	임병오	41	건설업	대재	유종근도지사도정모니터요원 국회의원장영달특별보좌역
동서학동· 남고동	이석환	45	시의원	대학원수료	제5대 전주시의회의원 전주시의회도시건설위원장
서서학동	김광수	39	자영업	대학중퇴	매일신문운영위원장 전주고등법원유치위원회대변인
중화산1동	조지훈	29	정당인	대졸	전주연합조직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 청년연합회장
중화산2동	유창희	37	교차로신문사 대표이사	대학원졸	전주대학교총동창회부회장 교차로신문사대표이사
평화1동	박영기	43	정당인	대재	국민회의완산지구당사무위원 국민회의완산지구당
평화2동	김유복	62	농업	고졸	전주시의회 의원 아태평화재단중앙위원
서신동	이완구	49	제일건설이사	고졸	아태평화재단전주완산지회장 서신자율방범대 회장
삼천1동	이재천	37	시의원	대졸	참교육부회전주지회장 성폭력예방센터운영위원
삼천2동	이재균	34	정당인	대학중퇴	민주당선전부장 국민회의선전부장, 조직부장, 사무위원
삼천3동	박인규	49	자영업	고졸	전주모악새마을금고이사장 국제로터리전주남문클럽부회장
효자1동	심영배	43	대학강사	대졸	국회의원장영달특별보좌역 전주시정연구소장
효자2동	박창수	35	시의원	대재	인권위원회 전북사무부국장 (현)효자2동 전주시의원
효자3동	박영자	36	무	대졸	전북도민일보 문화부 기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효자4동	최수완	66	시의원	대졸	전북대학교 교지수호대책위원장 전주시의원



〈덕진구〉

선거구명	성명	당시연령	직업	학력	경력
서노송동	이창윤	43	서노송동새마을 금고 전무이사	대졸	국민회의중앙당행정발전 특별위원회위원
진북1동	박종윤	48	건축사	대졸	제5대 전주시의회의원
진북2동	최동남	54	회사원	고졸	한국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총전북본부 부의장
인후1동	최진호	48	건설업	고졸	전주시의회 의장
인후2동	이원식	51	사업	고졸	전주시의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덕진지구당사무 위원회부의장
인후3동	김병문	37	자영업	대졸	전북대공과대학 학생회장 전북대공과대학 조교
덕진동	태광호	29	정당인	대졸	정동영의원 보좌관 전북대공대 학생회장
금암1동	정우성	52	건설업	대재	제4대 전주시의회의원
금암2동	김종담	39	사업	대졸	한국방송대학교전북총동문회회장 전주금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
팔복동	윤중조	38	현대자동차정비 인정직업훈련원	대재	아태평화재단 덕진지회장 전주청년회의소(전주JC)제34대회장
우아1동	장대현	45	사업	대학원재	전주시의회의원(4대) 제5대의회 운영위원장
우아2동	김용식	55	농업	고졸	제4대 전주시의회의원
호성동	강희봉	43	상업	대졸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직위원장 국민회의호성동지방자치위원장
송천1동	김남규	39	사료유통업	대졸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 회장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간사
송천2동· 전미동	오정례	30	전주시의원	대재	제5대 전주시의회의원
조촌동	유영래	41	정당인	대졸	새정치국민회의전주덕진지구당사무처장
동산동	김봉기	58	용역사업	중졸	전주시의회의원

7. 제7대 전주시의회

가. 의장단

의장단 \ 기간	전 반 기	후 반 기
의 장	박 종 윤	주 재 민
부의장	유 창 희	최 동 남

나. 전반기 원구성(2002. 7. 1 ~ 2004. 6. 30)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중조	박성천	김명지 김성태 성완기 장태영 조지훈 최주만 한동석
행정위원회	정우성	김주년	김영춘 박병술 여성규 유창희 윤중조 임병오 정재욱 조지훈 최주만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김명지	강한규 김남규 박성천 박현규 장태영 주재민 최동남 최병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김종철	고성재 김봉기 김성태 김진환 성완기 심영배 이원식 최찬욱 한동석 황만길

다. 후반기 원구성(2004. 7. 1 ~ 2006. 6. 30)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한동석	정재욱	고성재 김주년 김철영 박병술 박세양 박현규 조지훈
행정위원회	이완구	정우성	김봉기 김진환 김철영 박종윤 박현규 이원식 이명연 조지훈 황만길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장태영	강한규 김남규 김주년 박세양 성완기 여성규 전형직 정재욱 최동남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최주만	고성재 김명지 김영춘 김종철 박병술 박성천 윤중조 이재균 한동석



◇ 제7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

〈완산구〉

선거구명	성명	당시연령	학력	경력	비고
중앙동	주재민	39	대학원졸	제5,6대 전주시의회 의원	
풍남동·교동	김영춘	51	대졸	풍남동발전협의회위원장 국민생활체육회전주시배구연합회장	
태평동	한동석	39	대졸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민주당 전주시완산지구당 사무차장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동	김진환	52	대학원졸	제4,5,6대 전주시의회 의원 (현)새천년민주당 완산지구당 부위원장	
동완산동 서완산동	임병오	45	대재	전주시의회의원예결위원장 강원옥도지사후보대외협력위원회부위원장	
동서학동	박병술	48	대학원졸	국제라이온스 355-E지구 재무총장역임 민족통일전주시협의회동서학지회회장	
서서학동	최주만	44	대재	성락상가협동조합조합장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	
중화산1동	조지훈	33	대졸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정책부장 새천년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청년위원장	
중화산2동	유창희	41	대학원졸	새천년민주당 완산지구당 수석사무처장 (현)전주시의회 의원	
평화1동	박성천	41	대졸	새천년민주당 전주시완산지구당 조직부장 새천년민주당 평화1동 지방자치위원장	
평화2동	김주년	44	대졸	새천년민주당 평화2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장영달국회의원 특별보좌역	
서신동	이완구	53	대재	전주시의회 의원 민주당전북도지부 도시문제특별위원장	
삼천1동	고성재	31	대졸	전북대학교총학생회장 시민행동21정책팀장	
삼천2동	이재균	38	대학중퇴	제5,6대 전주시의회 의원 민주당 전주시완산지구당 사무국장	
삼천3동	장태영	36	대졸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삼천3동위원장 전북시민운동연 APT공동체연구소사무국장	
효자1동	심영배	47	대학원졸	새천년민주당전주시완산지구당 사무국장 (현)전주대학교법정대학겸임교수	
효자2동	박창수	39	대휴	민주당효자2동지방자치위원장 (현)전주시의회 의원	
효자3동	박현규	38	대졸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전북도지부 기획국장 새천년민주당전북도지부 청년국장	
효자4동	성완기	42	대재	전주녹색연합 공동대표 전주시지역사회발전공동협의회회장	



〈덕진구〉

선거구명	성명	당시연령	학력	경력	비고
서노송동 진북1동	박종윤	52	대졸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정책실장 (현)전주시의회 의원	
진북2동	최동남	55	대졸	한국노총전라북도지역본부상임부의장 (현)전주시의회 의원	
인후1동	최병철	32	대학원재	(유)인후중기이사 (현)(유)범기건설대표	
인후2동	이원식	55	고졸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의회의장(제6대후반기)	
인후3동	김종철	41	대졸	새천년민주당도지부 직능국장 새천년민주당인후3동 지방자치위원장	
덕진동	황만길	59	대재	(현)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회장 부총재 (현)덕진동 새마을금고부이사장	
금암1동	정우성	56	대재	새천년민주당 덕진지구당 상무위원 (현)전주시의회 의원	
금암2동	최찬욱	51	대재	전주시의회 의원 새마을운동전주시지회장	
팔복동	윤중조	42	대졸	(현)전주시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 덕진지구당 사무차장	
우아1동	김명지	39	대졸	새천년민주당덕진구우아1동지방자치위원장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전주덕진지구 회장	
우아2동	정재욱	36	대학원졸	원광대학교 민주동우회 전주지부 회장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 위원	
호성동	여성규	55	고중퇴	4,5대 전주시의회 의원 (현)전주가나안신탁전무	
송천1동	김남규	43	대졸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 회장 35사단이전추구위헌법시민추진위사무국장	
송천2동	김성태	35	대졸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조촌동	강한규	61	고졸	제4,5대 전주시의회 의원	
동산동	김봉기	62	중졸	평화민주당덕진지구당 사무국장 제5,6대 전주시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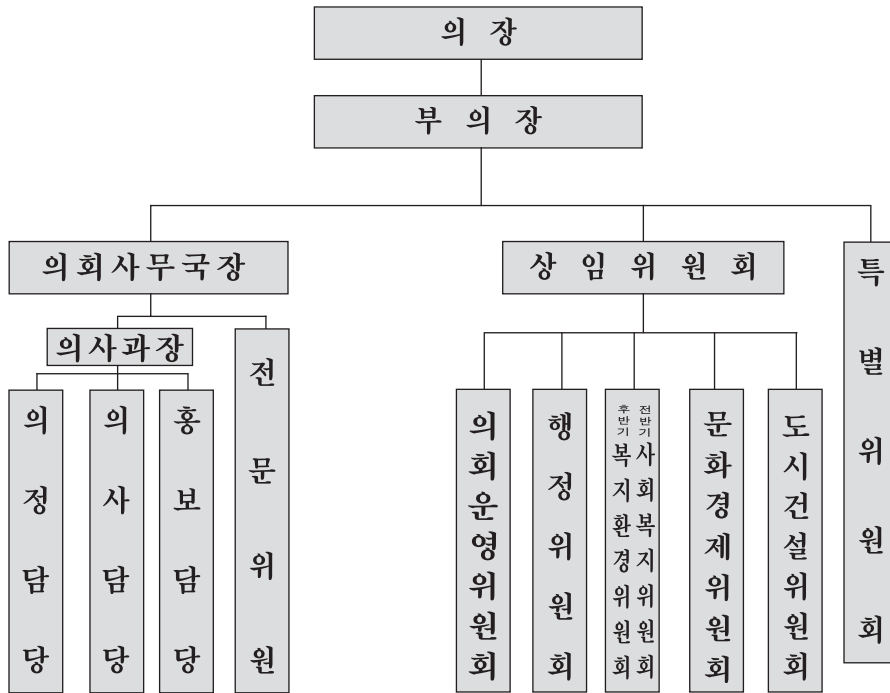


제3절 제8대 전주시의회 현황

1. 의회기구 및 조직

전주시의회는 의원 34명으로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행정위원회 8명, 복지환경(사회복지) 8명, 문화경제 8명, 도시건설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안전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의회 기구표



2. 의장단 현황

의장단 \ 기간	전 반 기	후 반 기
의 장	정 우 성	최 찬 욱
부의장	최 찬 욱	조 지 훈

3. 상임위원회 조직현황

〈전반기〉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지	김창길	김광수 유영국 김현덕 이명연 박혜숙 이원택 양용모
행정위원회	조지훈	국주영은	권정숙 남관우 김광수 서윤근 김명지 유재권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이원택	강영수 송경태 김주년 오현숙 김현덕 최찬욱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박혜숙	구성은 백현규 김남규 여성규 김창길 장태영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유영국	국철 양용모 김상휘 이명연 김종철 임병오 송상준

〈후반기〉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철	송상준	권정숙 국주영은 국철 서윤근 송경태 유재권 임병오
행정위원회	이명연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정우성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남관우	국주영은 김종철 박현규 여성규 오현숙 이원택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권정숙	김명지 박혜숙 서윤근 임병오 조지훈 최주만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강영수	국철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유재권

4.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구분	인원	소관업무
의회운영위원회	9명 겸직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	8명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복지환경위원회	8명	생활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문화경제위원회	8명	경제산업국(동물원), 전통문화국(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위원회	9명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5. 의회사무국 현황

구분	총계	정규직						청경	상용(나급)
		계	4급	5급	6급(계약직)	7급	기능직(계약직)		
정원	47	39	1	4	6(1)	12	16	4	4
현원	47	39	1	5	5(1)	12	16(1)	4	4



제2장 제8대 의회의 개원

제1절 제8대 의원선거 결과

제2절 제8대 의회개원

1. 의장단
2. 전반기 원구성
3. 후반기 원구성

제1절 제8대 의원 선거결과

【전주시】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비율)							무효 투표수	기권수			
전주시 가 선거구	32,534	15,032	열린우리당 임병오	열린우리당 한동석	민주당 국철	민주당 김영춘	무소속 권중주	계	442	17,502				
			3,466(23.8)	3,093(21.2)	4,159(28.5)	2,905(19.9)	967(6.6)	14,590						
전주시 나 선거구	31,528	15,060	열린우리당 박세양	열린우리당 조지훈	민주당 백현규	민주당 이희수	계	412	16,468					
			3,918(26.7)	4,074(27.8)	4,478(30.6)	2,178(14.9)	14,648							
전주시 다 선거구	30,347	14,812	열린우리당 김광수	민주당 박병술	민주당 최주만	무소속 박성천	무소속 이중하	무소속 정유복	계	308	15,535			
			4,430(30.5)	3,632(25.0)	3,853(26.6)	1,089(7.5)	279(1.9)	1,221(8.4)	14,504					
전주시 라 선거구	32,976	16,727	열린우리당 김주년	열린우리당 이원택	한나라당 백종완	민주당 이도영	민주당 이재영	계	355	16,249				
			5,174(31.6)	4,830(29.5)	572(3.5)	4,158(25.4)	1,638(10.0)	16,372						
전주시 마 선거구	33,736	15,297	열린우리당 김철영	열린우리당 유복렬	민주당 유재권	민주당 전형직	무소속 함덕민	계	359	18,439				
			4,530(30.3)	3,267(21.9)	3,676(24.6)	2,786(18.7)	679(4.5)	14,938						
전주시 바 선거구	32,520	15,129	열린우리당 이중수	열린우리당 장태영	민주당 김현덕	민주당 정종명	민주노동당 정성용	무소속 김태영	계	330	17,391			
			3,161(21.4)	3,249(22.0)	3,247(21.9)	1,688(11.4)	1,758(11.9)	1,696(11.5)	14,799					
전주시 사 선거구	31,539	15,416	열린우리당 강영수	열린우리당 구성은	민주당 송병연	민주당 신재봉	민주노동당 서선희	무소속 김영옥	무소속 박삼용	무소속 유명환	354	16,123		
			4,706(31.2)	2,613(17.3)	2,481(16.5)	1,170(7.8)	2,023(13.4)	319(2.1)	593(3.9)	1,157(7.7)			15,062	
전주시 아 선거구	26,902	13,839	열린우리당 박현규	열린우리당 정상도	민주당 김상휘	민주당 채영병	민주노동당 허옥희	무소속 성완기	계	241	13,063			
			3,306(24.3)	2,571(18.9)	3,317(24.4)	1,770(13.0)	1,395(10.3)	1,239(9.1)	13,598					
전주시 자 선거구	28,385	13,691	열린우리당 김창길	열린우리당 최동남	민주당 남관우	민주당 최봉식	무소속 이원식	계	358	14,694				
			3,488(26.2)	2,820(21.2)	2,833(21.2)	2,242(16.8)	1,950(14.6)	13,333						
전주시 차 선거구	43,221	20,122	열린우리당 김종철	열린우리당 박문권	열린우리당 정재욱	민주당 김영제	민주당 이명연	민주당 정창수	민주노동당 서윤근	계	457	23,099		
			5,134(26.1)	2,184(11.1)	2,356(12.0)	2,236(11.4)	4,068(20.7)	1,118(5.7)	2,569(13.1)	19,665				
전주시 카 선거구	27,067	13,215	열린우리당 김명지	열린우리당 이병도	민주당 여성규	민주당 윤숙자	계	362	13,852					
			3,695(28.7)	3,654(28.4)	3,985(31.0)	1,519(11.8)	12,853							
전주시 타 선거구	29,518	12,955	열린우리당 정우성	열린우리당 황만길	민주당 소진중	민주당 최찬욱	무소속 이충인	무소속 임용봉	계	338	16,563			
			3,683(29.2)	2,542(20.1)	1,995(15.8)	3,476(27.6)	465(3.7)	456(3.6)	12,617					
전주시 파 선거구	38,701	19,712	열린우리당 국주연	열린우리당 간남규	열린우리당 송성근	민주당 김승중	민주당 성은순	민주당 송기창	민주노동당 양봉모	한배준 김진홍	무소속 김진홍	무소속 백민숙	512	18,989
			3,792(19.8)	3,003(15.6)	2,433(12.7)	1,375(7.2)	1,802(9.4)	1,427(7.4)	2,758(14.4)	252(1.3)	1,900(9.9)	458(2.4)		
전주시 하 선거구	31,720	14,472	열린우리당 유영국	열린우리당 윤중조	민주당 박철우	민주당 송상준	무소속 오승준	무소속 이상은	무소속 이은기	무소속 이인규	계	401	17,248	
			2,975(21.1)	2,675(19.0)	2,604(18.5)	2,772(19.7)	593(4.2)	749(5.3)	941(6.7)	762(5.4)	14,071			



제8대 전주시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 력	경 력
전주시 가	임병오	49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지방자치법) 3학년	• 구도심활성화심의위원회(전주시청) • 전주시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지도위원
전주시 나	국철	51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졸업	•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 노송동 방위협의회장(현)
전주시 나	조지훈	37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 전주시의원(현) • 열린우리당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전주시 나	백현규	49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2년 재학중	• 민주당전북도당운영위원장 • 전주시배구협회 회장
전주시 다	김광수	47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제6대 전주시의회의원 • 완산중학교 총동창회장
전주시 다	최주만	48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지방자치법) 석사과정 2년 재학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 전주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
전주시 라	김주년	48	전주대학교 화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전주시의회 제7대 2004년 결산감사 대표 •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 라	이원택	36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시민행동21 사무처장 • 열린우리당전북도당 청년2 국장
전주시 마	김철영	43	박사과정 수료	• 제4,7대 전주시의원 • 열린우리당전라북도당 행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시 마	유재권	51	우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세창 Zzaim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 • 사회복지법인 가나안노인복지재단 운영이사
전주시 바	장태영	40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1년 재학	•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정 및 명예회복
전주시 바	김현덕	50	인천전문대학 무도과 졸업	• 전주시체육회이사 • 태권도효문체육관장
전주시 사	강영수	54	전주공업대학 사회체육과 졸업	• 대한태권도협회이사 • 열린우리당전북도당체육특별위원장
전주시 사	구성은	35	전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우리당전라북도당 부대변인 •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사
전주시 아	박현규	41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제7대 전주시의원 • 제7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전주시 아	김상휘	45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전북소설가협회 회장 • 짚, 희망의봉사단장
전주시 자	김창길	39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 졸업	• (현)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사회봉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전북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주시 자	남관우	47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 (전)전주 진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바르게살기운동전북협의회 사무차장
전주시 차	김종철	45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재학중	• 제7대 전주시의회의원 • 대한주태관리(주)대표이사
전주시 차	이명연	40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제7대 전주시의원(현) • 민주당 전라북도당 기획실장(현)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 력	경 력
전주시 차	서윤근	35	우석대학교 국문과 졸업	• (전)민주노동당전주시덕진구지구당 사무국장 • (현)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공동본부장
전주시 카	김명지	43	전북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과과정3학년 재학중	• 전주시의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전주시덕진구지회장
전주시 카	여성규	59	미기재	• 전주시 제4,5,7대 의회의원 • (전)가나안신협전무
전주시 타	정우성	60	전주공업대학 건축과 졸업	• 전주시의회의원(4,6,7대) • 열린우리당금암1동운영위원
전주시 타	최찬욱	55	전주농림고등학교 졸업	• 전주시의회의원 3선(4,5,7대) • (현)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전주시 파	국주영은	40	전북대학교육대학원 졸업	•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여성위원장(현) • 열린우리당전북도당여권신장특별위원회부위원장(현)
전주시 파	김남규	47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 • 제6~7대 전주시의회의원
전주시 파	양용모	5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현)민주노동당전북도당지방자치위원장 • (현)전주송천동주공아파트대표회의회장
전주시 하	유영국	54	전북대학교 대학원 섬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주)삼양사 총무부장(전) • (주)휴비스 총무부장(전)
전주시 하	송상준	45	전주우석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전주시 동산동 주민자치 위원장 • (현)전주시 조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비례대표〉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 력	경 력
전주시	권정숙	60	군장대학 사회복지계열 1학년 재학	• (현)대한주부클럽 전북지부이사 • (현)한,중 문화협회 여성분과 부회장
전주시	송경태	45	서남대학교 일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 (현)시각장애인도서관 관장 • (현)전북장애인 신문사 사장
전주시	박혜숙	43	전주기전대학교 케어복지학과 졸업	• 민주당 전북도당 총무국장 • 전라북도 여성정치 발전센터 홍보위원장
전주시	오현숙	37	김제여자고등학교	• 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 부위원장 • 전주시 동신초등학교 운영위원



제2절 제8대 의회개원

1. 의장단

의장단 \ 기간	전 반 기	후 반 기
의장	정 우 성	최 찬 옥
부의장	최 찬 옥	조 지 훈

2. 전반기 원구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김명지	김창길	김광수 김현덕 박혜숙 이원택 양용모 유영국 이명연
행 정 위 원 회	조지훈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김명지 남관우 서윤근 유재권
사 회 복 지 위 원 회	박현규	이원택	강영수 김현덕 김주년 송경태 오현숙 최찬옥
문 화 경 제 위 원 회	최주만	박혜숙	구성은 김남규 김창길 백현규 여성규 장태영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김철영	유영국	국 철 김상휘 김종철 송상준 양용모 이명연 임병오

3. 후반기 원구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김종철	송상준	권정숙 국주영은 국철 서윤근 송경태 유재권 임동찬
행 정 위 원 회	이명연	구성은	김철영 김현덕 백현규 송경태 송상준 정우성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장태영	남관우	국주영은 김종철 박현규 여성규 오현숙
문 화 경 제 위 원 회	김남규	권정숙	김명지 박혜숙 서윤근 임동찬 조지훈 최주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김광수	강영수	국 철 김상휘 김주년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유재권





제3장 의 정 활 동

제1절 의정활동

1. 회기별 회의 개최현황
2. 연도별 의안 처리현황
3. 청원 처리현황

제2절 본회의 운영

제 234회 임시회~ 제 270회 임시회

제3절 상임위원회 운영

1. 의회운영위원회
2. 행정위원회
3. 사회복지(복지환경) 위원회
4. 문화경제위원회
5. 도시건설위원회

제4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3.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절 의정활동

1. 회기별 회의 개최현황

기간 : 2006. 7. 5 ~ 2010. 6. 25 (제234회 ~ 제270회까지)

회기	기간	일수	본회의	운영	행정	사회 문화	사회 복지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도시 건설	특별 위원회
234(임)	2006. 07.05~07.06	2	2	1	1	1				1	
235(임)	2006.07.24~08.03	11	2	1	5	5				4	4
236(임)	2006.09.04~09.15	12	4	2	1	3				3	4
237(임)	2006.11.01~11.03	3	2	1	2	1				2	
238(임)	2006.11.07	1	1				1		1		
239(정)	2006.11.23~12.20	29	5	1	4		4		4	6	22
240(임)	2007.01.16~01.22	7	2		3		2		3	3	
241(임)	2007.03.09~03.16	8	4		1		1		1	2	
242(임)	2007.04.11~04.16	6	2				1		1	1	
243(임)	2007.05.15~05.17	3	2		1					1	
244(임)	2007.06.15~06.25	11	2	1	2		2		1	2	
245(정)	2007.07.10~07.24	15	2	1	3		2		3	3	5
246(임)	2007.09.07~09.14	8	4		1		1		1	1	
247(임)	2007.10.23~10.30	8	2	1	2		1		1	1	1
248(임)	2007.11.22~12.20	30	5	1	3		4		4	5	11
249(정)	2008.01.24~01.30	7	2		3		2		3	3	
250(임)	2008.02.20~02.21	2	2		1						
251(임)	2008.03.12~03.19	8	4		1					1	
252(임)	2008.04.14~04.17	4	2				1		1	1	
253(임)	2008.05.20~05.23	4	2		1		1			1	
254(임)	2008.06.11~06.20	10	2	1	2		3		3	3	
255(임)	2008.07.01~07.02	3	2	1	1		1		1	1	
256(정)	2008.07.10~07.24	15	2	1	3		2		3	4	7
257(임)	2008.09.05~09.11	7	4	1	1		1			1	
258(임)	2008.10.17~10.23	2	2	1	1		1		1	2	
259(정)	2008.11.19~12.02	15	5	1	4		4		4	5	14
260(임)	2009.02.09~02.13	5	2	1	2			3	3	3	
261(임)	2009.04.02~04.09	4			2			1	1	1	
262(임)	2009.05.12~05.15	4	2		1				1	1	
263(임)	2009.06.11~06.16	6	2		1			1		1	5
264(정)	2009.07.06~07.22	17	2	1	3			4	5	5	11
265(임)	2009.09.03~09.10	8	4		1			1	1	1	2
266(임)	2009.10.14~10.20	7	2	1	1			1	1	1	3
267(정)	2009.11.23~12.21	30	5	1	3			4	4	5	12
268(임)	2010.01.21~01.27	7	2	1	2			2	3	2	1
269(임)	2010.03.29~04.09	12	3	1	1			1	1	1	
270(임)	2010.06.17~06.25	9	2		1			1	1	1	4



2. 연도별 의안 처리현황

기간 : 2006. 7. 5 ~ 2010. 6. 25 (제234회 ~ 제270회까지)

구분	조례 안	동의 안	결의 안	건의 안	예산 안	승인 안	의견 창취	규칙 안	회기 결정	보고 서	선거 선임	행정 감조사	출석 요구	기타
2006년	23	35	5		5	2	2		5	5	2	1	1	3
2007년	54	33	6		3	3	7		8	2		1	1	2
2008년	56	23	12	1	18	2	12	3	10	3	5	1	1	3
2009년	50	22	6		19	4	7	1	8	2		1	1	3
2010년	20	15	4	1	4		6	1	4	2	5	1	1	1

3. 청원 처리현황(16건)

청원 번호	건 명	소개의원	청원자	접수일	소관위	처리결과
1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김상희	김만균 외 96인	2006. 8. 21	도시건설	불채택
2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피해주민 보상청원	김현덕	김정동 외 40인	2006.10. 30	도시건설	유보
3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김상희	홍성호	2006.12. 12	도시건설	채택
4	도시계획 변경 요구청원	백현규	김일중	2007. 6. 29	도시건설	채택
5	덕진동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양용모	박석구	2007. 7. 3	도시건설	불채택
6	전주시 구도심(중앙, 풍남,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임병오	천승우	2007.10. 15	사회복지	불채택
7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김주년 장태영	이덕순	2007.11. 9	도시건설	불채택
8	중화산동 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 지역으로 변경 청원	백현규	최영수	2007.11. 22	도시건설	불채택
9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양용모	덕진중 양규영	2008. 1. 14	도시건설	불채택
10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관련청원	임병오	염광표외 104인	2008. 11.24	도시건설	유보
11	전주 송천 아이파크 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에 대한 청원	양용모	최영윤외 102인	2009. 5. 21	도시건설	유보
12	아중천 수량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서윤근	임종훈외 96인	2009. 6. 5	도시건설	채택
13	전주 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 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오현숙, 여성규, 김명지	김관수외 50인	2009. 7. 10	문화경제	채택
14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임동찬	천종선	2009. 8. 27	행정	채택
15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서윤근	유길용외 3	2010. 3. 22	의회운영	불채택
16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제27조 제3항의 개정청원	강영수	전철기	2010. 5. 18	도시건설	유보



제2절 본회의 운영

제 234회 임시회 (2006. 7. 5 ~ 7. 6)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고장 정치 1번지인 전주시의회에 입성하신 제8대 전주시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전주시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날이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회기의 시작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4년간 작게는 지역의 대표자로 크게는 우리 고장의 일꾼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21세기 정보산업 사회에서 지방 행정이 더욱 전문화되고 주민 욕구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요즘 지방의회 역시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편익과 공익에 우선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의 낭비를 막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지방자치의 보루는 바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는 절대적입니다. 지역 사랑과 지역 발전은 의원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독창제가 아닌 다함께 뜻을 모아 이루는 공동체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님들의 책임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의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관심과 협조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8대 전주시의회는 의원별 지역활동 범위가 광역화되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올해로 15년째 이르나 지방의회가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아직도 미완 미흡한 상태이며 각 자치단체에 주어진 행정 자율성과 권한 역시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의무 아래에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명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백년후의 찬란한 전주의 내일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키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정 체제가 아닌 시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정점으로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속에서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의정 활동을 통해 미래의 지방 의회사에 지역발전을 가장 많이 추구해온 제8대 전주시의회에 진취적인 발자취를 남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07. 05 10:0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의장 · 부의장 선거 2. 제2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선거 가결
2006. 07. 06 10:00	제2차 본회의	1.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선임 선거

제 235회 임시회 (2006. 7. 24 ~ 8. 3)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235회 임시회 개회에 참석하여 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가진 뒤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더없이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빨리 찾아온 태풍과 함께 국지성 폭우를 동반한 긴 장마가 온 나라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아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고통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열리는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8대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33명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주민 대표권을 맡겨준 63만 전주시민들께서는 어느 때 보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직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 자세로 당선의 환희와 함께 맨 처음 마음속에 다졌던 각오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갈수록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때로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며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63만 전주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입니다.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의 미래가 달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의회 역시 주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기에 앞서 반드시 사업 입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중차대한 사업일지라도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가 계속되는 등 집단민원이 그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이 어떤 것인지 귀 기울여 듣는 주민 우선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민선4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시민의 권리확보와 전주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안전심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07-24 10:0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청취 청취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민선4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의사일정변경의건(김명지의원 외 7인 발의) 8.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양용모 의원외 16인 발의) 9.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06-08-03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통 ·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36회 제1차 정례회(2006. 9. 4 ~ 9. 15)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무더운 여름과 지루했던 장마가 어느덧 물러가고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 해 보다 유난히도 맹위를 떨쳤던 올 여름에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만들기 위해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오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8대 의회는 63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보다 더 잘사는 전주를 만들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1조원 예산시대는 반드시 달성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 사업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목표를 정한 이상,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반드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이런 예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역시 국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열악한 지역경제의 현실 앞에 계속되는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 진출은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의 개점을 앞두고 인근 소규모 영세업체들과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격조와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체들의 도산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저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대형유통업체 진출 저지를 시민단체들의 애항심에만 의존하거나 기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보다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다루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불만이나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63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09. 04 10:1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5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6.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6. 09. 13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6. 09. 14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6. 09. 15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05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8.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37회 임시회(2006. 11. 1 ~ 11. 3)

1.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오늘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의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며칠 후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을 알리고 있으며 곧 다가서는 겨울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발한 후 전주시의 각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종합경기장의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대체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모악산 주차료 문제입니다.

완주군은 주차료 징수 당위성을 주차장 관리문제에서 찾고 있으나 김제시가 지난 10월부터 상가 활성화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산사 아래 모악산 주차장의 주차료와 입장료를 폐지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은 등산객 대부분이 완주군민이 아닌, 전주시민들이라는 현실에서 완주군이 주차료 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주차료 징수 계획이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재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모악산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완주군과 적극 협의하고 이번 회기에 증인동 일대에 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당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11. 01 10:0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7.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6. 11. 03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38회 임시회(2006. 11. 17 ~ 11. 17)

1.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만추의 계절을 뒤로하고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천년전주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는 회기가 하루에 불과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등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 안건 처리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요즈음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11. 17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3.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선임
		7.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선거



제 239회 제2차 정례회((2006. 11. 23 ~ 12. 20)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올바른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추구해 온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서비스 행정에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63만 전주시민들의 복지와 행정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여러 의원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화산체육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 채 운영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약업체의 자격 시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경기장내 수익시설은 임대 업체들과 대부료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회관내 인라인 로올러 스케이트장은 위탁업체에 무료 수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업체가 운영난을 빌미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에게 위탁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특정 업체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사업에 이처럼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선시대 들어 각 시설물 마다 무조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추진방식도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민간위탁사업이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남발해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수탁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와 현실을 직시해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도 23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에 총 9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앞두고 기능이 중복되는 사회단체를 통폐합시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나중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자체예산이 없는데도 보조금만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회단체가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고 결산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의는 28일간의 일정으로 금년 한해 동안의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미리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전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역시 시민편에 서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 준비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활동이 63만 전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11. 23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청취 제안설명 제안설명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6.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6. 12. 08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6. 12. 11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6. 12. 12 10:00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6. 12. 20 10:00	제5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7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보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2007 기금운용계획중 노인복지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2. 2007 기금운용계획중 여성발전기금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6. 12. 20 10:00	제5차 본회의	14. 2007기금운용계획중 투자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1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7.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18.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9. 2007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0. 2007기금운용계획중 지방채상환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1. 2007기금운용계획중 식품진흥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2. 2007기금운용계획중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3. 2007기금운용계획중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4. 2007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5.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6.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7. 2007기금운용계획중 4-H 후원회 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8. 2007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9. 2007기금운용계획중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0.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3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32.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3. 2007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제 240회 임시회(2007. 1. 16 ~ 1. 22)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중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역사의 연구 집필에 몰두했던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 극복과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힘은 역경에 도전하는 소수의 창조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에 인류가 굴복했다면 이집트의 뛰어난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등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기업유치 여건이나 투자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이나 뛰어난 기업환경을 보유하지 못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불리하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선구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모든 시정업무가 알차게 계획되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1-16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청취 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양용모의원외 11인 발의)	
2007-01-22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철의원외 7인 발의)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가결 가결
		3. 전주시 고문번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제 241회 임시회(2007. 3. 9 ~ 3. 16)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 봄의 길목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방자치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여야가 합의한 지방분권 특별법상의 지방분권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은 기초지방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현실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어젠다는 어느 한 순간의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부단없는 추진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의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자 구제, 구도심과 중소상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등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국가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농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급변 임시회도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3-09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안(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5. 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7-03-14 10:00	제2차 본회의	1.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철회 촉구 결의안(유영국 의원외 7인 발의) 2. 시정에 대한 질문 3. 전북 혁신도시 관련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촉구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2007-03-15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7-03-16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3.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5인 발의)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오 의원외 7인 발의) 7.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42회 임시회(2007. 4. 11 ~ 4. 16)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 누리에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뭉개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봄철 산불예방 등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월은 모든 공사와 현안사업들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영농준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요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발주함은 물론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예산낭비나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현장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4월 26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 전주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유지와 관광안내 등 행사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결부되는 안건은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4-11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7-04-16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선임
		2.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가결
		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제 243회 임시회(2007. 5. 15 ~ 5. 17)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오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활기가 넘치는 계절에 전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 기간동안 빈틈없는 준비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보여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랑과 화합과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로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올바른 삶을 배우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와 온 인류가 건강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5월에는 우리 모두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해왔던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견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크게 환영할 일이며, 우리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 생활과 결부되는 안건은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5-15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7-05-17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44회 임시회(2007. 6. 15 ~ 6. 25)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생명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음력 5월 단오의 기상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때, 전주 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경제를 위한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여름철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로,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순부터 있을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은 물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 덕진공원에서 열리는 2007 단오예술제가 새로운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열려왔던 풍남제가 올해부터 축제 명칭에서부터 행사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크게 바뀌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행사가 열리는 덕진공원 주변에 대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여름철 위생환경과 행사 전반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사 관계자들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성원과 지지를 되새기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당면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 한 톨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위주의 정확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계절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6-15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청취 채택
		1. 〈5분자유발언〉 2.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7-06-25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45회 제1차 정례회(2007. 7. 10 ~ 7. 24)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의 푸르름이 시원함을 더해주는 성하의 계절에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천년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다짐과 열정으로 제8대 의회 2주년을 시작하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여망 속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의원님들마다 생활현장과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묵묵히 맡은 소임을 수행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순치지세의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입술과 이'의 관계로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가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시민복리와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아가 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실시된 각종 시책과 사업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08년도에 중앙부처에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예산확보에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우기마다 되풀이되는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해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식중독이나 여름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당면안건 처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금번 부의된 안건들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특히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수단이며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는 다른 임시회와 달리 1년에 2회 개최되는 정례회중 첫 번째 정례회인 만큼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성취의 기쁨과 함께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7-10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제안설명 제안설명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7-07-24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립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1.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2. 도시계획 변경 요구 청원(조지훈 · 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부결 채택 가결 가결 채택

제 246회 임시회(2007. 9. 7 ~ 9. 14)

1. 개회사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과 지루했던 장마가 어느덧 서서히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두 달여만에 개최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독한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도 을지훈련 등 말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예산확보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흘리는 땀 한방울이 우리 전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우리 모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귀성객 교통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어느 때 보다 알찬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당면 안전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항상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어느 회기 못지않게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09-07 10:06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09-12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7-09-13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7-09-14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음식 명인 · 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47회 임시회(2007. 10. 23 ~ 10. 30)

1. 개회사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더욱 깊어가는 오늘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전주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신뢰 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항상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10월과 11월은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리는 달입니다. 각 동마다 동민의 날을 비롯해 예산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치러 나간다면 주민화합과 시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이나 비현실적으로 열리는 축제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월 하반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계획된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항상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어느 회기 못지않게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illegible]

제 248회 제2차 정례회(2007. 11. 22~12. 20)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 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을 다짐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 가운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미흡했는지 되돌아보고, 시민들은 어떤 점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맘때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고달픔이 더 커져 가는 시기입니다. 소외된 이웃 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개최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당면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안전심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선도하 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 반영하며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 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7-11-22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청취 제안설명
		1. 〈5분자유〉 2.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illegible]

제 249회 임시회(2008. 1. 24 ~ 1. 30)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의 힘찬 출발과 함께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 장 서온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전주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벌써부터 관가가 술렁이고 조직개편이 미칠 파장 때문에 지방행정 조직까지 어느 때 보다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제와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자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우리 몫을 챙기고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두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63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업무 협의나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존중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면한 조례 안을 놓고 의회의 심사와 심의가 있기 전(전)과 그 이후(후)의 협의 과정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가 63만 시민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이상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태도이자 정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정업무가 알차게 계획되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시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안녕과 전주 발전을 위한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1-24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4.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와 전북혁신도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유영국 의원 외 9인 발의)	가결 청취 가결
2008-01-30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외 17인 발의) 9.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14인 발의) 1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R&D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결의안(문화경제위원장 제출) 13.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R&D 전초 기지 구축을 위한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50회 임시회(2008. 2. 20 ~ 2. 21)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소 지방자치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다룰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 안은 민선4기 후반기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의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책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자 구제, 구도심과 중소상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등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우리민족의 큰 명절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대보름을 맞이하시고 올 농사에도 풍년이 갓들고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2-20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02-21 10:00	제2차 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제 251회 임시회(2008. 3. 12 ~ 3. 19)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 봄의 희망과 기운이 넘치는 오늘, 제25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봄은 성큼 다가오는데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는 아직 봄과 같은 따뜻한 소식은 없는 듯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지속적인 경기불황은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 봄의 힘찬 기운만큼이나 우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업무차질과 민원인 불편이 우려됩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조직체계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직개편이 시정발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구성은 물론 조직체계에 이르기까지 운영전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 해에도 민생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정전반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시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개최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현장 활동, 그리고 각종 안전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는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험시설물을 점검해 주시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이 오는 환절기에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3-12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증설 촉구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2008-03-17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03-18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03-19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제 252회 임시회(2008. 4. 14 ~ 4. 17)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에 찬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봄철 산불예방 등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과 가까운 김제와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금류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민선 4기를 맞아 5대 신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욕에 비해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 보다는 '100년 후의 전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월은 모든 공사와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농가들은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예산낭비나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5월 1일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사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결부되는 안건은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실적인 심사와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4-14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008-04-17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선임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3.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4. 전주시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7.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8.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9. 전주시 바구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 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10.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1.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제 253회 임시회(2008. 5. 20 ~ 5. 23)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오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활기가 넘치는 계절에 전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한지문화축제와 대시습놀이전국대회, 비보이 공연 등 축제기간 동안 빈틈 없는 준비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보여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랑과 화합과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와 온 인류가 건강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5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두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병된 후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다행히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추가 발병이 없어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양계 농가를 돕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 보다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수입 만큼은 어느 것보다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민건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시민 생활과 결부되는 안건은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5-20 10:0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3인 발의)	가결 가결
2008-05-23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6.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계획대로 시행촉 구 결의안(김명지 의원외 17인 발의)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가결

제 254회 임시회(2008. 6. 11 ~ 6. 20)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상반기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계획할 시점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경제를 위한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대외적으로 촉구하고 우리의 당면과제인 전북혁신도시 건설 이행을 요구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철야 천막농성을 해왔습니다.

무더위와 간간히 내린 비 때문에 가두캠페인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철야 농성 내내 많은 불편이 뒤따랐지만 묵묵히 이런 저런 불편함을 이겨내며 우리의 요구를 주장해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63만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천막농성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각급 기관단체 여러분과 63만 시민들께 개회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천막농성이 우리가 요구하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재협상은 물론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8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니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되돌아보면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는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해보면서 후반기에도 63만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34명의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더욱 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따뜻한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월은 상반기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달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은 물론 하절기에 발생할 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깊이 생각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당면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 한 톨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위주의 정확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6-11 10:08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가결
		2.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청취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6.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7.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제안설명
2008-06-20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가결
		2.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4.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8.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9.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0.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11.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2.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3.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5.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서윤근 의원외 10인 발의)	가결
		16. 전주시 경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7.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가결
		18.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결의안	가결



제 255회 임시회(2008. 7. 1 ~ 7. 2)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평소 자치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 각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8대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새롭게 출발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서로 협력하며 한 목소리를 내주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있었고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준 63만 시민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8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의장단 선거인 만큼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의 뜻을 피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성품을 겸비한 의장단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우리 모두의 열정이 담긴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우리 시의회가 더욱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따뜻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63만 전주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7-01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선거 선거
		제2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2008-07-02 10:00	제2차 본회의	1.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3.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선임 선거 선거



제 256회 제1차 정례회(2008. 7. 10 ~ 7. 24)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열정으로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제256회 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신뢰 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항상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년 전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활기찬 시정 구현에 여념이 없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지방의회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역사적 현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데 이어 오늘은 첫 번째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정례회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는 대단히 뜻 깊은 출발점이자 전주시의 회사에 가장 알찬 성과를 일궈내고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회로 기록되는 시작의 첫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은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출범에 어느 때 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체 수가 늘어나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희망이 넘치는 전주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이러한 바램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100년 후의 번영된 전주를 구상하고 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를 선출해 주신 63만 시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쉽없이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해 나갑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8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전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줍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아쉽고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성찰하면서 그간 축적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를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



인안 등의 당면안전 처리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63만 시민의 대변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전심사와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충실한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63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07-10 10:15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청취 가결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8-07-24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8.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를 건(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의 의원외 11인 발의) 1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서윤근 의원 외 12인 발의) 12.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김상휘 의원 외 17인 발의) 13.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안 14. 우리땅 대마도를 우리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57회 임시회(2008. 9. 5 ~ 9. 11)

1. 개회사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과 지루했던 장마가 어느덧 서서히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두 달여만에 개최하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256회 정례회가 끝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대비 비상근무와 을지훈련 등 맑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예산확보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우리 전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 현안업무를 놓고 전북도와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높아진 만큼 두 기관이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현행 광역시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국 자치단체를 70개로 묶어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인구 100만의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당사자인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6년 당시 여야 합의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까지 구성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제는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들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논의를 시작하며,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추진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해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고대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귀성객 교통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로 나누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가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어느 때 보다도 알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안전심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항상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어느 회기 못지않게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09-05 10:13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상준 의원외 15인 발의) 3.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임병오 · 김종철 · 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8-09-09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09-10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09-11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16인 발의) 3. 전주시 통 ·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 외 9인 발의) 10.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용모 의원 외 8인 발의)	유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58회 임시회(2008. 10. 17 ~ 23)

1. 개회사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전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항상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무자년의 새해를 맞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불과 2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마등같은 세월을 실감나게 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에 전념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8 을지훈련 종합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데 이어 10일에는 제2회 도시의 날을 맞아 도시 대상 문화도시 부문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63만 시민을 대표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달 10월과 다음달에는 우리 전주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크고 작은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행여 방만한 운영이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막바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예산에서 도비와 국비 확보가 당초 목표에 밀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10월 중순을 맞이한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각종 계획된 사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0여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내실있고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침 저녁의 큰 일교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0-17 10:11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가결
		2. 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가결
		4.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가결
		5.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병오 의원외 18인 발의)	가결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가결
2008-10-23 10:00	제2차 본회의	7.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1. 〈5분자유발언〉	가결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3.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4.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7.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9.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0.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가결
		11.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2.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3.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4.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부결
		15.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6.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7.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9. 전주시 한혈 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외 7인 발의)	가결
		20.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 국주영은 · 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가결
		2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가결
		23.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4.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5.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6.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27.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가결

제 259회 제2차 정례회(2008. 11. 19 ~ 12. 2)

1. 개회사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 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2008년 무자년을 맞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주마등 같은 세월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시민들은 어떤 점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지, 다시한 번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맘때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고달픔이 더 커져만 가는 시기인데,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어느 때보다 썰렁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올해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 온 한 해였습니다.

먼저,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원 구성을 마친데 이어, 대외적으로는 전북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과 의회 차원의 혁신도시특위를 운영, 지역발전에 앞장서 왔고, 발로 뛰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성과들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전주시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데 어떤 것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전주시 인구는 63만 6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천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송하진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하나되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맞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며, 탄소 소재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육성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63만 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당면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안전심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격조 높은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 반영하며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1-19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전주시장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7.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청취 청취 가결
2008-12-04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12-05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12-08 10:00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8-12-17 10:00	제5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6.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경태·김종철 의원외 8인 발의)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2-17 10:00	제5차 본회의	10.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1.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3.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채택
		14.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6.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17.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 (임병오 의원외 10인 발의)	가결
		1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19.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0.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1.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외 12인 발의)	가결
		2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4.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6.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8. 2009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29.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0.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1.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2.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3.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4.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5.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6.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7.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8.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제 260회 임시회(2009. 2. 9 ~ 2. 13)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입춘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길목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묵은 시름 모두 털고 희망과 번영을 향해 새로운 장을 펼쳐 갈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쉽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선진시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천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더욱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기가 더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나날이 힘들고 위축되는 분위기이니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갑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구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의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꿈과 신뢰를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민족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풍성한 대보름달만큼 우리 경제도 크게 살아나고 시민여러분도 넉넉하고 여유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illegible]

제 261회 임시회(2009. 4. 2 ~ 4. 9)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꽃들의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사흘 후면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청명이자 한식이기도 합니다.

화사한 봄벌에 힘입어 만물이 성장을 더해가는 때에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어오기를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생경제 활성화와 선진 시정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봄철 산 불예방과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은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부터 각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예산조기 집행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현안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행정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되면서 민원을 야기 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현장 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반드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4월 29일은 완산갑과 덕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고, 이튿날인 30일에는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9일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차질 없는 행정지원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맛과 멋, 그리고 예향의 도시, 천년 전주의 따뜻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전과 이틀간에 걸쳐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보다 한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04-02 10:0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1. 〈 5분자유발언〉 2.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상준 의원외 6인 발의)	
2009-04-07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9-04-08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9-04-09 10:00	제4차 본회의	1. 〈 5분자유발언 〉 2.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4.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1.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선임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제 262회 임시회(2009. 5. 12 ~ 5. 15)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갖는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구현을 선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 접어들면서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성급한 무더위와 함께 우리 전주시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하여 제16회 전주시민 한마음체육대회와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제13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연달아 열려 전주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거리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치면서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지원과 함께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선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천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스승의 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행복과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발병하여 전세계 4,500여명이 감염되고 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 독감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감염자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보건 예방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늪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과 현안문제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활기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05-12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1. 〈 5분자유발언〉 2. 제2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05-15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가결
		2. 전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3. 200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4.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송경태의원외 10인 발의)	부결
		5.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7. 전주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가결



제 263회 임시회(2009. 6. 11 ~ 6. 16)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여러분께서 그동안 전주시의회에 따뜻한 사랑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뼈를 깎는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용서를 구하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추모 정국 속에서도 열린 제36회 전국 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와 제3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이어 지난 6일 열린 전주시장배 전국대학클럽농구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와 행사를 손색없이 치러 낸데 대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외지 손님들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새 훈풍이 감도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깊이 새기고,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과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 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을 거두시어 기쁨이 넘쳐나는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06-11 10:09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3.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모 의원외 7인 발의) 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2009-06-16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윤근 의원 외 16인 발의) 5.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0인 발의) 6.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9인 발의) 9.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64회 제1차 정례회(2009. 7. 6 ~ 7. 22)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열정으로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제264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정례회는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했던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의 당찬 일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어 6월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승에프엠에스 투자협약 체결식에 이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개관식, 제28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지 손님들에게 전통문화의 도시,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가 그 위세를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는 투철한 사명감과 넘치는 의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은 물론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그 어느 때, 어떤 지방의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찬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조례안, 2건의 승인안과 결의안 등 8건의 부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어 금번 정례회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획을 긋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07-06 10:12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6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가결 청취 청취 가결 청취
2009-07-22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9인 발의) 4.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오현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8.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결의안(송경태 의원외 21인 발의) 9.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 2009년도 제1회계연도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 265회 임시회(2009. 9. 3 ~ 9. 10)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한 평생을 오직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은 물론 남북화해협력에 바치시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인동초(忍冬草)의 꿋꿋한 삶의 희망을 보여주고 떠나가신 제15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어느 해 보다 길었던 장마와 날선 무더위도 한 발짝 물러서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높고 파란 하늘이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6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큰 화두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양 시·군간의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이처럼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양 지역 통합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언급해왔습니다만, 이번 통합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도(主導)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상대적인 반감을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간 갈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이 대세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유로 통합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 역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주체로서 훗날, 우리의 역사에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통합논의가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21세기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 주체의 당사자들이 공(公)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私)적인 것을 뒤로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가 먼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대상 지역에 대해 보다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구 100만 이하 통합대상 지역에도 부단체장 직제 신설과 도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권한이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거나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전주·완주 통합이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더 큰 미래를 다지는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민원 해결에 앞장 서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우대비 비상근무와 을지훈련 등 많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시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우리 전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들어 급속하게 전염되는 신종플루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예방 수칙 전달과 치료대책이 절실합니다. 신종플루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질문과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 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금번 임시회가 우리고장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09-03 10:0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1. 〈5분자유발언〉 2.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상준 의원외 6인 발의)	
2009-09-08 10:00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9-09-09 10:00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009-09-10 10:00	제4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6.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북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채택



제 266회 임시회(2009. 10. 14 ~ 10. 20)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속에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6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민원 해결에 앞장서 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통과 현대, 미래가 공존하는 기반형 도시구축과 민생안정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우리 농촌에 풍년이 대신에 한숨이 가득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역 추곡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수매한 비축미의 재고량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여름 내내 땀 흘렸던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농정 대책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입니다.
지난 9월 29일 순수 민간 주도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따라 다음주 중에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주시민들은 통합에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통합의 당위성을 호도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주장하는 건강부회식 말들이 난무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조상대대로 서로 왕래하며 살아오고 있는 전주와 완주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시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개발 격차를 없애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주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와 완주를 흡수하는 것도, 면적이 넓은 완주에 전주가 귀속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일로 귀결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명분이 정당하며 통합의 가치가 옳고 뚜렷한 이상, 전주·완주 통합은 반드시 성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통합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풍납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모두 15건의 부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가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0-14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가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가결
		4.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가결
		5. 완주-전주 통합 축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가결
		6.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7.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8.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9.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유보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가결
		1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12. 완주-전주 통합 축구 결의안	가결
2009-10-20 10:00	제2차 본회의	1. 〈5분자유발언〉	
		2.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가결
		3.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가결
		4.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6.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가결
		7.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가결
		8.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9.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가결
		10.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3.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4.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15.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가결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17.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	가결
		18.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채택
		1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20.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	청취



제 267회 제2차 정례회(2009. 11. 23 ~ 12. 21)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또 다른 새해 준비를 위한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해에도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음 새각오로 기축년(己丑年)을 맞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주마등 같은 세월은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는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느 때 보다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금년도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일궈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자율적인 통합이 무산되고 말았으나 현실적으로 선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9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 결산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심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1-23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가결 가결 청취 청취 가결 선임
		1. <5분자유발언> 2.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6.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illegible]

제 268회 임시회(2010. 1. 21 ~ 1. 27)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더 큰 꿈을 향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첫 임시회를 갖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지방자치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방의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한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튼튼한 전주경제의 내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다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반드시 알찬 성과를 일궈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시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64만 시민 모두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 바르게 이끌어 나간다면 주위로부터 반드시 더 많은 격려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주최 2009 지역전략진흥사업 혁신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분야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부문별 전국자치단체 평가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에도 민생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0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 하나하나에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묵은 시름 모두 털고 희망과 번영을 향해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경인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illegible]

제 269회 임시회(2010. 3. 29 ~ 4. 5)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샘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새싹들의 함성과 함께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때에, 약동하는 봄기운처럼, 지역경제는 물론,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활기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64만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찬 각오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이 었그제 같은데, 주마등 같은 세월은 어느 덧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 안정과 선진 시정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과 1천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 남짓 후에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엄정한 공직자감 준수와 선거업무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4월은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선거분위기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침체는 서민생활 대책을 위협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절실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당면 주요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안겨주고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회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남녘의 화사한 꽃 소식과 함께 여러분 하시는 일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illegible]

제 270회 임시회(2010. 6. 17 ~ 6. 25)

1. 개회사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천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바쁘게 달려온 일상을 뒤로하고 보니 어느새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의 중순입니다.

먼저, 우리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성숙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늘 높은 열정으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제8대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남다른 의미와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당찬 각오와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제8대 전주시의회에 등원(登院)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은 주마등처럼 흘러 벌써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음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모두 37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총 246건의 조례 안을 처리하였고, 연 269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각종 대안 제시와 함께 시민본위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해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등 37건의 결의안,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한분 한분의 열정, 그리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땀 흘려 남긴 많은 업적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꽃 피워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전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큰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4년 동안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마지막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지방의회 의원상(象)을 정립하는 또 다른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4건의 당면 주요안건을 심의 할 예정입니다.

안전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고,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활기가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및 심의결과

일 시	회 의	부 의 안 건	비고
2010-06-17 10:10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5분자유발언> 2. 제2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전주시장제출)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청취 가결
2010-06-25 10:00	제2차 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 출) 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혁신도시추진지 원특별위원장 제출) 11.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민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2.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 시장 제출) 15.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채택 채택 가결 가결 가결 채택



제3절 상임위원회 운영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4회	1	06-07-06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06-07-1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8대 본회의장 의석 배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5회	1	06-07-24	2006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00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	06-08-24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6회	1	06-09-05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 안(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 개요 -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 검토보고서	
	2	06-09-14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위원외 1인 동의)	
	3	06-10-24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주시의회 사무기구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택의원외 1명 동의)	
제237회	1	06-11-0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239회	1	06-12-0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07-01-09	200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제240회	1	07-02-27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1회	1	07-04-04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242회	1	07-05-08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43회	1	07-06-07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44회	1 2	07-06-18 07-06-2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45회	1 2	07-07-10 07-08-29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세입 · 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46회	1	07-10-12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제247회	1	07-10-23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변경의 건	
제248회	1 2	07-12-05 08-01-15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12인 발의)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택 의원외 1인 동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제249회	1	08-02-12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0회	1	08-03-06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김창길 위원외 1인 동의)	
제251회	1	08-04-0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52회	1	08-05-08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국 의원외 1인 동의)	
제253회	1	08-06-05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용모 위원외 1인 동의)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54회	1	08-06-20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55회	1	08-07-02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56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56회	1	08-07-1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2	08-08-25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임병오·강영수·김종철 의원외 5인 발의)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1	08-09-08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광수 의원외 16인 발의)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	08-10-10	제258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병오 의원외 18인 발의)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1	08-10-2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	08-11-05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9회	1	08-11-26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	08-12-04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송경태 의원외 10인 발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 등록신청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08-12-16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현숙 의원외 9인 발의)	
	4	09-01-30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0회	1	09-02-11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 2009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2	09-03-23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61회	1	09-05-04	제2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262회	1	09-06-02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 모 의원외 7인 발의)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 보고서	
	2	09-06-10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용 모 의원외 7인 발의)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종철 의원외 7인 동의)	
제263회	1	09-06-25	2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64회	1	09-07-06	제1차회의 (20 16:00,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원연구단체(전주 역사문화 연구회) 등록의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2	09-08-21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265회	1	09-09-30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2	09-10-12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9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완주·전주 통합 축구 결의안(송상준 위원외 1인 동의)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6회	1	09-10-19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 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7회	1	09-12-0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	
	2	10-01-07	제2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268회	1	10-01-26	세종시 수정안 철회 축구 결의안(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2009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세종시 수정안 철회 축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제269회	1	10-03-31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	

2. 행정위원회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4회	1 2	06-07-06 06-07-19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35회	1 2 3 4 5	06-07-25 06-07-26 06-07-27 06-07-28 06-08-0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공보담당관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36회	1	06-09-05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기획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 - 기획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제안설명 - 홍보담당관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개요설명 - 완산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관한 개요설명 - 덕진구	
제237회	1	06-11-0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9회	2	06-11-16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서 전주·심양, 장춘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06-12-0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검토보고서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06-12-04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기획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0회	3	06-12-05	2007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국	
	4	06-12-06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	07-01-17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견(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	07-01-1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견(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홍보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국	
	3	07-01-19	전주시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철 의 원외 7인 발의) 전주시 고문번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1회	1	07-03-12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제243회	1	07-05-16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제244회	1	07-06-18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5회	2	07-06-19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개요 - 덕진구	
			2006 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 기획국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 2006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1	07-07-11		
	2	07-07-12		
	3	07-07-13		
제246회	1	07-09-10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7회	1	07-10-24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07-10-26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김광수 의원외 20인 발의)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8회	1	07-11-30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국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국	
	2	07-12-03		
	3	07-12-04		
제249회	1	08-01-2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의 17인 발의)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2	08-01-28		
	3	08-01-29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50회	1	08-02-2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1회	1	08-03-1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 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 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 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제253회	1	08-05-21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1	08-06-12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08-06-1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제255회	1	08-07-0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운영위원 추천의 건	
제256회	1	08-07-1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관리국	
	2	08-07-1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3	08-07-15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제257회	1	08-09-08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1	08-10-2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1	08-11-27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08-11-28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0회	3	08-12-0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홍보담당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08-12-0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	09-02-10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	09-02-1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관리국	
	1	09-04-06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성은 의원외 12인 발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	09-04-08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09-05-13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09-06-12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9인 발의)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외 9인 발의)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4회	1	09-07-07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설관리공단	
	2	09-07-08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09-07-09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009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감사담당관실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관리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기획관리국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홍보담당관실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실	
제265회	1	09-09-04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통 · 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임동찬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통 · 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제266회	1	09-10-15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67회	1	09-12-01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의원의 9인 발의) 전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8회	2	09-12-0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홍보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3	09-12-0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1	10-01-22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홍보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	
	2	10-01-25	전주시 통 ·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 ·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	10-03-30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10-06-18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홍보담당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3. 사회복지(복지환경) 위원회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4회	1	06-07-06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35회	1	06-07-24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06-07-25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경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문화경제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3	06-07-2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환경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4	06-07-27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5	06-07-28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제236회	1	06-09-0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경제국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 - 경제국	
	2	06-09-06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전통문화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안설명 - 전통문화국	
	3	06-09-07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완산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덕진구	
제237회	1	06-11-0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8회	1	06-11-17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김현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검토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제239회	1	06-12-0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06-12-04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복지환경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완산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덕진구	
	3	06-12-0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4	06-12-07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 복지환경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제240회	1	07-01-1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	07-01-19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1회	1	07-03-12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오 의원 외 7인 발의)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2회	1	07-04-12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4회	1	07-06-2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복지환경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07-06-2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완산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 덕진구	
제245회	1	07-07-11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복지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2006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2	07-07-1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200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제246회	1	07-09-10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박현규의원의 8인 발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47회	1	07-10-24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 한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 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제248회	1	07-11-3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9회	2	07-12-0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전주 효자 4지구 1,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07-12-0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전주 효자4지구 1, 3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07-12-05		
	1	08-01-28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2회	2	08-01-29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경태 의원의 14인 발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견(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전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1	08-04-15	전주시 장사등에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 · 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 기물 수집 · 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 안(전주시장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장사등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 · 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 기물 수집 · 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 안 검토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3회	1	08-05-21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송경태의원외 19인 발의)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1	08-06-1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 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 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2	08-06-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완산구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완산구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덕진구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덕진구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건소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보건소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생활복지국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생활복지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08-06-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제255회	1	08-07-0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운영위원 선출의 건	
제256회	1	08-07-1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생활복지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생활복지국	
	2	08-07-14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완산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덕진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덕진구	
제257회	1	08-09-08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택 의원 외 9인 발의)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8회	1	08-10-20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현혈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 외 7인 발의)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 외 7인 발의)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현혈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1	08-11-27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김주년 의원 외 12인 발의)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규 의원 외 8인 발의)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경태·김종철 의원 외 8인 발의)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생활복지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생활복지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덕진구	
	2	08-11-2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생활복지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생활복지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08-12-0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0회	4	08-12-0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생활복지국	
	2	09-02-11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3	09-02-1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제261회	1	09-04-0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1	09-05-12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송경태의원외 10인 발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3회	1	09-06-12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서윤근 의원 외 16인 발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남관우 의원 외 10인 발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264회	1	09-07-07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9인 발의)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송경태 의원외 21인 발의)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 장애인 연금법 제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하수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제265회	1	09-09-0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6회	1	09-10-15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7회	1	09-12-01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꽃발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2	09-12-02	전주시 단독주택 헛웃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김광수 의원외 9인 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꽃발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꽃발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헛웃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헛웃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8인 발의)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효자 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제268회	1	10-01-22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8인 발의)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효자 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9회	2	10-01-25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생활복지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1	10-03-29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재활용품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 의안(전주시장 제출)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 민간위탁관 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활용품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활용품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70회	1	10-06-1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생활복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4. 문화경제위원회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8회	1	06-11-17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39회	1	06-12-01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06-12-0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3	06-12-05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4	06-12-06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제240회	1	07-01-1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경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2	07-01-1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 보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통문화국	
	3	07-01-19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제241회	1	07-03-12	전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제49회 전주풍납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제49회 전주풍납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제242회	1	07-04-12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4회	1	07-06-1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제245회	1	07-07-1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전통문화국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2	07-07-1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6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농업기술센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 경제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개요보고 - 경제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국	
	3	07-07-13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덕진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제246회	1	07-09-10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47회	1	07-10-24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48회	1	007-11-30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의 15인 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07-12-0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투자진흥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H후원회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경제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국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9회	3	07-12-04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4	07-12-05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1	08-01-25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08-01-2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제252회	3	08-01-29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제254회	1	08-06-1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제252회	1	08-04-15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4회	1	08-06-1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제255회	2	08-06-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제256회	3	08-06-1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주시장 제출)	
제255회	1	008-07-0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운영위원 추천의 건	
제256회	1	08-07-11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	08-07-1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3	08-07-15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8회	1	08-10-20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의 15인 발의)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59회	1	08-11-27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 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	08-11-2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08-12-01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4	09-12-02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제260회	1	09-02-10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문화의 집(삼천 · 인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경제산업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2	09-02-1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3	09-02-1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통문화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제261회	1	09-04-0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2회	1	09-05-13	제차회의 (2010:00,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4회	1	09-07-07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2	09-07-08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통문화국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3	09-07-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전통문화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4	09-07-13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09-07-1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심사의 건(여성규 · 오현숙 · 김명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제265회	1	09-09-04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6회	1	09-10-15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7회	1	09-12-01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동물원내 드림랜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09-12-0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전통문화국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3	09-12-0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4	09-12-07	제차회의 (20 10:00,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8회	1	10-01-2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7인 발의) 전주시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	10-01-25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통문화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3	10-01-26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통신화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1	10-03-29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지훈 의원외 8인 발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70회	1	10-06-18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경제산업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전통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5. 도시건설위원회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5회	1	06-07-25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관리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2	06-07-26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교통건설사업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건설사업단	
	3	06-07-27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상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06-07-28		
	1	06-09-05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 검토보고서	
	2	06-09-06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도시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교통국	
	3	06-09-07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개요 - 덕진구	
	1	06-11-0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39회	2	06-11-16	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서	
	1	06-12-0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도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교통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상수도 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완산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덕진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완산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덕진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06-12-0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상수도 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교통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06-12-05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4	06-12-06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도시국	
	5	06-12-07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06-12-18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0회	1	07-01-17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	07-01-1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3	07-01-19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전주시장 제출)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의 건(김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제241회	1	07-03-13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규 의원외 14인 발의)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	07-03-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김 상희 위원외 1인 발의)	
제242회	1	07-04-12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3회	1	07-05-16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44회	1	07-06-18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45회	2	07-06-1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	07-07-1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	07-07-1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도시계획 변경 청원(조지훈 · 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양용도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검토보고서 덕진동 한방병원 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제246회	1	07-07-13	2006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제247회	1	07-09-10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제248회	1	07-10-24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제248회	1	07-11-3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교통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배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07-12-03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교통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3	07-12-04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검토보고서	
	4	07-12-05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5	07-12-06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배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회기	차수	일자	회 의 내 용	비고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김주년 · 장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백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물왕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건축현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요청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부분 도로지정 청원 검토보고서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	
제249회	1	08-01-2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	08-01-25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3	08-01-2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양용모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검토보고서	
			전주 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국	
제250회	1	08-03-12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52회	1	08-04-14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바구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바구말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253회	1	08-05-2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4회	1	08-06-12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08-06-1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08-06-16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경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23인 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1	08-07-0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운영위원회 선출의 건	
제256회	1	08-07-1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2	08-07-1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3	08-07-15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외 11인 발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4	08-07-16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자	회의내용	비고
제257회	1	08-09-08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덕진구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용모 의원외 8인 발의)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종광대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1	08-10-20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원택 의원외 8인 발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외 10인 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라북도 도시공원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08-10-2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철영 의원외 7인 발의)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59회	1	08-11-2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	08-11-28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08-12-01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08-12-02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09년도 기금운용영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5	08-12-0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1	09-02-09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	09-02-10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비전사업추진단	
	3	09-02-1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009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1회	1	09-04-0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예술도시국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상휘 위원외 1인 동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종합경기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3회	1	09-06-12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삼천쌍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제264회	1	09-07-06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덕진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	09-07-07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3	09-07-08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개요서 - 비전사업추진단	
	4	09-07-09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예술도시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예술도시국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5회	5	09-07-10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	09-09-04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북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북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제266회	1	09-10-15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7회	1	09-12-0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	09-12-0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09-12-0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09-12-0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09-12-07	전주시 경차우대 조례안(임동찬 의원외 9인 발의)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기	차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고
제268회	1	10-01-2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덕진시민광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비전사업추진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	10-01-25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전주시장 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제269회	1	10-03-30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70회	1	10-06-18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5인 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부록)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4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제8대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현황

- 2006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회 기	제235회 임시회
위 원 장	김종철
부 위원 장	이원택
위 원	김창길, 양용모, 국주영은, 강영수, 유재권, 김남규, 백현규, 유영국, 국철
심사안건	2006년도 1회 추경

회 기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위 원 장	김종철
부 위원 장	백현규
위 원	이원택, 김창길, 양용모, 국주영은, 강영수, 남관우, 김남규, 유영국, 국철
심사안건	2005년도 결산

회 기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위 원 장	김종철
부 위원 장	강영수
위 원	유영국, 김광수, 유재권, 김현덕, 국철, 김남규, 김상휘, 박혜숙, 국주영은, 구성은, 이원택, 서윤근
심사안건	2007년도 예산, 2006년도 2회 추경

- 2007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회 기	제244회 임시회
위 원 장	장태영
부 위원 장	송상준
위 원	권정숙, 강영수, 유영국, 김광수, 김주년, 임동찬, 이명연, 박혜숙, 이원택
심사안건	2007년도 1회 추경

회 기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위 원 장	장태영
부 위원 장	남관우
위 원	양용모, 김상휘, 송경태, 송상준, 박혜숙, 김창길, 국주영은, 오현숙, 구성은
심사안건	2006년도 결산



회 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위 원 장	이명연
부 위원장	김현덕
위 원	남관우,권정숙,김주년,이원택,여성규,김남규,장태영,임동찬,유영국,양용모,송상준,
심사안건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2회 추경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회 기	제254회 임시회
위 원 장	유영국
부 위원장	구성은
위 원	이명연,김창길,유재권,서윤근,오현숙,김주년,장태영,양용모,송상준
심사안건	2008년도 1회 추경

회 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위 원 장	양용모
부 위원장	국 철
위 원	임동찬,권정숙,유영국,송경태,남관우,송상준,박혜숙,구성은,서윤근
심사안건	2007년도 결산

회 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위 원 장	박현규
부 위원장	국주영은
위 원	강영수,구성은,국 철,권정숙,김명지,김철영,서윤근,송상준,양용모,오현숙,유영국,최주만
심사안건	2009년도 예산, 2008년도 2회 추경

-200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회 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위 원 장	권정숙
부 위원장	백현규
위 원	임동찬,김주년,김상희,박혜숙,오현숙,구성은,서윤근
심사안건	2009년도 1회 추경, 2008년도 결산

회 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위 원 장	여성규
부 위원장	김상희
위 원	송상준,김철영,백현규,정우성,국주영은,임동찬,최주만,서윤근,김주년,강영수
심사안건	2009년도 2회 추경,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현황

회 기	제270회 임시회
위 원 장	강영수
부 위원 장	서윤근
위 원	권정숙,김명지,박현규,송경태,송상준,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구성은
심 사 안 건	2010년도 1회 추경

나. 연도별 예산안 심사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 예산의결		당초 예산안 확정		
	법정기한내	법정기한 초과	요구액	증감액	확정액
2007	○		846,921	4,899	842,022
2008	○		955,857	4,718	951,139
2009	○		968,532	4,722	963,810
2010	○		952,901	4,604	948,297



2.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어,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2.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08년 10월 17일 - 2009년 6월 30일
- 조사위원 : 9명

위원장	임병오의원
부위원장	박혜숙 의원
위원	송상준, 백현규, 김명지, 박현규, 남관우, 김창길, 김주년의원

- 조사범위 : 혁신도시 추진업무 전반
- 대상기관 : 전주시
- 중점활동방향
 - 국회와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유치활동
 -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 혁신도시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지원
 -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 개최 지원 등

3. 조사결과

- 2008년 10월 17일 구성된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 이전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토지개발공사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선정 도시만 남겨 놓은 상태로,
-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출발 함.
- 토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 지난 2005년 6월 전북이전으로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면서 균형발전과 적합성등을 엄격히 따져 토공은 전북에, 주공은 경남에 각각 이전기로 한 것임.

- 그런데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강행 처리하여 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인 균형발전의 대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임.
- 전주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임병오 위원장, 박혜숙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혁신도시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식발농성,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국회 등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 하여 토공?주공 통합 반대 및 전북 혁신도시 이전 당위성에 대한 홍보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제 전주시의회에서 구성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혁신도시 추진지원특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 특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 하고자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국토해양부의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전주시의회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

3.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구간으로 전주시 관내 19.5km 구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주민이 요구한 민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민원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09년 6월 17일 - 2009년 12월 31일
- 조사위원 : 9명

위 원 장	양용모의원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
위 원	이명연,여성규,박혜숙,김남규,최주만,유영국,김광수의원

- 조사범위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 사무
- 대상기관 : 전주시
- 중점활동방향
 - 건설 주체에 대한 활동 : 한국철도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전주시민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개.
 -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활동
 - 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방안 강구

3. 조사결과

- 본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9명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출발함.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전주시관내 민원 지역 현황을 보면, 전지역 19.5km로서 그 중 민원 발생지역은, 송천제1교와 송천역, 송천주공 아파트 부근의 과선교 신설, 기린육교와 금호교의 과선교 재가설, 장재마을의 전주역 우회도로 확 · 포장 요구, 백자 · 행치마을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은석마을 앞의 교량가설, 신정마을의 교량시공 요구와 기린육교 옆 농작지의 침수피해 등 총 10개소의 제기된 민원 해결을 특별활동의 목표로 설정함.
- 본 특별위원회는 위 거론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1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7일과 7월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와 현장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009년 8월17일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 8월26일 순천 소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여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2009년 9월23일 2차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 10월6일 전주시 관내 민원 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며, 2009년 10월 7일 철도시설 공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을 신정마을 주민과 함께 방문하여, 국토해양 위원회 최규성의원(김제.완주)을 면담하고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처리상황을 보면,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화 요구는 교량화 설계중이며,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의 경우, 수용하기로 하였



으며, 방음벽 반영여부의 경우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여부 확인의 경우 수용하기로 함.

- 원색장 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C(함) 색장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C(함)색장제1, C(함) 색장제3 및 개천내기 시공중이나 보상불용 구간 미시행, 사업완료시에는 우수가 배분 처리될 예정으로 부분 수용하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리 및 배수 구조물 설치요구는, 전주시의 해당 사항으로 미수용.
- 왜망실 마을(침지천교)지역의 민원은,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사항은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미터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아중 2터널 종점 -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사항은 설계 미반영된 사항으로 설계검토가 필요(현재에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함
- 전주변전소 관련, C(함) 아중 제1로 우수배제 요구와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민원은 수용하며,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학인 부분은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용.
- 장재마을 노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는 현재 설계중이며, 아리랑교 부분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은 도로폭을 B=18미터 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과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는 미반영하기로 함.
-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사항과 관련,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는 신설 과선교를 삭제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발단리 마을과 관련,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으며,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및 지원 검토요구는 주민 보상법상 강구, 검토하겠다는 답변.
- 신정마을과 관련하여, 신정마을 교량화 150미터가 아닌 당초 요구대로 500미터의 교량화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미수용 상태이나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국회의원의 500미터 교량화 요구에 대해서 150미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부분은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시 보상계획 한다는 사항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은 수리 검토 후 필요시 반영하겠다는 사항으로 수용하기로 함.
- 송천동 - 전미동 구간은 임시가설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사고위험이 많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좁아 리어커 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전라선 전철 복선화사업 특별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현장활동과 관계자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중 원색장마을 배수로 정비 및 침지천교 좌측 농로 개설등은 미수용 및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신정마을을 교량 확대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가능이 어려운 민원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피해 사항을 피력하고 10월7일 대전에 소재한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완벽하게 수용,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제9대 의회가 구성되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함.



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의 이행과
-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36조)과 비리관련 의원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

2. 활동 계획

- 비리 관련 의원 징계와 자격에 관한 심사
- 기타사항

3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09. 06. 17 ~ 2009. 09. 30.
- 조사위원 : 9명

위원장	강영수의원
부위원장	오현숙의원
위원	구성은,김명지,김현덕,남관우,서윤근,송경태,서윤근의원

3. 조사결과

- 일시 : 2009. 10. 14(수)
- 장소 :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 내용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유재권의원 징계의건 :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 정우성의원 징계의건 :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 김창길의원 징계의건 : 공개회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 국 철의원 징계의건 : 유보 (8대의회 종료로 국철의원 징계의건은 안건폐기)





제4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 부서별 처리내용

제2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 부서별 처리내용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 부서별 처리내용

제4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2. 부서별 처리내용

제1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2006. 11. 24 ~ 11. 30(7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
- 총처리건수 : 379

부 서 별	처리건수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1
기 획 국	22
기획예산과	7
행정지원과	10
행정혁신과	
재 무 과	2
인재양성과	3
복지환경국	36
시민생활지원과	8
사회복지과	7
여성정책과	8
환경위생과	5
청소행정과	8
경 제 국	22
신성장산업과	5
기업진흥과	3
생활경제과	3
영상정보과	5
동 물 원	6
전통문화국	31
전통문화진흥과	6
한브랜드과	10
문화관광과	5
체육지원과	6
시립도서관	4

부 서 별	처리건수
도 시 국	23
도시계획과	3
주택행정과	5
도시개발과	3
도심진흥과	7
녹지공원과	5
교 통 국	49
교통행정과	5
교통시설과	5
도 로 과	9
재난안전관리과	2
하수관리과	26
차량등록사업소	2
보 건 소	13
농업기술센터	2
상수도사업소	10
수도행정과	4
급 수 과	4
수질관리과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
체육시설운영과	11
월드컵경기장운영과	9
구청	143
완 산 구 청	66
덕 진 구 청	77



2. 부서별 처리내용

홍보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 7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홍보담당관	1.국번없는 "전주 안내전화" 운영 건의 2.시정홍보 간행물 발송 관련 3.시정홍보 간행물 제호 변경 관련 4.시정홍보 간행물 내용 보완 관련 5.시정홍보 간행물의 발행 6.시정홍보 간행물의 배부 7.일시사역인부임 관련	권 정 숙 남 관 우 " " 서 윤 근 " "

감사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 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감사담당관	1. 공무원 비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방안	유 재 권

기획국

■ 요구(처리) 건수 : 2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기획예산과	1.2006년도 세입부족액 대체 방안 2.주행세 세입과 세출 불일치 3.사회단체보조금 관련 4.지방채 발행 5.민간위탁 협약서 6.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7.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조 지 훈 " 국주영은 권 정 숙 " 김 명 지 유 재 권
행정지원과	1.폐동사무소 매각 관련 2.주민자치위원회 관련 3.선택적 복지제도 4.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사실조사 5.수의계약 5.위원회와 관련 7.공무원 전화 친절교육 실시 8.청사 청소용역 관련 9.한시 사역인부에 대하여 10.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김 광 수 " 남 관 우 " " " " 서 윤 근 " "
재무과	1.지방세 고질체납자 관리 2.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권 정 숙 김 명 지
인재양성과	1.영어마을 사업 추진 2.영어마을 근시안적인 사업 추진 3.교육환경 개선사업	조 지 훈 김 명 지 유 재 권



복지환경국

■ 요구(처리) 건수 : 3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민생활 지원과	1.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따른 사후 운영방안 미흡 2. 시민생활 지원제도에 대하여 3. 의회 제출자료에 대하여 4. 시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개편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7. 긴급복지 지원사업 8.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하여	최 찬 욱 " 이 원 택 " 강영수 김주년 " 오현숙
사회복지과	1. 승화원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2.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대하여 3. 시설물 민간위탁시 자부담을 제고 4. 자활복지 자급에 대하여 5.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6. 공적 보조금 관리 7. 자활복지 융자금 관리	최 찬 욱 이 원 택 " 김주년 " 송경태 "
여성정책과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생적응 지원 2.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 대하여 3. 공공보육 강화 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5. 보육시설 위생검사 지도 점검 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7. 보육교사 시간연장 수당에 대하여 8. 보육정보센터 설치	남관우 김주년 송경태 오현숙 " " " "
환경위생과	1. 지시제 수위 조절 방안 2. 천연가스 버스 유해성 배기가스에 대하여 3.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 단속 4. 다주이용시설 위생관리 5. 소류지 관리	이 원 택 " 강영수 송경태 김남규
청소행정과	1.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2. 음식물 수거 위탁관리에 대하여 3. 학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4.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5.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6. 소각장 진입도로 집수정 사고건에 대하여 7. 소각장 접속도로 추진 8. 서신동 대체매립장 폐기물에 대하여	이 원 택 " 강영수 " 김현덕 " " "



경 제 국

■ 요구(처리) 건수: 2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신성장산업과	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2. 전주 약령시 한방축제 3. 기업유치 추진 4.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추진 5. 기업유치 실적	최 주 만 박 혜 숙 김 창 길 백 현 규 장 태 영
기업진흥과	1. 제조업 유치 2. 중소기업 지원 사무소 3. 중국시장 개척에 대하여	김 남 규 김 창 길 장 태 영
생활경제과	1. 조류 인플루엔자 2. 석유제품 유통환경에 대하여 3.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	강 영 수 최 주 만 백 현 규
영상정보과	1. 제7회 전주 국제영화제 2. 정보영상진흥원의 출연금 문제 3. 영상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 4. 국제영화제 한 브랜드 연계 필요 5. 영상진흥원 지도단속	구 성 은 김 남 규 김 창 길 백 현 규 장 태 영
동물원	1. 동물원 휴게실 임대료 문제 2. 동물원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3. 사육사 사기 진작 4. 동물원 환경개선 5. 폐사된 동물을 연구용으로 활용 6. 전주 동물원 동물 폐사 원인은?	박 혜 숙 구 성 은 김 남 규 김 창 길 백 현 규 여 성 규

전통문화국

■ 요구(처리) 건수: 3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전통문화 진흥과	1.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2.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운영 3. 전통문화센터 명칭 개정 검토 4. 구) 도2청사 부지 활용 5. 관광 홍보 6. 전통문화센터 위탁	구 성 은 " 김 창 길 " " 장 태 영
한브랜드과	1. 한브랜드 박람회에 대하여 2. 동고산성 복원 3. 전라감영 복원 4. 한옥마을 등록제를 통한 전수조사 계획 5. 한옥마을 조성 설계 변경 6. 경기전 뒷담길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7. 한옥마을 내 도로에 대하여	최 주 만 김 남 규 " " 김 창 길 백 현 규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8. 한옥마을 보전 정비에 대하여 9. 경기전에 대한 보존대책 강구 10. 한브랜드 사업 발굴에 대해	장 태 영 " "
문화관광과	1. 한옥마을 김장축제 2. 시립예술단 운영 3. 시립예술단 오디션에 대하여 4.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5. 전주 시립예술단	박 혜 숙 구 성 은 김 남 규 여 성 규 장 태 영
체육지원과	1. 국제 우수교류대회 예산 재검토 2. 우수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추진 관련 3.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지원과 관련 4. 경제성이 있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5. 생활체육을 위한 학교강당 개방 교육청과 협의 6.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에 대하여	최 주 만 김 남 규 " 김 창 길 백 현 규 여 성 규
시립도서관	1. 도서관 사랑모임 활성화 2. 특화별 도서관에 대하여 3. 시립도서관 환경개선 4. 소규모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김 남 규 " 김 창 길 여 성 규

도 시 국

■ 요구(처리) 건수 : 2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도시계획과	1.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2. 학인당 소로 폐지에 대하여 3. 호성 · 우아 · 인후동 지역 학교부지 확보 요구	양 용 모 " 이 명 연
주택행정과	1.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2. 반월동 영무 예다음아파트 진출입로 관련 3. 건축물 조경 관리에 대하여 4.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 5.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유 영 국 " 국 철 김 종 철 양 용 모
도시개발과	1. 서부신시가지 추진 관련 2.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 3. 공동주택 택지 최고가 분양에 대하여	유 영 국 국 철 김 종 철
도심진흥과	1. 루미나리에 대한 2. 루미나리에 관련 3. 루미나리에 관련 4.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5. 구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6. 구도심 상가 보조금 관련 7.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관련	김 철 영 " 유 영 국 " 국 철 " 김 종 철
녹지공원과	1. 전통문화중심도시 천년전주와 걸맞지 않는 가로수	백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2.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3.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4. 기린봉 등산로에 관하여 5. 황방산 미관 정비 방안	김 철 영 유 영 국 국 철 김 상 휘

교 통 국

■ 요구(처리) 건수 : 49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교통행정과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2.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3.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 4.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잦은 고장과 야간·휴일 작동 불가능에 대하여 5. 대중교통 적자 특별대책 요구	유 영 국 김 상 휘 양 용 모 이 명 연 임 병 오
교통시설과	1. 교통공원 관련 2.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3.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 4.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사업)의 관리 및 연간 유지비용 과다와 A/S 어려움이 있음 5.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유 영 국 " 양 용 모 이 명 연 임 병 오
도 로 과	1. 호성로 확장사업 추진 2. 자라목 관련 3. 특화거리 인조석 공사 후 유지관리 철저 4. 법원로 개설공사 관련 5. 자전거도로 유명무실 6. 자전거도로 ∩자형 뒤편 철거 7.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8. 안골사거리, 전자랜드사거리 구간 교통대책 9.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국 철 김 상 휘 김 종 철 " " 양 용 모 이 명 연 " 임 병 오
재난안전 관리과	1. 전주천 갯버들과 어은골쌍다리 부근 수해대책 2.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 관련	김 종 철 임 병 오
하수관리과	1. 협약의 부적정 2. 공원관리에 책임과 관련하여 3. 하수종말처리장 협약 및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관련 4. 운영관리 계획 5. 협약관련 6. 수익률 6.31% 보장협약에 대하여 7.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는 서류상 회사에 관하여 8. 수질검사에 대하여 9. 악취발생 원인에 대하여 10. 기본 배출부과금(4억7천만원)에 대하여 11. 부가세 관련 12. 악취발생 원인은 13. 공원 관리는	김 상 휘 양 용 모 " 유 영 국 " 국 철 " " 김 상 휘 " 김 종 철 "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14. 방류수 관련 15. 수질검사 관련하여 16. 협약 특혜 여부 1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사업은 18. 운영 계획서에 관하여 19. 공단폐수와 음식물 침출수 라인 처리 관련 20. 수질관리 책임 21. 음식물 침출수 관련 22. 시설물 수선과 관련하여 23. 시설운영 기술력에 관하여 24. 전주개발의 자체실험에 대하여 25. 악취방지 노력미흡 및 주변 공원관리 주체 불분명 26. 악취방지 시설현황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송 상 준 " 양 용 모 " " " " " " " " 이명연 임병오
차량등록 사업소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지정업체 관련 2.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 관련	김철영 김상휘

보 건 소

■ 요구(처리) 건수 : 1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보건행정과	1. 의회 제출자료에 대하여 2. 보건소 기능 편중 3.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4. 치매예방 사업 5. 생화학 자동분석기 활용방안 6. 의료위반 단속에 대하여 7. 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8. 예방접종 9. 청소용역업체 관리에 대하여	이원택 강영수 " " 김주년 " " 오현숙 "
건강증진과	1. 하계 방역 관련 2. 방역소독에 관하여 3. 약품관리 철저 4. 아토피 질환 관리	최찬욱 김현덕 " 송경태

상수도사업소

■ 요구(처리) 건수 : 1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수도행정과	1.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시민홍보 철저 2.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 혜택 여부 3.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문제점 4.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참가의 모순과 2006년도분 필요 수량의 차이가 남	김철영 양용모 " 이명연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급 수 과	1. 누수탐사 요원 인센티브 지급 2. 절수기 보급 사업 3. 농촌동 상수도 보급 확대 요구 4.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김 철 영 유 영 국 김 상 휘 김 종 철
수질관리과	1. 정수장에 독극물 유입시 대처방안 2. 배수지 · 정수장 관리에 대하여	김 철 영 김 종 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요구(처리) 건수 : 2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체육시설 운영과	1. 종합경기장 건립 관련 2. 민간위탁 시설 보험 계약 3.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 관련 4. 화산체육관 민간위탁 5. 화산체육관 민간위탁 6. 화산체육관 지도점검 7. 화산체육관 민간위탁 8.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9. 덕진체련공원 쓰레기 관련 10. 화산체육관 지도점검 11. 화산체육관 지도감독	조 지 훈 국주영은 권 정 숙 김 광 수 " " 김 명 지 남 관 우 " 서 윤 근 "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1. 골프장 관련 2. 예식장 관련 3. 예식장 관련 4. 골프장 관련 5. 사우나 관련 6. 골프장 관련 7. 예식장 관련 8. 컨벤션 웨딩센터 장기미납 대부료 징수 9. 사우나 관련	조 지 훈 " 국주영은 " " 권 정 숙 " 김 명 지 남 관 우

농업기술센터

■ 요구(처리) 건수 : 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1. 친환경 체험 농장 확대 운영 2. 지역특화 작목 육성	박 혜 숙 김 창 길

완 산 구 청

■ 요구(처리) 건수 : 6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주민자치위원 관련	국주영은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2. 공익근무요원 질서계도 요원의 집중배치 3. 통장의 자생단체 이중 가입 4. 방위 협의회 활성화 5. 구 홈페이지 관련 6. 시화(市花) 7. 전화 친절도 8. 청사 청소 용역업체 관련 9.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정숙 남관우 " " " " " 서윤근 "
민원봉사실	1. 사생활 침해 2.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3. 친절한 민원실을 위한 노력 여부 4. 민원실 개선 요구 5. 민원 서비스 개선	남관우 유재권 김철영 김상휘 이명연
시민생활 지원과	1. 의회제출 자료에 대하여 2. 시민생활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3. 위기상황 긴급 지원제도 4. 긴급복지 지원사업 5.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 위문품 배분 합리화 7.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 대하여	이원택 " 강영수 김주년 " 김현덕 송경태
세 무 과	1. 징수율에 대하여 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조지훈 권정숙 김광수
문화경제과	1. 공원관리 인력 및 예산확충 노력 필요 2. 대형 유통업체 농축산물 지도단속 3. 학교급식 농축산물 반입 지도점검 4.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5. 유흥관련업 및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행정처분 6. 공원내 화장실 관리에 관하여 7. 영세노점상 농·수산물 지도점검 8. 농촌동 농업인 지원대책 9. 업무보고 및 기타 보고자료 작성철저 10. 중인동 사금 채취장 관련 11. 상품권의 금융기관 확대 12. 가로수 관리 13. 공원관리 예산부족 14. 어린이 공원 모래포설에 대하여	구성은 김남규 " " 김창길 백현규 여성규 " 장태영 " " 유영국 양용모 이명연
환경청소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2. 행정심판 გადა 청구에 관하여 3. 영세 소규모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4.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위하여 5.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6. 노점 판매식품 위생점검 7. 환경미화원 재배치	최찬욱 " 이원택 이원택 강영수 김현덕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8. 청소차량 수리 위탁에 관하여	"
건 축 과	1. 기계식 주차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2.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사항 3.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실적 4.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사항 5. 위반 건축사에 관련하여 6. 소송업무 관련	김 상 휘 김 종 철 " 양 용 모 이 명 연 "
건 설 과	1. 도로굴착에 대하여 2. 도시계획 사업추진 3. 삼천둔치에 설치한 벤치가 한곳에 집중 설치된 것에 대하여 4. 삼천둔치 가로등 관련 5. 롯데백화점 부근 지하보도 관리에 대하여 6. 소송업무 관련 7. 공사 설계변경 관련 8. 중인동 도로개설	유 영 국 국 철 김 상 휘 " 김 종 철 이 명 연 " 임 병 오
가로교통과	1. 완산 건인보관소 불법행위 조사보고 2. 주·정차 과태료 징수 3. 웨딩캐슬 주변 교통대책 4. 롯데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5. 무단방지차량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함 6. 무료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김 철 영 유 영 국 김 상 휘 김 종 철 " 양 용 모

덕진구청

■ 요구(처리) 건수 : 77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주민자치위원 관련 2. 공익근무 요원 관련 3. 강당사용 관련 4. 공익근무요원 관련 5. 공익근무요원 관련 6.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 7. 남은 음식물 수거용기 수의계약 관련 8. 비위공무원 관련 9. 도·농 자매결연 10. 통장의 자생단체 이중 가입 11. 방위협의회 활성화 12. 구 홈페이지 관련 13.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 지급 방법 개선 14.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위촉 15. 전자입찰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16. 통장 순찰제 관련 17. 청사 청소용역 업체 관련 18.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	국주영은 " 권 정 숙 " " " 김 광 수 " " 김 명 지 남 관 우 " " " " " " 서 윤 근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19. 시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요구 20. 덕진구청 청사 주차장 관리	최주만 김남규
민원봉사실	1.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2. 민원실 개선 요구 3. 민원서비스 개선 4.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유재권 김상휘 이명연 임병오
시민생활 지원과	1.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 2. 의회제출 자료에 대하여 3. 시민생활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4. 위기상황 긴급지원 제도 5.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 긴급복지 지원사업 7. 환경감시 봉사원 시범 사업 8. 위문품 배분 합리화 9.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등 건립 10. 전동 휠체어 지원 11.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2.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최찬욱 이원택 " 강영수 " 김주년 " 김현덕 송경태 " 오현숙 박혜숙
세 무 과	1. 과오납 환부 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 우성종합건설 및 동도건설 체납 사유 4. 취득세 지진 신고분과 수시 부과분	국주영은 권정숙 김광수 유재권
문화경제과	1.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2. 학교급식 농축산물 반입 지도점검과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3. 재래시장 활성화 4.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검토 5. 영세노점상 농·수산물 지도점검 6. 농촌동 농업인 지원대책 7. 농·축·수산물 불법유통단속 실적의 문제점 8. 상품권의 금융기관 확대 9. 자라목 관련 및 노거수 관리 10. 공원관리 예산 부족	최주만 김남규 김창길 " 여성규 " " 장태영 김상휘 양용모
환경청소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2. 행정심판 გადა 청구에 관하여 3. 영세 소규모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4.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위하여 5.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6.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7.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8. 노점 판매식품 위생점검 9. 환경미화원 재배치 10. 청소차량 수리 위탁에 관하여	최찬욱 최찬욱 이원택 " 강영수 김주년 " 김현덕 " "
건 축 과	1. 무허가 건축물 단속 2. 기계식 주차장 효율적인 관리방안	유영국 김상휘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3. 소송업무 관련	이명연
건설과	1. 도로유지보수 관련 예산 확보 2. 지하보도 관리 실태 3.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 4. 도로유지 보수 예산 관련 5. 터널·지하차도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예산 확보 6. 소송업무 관련 7. 도로개설시 지장물 보상후 발생하는 폐가 관리문제 8. 공사 설계 변경 관련	유영국 김종철 송상준 양용모 양용모 이명연 " "
가로교통과	1. 주·정차 과태료 징수 2. 주·정차 과태료 체납처분 3.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안 4.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5.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6. 수거된 현수막 처리 방안	유영국 국철 김상휘 양용모 임병오 "



제2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 2007. 11. 23 ~ 11. 29(7일간)
- 감사방법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실시

위 원 장	김광수
부 위 원 장	유재권
위 원	박혜숙 국주영은 서윤근 강영수 송경태 오현숙 구성은 김창길 백현규 국 철 김상휘 김종철

- 총처리건수 : 185건

부 서 별	처리건수	부 서 별	처리건수
홍보담당관	3	재난안전관리과	4
감사담당관	1	하수관리과	1
기 획 국	20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과	4	보 건 소	10
행정지원과	8	보건행정과	6
행정혁신과	6	건강증진과	4
재 무 과	2	상수도사업소	4
		수도행정과	2
복지환경국	22	급 수 과	1
시민생활복지과	10	수질관리과	1
여성정책과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
환경위생과	4	체육시설운영과	6
청소행정과	3	월드컵경기장관리과	3
		농업기술센터	4
경 제 국	10		
신성장산업과	1	완 산 구 청	31
기업진흥과	3	행정지원과	4
생활경제과	4	민원봉사실	
영상정보과		시민생활복지과	3
동 물 원	2	세 무 과	2
전통문화국	3	문화경제과	2
전통문화진흥과		환경청소과	4
한브랜드과		건 축 과	7
문화관광과	1	건 설 과	3
체육지원과	1	가로교통과	6
시립도서관	1	덕 진 구 청	35
도 시 국	15	행정지원과	5
도시계획과		민원봉사실	
주택행정과	3	시민생활복지과	6
도시개발과	2	세 무 과	2
도심진흥과	5	문화경제과	4
녹지공원과	5	환경청소과	3
교 통 국	18	건 축 과	4
교통행정과	8	건 설 과	2
교통시설과		가로교통과	9
도 로 과	5	합 계	185



2. 부서별 처리내용

홍보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홍보담당관	1. 전주시정 홍보 2. 전주를 상징하는 홍보물 설치 3. 홍보 간판 이전	김 창 길 김 종 철 김 종 철

감사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감사담당관	1. 감찰결과 처리	강 영 수

기획국

■ 요구(처리) 건수: 2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기획예산과	1. 시정조정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2. 사회단체보조금 3.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4. 시설관리공단 인력 급여 체계	국주영은 구 성 은 구 성 은 김 상 휘
행정지원과	1. 위원회 통·폐합 2. 열린 시민포럼 3. 위원회 설치 관련 4.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5. 조직개편에 대하여 6. 장애인 공무원 7. 전보제한자 인사발령 8. 시간외수당 관리시스템	유 재 권 박 혜 숙 국주영은 서 윤 근 강 영 수 송 경 태 구 성 은 구 성 은
행정혁신과	1. 학교급식사업 2. 학교급식 3. 상상 아이디어 콘테스트 4.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5. 학교급식 6. 인구 유입 대책	박 혜 숙 강 영 수 강 영 수 오 현 숙 백 현 규 김 종 철
재 무 과	1. 입찰 재정기여도 2. 고액 체납자 관리	유 재 권 김 종 철



복지환경국

■ 요구(처리) 건수 : 2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민생활 복지과	1. 기초노령연금 파악 2.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3.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담당부서 배치 4.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5.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 대하여 6. 의료급여관리사의 계약에 대하여 7.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8. 노인일자리 사업 9.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10. 경로당 난방비 지원	유재권 국주영은 송경태 송경태 오현숙 오현숙 구성은 백현규 국철 김상휘
여성정책과	1. 여성결혼이민자 회관 건립 2. 여성결혼이민자 언어 장애 3.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 4. 남성가정 봉사의 날 5. 여성일자리 창출	박혜숙 박혜숙 서윤근 구성은 백현규
환경위생과	1. 전주천 다리밑 공중화장실 2. 막걸리 사업 3. 수변 생태공원 관련 4. 막 프로젝트	김창길 백현규 김상휘 김상휘
청소행정과	1. 광역쓰레기 소각장 2.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정화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강영수 구성은 김종철

경제국

■ 요구(처리) 건수 : 1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신성장산업과	1. 한브랜드 한방산업화	박혜숙
기업진흥과	1. 근로자종합복지관 독립채산제 2. 노사정협의회 3. 1만개 일자리 창출	서윤근 오현숙 구성은
생활경제과	1. 유기동물 관련 2. 대부업체 관리 3. 유통상생발전협의회 4. 전주문화축제와 연대	박혜숙 오현숙 오현숙 백현규
동물원	1. 동물 사료 구입 2. 동물원 앞 주차장 인도	구성은 김종철



전통문화국

■ 요구(처리) 건수 : 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문화관광과	1. 전주예총 보조금 지원	구 성 은
체육지원과	1. 시 체육회와 생체협 통합	백 현 규
시립도서관	1. 시립도서관 환경개선	김 종 철

도 시 국

■ 요구(처리) 건수 : 15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주택행정과	1.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보급율 3. STS개발의 건축허가	박 해 속 송 경 태 오 현 속
도시개발과	1. 친수광장 조성사업 2.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김 상 휘 김 종 철
도심진흥과	1. 약전거리 조성 2. 고사동 루미나리에 3. 특정, 특화거리 조성 4.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5. 구도심 활성화 사업	박 해 속 국주영은 구 성 은 백 현 규 백 현 규
녹지공원과	1. 덕진중학교 진입로 2. 공원내 건축 및 개발 3. 공원 보도 정비 4. 중앙분리대 수종 변경 5. 중앙분리대 교통사고 문제	김 창 길 백 현 규 김 상 휘 김 종 철 김 종 철

교 통 국

■ 요구(처리) 건수 : 18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교통행정과	1. 이동식 주차카메라 구입 2.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보조금 3. 위원회 관련 4. 시내버스, 개인택시, 회사택시 교통위반과태료 5. 보광운수에 대하여 6.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7. 시내버스 운전자 불친절 8.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유 재 권 박 해 속 국주영은 국주영은 서 윤 근 서 윤 근 백 현 규 백 현 규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도 로 과	1. 민간위탁 관련 2. 은행로 확장 3. 도로안내판 정비 4. 견훤로 개설 5. 중앙분리대 좌회전 대기차로 조정	서윤근 강영수 구성은 국철 김종철
재난안전 관리과	1.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 2. 덕진보 부직포 사용 3. 삼천, 전주천 화장실 문제 4. 징검다리 설치	강영수 강영수 김창길 김상휘
하수관리과	1. 노송천 복원 원수 문제	김종철

보 건 소

■ 요구(처리) 건수 : 1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보건행정과	1. 독감예방접종 2. 독감예방접종 3. 안마시술소 관련 4. 출산지원 사업 5. 모자보건 사업 6. 보건소 조직과 관련	유재권 국주영은 송경태 김창길 백현규 국철
건강증진과	1. 방역소독 사업 2. 방역소독 관련 3. 방역소독 관련 4. 성인병 예방 사업	강영수 김창길 국철 김상휘

상수도사업소

■ 요구(처리) 건수 : 4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수도행정과	1. 시각장애인 점자용 고지서 2. 요금체계 세분화	송경태 김창길
급 수 과	1. 겨울철 수도동파 관리	유재권
수질관리과	1. 용담댐 인근 골프장 건설	김창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요구(처리) 건수: 9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체육시설 운영과	1. 완산수영장 운영 2. 임대료 미납 3. 종합경기장 임대료 4. 실내체육관 주차장 개방 5. 경기장 입주단체 임대료 징수 6. 아중체련공원 게이트볼장	박혜숙 강영수 오현숙 오현숙 구성은 김종철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1. 골프장 임대사업중 채권 확보 2. 월드컵경기장 자문위원 3. 월드컵경기장 하자 보수	강영수 김종철 김종철

농업기술센터

■ 요구(처리) 건수: 4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농업기술센터	1. 4-h기금 관련 2. 정보화 교육 3. 친환경 농산물 유통 4. 4-h기금 운용	국주영은 강영수 오현숙 김종철

완 산 구 청

■ 요구(처리) 건수: 3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주민자치센터 운영 2. 통장 휴일 순찰제도에 대하여 3. 주민자치센터 운영 4. 반장 제도에 대하여	유재권 박혜숙 국주영은 서윤근
시민생활 복지과	1. 경노당 보수비 지원 2.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퇴소 3.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국주영은 오현숙 김종철
세 무 과	1. 고액체납자 관리 2. 과오납 환부	강영수 김상희
문화경제과	1.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2. 어린이놀이터	박혜숙 구성은
환경청소과	1. 불법쓰레기 처리 2. 노면 청소차량 3. 비산먼지 단속 4. 음식물쓰레기통 교체에 대하여	강영수 강영수 오현숙 김종철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건 축 과	1.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안 2. 공동주택 재해위험지역 보수공사 3. 공동주택 문고 설치에 대하여 4. 원룸 불법주차장 구조변경에 대하여 5. 기계식주차장 6.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미가입 7.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박 해 숙 국주영은 백 현 규 김 종 철 김 종 철 김 종 철 김 종 철
건 설 과	1. 볼라드설치에 대하여 2. 노송천 복개도로 3. 걷고싶은거리 보수 철저	송 경 태 국 철 김 종 철
가로교통과	1. 교통단속요원 2. 광고물 지정게시대 3.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4. 장애인 주차차 위반 단속 5. 도로 무단점용 6. 노점상 단속	유 재 권 서 윤 근 서 윤 근 송 경 태 구 성 은 국 철

덕진구청

■ 요구(처리) 건수 : 35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통장 휴일 순찰제도에 대하여 2. 인사위원회 관련 3. 자치위원회 운영 4. 동 주민센터 파티션 높이 조정 5. 공익근무요원 배정	박 해 숙 국주영은 국주영은 서 윤 근 강 영 수
시민생활 복지과	1. 노령연금 수령 2. 한부모 가정 3. 여성음악교실 운영 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전기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5. 경로당 개 · 보수비 확보 6. 출산장려 대책	유 재 권 박 해 숙 오 현 숙 오 현 숙 김 창 길 백 현 규
세 무 과	1. 지방세 체납액 2. 과오납 환부	유 재 권 김 상 휘
문화경제과	1.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2. 가로수 전지작업 3.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4. LP 판매시설	박 해 숙 김 창 길 국 철 김 상 휘
환경청소과	1. 학교앞 불량식품 판매 단속	오 현 숙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2. 쓰레기 분리 배출 3. 재활용분리 배출 봉투	오 현 숙 오 현 숙
건 축 과 건 설 과	1.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안 2. 원룸 불법주차장 구조변경에 대하여 3. 인근 주차장 관련 4. 농지보전부담금	박 혜 숙 김 종 철 김 종 철 김 종 철
	1. 블라드설치에 대하여 2. 천변교량 밑 화장실 설치	송 경 태 김 창 길
가로교통과	1. 교통단속요원 2. 유료주차장 주차 요금 3. 옥외광고물 안전도 4. 주정차 과태료 결손 처분 5. 장애인 주정차 위반 단속 6. 행정현수막 설치 7. 광고게시대의 체계화 8. 노점상 단속 9.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유 재 권 서 윤 근 강 영 수 강 영 수 송 경 태 김 창 길 백 현 규 국 철 김 종 철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 2008. 11. 20 ~ 11. 27 (7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
- 총처리건수 : 381건

부 서 별	처리건수	부 서 별	처리건수
홍보담당관	3	예술도시국	24
감사담당관	5	아트폴리스과	8
기획관리국	18	생태복원과	8
기획예산과	2	푸른도시조성과	4
행정지원과	6	환 경 과	4
창의혁신과	9	비전사업추진단	4
재 무 과	1	비전사업팀	2
생활복지국	36	전략사업팀	2
시민생활복지과	13	보 건 소	18
여성청소년과	8	농업기술센터	7
자원관리과	13	상하수도사업소	16
시민협력과	2	수도행정과	3
경제산업국	23	급 수 과	7
성장산업과	3	수질관리과	3
경제진흥과	12	하 수 과	3
영상정보과	2	시립도서관	9
친환경농업과	6	동 물 원	6
전통문화국	22	구 청	153
전통문화과	2	완 산 구 청	67
한스타일과	4	덕 진 구 청	86
문화관광과	9		
체육지원과	7	시설관리공단	19
건설교통국	18		
도 시 과	5		
교 통 과	5		
주 택 과	3		
도로안전과	5		



2. 부서별 처리내용

홍보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 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홍보담당관	1. 전주시보 발행 2. 외국인 대상 시정홍보 3.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하여	김 철 영 송 상 준 "

감사담당관

■ 요구(처리) 건수 : 5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의 독립성 「시유재산 되찾기」소송전담부서 설치 공무원 비위 예방시스템 운영 감사자료 불충분 민간위탁시설 감사관련	구 성 은 김 현 덕 " 백 현 규 송 상 준

기획관리국

■ 요구(처리) 건수 : 19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시설관리공단의 의회보고 방법 일원화	김 철 영 정 우 성
행정지원과	모범공무원 포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후생복지 민원서류 제출 제도개선 모범공무원 포상 및 인사관련 문제점 하계임차시설	이명연 김철영 " " 김현덕 송상준
창의혁신과	초·중·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반장제도 개선 출연금 관리시스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전문화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대책 민간자본 출연금 지급 후 사후관리 철저 행정서비스(친절) 향상대책 해외연수에 대하여 창의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이 명 연 구 성 은 " " 김 현 덕 백 현 규 " 송 상 준 정 우 성
재 무 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자투리 시유지 관리	백 현 규



생활복지국

■ 요구(처리) 건수 : 4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민생활 지원과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평가 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 가건물 미인가 경로당 지원 장애인 자활 자립장 운영에 대하여 노인취업지원센터 설계변경 사유 군경묘지 진입로 확장등 정비 생존 애국지사 등 예우 필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수강료 자연장 제도 추진 대시민 적극 홍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철저 자활사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8대) 통합지원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장태영 남관우 " 국주영은 " 박현규 " 여성규 " 오현숙 이원택 " "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규모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 확장 대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방식 변경 및 평가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시 관련 단체 참여 청소년 문화시설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 반복되는 지적사항 대책 「건강가정지킴이 학교」 운영 사업 사전 홍보 철저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장태영 " " 남관우 " 오현숙 " 이원택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조기 선정추진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확대 방안 검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대시민 적극 홍보 석면폐기물 처리장 주민 공감 형성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대형마트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협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준비 철저 라면 및 과자봉지 등 폐필름류 분리배출 홍보 대형폐기물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 음식물쓰레기 비례배출제 시행 대비 용기보급 방안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시 음식물처리장의 처리용량 산정시 각종 통계 분석 감안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방안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모집 홍보	장태영 남관우 " 국주영은 " 박현규 " " " " 오현숙 " " 이원택
시민협력과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간 형평성 있는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주체 변경 추진상황	오현숙 이원택



경제산업국

■ 요구(처리) 건수 : 32건

소관부서	건명	요구의원
성장산업과	출연기관 지도감독 바이전주사업 홍보 및 품질보증 철저 출연기관 지원예산	김 남 규 권 정 숙 서 윤 근
경제진흥과	대형마트 규제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 가맹점 행정지원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전통시장 문제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만개 일자리사업 프랜차이즈 육성 노사정대표 해외벤치마킹 대부업체 실태조사 풍남문상인회 주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대형할인마트 이행협약 사후관리 대책 전통시장에 대하여	김 남 규 권 정 숙 권 정 숙 " 박 혜 숙 서 윤 근 " " " " 임 병 오 조 지 훈 "
영상정보과	U-비즈니스 센터에 대하여 로케이션 영화관광산업 모델 구축	조 지 훈 "
친환경농업과	쌀소득직불제 관련 소작농 피해대책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 원산지 단속 전주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수입쇠고기 단속 쌀소득직불금 지원 정확한 실태조사	김 명 지 박 혜 숙 서 윤 근 임 병 오 조 지 훈 최 주 만

전통문화국

■ 요구(처리) 건수 : 31건

소관부서	건명	요구의원
전통문화과	전통문화 정책 소리·완판본 문화관 건립 지연	권 정 숙 조 지 훈
한스타일과	한스타일 홍보 전주한지의 고품질 생산과 홍보 및 수요처 발굴 한스타일 세계화 한옥마을내 대형주차장 확보 대책	권 정 숙 박 혜 숙 서 윤 근 임 병 오
문화관광과	전주관광 여행지도에 쇼핑정보 수록 제작 학인당 보수정비	김 남 규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및 심사위원 구성 축제에 대하여 특화된 전주축제의 내실화 전주예총운영비 적정 지원 한성여관 중저가 숙박시설 시범 개선사업 지도 감독 철저 이벤트 위탁행사 지양, 시에서 직접 운영 명인·명소(장인)의 제도화	" 권정숙 박혜숙 서윤근 임병오 조지훈 최주만
체육지원과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향후 대책 종합경기장 사용료 체납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이용객 주차요금 징수방안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체납 징수대책 제13회 아시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준비 철저 체련공원 축구장 바닥재 친환경 소재 서학·평화권역 체련공원 추진 방안	권정숙 서윤근 " " 임병오 최주만 "

건설교통국

■ 요구(처리) 건수 : 1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도시과	청소년의 거리 경관조형물 바닥 및 음향시설 개선 덕진광장을 친수광장으로 조성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조기 보상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홍보	국철 김상휘 양용모 유영국 유재권
교통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대중교통 적자해소 방안과 시내버스 노선변경등에 주민의견 반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개선 한쪽면 주차 확대 실시방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김상휘 김주년 " 유영국 "
주택과	폐·공가 정비사업 기계식주차장 철거 대책 도시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김광수 강영수 김창길
도로안전과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법 및 이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인도포장재료 친환경제품인 황토블럭 사용 신시가지와 구도심의 가로환경과 기반시설 불균형에 따른 개선대책 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개설	김광수 김상휘 김상휘 김창길 유영국



예술도시국

■ 요구(처리) 건수: 2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아트폴리스과	아트폴리스 자문으로 사업추진 지연 방지 대책 아트폴리스 용역과제 신중 검토 야간경관 계획 전력과 관련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아트폴리스 자문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공공기관 불법 광고물 제척 지양 아트폴리스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계획적인 사업 시행 신속한 아트폴리스 자문으로 적기 사업추진	김 광 수 " 강 영 수 " 김 상 휘 양 용 모 " 유 영 국
생태복원과	노송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설계변경 친수광장 조성사업은 명품처럼 웅장하게 노송천 복원사업 추진 문제점 대책마련 만경강 생태하천 산책로 포장방법 강구 송천동 한양아파트 앞 징검다리 설치 생태탐방로 설치시 경작지 보상 등 주민의 공감 형성 친수광장 사업에 특색있는 조형물 설치	김 광 수 강 영 수 김 상 휘 " 김 주 년 양 용 모 유 영 국 "
푸른도시 조성과	녹지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방안 교통섬 등에 수목 부산물과 절단된 방치수목 처리대책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생육환경 개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 영 수 " 김 상 휘 양 용 모
환 경 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대책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 단속 테마가 있는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팔복동 대기오염 측정	김 광 수 " 김 상 휘 유 영 국

비전사업추진단

■ 요구(처리) 건수: 4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비전사업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5사단 부지개발	강 영 수 김 상 휘
전략사업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구 설치 택지개발 사업주체에 따라 지가 상이한 이유	강 영 수 "

보 건 소

■ 요구(처리) 건수: 17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지원	장 태 영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아토피 지원사업 정책적 접근	장 태 영
	올바른 걷기방법 교육 방안	남 관 우
	방역소독에 대하여	"
	공원과 산에 방역대책	"
	금연사업 확대 운영방안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정확한 통계관리	국주영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 수거시스템 및 예산확보	"
	결핵환자 관리 철저	국주영은
	감염성폐기물 수거방안	김 종 철
	평화보건지소 신축예산 공사비 내역	"
	동사무소 체지방측정기 활용방안 강구	박 현 규
	종합적인 방역대책 수립	"
	방역소독 통합관리	여 성 규
	의무소독에 대하여	"
	불법 영업 안마시술소 강력한 행정처분	오 현 숙
	방역소독에 대하여	이 원 택

농업기술센터

■ 요구(처리) 건수 : 7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사용 용어를 우리말로 표기	권 정 숙
	친농업환경을 위한 주기적인 농민 교육 필요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의 문제점	김 명 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서 윤 근
	농산물 브랜드화	임 병 오
	복숭아 직거래 행사 개최시기 변경	"
	농업지원사업 신속한 예산 집행	조 지 훈

상수도사업소

■ 요구(처리) 건수 : 14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수도행정과	공동수도고지서 발급 개선	김 창 길
	공동주택 검침제도 개선시 주민의견 수렴 철저	양 용 모
	수도원가 분석시스템 미흡	유 영 국
급 수 과	누수탐사 및 누수대책	강 영 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조속시행	김 상 휘
	운휴 배수지 활용방안	김 창 길
	유수율 제고사업 차질없는 추진	양 용 모
	계량기실 개선사업	"
	수계별 급수	유 재 권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유 재 권
수질관리과	수질검사 수시시행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계별 급수	김 광 수 유 영 국 유 재 권
하 수 과	하수관거 정비시 굴착후 당일 복구 우기시 하수처리 대책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태양광발전 검토	강 영 수 김 창 길 유 영 국

시립도서관

■ 요구(처리) 건수: 9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사서이력 증원대책 작은도서관 사업 동별 명칭 일원화 작은도서관 등 작은생활 복지공간에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입지 선정시 지역적 불균형 해소 고려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확충 평화아중 BTL사업 검토 추진 어린이 독서체험교실 운영 개선 평화 · 아중 도서관 BTL사업 문제점 대책 구)남노송동사무소 2층 헬스장 설치	김 남 규 권 정 숙 김 명 지 " " " 박 혜 숙 서 윤 근 임 병 오

동 물 원

■ 요구(처리) 건수: 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동 물 원	동물원 시설에 대하여 위터존 안전요원 배치 수목표찰 동물원휴게소 사용료 체납대책 동물원 주변 노점 정비대책 동물원 이전 계획	김 남 규 권 정 숙 " 박 혜 숙 " 조 지 훈

완 산 구 청

■ 요구(처리) 건수: 6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용역비 절감대책 전보제한자 인사발령 최소화 120번 생활민원처리 통장순찰제 활용 인사제도의 문제점 사랑의 음악봉사단 명칭 변경	이 명 연 구 성 은 김 현 덕 백 현 규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	박 해 숙
민원봉사실	민원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사전 민원 분쟁 예방 민원실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조성 수의계약(무인민원발급기)	김 철 영 김 상 휘 " 양 용 모
시민생활 복지과	게이트볼구장 정비 경로당 회원관리 철저 재해 구호물자 관리 철저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방안 주요업무보고 양식 통일 청소년 보호 캠페인 지속 추진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 어린이 놀이터 및 게이트볼장 관리업무 이관 검토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검토 법령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적용기준 검토	남 관 우 " " 국주영은 김 종 철 박 현 규 여 성 규 이 원 택 " "
경제교통과	부서 홈페이지 관리 남부시장 가설점포 철거 대책 전통시장 관리방안(남부시장) 무단방치 대형차량 단속 인도 무단점용 차량 단속 방안 기업형 노점상 단속 및 조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사전 안내철거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철저 매곡교 주변 정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개선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형평성 있는 단속 공공목적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철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개선대책 불법광고물 정비시 노인일자리 활용방안	서 윤 근 임 병 오 최 주 만 김 광 수 " 강 영 수 " " 국 철 김 주 년 " 김 창 길 양 용 모 " 유 영 국
환경청소과	마트 및 학교 앞 쓰레기 청소 홍보 방안 중앙중학교 부근 쓰레기 적치 해결방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불법유통 지도단속 '07년 2천만원 사업 정확한 집행 재래식 화장실 지원기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폐달식 뚜껑 개조 검토 청소관련 민간위탁 이후 시민들의 불편 예방 도로변 낙엽처리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마련방안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처리 방안 농촌동 폐비닐 수거 종합적인 대책 마련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상태 점검으로 민원 사전 방지대책 환경오염 방지대책(하천변 화장실 설치) 한옥마을 권역 음식점의 차별화 방안 하천오염행위 단속 요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대책	남 관 우 " " 국주영은 " 김 종 철 " " " 박 현 규 " 이 원 택 국 철 국 철 김 창 길 "
건 축 과	기계식주차장 철거실적이 저조한 이유	강 영 수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내실있는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재료비 구입단가 상이한 이유 공원 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 철저	김 주 년 양 용 모 "
건 설 과	대형 무단 방치차량 지도 단속 하수관거 유지 관리상 문제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시 굴착후 당일 복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인도포장재를 친환경제품 항토블럭 사용 터널, 지하차도 정밀한 안전점검 실시 신시가지와 구도심의 가로환경 불균형 해소책 가로수 관리 구도심 가리내길 및 약전거리 주변 가로등 개선 가로수관리 및 도로굴착후 계획적인 복구 가로·보안등 친환경제품으로 교체 도로, 하천 사용료 체납대책	김 광 수 강 영 수 " 김 상 휘 " 김 주 년 김 창 길 " " " 양 용 모 유 영 국 "

덕진구청

■ 요구(처리) 건수 : 78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1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입찰공고등 절차간소화 장기 상습병가로 인한 대민서비스 약화 구청강당 시설투자하여 공연장 활용 사업비 잔액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할것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사랑의음악봉사단」명칭 변경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 활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동 청사 신축예산 완산구와 차등편성 사유 팔복공단의 기반시설 확충 청원경찰 친절교육 필요 조촌·동산동 직원 배치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지도단속	이 명 연 구 성 은 김 철 영 " " 김 현 덕 " 백 현 규 " 송 상 준 " " 송 상 준 " 박 혜 숙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지양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인간증명서 제출 제도개선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사전 민원분쟁 방지책 민원실 공간 활용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산정으로 이의신청 사전 방지	김 철 영 " 김 상 휘 " 유 재 권
시민생활 지원과	게이트볼구장 정비 경로당 회원 관리 철저 재해구호 물자 관리 철저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철저 주요업무보고 양식 통일	남 관 우 " " 국주영은 김 종 철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청소년보호 캠페인 전개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철저 여성음악교실 운영 개선 어린이놀이터 및 게이트볼구장 관리업무 이관 검토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법령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적용기준	박현규 여성규 오현숙 이원택 " "
세 무 과	고액채납자 관리 TF팀 필요 부과세금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구성은 백현규
경제교통과	대형차 무단 방치차량 단속 대책 주정차 단속요원 복무관리 출퇴근 시간대 교통대책 기업형 노점상 단속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사전 안내 고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개선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 불법주정차 형평성 있는 지도단속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한쪽면 주차 확대 실시 방안 불법광고물 정비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개선대책	김광수 " " 강영수 " " 김주년 김주년 " 김창길 양용모 유영국 " "
환경청소과	마트 및 학교 앞 쓰레기 청소 홍보 방안 중앙중학교 부근 쓰레기 적치 해결방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불법유통 지도단속 재래식 화장실 지원기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폐달식 뚜껑 개조 검토 청소관련 민간위탁 이후 반응 민간위탁 지역 도로변 낙엽 처리 방안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마련방안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처리 방안 농촌동 폐비닐 수거 종합대책 마련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상태 점검으로 민원 사전 방지 대책 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철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홍보 강화 학교주변 부정불량 식품 지도감독 환경오염행위 방지 대책(하천변 화장실 설치) 음식점 관리 방안	남관우 " " 국주영은 김종철 " " " 여성규 박현규 이원택 김광수 강영수 " 국철 "
건 축 과	아름다운 웨딩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허가부서 의견 폐·공사 정비시 공정한 사업추진 기계식 주차장 철거 제도개선 및 홍보방안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내실있게 추진 「사랑의 집 고쳐주기」재료비 단가 상이한 이유	김광수 " 강영수 김주년 양용모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공원 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 폐석면 공장허가 관련	" 유영국
건설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 인도 무단 주차차량 단속방안 하수관거 유지관리상 문제점 하수관거 정비시 도로굴착후 당일 복구 친수공간 확대방안 산림자원 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철저 가로·보안등 친환경제품 사용 인도 포장재료 친환경제품 황토블럭 사용 푸른전주가꾸기사업 관련 터널, 지하차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가로수 관리 구도심 가리내길 가로등 조도개선 가로수 관리 및 도로굴착 복구 가로·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절전형 램프 교체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대책	김광수 " 강영수 강영수 " " 김상휘 " " 김주년 김창길 " 양용모 유영국 "

시설관리공단

■ 요구(처리) 건수: 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입장료 징수 방안 어린이 스포츠단 운영 법무팀의 필요성과 직제개편 동물원내 음식점, 매점 정상화 필요 공단을 운영함에 주민과의 소통 필요 월드컵골프장 법적 소송 대응책 마련 종합경기장 입주단체 임대료 체납대책 빙상경기장 강사 운영 빙상경기장 이용 홍보 체육관근무 직원의 친절도 부족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능동적인 처리 필요 월드컵경기장내 사우나 시설 운영 대책 임대료 체납대책 공단 각종시설 이용료와 사용료 현실화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위탁관리 필요 로울러스케이트장 공단위탁 운영방안 주차장 유료화 월드컵골프장 전문인력과 교육 필요 월드컵경기장내 웨딩홀 체납대책	이명연 " 구성은 " 구성은 김현덕 " " 백현규 " 송상준 송상준 " " " 정우성 " " "



제4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시정(건의) · 요구사항 부서별 처리현황

- 제267차 제2차 정례회 회기중 : 2009. 11. 24 ~ 11. 30(7일간)
- 감사방법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실시

위 원 장	박현규
부 위 원 장	오현숙
위 원	권정숙 유영국 양용모 송경태 김명지 김현덕 구성은 박혜숙 김창길

- 총처리건수 : 289건

부 서 별	처리건수
홍보담당관	7
감사담당관	11
기 획 국	16
기획예산과	2
행정지원과	2
창의혁신과(출연기관포함)	8
재 무 과	4
복지환경국	12
시민생활복지과	7
여성청소년과	3
자원관리과	2
시민협력과	0
경 제 국	57
성장산업과(출연기관포함)	22
경제진흥과	11
영상정보과(출연기관포함)	20
친환경농업과	3
동 물 원	1
전통문화국	26
전통문화과(출연기관포함)	8
한스타일과	5
문화관광과	4
체육지원과	5
시립도서관	4
건설교통국	15
도 시 과	1
교 통 과	6
주 택 과	2
도로안전과	6
예술도시국	21
아트폴리스과	2
생태복원과	8
푸른도시조성과	2
환 경 과	9

부 서 별	처리건수
비전사업추진단	13
비전사업팀	9
전략사업팀	4
보 건 소	20
보건행정과	11
건강증진과	7
평화보건지소	2
상하수도사업소	10
수도행정과	5
급 수 과	3
수질관리과	0
하 수 과	2
농업기술센터	7
차량등록사업소	0
시설관리공단	15
완 산 구 청	29
행정지원과	4
민원봉사실	1
시민생활복지과	6
세 무 과	3
경제교통과	5
환경청소과	3
건 축 과	0
건 설 과	7
덕 진 구 청	30
행정지원과	3
민원봉사실	0
시민생활복지과	3
세 무 과	3
경제교통과	8
환경청소과	9
건 축 과	0
건 설 과	4
합 계	289



2. 부서별 처리내용

공보담당관

■ 요구(처리)건수 : 7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공보담당관	1. 광고판 활용부족 2. 난시청 해소방안 3. 홍보예산 부족 4. 미디어 홍보필요 5. 광고판 이미지 홍보 6. 홍보분야 개선 7. 라디오 광고	유영국 " " 양용모 구성은 권정숙 송경태

감사담당관

■ 요구(처리)건수 : 1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감사담당관	1. 문화재 화재보험 2.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3. 소송 공탁금 4. 시민감사관 위촉 5. 감사원 감사 6. 보건소 감사 7. 시유공공용지 매입 8. 전북장애인손수레협회 민원 9. 복지분야 감사관련 10. 민원 처리 11. 아중천 생태하천 감사	백현규 오현숙 양용모 권정숙 " 박혜숙 김현덕 송경태 " 김명지 양용모

기획관리국

■ 요구(처리)건수 : 1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기획예산과	1. 조기집행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2. 성과예산제와 참여형 예산제	양용모 "
행정지원과	1. 폐휴지 처리 2. 인력확보 방안	김현덕 양용모
재 무 과	1. 고질체납자 징수 기동팀에 대하여 2. 차량관리 3. 국공유재산 대부료 4. 국공유재산 관리	송경태 양용모 박현규 유영국
창의혁신과	1. 직무분석 실시 2.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3. 주민자치센터 운영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유영국 권정숙 유영국 권정숙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5. 직원친절 교육 관련 6.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7. 장애인 해외연수 8. 공원 및 녹지관리부서 일원화	박혜숙 박현규 송경태 유영국

생활복지국

■ 요구(처리)건수 : 1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민생활 복지과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 덕삼사회복지관의 보조금 회수문제 3. 전주종합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4. 수화통역센터관리 5. 곰두리봉사대운영 6.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방안 7. 농아인협회 전주시지회 보조금 유용	권정숙 오현숙 유영국 구성은 김현덕 " 구성은
여성청소년과	1. 여성사회참여 지원 2. 청소년 운동시설 3. 민간위탁시설 감사 지적 사항	권정숙 " "
자원관리과	1. 민간위탁 평가 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	유영국 양용모

경제산업국

■ 요구(처리)건수 : 58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성장산업과	1. 기업유치 사후관리 2. 산업단지내 철도건널목 이월 사유 3. 전주국방벤처센터에 대하여 4. 탄소기술원과 구 센터와 관계, 산학연 협력관계, 전략산업단장 역할 5.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인건비관련, 상용화 시기 6. 탄소섬유 생산 7. 탄소섬유 실용화 생산시기, PAN섬유 장비 구입 8.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출신학교 비율, 경제적 인프라, 국비사업 지속 9. 생물소재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목적 10. 생물소재연구소 기업지원 사항 11. 생물소재연구소 비빔밥연구센터 12. 생물소재연구소 외부 연구과제 수주 13. 생물소재연구소의 비전 14. 생물소재연구소 연구소장 업무추진비 및 경상비 사용 15. 생물소재연구소 비빔밥연구센터 16. 생물소재연구소 비빔밥연구센터	유영국 양용모 권정숙 박현규 오현숙 유영국 양용모 권정숙 박현규 " " " 유영국 양용모 구성은 권정숙
경제진흥과	1. SSM과 지역상생 발전협의	구성은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2. 노사대표 벤치마킹 3. 한국노총 수도요금 미납 4. 모래내시장 환경개선 사업 5. 이월사업 현황 6. 전통시장 지원 7. 동문상점가 조형물 설치 8. 희망근로사업 9.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 10. 상인회 등록기준 11.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오현숙 구성은 양용모 " 권정숙 " " 유영국 김현덕 양용모
영상정보과	1. 114콜센터 2. 콜센터 운영 3. 기업유치 4. 성과관리 5. 향후 당부 6. 원장임기 및 연봉 현황 7. 명절효도휴가비 8. 사업비 집행 9. 성과관리체계 10. 기술이전료 환원 11. 홍보마케팅강화 12. 사업실적 13. 입주기업 심의 14. 지원사업 평가 15. 경상비 운영 16. 원장임기 및 연봉 17. 명절효도휴가비 18. 직원현황 19. 국비 지원 20. 사업 발굴	유영국 송경태 박현규 " " 오현숙 " " " 유영국 " 양용모 " " " 권정숙 " " " 송경태
친환경농업과	1.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2.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3.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	박현규 유영국 "
동물원	1. 동물사 신축에 따른 관람객 증가 여부	유영국
농업기술센터	1. 찌찌가무시 병 2. 기술센터 환경 3. 쌀값 대책 4. 농업인 단체 행사 5. 농업인대학교육 6. 시민텃밭농장 운영 7. 우렁이 농법 추진	박현규 유영국 " 구성은 권정숙 " 김명지



전통문화국

■ 요구(처리)건수: 26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문화관광과	1. 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2. 외지 관광객에 대한 홍보 3. 각종 축제 관람인원 및 경제유발 효과 4. 4대축제 개최 통합	유영국 " 김현덕 "
전통문화과	1. 서화문화관 건립비 불용처리 2. 전주부사 편찬 3. 예산 지출 4. 전주문화재단 예산 지출 5. 전주문화재단의 업무 6. 전통음식관광명품화 사업 7. 한식 해외마케팅사업 성과 8.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양용모 " " " 권정숙 김현덕 양용모 구성은
한스타일과	1.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 2.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 3. 전주비빔밥의 우주식 개발 4. 한방엑스포 행사 추진 5. 한정식 및 비빔밥의 명품화	오현숙 유영국 " 박혜숙 김현덕
시립도서관	1. 작은도서관 2.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3. 북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4. 작은도서관 운영	유영국 " " 권정숙
체육지원과	1. 승마장 이전 2. 골프장 관련 3. 민간위탁시 공증 4. 직장경기부 운영 5. 장애인 체육예산	오현숙 유영국 권정숙 김현덕 송경태

건설교통국

■ 요구(처리)건수: 15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교통과	1. 택시유가보조금이 작년과 차이가 많은 이유는 2. 터미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3. 공영주차장 조성 4. 삼천2동 공영주차장 주변 주차단속 5. 시내버스 지원 6. 준공영제 검토	유영국 " 권정숙 김현덕 구성은 "
도시과	1. 도시계획 용역	유영국
도로안전과	1. 자전거도로 관련 2. 새마을도로 사유토지	박현규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3. 중앙분리대 설치 4. 자전거 도로 5.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6. 풍년맨션 재난 예방	오현숙 " 유영국 권정숙
주택과	1. 장애인 주거안정 대책 2.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	송경태 김현덕

예술도시국

■ 요구(처리)건수 : 21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생태복원과	1.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2.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3.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4. 하천관리 5. 아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6. 공개계약 7. 느티나무 보호 8. 친수광장 조성	박현규 유영국 양용모 권정숙 김명지 " " 권정숙
푸른도시 조성과	1. 가로수관리 2. 공원시설물 관리	김현덕 송경태
아트폴리스과	1. 기린로 간판정비 2. 불법현수막 방지	권정숙 "
환경과	1.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2. 음식점 원산지 표기 3.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4. 오송제 사업 5. 도심 소류지 살리기 사업 6. 소류지 활용의 로드맵 7. 온실가스 저감방안 8. 폐식용유 수거 9.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박현규 오현숙 유영국 양용모 " " " 권정숙 김현덕

비전사업추진단

■ 요구(처리)건수 : 13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비전사업팀	1.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2.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3.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4.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5.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6.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오현숙 " 유영국 " " 권정숙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7.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8.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9.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 김현덕 송경태
전략사업팀	1.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2.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3.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4. 호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박현규 유영국 권정숙 김현덕

보건소

■ 요구(처리)건수 : 2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보건소	1. 친절 평가 2. 지역사회연계사업 3. 감사지적사항 4. 조기집행 문제점 5. 전염병관리 6. 정 현원 관리 7. 신종플루 8. 건강증진센터운영 및 구강보건사업 9. 건강증진사업 신규시책 발굴 10. 건강증진사업의 신규시책 발굴 11. 신종플루 대처 미흡 12. 신종인플루엔자 13. 친절 평가 관련 14. 모자보건사업관리 15. 폐의약품 관리 16. 의료기관 행정처분 17. 에이즈환자관리 18. 에이즈환자관리 19. 아토피 예방사업 20. 신종인플루엔자	박현규 ” ” ” 오현숙 유영국 ” ” ” ” 양용모 양용모 구성은 권정숙 ” 박혜숙 ” 박혜숙 김현덕 ”

상하수도사업소

■ 요구(처리)건수 : 1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상하수도 사업소	1. 사업소 협소 2. 각종 수당 지급의 부적절 사유 3. 고액체납자관리 4. 고액체납자관리 5. 고액체납자관리 6. 맑은물 공급사업 7. 팔복정수장 이전	유영국 오현숙 김현덕 ” 구성은 유영국 ”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8. 맑은물 공급사업 9. 하수관거정비사업 10.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용모 유영국 권정숙

시설관리공단

■ 요구(처리)건수 : 12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시설관리공단	1.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 관련 2. 쓰레기봉투 판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월드컵경기장 남측 주차장 활용 대책 5.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대책 6. 승화원 환경 7. 체육시설 운영 관련 8. 덕진공원 관리 9. 야구장 보수 10. 야외빙상장 관련 11. 골프장 인터넷예약 12. 암벽장 수지 비율 13. 견인차량 관련 14. 화산체육관 매점 운영 15. 빙상장 유희 공간 임대	오현숙 " 유영국 " " " " " 양용모 구성은 권정숙 " 김현덕 " " "

완산구청

■ 요구(처리)건수 : 29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기준 3.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 차량관리 현황	유영국 오현숙 유영국 양용모
민원봉사실	1. 외국인전용 민원상담 창구 운영	구성은
시민생활 복지과	1. 빈곤층 수급자 전략방지 2. 노인 여가 프로그램 3. 한부모가족 지원 4. 여성일자리 창출 5. 여성일자리 창출 6. 여성일자리 창출	송경태 구성은 권정숙 유영국 구성은 "
세무과	1. 도세와 시세의 징수율 차이	박현규
경제교통과	1.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김현덕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2. 가구거리 앞 불법주정차 문제 3.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 4. 주차 단속 5. 주차 단속	" 양용모 " 송경태
환경청소과	1. 과자(라면)봉지 수거관련 홍보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3. 공한지 쓰레기 수거	박현규 " "
건설과	1. 도로 및 시설물 단가계약 2. 풍년맨션 재난 예방사업 3. 도로에 편입한 사유지 토지 4. 덧씌우기 공사 5. 버즘나무 가지치기 사업 6. 풍년맨션 재난예방사업 7. 풍년맨션 재난예방사업	양용모 권정숙 " 김현덕 " 유영국 박현규

덕진구청

■ 요구(처리)건수 : 30건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행정지원과	1.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2. 집기구입비의 명시이월 3. 조촌동 청사 신축	유영국 " "
시민생활 복지과	1.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2. 여성일자리 창출 3. 여성일자리 창출	송경태 유영국 구성은
세무과	1. 세외수입 징수현황 2. 결손처분 관리 3. 감사지적사항	유영국 양용모 박현규
경제교통과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 단속 2. 주차단속 시간대의 합리적 조정 3. 공영터미널 주변 주정차 단속 4.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5. 번호판 가리는 차량 단속 6. 바이전주 상품 7. 선정성 광고물 단속 8. 무단방치차량 처리 인력부족	송경태 양용모 구성은 김현덕 박현규 " 오현숙 박현규
환경청소과	1.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2.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 관련 3. 폐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4.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5. 환경코칭스텝제 6. 외래어 사용 7. 모범음식점 관리	박현규 " " " " 구성은 김현덕



소관부서	건 명	요구의원
	8. 좋은식단 우수업소 9. 관용차량 운영관리	” 양용모
건설과	1. 가로수 관리 2. 집단민원 처리 3. 선급금 지급 4. 도로포장 관리	박현규 유영국 양용모 김현덕





제5장 시정에 대한 질문

제1절 시정에 대한 질문 총괄표

제2절 회기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41회 임시회

제246회 임시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51회 임시회

제257회 임시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61회 임시회

제265회 임시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69회 임시회

제1절 시정에 대한 질문 총괄표

1. 회기별 시정에 대한 질문 현황

기간 : 2006. 9.13 ~ 2010. 4. 1(제236회~제269회까지)

회기	일 자	질문 의원수	질 문 의 원 명
236(정)	06.09.13	2차	5 국주영은,김남규, 김상휘,김현덕,백현규,양용모
	06.09.14	3차	6 권정숙,김종철,남관우,서윤근,유영국,유재권
239(정)	06.12.08	2차	4 국주영은,김철영,박혜숙,이명연
	06.12.11	3차	5 권정숙,김남규,김창길,박현규,양용모
	06.12.12	4차	7 강영수,구성은,국 철,서윤근,오현숙,유영국,장태영
소계	2회		27
241(임)	07.03.14	2차	7 국주영은,김남규,박혜숙,송경태,이명연,이원택,장태영
	07.03.15	3차	8 권정숙,김광수,김종철,남관우,서윤근,양용모,유영국,임동찬
246(임)	07.09.12	2차	8 구성은,권정숙,김창길,백현규,양용모,유재권,이명연,임동찬
	07.09.13	4차	4 김광수,김남규,남관우,유영국
248(정)	07.12.07	2차	3 국주영은,김상휘,박현규
	07.12.01	3차	4 김남규,김창길,양용모,유영국
	07.12.11	4차	7 김종철,박혜숙,서윤근,오현숙,임동찬,장태영,조지훈
소계	3회		41
251(임)	08.03.17	2차	2 강영수,유영국
	08.03.18	3차	4 김남규,박혜숙,백현규,유재권
257(임)	08.09.08	2차	6 구성은,국 철, 김상휘,양용모,유재권,임동찬
	08.09.09	3차	6 강영수,국주영은,권정숙,박혜숙,백현규,유영국
259(정)	08.12.04	2차	4 김광수,김명지,서윤근,유영국
	08.12.05	3차	2 양용모,오현숙
	08.12.08	4차	4 국주영은,김남규,김종철,김현덕
	3회		28
261(임)	09.04.07	2차	8 강영수,권정숙,김상휘,김현덕,박혜숙,오현숙,이명연,임동찬
	09.04.08	3차	4 김남규,김철영,양용모,유영국
265(임)	09.09.08	2차	4 김남규,박혜숙,양용모,유영국
	09.09.09	3차	3 강영수,김종철,오현숙
267(정)	09.12.08	2차	4 권정숙,김광수,김남규,장태영
	09.12.09	3차	5 강영수,국주영은,김현덕,양용모,오현숙
	09.12.10	4차	3 구성은,김종철,서윤근
	3회		31
269(임)	10.04.01	2차	3 양용모,오현숙,이명연
	1회		3
합계	12회		130



제2절 회기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제 236회 제1차 정례회('06. 9. 13~9. 14)

Q 국주영은 의원(송천1·2동)

▶ 시장님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여성정책 수립과 이의 반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정치란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하고 이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기초의원 비율은 지역구 4.25%이고 광역비례와 기초비례를 합해서 13.6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중 스웨덴의 45%, 독일 32%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중 중국 20%, 베트남 27%의 비율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최소 조건인 30%의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시대에 생활정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생활정치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편협된 시각으로 '약함'이나 '부적합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전문성의 구분'이나 '상대적 특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위상을 상승시켰고, 여성가족부는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에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는 2002년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재원 배분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총체적인 여성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조정회의 시행에 대하여

둘째, 여성 정책은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모든 부서가 골고루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에서의 성 평등이 실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모든 부서의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 전반에 성인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국·과에서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선정되고,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설적이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차후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성 인지도육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하여

셋째,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전주시 여성공무원 인사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혁신 정책에 대하여

넷째, 전주시 여성공무원을 보면 총원 1,862명에 588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16명인 20.2%, 사업소에 121명인 34.2%, 2개 구청에 351명인 37.5%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은 정원 13명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5급 현원 97명중 여성공무원은 5명, 6급 현원 340명중 56명, 7급 654명중 228명, 8급 180명중 105 명, 9급 153명중 74명, 기능직 393명중 1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채용 공무원 1만2천302명 가운데 6천 216명이 여성으로 50.5%가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올해 39명이 신규로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51.2%인 2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기의 수치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남녀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성공무원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 승진기회 부족 및 보직관리에서도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이라고 승진 기회에서 누락시키지 말 것과, 여성 공무원을 4급에 최소 1명 이상 및 단순업무 중심의 편제를 그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로 바꿔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 인사부터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살려 업무의 활기와 성과를 기대하는 혁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6가구 중 1가구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4년 1만4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신고율이 6%에 불과하여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이혼 및 가정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사회적 성매매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 문제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상담 보호, 법률, 의료, 복지 등 총 20여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주민홍보와 캠페인,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이 안돼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 병원, 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매매방지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문제까지도 확대하여 운영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송천동 롯데아파트 앞에서 호성로(메가월드)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매일 민원이 쏟아지는 송천동 롯데아파트 앞 호성로 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가월드 옆 도로폭이 비좁아 메가월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송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뒤

섞여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시에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겹쳐서 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곳입니다. 이 곳은 출퇴근시 송천동에서 호성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최소 3~4회 이상 신호를 받아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주 제방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도로가 완성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GS자이와 광진라미안이 입주가 완료되면 788세대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 출퇴근 차량도 이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체증과 이곳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져 교통대란이 예측되는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 도로의 확장의 당위성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선 3기때 이미 2006년 시작해서 2007년까지 완공하는 추진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226차 정례회의에서 당시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안되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공언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고,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06년 추경예산에서도 배제가 되어 자칫 시급한 현안사업이 막연히 연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롯데아파트와 호성로 사이의 도로확장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시장님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하여

먼저 저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끊임없이 향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향상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우리사회 발전의 축으로써 당당하게 서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정치적 진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저 또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2006년은 행복한 여성, 건강한 가족 전주시가 만들어갔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는 여성 일자



리 갖기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DB자료를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는 6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그동안 조성하였고 여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기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여성단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시 전체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30%까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나 여성인재은행 사이트 운영, 각종 지도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부분도 우리시는 15개 여성단체에서 15,509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지원 사항으로 여성작은동호회 등 각종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교육,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모·부자 가정 지원 등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 부분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경쟁력있는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배치 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조정회의 시행에 대하여

두 번째로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구현과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 확대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심의기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여성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교수,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수집 및 여성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시행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있

게 운영해서 정책 과정에 양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운영 기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성 인지도교육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로,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 교육 외에 특별히 성 인지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 인지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과정을 통한 승진 가점은 현재의 인사관계 법령상으로 승진가점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이수시에 교육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시 여성공무원 인사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혁신 정책에 대하여

네 번째로, 인사시 여성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혁신을 요구하셨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공식 사회에도 여성공무원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남녀 공무원 분포 비율이 90년대 중반 20% 내외에서 최근에는 31%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이 사임소, 구청 등에 편중되어 있고 4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으며, 직급별 불균형, 승진기회 부족 등 남녀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남성 공무원에 비해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부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본청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함은 물론 승진시에도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등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여성이 행복하고을 선정 평가에서도 234개 기초 자치단체중 우리시가 16위권에 드는 등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건에 부합되면 주요부서에 발탁하고 인사시 정당한 평가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전주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성매매방지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가정 여성폭력 방지 전주시협의회의를 구성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2004년 7월부터 관계 공무원, 의료, 교육, 경찰서, 변호사,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대표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설치하여 성매매집결지 정비기반 조성 및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를 공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기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시·군·구가 주관이 되어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는 각 시·도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시·군·구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회를 둘 수 있습니다.

향후 여성폭력방지 전주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여성 폭력 서비스 관계 기관간에 연계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에 복합적인 룰, 성매매부터 여성 폭력까지 모든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천동 롯데아파트 앞에서 호성로(메가월드)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송천동 롯데아파트 앞에서 호성로간 송천중로 확장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중로1-10호선은 서곡광장에서 미산초교까지 연장 4.8km, 폭 20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써, 대명APT에서 롯데APT간 440m는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2005년도에 개설을 완료하였고, 신평리에서 대명APT간 360m에 대하여는 2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롯데APT에서 호성로간 350m 미개설 구간은 사업비가 약 4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잉여자금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2007년 예산부터 시비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김남규의원(송천1·2동)

▶ 도시경관,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전주시 공공건물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경관, 미관 조성을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민선3기를 조사해보니 많은 공공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후진국형 관행이 극복되지 못하여 부실 건축물과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는 제발 공공건물이 신축될때 그런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도시 미관과 경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자 중심이 아닌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공간 문화과가 신설되어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자료로 열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전주시장애인복지시설, 전통문화센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건조물의 창조적 정비와 신축 건물의 미관 디자인까지도 중앙정부가 발벗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주요 건축물 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최명희 문화관까지 대표적인 하자보수가 있는 것을 건축 면적과 사업비, 용도, 건축 연도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동사무소 건물 들도 완산과 덕진을 비교하여 8건에 115억 1천만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은 조정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서 홍역을 치렀고 현재는 계단과 복도 이음 시설에서 백화 현상과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자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주장애인복지시설은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당당 시 사회문화 위원이 왔을때 유리창이 이중문이어야 하는데 단층으로 되어있고 문턱과 문 사이즈는 장애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중심이었고 이동 통로 동선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지난 시기에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으며 2006년 8월에 비가 억수로 내렸을때 한벽극장위 통로에서는 또 비가 줄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종철 인후동 의원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됐는데 건설 당시에 건조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송천동이나 팔복동 주민들 전주시민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냄새와 악취 문제로 고생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벽의 까대기는 건축에 설계에 정확한 덕진구청 허가도 받지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천정에서 방수 처리가 안되어서 크레일이 금이 가서 방수처리 예산이 의회에 왔는데 지금도 하자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화관은 2006년 4월 25일날 개관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세미나실을 가니까 통풍이 안되고 땅이 생겨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서 빼내고 있었습니다. 솥을 놓고 있었고 지은지가 불과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하면 토목 건설하시는 분들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다 시민들이 부



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선4기에서는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내청소년 수련실은 지하에 연약 지반이었는데 암반 공사를 잘못했고 덕진 노인복지회관도 암반 돌출로 해서 지질 공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덕진공원 밑에다 짓고 있는데 화려한 수경 공간과 그 숲을 조성하여 건축물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나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의 한계인지 그런 외관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천정이 금이 가서 방수가 되고 지하에서는 탕이 나서 통풍이 안돼서 시민들이 지하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되어있고 사용하는 내부 공간에서는 통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설계자나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어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대부분 경상비가 80~90%이고 보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내부시설들이 정말로 시민 편의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 의원 및 전문가들의 고언을 수집한 결과를 종합하면 실시설계, 관리감독 부실이 80%였습니다. 과업 지시서, 실시설계, 관리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 되었고 시공사의 미이행을 딱딱딱 잡아내야 하는데 그냥 막 서류로 하다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정말 관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세경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발주, 시공 및 감리, 준공까지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과 부실예방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최근 짓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고 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같은 기분이 안들어요. 그 정도의 15억에서 대개 20억까지 돈을 들이면 충분히 외관상으로도 멋진 건축물, 아, 저게 동사무소구나, 저게 제일로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갖다가 수집하고 현상설계, 전국적으로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공동 발주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특색과 이용자 중심, 특히 주5일제가 되면서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개방 가능해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문이 꼭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세콤 장치를 하더라도 2,3층부터는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첨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의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한 예를 들자면 현상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든지 해서 당선작을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놓고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어가지고 설계 자문위원을 둡니다. 전문가, 이용자, 시민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설계를 뜯어고쳐서 반영하고 또 공사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감리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실 시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 감독관 해야 재무과에서 돈 나오고 있는데 민간 감리단, 전문가들이 끼여가지고 탁탁탁 공정별로 사진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때에 아, 이제 관급 공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번쩍 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 소규모 공간,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편의의 미관이 고려된 건축물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의 대상은 단지 건축물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 다리 등 건축 미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가 된 것은 그 시장님 15년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젤리에 서 세느 강변까지 신도시 라데팡스까지 다 이런 것들도 예술과 문화가 겹미됐을때에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문화경관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고 간부들도 있고 구청장들도 있고 또 제 이야기를 시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시의원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 자리에서 학습하자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죠. 제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원활한 이해와 재개발 사업의 판단을 위해서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 통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621,749명이고 세대수는 209,069 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0.64%입니다. 향후 분양될 아파트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여의동 민음주택에서 인후동 송정 씨미트까지 29개 단지 14,346세대가 지금 사업 승인이 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가 정제된 이 현실을 볼때 미분양은 당연한 초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대를 감지하고 이 경과 보고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2006년 8월 1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6개가 승인되었고 28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금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개동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도권 위주의 법이고 특히 서울 강북의 재개발 그런 법이라고 보고 또 백만 이상의 광역도시에도 맞게 이 법이 하다보니 자세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와 맞지않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 지역 도시 인프라와 지역 실정의 적용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사례로서는 대구, 부산, 중소 도시에서 지금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경제면을 보면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겠지요.

시장계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실태 조사하고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대개 보면 노령화되어 있어요. 글도 못 읽을 수도 있고 구두로 전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판단의 자료가 흐릴 수 있고 정보가 부재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인지해야 하는 설명서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주니까 노령화된 어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단계별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리고 재 설명회를 또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도심진흥과 도심진흥팀에서 인력 구조로서는 이 수많은 다섯건에서 여섯건의 민원과 삼사십분의 통화를 갖다가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입이 다 부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겠어요. 이것도 답변을 위한 자료하려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데스크 포크팀 동사무소의 동장님, 구청장,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 시의 도심진흥과 이렇게 해서 계열화된 그래서 이 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그 팀의 계원들 5명인가 4명인가 전화 다 받을려면 이 29개 지역 28개 지역 앞으로 또 할 일, 일을 못해요. 민원 보겠습니까. 그게 행정의 전형적인 예조.

그래서 주민의 이해도가 미숙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책위, 대책위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지고 신문에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불신하면 이게 뭇 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세 번째, 미분양 사태에 따른 재산 손실의 초래가 예상됩니다.

2006년 8월 현재 14,34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으로 승인되어 설계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북도 도내에 아파트 분양률이 몇 %인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정도의 기본 자료는 좀 갖고 있고 시공 회사 단가가 평당 3백만원일 때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현재 전주시민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당 소유 면적이 50평에서 80평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모은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런데 이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30평 아파트를 거기에서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을 받을려면 1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위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아파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분양이 잘되나, 못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손실 이 시기별로 다르다 이거죠.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분담금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 법이 수도권이나 광역 도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전주같은 중소 도시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 교통 민원, 학교, 상하수도, 도시기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같은 사이즈로 짓다보니까 인후동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올 11월에서 내년엔 개관 하는데 옛날에는 그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1천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3천세대가 들어와. 도로는 그대로여.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났어. 그러면 교통대란은 뻔한거여. 출퇴근 시간에 진출입 못하는 것이고 눈이 왔을때 그 문제는 뻔한 것이고 구도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길지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판단의 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거죠.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겨울철 동절기에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최소한 일조권을 2시간은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을 이야기하면 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짓고 나서도 일조권 분쟁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구도심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지었으니까. 부심권같이 신도시같이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조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어서 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시장계 질문하겠습니다.



도정법이라고 도시계획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의 타 지역 사례를 갖다가 조사해서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게 향후 계획을 하고 원고대로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무진들이 전국 사례를 발췌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이 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대의 10년간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이것은 데스크 포크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정말 송하진 시장은 따뜻한 시장이고 정말 주택도 잘 알고 단체장들이 대개 모르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예요. 그러다보니까 다 속아버려. 그러가지고 도장 딱딱딱 찍어주는 것을 저는 시의원 8년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 자문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어떠한 도장을 찍고 도에 또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의 홍보 강화와 재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의 다발 사례 유형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말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도시경관,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김남규 의원님께서서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치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다각적인 검토도 요구한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시미관과 경관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없고 치밀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도 흠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전통문화국의 보강, 건축시설팀을 신설 하는 등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설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에 의견을 반영한 후 설계 시공을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청사의 경우 현장 공사 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구마모토 Art 폴리스 사례나 안양시의 아트 폴리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폴리스 정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뛰어난 도시문화, 건축 문화 등에 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공사 기간중에 지역주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정례화해서 건설 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및 교통시설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신축될 동사무소 건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용자 중심의 신축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에 신축할 동사무소 건물은 설계를 현상 공모하거나 전문가 또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신축토록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내의 동사무소는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작고, 쉽고, 빠르고, 편안한 문화복지 공간을 많이 조성하자는 것으로 끊임없이 전문가들 특히 의원님들과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실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재산 손실 문제,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명 문제점,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개발부담금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행정 수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회에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28개 재개발 예정구역중 16개 지구가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9개 구역이 시공사 내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반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혼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업추진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서 정상적으로 입주될 때까지 최소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 사례 등도 조사해서 이후에는 시민이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주 지역에 맞는 의원님 지적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형을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재산권 피해예방 등 그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해당 동사무소 15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6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관할 동장 및 행정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8월 31일 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 및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더욱 유익한 주택재개발이란 홍보 팸플렛 3,000부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반장 회의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전에 순회 설명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홍보 팸플렛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위가 승인된 16개소 관할 동장, 행정 민원담당, 도심 진흥과와 합동으로 TF팀을 다시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많은 이슈를 제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다시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김상희의원 (효자3·4동)

▶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차량번호판 제작소 전반에 관한 커백션 의혹 해결 및 사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류만 존재하고 있는 차량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그랬더니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현재 7개나 있으며 또한 인구비례로 볼때 과다하여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측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대표들의 인적 관계에서 놀랄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7업체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4가족이 7개 사업체를 소유한채 지금까지 독과점을 해왔던 것입니다. 4개 업체는 형식상 사업체일 뿐 실적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실적 관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봉인 수불 현황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들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때에 따라서는 수불현황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불법도 자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실적을 위 변조 해왔을때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동안 묵인하고 이를 접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측은 인구비례 과다 이론을 들어가며 추가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교부대행업소를 대변하는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을 위한 집행부입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묵인해 온 것은 업체와 이면적 커백션 의혹을 증폭시켜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실적 없이 다른 사업체의 입점 방해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물봉입니까. 그동안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전주시민들은 전국 자동차번호판 92,850대를 교체 해왔습니다.

현재 전주시 번호판 교부대행업소의 제작비는 중형 기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차량번호판 제작비를 비교해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5,500원, 인천 연수구는 6,380원, 대구 달성군 7,000원, 경기도 안산시 7,000원, 광주광역시 8,000원, 부산광역시 10,000원,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가 11,000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은 서울 강남, 인천 연수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해 왔습니다. 전국 차량번호판 평균가격은 8,760원입니다. 전주시 차량번호판 가격에 대비해서 차액은 4,240원이 납니다. 이것을 92,850대를 곱하면 무려 3억93,684천원이나 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혹독하게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

해서 환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차액을 기 부착자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해 전주시가 지난 6월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주시 행정조사시 제출한 원가 서류가 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위 변조된 원가서를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표지를 위 변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업체가 원가서를 높게 책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었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형태를 행정감사를 통해 낱알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에서 얻어낸 서류를 살펴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관리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서류를 업체로부터 왜 받았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게 원가를 부풀렸다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빼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커백선의 또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재경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법에서 원가계산 용역 의뢰 주의사항 4항에는 지사, 지부, 출장소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번호판협회 측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광양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광양 사무소에 의뢰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작성 서식도 맞지 않게 표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이 있는데 표지는 직인없이 위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서 접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공직자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차후 민원이 발생되자 담당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원가계산 담당 김모 부장과 상의하여 표지 직인을 받은 뒤 뒤늦게 거꾸로 맞춰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는 대로 직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측은 뒤늦게 직인이 찍힌 표지가 뒷장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짓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문서까지 변조에 협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변조된 높은 원가서가 민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행정조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대책 수립들을 요구했지만 기일을 넘긴 답변 일변도는 예상시행 날짜 등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상 서류 제출로 일관했습니다.

대책수립은 시행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대책 수립에 의지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접근한 것은 전주시 행정조사와 63만 전주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인

것입니다.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한 교부대행업소만큼은 본청이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원가계산을 다시 의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전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울만 있는 업체들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간의 커백선 의혹으로 업체의 폭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주시고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숨어진 시장

▶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께서 자동차 신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차량번호판 교부 대행업소를 정리할 용의는 있는지, 그동안 차량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의 폭리에 대한 차액 부분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또 자동차 번호판 원가 작성서 위 변조된 경위와 행정감사를 요구하시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 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에 1개소, 1996년에 1개소, 2001년에 4개소, 2002년에 1개소 등 7개소를 전라북도에서 지정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에 따라서 2003년 1월 3일부터 우리시에 위임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7개 업체중 6개 업체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과점 운영이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5년 12월 15일에 무혐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는 종전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99년 2월 19일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북번호판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등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동차번호판 원가 작성서가 위 변조된 확실한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 증빙서 등을 제출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특별감사를 즉각 조치토록 하겠으며 상호간에 잘못이 있다면 양측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이번 인사에서도 단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혁신적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결과후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Q 김현덕의원 (삼천2·3동)

▶ 삼천2동 주택가 골목길 플라타너스 관상수로 교체 대하여

본 의원은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동은 전주시에 3개동으로 삼천2동, 서산동, 우아동입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산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 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로 215본입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관상수가 아닌 속성수인 수종이므로 넓은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여름철 더위를 조금이나마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타너스는 골목길이 아닌 공원 또는 월드컵경기장 옆 월드컵로 가로수로서 열섬효과 차단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 대부분은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으며, 플라타너스 나무의 키는 주택가 2~3층의 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택가의 건물을 때리기도 하며 전선이 합선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뭇잎에 가려 야간에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의 유리창이 나뭇가지에 의하여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심어놓은 가로수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여야 되겠습니까. 또 곧 가을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완산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로수 소독을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앞에는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어 바람이 약하게만 불어도 벌레들은 주택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오곤 하여 주민들은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환경미화원께서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낙엽청소를 하여도 골목길의 밤거리는 낙엽으로 가득차 버립니다.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 되어있는 자동차 밑에 바짝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까 본 의원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나무가 주택의 옥상보다 높게 자라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 옥상의 우수관을 막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살고 싶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삼천2동 골목길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관상수로 교체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은 2km 정도로 교통량이 많을뿐 아니라 230여 그루의 대형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 한쪽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리입니다.

▶ 삼천2동 동사무소 주변 도로 개구리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삼천2동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동청1길과 코끼리 주유소 건너편에서 양지내과로 연결되는 솔밭1길을 운전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하여 플라타너스 230여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골목길 가장 자리에 속칭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주정차 양산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삼천2동 주택가 골목길 플라타너스 관상수로 교체 대하여

김현덕 의원님께서 삼천2동의 주택가 골목길 플



라타너스의 관상수로의 교체, 그리고 삼천2동사무소 주변 도로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은행나무 등 17종 3만 9천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에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의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1,029그루가 택지조성과 도로개설시 식재되어서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무의 특성상 잎이 무성하고 크며 가지 자람이 왕성하여, 주변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이식을 검토해 본바,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3개 지역의 소요 비용이 19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식을 검토를 하고 우선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대해서 내년 2~3월경에 강전지를 실시해서 수고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 년 자란 가지를 춘기에 제거해 수형을 조절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장애나 전기 시설물 보호 등 장애 발생시 전지를 실시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지 발생시에는 타 수종으로 보식하는 방법쪽으로 수종 갱신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지 출장해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응급사항은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삼천2동 동사무소 주변 도로 개구리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삼천2동 동사무소 주변 개구리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구리주차장은 현재 금암동에 2개 노선이 있으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법적인 설치 근거가 아직은 확실히 없고 교통사고 발생시에 보도 침범에 따른 사고로 처리되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전진과 후진시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문제 등 또한 인근 주민의 독점주차로 주차 회전율이 적은 단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 솔밭1길 780m, 동청1길 220m 등 양면 2km의 개구리주차장 설치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Q 백현규의원 (완산·중화산1·2동)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던 시끄러웠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맛의 고장으로 먹거리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 1년동안 71,245톤, 1인당 하루 배출량이 0.31kg을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1인당 발생량이 0.22kg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대구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일로 환산하면 약 19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처리비용은 연간 34억원으로 1톤당 47,722원, 수집 운반 비가 29억원으로 1톤당 40,704원이 투입되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88,426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2톤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지는 장소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자기집 앞에서 먼 곳으로 배치하여 가급적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현대에코르 아파트 992세대는 3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발생량 전량을 환경정화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투입 즉 바이오액과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용으로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거, 처리비를 보면 1톤당 88,426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해 소멸기를 설치한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1톤당 40,000원으로 50%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고 몇 가지 제안을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시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맛의 고장 전주이기에 다른 도시 보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감량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 할 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이 1일 300톤이며, 팔복동 처리장 1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1일 발생량 550톤이며, 14군데 처리장에서 100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의 장애나 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이 원활한데, 전주시도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처리장 확보를 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음식물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음식물찌꺼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며,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곳에 전주시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소각용과 매립용이 혼합되어 들어오는데 소각용과 매립용을 분리하면 매립장의 용량 및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팔복동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살펴보면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약 27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중 약 40%가 소각 내지 매립되어야 하는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팔복동 재활용 수거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는데 고생뿐 아니라 시간, 비용 낭비여러가지가 소요됩니다.

더불어 재활용 쓰레기도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지류 등 수거 날짜별로 혹은 수거 용기별로 정해서 수거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 각자 의식이 정착되고 습관화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나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실천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 완산동 용머리고개 골동품 상가 등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하여

완산동에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품가치의 품목이 많이 있으나 홍보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완산동을 변화시켜 경제성이 있는 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수 백년전부터 내려오는 대

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쇠를 부어 삼과 팽이, 호미 등을 생산하는 이곳을 체험의 장소로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완산동은 물론 전주시의 이익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용머리고개에는 역사가 숨쉬는 전통 골동품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한옥마을에서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이어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경제가 살아 숨쉬는 완산동이 다시 되리라 생각하면서 꼭 용머리 고개 일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있는 전주의 옛 명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며 미래 지향적이고 살맛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완산동 주거환경개선 우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현재 완산동은 1000년 전통의 전주를 지켜오는 자랑스러운 완산칠봉과 용머리고개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었던 요람의 완산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신도시의 발전으로 인하여 외곽에 급속도로 빠르게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완산동은 소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완산칠봉이 있어 고도제한으로 단 한 동의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산동 전체가 4층 이하의 고도제한속에 묶여 있습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완산칠봉의 숲에서 나오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동안 완산동 주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없어 큰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완산동은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도로가 좁아 전혀 집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도로정비는 물론 하수구 시설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곳으로 되어있는 완산동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지구로 배정하여 낙후된 완산동을 떠나고 싶은 완산동을 다시 찾아오는 완산동, 다시 보고 싶은 완산동, 살맛나는 완산동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할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 7월말까지



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톤이었고, 2006년 7월 말 현재 발생량은 4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 비 523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약 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동수거용기 배출과 수수료 정률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매월 10만부씩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를 통한 홍보와 도내 일간지 광고, 교통안내 전 광관, 홍보전단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주민자치 위원장 집합교육이나 위생업무 교육 등에 청소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수거용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별 수거용기의 보급, 정률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례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으로부터 배출 체계, 수수료,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신설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별도의 상벌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마는 추후 배출량 비례제가 도입되면 경제적인 상벌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배출체계 및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팔복동 자원화시설장 한 곳에서만 처리하는 것과 관련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복동 소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리모델링을 금년 6월말 완공해서 1일 300톤 처리체계는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중에 있으며 자원화시설장 추가 확보에 대한 사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중간 보고가 10월 중 개최될 예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확실한 대안을 강

구하는데 고견을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다량배출원이나 공동주택에서의 자체 처리하는 방안은 시 예산부담 등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실제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만 용역과정 중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가동되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수해로 인한 쓰레기, 소각 후에 발생하는 소각재, 소각로 정비기간인 년 32일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에 한해서는 최소한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소각 할 수 없는 쓰레기는 철캔,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 해야 할 관유리, 도자기류 등이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이 되어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영향권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각 할 수 없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매립장과 소각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해 나겠습니다.

둘째로 재활용쓰레기를 요일별 품목별로 수거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살펴보면 약 40% 정도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와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체계에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혼합쓰레기 수거운반 제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재 용역과제의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형태별, 지역별 통합수거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용역과정에서 요일별 수거제 혹은 품목별 수거제 등 우리시 여건에 가장 부합되는 운영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도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6년 현재 전주시 쓰레기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반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시내 상습 불법 투기지역 410개소를 선정 본청, 사업소, 구청 부서별로 담당구역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출장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자원은 유한하고 재활용은 무한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하는 것을 자원순환과 쓰레기 Zero화를 위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82톤 정도로 생활쓰레기가 170톤, 음식물 쓰레기가 187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이 225톤 정도입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8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쓰레기 봉투판매비용 52억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등 30억을 합한 82억원으로서 전체 소요예산의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서 하면 앞으로 예산이 80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완산동 용머리고개 골동품 상가 등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하여

완산동 용머리 고개에는 조상의 얼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동품 상가 12개소와 대장간 2개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머리 고개 대장간을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이나 전주 방문객들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으며, 우선은 관광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머리고개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간과 골동품 상가들이 집적화 되어있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칭 골동품 거리나 대장간 거리 등의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과 완산칠봉, 용머리고개와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특화거리가 지정된 이후 해당거리가 활성화되면,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완산동 주거환경개선 우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낙후된 완산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산동 원각사 및 용머리길 주변 가락지구 6만9천여평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평소에 같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각사, 가락지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하여

저는 전주의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에코타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요정이더군요. 그런데 에코는 숲에 사는 아름다운 요정이지만 실연으로 인해서 고통속에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35사단 부지 개발이 결코 메아리만 남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사단 이전 개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공세에 의한 질문을 지양하려 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문제로 접근이 되지않도록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민 대다수가 35사단 이전을 바라고 있고 전주시 도시발전으로 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필연의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난 14년간 사단 이전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은 35사단 이전 문제가 결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문제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7대나 8대나 똑같다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민선 3기나 4기나 똑같다면 아니 3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발전은 없고 구태만 재연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단 이전 문제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직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야말로 새로이 시작하는 송하진 시장이 이끄는 민선4기 집행부가 63만 전주시민의 민심과 함께 하여야만 민선4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앞으로 4년의 시정을 정말 진정한 민선과 함께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털 것은 과감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그림자가 너무 길면 절대 발전이란 없고 진보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북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지난 5,31선거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35사단 이전이 3기 전주시장의 임기말에 협약이 이뤄졌는가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시장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 3기 집행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협약된 송하진 시장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가장 뜨거운 도시로서 1,2위를 다투는 정말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전주의 열섬화 현상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에코타운의 개발 이익 산정을 보면 주택건설 및 상업용지 등의 개발수익을 6천8백2억원으로 잡고 이전비용을 약 6천8백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협약사인 에코타운이 35사단부지 60만평을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35사단을 이전하여 주고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못 맞춘다면 전주시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현재 63만명에 담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현재의 인구 증감 추세대로 하면 과연 전주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2006년 9월 현재 1,300여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매년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고 예측할 때 과연 사단부지 22만평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수익을 맞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업체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에 사단부지가 개발 완료되어도 협약사의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전주시는 협약사가 그대로 손해본다고 협약상 되어있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남기려 할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그대로 사업수익 최대 창출 방향으로 개발되어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전주시 계획에는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개발 방향 확정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수렴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에코타운의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근본적인 사단 용지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임실군 대곡리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사단이전 부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차지하고라도 사단 이전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부분의 서운함이 더욱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실 군민들의 민관이 혼쾌한 합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전 반대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임실군, 국방부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네 주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전주시의 합의 의각서에 보면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1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면 합의각서의 내용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실군의 민·관 합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사단이전에 대하여 주민반발 민원에 의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송천동에 사는 사람이면 늘 느끼는게 있습니다. 35사단이 거대한 바위처럼 눌러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철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길은 소음으로 인해서 불

면의 밤을 만듭니다. 지금의 철도가 고속철로 바뀌면 아무리 반지하로 들어간다고 해도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거대한 방음벽이 도시의 흉물로 들어서서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예전하건대 이 고속철도가 전주의 발전을 두고두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금의 전주역은 1981년에 현 전주시청 자리에서 우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지금땀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주역은 다시 완주군 용지면 쪽으로 물리고 전라선은 만경강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는 만경강 옆으로 이설됨이 정말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선이 고속철로 개설되면 철길 이설은 요원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에서는 기존 철로 이설을 건교부에 건의 한다고 합니다. 엇그저께도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 이 다녀오신걸로 보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년에 안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는게 아니고 해달라, 주민과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로 이설이 반드시 이뤄지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중앙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35사단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에 대해서 민선 3기말에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비롯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과 같이 35사단은 순수한 주민의 입장과 전주시의 발전 비전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양용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1991년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시민 33만여명의 부대이전 촉구 서명운동이 있었고 그간 수십여 차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이 시급치 않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전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전주시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사업, 즉

전주시 재정부담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대이전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2002년 8월 16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협의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5년 7월까지 7차례 실무추진 위원회와 수십여 차례 실무접촉을 통하여 부대이전 위치, 이전 시설 규모 등을 합의하여 2005년 7월 28일 합의각서(안)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각서 작성 과정에서 35사단 측에서는 그간의 정치 상황에 따라 부대이전 사업이 표류했던 것을 예방하고 부대이전 논란 등으로 인한 35사단 측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주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과 사업의 세부 일정 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출된 사업일정에 비추어서 1년이상 지연시에는 합의각서 파기와 위약벌 조항 삽입을 요구하였던바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제출한 사업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2005년 9월 27일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 9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합의각서(안)와 부대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6년 1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 3월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일련의 추진 과정으로 전개되어왔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북부권 개발을 통한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35사단 이전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과다하게 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수익을 못 맞출 경우 우리시의 부담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우리시 간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의 부지개발에 대한 제안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법에 맞게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가장 적절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난개발은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정산은 개발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도 우리시에는 단 한푼의 사업비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도시특별법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을 제외하고는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번째로 2년간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부지개발 방향을 확정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의견수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지개발 방향에 대하여 35사단 부지는 2002년에 수립된 전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지로 주거 및 상업 스포츠 기능을 가진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정부사업으로 연구단지 조성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원,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개발방향 확정을 일단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대이전 기간이 5년 정도가 소요되고 부지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가 또 최소한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대이전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부지개발 방향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부지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수렴 범위에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부대이전 방식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코타운 사업계획서나 근본적인 사단용지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국가예산 확보나 시비 부담 등의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사단 이전이 임실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지연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실군에서는 1999년 1월부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해 7월에는 국방부에, 12월에는 전주시에 35사단 임실 이전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 35사단 임실 이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5 사단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이전 협의가 완주군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3월 29일 부대 전체를 임실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임실군과의 협의와 2005년 5월 12일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각각 공문협의를 근거로 임실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5년 초까지 국방부의 임실 현지 실사에도 임실군 지역에 35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 게시 등 35사단 임실 이전을 환영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여 부대이전 위치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인 임실을 대곡리 일부 주민과 단체를 중심으로 2005년 봄부터 반대 목소리가 있으나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임실군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임실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 그리고 주민 지원방안 등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5사단 및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체육, 종교,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서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라선 철로 이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호남선 철도에 운행중인 KTX를 익산-전주-여수간 전라선에도 운행하는 것으로 전라선의 종착지인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년도 여수 세계박람회와 그 시기를 같이 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지난 2002년 당시 철도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부권 개발과 철도로 인한 도시분단을 막기 위해서 전라선 노선을 35사단 부지 북측으로 선형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선형 변경할 경우 이설 사업비 1,300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한 도심 통과 구간인 송천동 메가월드와 호성 진흥더블파크 3.6Km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화는 1km 당 900억원이 더 소요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 전주시에서는 해당구간에 대해서 반지하화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자 모집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는 9월 28일 민간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부시장과 실무진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여러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각종 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9월 28일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신청 접수가 되고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11년 KTX 운행이라는 절대공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전라선 철도 이설의 재검토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라선 KTX 개통에 따른 공기와 재원상 어려움이 현실이므로 우리시 북부권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권정숙의원 (비례대표)

▶ 차이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3억5천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더 썰렁하게 변해버린 차이나 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전주시 다가동 일대 250m 구간을 차이나거리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거리 기반시설로는 한전 지

중화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도로엔 화강암 관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또한 거리 입구에는 중국식 현문을 세웠고 가로등은 용머리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아, 우리 이제 전주에서도 텔레비전이나 보았던 차이나 거리를 구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차이나 거리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뒤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흥겨운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중국 화교들과 800여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 또한 중국 출신 머느리와 전주시민이 함께 하는 중국음식 축제나 중국 문화 행사 등 차이나 거리의 날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차이나 거리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고 있던 중국인마저 떠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흥상회라는 중화요리 재료상과 전주 화교 소학교만이 운영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흥빈관이라는 중화 요리집은 1년전 폐업을 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차이나 거리 지정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며 차이나 거리 조성 이후 2004년 이후에는 지원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차이나 거리를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전주시 행정이 탁상 행정 또는 전시 행정이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한류를 활용한 전통문화, 한지, 비빔밥 등 대 중국 교역의 전략 품목이 다양합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 전주시민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거리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후 예산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차이나 거리를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상태인 현재의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과 계획을 세워 차이나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시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세정혁신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5년도 4회, 2006년도 9월 현재 3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러나 지방세 등 세입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2005년도 완산구 11,624건에 21억 6천만원, 덕진구 13,842건에 11억 8천 만원이며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완산구 7,206건에 10억7천만원, 덕진구 7,647건 9억 5백만원이며 이중 부과 착오가 2005년도 완산구 202건에 1천9백만원이고 덕진구는 80건에 4백만원이며, 2006년도 8월31일 현재 완산구는 118건 에 5백만원이 과오납되었으며 덕진구에는 60건에 1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총 14,853건에 19억7천5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과착오는 178건에 1천9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전주시민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4기의 송하진 시장님을 진실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시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전주시에 대한 신뢰는 기대이상의 실망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작은 업무 착오로 빚어지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차후에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 표명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차이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차이나타운 조성과 패루 설치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거리를 조성한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와 중국 소주시는 1996년 3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방문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후 양도시 상호간 우호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기간중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내외국인을 위하여 특색 있는 손님맞이를 위해 2002년 1월초 옛 중국인들의 집성촌이었던 구 다과출소 부근을 차이나 타운 조성지로 선정하고 패루 설치 계획을 마련 중국 소주시로부터 자재와 기술을 지원받아 시비 110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에 있는 도청, 경찰청 등의 이전으로 상권 회복을 위해 2003년 11월부



터 2004년 10월까지 13억5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차이나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회복 기미가 안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차이나거리의 날을 지정하여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2004년말 통계로 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학생이거나 산업기술 연수생 등이며, 화상으로 자리잡은 중국인의 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표와 중국과의 문화교류 단체 등과 협의를 하면서 그간 조성하여 운영중인 인천시의 차이나타운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차이나거리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차이나거리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차이나거리를 조성한 후 활성화 대책이 좀 더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가 조성한 차이나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구도심 활성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풍납제와 소리축제 시에도 중국음식 축제를 같이 개최하는 방안 등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과세 관청의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와 납세자 착오나 국세 과표경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자가 9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과오납은 총 25,465건에 33억 5천 5백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는 전체 환급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말 현재도 과세관청 착오부과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액에서는 주민세가 가장 많고, 건수에서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일괄계산 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부과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환부가 매월 300에서 400건씩 발생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국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으로, 국세의 과표 경정이나 이의신청으로 국세가 취소되

면 주민세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써 상당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업무 착오와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과오납 발생과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업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세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세무공무원 14명이 세무경력 10년 이상된 선배들과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1대1 멘토링 방식의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규 직원들이 노하우를 직접 전수를 받아서 업무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서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즉시 환부될 수 있도록 1일 원스톱 과오납환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김종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듯, 서서히 그 기세가 꺾여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듯 합니다.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각종 재해와는 관계없이 살기 좋은 곳이라 온전 전자를 써서 전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전주시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시 자체의 난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가 도시를 장악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대구를 제치고 한여름 평균기온이 34도가 넘는 전국 제일의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다름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자손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젊은 날 피땀흘려 일하셨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신 어르신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 노인분들이 컴퓨터 애용하고 계시는 전주시 몇 곳을 둘러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고 계시구나! 노인 문화의 현실을 보고나니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옆에 사진 모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활

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하절기 전주시 노인분들이 대표적으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남부시장 싸전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삼 사백 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 2개뿐이라 이용자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인분이 차고 넘쳐 제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소변기도 제대로 물이 흐르지 않아 다리에서 약 50미터 부근에서도 지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청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화장실 문제를 이들 전부터 해당 구청에 해결 해달라는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와 보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와 같이 사진은 또한 진북동 썩다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여명의 노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곳에는 그나마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밑에 천막을 치고 대소변을 해결하여 전주천에 흘러보냄으로서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천년고도 전주시에서 60년대나 70년대나 있을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현실이 믿겨지십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자부심으로 천년고도 한옥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주시가 펼쳐고 있는 노인정책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듭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이 두 곳 이외에도 덕진공원 및 다가공원 등에서 바둑이나 장기, 화투 등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뵈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두 곳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시장 싸전 다리와 진북동 썩다리에서는 주로 내기 바둑이나 장기, 화투 및 판돈이 수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이르는 율놀이판이 생행하는 등 건전한 노인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놀음과 음주만이 난무하였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힘세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혼드는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우리 전주시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자칫 식중독이나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우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위생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주시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주

시장님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우리 전주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65,000여명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로당 수는 덕진구에 251개소에 회원수는 9,795명이며 완산구 261개소로 회원수는 9,754명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3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1일 약 1,800여명으로 하루에 약 21,350여명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32%에 불과하며, 약 70%의 다수 노인 인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경로당 1곳에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4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기초적인 전기료나 난방료에도 미치지 못하므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쉼터가 되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곳의 평균 지원금은 연간 3억5천4백만원 정도이나 관리직 및 강사들의 급여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6년도 현재 78.2세로 OECD 가입국중 21위로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평균수명 82.8세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령 52세를 감안할 때, 퇴직후 26년을 어떻게 보낼것인지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은 볼보듯 뻔할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평균 퇴직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다들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서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 또한 노후에 자손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 것이고 이사회로부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소위 말하는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06년도 확보한 예산은 연간 약 29억여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4,500여명으로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의 65,000여명의 약 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9억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4,5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53,700원밖에 되지않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한 달 용돈은 커녕 교통비에 불과한 예산



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하절기 5월부터 9월 달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라는 이 9개월 이외에 나머지 동절기나 이럴때는 경로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라는 512개라는 우리 전주시 노인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512개소에서 이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쉽니다.

그러나 5월부터 9월달간에 약 5개월 정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대가 없습니다. 이런 노인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인분들이 다리밑이나 나무밑에 담벼락밑에 그늘만 있으면 돛자리나 신문지를 깔고 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하절기 노인컴퓨터 확보를 위해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을 신축하여 노인 컴퓨터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모니터에도 우리 아중리의 분수대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첫 사업으로 아중리 분수대에 약 9천여만원을 들여서 기린정이라는 지금 모니터 나오니까, 그 모니터에 지금 기린정 모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기린정을 지은 이유가 남원시를 가보면 아파트 단지내마다 시에서 저런 모형을 하나씩 다 지어주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쉬고 계십니다.

또 동네마다 시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인정을 많이 지어주었지만 이런 하절기에 쓸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정자같은 것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주로 고학력자 위주의 프로그램 즉 댄스라든가 붓글씨, 컴퓨터 등으로 운영 되다 보니 일부 계층의 노인들만이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바, 전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 등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하면 상위 계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싸전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 전주시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시설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전주시가 갖고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 실종된 예의와 사회 통상적인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스티커도 떼고 다니고 뭘 산불 방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즉 싸전다리라든가 쌍다리 밑에라든가 이런데 가 보면 그야말로 치안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런데에 이러한 공익요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구간에는 이동 도서관이나 인형극, 또 노래자랑 요즘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 가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등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야간 야외 영화관을 설치하여 영화 상영을 하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한다면 건전한 노인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는 데 본 의원의 질문처럼 전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우주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윗 어른을 공경하고 선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A 송하진 시장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김종철 의원님께서 현재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총 예산액 중 사회복지 편성 예산액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액은 896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액은 29억3천3백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현재 총 23개 사업장에서 4천5백명이 환경 지킴이, 불법광고물제거, 공원관리, 실버 세차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자리 희망 어르신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전제를 답변을 드리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의 좋은 사례들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의 아이টে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가지 노

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발굴 되면 논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부족한 노인쉼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도시공원은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52개 공원에 75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다리 등 여러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고 여러가지 좋은 안건들을 주셨습니다.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 도심지역의 쉼터 신규 설치에 야간에 주택가의 소음 피해 등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원 조성의 여건이나 지역주민 의견 등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서 여건에 맞는 위치 등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행 고학력자 위주의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여러 자치센터라든지 방문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복지회관에서 고학력 위주의 댄스, 붓 글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계층의 노인들만이 노후에도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시 건강에 관련된 댄스 스포츠나 요가, 노래교실 등이 70%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나 붓글씨, 노년기 배움에 대한 프로그램 순으로 조사되어서 운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추후에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계획은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2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의 2개소를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 도심권에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주축으로 이미 설치된 경로당 등 작은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 프로그램에 다소 적응 못하시는 어르신과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3개 복지관련 시설에서 65개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강교실, 놀이교실 등을 시범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선정하는데,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 등 대상자 선정이 엄격하고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선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순위 결

정으로 엄정히 선발하고 있고 순위 탈락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서 기존 참여자 중도 탈락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금융 전산망을 통한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과 탈루소득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조사와 실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적정 선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보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쉼터다리의 경관은 천년고도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와 시설보완 및 무허가 노점 음식점들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남부시장 쉼터다리 진북동 썸다리는 매년 하절기에 많은 어르신들의 놀이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공간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한 다리밑 공간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화 된 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확충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유도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다리밑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도 하천관리법의 제한으로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간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나 노점 음식점 판매, 그리고 주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면서 주변의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경관조성은 다리의 연혁과 주변환경 여건에 맞게 보완 정비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쉼터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교량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정시설 등을 보완 정비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쉼터다리와 진북동 썸다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도박과 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 이동도서관, 인형극,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완산경찰서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순찰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주변 환경정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불건전한 노인문화 청산을 위해서 앞으로 노인건강교실이나 국악한마당, 또는 영화 상영 등 어르신들의 여흥 수렴 등을 통해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남관우의원 (진북·인후2동)

▶ 죽어가는 건산천 미복개 구간 8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말없이 감수하며 참아왔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건산천을 8년여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건산천 미복개구간 875m는 전주 교통의 중심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등 외부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그간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건산천 주변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수년간 동안 심한 악취와 토사 방치, 잡초, 모기, 쥐의 서식처로 변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보건 행정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천국에서 누가 살수 있는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건산천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동·식물 서식처 및 환경 기능은 거의 상실했으며, 홍수시 홍수 배제수로서의 기능과, 평시에는 생활 오폐수 하수관리 기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건산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못한 전주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 시민 관광객이 전주에 첫길을 내딛는 순간 보는 것이 악취를 풍기는 불결한 모습의 건산천이었다면 그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원정 주부님께서 첫 답변이 악취 때문에 불결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친에 사시는 박인석 사업가께서는 항상 전주하면 아름다운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생각했는데 천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김상수 대학생은 광주보다 더 무나도 천이 관리가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에서는 소하천 관리는 관리인을 항상 2~3명씩 배치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고 했고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일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주민의 인터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전주 관문인 건산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부분 시민과 외부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산천은 청계천과 같이 하천 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시장께서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건산천 복개구간의 무료주차장 4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건산천 복개구간 338m의 무료 주차장을 4년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산천 복개 구간은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무려 4년동안 관리 요원 하나도 없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현 재 불법쓰레기 천국, 무질서 주차, 장기주차,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은 밤에 집에 귀가할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죽어가는 건산천 미복개 구간 8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건산천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 총연장 5.25km 중 4.37km가 복개된 상태로, 건산천 주변의 시가 화로 강우시에는 홍수 배제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 하천 유로는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합류식 하수관 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과 같이 하천복원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도심지내 공원 등 휴게 및 위락 공간이 부족한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확보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 차집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하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2010년까지 건산천 상류인 안골광장에서 서 큰 모래내 시장까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금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가 따로 설치가 되면 이를 활용해서 건산천 사업에 보다 활기를 떨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산천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생활하수관거의 분리과 평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지용수 확보 등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초기 우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일환으로 건산천 말단부에 초기우수 저감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는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 복개된 구간은 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왕 래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의 미관과 이미지를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호안 및 축제 정비와 물억새 등 초류를 식재하고, 정기적인 하천 수로 준설과 방역으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덕진구에서 건산천의 하상 준설 공사를 9월 11일 발주한 상태로 하천 바닥 준설 및 주변 잡초 제거와 방역 사업 등을 실시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건산천 복개구간의 무료주차장 4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은 건산천 복개구간의 무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건산천 복개구간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달로 북문교에서 우성아파트 뒤 숲정이신협 옆까지 총 길이 320m, 면적 7,647㎡로 주차 가능대수는 약 314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개구간 총 연장 320m, 면적 7,647㎡중에서 우성아파트 뒤쪽 복개구간 990m는 지난 2003년 1월 한진고속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동양고속에 사용 허가하였고 나머지 6,657㎡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유료로 위탁관리하였으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 기피로 인해서 주차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건산천 번영회와 주차장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건산천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기로 한 주차장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에 따른 잦은 마찰과 건산천 번영회측의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건산천 번영회측과의 협약 내용에 따르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인력 2명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건산천 번영회에서 맡기로 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장기주차 등 관리부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산천 번영회측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시·구 합동으로 수시 청소를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5대를 이동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산천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는 협약 내용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산천 번영회측의 확고한 관리의지를 확 인하고 유료화를 비롯한 제3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주차장 관리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Q 서윤근의원(인후1·3·우아2동)

▶ 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실효성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은 지난 7월 발간한 공약집을 통하여 시민 과의 약속 123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행정 분야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바로세우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로 채택하였고, 작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미 울산 동구를 비롯한 몇몇의 기초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들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각종 교육수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과별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시민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실사작업을 거쳐 직접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그 시행속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내는 성과 외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이자 단 한 톨이라도 헛되게 쓰여지



는 낭비성 예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스스로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추어 나 갈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4년 예산안 편성때 부터 인터넷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07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조금 더 확대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이러한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의 확대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본질적 차원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경로를 통한 2007년 예산안 편성 이후, 본질적 의미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의 기존 민원업무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주민자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 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며 동사무소 내의 노래, 서예교실 등 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적 상황에 근거한 이유있는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당국,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선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

는 실천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된 전주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케 하고 그 위촉 대상으로 첫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두번째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후보자의 비율이나 동장의 위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적 방안 창출이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단 한 명도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의 으뜸은 참여이며 이러한 참여의 정신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민참여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곧바로 목적하는 바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성숙도 수준에서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확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동네에서 실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권과 예산 등 자치조직의 자기 위상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심의를 거치는 수임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심의, 의결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월 위원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비보상이라는 형식적 예산책정이 아닌 최소한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는 전향적 자세의 예산증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립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50% 이상을 공개선출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



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모색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하여 현실성의 범주 안에서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자생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양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 글은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행정론이라는 글에서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들입니다. 위의 주장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제일의 활동 과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지향성이 올바르게 발현되고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필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먼저 참여형 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홈페이지 시

민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등의 수립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 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도입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국·소와 구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집약된 5내지 6개의 주요 쟁점 분야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매년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05명이 참여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719명이 참여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도시육성, 구도심 활성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첨단산업 기반조성 등 경성비를 제외한 SOC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에 따라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통치가 아닌 거버넌스 즉 협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저 또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반영하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밝혔듯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것이며 단순히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지양해가면서 보통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예정중에 있는 4개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프로그램 229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63개 등 총 29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 바와 같이 본래의 존립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지역문제 토론이나 푸른마을 가꾸기, 청소년 공부방,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 기능에는 다소 미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작은 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의 보완 개발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해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는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거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까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는 공개모집 방법도 도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북동, 인후2동, 우아1동 등 3개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임기 및 사직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7명이 공개모집에 응모하였고 자체심사를 거쳐 4명을 주민

자치위원으로 위촉 한 바 있으나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위원 위촉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개모집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50% 의무적 공개모집 방안은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다각도로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 심의 및 의결 권한 부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주요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치위원의 의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더욱 노력 하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도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조례 개정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자생적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40만원씩, 연간 4백8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상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강화 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강화되고 활동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고 스스로의 자치기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가선용 등의 웰빙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네가꾸기나 지역가꾸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찬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들을 잘 꾸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 자적 관계 설정,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한

국행정론」에서 주장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은 직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발전적 상승 시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협력 관계 유지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당연히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동반자적 관계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등록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중에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국가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4조에도 행정자치부의 장관은 공무원의 복무나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제의 사무 지원 등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전주 1,2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전주 1,2공단지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1,2공단지는 현재 70여 만평으로서 67년 제1공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던 공단입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팔복동 공단이 지금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복동 인구는 80년대초 2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총 148개 업체로서 고용인원 4,069명, 이중 고용인원 100명 이상 업체는 9개사 뿐으로 공단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장이라고 개념 설정하기 힘든 작업장 수준

의 업체들이 70%가 넘습니다. 또한 섬유 등 사양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업체들은 만성적 경기 침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후된 건물과 설비,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황폐화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계서도 전주 1,2공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약에도 전주 1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우선 시비로 22억을 투자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장마시 도로 침수문제 외에도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취약한 도로사정, 악취 및 고물상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나도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 한다는 것인지 그 정비의 범위와 효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 1,2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로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로와 공단과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와 서곡광장 등의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나아가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팔복동공단·혁신도시 부근의 교통벨트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이 벨트의 연장선상에서 새만금까지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교량도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 1,2공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하기 위한 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부지로 편입시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브랜드사업인 한지, 비빔밥을 접목시켜서 전주의 명소로 만들어 보는 방법은 어떠한지, 최근 전국적 호응이 높아 가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의 막걸리를 독일의 맥주처럼 하나의 먹거리로 특화시켜서 전국적 명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천년도시인 전주의 역사와 문화 축이었던 전주한지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무관심 앞에 준비없이 내몰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는 수목한지와 기계한지를 합쳐 총 29개 업체로서 이중 18개 업체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의 62%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주시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킬 토대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한지사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수록한지 8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고 최근 2개 업체마저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3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지조합도 와해 위기에 처해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브랜드 전략사업으로서의 한지사업은 용두사미로 머무를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브랜드 전략사업의 한 품목인 한지에 대해 전주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적극적인 제품 개발지원 및 마케팅 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주요한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 번 강조하건데 한지산업을 공단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지라는 아이템의 특성을 살려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문화산업 자원으로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전주 1,2공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동화단지의 실제와 협동화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 시스템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과 인접해있는 팔복동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열악한 환경과 공해속에 40여년간 방치되어왔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업단지는 전주 경제발전엔 헌신했지만 팔복동 주민들은 문화 혜택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 1만3천의 작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15개동 중에서 2005년 기준 호성동, 송천1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1인당 부과율도 80여 만원으로 상위 3개동에 해당되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은 타 동에 밀려 도로는 엉망이며 주거환경은 농촌동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팔복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전주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가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치룬지 4년째에 접어들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의 관문에 1,360여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세계 제일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의 모습은 관리와 운영면에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년 23억7천만원의 혈세를 운영비로 쏟아

붓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은 시민 관광객 포함 하루 평균 1,000명 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밀빠진 독에 물붓는 애물단지와의도 같이 있습니다. 경기장 2층으로 올라 가는 계단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타일은 떨어져나가 지금도 복구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조경은 엉망이고 말라죽은 나무가 언제 치료 해줄까 기다리고 있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아예 남문쪽 골프장과 함께 클럽하우스 용도로 대여한 시설 1,600여평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1,360억이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이 한 달에 고작 한 두 번 프로축구 경기하는 것 외에는 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효율적 이용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로 체납도 문제입니다. 임대업체의 대부로 체납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들의 눈이 감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에 시에서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을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골프장에 함께 임대한 남문쪽 실내공간 1,600여평을 골프장 측과 별도로 합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은 현재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1,600여평에 전주시 소재 스포츠 동호회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도서관, 노인복지관, 탈의 실, 헬스장 등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 곳곳에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시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진입로의 가로수와 경기장내의 조경수가 대부분 고사되어 가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라죽는 조경수는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만 탓하지말고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토질에 맞는 품종을 발굴해내는 방법과 성도를 해서 심는 방법, 그리고 나무가 말라죽는 원인인 수맥파를 제거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월드컵이 끝난지 4년째인 지금 조경과 건물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없고 그늘진 곳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조경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조화를 위한 전체적인 미관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자랑거리가 되는 상징물이자 스포츠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 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 1,2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열악한 전주1,2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1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된지가 40년이 다되어서 시설물 노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2만평에 이르는 제1,2 산업단지 전체를 재개발해서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는, 이른바 구조 개편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손을 놓고 있던 건교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서도 현재는 전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현재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중앙 관계부처의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국비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 1,2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환경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로와 공단, 동부우회도로 및 추천대교 그리고 서곡광장 등간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조기에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반촌에서 자동차매매상까지의 중로2-25호선상의 전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연장 200m, 폭 15m,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는 교량으로서, 1980년 철도이설과 1998년 추천대교 가설시 철거된 후, 재가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복 및 송천,덕진지역의 개발 등과 연계한 교통량을 고려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까지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포함해서 연장 2.6km, 폭 20m, 사업비 24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IC를 중심으로 35사단 그리고 팔복공단, 혁신도시간 교통벨트는 현재 계획된 동부우회도로 확장과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연장 8km, 폭 35m, 총사업비 650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전주천교과 차량등록사업소간 4km 확장에 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주천교량에서 팔복초교 그리고 월드컵로의 팔각정 길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미개설된 2km 개설에 250억원이 소요된다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만성동을 가로질러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는 제2남부순환도로로서,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혁신도시 준공과 동시개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교통벨트에서 새만금까지 고속화도로계획은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연계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전라북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35사단과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팔복동과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조기착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팔복동과 덕진, 송천동 지역의 도시확장 그리고 인구증가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송천동에서 추천대교, 서곡광장 도로개설시 이 지역의 교량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산업단지를 도시형 산업도시화로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약 50만평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 또는 공단용지로 편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시는 여건상 현재 공장 부지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3만3천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2년까지 약 60만평의 공장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잔여지 16만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2단계로 44만평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맞은편 지역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로 2012년까지 우리시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토지 이용 상황은 벼농사 등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입지를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거쳐서 제반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한브랜드 사업을 집목시켜서 한지, 비빔밥 업체를 집적화하고 막걸리를 먹거리로 육성해서 명소화하지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한지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명소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공간에 집적화시키는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 집적에 의한 명소화보다는 관광코스 개발에 의한 명소화가 좀 더 타당성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관광안내 지도와 각종 안내서에 사업체를 표기하고 제작 체험공간 확보 등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빔밥 업체의 집적화,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공간적으로 집적화하기 보다는 전주비빔밥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 체인점을 구축해서 해외 현지화 기술을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전문점의 먹거리 명소화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홍보 전략 분야와 환경위생분야 그리고 산업화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과 시의 개발지원 및 마케팅 전략과 업체의 경쟁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지원을 통해 한지산업 육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산 닥나무 육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산자부 지원으로 산업화지원을 총괄할 가칭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개발 지원으로서 질 좋은 국산 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진안과 임실에 각 10만주씩 20만주를 식재했고, 앞으로 전주시 인근에 닥나무 집중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50만주까지 식재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전략과 관련해서는 한지의상, 한지 넥타이와 같은 문화상품 분야와 친환경벽지와 같은 웰빙 상품 분야를 적극 개발하고 판촉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업체의 경쟁력 창출과 관련해서 전주대학에 한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공동기반시설로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지를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산업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한지생산기업 그리고 한지문화상품 제작업체, 한지문화상품 디자이너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둘째로는 한지상품의 특허품목 출원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바이어를 상대로 규격화된 상품판매로 관광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셋째로 전주한지문화축제, 한브랜드 박람회, 한지패션쇼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한지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한지관련 각종 이벤트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과의 연계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공단과 관련한 유망기업 협동화단지 추진계획과 기업유치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업입지의 부족을 풀기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개 내지 6개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우리시로 이전하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시에서는 대상 부지를 알선해주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IS전선 협력업체 17개 이전기업 유치를 목표로 팔복동 산업단지 인근에 3개 단지 1만8천평을 조성했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휴폐업 부지나 주변 공업지역 중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이전해오는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인천 소재 두산인프라 코어의 협력사 중 1단계로 50개사를 타깃 지역으로 정해서 유치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심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팔복동 주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복동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연기와 소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각 업체가 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단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주지방환경청 그리고 도와 합동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이행

협약'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 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토록 하는 등 팔복동 지역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지역의 주거환경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제 백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18개 예정구역을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팔복동 지역은 신복지구와 팔복지구가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공원조성 등의 정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다소나마 팔복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이 건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작은 생활 문화복지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팔복동을 비롯한 도심외곽과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시설이 배치되도록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스포츠타운 조성 용역” 결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고 주변의 용지에 대한 전체 개발 및 체육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 좌우측 농지 121,500평 부지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 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배치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245억원을 들 여서 2025년까지 나누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550억원을 들 여서 종합 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주차장을 우선 건설하고 실내 체육관, 수영장, 야구경기장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건설한다는 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종합운동장 건설은 컨벤션센터 건립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덕진 종합경기장의 활용방안이 우선 확정되 어야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을 시민문화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을 각종 스포츠 공간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내 실내공간의 활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문쪽 실내공간 1,600평을 별도로 협의해서 스포츠동호회 사무실, 도서관, 노인복지관, 탈의실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내공간 1,638평은 2004년 8월 월드컵 경기장 교통영향평가 제협의시 실내주차장으로 존치하는 조건을 우리시가 수용한 바 있어서 주차장시설이 먼저 확보되어야 실내 공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주변 산책로 및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의 종합적인 문화스포츠타운으로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경기장내 산책로는 만남의 광장, 놀이마당을 중심으로 0.5km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운동시설들은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정비하고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월드컵경기장 동문 장동길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는 총 7개 노선에 26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로의 경우에는 인근 정암마을까지 운행하고 있는 88-5번의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서 하반기 노선 조정시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사유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로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와 미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질에 맞는 품종을 찾아보고 성토를 해서 심고 수맥과 등 나무가 말라죽는 이유를 찾아서 처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내 고사목 발생원인은 식재지가 논인 원지반 그리고 성토 다짐으로 인해서 불투수성에 의한 배수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2003년 3월 11일 시공사와 발주처, 전문가 등이 참가한 하자보수 관련 첫 협의를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공사인 성원건설로부터 하자보수 대안 보고를 받고 2003년 6월 12일 조경수 하자보식 배수보완 계획을 수립후에 보수에 착수했었습니다.

당시 수종 선택 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호흡성과 이식력 그리고 경관성이 좋은 중국단풍, 메타세콰이어 등을 식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죽은 조경수와 그늘진 쉼터의 조성 및 경관과 건물의 조화를 위한 미관대책에 대해서는 조경,



건축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컴퓨터조성과 미관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푸른 녹지환경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주신 우리 팔복동 1,2공단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결로 답변을 마칠겠습니다.

Q 유재권의원(삼천1·호자1·2동)

▶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삼천1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삼천1동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에 비하여 행정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혜를 덜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호자1동, 중화산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부터 초·중·고·대학생·주부들까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삼천1동사무소는 청사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커녕 프로그램도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시민만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일선 행정기관의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혹시 천정에서 빗물이 새지 않을까 근심 걱정까지 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하여도 청사 형편상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시더라도 주민들간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는 더 이상의 쉼터가 아닙니다.

2006년도 청사신축 관련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하고 청사신축 예정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구와의 상당한 이견으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직접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 매입에 나설 경우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과의 충분한 여론과 공청회를 통하여 현 청사 대지 면적이 적은 대신 3·4층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천1동 신축 유무와 의사가 있다면 그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단지의 동일한 지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에는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를 비롯하여 450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와 지번은 동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아파트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7개나 됩니다.

삼천주공 2,3단지, 평화주공 1,2,3단지, 호성주공 1,2단지가 각 동별 동일지번으로 되어 있어 이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 및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시 동일 지번상에 복수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 시설물 및 대지를 위 복수의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단지별로 대지가 분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대지면적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지번내에 있는 삼천주공 2단지과 3단지의 준공일자 약 2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중 먼저 준공된 2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와 시설 등의 소유권이 2단지과 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2단지만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2단지 주민들만의 소유인 대지 확보를 위해 분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3단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2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450개 아파트 단지 중 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7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일반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 및 혼란을 주는 지번을 하루속히 대지분필 등 절차를 거쳐 아파트 단지별로 고유지번을 부여하는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공사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그리고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명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지방세 부과 시 홍보의 부족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의 부족입니다.

시민들은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일과 고지서

교부 그리고 납부일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세입을 확충한 방법은 좋으나 최근 부과 기준일에서 며칠 사이로 2개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아 전주시 세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효자3동에 있는 남양 아이좋은 아파트는 부과 기준일 3일 전인 5월 29일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는 5월 23일 임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을 충분히 홍보하였다면 해당 아파트측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을 부과기준일 넘겨서 신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창 짜임 아파트 주민 687세대와 효자3동의 남양 아이좋은아파트 264세대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민이 부과기준일을 알면서 부과기준일보다 며칠 앞서 사용신청을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실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전에 부과기준일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차후부터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서가는 계도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 정착에 대하여

각종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로 정착화하고 현재 종이로 되어있는 고지서의 비용을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 신청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사기업 및 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건비 및 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 수신 고지서를 인터넷메일로 대체 신청하시는 분은 일정금액 할인해주어 자연적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정기분 지방세 발행 건수는 완산구 53만2천여건 덕진구 45만2천여건으로 고지서 1장 발행하는데 비용은 인쇄비용,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평균 800원 정도입니다. 전주시의 연 발행 98만4천여건의 비용은 7억8천7백여 만원입니다.

요즈음 거의 모든 세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지서 비용을 이메일 송신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에게 일부 부분의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게 된다면 시 측에서도 자동납부 체제로 징수할 수 있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A 승하진 시장

▶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간 동청사 협소함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천1동사무소 청사신축 예정부지 토지주와의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라는 조기 해결 방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천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해서 현 동사무소 청사 뒷편 6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 3명 중 2명은 매수를 승낙하였고 1명은 협의과정에서 교회개척비 명목의 보상 또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한 사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매입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부서인 완산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교환 가능한 사유지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의 소유주와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삼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현 청사 부지에 3~4층으로 신축하는 등의 삼천1동 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약 200평으로 여기에 청사를 신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청사 신축 문제를 해결하였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 건축조례 제38조에 의거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여야 하고, 건폐율이나 주차장 확보 면적을 감안하면 청사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사 운영의 애로,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 요인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무소는 20여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한 번 신축하면 다시 신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은 먼저 청사 예정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우선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부지 확보가 안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청사에 신축하는 또 다른 방안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절한 타 부지를 물색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의 동일한 지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단지별로 대지분할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주공 2단지과 3단지는 '86년과 '88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2단지는 2005년 11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3월에 안전진단서 D 급 판정을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단지의 대지와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 2.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분할정리를 강제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2.3단지는 관할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소유자들의 토지분할 합의를 유도해가면서 신청 처리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 부과 시 홍보의 부족에 대하여

다음으로 지방세 부과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는 제도상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주체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가 완료될 즈음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에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약속으로 입주예정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입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속 불이행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두 개의 시공사가 입주자와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일 지연으로 겪게 될 입주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재산세 과세 사항을 개개인에게 사전에 제공과 홍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3단지는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 매체 그리고 안내문, 전주시 홈페이지, 또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적극 알려나가는 방안 등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적극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과 자동납부제 정착에 대하여

다음은 지방세 부과시 이메일 및 자동납부제를 정착하여 종이 고지서의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방세 전자고지는 필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세 전자고지를 통하여 징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에서는 각종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납부 방법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자동차세 선납제,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조합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표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 하반기에는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이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세의무 수행 및 각종 제증명 발급도 가능하여 지방세 업무 효율도 높이고 납세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이 고지서로 고지하는 비용을 전자송달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되어도 절감 비용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06. 12. 8 ~ 12. 12)

Q 국주영은의원(송천1·2동)

▶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1년 예산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전문가 중심의 설문조사나 정책토론회 등은 예산편성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의사가 반영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예산편성시 전주시에서 2006년 2회에 걸쳐 시행한 권역별 예산설명회 역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예산설명회를 한들 누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적정수의 시민위원을 선발하고, 예산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시민위원들은 각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시민위원들이 모여 요구할 예산 명세서를 정리하여 시의 예산편성 부서의 조정을 거쳐게 한 후,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의결된 예산안을 의회로 넘겨 최종 심의를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사수렴 구조가 정착되어야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시민위원들 이외에도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예산설명서를 배부 및 인터넷과 설문지, 주민 의견서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06년도에 49건 중 12건을 예산에 반영한 광주 북구청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선언한 군산시 등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민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운영 노력과 시행 방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 북구청과 군산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몇 번의 설명회로 형식을 갖추는 것은 절대 아니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7년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한 실적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개정 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다음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전주시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49억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도 53억5천만원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활동 실적을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 등 4개 의 단에 총 161회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술작품과 예술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시립예술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립예술단은 시민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단의 공연이 혹 '자기들만 의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객석과 분리된 공연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이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일정수의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접근 방법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예술단의 품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원의 창조적 예술행위를 복돋고 운영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시기마다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단



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7조를 보면 2년마다 단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맥과 인맥에 의해서 채용되는 등 기존 단원의 경우 다분히 형식적 절차에 의해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술단 총인원 178명중 6년 이상자가 97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2006 신규 채용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해 단장 본인의 입김을 배제한채 기존 단원을 포함 2년마다 오디션을 통하여 단원을 뽑아 끊임없이 개혁하고 쇄신하여 예술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원채용시 기존단원포함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술단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분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관리 역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에 기인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단과 담당공무원의 인식 차이로 인한 트러블 및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술분야는 '언제 공연을 몇 번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의 문화향유욕구에 부응하였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 행정을 처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술단을 관리하려 든다면, 예술단의 사기저하와 예술활동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시장께서는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토록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을 개혁하고 행정관리를 쇄신하여, 시립예술단이 수준높은 품질로 예술적 매개체를 통해서 전주시민의 삶과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예술의 도시라는 자긍심에 허점을 남기는 예술단이 되지 않도록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예산제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하여 도입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구청별 예산 설명회, 전주시 전체 차원의 종합토론회 등 5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광주의 북구청이나 그 외 울산의 동구, 북구 또는 대전의 대덕구처럼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규모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기능과 역할문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시 이해관계 집단의 마찰 문제 등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구조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해서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에 대한 설명서 등도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719명, 전문가 설문조사 9회에 걸친 220명, 전문가 토론회 9회 148명, 권역별 예산설명회 2회 130명, 최종 정책토론회 1회 280명으로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심층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반영 실적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5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원, 자원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77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4억원, 학교급식사업

A 송하진 시장

▶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국주영의원님께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의향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실적, 예산반영 실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

에 21 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8억원, 평생학습 도시에 6억원, 삼천효자노인복지회관 13억원, 새로운 위생문화 이미용 신기술 발표회 1억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분원설립 3억원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바 있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 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민참여형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도 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시민접근 방안과 예술단의 수준향상, 그리고 예술단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하여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횟수보다는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과 활동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연 포스터 게재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다수 시민과 예술단간의 심리적 간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시설, 불우시설, 벽지학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수의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일반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시민 접근방법 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주문화재단에서 구성된 시민PD단 32명을 활용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 교향악단 230명, 국악단 180명, 극단 50명 등 총 460명의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정기회원에 대한 티켓 할인제를 운영하는 등 회원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안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를 활용하여 공연 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시립예술단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단원은 178명으로 정원 234명 대비 76%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립예술단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단별로 매년 1~2회씩의 전문가 오디션을 실시하며 오디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원의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단원 채용시 기존 단원을 포함하여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오디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임단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디션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외지 전문가를 초청해 오디션을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매년 12월 중에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극단도 역시 매년 2회씩, 5~6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실시 결과로 상임단원을 3등급으로 구분해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예술단원에 대한 인력관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단원의 신규 충원 모집시 단원의 공모에서 오디션까지 모든 과정을 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단원 채용을 차단하고 실력있는 단원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도록 제도 정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관리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교육을 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관리방법으로 담당공무원과 예술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연을 몇 번 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문화 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



해서는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나 한국 문화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워크숍, 지역문화예술 워크숍 및 문화행정 연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이수토록 하겠으며, 타 시도 선진예술단의 견학을 실시 벤치마킹을 통한 예술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예술단의 평가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충족하도록 12월중에 개설되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회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김철영의원 (삼천1·호자1·2동)

▶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내 곳곳에 대형건물 입주시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영향평가로 시민들에게 교통만을 더해주고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환경이나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지역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대도 오히려 교통의 장애와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심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교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인·허가전에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득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유독 교통영향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심의하므로 일관성 있는 의견 반영이 결여될 뿐 아니라 먼저 시행한 교통영향 평가를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점을 알고도 따라가야 하는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가심의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관련 전공 교수와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문적으로는 매우 뛰

어나고 우수한 분들이라 사료되나,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봐주기식 심의가 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면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심사 결과가 몇몇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심사가 되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에보면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는 규정에 의한 승인 기관장 등 또는 평가서 협의 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하여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시민들에게 알려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평가 용역업체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 결과가 작성되므로써 엄청난 교통정체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짜증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불법 주차와 교통정체로 피해와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호자3동에 웨딩캐슬, 서신동에 롯데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건축법을 악용한 사례로서는 호자4동에 썬플라워, 덕진동 코앞, 송천동 메가월드 등이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건물들 중에는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우아동에 삼성홈플러스 역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전주시의 대간선도로 가각점으로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을 뿐더러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개장 후 심각한 교통 정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뻔한데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장을 안할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별 다른 교통 소통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좀 더 신중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하여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가장 많은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와 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전라북도에 추천하여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 제도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우리시의 교통정책 급증과 시민들의 교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교통과 맞물려 있는 500세대 이상의 인허가권을 전북도와 협의하여 되찾아올 의향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전북도지사로 가신 전임 시장께서 재임시에 주장하셨던 일이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제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철영 의원님께서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둘러리식 심의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데 대해 오히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도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시설의 내용과 건축규모에 따라 도와 시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은 완전히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시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의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직까지는 위임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평가 관련 용역업체가 평가서 작성시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시 최소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15배 이상인 복합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썬플라워 등 6개 건축물 모두가 의견수렴의 제외 대상 건물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은 우리시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의원과 업무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통업무 를 담당하는 실·국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의위원은 3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10인의 위원을 무작위 지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같은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로,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업무담당 과장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군·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라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강력 징수와 사안별 행정 지도를 통한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인허가권을 전라북도에서 되찾아 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 우리시에 위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할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우리시에 조속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박혜숙의원 (비례대표)

▶ 65세 이상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 발굴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49,887명이지만 2020년대에는 무려 33.4%가 증가한 333,378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65세 이상 노인층의 초고속 인구로 이들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멀지않은 미래에 노인들은 노년 생활에 매우 어려운 생활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전주시 역시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수는 624,794명이고 65세 이상 세대 주가구수는 26,661세대이며, 그중 저소득층 세대주는 완산구 3,695세대, 덕진구 1,851세대로 전체 저소득세대는 5,54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교통수당 30,000원을 지급하는데 불과하며 경로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79세까지 월 45,000원, 80세 이상 월 50,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보면 월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노인들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눈치를 보는 노인들은 아예 자식들한테 손을 내밀기가 힘든 나머지 지원금만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하니 정말 힘든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오히려 보이는 행정, 화려한 축제 행사로만 전주시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살기가 편안해서 활짝 웃을 때 전주시의 축제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황은 현실에 맞는 복지와 관심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서 어르신들은 더욱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운 나머지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으로 던져주는 복지정책에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생활이 보탬이 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한 달 생활비는 아닐지라도, 손자들에게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지역복지관에 함께 참여하여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인상을 하거나 특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료의 경우 아끼면 절약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요금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수도 요금 감면을 전주시가 우선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3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이들 아동들에 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급식제공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자원 봉사 등을 펼쳐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지역 아동센터의 사정을 살펴보니 일부 센터의 시설이 미비한데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태부족이고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꾸만 늘어만 가지만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 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경우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인원만도 793명에 이르고 시설장 27명, 종사자 32명, 강사 93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당국은 자원의 숫자나 교사,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 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과 복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아동이 많은 곳, 즉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편중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종사자 32명과 강사 93명이 있는데 과연 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 충대충 조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부실운영 초래 및 전문지식이나 사명감 의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아동교육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몇 번이나 그리고 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계획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시 관내 27개소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6개소가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 누락이 왜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65세 이상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 발굴에 대하여

박해숙 의원님께서서는 65세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적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노인복지 시설 건립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무료 경로식당운영, 노인 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 연금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19억 1천 3백만원 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2억 9천 6백만원, 2006년도 271억원으로, 우리시 총예산의 4.12%를 노인복지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액은 2004년 대비 2006년의 경우 23.7%가 증가한 5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령사회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도 함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만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급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금후 65세 이상 수급대상 독거노인 2,500여세대와 차상위 계층 노인 1,000여세대를 포함한, 3,500여세대의 저소득층 노인 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계 별로 지원 하도록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 사업으

로 수도요금 대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334명에게 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경로 복육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 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12월 7일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0%에게 월8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는 물론 교육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 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 우수 운영시설을 벤치마킹 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데, 급식비 인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93명 중 학교 급식이 370명, 결식아동 급식이 129명,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하는 미취학 아동 97명 등 7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25%인 197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굶고 오는 등 급식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등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만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토록 해 나가겠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차후에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에 대한 교육 실태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되며, 종사자 변경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 동안 전라북도과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서류 미비와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 한 12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무 과정에, 17명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시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및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27개소 아동센터 중 6개소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적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센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005년까지 신고된 21개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소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 었습니다만 국비가 부족해서 내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정부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종사자와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Q 이명연의원 (인후1·3·우아2동)

▶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전주시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졌다. 도둑질 빼놓고는 다하겠다는 각오를 절실하게 표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각오 만큼이나 눈에 띄게 발전하였는지?

우리 서민경제는 활력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연자본도 부족하고 기업도 많지 않아 소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주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통하여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의 특색있는 박물관 건립 및 박물관 유치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시장께 아중리 저수지 개발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의 관광자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둘째, 인위적인 시설에 의한 관광자원, 셋째, 국제영화제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전주 찾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짊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전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떠나는 전주가 아닌 찾아오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애써 전주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을 때 극장 입구 또는 주변에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경기 등을 어렵게 유치하고 그 행사장 주변에 전주의 볼거리, 전주의 먹거리, 전주의 생산품, 전주에 다녀와서 그곳에 들르지 않고는 전주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게끔 문구 한 장이라도 써 붙여 놓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행사장 주변에서 전주의 자랑거리를 외쳐보기도 했었는지? 아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민 모두가 여유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한옥마을과 경기전 등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도 있지만 전주를 지나치는 외지인을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임실, 남원, 순 천, 진안, 장수, 무주 등지로 가기위해 지나치는 동부우회도로변에 잠시나마 가족단위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용 시설지를 만들어 전주가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쉬어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적극적 사고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본 의원 이 지난 6월 저수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찾아 다녀온 경기도 기흥저수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여년 계획으로 80만평의 저수지 일대를 주변의 한국민속촌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을 배후 표적 시장으로 한 시설개발 및 주변지역의 유동객을 흡수 할 수 있는 시설유치 계획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입 예정시설로는 찬란한 야간조명이 있는 교량, 생태학습장, 호수박물관, 선상호텔, 산림욕장, 야영장, 골프장, 수영장, 번지 점프대, 레스토 랑, 향토음식점, 수변무대, 열기구, 서커스장, 유람선 등 엄청난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검토를 했지만 개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아중저수지를 말씀드리면 약 45년전인 1961년 10월 준공된 저수지로 서 저수지 총면적은 8만여평에 불과하지만 전주의 관광코스라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지척에 있으며 인근에 관암, 아중, 아하, 용 재, 제전이라는 5곳의 마을이 있고 1995년부터 2000년 5월까지 5년간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향후 2년후부터는 친환경적으로 일부 활용이 가능한 3만여평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며 별도로 새로운 시설이 필요없는 아중채련공원이 인근에 있고 외부관광객의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많은 숙박업소 또한 지척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의원이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답에서 규모가 작아서 개발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을 건설하였듯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각 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되고 인근지역에 집단화된 모텔과 유흥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집단화된 모텔이 인근에 많이 있어서 새롭게 숙박시설 부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저수지 수량 부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작은 웅덩이도 접시물도 긍정적 사고로 노력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가로 987m, 세로 480m의 저수지를 수량이 적다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주변의 좋은 여건들을 별개로 보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휴가철이라 전주시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IMF때보다 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우리 시민들의 울음소리를 언제까지 보조금 지급 등 일시적 입막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주변여건이 훌륭한 아중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은

다음은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전인 2005년 오늘 12월 8일 전주시의회 제228회 2차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걱정스럽게 설명한 내용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안일한 전주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후동 안골사거리 주변에는 2~3년 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인후아파트 1.2단지 41,700평의 대지위에 2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7년 1월 그러니까 한두 달 후에는 2,785세대 약 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되게 되며, 전라초등학교 앞 구 보안대 자리에는 선변아파트 423세대 1,500명이 입주하고 있고, 구 농원지구에는 462세대 1,617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고, 인후 시립도서관 옆에는 송정아파트 226세대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거성프라자 아파트 옆에도 하루리 100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여전히 그대로의 도로이고, 단지 안골사거리에서 명주길 사거리까지 구간중 구 인후아파트와 접한 부분만 일부 후퇴선이 있을 뿐이라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방금 전 설명드린 공동주택들이 입주 전인데도 명주길 사거리에서 견회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안골 현대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이 안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 4~5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골사거리에서 북일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가 U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시종일관 기다리다 이 역시 직진하는 차량을 보며 무리하게 U턴을 감행하여야 하는 등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사고의 위험만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인근의 교통상황, 안골사거리와 연결되는 견회로를 보면, 마당재에서 기린로 구간까지의 공사중 현재 마당재에서 기린봉아파트 입구까지 560m만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일 5~6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재 사거리에서 기린로까지의 견회로가 완공이 된다면, 명주길과 견회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안골 사거리 주변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에 빠지리라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2005년 12월 8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요구했을 때, 전임 시장께서는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지만 500세대 이상 아파트 허가권을 도가 가지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역시 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한 이후에 어떤 대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흘려버리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성의있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도면을 통해 간략한 설명을 한 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화살표 방향이 명주골 사거리 구 해금장 사거리 방향이고 이 방향이 마당재 사거리 방향입니다. 그리

고 여기가 안골 사거리, 이쪽이 전자랜드 사거리, 이쪽 방향이 진안 방면이고 이쪽 방향이 모래내 전주 농고 방면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수차례 본 의원이 담당 부서장님과 관계 직원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후아파트 1단지, 2단지 재건축 지역이고 여기가 2,785세대, 만여명이 입주할 예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라는 이쪽 지역이 선변아파트 423세대가 입주해 있고 지금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 농원 지역으로서 주공에서 462세대 아파트를 거의 완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100여 세대에 하루리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시립도서관 밑에 226세대의 송정 아파트 건축 공사가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후아파트 2단지 경계가 되어있는 이 부분부터 1단지 경계 이 도로면 이 부분만 후퇴선이 3미터가 밀려났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복 4차선인데 4차선에서 이쪽 부분만 한 차선이 늘어났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3차선까지 이쪽에 북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한 차선 이 늘어나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좁아집니다. 한 개 차선이 결국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늘어났지만은 연결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일같이 오후 5시 반정도에서 7시, 8시까지 이 일대는 교통 정체로 인해서가고 차가 움직이기도 힘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게 가장 먼저 신호 연동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명주골 사거리에서 마당재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 도로입니다. 주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게 차량 연동제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 연동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랜드 사거리 에서 약간 신호가 한 10여초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현재 굉장한 정체를 보이고 필연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안골 사거리에서 북일 초등학교에서 마당재쪽으로 가는 차량은 신호등 사거리 내에서 신호 차량이 완전히 정체가되어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로폭은 현재 이 앞에 부분이 35미터 도로로 양쪽은 30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양쪽으로 5.75미터에서 양쪽으로 6미터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게 가장 먼저 신호 연동제를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인도가 양쪽으로 좁아지더라도 직진 차량 한 차선 정도는 분명히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 늘어나야 되는 구간은 1단지

경계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거기까지가 늘어난다면 그래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많이 안받고 약간이라도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거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 부분에서 고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직진과 좌회전 고가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는 이 부분에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직진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제반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 한 개 차선 정도는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인도를 약간 줄이더라도 양쪽에 6미터씩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차선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수차례 관계 부서장과 담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도 여기에 대한 진척 내용이나 앞으로 대책이나 한 번도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이 설명을 이대로 드렸는데 다시금 또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린다는 자체가 답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송하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이중저수지 주변 개발에 관하여

먼저 주변 여건이 훌륭한 이중저수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 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시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해서 유원지가 분리되고 대부분의 사유토지가 95.9%를 차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용도 지

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 련시설 중 온실 등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호동골 매립장에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 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 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할 때 골프 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추진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저수지 주변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자원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전주시 종합 장기발전계획의 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은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사거리 주변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 아파트 2,785세대 중 1단지 920세대는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월후부터는 1단지를 비롯해서 2단지까지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됩니다.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전보다 595세대 정도 증가하고 안골사거리 주변 지역도 개발이 활발하여 교통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골광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운영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2006년 6월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신호 체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골광장 주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인후1단지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주 1회 교통흐름 및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광장 주변에 대한 교통신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후1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아파트 경계에서 안골 광장간 보도폭을 줄여 차도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최근에 교통 전문가 등과 검토한 바, 인후주공 재개발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시 아파트부지와 명주길이 접한 사업부지 전체를 Set-Back 한 배경은 인후 재개발아파트를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만약 안골광장까지 차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차량이 명주길로 나오지 못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 소동만을 위한 6m 인도를 축소할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제외하면, 보행공간이 2m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교통 약자의 보행권 침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신호 체계는 물론 가변 차선 문제, 그리고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문제 등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후에 미리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권정숙의원 (비례대표)

▶ 전주시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여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현재 환경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시 소유의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연 206억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시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 11개소에 22억 7천만원, 사회복지 14개소에 27억 8천만원, 체육시설 4개소에 6천만원, 체육청소년 6개소에 8억 5천만원, 환경위생 6개소에 138억, 기타분야 8개소에 8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서류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 하는 합동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협약체결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강력히 해지를 한다거나,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협약체결 기간 동안 보완 사항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 협약 체결시에 감점 등을 준다가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성과가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 협약서 내용의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및 조연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제도를 정착화하여 전주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추진 방향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의무이행 즉,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은 골프장 대부료에 대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7천여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행정 이 계속 끌려가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또한 전주승마장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최초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없이 수의계약했던 것을 지적하고 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적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체육시설 및 청소년 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소 잃고 외 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의 경우도 대부분이 한 번 수탁하게 되면 개인 소유물처럼 인식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또 다른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전주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산낭비는 자연히 사라지리라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대하여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염려를 해주시면서 폭넓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관련서류에 대해 담당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 민간위탁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바로 조치한 것이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였으며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지난 9월 한달간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평가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간, 시민단체와 합동 지도감독을 통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민간위탁 시설 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나 관계규정, 우수사례 등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사업 및 예산, 결산 주요 운영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시설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해지 및 보완조치 하고 재협약 체결시 감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9월에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시 감점 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나날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은 재위탁 결정시 참여

할 수 없는 제제조치를 적용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관리에 있어 잘하는 시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하고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재정적 패널티를 주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 의견서의 첨부과 공증,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 책임제 강화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는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49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 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협약서 작성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서 작성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생각하고 집행부 책임 하에 작성토록 한 바 있어 전주시 고문번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의 위·수탁 계약서 체결시에는 반드시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시 고문번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겠으며,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는 체결 즉시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협약서의 불충분한 요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중대한 업무소홀로 우리시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법적, 행정적 검토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 평가 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주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단 등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서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관련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당 분야별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의 특징이 서로 달라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어



서 좀 더 전문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동안 평가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시켜 강도 높게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사무 운영에 있어 운영방법이 미흡할 때 위법, 부당한 사실의 인정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시정 조치가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위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정 주기별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건의 내용은 바로 바로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위주의 민간위탁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운영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협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와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탁기관이 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금후 마련할 협약서 표준안에 포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체육시설 및 청소년, 환경분야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운영개선 TF팀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 등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협약의 명확한 내용, 평가의 실용성 확보, 민간위탁사무 실행제 도입, 인건비, 운영비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등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며, 위탁된 공공시설에 대해 그릇된 사고를 갖고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 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서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간위탁 관리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덕진공원 테마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하여

수차례 리모델링된 덕진공원이 테마가 있는 공원, 내용이 있는 공원의 중장기 비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보고자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덕진공원은 전주 시민이 마음 편하게 즐겨찾는 자연형 공원입니다.

2001년 무료개방, 음악분수대 설치 등 많은 리모델링, 보수작업이 있었으며 연간 110만명에서 150만명이 찾고 있습니다.

총 면적 45,000평에 연못 면적은 30,000평으로 그중 연꽃 식재 면적은 13,000평으로 야외영화상영장, 연화정, 연화교 음악분수 등 여러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한걸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첫 째, 덕진공원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주의 역사와 전통의 세시풍습 문화와 관련이 깊은 전통문화 체험의 장입니다. 덕진공원은 건지산과 가련산의 분지에 위치해 있어, 전주 땅의 덕과 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비보풍수적 성격의 인공으로 조성된 온전한 고을의 땅을 상징하는 연못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유래된 용왕제 곳은 용천혈의 연못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덕진 연못 단오제는 고을 수호신과 농경 풍요신에 대한 제사로서 단오날 오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장수 한다고 하여 단오 물맞이 행사가 중요한 행사였으며, 단오날 비가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으로 무당굿이 동원된 기우제 성격도 있습니다.

매년 7~8월에는 전주 8경의 하나의 '덕진채널'을 보기 위해 전국의 카메라맨들이 아침 일출을 기다리기도 하며, 또한 손님들과 불자들이 연꽃 만나러 와서 연꽃 세상 처럼 연화세계의 연향을 즐기기도 하는 자연풍광과 향기가 아름다운 명소이기도 합니다. 동절기가 되면 덕진공원의 석양 노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은 다양한 문화활동, 전시, 축제 등이 어우러지는 마당이고 판이며 특히 서민들의 해우소처럼 찾는 휴양 카타르시스 마당입니다.

둘째, 덕진 연못의 생명은 수질입니다.

창포물과 연뿌리에서 우리나라의 약효때문에 단오 물맞이 때는 연꽃잎과 창포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민간요법이 유효한 신비의 연못입니다.

평균 수심이 1.2m인 덕진연못의 수질 상태는 동절기 측정 결과 5등급의 수질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한국건설 기술연구 용역 연구에 의하면 유입수가 없는 폐쇄 공간과 연꽃 자생지에서 고사되는 연꽃의 부식 식물과 인의 용출로 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연꽃 자생지와 보트장과와 통수차단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진 연못의 주 오염원은 퇴적토와 고사 연꽃이고 부 오염원은 대기로부터 분진유입과 강우시의 강수, 공원내의 유출수 등입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 일산호수공원 수질이 연간 3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좋은 예일 것이고 평화동 지시제 수질개선 및 생태호수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과 관로매설, 수질저감 대책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의 수상을 예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2006년 12월 현재 덕진공원 제방길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212m의 우수관로 시공을 마쳤는데 우수받이가 22개가 있는데 덕진공원으로 설계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제방쪽길 바닥면의 많은 오염원인 초기우수 그러니까 노면수가 그대로 덕진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덕진연못이 우수처리장입니까? 덕진공원 호수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용역한 것인데.

용역보고서 한번 제대로 읽고 스터디했다면 그리고 과연 수질을 위해서 전문 부서인 환경위생과나 하수와 상의를 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덕진공원 조경수 관리 및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에 대한 시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해보니 올랐했던 소나무 숲의 기억이 추억거리입니다. 노송을 배경으로 소풍이나 졸업사진을 찍는 앨범 사진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요 수종은 당단풍나무, 잣나무, 버드나무, 향나무와 연화정 주변의 느티나무입니다.

2005년 1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용역 전주 전통 역사문화 구현을 위한 덕진공원 용역 보고서 28쪽, 75쪽, 77쪽을 종합하면 연못 옆의 산책길은 호안길로 수양버들을 식재하여 수변공원의 운치를 드러내고, 도로사면부의 제방길은 팽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기존 수종에 식재를 보강하여 올랐한 수림하에 호수를 감상하는 숲 터널 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길을 조성하여 야간 조명을 업라이트 방식의 조명 설치를 하여 소나무 야경 이미지의 야간계획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방길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식재의 수목 사황을 살펴보니 스트로브 잣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느릅나무, 산수유, 수꽃다리, 화살나무, 영산홍, 개나리, 이팝나무 등으로 심어져 있다 문제가 되니까 호안길은 팽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로 할려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도 충분한 나무 식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2건의 용역보고서를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사업 시행 따로이고 용역 보고서 따로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용역을 했는데 민선4기

에서도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지 시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직 개편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개선 용역을 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역사 문화공간 덕진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전에는 복지환경국 소속 이었는데 이제 민선4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개발국과 복지환경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업무 협조가 안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 별 업무 협조가 이런 전문화된 체제에서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덕진공원의 장소성과 기념성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진공원이 6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공원의 시간성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간 15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공원의 성격에 맞는 강한 주제라든지 놀이마당 조그만 광장 조성을 통한 테마성 있는 덕진공원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역의 인물 중 법조계, 문학계,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 등 다양한 기념비와 동상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적절한 장소로의 테마별, 주제별 집적을 통해서 광장적 성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전주천과 생태 네트워크 벨트를 조성해야겠습니다.

덕진연못 서북쪽 제방 다리 아래 연화천 개울은 송천동과 덕진동을 경계짓는 건지산의 지류인 싹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태 네트워크를 이어주어 전주천과 덕진연못이 생태적 순환을 회복시켜주어 전주천변과 보행 연결성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지산, 덕진연못, 전주천, 건지산의 작은 지류들이 생태점이므로 연결되어 열린 생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합니다.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관이 살아날 때 주변의 많은 문화시설, 복지시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섯번째, 덕진 연못 제방 뚝길 이것은 토축으로 쌓는데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도로 문화재급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돌담 이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지금 덕진연못의 역사가 600년 이 된 것을 유일하게 증명하는 것이 덕진연못의 제방 뚝입니다.

600년전 비보풍수적 덕진연못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백제토성을 쌓는 방식으로 조선 초기에 토축 흙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호수 바깥은 계단식으로 토축으로 올려서 쌓았으며, 호수 안쪽은 물의 수압을 견디게 조상들의 과학적인 토목 공법을 연구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제방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토축 경관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얼마나 덕진공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단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지표 조사라도 해서 이제 도로 문화 재로서 아름다운 돌담과 토담으로서 등록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양버들과 팽나무, 느릅나무 등 숲



터널이 조성되고 제방 호안길의 토축 경관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역사와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지난 10년간 덕진공원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떻게 테마별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1997년도 공원 마운딩 사업화를 위해서 31억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는 공원 주변 포장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2억9,253 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는 경관조명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8,317 천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은 음악분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7억2,6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가로등 펌프설비 등 보수화를 위해서 1억6,94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3년은 도색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천97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은 수영장 폐기물처리 자생화 식재를 위해서 2억18,455천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음악분수 시설개선 공사 등 10억9천32만1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은 제방길 산책로 조성공사 및 조정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억67,441천원이 투자되어 총 10년간 65억1천3백68 만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비전없이 투자되다보니 주요사업과 보수사업, 이미지 개선사업, 테마공원 등 내용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005년 발주한 2개의 용역보고서는 잠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 보고서가 잠자고 있었습니까? 시민이 배제된 기술 용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간과 행정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예를들자면 지역내 문화계, 예술계, 역사, 언론계, 조정, 생태, 수질, 토목, 조명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클러스트가 되어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의 덕진공원 리모델링 주체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민간 참여형 덕진공원 용역의 실시 설계가 되어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덕진공원의 공원 중장기 계획을 해왔다면 그 용역 보고서는 사장되지 않고 더 좋은 사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원과 가장 한국적인 연못으로 테마가 있는 미래형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옥마을에 쏟는 정성만큼 혼을 담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녁 노을과 달밤을 끼고 뜰부기 우는 호반에서 피리소리에 젖은 연꽃 풍광은 자연미에 스폰지처럼 빨려들어갈 것입니다.

시장께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테마공원 계획에 대해 답변바라고 덕진도립국악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연계된 소리마당, 소리테마공간 성격의 대시습공원을 제안합니다.

전주대사습은 한때 전국 유일무일의 소리 동음문이어서 유명한 국창과 명창을 많이 배출해 왔고 관소리 세계문화유산의 소리 분향으로서 소리를 기념하는 대시습 공원 정도의 조형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잘못 설계 시공된 우수관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천, 덕진연못, 건지산을 생태네트워크로 전주천, 덕진연못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의제 21에서 이번에 소류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확정은 되어있고요. 이것과도 다 연관되어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네 번째, 덕진공원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조정 식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덕진공원 중장기 계획 비전에 대해서 그 방향과 민간들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제방 뚝길을 갔다가 문화재적 가치를 갔다가 인정한다면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작업을 할 때 물을 다 뺄 때 문화재 가치의 실측 조사를 벌여 가치가 인정된다면 문화재로 지정 등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600년의 덕진연못의 인공적 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덕진공원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그 설치기 구도 없고 조례도 없고 제도도 없는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테마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덕진공원 테마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하여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덕진공원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생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연계된 소리마당, 소리테마 공간 성격의 대시습 공원 조성과 대시습 장원들의 조형공간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 덕진공원과 주변 건지산 일대는 풍수적으로는 물론이고, 천년이 넘는 전주의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 온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활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확충과 현대적 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도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특성있고 균형있는 권역별 전통문화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일대 도심권을 전통생활문화 체험지구로 육성하고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미디어 파크 등 서부권을 역사, 문화, 교육, 전통문화 콘텐츠 지구로 육성하는 것과 함께 덕진공원-도립국악원-전

북대-삼성문화회관-어린이회관-소리문화전당을 연계하여 북부권을 전문전통공연, 예술, 소리 산업지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에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권역별 전통문화벨트 구축사업을 1차적으로 반영하였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덕진공원과 소리문화전당 일대를 전문전통공연, 예술, 소리문화 산업지구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리테마공원에 대사습 장원자들의 조형공간을 마련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우리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975년 전주대사습 제1회 대회 이후 현재까지 장원자가 258명이 배출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배출되는 장원자수를 감안 한다면 조형물 설치에 공간적으로 애로가 예상되지만, 이 문제는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상을 전주 출신 또는 국창급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덕진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오염원인 초기 우수의 덕진연못 유입이 심각한데, 덕진공원 산책로의 잘못 설계 시공된 우수관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제방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덕진공원 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제방도로 일방향 통행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안은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많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양방향 통행로 확보로 최종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방도로의 표면우수의 연못 유입을 막기 위해 제방 340m 구간에 우수관로를 별도로 매설하여 여수로 뒤편으로 배수처리할 경우에는, 제방의 시점과 여수로까지 1m 이상의 종구배 차이로 인해 배수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5m 이상 제방 굴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제방 굴착으로 인해 제방의 누수를 방지하는 점토심벽이 교란되어 제방누수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덕진공원의 수질문제에 오염의 심각성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집수관로를 호안측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주천, 덕진연못, 건지산의 생태 네트워크 및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으로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한 녹지축 조성, 실개천과 소류지 살리기를 통한 생태친수 공간 확충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덕진공원 주변의 생태네트워크 형성사업은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전주천, 건지산, 가련산의 생태 거점을 연결시켜 덕진연못의 생태적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을 연결하는 수상생태계, 산을 연결하는 육상생태계, 덕진공원 주변 오염원의 정화시스템을 통한 수질개선 방안, 전북대학교를 활용한 생태숲 조성사업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내 정화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교내 생태숲이 이 지역의 중요한 생태녹지 네트워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와 적극 협력하여 보다 안정된 생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천에서 덕진공원간 덕진공원 후문에서 전북대 후문간의 수상생태축과 보행로 개선사업으로는 전주천 합류지점부터 송천로까지 442m 구간에 대하여 송천동 제1 센트럴파크 아파트 신축사업에 포함하여, 하천정비와 보행로 확보 사업을 2007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송천로에서 덕진공원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하천을 따라 우수한 수목이 우거진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덕진공원의 실개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더불어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육상생태계 연결은 팔달로에 의한 동선 단절로 완전한 연결은 어렵지만 공원내 수목 보강식재로 녹지축을 최대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수질개선 대책 및 나무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연못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덕진연못 주변의 개발오염으로 연화천 상류의 실개천 물을 유입하지 못하는 등 수량 확보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경우에는 한강물을 유입하여 하루 6,000톤을 수질개선 처리시설을 거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수원 확보를 위해 공원내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500톤의 물을 담수해 오고 있어 수량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만은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진연못에 연못 자생지와 호수간 차수벽을 설치하고, 창포 습지를 조성하여 연못 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덕진공원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는 수양버들, 느릅나무 등의 수종을 선정하여 도시숲 가꾸기사업으로 집중적인 수목식재를 통해 수목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덕진공원의 중장기 계획의 반영과 시민 참여형 민간거버넌스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제공되어 왔고, 시민들의 정서활동과 건강증진 활동 등에 대표적인 공원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총 부지면적 300여만㎡ 내에 동



물원과 덕진호수공원, 체련시설, 어린이회관, 소리문화전당 등 94만㎡가 조성되어 있으며, 덕진공원 조성 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식물원, 오송재 야유회장 등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테마 공간 성격의 대시습 공원과 생태네트워크 형성, 덕진연못 수질개선 사업 등을 덕진공원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참여형 민간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개정된 공원 관련법에도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도시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시민참여형 전주시공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심의, 기타 녹화 사업계획 심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거시적인 차원의 덕진공원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덕진공원의 비보존수적 덕진제방에 대한 문화재 가치의 실측조사를 벌여 문화재로 지정, 등록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우리시민과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자연문화 유산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공원 제방쪽길의 문화재 지정 문제는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공기법의 기록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사계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된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 등록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조형물설치 기구 및 제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덕진공원내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기구나 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인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 조형물을 설치해 오며,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치적을 기리는 추모비, 동상, 시비 등이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형물을 제외하고는 전면 불허해 옴으로써 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후 설치 예정에 있는 전주 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과 구조, 규모, 위치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공원의 테마에 맞는 조형물만을 설치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김창길의원 (진북·인후2동)

▶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재정운용이 복잡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4기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하여 2006년 8월에 조직개편을 단행 큰 폭의 인사가 되었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대폭 승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미약하여 대다수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부분 저하되었습니다. 다음 인사때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직급상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직 6급이 334명, 7급이 474명, 8급이 347명, 9급은 이에 반해서 180명입니다. 9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잘못된 구조로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능직렬의 결원도 충원이 빨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적체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역동적인 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직원들의 능력과 연공서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주시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연공서열을 너무 도외시한 지나친 경쟁은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므로 지난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시에는 순환근무를 통한 인사 회전이 잘 지켜져야 불평불만이 적어지는데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적체가 심하여 순환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 과오납 등의 세정업무를 감사하는 세무직이 부족하여 감사때 일부 직원을 차출하여 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력 공백과 업무 중복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이 상시 근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회계제도상 복식부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인력 양성 및 직원교육 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관내에서는 수많은 사업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 특성에 걸맞는 전문 직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행정직 편익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원장의 경우 복수직인 관계로 축산 직이나 수의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촌지도관 또는 연구관이 맡아야 할 센터장에 축산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한다는 도서관법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위배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어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 세가지 중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생활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주시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가지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한 구역은 모두 61개 구역이고 그 면적은 435.7ha입니다. 그 중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 노후된 건축물이 대다수 지역으로써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2.6ha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후구역은 전주시 61개중 24번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인후 구역은 구도심속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일부 흉물스러운 폐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소방도로가 없어 구조 구급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 인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택 종 세분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받아 관상형 최고층수 7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여간 어렵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전주 동초등학교 주변 기자촌, 문화촌, 물왕벌 주택 재개발구역들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저지대인 인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서부지역에 비해 이 동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한데도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함은 물론 검찰 고소사태까지 일어나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주시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2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일반주거지역 1종을 변경할 용의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3번, 또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답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권,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인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래내 북개로로 맞은편 구역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래내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모래내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수많은 노점상들과 300여개의 점포 및 상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은 물론이고 인근 금암동, 인후1,3동 노송동 등 10여개 행정동의 중심 지역으로 전주시 인근 및 완주군 지역민들의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 등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알뜰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아동 구 해금장 사거리에 개점을 앞두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삼성 홈플러스 대형마트 관계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대한 공룡 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재래시장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언감생심입니다.

모래내시장 상가 리모델링 및 현대화 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모래내, 서부, 동부시장 등은 미약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94쪽과 9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면적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의 유연성 시간완화, 노점상 영업시간의 동절기 상향조정, 상가 번영회 지원 등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시장을 지나 전주 생명과학고 앞에 다다르면 수년째 미개통되고 있는 서낭로라는 미완성 도로가 있습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서노송동을 지나 인후 사거리를 경유 전주생명과학고 정문을 통과 백제로 전북대학교 병원 앞 금암동 연평도 해물탕에 이르는 전주시 중로 1-1 도로입니다.

참고로 이 도면에 나와있는 도로가 서낭로 개설도로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로는 길이가 2.5km, 폭은 20m로 총사업비 279억원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 7억원이 도로개설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명과학고를 지나 동 중학교와 전라초등학교 앞에 도착하면 선변아파트와 향후 입주중인 금호 어울림, 두산위브 1,549세대, 한신 휴 1,236세대, 총



2,785세대 11,000여명이 입주하는 인후주공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극심히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덕진구청 도로과에서 그동안 없었던 통학로를 개설하느라고 무척 애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덕진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 마저도 개설하기 어려운 편도 1차선으로 시내버스나 대형차들이 통행하는 과거 17번 국도로 도로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인 SCHOOL ZONE 또는 SAFE ZONE 없는 곳은 인근 모래내시장 북쪽 동북초등학교와 전일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도시계획상 교통량 흐름 분석 및 다당성 조사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방치하여 안전 불감증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훌륭한 대비책을 기대하겠습니다.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계속된 계속공사입니다. 이 화면 좌측을 주시해 주시면 되고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으로서 1999년 2월부터 2007년 12월달까지 계속된 공사입니다. 사업규모 부지조성 2,519,690㎡으로써 세대수는 4,224세대, 수용인구 12,672명으로 저밀도 지역의 대표적인 시가지 예정 용지입니다. 사업비는 4,406억원의 초대형 공사로 전라북도 청사를 비롯하여 대단위 공공기관이 조성되고 인근에 전라북도 교육청 마저 입주하는 메메드급 신행정 복합단지로서 주택 수요가 확연히 드러나는 신시가지여서 전주시 땅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전체 면적대비 4%로 경제적 회소성에 의하여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전주시가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 했더라면 이같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제거되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집없는 서러움을 달래주는 시민 만족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대한방직 부지 또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지역중 지질학적 구조상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이 암 반층 위주의 지형으로서 발파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대형 덤프 트럭이나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야기되는데 시장께서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여중고 통학길은 제대로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들로 인한 사고가 날까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조성, 혁신도시 등 전주시가 서진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동부권의 낙후가 상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로 중소기업 육성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단체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구매제도의 의무화로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중소기업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역 업체의 도산, 파탄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배려, 직급, 직렬별 불균형 문제, 연공서열 도외시로 인한 부작용 문제, 순환근무제 시행, 감사담당관실에 세무공무원 배치 등 전주시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조직진단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제정의 효율성도 높혀 나가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시 전통문화국 신설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중 심으로 1국 3과 45담당이 신설되면서 동사무소에 6급인 시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직군의 승진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직렬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술직 등 특정 소수 직렬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계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에 계급별 정원책정 기

준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시의 기준은 4급이상 1%, 5급 7%, 6급 24%, 7급 32%, 8급 24%, 9급 12%로 기준에 맞게 정원을 책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매년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고 인사기준을 공개하여 서열과 능력, 실적, 연령,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인사 때마다 본인의 근무 희망부서를 신청받아 부서장과 협의하여 전보인사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직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과 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나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상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무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 즉 세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10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업무의 특성이나 인력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재무과 세 원발굴팀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감사 기간에만 세원발굴팀의 최소인력이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공백이나 업무중복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주요감사시 전문성을 갖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수시로 차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999년도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와 함께 7개 자치단체가 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시험 운영하여 오면서 전 청원 복식부기 회계 마인드 함양 교육을 비롯해서, 회계업무 담당자 등 총 14 회 1,692명에 대한 교육과 4년간의 복식부기회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뒷바침되어서 내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2006회계년도 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1회 더 작성 한 후, 2007회계년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를 2008년도에 작성, 회계 관계자는 물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도 공시함으로써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절한 직렬배치를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등 일부 기관의 장을 특정직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의 기능 과 업무성격,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 불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렬간 형평성, 업무추진 능력, 조직운영 능력, 순환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점진적으로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인후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종에서 3종까지 세분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제8차 전주시관리계획시 토지의 특성 및 교통성, 주거율, 층수,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차례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료를 받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역이 2005년 7월 29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제1종 30.7%, 제2종 53.8%, 제3종 15.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유형을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용적율 230%, 건폐율 50%, 층수는 7층으로 지정을 했으며, 담 사항 건축시 인세티브를 적용하여 평균9층, 최고 11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행정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법적 이해 부족 등으로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동의서 징구를 위한 과대 홍보, 재개발 구역내 주민간의 주도권 분쟁 등 다수의 진정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



을 갖고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 홍보물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수시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을 활용해서 중개 역할을 강화하고, 진정민원 접수시 우선으로 법령 추진절차 및 구역 현황 등 사전 설명을 통해서 2차, 3차 반복 민원 해소 등 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해결,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인후구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7월 29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추후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결정권과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에 위임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기반시설의 중도 이하의 도로와, 초·중·고등학교, 공공공지,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도 관철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8일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 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래내 복개도로 맞은편 지역을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61개 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2005년 3월과 2005년 12월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 예정지구 지정(안)을 정하였으며, 2006년 4월에 14일간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모래내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다음은 모래내 시장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장 주차장 진입로와 주차장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연성, 노점상 영업시간 동절기 상향조정, 상가번영회 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점 입점과 신 유통업체의 확산과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우리 고유 유통업 및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해오던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비와 햇빛 가림시설과 상가 리모델링 및 재래시장 이용의 제일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을 2005년 도 5월에 완공한 바 있으므로,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시설 확장에 대해서 주변여건 및 주차 수요 등을 감안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통로의 노후된 아케이드 재설치 및 통로 재포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대형점 등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 대학 개설 운영,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등 시장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의 유연성과 노점상 잠정 허용 시간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내시장 부근의 주차단속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감안할 때 시간 조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주요 노선과 상습 정체 구간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특히 모래내시장 부근은 재래시장 상인과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이중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17시에서 20시까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교통 서포터스를 통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래내시장앞 대로변인 모래내 큰사거리에서 인후동 전북은행까지 250m구간에 대해서 노점상 잠정 허용 시간을 하절기는 오후 5시 30분부터, 동절기는 1시간을 앞당겨 오후 4시 30분부터 허용하고 있으나, 동절기 상향 조정시 시장 내부 상가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시장 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년째 미완성 도로인 서남로 개설에 대한 내년 예산 7억원이 계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 및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로는 풍남초교사거리에서 전주생명과학고 앞 안덕로를 거쳐 연평도 해물탕 백제로까지 총연장 2.85km, 폭 20m의 보조간선 도로로서 총사업비 2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980년 중반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백제로에서 인후2동사무소, 동초등학교에서 전주교, 안덕로~인후오거리 총 1.7km에 대해서는 기개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은 동초등학교 앞에서 인후오거리 구간과, 전북생명과학고 부터 인후2동사무소간 2개 구간에 총 1.1k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동 초등학교 앞에서 인후오거리 구간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금년까지 22억원을 투입하여 60%정도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용지보상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생명과학고에서 인후2동사무소 구간은 학교측과 그간 수차에 걸쳐 협의를 통해서 2005년 2월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본 구간 소요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로 도로개설은 이처럼 2개 구간을 완공하는데에는 약 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시의 도로개설 투자 우선순위가 그간 민원 위주의 소로개설에 치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 위주로 투자되어서 본 노선의 완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남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도심 차량의 우회소통 기능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0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변아파트와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 단지 도로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장도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본 노선은 기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구역내에서의 도시계획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확장 구간의 토지 및 건물주의 80%이상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주변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서남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선변아파트 삼거리에서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단지 앞까지는 830m 중 270m 구간이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전라초교 및 동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혼잡이 극심히 우려되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와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도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혼잡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진출입에 완화 차로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등을 설치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시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아파트 단지와 인근주민 및 학생들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은 1993년 신전주 건설계획 발표 이후 1996년 현재 개발중인 사업부지를 포함한 약 150만평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구상하였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자문 등 약 7차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1998년 한지방식의 개발방식과 87만평으로 개발면적을 확정하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150만평 전체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사업부지인 87만평에 대하여 한 지방식으로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46만7천평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민간 등으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전액 토지구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3개소는 2003년 8월 체비지로 일반 업체에게 공개입찰로 매각된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서부신시가지의 도시개발 방향이 업무, 행정, 상업중심도시로 저밀도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지방식을 적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 하는 한 우리시는 물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저렴한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의 공사추진으로 인한 학교수업 방해와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확보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내 암 절취는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거 발파, 공해, 영향권 분석 및 발파 공법 검토 결과에 따라 진동과 소음이 비교적 덜한 진동 제어발파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서 발파 작업을 할 경우 발파시마다 소음 치 진동치 등을 측정해서 안전 발파가 되도록 계속 관리를 시행하고 발파 시간은 점심시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암 절취 공사는 현재 95%이상 끝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용 건설장비 운행시 운행 속도는 2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경적 사용 금지,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있으며, 이후에도 학생들의 통행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개설에 따른 등하교 학생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제 해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학교측 노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임시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학대 지역 유물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 3월중으로 통학로의 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200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관행적인 모순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2007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6년에는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의무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등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기술경쟁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박현규의원 (효자3·4동)

▶ 전주시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우선 먼저 전주시의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6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시의 가로수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 시와 전자입찰을 한 업체가 전주시와 계약한 엄격한 규격과 수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갖다 꽂아 놓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는 주관 부서가 제각각인데다가 나무에 대한 전문적식견 부재에서 오는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가로수 정책의 실패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쑥고개길의 상수리 나무 가로수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격과 수형은 제각각인데다가 수형 상태가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막대기를 쪼른 것 같은 뿔감용이나 다름없는 나무,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린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우리시 전체 가로수 정책은 외부인이나 관광객의 전주 방문시 자칫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이후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 및 열섬 방지용 나무와 그리고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수행하게 될 차후 시민 식수 운동으로 식재하게 될 나무까지 고민하셔서 전주의 깊은 맛과 향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식재하는 모든 가로수는 녹지공원과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령과 규격, 수형 상태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식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반송까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식재 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서 전주시의 수목에 대한 나무에 대한 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의 성류굴로 가는 길은 백일홍이 약 7km ~ 8km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양의 메타스퀘어 길은 영화 촬영지 그리고 관광지 장소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열섬효과 방지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공간 확충의 휴식림도 이런 관광 상품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규도로 개설시 도로명 별로 테마식 형태로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식재를 하여야 하며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와도 연계한 가로수 식재를 하여 이를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 절약형 사회구조 구축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활성화 추진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이에 반영되는 시비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우리의 환경은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입각해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그 홍보 효과가 또한 지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너무도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기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확고한 의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청소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예입니다마는 덕진구청의 경우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년도별 판매실적이 계속 줄어서 2003년에는 565,700 l 입니다. 봉투 사용량이 이렇게 판매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20,000 l 라는 실적 현황을 볼 때 너무나 참담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대형마트 등 유통 업소와의 판매점 지정 운영에 있어 줄어만 드는 실적이 어떠한 사유로 또한

업소의 의견 청취는 어떤식으로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 시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부 등 우리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량이 10 l 와 20 l 의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여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50 l 이상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내길에 대하여

세내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내길은 동청 서곡나루터에서 금산사와 중인리로 분리되는 곳까지를 말하는데 우선 먼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있어 시장님과 그리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곡나루터에서 마전교 구간은 총 연장 1,400m에 폭 25m 도로로써 2007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827세대가 거주할 예정이며 홍산교와 마전교를 이용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전교에서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 이동교를 넘어서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입니다. 포스코 1차 아파트까지는 도로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포스코 2차에서 우림교 구간까지 전주시의 도로 정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이동교에서 호암마을 앞까지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1,918세대입니다. 서곡을 제외하더라도 인근 총 아파트 세대수는 3,745세대이며 세대당 자동차수를 1.5대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5,600여대가 이 도로를 통하여 삶의 현장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이 지역을 가득 메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전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을 통해서 교행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350m를 개설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47억 원에 기투자 5억원, 잔여 사업비 42억원중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잔여 공사비 36억원의 연차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둘째, 이 도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림교에서 금산사와 중인리로 가는 분리 지점까지의 중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먼저 전주시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는 녹지공원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수목검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주시의 모든 가로수의 녹화사업은 녹지공원과가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다른 부서에서 식재할 경우, 설계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부서나 서부신시가지 등에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의 경우, 녹지공원과에서 설계, 협의를 하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만족스럽게 식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주시의 가로수 정책만큼은 설계, 협의뿐만 아니라, 식재와 사후관리까지 전문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가로수 뿐만 아니라 각종 녹화사업으로 식재되는 수목의 규격은 물론 바람직한 수형이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수목검수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녹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관리가 식재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역시도 가로수의 관리의 식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나무의 식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체, 동 자생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산림청으로부터 시달된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 학계,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조경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신설시 테마식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각종 문화재와 연계한 가로수 식재를 하는 등 가로수 길도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주시에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가로수의 수종을 대목 위주의 녹음이 울창한 느티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였고, 작은나무 식재시에는 철쭉류에서 탈피하여 단풍이 아름다운 남천과 화살나무, 조팝나무 등 다양한 가로 경관을 조성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별 테마가 있는 대목의 가로수를 선정하자는 말씀에 저 역시 동감을 하면서, 이를 위해 제가 취임과 동시에, 2006년 1회 추경에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마련될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가로수의 경관효과, 가로 정체성, 효과적인 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로수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겠으며, 또한 각종 문화재와 연계한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배치는 주변의 생태적 환경, 역사, 장소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봉투 재사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99만 2천 리터, 2005년도에 76만 8천 리터, 올 해에는 11월말 현재 완산구 62만 3천 리터, 덕진구 2만 리터를 합해서 전체 64만 3천 리터를 판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홍보활동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나 대형매장에서 자기회사 홍보용 봉투 판매를 선호하고, 유통매장 봉투가 20원 내지 50원인 것에 비해, 190원 또는 360원으로 가격이 비싸 시민들의 선호도가 낮아 판매량이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두번째,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소의 의견 청취는 하였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유도 있으며, 유통업체에서 손님들에게 상품을 담아 주는 비닐 봉지에 업체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고, 또한 봉투를 무료로 주지 않고 일정액을 봉투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봉투가 잘 찢어지고 규격도 너무 작으며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매장 봉투는 20원 내지 5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0리터가 190원, 20리터가 360원에 판매되어, 우선 당장 가격면에서도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 여성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더불어 사는 전주나, 우리집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합니다 등의 홍보 책자와 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11시에 호성동 기린원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원 교육에 유동업체 대표자들에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권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감시단, 주부클럽 연합회, YWCA 등 전주시 여성단체를 총 망라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10 l 와 20 l 로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50 l 이상으로 제작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10 l 와 20 l 로만 제작 판매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형마트의 경우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 l 이상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확대 제작하는 문제는, 시민의 수요 조사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세내길에 대하여

끝으로 세내길의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내길은 효자동 서곡에서 마전교와 우림교를 거쳐 삼천동 비아 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7km에 폭25m의 삼천 좌안도로로서, 마전교에서 포스코 2차 APT까지 1.95km는 이미 완료되어 차량이 통행 중에 있으며, 서곡나루터에서 마전교까지 1.4km는 200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코 2차에서 우림교까지 350m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7억원이며, 이중 2006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실시설계와 일부 용지 보상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구간의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난이 예상되는 노선임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36억원도 추경과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해서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내길의 도로개설 계획과 금산사와 중인리까

지의 중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림교에서 세내교까지 1.5km구간은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2011년까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내교에서 삼천동 비아마을 입구까지 남은 1.7km 구간은 포스코에서 우림교 공사 구간 완료 시점부터인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되, 최대한시간내에 완공토록 해서, 세내길 7km의 전구간이 금산사와 중인리 노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90년에 1차 1단계가 완공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가 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1단계 사업이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0만3천톤의 전주시 하수처리 능력이 있고 현재는 약 30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계통도는 내부에 처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 그런 계통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23일 239회 정례회 개회식에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전주시와 맺은 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며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고 전주시의 근본은 소중한 우리 시민입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접하면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전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되는 것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2002년의 전주시와 전주개발과의 협약서, 그리고 2004년에 체결한 변경협약서 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분의 잘못이 협약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당시의 협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야 하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장의 명철한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지금은 도지사로서 가있는 시장께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시설중에서 상수도 시설과 함께 중요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주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불평등 협약의 문제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문제, 방류수의 부실한 처리로 인해서 전주시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부과금 부과 문제 등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으로 인해서 귀중한 전주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전주천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 의 발의로 239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전의원 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끝에 그 윤곽은 대충 밝혀냈습니다.

예상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투성이의 협약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정례회 감사가 끝나는데로 특별감사를 통해서 낱알이 밝혀내어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본 의원은 송하진 전주시장께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002년에 체결하고 2004년에 변경 협약한 전주개발과의 협약 중에 다음 사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약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려 21쪽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BTO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3단계 1차 사업만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위생처리장까지 합해서 1,2 단계 모두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로 그것도 단독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 그리고 본 의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 문제입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능력으로는 여름에 나는 악취를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시설이 실내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름이면 복서풍이 바로 송천동 인구 밀집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때 나는 악취때문에 전주 송천동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환경부과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전주개발의 하청업체인 인-바이오텍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협약서 내용에 총체적으로 수질관리 문제, 방류수의 문제가 발생됐을때 전주개발에서 책임진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없는 조항을 빙자해서 전주개발에서는 지난 6월달에 환경부과금 4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대신 내라고 역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계속해서 협약서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불평등 협약의 파기 문제입니다. 전자에 본 의원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줍니다. 공직자의 기본적 덕목은 추호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만사 신중을 기하여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협약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협약서를 보면 도저히 소신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에 체결한 변경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한 전주시 공무원이 도대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잘못된 협약은 바로 업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 협약을 파기할 용의가 있고 다시 협약을 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슬러지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에 슬러지 해양 투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 처리장을 어떤 곳에 짓는간에 그곳 주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곳에 슬러지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최첨단으로 충분하게 주민과 협의해서 정말 이해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근처에서 충분히게 운동도 하고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인지 아니면 놀이터인지 아니면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첨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의 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BTO사업으로는 3단계 1차사업만 건설하였는데, 기존 1,2단계 시설과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전주개발과의 협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기존 1단계 1일 103천톤, 2단계 200천톤에다가 100천톤을 추가로 증설하여, 1일 403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43억원, 지방비 146억원, 민자 97억원 등 총 4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2년 5월에 착공, 2005년 5월에 완공하여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사업은 2004년 개정된 하수도법에 한층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인해, 국비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91%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하여 초기 투자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공사비의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지하고, 투자비를 상환하지 않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는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 즉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정방침을 2000년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추진 방식은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검토하면서, 동일 부지내 1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사업비 회수기간과 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은 20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2000

년 11월 제174회 전주시의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시설과 증설시설, 위생처리장에 대해 관리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여 투자자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후 2001년 3월 민간투자사업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1년 3월 23일 사업설명회 개최시 대립산업 외 총 28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전주개발 주식회사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전주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 협상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 및 협상을 의뢰하여 최종 협약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위탁 운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당시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시·군중 9곳이 20년간을 위탁하였고 기타 2개 지자체는 15년으로, 1개 지자체는 10년으로 결정한 사례를 참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협약 과정을 보면, 전주개발을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뒤, 위탁기간 및 기존 1,2단계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을 포함 협약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시설은 침사지와 최초 침전지, 저류조, 탈수기동, 분뇨처리장이나, 이러한 시설은 모두 밀폐형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취발생이 미미한 생물반응조 및 최종 침전지는 개방형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1,2단계 탈수기 건물을 제외한 밀폐형 시설은 활성탄 흡착식과 와류믹스식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탈취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복합악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2005년 9월과 11월 2 회, 2006년 1월, 4월, 5월, 7월, 9월, 5회에 걸쳐 악취시험을 의뢰한 결과 악취방지법의 배출기준인 15ppm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곧장 발산되지 못하고 인근 공단이나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함께 계절풍을 따라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2002년부터 기존 1,2단계 303천톤 1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표준 활성화 슬러지 처리공법을 고도처리공법으로 바꾸고, 탈수기 탈취시설도 기존의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취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200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겠으며,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억7천여만원의 환경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전주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의 법적 기준 초과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기본배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으로 전주개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한 방류수에 대해 지난 2005년 9월 15일 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함으로써 기준초과부과금 처분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부과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주개발에 민간 위탁한 시설로서 부과금을 수탁자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회신되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주개발에 재부과하고 납부를 촉구하던 중 매월 전주개발에 지급되는 하수처리비를 상계하여 지난 2006년 9월 27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전주시의 책임 주장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공단폐수, 생활하수, 위생처리시설 등이 민간위탁 이전에 직영체제로 가동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적발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잘못으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2004년에 체결한 전주개발과의 협약서의 파기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우리시와 전주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협약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과 함께 변경협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협약 전반에 걸쳐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시설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기구의 런던협약에 의거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2003년 7월부터 육상 매립이 금지되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결정을 위하여 그간 관계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시설건축 및 자료를 수집하여 건조, 소각, 탄화, 용융방식 등 모든 방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법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친환경 최첨단 공법과 주민친화형 공법으로 1일 150톤의 처리시설을 2007년도부터 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슬러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강영수의원 (서신동)

▶ 효자공원묘지 주변환경에 대하여

효자공원묘지 주변환경에 대해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일원 127,000여평 규모로 1978년말 19,000여 기를 매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서부권 개발로 공원묘지에 인접한 서부신도시에 전복도청, 경찰청에 이어 추후 KBS 언론사 등 많은 행정관서와 많은 각급 기관이 유치될 예정이며 만성동과 중동, 장동을 비롯한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전복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으로 전주와 혁신도시를 잇는 25m폭의 관문도로가 본 효자공원묘지일을 통과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효자공원묘지가 흉물스럽게 느껴져 애항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단시간내에 개선될 수 있는 작은 사안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효자공원묘지 입구와 도로변, 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공원묘지 전체를 이어가는 도로의 길이는 대략 600m로 이중 200m는 수고가 낮은 차폐식수로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봉분이 흰히 드러나 보이는 등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그나마 밭과 산자락이 있는 400여m는 수목식재는 물론 가로수마저도 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아름다운 고장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면에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도로변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현재의 효자공원의 모습입니다.

시장께 물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 봉분이 이것은 길가에서 보이지 않도록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수고를 높이고 가로변 부분에 차폐식수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이중식재로 도로와 가까운 부분은 화목류를 식재하여 봄, 여름, 가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고, 뒷부분은 수고가 높은 상록성 식수 식재로 차폐시켜 이곳 주변이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멋진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자문과 아이디어 발굴로 적은 예산으로 조기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또한 서부신도시 등 원거리에서 석축으로 쌓아놓는 보기에 흉측하고 삭막한 쭉돌석 벽앞에 측백나무나 또는 사철나무 등 수벽을 설치하여 공원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사회 및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위탁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목별 지원사업을 구분하면 민간경상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기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 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지원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민간 전문용역 회사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써 전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민간 경상 행사 경비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40여억원으로 전주시 재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98억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이 퍼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전주시민들의 의혹스런 눈초리는 물론 불만섞인 목소리가 화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 인기몰이식 표를 의식하고 많은 단체에 힘의 논리에 눌러 일명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200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해치는 행사성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30% 이상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비로 분류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는 각각 52.4%와 18.9%를 증가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엔 송하진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쌍수를 들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받는 일부 많은 단체들이 보조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실적만 보고하는 일부 사례들이 표출되고 있어 우리 전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빌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예 산기본지침에 의하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 시장께서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봉사 실적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더욱 지원해주고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나 유사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및 위탁시설만 전문 관리·감독하는 가정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하고 지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목적에 적 부 사용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카드인 크린카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사용 의지에 대해 밝혀주시기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관리감독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효자공원묘지 주변환경에 대하여

효자공원 묘지 및 송화원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효자공원묘지 주변 봉분이 보이지 않도록 현재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수고를 높이고 나대지 부분에 차폐식재로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 도시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원묘지 차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의 식재 현황은 송화원 입구에서 전주대 방면쪽 구간은 수고가 3~5m정도인 히말리아시다와 측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기전여고에서 송화원 입구까지 약 400m가 차폐시설이 안되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수고가 높은 수종 중에 연중 미관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목을 밀집해서 식재하거나 최근 친환경 차폐시설 등도 다양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분과 옹벽 주변의 조경은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와 가까운 부분에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명소가 되도록 전문기관에 자문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현재 공원묘지 진입로에는 벚꽃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봄철 개화시에 일부 시민들이 상춘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이 될 수 있도록 식재구간 갖길 정비와 벤치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은 물론 벚꽃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진입로와 묘역 주변 진·출입로 등에 사계절마다 꽃이 피어나는 묘역이 되도록 시립양묘장의 화초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공원묘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 현 주차장 위쪽 부지를 평탄 작업을 하고 휴게시설 등을 갖춰서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및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먼저 보조금 지원시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모범적인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도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005회계년도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높고 투자비는 낮아 재정운영 상태의 심각성이 노출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전국 시단위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행정자치부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난 10월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체육대회 관련 행사비 지원액은 상한액을 정하여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매년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우는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1회성 행사나, 회원단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제외하며 (구) 정액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0% 감액 지원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등 지원계획 수립시 지원 원칙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57억원 보다 31.1% 감액된 39억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 34억원보다 11.5%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이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기초와 효과를 분석하는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과감히 지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의 건설적 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의지와 함께 지원받고 있는 단체, 의회 등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민간부문 지원과 관련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보조금지원 관리감독을 위하여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우려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어 지원신청, 심사,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감시 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제도나 기구의 유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현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 위원회는 기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입하고자 연구 검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금 통제가 용이하고, 지원단체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방지와, 보조금 정산의 용이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하게 매뉴얼을 정립하여 의회와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구성은의원 (서신동)

▶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정책과 한옥마을 정책 등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민선4기 전주시 문화정책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정책과 한옥마을 정책의 기본틀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민선3기 전주시는 전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문화정책의 큰 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 이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이 12월 6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0억 규모로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6년에서 2007년 문화관광부의 각종 선도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주시가 정책방향 결정 후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고 타 도시나 경쟁 도시에 비해 문화정책 발굴과 집행 능력의 뛰어난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과 관이 서로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자발적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자생적 문화 역량과 수행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이 만개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이 용역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의 중요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해산 되었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연구개발의 R&D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 전문가와 행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통치 구조입니다. 차제에 민간의 전문적인 문화역량을 시의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지역의 사례를 연구해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민선4기는 민선3기의 성과는 계승하고, 개선할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할 것과 지양할 것들을 평가하면서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근 민선4기의 문화정책이 민선3기의 문화 정책 중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성급하게 신규 개별사업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선4기의 문화정책 방향이 무엇이며, 전주시를 어떤 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틀거리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가 준비중에 있으며, 전주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사업, 한옥마을 주차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이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 등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우 주요한 핵심적인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을 전주에 어떻게 기여하는 시설로 만들어 갈 것인지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콘텐츠 내용과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책적, 사업적 집중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개별사업이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는 2006년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비지원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2006년까지 전주시의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인지, 2007년 반영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4기에 한브랜드과를 신설하였으나 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사업발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브랜드 TF팀 구성 등 한식, 한지, 한옥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발굴 및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산업종사자, 행정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R&D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번째,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담보와 정책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해 온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성과는 이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자랑스러운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한옥마을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책이 수행 되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손쉽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가 넘쳐나는 전주시가 되도록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 전문단체나 전문가들에게 각종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력보강,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개선, 노후된 시설 및 장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권 권역별 지역문화 서비스센터와 연계하는 문화, 복지, 청소년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각 시설들의 운영예산 증대 방안은 있는 지, 또 천편일률적인 초급수준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한옥마을에 투자된 금액은 한옥마을 문화시설 건립비 101억7천만원, 한옥보전조례에 의해 투자된 한옥수선금 18억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부자매입비 20억원, 은행로 대조로 사업비 175억원, 기타 전통문화센터건립 147억원 등 462억원이며 매년 한옥마을내 문화시설 위탁비로만 14억8천만원이 경상보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비용에 비취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부가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005년 5월 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주 시민에게 “전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별적인 이미지로는 “전통 한옥마을”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옥마을이 전주의 트렌드 마크로, 랜드마크 이미지로 급부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방문객들이 생각하는 전주의 대표적 이미지나 상징은 비빔밥 등 전통음식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옥마을 29.5%, 소리 11.8%, 전주축제 6.3%, 한지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지역 방문객들에게는 전주한옥마을이 홍보가 될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옥마을 방문객 숫자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한옥마을 방문객중 숙박자수가 2002년 10만명, 2003년 8만4천명, 2004년 8만명, 2005년 8만8천명, 2006년은 9만6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숙박시설 미비 및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의 빈약성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은 무료로 2~3시간 정도 스킵하고 지나가는 마을 좋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일박이상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한옥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테마 민박 사업개발 둘째, 음식이나 소리, 서예, 한지체험, 서당교육, 성지순례 등 체험프로그램의 연계와 기지화 셋째, 코스별 점진강, 지리산을 무진장, 마이산, 용담댐, 고인돌, 새만금의 해양문화권, 익산 왕궁의 백제 마한 문화권, 전통고택과 정읍,칠보의 선

비문화권 등 지역별,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제안하고 넷째, 고품질 공연 프로그램과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과 사업 내용은 있는지, 관련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이 한옥마을과 연계될 때, 일박 이상의 코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안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문화해설사,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여행사 수학여행단 연계 등의 팸투어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장개 총괄하여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통문화도시 조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체계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민선 4기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할 민간 거버넌스 기능을 보강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 사업인 한브랜드 사업 발굴 및 정책 수행, 경원동 도2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책사업인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 종합센터 등 테마파크 조성이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민들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계층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누리며 문화를 향유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간위탁 문화시설 예산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창조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경비의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와 수준별, 테마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옥마을의 숙박 대책 및 한옥마을 가정집 테마 민박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대한 민선3기의 일관성있는 사업 계획과 재원 규모, 테마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전문화된 문화정책, 문화관광 해설사 팸투어 계획과 일박이상의 체류 코스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Benchmark는 더 이상 Blue ocean이 아닌 Red ocean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따라가는 Benchmark로는 시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는 Futuremark시대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최초로 선도하는 전주시는 더욱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 전문가,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정책과 한옥마을 정책 등 전주시 문화정책에 대하여

구성은 의원님께서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과 한옥마을 정책 등 전주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광범

위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해산과 관련하여 약화된 연구개발 기능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당초 2004년 7월 이후,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기구입니다. 다행히 2006년 9월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단 참여 위원을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거버넌스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그 기능이 보다 확대 보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진단의 연구개발 기능 등 민관협력기능 또한 조성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승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간의 전문적인 문화 역량을 전주시의 문화정책으로 이끌어 내는 민간거버넌스 확대 재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학·민·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보가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의 자생적인 문화역량을 시의 문화정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회 외에도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원, 지역혁신협의회 문화산업분과, 한옥보존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옥마을 사업 추진시 전문가 위주의 한옥보존위원회와는 별도로 지역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한옥마을 보존협의회를 통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거버넌스의 문호를 개방하여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보다 많은 시민 및 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아직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주시의 경우는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을 위한 TF팀이 해산된 상태에서 추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타 지역의 사례가 미비한 상황이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문화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 문화정책의 방향이 정립이 안된 채 신규사업만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은 민선3기와 민선4기의 차별화가 아닌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민선3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등을 새로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공약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민선3기에는 전통문화도시의 일부 문화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었던 바, 민선4기부터는 한브랜드 사업 등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필수적인 인프라의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및 관광자원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주학과 미래문화 비전사업을 통하여 전주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주의 역사성을 제대로 정립하여 정통성의 의미를 확고히 하고 향교문화광장을 비롯한 전주교, 기독교, 불교 등 전주의 정신사적인 종교문화까지 테마로하여 전주시만이 가진 전주의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테마 문화거리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등 현대적 영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화공간 특성화를 추진하며,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시민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 시민생활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 추진되는 무형문화의 전당,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융합지원센터 건립추진 외에도, 전통한옥 건립사업과 향교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은 민선 4기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사업들이며, 민선3기에 강조한 한옥마을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문화정책 방향은 민선3기에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수립한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민선4기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오니, 우리시의 문화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예산현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비 지원액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 20억원, 오목대 정비사업 10억원, 테마관광로 조성사업 25억원,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4억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전주시 예산투입 규모는 전통문화센터 건립, 공예품전시관 건립 등에 소요된 국비 200여억원과 지방비 270여억원 등 총 470여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사업,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은 2007년의 경우 60억원중 국비 30억원이 반영되었고, 도비 15억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억원 중 특별교부세 교부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전통한옥 건립사업은 30억원 중 부지확보비 2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사업과제로 반영해서 국비로 조달하고,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브랜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형 R&D 기구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거버넌스 중요성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브랜드 관련 각 분야에 민간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등 상호 보완적으로 참여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민간거버넌스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주문화재단은 물론 천년전주 한지포럼, 전주시 향토음식식의회,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 등 기존 민간기구 외에도 한식, 한옥, 한지 분야별 민간기구로 중장기사업 발굴반을 조직하고, 이를 국토연구원의 사업과제로 연결시켜 한브랜드 정책이 인간의 역량과 협력에 기초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담보 상태인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지역문화서비스 센터와 연계한 문화복지, 청소년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내 문화 관련 시설은 6개소,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 등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으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시설간의 운영 프로그램 특화 방안, 통합 홍보의 미흡, 시설간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과 협약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문화는 물론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담당과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민간위탁시설 운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12월말까지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운영예산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규모 증대 방안은 시 민간위탁금, 즉 운영예산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문화시설 활성화를 통한 운영수익 증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증가는 앞으로 지양하고, 각 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문화시설 운영수익 증가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영위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6개의 문화시설 중 자체운영 수입이 있는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이 있는 바, 이들 수입시설들의 연도별 수입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16억원, 2004년도에 18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의 자체운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내 문화시설들이 전통문화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지 관광객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시설들의 운영수입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시설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각 문화의 집별로 개별적으로 특화하여 전문화시킬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소의 계층별 또는 근린지역의 학교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소의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문화관련 조례는 모두 14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보다 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정책 관련 주요 조례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투자비 대비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옥마을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를 추정해 보면, 먼저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연간 20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통문화를 도시마케팅 전략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바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전에는 전주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객이 전무하였으나, 현재 외국인 5만 명, 내국인 100여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통생활문화체험 관광지로 명소화 되어 가고 있어 향후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엄밀한 경제적 분석모델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용역중인 국토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류형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체류형 프로그램과 숙박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해 준 방안과 관련된 현황과 사업 내용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 영빈관 용도로 사용될 전통한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예원, 승광재, 아세현 등의 테마 민박사업을 통해 다양한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한옥컨벤션센터는 대규모 한옥형 숙박체험단지사업으로 국토연구원에 사업과제로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음식축제를 음식의 산업화, 브랜드화, 명소화의 장르로 나누어 이를 획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 제안에 대해서는 이를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2007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테마민박시설은 이미 시비를 들여 건립이 완공되었고, 한옥컨벤션센터 건립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국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것이며, 음식축제는 풍남제의 테마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고품질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 등 여타의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 예산이 필요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구성은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R&D 기능과 관련 내용은 이미 드린 답변 내용에 같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도2청사 부지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전북도2청사 부지에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문화진흥원, 한지종합지원센터, 청소년테마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화진흥원은 전시관, 상영관 등 문화시설 요소와 체험관 등 각종 테마시설 요소를 가미해나갈 것입니다.

한지종합지원센터도 한지전시실 등 문화시설 요소와 공예 체험관 등 체험 요소를 가미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놀이공원, 전시 등 청소년 테마시설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문화진흥원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회 예결위원회에 30억 증액 심의중에 있습니다. 한지종합지원센터도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3개 테마시설과 구도심권내에 걷고싶은 거리, 그리고 영화의 거리의 유동 인구를 자연스럽게 한브랜드 지원단지로 향할 수 있도록 동선을 연계시킴으로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문화시설 및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 한브랜드 지원단지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의 테마시설을 설치, 인구 유입이

정체된 구 도심권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예산 증대 방안, 인센티브, 패널리티 적용 등에 대해서도 이미 드린 답변 내용에 같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옥마을 숙박 대책 및 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정집 테마 민박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가정민박 한옥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양한 숙박 체류 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국철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노송천 복원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하여

최근 전주 노송천 공사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최근 노송천이 통과하고 있는 중앙시장 바보신발집에서 한양예식장 앞까지 200m를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중앙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의 통곡을 전하며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부당성을 본 시장질문을 통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 상가와 재래시장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중앙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노송천 192m에 있는 상가 65동에 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올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과 건물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철거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상가번영회 등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어 물류수송과 교통 소통이 원활해 상가가 활성화되리라고 오매불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주시의 매수와 보상에 협조한 것도 도로개설로 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한데 전주시의 계획대로 하천을 복원하면 상가는 양분되고 교통은 더욱 복잡해져 가뜰이나 쇠락한 중앙시장은 더욱 쇠락될게 분명합니다.

오늘 내일 도로개설만을 염원해온 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일뿐더러 1천여 영세점포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지며, 구거 복원시 과연 1천여 영세점포의 생계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거의 폭이 너무 좁아 교통대책이나 불거리



제공이 어렵다.

전주시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셨겠지만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천 폭이 최소 20m에서 최대 80m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조정시설과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 계천 양쪽에 도로를 개설 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노송천의 경우 길이가 192m에 불과하고, 폭도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이를 복원하려면 양쪽에 최소 3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 편익 시설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10m폭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복원 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노송천의 상류 물줄기는 기린봉 아파트 부근 계곡의 물줄기와 군경묘지 물줄기 등의 지류가 있으며 발원 지로부터 약 5Km정도가 복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밝힌대로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개천 양쪽으로 약 10Km이상을 파헤쳐 오수관을 묻어야 합니다.

또 오수관을 묻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받아 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데 20억원의 사업비로 이처럼 방대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면적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려면 약 수 백 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근원적인 오수처리 대책 없이는 아중저수지물과 더러운 오수가 뒤섞여 악취만 진동하는 하천이 될게 분명합니다.

넷째, 아중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전주시의 열섬화하는 하천 최소 유지 용수가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 아중천은 평상시 건천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중 저수지 물을 사서 노송천 구거에다가 갖다 붓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그대로 놔두어야만 합니다.

아중저수지의 부근에 있는 인후동, 우아동 등 10만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아중저수지 물이 여유가 있다면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푸르른 아중천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많은 행정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행정 관료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법규와 절차가 우선시되는 행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께서는 이번 노송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와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마땅히 공청회를 가져야하는데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인 중앙시장 상인들과는 단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특히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더구나 도시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송시장의 공약집을 보니까 노송천 아니라고 돈 들어갈 사업도 많고, 이런저런 사업하겠다고 많이도 공약하셨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하시고 시민과의 약속 123개 공약사업이나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송하진 시장님!

아무리 명분이 좋고, 보기에 근사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몇몇 사람 치적 세우려고 1000여 명세 상인들의 생계 줄을 끊고, 대대손손 고통을 안겨줘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시장과 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거듭 거듭 노송천 사업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소정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노송천 복원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하여

국철 의원님께서서는 노송천 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중앙시장 부근의 노송천에 대하여 복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 의견수렴, 예산대책, 도시계획도로 폐지, 복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공사의 구상 배경은 중앙시장 노송천 구간이 기존 하천법면에 설치된 석축위에 콘크리트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형성한 상가로서 1998년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 시설물인 D급으로 판정, 철거 대상으로 분류되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999년부터 금년까지 건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58억원을 투자해 철거한 후 다시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천복원 및 개랑에 있어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형 생태복원이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추진을

전제로 했을 때의 답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지역의 복개가 아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중앙시장이 쇠락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중앙시장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고뇌에 찬 많은 고민 끝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기본 동기는 구도심 활성화와 옛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는데 있었다는 점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중앙시장은 전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큰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고객을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전사주기 운동이나, 상품권 이용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해 그야말로 중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모습으로 중앙시장의 변화를 꾀하므로써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맑은 물과 조정시설,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옛날의 노송천 모습을 되찾아 주고,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될 때 중앙시장도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구거 폭이 좁아 교통대체 및 볼거리 제공이 어렵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폭이 20m에서 80m이나, 노송천의 하폭은 10m로 협소하여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하천 폭보다는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 달성에 있어서는 하천 폭의 규모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노송천은 폭 10m, 저수로 4m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유로폭과 수심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친수공간 등과 잘 어울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근시민과 상인 등의 의견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앙상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도심이 형성되기 전의 수로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도심 열섬 해소와 구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고심끝에 노송천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주변 도로는 한양예식장에서 시민약국 방향으로 폭 12m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한 노송천을 복원하면서 제방에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주변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복원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다. 노송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위하여는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지수량 확보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 전주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이중저수지 유량의 활용기능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하루에 약 5천톤 정도의 유량을 이중저수지에서 쓸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저수지의 유량과 노송천 복개구간의 생활 오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복개시설 내에 우수와 오수 분리를 위하여 분리벽을 설치해서 오수는 별도로 채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이며 우수 및 오수 분리 사업비는 재원의 5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번째로 이중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중천이 건천이므로 이중저수지 유량을 이중천으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천의 상류 구간은 이중택지 개발시 복개되어 있고, 우아2동사무소 상류 부근부터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저수지에서 노송천에 끌어 들이려는 유지유량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 8월 64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이중저수지 제방 붕괴를 우려하였고, 이를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 여수토를 낮추어 당초 120만톤의 저수량을 90만톤으로 저수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여수토에 고무보를 설치하여 초과되는 물과 이중저수지 상류의 재전저수지 수량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이중저수지에서 이중천으로 흘러드는 유지용수를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천 유지용수에는 변화나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행정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청회 및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서울 청계천 복원 성공을 본따서 노송천을 복원하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사업의 구상 단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인근주민 및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노송천 복원 기본설계 등의 용역을 계획 중인 바,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상가 주변의 주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인공물 등으로 시설한 서울의 청계천을 모방하지 않고 과거 전주의 사대문 안에 흐르던 노송천을 약 30여년 전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노송천 복원이 중앙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가의 슬럼프 우려를 염려하시어 깊은 염려를 해주신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Q 서윤근의원 (인후1·3·우아2동)

▶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꿰어 맞춘 극도의 저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근로계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사례를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었던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과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해당 실무자의 한 번의 시정과 단순한 개선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의지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한시사역 인부로 고용하고 있는 16명의 통역안내원 중, 13명이 2년에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 되어 왔던 통역안내원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계약의 체결조건과 관련없이 365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통역 안내원 등 전주시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기간의 업무수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취지를 앞세워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확대시켜 왔

습니다. 하지만 직영과 용역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위탁용역의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총비용의 20~25% 가 추가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현재의 용역계약 방식도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가 산정 시에 적용하는 인건비 자체가 노동자의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기에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마저 형식적 산정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정가격은 87% 수준에서 낙찰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다시한 번 곤두박질치며 결국 최저임금에 맞춰진 인건비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용역 입찰 과정은 노동자에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생계비를 고려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임금과 직결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과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등 위탁과 용역의 본질적 취지에 기반하여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평가 작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 청소용역 업체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의 열악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는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 시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할 것과 연 1회로 예정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주요한 평가 지표로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와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강제적 전인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적 의지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장의 철학적,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식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 권위에 대하여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도 진지한 문제 의식과 질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에 대한 전주시의 엄정한 행정 권위의 유지입니다.

공동주택폐기물처리업무 수탁업체를 확대하려 하던 전주시의 정책이 십수년 간 독점의 지위를 누리던 기존 위탁업체의 반발로 몇 번이나 무산이 되었던 일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6년간의 위탁계약기간의 만료와 전주시의 직영방침 및 재산반환의 요구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근거에 없는 21억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는 화산체육관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2월 25일에는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전주시의 화산체육관에서 옷찾사라고 하는 방송국 개그 공연이 개최됨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화산체육관 수탁업체의 대표적인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전주시가 제정하고 매년 수여하고 있는 전주 시민의장을 수여받았고 현재 수상자회의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쓴웃음마저 머금게 합니다.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에게 수상한다는 시민의장 애향장을 그대로 송기태 수상자회의 회장의 품에 놓아두는 것은 시민의장 존재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며 63만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조례의 개정이든 상대에 대한 설복이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송기태 수상자회의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시민의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먼저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왔던 통역 안내원들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당초 월드점을 계기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근로복지관리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의 지침을 받아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개 채용해서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내에, 재활용선별장은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 인부들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삼전동, 효자동, 김제시 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등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영향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지원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1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근로인부들 또한 2003년도 재활용선별장 신축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시설 가동과 관련 근로 인부를 인근마을 주민들로서 채용하기로 협의를 한 바, 주민들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마을 대표의 추천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2005년 7월 종사한 일시 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퇴직금 527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역안내원 등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 대상은 업무의 성격과 인원,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활용가능 여부,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정
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광역자치단체에 12월말까지 신청하고, 광역자치
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내던 1월말까지 승인 신청을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5월말 확정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용역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출시 생계비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인
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
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정가격 산출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 계산 제이를 적용
기준에 의해서 4대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을 산출,
합산 계상하고 있으므로 생계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부분은 재량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찰과정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
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
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
을 합니다. 다만 본 사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내지 10
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비치, 결정방법, 결
정기준 등을 종합할 때 분리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법적 해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 용역의 전면적
인 타당성 재평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제 권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 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제도개
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
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
영능력 검증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
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있
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
여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사무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입니다.

셋째로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시 수탁기관 고
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삽입과 매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협약서 표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 마련 중에 있으며, 표준안은 의원님
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
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
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2007년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하도
록 하여 수탁기관 근무자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시
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책 및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
규직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직과의 근로 조
건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왔으
며,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비정규
직의 고용 및 사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주시 비
정규직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7일 각 부서
에 시달하였으며, 금후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 조직과 인사, 예산의 통합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요인 정비 등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
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
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조정은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한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전
주시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사
조정 권한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시의
인력 형편상 새로운 기구의 설치도 어려움이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하여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회장 수상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 시민의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셨습
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의 시민의장 수상
반납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고뇌에 찬 질문이

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 시민의 장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판단을 해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의 깊은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으로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킴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산체육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소한 일을 빌미삼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 업체의 협약위반, 평가의 부재, 위탁업체의 독점화 등으로 위탁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전주시 행정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탁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안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기본권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Q 오현숙의원 (비례대표)

▶ 전주시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하여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영유아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48,663명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1,891명으로 4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512개중 62개소로 12.1%이고 개인과 가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450개소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면 2001년 7,730명에서 2005년 5,723명으로 출산율이 26%가 떨어진 반면 보육시설은 2001년 355개소에서 2005년 507개소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 현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로 인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육대상 아동수와 보육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구도심 지역이라 불리우는 중앙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인후2동, 덕진동, 노송동, 진북동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평화1동이 지역별 시설 분포에서 전주시 지역별 시설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보육정책이 전주시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시장논리에 의해서 보육정책도 지역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7.9%를 차지하는 민간과 개인이 보육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평등한 보육을 제공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7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치대상 185개중 92개 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 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보육시설에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2007년 송하진 시장의 시장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510개소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지, 전주시 보육정책에 대한 단일한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형시설은 평가인증제에 적극적이고 영세한 곳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지금까지 보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 대처하는 것에 급급하는 임시방편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일방적으



로 시행하여 보육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여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주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마련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보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지역간에 차별없이 전주시민 누구나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28,761개소로 전체 보육대상 아동 대비 36.3%입니다만은 우리시의 경우 512개소의 보육시설로 전체 아동 대비 55.1%로 전국의 평균시설보다 18.8%가 많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전주시 보육시설은 512개소에 정원이 26,834명인데 비해, 현원은 21,891명으로 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81.6%입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심 8개지역 보육시설은 33개소로 정원이 1,983명이고 현원은 1,395명으로 70.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구도심 지역 중, 중앙동, 노송동, 동서학동 등 전주시 평균보다 웃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에 장점을 키워나가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2006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설치대상은 185개소이며, 그 중에서 1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9개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44조에 의거 시정조치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시키는 등 연내에 조속하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닌 보육시설 40인 미만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특히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중인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보육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 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평가인증 진행 과정은 참여 신청, 자체 점검, 현장 점검, 인증 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개월 내지 1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14개소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98개소 보육시설이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개소당 22만 5천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원장과 보육 교사들에게 연 50만원씩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관리로 보다 나은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조력사업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보육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보육사업과 중장기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전문가, 보육시설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추진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정책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전주시 농촌동은 12개 동에 206개의 마을로 농촌 지역 인구는 약 4만명입니다. 농가수는 4,300가구에 15,000명으로서, 농촌지역 총인구 중 4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전주시 농촌동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농민들의 소박한 의견은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상하수도 개설 및 모정 정비 등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것과 농업에 희망이 없어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고, 농가인구 중 40% 이상이 60세이상 고령인구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업은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농촌동 개발정책의 예산투입 실적은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 2005년도 농촌지역 5개년 개발계획이 발표 될 때만 해도 농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농업에 매달렸는데 2006년도 99억원 계획 중 겨우 20억원 투 자에 대하여 실망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출범으로 기대감과 부푼 꿈이 가득 찼던 농민들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2007년도 계획 100억원 중 20%에 불과한 20억원의 배정이라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소외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최근 김제시, 완주군에서 편입된 농촌동 주민들은 그때 그때마다 다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가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완주군 이서에서 시작된 지방도로는 전주시와 경계인 원동 입구까지는 오래전에 2차선으로 확장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 속하는 원동은 아직까지 원동에서 전주(구)IC까지의 약 4km가 1차선 상태로서, 겨울철에 눈이 1cm만 쌓여도 버스통행이 되지 않아 고립된 마을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나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변두리 농촌동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남부시장과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조차 없어서 두 번씩 갈아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 가야 하는 불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 농촌동은 행정상 도시지역으로 속해 있으면서 실체는 농촌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도시개발계획에서 농촌동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개발 계획은 김제시와 완주군의 농촌정책과 예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6 년도 농촌관련 예산투입 실적을 보면, 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을 포함 총 108억원을 투자한데 반해, 김제시 405억 원, 완주군 300억원 투자로 3배~4배가 적고, 총예산 대비 전주시는 1.4%, 김제시 13.5%, 완주군 12.5%로 전주시는 농촌분야 투자에 인색한 편입니다.

전주시 농촌동의 이와 같은 예산 배분은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배분을 볼 때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농촌동의 열악함과 심

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농업의 5대 특산물과 쌀 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이 가격폭락이나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촌동, 동산동 등 북부권의 문화시설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 지역은 전주시 총인구 63만명 중 8%인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주시 총면적 206km²중 24%인 49k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만으로는 전주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공단지역과 전주시 식량 공급지로서 역할을 한 농촌동으로 이루어져 6,7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니 문화생활 환경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점차 낙후되었습니다. 더욱이 주5일제 실시로 주민의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었는데, 문화생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북부권지역 5만여 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부권 지역 문화시설 확충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조성사업에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북부권 지역에 도서관, 수영장, 노인복지회관 등 문화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평화, 아중 도서관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에도 도서관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 IC주변 종합 가족휴양공원조성사업의 세부계획에 농촌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수영장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월드컵경기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운동기구, 인공암벽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시설 낙후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5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이곳 북부권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민선4기째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FTA라는 무역 압력과 경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시장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시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주 시,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농촌동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발전에 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에 수립되어서 206개 농촌 자연마을의 마을 진입로 등 624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사업비 377억원의 투자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까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 재정여건상 2009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층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의 67개 농촌자연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12개마을 90억원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2007년에

도 3개마을 30억원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도 매년 5개 마을씩 사업비 50억원의 사업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동안 2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동의 미급수지역 상수도율 100% 확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5대 특산물과 쌀 등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브랜드화하는 방안과,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1999년 전주시를 대표하는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지정하고, 각종 보조지원 사업과 함께 복숭아 축제, 배 축제 등 도·농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경우, 통합 브랜드 없이 7개의 개별 브랜드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0개소 300ha를 2007년도에는 20개소 500ha로 확대 조성하는 등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단일 브랜드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도시근교 농업의 판로 확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 주변에 수계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농업단지를 2007년도에 50ha를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 문제와 관련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 구조 방안이 어떠한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 농협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유통회사 설립 문제는, 우리시 지역 농업의 특수성이나 품목, 생산량 제한 등으로 볼 때 위험 등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판로 문제는 기존 농협유통망 활용과 대형마트 내 상설 매장운영, 사이버마케팅 활용,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합을 통한 다양한 유통판매망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서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도 도서

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전주 북부권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임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심과 농촌지역, 그리고 공단지역 등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만큼은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말에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문화적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사항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이후 동별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의견 청취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북부권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확실하게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방동이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부권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서신복합센터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건립중에 있고, BTL사업으로 아중, 평화지역에도 2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에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것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큰 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지역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용역기관에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6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북부권인 팔복동, 조촌동과 동산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전주 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에 수영장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산책로와 운동기구, 인공암벽 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는 테마형 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야외 피크닉

문화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IC 부근의 총화의 탑 주변에, 시유지 약 9천평을 활용하여, 건강한 숲 조성과 산책로 개설, 운동시설과 야외탁자 건립,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 마련 등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완공시 북부권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시민 모두에게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이 건축시설물이 들어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영장은 건립위치 및 이용자의 수요, 소요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중장기 계획으로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종합체육메카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이번달 말에 완공되는 북부권 역의 덕진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나,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내 산책로는 현재 만남의 광장내 놀이마당에서 화합의 마당까지 0.58km의 경화마사도 산책로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시설 설치하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현 산책로에 산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철봉, 평행봉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외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설치사업도 2007년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위치 선정 등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적의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북부권 지역에 서신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문화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종합적인 복합문화센터 설치가 최적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여러시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그리고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용역안, 이 지역의 노후, 협소한 동사무소 신축계획, 우리시 권역별 문화 배치시설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인을 마련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장태영의원(삼천2·3동)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첫번째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여 전주시가 지난 2006년 7월 14일 확정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단 앞 좌측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아파트 숲에 갇힌 한국의 용흥지구는 최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일어난 95년 이후 아파트 사업지구 외의 소로개설 및 기반시설 투자가 전무한 가운데 지난 2002년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개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일부 소로사업 용리9길, 길이 158미터가 진행된 바 있는 지금도 동사무소 옆 구거를 중심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미비 등 삼천동 지역의 유일한 도심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가운데 마침 시행되고 있던 전주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고시된 지구를 확인한 기본계획은 이같은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정 고시된 사업지구는 도로에 접한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건축된 신규 상가건물, 감정평가액이 무려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19세대 빌라건물, 그리고 4년 전 개청한 동사무소 등 도지사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구면적 20%를 상회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비단 용흥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급변 전주시 기본계획 예정지구 여러 곳에서도 지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타상행정의 전형이라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본계획으로 그간 어렵게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업지구내에 계획된 소로개설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가 재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거쳐 중로와 연결되어야 하는 소로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1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해소 민원과 불만을 호소해온 지역 주민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시행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전주시가 95년 11월 21일 결정고시한 도로 소로 1-175호선의 중로와 접하는 74m 구간을 지난 2006년 2월 17일 축소하여 폐도하는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과 폐지 사유 등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로 폭 35m 우전로와 중로 폭 20m 삼천도서관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삼천3동에서 유일한 직선도로로 당초 길이 682m, 폭 10m로 계획되어 그중 길이 304m 주공아파트에서 남양아파트 구간은 기부채납 개설하였고, 나머지 길이 378m 소로1-175호선의 용리9길 158m는 동사무소 진입도로와 관련 지난 2005년말에야 전주시가 개설하였는 바, 연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길이 220m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로1류와 접하는 74m 구간을 축소·폐도함으로써 앞서 지적한대로 이후 확정된 재개발사업지구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더욱 훼손하고 중로와의 연결성이 상실되어 마치 사람의 목을 조르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에겐 한마디 확인도 없이, 대한민국 법과 시행령, 어느 타 자치단체 도로 조성기준과 지침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로1류에 해당하는 폭 10m 연속도로를 축소·폐도 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부서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예산투입을 통한 도로개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예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같은 잘못된 기본계획으로 도로개설 지체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쾌적한 주거환경 미비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로1-175호선을 왜 축소 폐도하였는지 이를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지난 2005년 9월 7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8월 3일 발생했던 64년만의 전주시 수해대책과 그중 독배천 수해복구 계획에 질문하였을 때 당시 김완주 시장은 회의록 참고 1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시 답변의 요지로 독배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우기 이전에 즉 올해 6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는데 막대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비, 시비, 지방비를 확보 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 복구를 통합 조정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2006년 우기안에 항구복구 완공하겠다는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올 2006년 10월 31일자로 중지 중에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 시는 중언천 복구에 20억을 투입하여 이제야 마무리 중에 있고,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방재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70억으로 연장 길이 4.43Km중에서 하류부터 전면개수 길이 1.2Km, 나머지 구간 3.23Km는 응급 현황 복구 수준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도 2006년 7월 10일에서야 착공해서 내년 2007년 9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내년 도에도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수해복구 공사와 별개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공사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연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배천은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향후 잠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삼천과 전주천의 수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광진모악아파트 간 중로 확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226회 그리고 231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각각 통해 촉구하였고, 존경하는 김주연 의원이 지난 23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또 다시 촉구한바 있는 우전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광진모악아파트간 중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연단 앞에 있는 우측의 도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7일 시정질문 당시 김완주 시장은 회의록 참고 2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5개월전 이 자리에서 시장은 “이중로의 계획구간을 다할려면 예산이 100억이상 소요되므로 우선 통학구간에 해당하는 산정교까지 30억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도, 즉 2006년도에 도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폭 20미터 중로 1-3호선이나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인도조차 확보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심각한 교통혼잡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올해 개교한 2개교의 통학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대왕장미아파트를 비롯한 현지 주민과 상가 입주자,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 살인적이고 고통스런 도로 여건에 대해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로 확장사업에 따른 필요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더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그 집행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계획된 도로확장 합시다.’ 라고 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2006년 예산에 단 한 푼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확보했다는 도비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장의 답변을 제출하고 뒷받침할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초에 본 의원이 또다시 촉구하고 김주연 의원께서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의회의 예결위를 심사를 앞두고 있는 2007년도 예산에 이 중로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였습니까?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중로사업에 대해 전임 시장의 약속을 계승하는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 및 예산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A 송하진 시장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용흥지구내 최근 2~3년 내에 신축한 상가, 빌라, 동사무소 등이 포함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흥 재개발 예정구역은 51,490㎡, 용적률 230%, 건폐율 50%, 최고층수는 판상형을 기준으로 15층, 답상형으로는 최고 25층, 평균 21층으로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용흥 예정구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예정지구내에 총 71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48동이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19세대 1동, 소로를 접해서 신축된 상가를 비롯한 기타 건축물 22동이 있습니다.

이 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69%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수립 지침이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신규 건축물들이 예정구역내에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전에 삼천3동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 11일에서 4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구역으로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흥 재 개발 예정구역내 토지 소유자 등이 주민의 총의를 모아 예정지구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지구지정 취소 절차를 받도록 하겠고, 만약 부분적으로 당초 예정지역 중 체적해서 신청할 경우 재개발의



취지나 제반 규정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본계획의 잘못된 문제로 지체되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소로 1-173, 175호선으로 재개발 예정구역 경계를 따라 총 연장 448m, 폭 10m로써 그 중 158m는 2005년도까지 3억원을 투자 개설 완료하였고, 290m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차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재개발 확정전 소로개설시는 중복투자로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흥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건이 변동이 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소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1995년 11월 25일 전주시 고시 제93호로 결정된 도로로서 총연장 378m 중 158m를 개설하고 미 개설구간 220m 중 74m를 폐지한 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제8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시장 권한 사항인 중로 이하인 도로에 대하여, 시 재정상 조기개설이 어렵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연계성, 주변의 입지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는 2005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37개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인근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가 있어서 우리시 재정형편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폐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 등 주변개발과 지역여건의 변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계획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21개소로 총연장이 94.86km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독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그간 전북도 및 지역환경단체 등 사전협의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모악산 도립공원과 관련한 자연경관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전라북도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

한 상태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독배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 중앙으로부터 당초 원상복구비 40억원만이 책정되었으나, 우리시의 노력으로 일부구간 항구 복구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70억원으로 복구토록 하는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에 관하여 소방방재청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복구계획을 승인받아, 진발들교 복구 등 소규모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으로 금년 7월 수해복구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천 합류지점에서 1.2km인 중인천 합류지점까지는 도와 사전 협의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확장 개수하고, 그 상류지역 3.23km는 피해지역과 수충부 및 마을인근 호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원상 복구 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7년 9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공정으로 볼 때 우기전인 2007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배천의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60억 원, 공사비 220억원으로 총 280억원이 소요되지만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후,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익산청 등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광진모악아파트 간 중로 확장에 대하여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와 광진모악아파트 간 중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삼천교까지는 도시계획상 중로로서 총길이는 1,500m에 도로폭은 20m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2005년 9월 7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회 답변 당시에 전 구간의 도로확장에는 약 1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에서 광진모악아파트까지 300m를 우선적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또한 도비 10억원중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으나 여의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구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투융자 심사시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도비 등 예산 확보를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41회 임시회('07. 3. 14 ~ 3. 15)

Q 국주영은 의원(송천1·2동)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 체계적 진행에 대하여

저는 오늘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시범선도사업 15개와 중장기사업 30개를 총 45개 공간 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2006년 5월 선거 당시 전북매니페스트운동본부가 203개 공약을 분석하여 좋은 공약으로 발표한 8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 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경제·사회·복지·인권·NGO 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7명의 위원이 목표의 구체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스마트 지표와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중 지속성,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성, 이행평가계획 등의 셀프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시성 대형문화 예술공간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시, 공연, 체험, 퍼포먼스, 개인 문화활동,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휴식, 학습, 만남 등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이 총 103개로 이중 완산구 60개, 덕진구 43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서부권과 우아동, 호성동의 농촌 지역은 극히 빈약하며, 삼천동은 인구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전주시의 문화 인프라는 수치상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은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수요자의 일상적인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소외지역 없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시설 중심에서 탈피,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여러 종류의 작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에 소외되었거나 참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 여가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흥시설 및 폐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수요조사와 사업 내용별 장소선정 및 운영관리 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간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고 구성성이 미비하여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 중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중장기사업의 선정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요자 중심인지, 소외지역 중심인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우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의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서곡 문화장터의 경우도 국유지라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면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 호성동사무소, 구 서노송동사무소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연령별, 성별로 분포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배치 및 사업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별 300명 정도의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수요 조사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중간 용역 결과가 보고된 상태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곧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늦추고, 설문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보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주체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관리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의 문제로 드러난 프로그램의 빈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부진, 철저하



지 못한 시설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는 높게 평가 되지만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관리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 별 특성에 따른 직영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적절한 대상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나 운영비 확보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용자 확대 등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운영을 위하여 공여지책으로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등 파행적 운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필요한 곳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시행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 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속적 운영과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인력과 역량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 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실버마당은 단 한 곳 뿐이고, 장애인에 위한 문화복지 공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사업계획에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설별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2개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여가활용 문제가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도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에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 진행과 사후관리는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와 타 시·도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과 운영실태를 통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40여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연이어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고 운영비가 없거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성과와 실패를 경험삼아 본 사업이 용역단계-추진단계-사후관리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공간의 이용 주체가 특수계층이나 문화인으로 한정되거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주민 모두가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되어 살기 좋은 전주라는 기대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 체계적 진행에 대하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서는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영주체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중장기 사업의 선정기준이 애매하므로,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추가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일상적인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기초수요조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연령대별, 성별 수요조사와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 실시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설문지나 리서치 등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서 하는 인원도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만 1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감안

한 노력이었다고 판단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동별로, 각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서 수요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본 용역 중간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은 용역기관에서 각 후보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면서 지역주민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님 등 지역 대표자 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만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러한 시설만 건립할 수도 없어서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과 시민의견, 그리고 각 동장을 통하여 다시 검토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조정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갖고 이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주체를 위탁관리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 전문성이 있도록 케이스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체계의 기본원칙은 사업이 일정부분 정착할 단계까지 시가 직접적인 운영관리 주체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시 자체 직영방식,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탁방식, 복합운영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문화복지 공간이 건립되는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 형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으며, 또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건립하게 될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은 1단계 사업후보지에 대해서 공모 형식을 통한 경쟁 운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모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단계 대상사업지 중에서 최우선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책임성, 운영능력, 협치기능 등이 보

장되어야만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민·관 협력기구인 가칭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먼저 착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시설별 모델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등 정기적인 예산 지원 의향과,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생활문화복지 시설이 건립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요금만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운영주체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된 지역은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곳으로 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복지 시설과의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였던 지역 인사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나갈 방안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을 사업에 추가할 의향은 있는지,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도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배치토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수요가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는 호성동이나 조촌동 등 8개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고, 또한 대성동, 조촌동, 동산동, 금상동, 평화2동 등 농촌지역에 고령인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Q 김남규의원(송천1·2동)

▶ 전주 한옥마을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대하여

전주 한옥마을이 한옥마을다운 특성을 찾고 사업방



향을 분명히 하여 완성도가 높아질때 경쟁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2006년 연말 한옥마을은 송년모임과 가족행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장소로 인기짱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이 동나고 잠잘 곳은 대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블로오션인 작은 공간의 한옥형 회의산업 육성과 대규모 공간의 체험 교육시설인 한옥형 컨벤션시설이 절실해졌습니다.

600만 해외동포, 외국인 원어민, 이주민, 해외동포 2,3세 등 다양한 계층의 한민족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 체험기지로써 전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지 사업의 진척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선도 그룹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63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민속촌 건립을 위해 2006년 10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시간 거리에 있는 중부권인 충남 부여 백제 재현촌에서는 7,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5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랜드마크를 이용하여 수원화성 성곽복원과 용인 민속촌을 연계하는 1조 9,000억원의 프로젝트에 민자 유치하여 주택공사와 함께 대형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동쪽인 경북 영주의 영주 선비촌에서는 1997년부터 300억을 투자하여 현재 테마민박촌이 완공되었는데 작년 연말 통계로 한옥마을보다 3배이상 체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행과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며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옥테마 숙박, 체험과 관광사업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테마프로그램, 마케팅 홍보 등 차별화시키는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수립이 절실해졌습니다. 내적, 외부적 과제를 찾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마무리 수순은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한옥마을에 투자한 건은 14건으로 553억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향후에 벌어질 사업은 8건으로 20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공간적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교동과 풍남동을 넘어서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연계되고, 4대문의 역사경관, 상업공간과 소통되는 테마거리, 문화공간, 체험시설, 테마박물관 등이 요소요소 동선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업중 세 가지 관점과 시각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관점은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을 근대등록 문화재로 2007년 7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근대 민속한옥마을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전망됩니다. 그런데 근대등록 문화재로 등록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인지 변경, 신축이 가능한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보전인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존과 보전을 적절히 섞어서 한옥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한옥보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관점은 관광객 유치의 산업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목적하에서 한옥마을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입니다. 4대 문화시설, 민간투자 문화시설, 테마 숙박, 테마박물관 등 주변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연계 개발하는 교육·체험입니다.

한옥마을은 근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화와 체험 교육의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드시설과 소프트 콘텐츠의 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투자를 어느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와 완결도의 차이는 달라 질 것입니다.

심려 있고 깊은 검색, 미래지향적인 정책판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기준 증거를 봐서 보완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위해서 꼭 선행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DB라는 것은 기본 자료를 갖다가 콘텐츠로 엮어서 자료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옥의 대표적인 대표적 인 건물들을 등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 등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6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한옥마을이 만들어진 물리적 역사와 한옥마을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의 즉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담은 한옥마을 DB구축사업입니다.

한옥마을 가옥의 그 연대, 건축의 도면, 집의 유래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더 들어가야겠죠. 본 의원은 문화경제 위원으로서 상임 위에서 여러번 몇 년에 걸쳐서 축구를 했지만 항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항상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옥 등록제에 대비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가옥, 유명인사의 명소 등을 발굴 기록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시대성을 담은 건축물과 가로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여고에 있는 두 건물이 대표적인 거리인데 거기에 전당포 건물이 있고 삼원한약방 건물이 그 당시의 시대를 잘 증명해주는 건축물입니다.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계획 이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시대성을 담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형 유지의 보



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옥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2년 전, 1년 전부터 계속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혼선과 예산투자가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사업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는 한옥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 사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 의원이 설명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많은 사업의 혼선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보조금 사업이 지붕이라든지 대수선, 소수선의 외형적인 외과수술이었다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 역할이 가능한 주거 공간, 그리고 가로경관, 간판정비 등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규제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사업을 많이 전개했는데 한옥마을에 비지원 시설이 있어요. 리베라 호텔 옆에 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하고 양철지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지붕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언발란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규제 조항으로 넣어서 전체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로의 담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은행로 경기전쪽 서쪽 담을 허물고 있는데 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개인들이 보상받아 가지고 막 짓고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나오면 은행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또 디자인하다보니 그러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 번 하고 또 철거하고 시에서 또 해줘야 하고, 이게 경관 지정이 안되어 있고 조례 지정이 안 되어있어서 범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중 거점정 비지역과 경관정비, 물리적 환경 제도지원을 구분하여 한옥보전조례의 제5조에 보면 보전 대상물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또 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이제 개정해야 해요. 사오년전, 삼사년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옥마을이 급속히 변화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은 옛날 법이다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조금 예측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개정 시기도 빨리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서류속에서 잠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둘째, 한옥마을 관광산업과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핵심 관점은 숙박시설과 버스 주차 대책인데 전주시에서는 장기과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약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 마을에 작은 공간과 한옥 대형의 컨벤션시설, 테마민박시설을 확대하는 전주만의 특징을 가지고 회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좋은 테마입니다.

각종 기업들은 회의하기를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공간을 전주로 선호하고 있고,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전주를 선호하고 있고, 600만 해외동포 기지화 사업을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전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추진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과 대형버스 주차 대책으로 주문하고 싶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관점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테마박물관 유치로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쟁력입니다. 가장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으뜸인 것이 이 분야입니다.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이지만 주제와 내용은 전주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담는 테마 박물관이었으면 합니다.

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테마 박물관을 선정할 때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로 가까이 익산 왕궁리의 왕궁 유물전시관은 200억의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유물과 콘텐츠를 채우지 못하고 텅빈 건물로 개관이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산업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외국여행에서 기본 옵션이 공연 한편을 보고 오는데 전주도 고급 음식과 공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해야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또 문화의 콘텐츠가 많고 흥부전이라든지 콩쥐팍쥐라든지 완판본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음악, 연극, 영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 예술이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산업도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와 공연이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은행로 문제, 오목대 탐방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목대 탐방로는 친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난개발 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이어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고, 자연생태와 보행자 탐방로 양쪽을 놓고 한 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고 역발상으로서 환경도 보존되고 탐방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은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돌려주는 것이고 은행로의 담장을 아름다운 담장, 벽화, 간판 해서 한국적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의 공간 미술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볼 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은행로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은행로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례도 없고 경관 보존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에도 있지 않아 가지고 파손, 철 거된 돌담장들은 제각각 정비되고 있어서 흉물스러운 상 처만 남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대조로, 은행로, 가리내 길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하고 경관조성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어서 전체를 정비해야지 아크릴로 되어있고 자기를 마음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옥마을의 최종적인 마무리 부분은 디자인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것은 조례 개정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상기의 문제점을 자문위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봤는데 하 여튼 열심히 자문하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지만 항상 나오는 작품들은 호랑이 가죽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수준이 낮게 된 것은 시행과 감리,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검증의 결과가 없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행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제도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휘어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미가 있고 여백미가 있어서 멋스러움이 살아나서 현재와 같은 돌담 미미하고 길바닥은 대리석 포장 수준으로 깔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 한옥마을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대하여

김남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선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옥마을 DB구축사업과 한옥마을 등록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의 DB구축사업은 한옥건물의 실측도를 작성하고, 건축 연도별 분류사업과 한옥마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발굴, 집과 관련된 풍속, 민속내용 채집 등을 통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DB구

축사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근대문화재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당포, 한약방, 동락원, 토담집, 탁선생 저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 건물들이 상당수 분포되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일괄등록을 추진함으로써 근대민속 한옥마을 지정을 통해 건물의 원형유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보전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는 그동안 한옥마을 콘텐츠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옥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한옥의 외관 형태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는 한옥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열공사 등의 내부 주거공간을 정비할 경우와 한옥마을 내 주요 가로별로 특화시켜 개성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 담장, 대문 등의 개보수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한옥보전지원조례 개정(안)이 입안 중에 있음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이행과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옥마을 관광산업화 관점에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이 주민들의 현대적 생활양식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임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관광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8월중에 완료할 목표표로 시행 중에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의 숙박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2011년까지 완료할 목표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에 도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생활문화 테마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여 단순한 관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테마별로 다양한 숙박체험 프로그램의 전통한옥체험은 물론 한식과 한지, 소리 등 한스타일 사업을 통합 활용하는 전주표 전통문화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통한옥 민박체험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완판본,

소리, 부채, 서예, 비빔밥 등 5대 전통 문화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오목대 정비사업 중 탐방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오목대 정비사업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편의시설, 기존 구조물의 철거정비, 보행자 관광루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중 제거, 태조로 입구 담장정비 등은 지난해 5월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인 화장 실 리모델링, 석축부분 자연석쌓기 교체, 산책로 및 탐방로 데크설치 등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난공사인 탐방로 개설은 당초 6m의 도로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4미터 폭원으로 축소하였으며, 개설구간 이 풍화암에 급경사인 점을 감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데크 부분과 난간, 기둥 등 시설물 전체를 방부목으로 마 감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한옥마을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 한옥마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2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대안의 제시와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목대 탐방로 개설과 관련하여 폭넓게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은행로 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동부시장에서 남천교까지 연장 9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한옥마을과 함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중요한 가로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옥마을보존협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에게 사업설명과 함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은행로변 담장과 대문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로변 지역주민들과 1대1로 접촉해서 철거된 노변쪽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옥보전지원조례를 근거로 보 조급 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과 태조로, 은행로, 가리내길의 간관 정비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간관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간관정비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0월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에서 한옥마을 간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금년 8 월 용역이 완료되면 간관 정비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전지원조례에 포함해서 간관정비 시행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간관정비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거 금년에 확보된 국 비 3억5천만원으로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간관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 고자 합니다. 항상 한옥마을은 물론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박혜숙의원(비례대표)

▶ 늘푸른마을 청소년 아파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지 4,536㎡, 연건평 4,098.42㎡에 가동 60호, 나동 40호로 100세대이며 규모는 12.3평형의 5층 아파트입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로 민간위탁 되었기에 그간 잘못된 운영체계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의 설립 목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있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 관내 각 산업체에 근무하는 만 29세 미만의 미혼여성 근로자로 1인당 보증금 146,000원과 월 임 대료로 인원과 상관없이 호당 2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을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남성 2인이 2일 1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임대료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입니다.

제2조 1항은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와 늘푸른 청소년 아파트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송천동에 있는 늘푸른 임대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거주 지역이 송천동이고 근무 지역은 전주시내 전 지역이며 입소자 학력은 고학력자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현황은 중졸이 2명, 고졸 30명, 대졸이상 76명, 대학중퇴 8명, 미기재 4명으로 총 151명의 고학력자를 가진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이 팔복동 섬유공단에 근무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복동 섬유공단에 다니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팔복동 회사로는 지수를 놓는 팔복동 협력업체에 다니는 청소년 4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10여명이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전주시 전 지역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팔복동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셈인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2조 2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입소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2세의 나이인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제2조 2항에서 9세에서 24세이하를 청소년이라 정의해놓고 입소자 자격으로는 산업체 근로 미혼여성으로 2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로 명칭부터 바뀌어 할 것입니다. 제20조 4항 늘푸른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연 2회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송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명의 여론조사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잘못된 운영체제와 타 시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푸른마을의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곳으로 이성 문제로 어려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주시는 여성 상담원을 통해 복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임대료와 호당 입소자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1인당 보증금 146,000원에 호당 월 23,000원과 공동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당 1명에서 3명까지 살고 있는데 100호중 13개의 호는 1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당 1명이 생활하는 곳이 13명으로 월 임대료는 23,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 13명의 입소자는 특별한 혜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명 내지 3명인 호당 임대료도 월 23,000원을

균등부담으로 생활하는데 개개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지침이나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에 호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 기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 미혼 여성들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식되어버린 족구 시설과 윗몸 일으키기, 철봉대, 앉고 싶지않을 정도로 놓여 있는 벤치 3개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길가 행인들이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고 입주자들이 이곳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기에 새로운 조립식 건축이나 아니면 1,2호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입소자 조건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 입소자는 현재 151명으로 전주시민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입소자로 확인을 할 수 없는 3명이 있고 한 여성은 퇴사하여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과 공공요금 납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입소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입소자 128명, 타시도 입소자 23명으로 청소년 아파트의 거주지 전입자는 불과 28명밖에 되지 않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17명을 제외한 107명이 타 시·군 및 도로 서울 경계에서 순천, 여수 등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지 자료에 나온 표를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입소하기 전 동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여 입소자 구비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퇴사 시 일주일 전 퇴거를 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며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게 한 원인이 전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에 전입을 하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전주시 인구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전입 및 절차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송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의 청소년아파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2곳의 입소자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아파트 바로 옆에 청소년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중 1회 체육대회, 월 1회 등반,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어려운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입주자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그래도 가까운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래집단의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주인의식이 없이 관망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첫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 체계를 수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 째,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전주시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역할을 하고 모든 민간위탁 건물 입구에 전주시의 재산이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 설치되어 위탁받은 단체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 상당한 땅값 인상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20년 이상 되었기에 근로 청소년 아파트가 아닌 직장 미혼여성들을 위한 주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워 전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를 입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더 많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푸른 청소년아파트 입소자에게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늘푸른마을 청소년 아파트에 대하여

박해숙 의원님께서 늘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를 현실에 맞도록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께서는 우리시가 비교적 소홀히 해왔던 늘푸른마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하고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문화, 체련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데 운영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에 신축된 5층 건물로서 당시 팔복동 공단지역에 다수의 섬유공장이 운영이 되면서 각지에서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서 설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섬유공장으로서 회사 기숙사가 미설치되어 근로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근로 청소년 입주가 목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이 다른 근로 청소년이 입주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같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청소년자유센터로 명칭만 바꾸어 청소년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위탁되어 온 것으로 늘푸른마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과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지침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현 입소자의 자격이 협약서의 규정 에 맞지 않으며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6년 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24세 이하의 자가 입주하여야 하나 입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입주를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3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실제 거주자는 청소년기를 지났어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목적에 청소년이 아니므로 입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협약서에 연 2회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입소 여성에게 상담과 교육을 위한 여성상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소자는 미혼여성으로 이성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하소연할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력 감축 등으로 최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담 요원을 확보해서 상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인바 청소년 이성, 폭력등을 전담 상담하여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주시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정기 교육시청소년 관련 전반 교육은 물론 상담도 병행 실시해서 청소년 고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아울러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임대료가 호당 23인 사용자와 독방 사용자의 임대료를 호당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하고 있는데 형평을 위해 협약내용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는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에 비해 노후화되어 다소 협소하나, 공동체가 생활하기에는 안정되고 청결한 아파트입니다.

입소자 1인 거주 부분이나 2인 이상 입소자 임대료 균등 납부에 대한 인상 부분은 입소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 임대료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노후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관련시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파트내 10여평에 기존 체육시설로 철봉, 배구코트 등과 벤치가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설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05년도에 36백만원으로 방수공사를 하여 환경조성을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실내운동 및 문화시설을 신축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소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쾌적한 환경시설을 갖춘 인근 솔내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과 송천도서관의 문화시설을 안내하고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입소 조건에 우리시 거주자임을 구비 서류화하여 시민 의식을 갖게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1항에 의거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입소시 당연히 각종 구비서류와 전입한 주민등록초본도 포함 제출하여야 함에도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입소자 151명중 전입자 28명, 전주시 거주자 17명을 제외 한 106명에 대해서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신규 입소 시에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 수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연령 24세 이하에 근거하여 입소 대상자 연령의 기준 규정과, 총100호로 호당 12.3평에 2개방으로 구성되어 2인이상이 거주가 가능함에도 1인 거주하는 곳이 13명인데 대해서, 호당 월임대료가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를 개별 납부로 인상한 부분과 입소시 주민등록지가 거주지에 전입 신고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현실에 맞게 민간위탁 협약서와 관련, 운영지침에 명시해서 운영 체계를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전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시의 재산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 48개중 시설위탁이 38개, 사무위탁이 10개가 있습니다라는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인양 관리를 소홀히 함은 물론 이용자

에게 소홀히 대함은 물론 이용자는 시의 재산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시의 재산임을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본 건물은 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16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재개발 시행은 아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비 계획은 현장을 면밀히 세밀히 조사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체계 개선으로 14명의 대기자와 더많은 미혼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거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Q 송경태의원 (비례대표)

▶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의 대책에 대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년전주 도약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55억원을 투입, 교통안전시설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8일 전주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교통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알 찬복지 전주를 정책 공약으로 5대 공약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교통 복지 정책은 소외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상시내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법에 의거 한 대만이 비정규 노선에서 순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766대중 4.4%인 339대가 서울 시내를 시내버스가 정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도 투입되어서 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노인, 임산부, 이동도 별개 노선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

에 투입되어서 같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전주시내 861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중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52.6%인 453개 승강장 중에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비 또는 눈을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용변기 및 소변용 좌변기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있을 뿐 5개의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용변처리 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통이용약자들에게도 이러한 편의를 도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번째, 전주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교통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53억을 들여서 1,2 단계에 걸쳐서 완공하였습니다. 132개 승강장 단말기에는 문자 크기가 적고 음성지원 프로그램이 불능하여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바보상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안의 단말기는 23.6%인 94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안내 방송과 목적지 예정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 안내방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쪽 부분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교통이용 약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 안내방송 서비스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되어있는 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거리 주변에서 32대의 시내버스를 조사한 결과 38%인 12대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안내 방송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복지정책과 교통이용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에 대하여

이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에서 2010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 면접 인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각각 41명, 93명, 107명인데 107명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샘플 수로 전주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욕구 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2.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부문별, 연차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 2007년도 사업계획에 어느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특히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

▶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의 대책에 대하여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교통이용약자 교통편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규노선에 저상 시내버스를 50%이상 교체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 업체에서 총 39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 1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버스 1대, 서틀버스 1대와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아직은 열악한 현실이며 또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 등 저상버스의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시행과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861개소 중 관련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정류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유개



승강장도 453개소에 불과, 교통이용약자 및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861개소이며 이중 453개소는 유개승강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치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3월중에 수립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는 올해 확보된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개소의 유개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설치함으로써 교통이용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또한 음성신호등 및 점자블럭 설치 등을 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의 용변기 설치 문제는 현지를 확인하여 설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36개소 승강장의 안내 단말기의 음성지원과 문자 확대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차내 안내단말기 미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에 음성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나, 도로변 소음 및 버스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 음성안내 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모니터는 LCD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식별이 용이하나 저시력 어르신은 이용에 불편한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라는 교체하는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자 크기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내 안내단말기 설치하는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승강장 안내기 500개, 차내안내단말기 410개 등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분석 및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내버스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버스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작동 미숙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시로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등 음성 안내방송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과 가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량과 운송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에 대하여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료 신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 면접인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통계에 활용된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둘째로 욕구조사 활용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조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2005년 12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기초로 2006년 4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청회, 공고 등을 거쳐 2006년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수립된 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의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만일 욕구조사에 활용된 수가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조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2004년 전주시 인구 624,260명 기준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각 10개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상별 인구의 0.2%를 일률적으로 적용, 표본인구 1,30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일반시민 639명, 여 성418명, 아동청소년 107명, 노인 93명, 장애인 43명을 선정 제 1단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의 수가 적게 선정되었던 것은 인구비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더욱 해당 인구집단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2단계 표본 집단 심층 면접에서는 노인 4명, 여성 10 명, 아동청소년 14명, 장애인 15명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와 용역 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의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자료가 전주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 해주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부문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2007 년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사업에 본 계획이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2007년도 우리시 전체예산 8,464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1,892억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258억원 15.8%가 증가된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포함된 102개 사업 7천6백8십6 억원 중 사업시행 1차년도인 2007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2개 사업에 1천8백3십8억원으로, 2007년도인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60개 사업에 2천5백3십3억원의 당초 1차년도 사업계획보다 69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을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부문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사업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경태 의원님의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이명연의원(인후1·3·우아2동)

▶ 조선왕조실록은 전주에 보관되어야

지난 1월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전주 경기전을 방문하여 “보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기전에 태조 어진을 전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조선왕조 왕실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 고궁박물관은 당대 최고의 유물들을 집약해 놓은 박물관이며 태조 어진을 고궁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국가 중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전주 경기전에 보존시설이 미흡하다면 국비 보조를 통해서라도 보존과 전시시설을 철저히 갖추어 주어야 마땅한 시점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를 외면하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년고도 역사, 문화가 숨쉬는 전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전주에 와야 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주에 오세요”가 아니라 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노력 중 한옥마을을 정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몇 가지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외교, 군사 및 그밖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로써 1997년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만이 소중한게 여기는 우리만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록은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을 말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실록은 1413년 태종13년 편찬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1426년 세종8년 정종실록, 1431년 세종13년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3대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내사고 서울의 춘추관, 나머지 1부는 외사고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으나, 보존이 어려워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증설하고 다시 2부씩 더 등사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592년 선조25년 임진왜란때 춘추관, 충주, 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 실록만이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장산으로 옮겨져 병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규장각에 소장된 정족산본 실록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의 원본 실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실록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며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도쿄대에 보관되어오다 지난 2006년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왔던 내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될 때 그 존재 의의와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이며 우리 전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존할 수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이 전주에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가 시장게 묻겠습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등 다른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맡겨놓고 방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주에서 되돌려 받아 경기전에 보관 전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 25일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태조 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 위원회 이외에 이에 대한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시청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작된 영상물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록을 춘추관 및 전국 5대 사고에 분산 보존하였고 현대의 국가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 설립과 함께 추진되었 으며 1969년에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1984년 11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1998년 7월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서울사무소 개소 2004년 5월 국가 기록원으로 기관명을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주사고의 역할이 지대하였고 오직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에서 보관되어온 조선왕조실록만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중요하고 크나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남고산성은 통일 신라시대의 석축산성으로 901년에 견훤이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며,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때 전주부윤 이정란이 왜군을 막기위해 수축하였고,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에서는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주타워를 설치하여 전주의 뿌리를 찾아내고 관광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에 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민속촌이 아니라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민에마을을 조성하여 기능 보유자가 상주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민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장, 그리고 민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민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한다면 명실공히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 해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개발 가능한 많은 관광 자원이 우리 전주의 역사안에 있는데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전주의 문화유산을 전주에서 보관하고 전시만해도 후손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조선왕조실록은 전주에 보관되어야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서는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의 전주 보관 그리고 남고산성의 전주타워 설치 및 민예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관광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우

리 전주경기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 태조어진 봉환 및 조선왕조실록 반환 추진위원회 이외의 또다른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제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선왕조실록 반환은 우리 전주의 입장에서 정말로 의미 깊고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서울 대학교 박물관인 규장각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물로 지정된 왕조실록은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이관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가 역사적으로 실록을 보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전주 반환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우선 전주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의 영인본을 제작 보관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조어진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출되어 서울 정재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도 10월까지 보수 수리 중에 있습니다. 태조 어진의 봉환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이달 초순에 서울의 고궁국립박물관장을 만나서 경기전 유물전시관 및 태조 어진과 관련한 협의를 제가 직접 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새로 부임한 전주국립박물관장을 만나 어진의 전주 반환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태조 어진의 보존 보수가 완료되면 문화재청과 협의, 향온·향습이 구비된 전주국립박물관에 보관한 후, 완벽한 시설을 갖춘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이 완료되면 경기전에 영구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던 조선왕조실록 피난길 영상물을 관광객을 위하여 제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사고본의 조선왕조실록은 1473년에서 1592년까지 전주사고 실록각에 보존되어 오던 것으로 이후 병란을 피해 내장산, 해주, 묘향산 등지로 옮겨 다니다가 1660년 강화도 정족산 사고에 보존되어 우리민족의 수난과 함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의 피난길에 관한 영상물 제작은 실록 영인본의 전주 보관에 맞추어 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우선 경기전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전주사고의 부활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전주지소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기록원의 전주지소 설치에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2001년도에 변경되어서 정부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고, 1984년 설치된 부산지소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 전반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법률이 2006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기록물관리기관이 유치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로 기록원 전주지소 유치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지소 계획 여부에 따라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후백제 성터복원 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를 상징하는 전주타워를 설치, 전주의 뿌리찾기 등 상품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후백제의 도읍지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후백제 문화의 재조명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건물지 발굴 등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동고산성은 금년에 추진중인 성곽발굴조사와, 아울러 그동안 수집된 각종 고증자료를 토대로 현재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고산성 인근에 전주타워 건립을 통한 관광 상품화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남고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문화재청과의 협력이 우선 되어야 하고 주변 환경문 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전주타워의 건립의 필요성과 재원, 위치 등에서는 전주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번째, 기능보유자가 상주하면서 공예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고, 판매하는 가게가 어울어진 전주만의 민예마을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통문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전통공예 관련 육성 브랜드인 천년전주 명품을 개발하여 올해 4월중에 브랜드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공예 공방촌과 공예품 전시관에서 상품의 발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고 실현하는 명인 명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의 전통공예를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의 공예공방촌을 전주 공예명인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중 공예분야의 명인 9분을 모시고 전시와 체험을 연중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통공예인들이 모두 모여 민예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용역중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전주의 공예 관련 무형문화재들과 국토연구원의 용역담당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 공예인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통공예인에 대한 예우와 관련 사업은 반드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실시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주민예마을 조성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인 우리 전주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도시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이명연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Q 이원택의원 (평화2동)

▶ 전주시 공원정책에 대하여

오늘 본인은 전주시 공원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 7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그에 따른 요금의 부당함을 제시하여 건교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2월 22일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45개로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체육공원 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원시설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133개소, 놀이시설이 설치된 134개소, 체육시설이 설치된 134개소입니다.

전주시의 공원정책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자연공원인 기린·산성·삼천·천장·황방산은 76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기린공원만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31개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에 걸쳐 조성되어 왔는데 21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 108개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집중 조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전주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의 양적 성장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요에 대한 공급 차원의 조성이 아닌 생활권역별 주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된 기능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기능을 조정하여 테마, 주제, 역사, 레포츠가 있는 공원의 조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린공원은 대체적으로 동별로 대략 1개씩

있고 어린이공원에 비해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시설은 주제나 특징이 없는 어느 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보조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생활권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건강과 레포츠를 특색화하고 집적화하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로 근린공원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웰빙차원에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하면 지압길, 황토길 등을 걸으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공원과 레포츠 차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시설을 확충한 레포츠 공원 조성이 생활권역별로 필요합니다.

시장께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동별로 다수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어린이 전용 공원은 없고 청소년과 중장년 체육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뒤쳐지는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어린이 전용공원, 어린이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주제공원을 새로이 신설해 가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정책을 펴 왔다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제공원, 즉 테마공원을 검토해 가야 합니다. 역사·문화·수변 공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에 뿌리와 자궁이 있고 시민들이 편안히 즐기고 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을 유적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송제 등을 수변·생태습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1938년 유럽아파트에서 출발하여 61년 마포지구 도화주공아파트, 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본격화되면서 70년대, 90년대를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공동주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주거 공간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성장은 초기엔 돈 많고 특혜받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90

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2002년 자치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보급율 63%, 공동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70%가 넘어졌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특혜와 돈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진입경계선까지로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CT박스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2004년 12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공포됨으로서 부족하나마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법률,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주거수단이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발빠르게 200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저평형 아파트 개보수에 연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18평형 미만 아파트에 파손된 분에 한해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협력자로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전주시 행정의 협력자로서 또 동별, 권역별 지역별 공동체 형성의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은 시골 동네를 운영하듯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운영, 하자 등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의 접수와 처리, 법률과 규약에 따른 유권해석 능력의 강화, 아파트 하자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육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또 선진화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공동주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달할수 있는 윈스톱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의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게시판 게재 및 방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 기능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의 기초

연락과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제대로 더 잘 되도록 공동주택 분리배출 담당자를 두어 항상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 벽면, 옹벽, 옥상녹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특례를 통한 여유 조정면적의 주차장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파손분 교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살림살이 및 주민편의시설에 증가에 따른 보관 차원의 창고나 통합경비조소 신축 등 건축수요에 대한 용적을 적용의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으로 폐목화된 부분을 수거해서 톱밥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15년이상된 저평형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서로 믿고 양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활단위별로 지역공동체, 전주시 전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동별, 생활권역별 전주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문화축제의 지원과 활성화, 우수아파트 선정과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대응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전주~동서울 간 고속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전주시 소관 행정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고속버스 동서울 노선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노선의 변경을 시장께서 조사하여 전라북도과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촉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전주시민이 동서울



을 이용하거나 동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고자 할 때 현재의 노선은 전주 - 대전 - 중부고속도로 - 동서울 톨게이트 - 강일 - 강변도로 - 올림픽대교 - 동서울터미널로 거리는 총 245.6km이며 일반요금은 12,900원, 우등요금 은 18,900원, 심야요금은 20,800원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주-강남고속터미널간 고속버스노선은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강남터미널간 노선으로 변경되어 시간단축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서울 노선은 변함없이 과거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 노선을 전주-천안논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판교-서하남-올림픽대교-동서울터미널로 변경할 경우 거리가 총 208.42km로 약 37.2km를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8일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 자료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 고속버스 운송요율의 변화 과정이 다 나와 있고 킬로미터당 단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1km당 78.21원으로 인상했으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 요령과 2004년 건교부 국가교통정보자료에 의거 이 자료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주-동서울터미널간 노선을 변경할 경우 표4를 살펴보면 약 연간 7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002년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003년, 04, 05, 06년, 그리고 2007년 2월까지를 손실총액을 계산하면 27억여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이 노선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 많은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적정 노선을 택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부담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장께서 조사를 지시하여 건교부와 전라북도에 시정토록 건의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표1에 현행노선, 표2 고속버스 운송실적과 건교부 국가 교통 정보 자료에서 연간 전주와 동서울간 노선을 이용하는 인구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2003년까지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3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고속버스 요금에 변화된 시점에 요금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표4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민 손실금액 총액 27억2천7백만원 정도를 추산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공원정책에 대하여

먼저 우리시 공원정책과 관련해서 테마 주제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근린공원을 건강과 레포츠 공원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은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활기 찬 도시생활 공간 확보와 시민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31개, 어린이공원 108개, 묘지공원 1개 등 145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대부분 80년대와 90년대에 공원의 규모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웰빙과 레포츠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공원별 테마공원조성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방안이 공원관련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원 전반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및 공원의 기능,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과 테마별 공원으로 분류, 공원조성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생활권별로 근린공원에 지압길, 황토길, 인라인스케이트 시설 등 건강과 레포츠를 위한 공원조성은 타당하고 현실성 있고 건전한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규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지압로, 도깅코스 등을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실시 시설도록 하겠으며, 기 시설된 근린공원도 권역별로 공원의 규모와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테마를 설정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적화한 전용공원, 어린이 테마별 레포츠공원으로 기능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을 이용성과 현실성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집적화한 전용공원과 테마별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시 108개 어린이공원 중에 일부는 어린이공원에 성인 체육시설, 즉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공원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 성인시설이 혼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어린이 공원의 이용실태와 이용 계층이 요구하는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급변 용역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공원별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을 역사인물 공원, 수변, 생태습지공원 등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천년전주를 빛낸 역사인 인물과 사적의 유물이 남아있는 기린공원과 산성공원 등에는 사적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자원을 배경으로 한 고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송천지구, 서부신시가지, 완산생활체육공원 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역사유적이 발굴된 지역은 문화재의 가치성과 보존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테마가 있는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오송제 등 소류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평화동 지시제의 생태습지조성과 같이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여 수해 침수를 예방하며, 소류지와 하류 실개천을 복원 해서 도심 열섬화를 해소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기인 금년도에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공동주택 행정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형성과 행정의 결함 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교육과 민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정 역할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법과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의 관심 및 관련

규정 인식부족으로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상,하반기로 주택관리사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업체 등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공동주택 분쟁 민원은 주로 건물 보수에 따른 업체 선정과 하자보수 등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1차적으로 구청의 공동주택팀에서 분쟁 발생 초기에 관리조정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초기에 분쟁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민원사항은 시 분청에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해결토록 되고 있어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민 홍보 대책, 행정서비스 확대, 음식물 분리수거 관리, 녹지공간 확보 등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 모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주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게시판, 구내방 송, 공동주택 홈페이지 등 가용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입주민에게 시정 정보 등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등의 시범 사업은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도우미 파견사업과 사회복지 직원들의 현장업무 강화사업 등 다양한 방안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활용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에서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와 원천 감량이 요구되는바, 통장인력 순번제 활용 등 을 통한 관리감독에 앞서 배출량 비례 요금제를 도입하고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병행 추진하여 분리수거율 제고는 물론 시민 자율 감량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역 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민선4기에는 천년전주를 푸른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시 법적



조경면적 이상 녹지 면적 확보와 벽면, 옹벽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공공부분 녹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노력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 조정면적의 주차장 용도변경은 현행 법령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택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가 가능하나 도심 열섬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행위허가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 신축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율이 강화 개정된 사항으로 용적율이 초과된 기존 아파트만 특례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법개정 취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경우 신규 배치는 물론 파손분에 대한 교체도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이 부여된 바, 수거운반업체의 귀책에 의한 파손 등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협약시에는 그간의 연간 파손분에 대한 교체비용을 원가 산정시 반영하여 수탁업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내 전지작업 후 부산물 재활용 방안 에 대해서는 톱밥 생산에 적합한 원목의 굵기는 10 내 지 30cm가 적합하며 현재 전지작업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은 고사목이나 잔가지등으로, 톱밥으로 생산하기에는 불가합니다라는 향후 톱밥 생산에 적합한 전지 물량이 배출될 경우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형평형 단지의 관리비 지원은 2005년 6월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2006년까지 53개 단지에 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도 3억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60㎡를 85㎡이하까지 확대하는 주택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신규 시책 사업으로 결정하여 2001년 3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체문화 육성 사업과 우수아파트 시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아파트간 경쟁과열로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사업이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재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예상됨으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TF팀이 구성된 만큼, TF팀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시화와 함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70%이 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함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종합민원센터 전담팀 구성 방안 에 대해서는 구청 공동주택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지원 TF팀을 2007년 3월초에 구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정책을 정립하여 시책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주~동서울 간 고속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고속버스의 전주와 동서울터미널간 운행을 중부고속도로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전주시민의 물질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도록 건교부에 시정하는 등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서울간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와 동서울간의 고속버스 운행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와 동서울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1일 3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비록 노선조정 업무가 우리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해서 노선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장태영의원(삼천2·3동)

▶ 전주시 인조,천연잔디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인조 천연잔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인조잔디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가장 먼저 준공된 덕진체련공원의 인조잔디축구장 2면, 이어 2005년 7월에 준공된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면, 혼합구장 1면과 완산체련공원에 2006년 6월 준공되어 유일하게 국제 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하반기에 주차장 및 부대시설 완공후 일반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는 용도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일상적인 관리 또는 정기관리 등 유지사후관리가 전무하고,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기간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제품선정 과정의 공론화나 사후유지관리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인조 잔디축구장의 유지관리는 천연 잔디 관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잔디의 미관, 경기시 최적조건, 안정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빗질(브러싱), 이물질 제거(크리닝), 고무칩과 규사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덕진체련공원의 경우 준공후 단 한 차례도 이같은 관리를 한 사례가 없어 이용시간을 고려할 때, 운동장수명이 급절로 판단될 정도의 육안상 보아도 잔디파일 길이 50mm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mm 설계와 설계 반영된 내구성, 부상방지, 자외선 변색, 충격흡수력, 수명에서 월등 한 P.E(폴리에틸렌)재질을 시공 시 P.P(포리프로필렌) 재질 제품을 시공한 문제, 그리고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당 초설계 반영되었던 네덜란드 데소사 제품을 국내 시공설적이 전무한 이탈리아 리몬타사 제품으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시 인조잔디 시공사인 에스콰이어 건설이 이 두 제품의 현지 대리점이었다는 사실에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작태였다 이렇게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다목적구장은 이미 잔디파일의 카페트 현상이 심각하여 운동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하 여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무칩 충전재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 라인 부근에 시커멓게 쌓 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합구장은 모든 면적이 카페트 현상으로 페타이어 고무칩이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 상

태는 거의 맨땅 과 닮은 그래서 충진재로 사용되 었던 모래가 허영게 노출되어서 이것을 쓸어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 부가 작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 하고, 도내에도 초· 중· 고, 대학교, 자치단체별 인조잔디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잔디파일 먼지와 고무칩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에 매우 위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런 지적에 맞춰 관련부처가 언론에 언급된 발암물질을 관련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유해 물질을 포함해 인조잔디에 대한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 페타이어 고무칩 사용을 취소하 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올림픽공원, 도내 우석대학교,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FIFA에서 공인한 단일구조섬유(Monofilament) 재질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칩, 친환경적인 코팅된 그 린고무칩을 사용하고, 측면 배수공법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이고 FIFA 인증 구장을 설치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백억의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체육시설과 인조 잔디구장 사업과 그 유지관리에 10년 아니 5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전주시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과 장비확보 계획,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중체련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페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잔디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잔디면이 요구되는 월드컵 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 (Kentucky blue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 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1억 5천, 6천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지형 잔디관리 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 관리용역의 필요성을 앞세운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관리비용 구조와 일반적이고 관행 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장비를 갖춘 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강화하여 좋은 경기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월드컵경기장 개장 당시에 형식적인 잔디관리 장비들을 갖추어서 그 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관리업체에서는 인력 1명을 파견하여 관수, 제초, 시비, 방제, 배토, 롤링, 에어레이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에 따라 인력을 일부 중원 투입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2003년도에 용역을 도급한 업체가 이후 울산, 김제, 전주에 소재한 업체가 도급한 용역을 하도급하여 관리한 의혹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잔디관리 용역은 당연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중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와 제주를 제외한 8개의 월드컵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잔디 생육조건을 강화하는 관리노하우가 가능한 전문 관리장비를 보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직영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인조,천연잔디 관리에 대하여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인조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는 인조잔디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및 장비확보 계획과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잔디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조 잔디구장은 덕진체련공원의 축구장 2면, 아중체련공원의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완산체련공원에 1면이 있으며 천연잔디구장은 월드컵경기장 1면과 종합운동장에 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구장의 일반적인 관리는 인력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질 등을 실시하여 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2-3년 주기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빗질, 이물질 제거, 고무칩 및 규사를 재충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인조구장의 경우 1년에 1-2회정도 시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3월과 2006년 9월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칩을 충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중 인조구장의 경우 2005년 11월에 고무칩을 충전한 바 있으나, 관리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풋살구장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 인조잔디 관리대책으로는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체육인과 시설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타 지자체의 수범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인조구장이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고

무칩 살포와 빗질 등을 위한 기계는 고가제품으로서 타시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중체련공원의 부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설시공으로 지적하신 아중체련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인 다목적구장과 혼합구장 시설의 잔디과일의 카펫 현상이 심하여 운동시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부상의 위험이 있고, 고무칩 충전제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구장라인 부근에 고무칩이 일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고무칩 충전과 빗질 등 시설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페타이어 고무칩을 친환경 천연고무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인조잔디 및 기존 인조잔디에 고무칩을 충전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 해서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천연 잔디관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잔디면이 요구되는 월드컵경기장은 캔터키 블루그래스,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로 구성된 한지형 잔디로 써, 다층지반구조를 고려한 과학적인 잔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월드컵경기가 끝난 2003년 이후부터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대한 용역은 초기 입찰시 한지형 잔디를 관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입찰조건을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과 상관없이 전라북도내 소재한 조경업에 등 록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지형 잔디를 관리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로서는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7년도에 다시 한지형 잔디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에 따른 장비는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조성 당시 구입한 것으로 잔디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로써 이후 보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한 전국 10개 도시의 잔디관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곳은 대구, 제주 2곳이고, 우리시를 비롯한 부산, 제주 3곳이 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과 수원 등 5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

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시 직영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서 잔디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예산 등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권정숙의원(비례대표)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005년도 완산구 60,875건, 덕진구 56,483건으로 117,358건을 단속하였으며, 2006년도는 완산구 71,250건, 덕진구 52,401건으로 123,651건을 단속하여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건수의 증가 수치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모든 도로가 불법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점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주변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짜증스런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현실이지만 준비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확실히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체험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속행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계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질서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2007년도 전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 1년차에서 4년차로 15,928명이며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는 29,380명입니다.

45,308 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시간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민방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음식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현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과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 체험 및 참여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씩 2개 업체가 불법주정차 견인과 보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평의 원성이 많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업체의 업무대행에 불합리한 처리방법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심사숙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을 보완할 방법으로 견인지역에서 견인이 어려운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비용 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시 건정재정 기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도모로 한 가지의 시정을 집행하여 두 가지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완산구 7개소, 덕진구 2개소입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경 완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국민은행 앞 등 4개소가 고장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덕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지하보도 앞과 안골광장사거리 2개소는 2006년 9월부터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고장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부터는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먼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 상가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와 아산시에서는 고정식카메라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주행으로 1회 경고와 함께 2회 위반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던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업무를 기계가 대행하고 있으며 단



속 실적면에서도 고정식카메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아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 군데군데 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보면 전주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 앞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방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과 행정이 서로 의견 교환으로 많은 고민을 하여 해결되어야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고 몇 말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주실 곳은 도로변에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소들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며, 전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님들께 행정과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이 2007년도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수는 2005년도 1월 기준 완산구는 150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30명으로 2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덕진구는 2005년도 1월 기준 153명이었으나 2007년 3월 현재 125명으로 28명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사유를 분석한 결과 완산구는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 하였으며, 덕진구 역시 가로환경미화원이 16명, 청소차량 등 기타 환경미화원 12명이 정년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33개동의 주택골목 및 가로변은 청소의 사각지대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시장의 현명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과 주말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 그리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 및 참여방안 등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전주시 차량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말 현재 20만 9천여대를 넘었으며 일일 평균 70여 대 정도가 등록되고 있어, 시내 일부구간에서 노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예식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내 6개소 대형 예식장 주변에 대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4개소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인바, 이럴 경우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부족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과 참여 방안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시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시청각 교육시에도 선진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VTR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차만 견인하고 외제차나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는 차별적 견인과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1998년도부터 완산, 덕진구 각 1개 업체씩 2개 업체에서 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견인시 일반차량은 잠금장치 해제가 용이하나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의 경우 잠금장치가 견고하여 이를 해제하기 어렵고 또 한 견인 과정에서 차량파손이 발생할 경우 보상비용이 과다하여 견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차량견인 대행업체에게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고 완산구 대행업체는 2007년 11월 30일, 덕진구 대행업체는 2008년 3월 31일에 협약이 완료되므로 재협약하는 대행업체에게는 반드시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여 견인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차량 견인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과태

료가 부과된 차량에 한해서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단속권한이 없는 차량 견인 민간업체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견인 비용의 청구도 견인한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장난 단속카메라 방지 이유는 무엇이며 고정식 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도입할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3대, 2006년도에 6대, 총 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내 취약지에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1차 시공업체와 2차 시공업체가 서로 달라 프로그램 통합시 운영상 장애가 발생,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비 및 프로그램의 호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수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장난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 보수가 완료되어서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요간선도로 10개소, 유통시설, 터미널, 예식장 주변 지역 6개소, 기타 민원다발 지역 4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3차분 무인단속카메라 20대는 최신형 기기를 도입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4차분 무인단속 카메라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카메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비용이나 단속방법의 효율성, 유지관리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도로변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이 자생단체 등과 함께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2007년도 중심사업으로 추진토록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시내를 자주 걸어다닙니다.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뒤섞여 쌓여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매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해왔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아 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의 불법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과 자생단체, 주부환경감시단, 학교, 기관단체 등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1,800여 전공무원을 취약지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투기의 사전예방과 근절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부환경감시단과 동별 자생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동참을 통해서 아파트별, 상가별, 거리별, 업소별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우리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과 실정을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등과 협조를 통해서 현장견학체 협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1개동, 1거리씩 내 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전 취약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불법투기를 하는 모습이 거울이 비출 수 있도록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가꾸어 가는 정말 깨끗한 거리 조성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결원으로 주택골목 및 가로변 청소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1년도에 41명을 신규채용한 후, 현재까지 자연감소 인원 에 따른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2005년도 303명에서 현재는 255명으로 48명이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2002년 이래 9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구성은 가로환경미화원 115명, 운전원 64명, 차량담승원 7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전원과 차량담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로청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미화원 미충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2003년부터 진공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하여 현재는 12대가 주요 도로변 거리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 23명, 공공근로 6명, 자활근로 70명 등 모두 99명의 인력을 취약지 청소 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00명을 각동에 배정하여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금년 6월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Q 김광수의원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먼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서해바다 또는 동해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해쪽 투기지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으로 해양면적 약 3000km² 정도인 서해병 해역이고, 동해쪽 투기지역은 포항 동쪽 125km 지점으로 해양면적 3700km² 정도인 동해 병 해역입니다.

서해바다에만 각 자치단체에서 한 해동안 투기하는 양은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성분인 액상폐수 그리고 분뇨폐액,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을 합하여 약 300만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6년도 한 해만 해도 하수슬러지 약 5만톤, 분뇨 협잡물 약 6백20톤 정도를 서해바다에 내다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는 어패류 등이 다시 우리식단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제16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시장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제앙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로 우리아이들의 식탁이 병이 듭니다. 남이 버리니까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또는 버리는 운반비용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버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구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시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각 기초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발등의 불인 셈입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인근의 몇 개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준 광역 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시설, 치매 요양원, 심지어는 노인 관련시설까지도 내 안마당에는 안되는 소위 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 yard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반대가 심한 슬러지 처리시설을 꼭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지. 기존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과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는 명칭부터 바뀔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아닌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까지도 동서학동의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막힌채로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체가 극심하다 못해서 아주 차량끼리 뒤엉키면서 남초등학교 인근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살상이나 차량 접촉 사고가 아주 빈번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삼천동 평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주민들이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학동쪽에 흑석골 에 한 5천여 세대, 그리고 동서학동에 거산황궁이나 진흥하이츠쪽에서 빠져나오는 주민들은 사실은 차량 정체 때문에 아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 35m의 광도가 거산황궁 아파트 앞에서 막히면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현상과 신호체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수고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완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공수내 사거리 반경 200미터 이내 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그리고 꽃발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연도별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임 김원주 시장께서 이석환 전의 원님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까지는 확실하게 개설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곡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2007년 올해입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개설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고 계획이 점점 연장되면서 올해 2007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슬며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계를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매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부순환도로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떠들어서 보면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 때문에 횡단보도를 차량이 점거하면서 등하교하는 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매일아침 교통정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시급하게 공수교 인근의 남부순환도로에 의해서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해서 녹지공간화 하고 이를 삼천동의 삼익수영장처럼 로타리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면 방사선형으로 몇 방향의 로타리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전자의 의식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가 되기때문에 교통체계 운영이 상당히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구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되어있고, 지난해 시장님께서 동서학동 방문할 당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08년까지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하여

먼저 슬러지 처리문제를 지금까지 왜 방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10만3천톤을 90년도에 준공하였고, 2단계 20만톤은 97년도에 준공하였으며, 3단계 10만톤은 민간 투자사업에 의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2005년도에 준공해서 우리시 하수처리 시설은 총 40만 3천톤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일 하수처리량은 약 32만톤으로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약 150톤 정도로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를 해오고 있었으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1972년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우리시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1월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3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탈수시설 부근 약 40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설계공정의 80%를 진행하던 중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04년 12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표 20여명과 2006년 11월과 2007년 2월,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였고 수차 레 방문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 재정적 지원 기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공법 결정을 위해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7회에 거쳐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 안산, 경산, 김해 등 국내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의 슬러지 처리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로 최적인 마련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240억원으로 2007년 사업 추진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 총 31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금년 중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근의 몇 개 기초단체가 연합하여 광역차원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넘비현상에 의한 반대도 심하고 운영관리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광역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개발공사 또는 관리공단 형태의 추진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방법과 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기술적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 방법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슬러지를 기존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혼합소각할 경우 첫째, 하수슬러지 반입 처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와 둘째, 생활쓰레기와 혼합소각을 하기 위하여 함수율 80%의 슬러지를 40%정도로 건조할 수 있는 별도의 건조시설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 400톤에 하수슬러지 일일처리 50톤까지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슬러지 처리방법을 보면 일일 약 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는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재활용이나 퇴비화는 일일 30톤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속을 통한 슬러지 퇴비화 방식은 부산물을 수목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원화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우리시의 경우는 슬러지 발생량 이 일일 150톤으로 대규모 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슬러지 처리 공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공법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이 일관성이 없이 자주 변경되는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다 신중히 수립하여 사업기간 등이 자주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의 배정을 조정하다 보면 중장기 대형 사업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68억원인 대형사업으로 지금까지 185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개설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남부권의 교통해소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민선 4기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공수교 인근의 일방통행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와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을 매입하여 녹지공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서서학동 장승로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 1,560m, 폭 25m지 35m, 사업비 368억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승로에서 거산항공APT까지 연장 650m구간은 2006년 5월까지 18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거산항공APT에서 좁은목까지 910m구간은 약 183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07년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교대 방향의 장승로, 공수교 구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공수교 부근 교통섬 미조성과, 거산항공APT에서 좁은목 구간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부득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등·하교에 어려

움이 크므로 조속한 사업의 완공으로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해제 및 신호체계 변경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공수교부근 교통광장 조성 및 거산항공APT에서 산성천 구간의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각지로 절개되는 지역은 도로개설계획상 교통섬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후 공사 시행시 교통섬 및 녹지공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과 주민들의 민원 제기의 해소방안에 대해 적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남초등학교 주변 대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완료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과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21억, 2004년 38억, 2005년 43억, 2006년 20억 등 지금까지 총 185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또는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을 투입 전일연립주택에서 산성천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금년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미개설구간의 용지매입, 공사기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준공년도인 2010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중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에 대하여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 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전통예술문화와 함께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듯, 젊은이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힙합 등 댄스 위주의 서구문화를 더 즐겨하고, 비빔밥과 된장국 보다는 피자과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도 개발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최고 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6~70년대 도청을 중심으로한 중앙동 지역과 남부시장이 최고의 상권이었던다면, 이후 7~80년대는 오거리가 그 중심이 되었고, 80년,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주역 이전에 따라 우아동 지역이 최고의 상권 지역이었으며, 90년대에는 중화산지구 개발로 인하여 이곳이 최고 상권이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아중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 아중지역이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계획과 개발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최고 상권은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불거진 문제점은 최고 상권으로 있던 지역이 타 지역으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는 시점부터, 상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한때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던 구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약 300억원 이상의 거금을 쏟아 부었으며, 앞으로도 몇백억원을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주역 앞 우아동 지역의 경우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던 건축물이 상권의 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3~4억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이처럼 약 10년간을 주기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어져 현재는 전주시 최고 상권으로 아중지역이 손꼽히고 있으나, 이곳 역시 시간이 흘러 타 지역의 개발과 함께 최고의 상권이 이동될 경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각 권역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로 완산구 지역인 효자, 삼천, 평화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남부지역으로 68만평 규모의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만평 규모 이상의 효자 4, 5 택지 개발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약 100만평 정도의 규모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아가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약 280만평에 대한 택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 됨으로서 2012년도면 혁신도시가 가시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가지구 개발로 2008년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며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전주시의 지각변동이 약 향후 5~6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을 대표하는 아중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1997년이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후로도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약 5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62만평을 개발하여

이 가운데 3만2천평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였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아중지역에 투자된 우리 전주 시민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이곳이 전주시의 무관심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10년간을 주기로 여기저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는 엄연히 전주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계획과 개발에 따른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적인 과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비단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발 불균형에 따른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뒷북행정이 아닌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직 동부권은 슬럼화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주시 발전사 및 주요 상권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구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중심에 있는 아중지역은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61년도에 준공된 담수량 617톤의 아중저수지가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는 1976년 10월 8일 전라북도 고시 제 713호에 의거 아중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가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전라북도 고시 제 186호에 의거 장기미집행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등 이전에도 아중저수지 및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고장은 예향의 도시이자 맛의 도시로 아중저수지는 민물새우탕, 민물참게장, 닭매운탕 등 우수한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오래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듯이 역시 이곳은 전주 시민들의 휴식처와 안식처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며, 그동안 시가 지정한 유원지구로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유원지구에서 계획이 폐지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중저수지 동편에 약 3만평 규모의 호동골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차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1999년 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2차로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폐기물을 옮겨 매립한 곳입니다. 2000년



도 이후 이곳은 전주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립장 하단 부분의 일부토지를 전주시 양묘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활용 방안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의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제한 등에 제 2항에 의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그 토지이용을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조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체육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 이 지난 3월 8일 서울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변모된 모습을 직접 답사하고 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크게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습지, 피크닉장, 호수, 역사 초지, 순초지, 암석정원, 생태연못, 다목적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생태 복원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적 체육공원을 설치하마로서 이곳이 과연 과거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아가 서울시 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전주시의 체련공원은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2곳이 현재 있으며, 금년안에 중인체련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나, 아중체련공원은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조그마한 다목적 구장으로 이 곳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되며, 그것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순서를 현재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웰빙시대와 주5일제 근무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점차 증대되고 있고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체육단체는 배구가 32개 클럽, 배드민턴 18개, 테니스 26개, 게이트볼 71개, 생활축구 40개 등 공식적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약 4,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식 클럽까지 합하면 그 수는 약 2만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및 호동골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생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63만중 약 3분의 1이상인 20만명 이상이 이 쪽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이용할 경우로 생각되며, 인후1,2,3동을 비롯하여 우아1,2동, 호성동, 진북동, 노송동, 태평동, 중앙동, 고사동, 풍남동 등이 승용차로 불과 5분내지 10분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비단 동부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짧은 소견입니다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상권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약 4km 구간은 1일 14차례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그 위에 농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장비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가 비좁아 차량을 만날 경우 교행이 어려워 반드시 차량 1대가 넉넉한 구간에 멈춰서야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가 저 수지와 시냇가를 끼고 설치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자원인 아중저수지를 이용하여 동부권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중저수지를 중심으로 360도로 원형으로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중저수지 이용과 관련하여 독에서 저수지를 향하도록 수종골프 연습장을 유치하고, 음악분수 및 야간에 조명분수 등을 설치하마로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아중저수지와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연계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앞서 여기 모니터에도 나옵니다마는 서울의 난지도의 난지공원처럼 생태공원 및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노면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 이와같은 각종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마로서 전주 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도 예방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에 대하여

김종철 의원님께서도 도심 상권 이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해주시고,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

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역의 상권 이동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검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제가 같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중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2021년 인구 85만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2005년도에 수립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개발지역이 향후에는 또 다른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붕괴 되는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신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중저수지는 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62만평의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1998년도에 완료된 지역으로서, 주변 아중저수지와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중저수지 왜망실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도로는 기린봉 자락에 개설된 도로로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도로가 비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좋은 기린봉 자락을 훼손하지 않고는 불가함에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개설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과 저전거도로, 수중 골프연습장,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 설치 등 시민 여가생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 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으나,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한 유원지 분리 및 대부분 사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원지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서 보전을 유도 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시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신축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이용원, 마을회관, 목욕탕, 동사무소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교회장과 전시장, 식물관 전시실 중 온실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유지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 개설, 그리고 수중 골프연습장 유치,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설치 등 시민여가 생활공간조성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모색해나갈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친환경생태공원과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면 매립종료 후 20년 이내에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 식재, 조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부서에서 전문가 자문 등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할 때 골프연습장 설치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됨으로써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과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상황, 토지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생태공원 및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



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 핵심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남관우의원 (진북·인후2동)

▶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과 연수시설 확보 에 대하여

먼저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과학화와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전주시 대외 브랜드 제고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락 생활
체조라는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체조로 대변되던 체
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급중인 새천년 체조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만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체조는 전통의 우리가락 및 풍류를 담아 흥
겹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전주시에서만 50여개
광장에서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매일 참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해마다 전국에서 120여명 이상의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전주를 직접 방문하여 합숙을 하며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배워 자신들의 고장에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웰빙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
데 요가, 헬스, 에어로빅 등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은 전주시 우리 가락 생활체조를 보
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천년전주를 대내외에
알리고 생활체조의 메카로 전주를 부각시켜 최근 새
로운 조명을 받는 스포츠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새로
운 부가가치의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조가 현재 25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를 갖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우
려를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100여종의 우수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교육프로그
램 등이 우수하여 현장에서 이미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학술 및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신속한 보급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락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을 하면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자
최근 전통가락을 중심으로한 유사한 체조프로그램
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 차후 정통성 논란에 휩싸여 제주는 꿈이 넘고 돈
은 때놈이 버는 형국 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생활체조를 배우기 위해 전주에 방문
하려는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장소와 자
금 등의 문제로 해마다 단 한 차례만 연수를 할 수 밖

에 없어 체조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만 한다면 전주시의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전통의 온고지신으로 천년전주를 세우
는 '한브랜드' 중 하나로 새로운 품목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속히 저작
권 등록을 추진하여 전주시가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발상지임을 확고히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학술적 체계 정립과 과학적인 우수성 확증을 위
한 대안으로 체육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체육학적 우
수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을 설립하여 지속적
인 연수활동을 통해 전주시의 역량을 하루 빨리 전국
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생활체조를 새로운 한브랜드 상품 중 일환
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브랜
드화하여 전국에 전주를 마케팅하는 첨병으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문
하며 스포츠 마케팅 테마로 성장시킬 천우신조의 기
회로 삼아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
기 바라며,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
장님께서서는 현명하신 답변을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 낙후된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낙후된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린로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진북동 대로변에 아
크릴 수조물로 길게 조성된 전자상가를 수없이 지나
쳐 오실겁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 게 그을리고 노후화되고 불이나서 군데군데 떨어
져나간 아크릴과 부식된 기둥은 언제 무너져 안전사
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시에 황량 한 흉물로 전락하
고 말았습니다. 1992년 건물건축 당시 우여곡절 끝에
아치물과 시설물을 시에 5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기부하고 시에서 유지 보수키로 했던 상가 물이
격세지감인가요. 14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낙후된 전북 전주시의
초라한 경계면을 보는 듯 하여 본 의원의 마음이 안
타깝습니다. 서울에 용산전자상가. 부산에 한창전자
타운. 대구에 산격전자상가. 광주에 금남전자상가,
전주에 기린로전자상가인데 그래도 기린로 전자상
가는 명색이 전북 유일한 IT물류 의 집결된 상권이자
유통의 전초기지입니다.

전북에 자랑이자 전주시의 자긍심입니다. 전주시민
은 물론 전북도민, 전남의 구례, 곡성, 순천, 여수에서
충청도 서천, 장항, 논산, 공주에서, 경남 산청, 함양,

진주에서도 이곳 상가를 찾아옵니다. 하루평균 방문객은 1200여명, 차량방문은 1000여대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21개동 건물에 360m 아치볼로 85여점포에 임직원 250여명과 생계가족수 약 1000여명, 연간 매출액 약 350억정도 되며 거래처는 약 5만여곳, 컴퓨터, 영상, 음향, 전자부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장비, 정보통신공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업종이 다양하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 전주를 사랑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들의 모습에 진정 밝은 전주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 전주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 모두가 중요한 우선 지역경제의 기초인 전자상가 상권을 살려 기업유치의 콘텐츠로 육성 발전시켜 나갑시다. 또한 기업인과 IT업계, 영화제작사, 외부딜러가 많이 찾는 전주의 자긍심인 기린로 전자상가 상권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사랑 전주사랑 내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동료 의원님과 송하진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린로 전자상가를 전북 유일이 아닌 대한민국 유일의 전자상가 메카로 만듭시다. 전주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상권과 대전, 광주, 서울 그리고 인터넷으로 빼앗겼던 시장을 금방 되찾아 지역의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에 찬 확신을 하며 시장님께 다시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특화상가지역으로 조성이 충족되면 연 매출이 약 1000억원 증대되며 이에 따른 세수도 증대됩니다. 추가 고용인원이 약 800여명의 증가 예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콘텐츠 조성하고 홍보로 활용하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학교의 산·학 실습 및 견학코스로 운용이 가능하며 청장년 실업자를 위한 창업스쿨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IT와 영상, 영화,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세미나나 기업체 실무 실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벼룩시장 등 산업,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가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이 예상되는 동시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매출이 올라 세수가 증대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장년 취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며 그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고 보며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 삼조가 아닌 일석 오조 육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가를 이토록 수수방관하며 내버려뒀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것이 지역경제를 더욱 낙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 관계부서에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존재한 전자상가 물건을 활성화시켜서 진정 낙후된 내 고장 전주경제를 살리는 본 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며, 최소한 주차공간만이라도 확보한 후 단속가메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화된 물 상가를 걷어내고 심플하게 교체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우람한 가로수를 살려서 공원처럼 조경과 조명을 주며 인도도 정비해서 쉼터도 만들고 좋은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자상가의 이미지와 전주에 전통과 첨단인 포인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 합심해서 전주의 명물인 기린로 전자상가를 새롭게 만듭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전주시민은 물론 도내 각처에서 타 지역에서 이곳 상가를 찾아오는 부러움과 전망을 받는 물류 거점상가 메카로 기업과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쇼핑 상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고장 전주에 이런 상가 하나 번듯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제조 자원과 연수시설 확보에 대하여

먼저 전주시에서 개발한 생활제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제조는 우리고유의 멋, 가락, 율동을 현대감각에 맞게 되살린 유산소 생체리듬 골격 운동으로 82년 3월부터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속의 시민생활체조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내 51개소에 체조광장을 개설하고 매일 아침 저녁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현재 클럽회원만 20,000여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창작연월일, 공포연월일, 저작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저작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지 등에 문제를 관련부처에 문의하고 법률자문을 조속히 받아 추후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술적 이론 체계 정립과 과학적 우수성 확



증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해주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국 생활체조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면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술적 체계 정립과 우수성 확증을 위해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 100여개에 대한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연령별, 직업별 적응 분석과 다른 체조와의 우수성 비교 분석은 물론 개발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과 추후 개발 방향 모색 등에 대해서 관련 학계 및 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연구를 추진하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락 생활체조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의 활성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덕진 종합경기장 연습실에서 체조지도자 100여명이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연간 30일 체조지도자 교육은 물론 전국 체조지도자 강습회도 연 1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습이나 연수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별도의 연수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부지나 재정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연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낙후된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전자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특화 상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구도심 12km² 구역을 2002년에 구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하고, 2003년도에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해오면서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특화거리 등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는 구도심 활성화 대상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 자체의 노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구도심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 공간 확보 후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기린로 전자상가 주차 공간은 상가주변에 건산천 북계 주차장 314면과 상가 뒤편 시설주차장 400여평 등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전자상가 앞 기린로가 버스 전용차로로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6년만해도 2월에 중상 1명, 3월에 경상 1명, 다음달 4월에 사망 1명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단속 카메라를 2007년 3

월 7일부터 설치중에 있으며 4월중 완료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노후화된 몰상가 교체 및 전주의 전통과 첨단과의 포인트를 살린 이미지 개선, 가로수를 살리고 인도정비와 쉼터조성을 통한 문화공간 확보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린로 전자상가 몰은 199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997년 7월에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었으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1998년 6월에 34백만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노후 정도가 심해 부분적으로 비가 새고 화재위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심 주요 도로 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노후된 상가 몰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교체, 조정과 쉼터 조성, 버스 베이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 의 전통과 첨단의 포인트를 살린 전자상가 이미지 개선과 녹지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와 낙후된 전자상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남관우 의원님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서윤근의원 (인후1·3·우아2동)

▶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도감독 현황 및 전액관리제 시행 현황과 미 시행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2004년 5월 7일, 서울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정식씨는 자신의 몸에 산나를 끼었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분신 직전 외친 두 마디는 '노동탄압 중단하라'와 '부가세를 지급하라'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통계청에서 2005년도 운수업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법인 택시기사의 연간 급여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864만원으로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3년 924만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58명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



연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추어 택시현장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장시간 과 로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회사택시 10대중 4.5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의 같은 해 사고율 16.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택시의 사고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결과 수입 확보를 위한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업체의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 장시간 운전으로 이어지며, 근로조건이 나빠진 결과 미숙련 운전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더불어 소중한 시민의 발로서 실제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요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 사회적 흉기화되어 가는 교통사고율 증가의 문제, 노동부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사갈등의 문제, 사회의 막장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택시노동자 처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택시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과 행정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등 오늘날 택시의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이고도 핵심적인 방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법령의 준수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근절을 위한 기본과 최소한의 규정은 이미 법령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택시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되고 또한 적법한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고 있는데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과연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전주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택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위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전주시장은 택시의 면허권 및 지도, 감독, 관리의 권한을 각종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체장으로서 주어진 행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제한특례법을 통하여 연간 1천억원 내외의 부가세를 택시회사에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통해서 회사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전액을 운수종사자 각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소재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법과 지침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납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바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납금 제도는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그날 영업수익인 것입니다. 가령 택시기사 김씨가 하루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정해진 사납금액 2인1차 7만원, 1인1차 9만 원정도를 매일 채워야만 그달 월급으로 50만원대의 기본급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납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일일 임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급여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하고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납금제의 철폐를 위하여 택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전개하였고, 19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0년 전액관리제 처벌 기준 강화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수십년간 택시노동자를 옥죄던 사납금 제도 시행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 아닌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전체 수입에서 일정 월급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월급제 임금체계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법으로 성문화된 이러한 전액관리제가 아직까지 올곧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문제 해결의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주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껏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재에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8일,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택시

업체가 택시운전에 필요한 주유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금지와 이후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 비도덕적 행위에 숨막혀하던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전주시장의 강한 의지가 따르는 공문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든 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택시를 바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해당 집행 공무원들의 노력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전주시민인 택시노동자가 행복해지고 전주시민이 즐거워지는 전주시 택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 시개혁기구의 설치, 택시 준공영제 실시, 조례를 통한 택시지원예산 편성,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택시경영서비스평가제 도입과 우수 업체인증 및 재정지원제도와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한 전주시 택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갈 의향이 있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도감독 현황 및 전액관리제 시행 현황과 미 시행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택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반적이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사안을 파악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주시 택시업체에 대한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25개사에 1,599대로 운전자는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2항과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2004년 7월분 경감세액부터는 부가세 감면세액 전액을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건교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가세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 결과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가세 지급지연과 사용지침 위반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 5개 업체, 2006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처분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감세액 사용지침 기본원칙에 의해 사업장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감세액 중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경감세액의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경감세액은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어디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는 지금까지 8개 업체로 그간 우리시의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대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신진교통에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진교통에서 2006년 12월 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과징금 처분이 무효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5일 건교부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의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5개 법인택시 업체 중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한일교통과 완산교통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 제2항, 건교부 훈령 292호 제3조 1,2호에 의거 위반업체에게는 각 250만원과 운수종사자 91명에 대해서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일교통과 완산교통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고 남원시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정착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 급, 월평균 운송수입금, 성과수당 지급률 및 성과수당 금액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업체별 노사간 임금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에 의거 25개 법인 택시회사에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택시회사에서 근로시간 및 연료 지급량을 노사 임금 협정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이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내용을 2007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등의 부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4년 8월 31일 국회의원 발의로 2005년 2월 21일 상정되었으나 노사간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및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로 일과시간에는 교통행정과 281-2366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한 연중 국번없이 120번으로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택시경영 서비스평가제 도입 등 택시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택시개혁기구 설치, 택시준공영제 실시, 택시지원예산 편성 그리고 택시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우수업체 인증 및 재정지원제도 관련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택시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택시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혁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타도시 사례와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 등을 바탕으로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양용모의원(송천1·2동)

▶ 송천동 교통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송천동 출신 의원으로서 송천동의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천동은 현재 6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송천1,2동 20,508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오송지구에 진흥더블파크 900세대를 비롯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천2동에 센트럴 파크 988세대, 송천미래타운 400세대가 착공 입주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천동에는 총 3880세대의 아파트가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법적 차량수용 대수만 따져도 차량의 증가는 약 5000여대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송천동의 현재 차량보유대수 2만5천여대에 5천여대가 합해서 2만6천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움직일 때 송천동, 덕진동 일원의 차량 정체가 더욱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천동 시의원으로서 송천동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전주시장의 업무보고에서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계획과 도심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전주 진입로,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권과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전주권 순

환교통망으로 전주~논산, 전주~장 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전주권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를 잇는 간선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천동은 지금의 출퇴근이 혼잡한 교통을 피할 수 있는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어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신설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송천동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연장 개설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가 시급합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이 시급합니다. 성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63만 전주시민이 과연 공동생활을 시민으로서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문제를 들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하다면은 전주시민이 앞으로 몇 년 후나 또는 몇 십 년후에 전주가 천년전주의 도시답게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우며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장담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하진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미래원년인 2007년 시정방향의 핵심중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자존심을 미래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전통문화도시로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삶의 공간을 재창조해 나감으로써 천년전주 미래, 품격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정의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도로교통 사정을 여기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전주시민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결코 거리는 쾌적하고 출퇴근 시 차 동차 소통이 막힘없이 잘 뚫리고 골목골목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주차장이 잘 확보 운영되어 시민의 이용에 불편없이 잘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교통 여건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3만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209,024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세 사람당 자동차 한 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도심 도로의 여건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 리시의 도로는 총연장이 424.37km, 도로율은 16.28%, 포장률 99.7%입니다. 주차면수를 보면 9,719개소에 136,641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118,615면으로 일반 차량이 이용 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면수는 18,026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에 진입할 경우 유동성을 따질 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마음놓고 용무를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적인 면으로 분석한 것이지 차량 밀집지역이나 구도심 일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인 송천동이나 서신동 등 또는 구도심 이런 데는 국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정체 현상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주차장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단속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2005년 115,872건에 47억여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납부에 포함, 실제 징수는 19억4천여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무려 27억4천여만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118,221건에 48억여원을 부과해서 13억7천여만원이 납부되고 34억2천여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총 681,582건에 무려 250억1천3백만여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차 단속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질서 확립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주차장 질서를 위해서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은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단속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주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송천동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송천동과 덕진동 등에 심각한 교통난을 지적 하시면서 각종 도로에 대한 시설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 선 송천동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남북측으로는 주간선도로인 한방병원 삼거리에서 송천역간 폭 35m 대로와 송천역에서 35사단을 거쳐 완주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백석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하가지구와 연계된 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공사 시행 중 에 있으며, 보조간선도로인 한양아파트에서 비행장선을 거쳐 전미동 미산초등학교, 완주군 삼례로 연결되는 비행장길이 있습니다.

동 서측으로는 동부우회도로와 비행장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중로가 현대아파트까지 개설 되어 있어 간선도로망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천지구획정리사업과 오송지구 주변 아파트 건립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조속 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오송지구에서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의 연결에 대해서는 오송지구 지구내의 중로와 지구주변의 도로개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개설토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과 교통상황 을 고려하여 앞으로 오송지구를 포함한 천마지구, 시가화 예정지구의 개발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따 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인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지구에서 대학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우회도로~현대4차아파트 ~ 대학로 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총연장 2.2km, 폭 20m 도시계획 중로 1류 7호선으로서 그 간 이 노선의 일부 구간인 동부우회도로에서 현대4차아파트까지 1.1km구간은, 주택공사, 현대, 신일아파트 등 공동주택개발 사업 과 지구단위계획 등 민간개발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4차아파트에서 팔학골, 대학로로 연결되는 1.1km 구간은 아직 미 개설된 상태에서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송 천동 지역 등 전반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 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송천동 팔학골에서 어린이회관을 거쳐 대학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27호선은 현대4차아파트에서 대학로간 중로개설 완료시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천2동 메가월드 앞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중로 1-10호선은 서곡광장에서 미산초등학교까지 연장4.8km, 폭 20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 대명 아파트에서 롯데아파

트까지 440m는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 2005년도 개설 완료하였고, 신평리에서 대명아파트까지 360m 는 29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메가월드간 350m 미개설 구간의 사업시행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비가 약 45억원이 소요가 되고, 당초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잉여자금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결산 결과 잉여자금이 없어 일반예산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확장이 이루어지 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를 건너 송천동 한양아파트 구간 도시계획중로 1-10호선은 질문하신 교량 1개소 200m를 포함하 여 폭 20m, 연장 2,600m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24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먼저 팔복동, 송천동을 연결하는 교량과 추천대교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1,100m 를 확장하는 데에는 150억원이 소요되며, 본 구간이 완료되면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까지 연장 1,500m 구간에 대해서 90억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복동, 송천동을 잇는 교량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교량과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 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께서서는 주차장 단속방법 개선과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1만여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1990년초 경찰업무에서 이관되어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 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단속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도로는 협소하나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계도 방송을 실시한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계도위주의 단속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가 미흡하므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은 현행처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교통 정체 현상 이 적은 지역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영세상인이나 생계형 차량 등은 계도에 치중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문화 홍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도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대며, 주차장은 총 9,719개소에 136,64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69개소에 3,378면, 노외주차장이 372개소에 14,64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278개소에 118,615면으로 65%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에 9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제시된 삼천2동 지역과 인후3동, 서신동, 중화산2동 지역 등 800여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10년까지 확대 설치하고, 공한지 주차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확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남원, 임실 방면과 봉동, 고산 방면에 만남의 광장 2개소, 공한지 주차장 6개소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40억 9천만원의 주차장 시설 예산을 투입해서 삼천2동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공한지 주차장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녹색주차장 시범지역 조성 등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차량소통과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도심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노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근본적으로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변화도 함께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획기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05년도에 47억여원을 부과하였으나, 19억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48억여원을 부과하여 13억원을 징수했고 이로서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이 완화된에 따라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량도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와 이전등록이 가

능하고, 과태료 4만원인 소액으로 부동산, 급여압류 등 체납 처분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납세 의무자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차량 이전이나 말소시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있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2만여 건에 8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체납자 270여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작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계도 및 예고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 즉시 부동산 체납처분과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2005년 8월 3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계류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심의 가결되어 법제화 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수를 주정차 시설 확충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주차시설 확충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세입예산은 45억8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에 17억7천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경상비에 22억1천6백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주차시설과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2002년 12월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전주시내 4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 구 역들 중 특히 재개발지역에 각종 불협화음과 주민의 갈등,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28개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은 16개 지구로서 이중 9개 지구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9개 지구 모두 공통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상 다가지구의 예를 들어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선정이 극히 짧은 시간내에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입찰공고를 보면 공고일이 2006년 8월 10일입니다. 현장설명회가 그 다음날인 11일이고 사업 참여 마감일이 13일입니다. 불과 4일 만에 4만여평의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약 2주 이상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지 않는 이상 1주일 이내에 입찰을 마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식이 도급제 방식입니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아파트만 짓고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분양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에서는 분양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양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금융 이자부담이 예상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동안 시공사는 분양을 책임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계약서상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함으로서 결국 발생할 이자부담을 주민에게 떠 넘기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셋째,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수준입니다. 다가지구의 경우 공사비가 평당 305만원이고 기타 8개 지구도 300만원대입니다. 1년 전에 분양이 완료된 e-편한세상아파트의 경우 모든 옵션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공사비가 평당 260만원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다가지구 계약서상에는 추가되는 옵션과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제외하고도 공사비가 3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와 단순비교로 차액이 50만원정도로 30평 기준 1세대당 1,5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며,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렇듯 과도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시공사와 추진위원회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시 토질을 일반토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사업 시행인가 시에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등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되는 건축비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점은 2006년 8월이고 공사 마감 수준은 코오롱하늘채 일반분양 마감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2006년 수준으로 마감된 아파

트를 2년 후인 2008년 시세기준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아파트신축계획은 총 780세대로서 24평 이하 102세대, 34평이상 68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240세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합원이 추가 부담없이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한 24평형까지를 최소 두배 이상 200세대 정도는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조합원의 반절도 안되는 102세대 계획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외에 다른 8개 지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추진 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자촌지구를 비롯하여 효동지구, 이동교지구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다른 지구도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과 도급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확정지분제방식의 계약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지분제방식은 재개발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완료되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까지 책임을 지면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가지구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개 지구의 지역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는 바, 약속이나 한 듯 전부 도급제 방식이며, 입찰공고 후 1주일 이내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평당 공사비가 9개 업체 모두 300에서 310만원 사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도 높게 책정되었고 계약조건까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공사비는 토질이 100% 일반토사인 경우를 적용했다는 점과 철거비용이 제외된 점, 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등의 건설조건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을 말합니다. 특히 평당 305만원의 공사비는 2006년 8월 기준이고 실질적인 착공시점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2008년 7월까지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이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무려 평당 400만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 평당 305만원에서 400만원이 적용되면 약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30평 기준 1세대 당 무려 3,0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 세대 당 공사비 담합으로 인한 1,500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3천만원의 합계 금액 4천5백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1만 세대가 완



공될 경우 4,50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부담을 안게 되어 그만큼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하겠습니까. 이렇듯 재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1군 시공업체들의 배만 불러주고 지역 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시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설립 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공동 시행사를 예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과도기적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줄속으로 추진한 점과,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시 행정, 그리고 소위 시공업체들의 작업에 의한 밀어주기와 공사비 담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분양과 분양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현재 부동산경기를 보면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두어 곳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률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적입니다.

성공리에 100% 분양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5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관리처분 과정을 통해 추가부담 없이 24평형 수준의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9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10%가 넘어선 상황에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2008년까지 약 1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한다면 초유의 미분양 사태로 전주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적절한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 개발 예정구역 고시가 된 2006년 7월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불과 6개월 만에 정부의 2007년 1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상황은 급변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군 건설업체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 두 세 곳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철수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이 낙후되어 꼭 재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건설업체의 무관심에 부딪쳐 수 년 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볼 때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추진 과정을 보면 주민의 갈등과 반목, 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은 관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일반개발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손실 및 주민의 삶의 터전과 재산이 잠식당할 상황에서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지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행정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에서는 재개발 추진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세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 재검토를 통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의 재산손실과 지역경제 혼란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님께서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는 문제로서 먼저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시공사가 선정된 9개지구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둘째로 시공사 선정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줄속 추진과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간의 입장차가 커 재개발구역마다 찬성과 반대로 주민의 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률상식 등 이해부족에 따른 주민과 추진위원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고소, 고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도 사업 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되도록 되었으나 2005년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16개소

중 9개소 예정 구역이 시공사를 내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특정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과 피해호소 민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8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재개정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시에는 3년 이하 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공자가 내정된 재개발 9개 구역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조합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본 계약을 체결토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1군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한 조치 문제는 2006년 8월법 개정 이후 추진위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합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를 금지하고 합동 설명회도 2회 이상 갖도록 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 하한을 제한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여토록하고 입찰 방법도 공고를 해서 현장 설명, 입찰서의 접수, 대의원의 의결, 주민에 홍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상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 담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 선정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양과 분양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토록 되어있어, 조합원의 재산 즉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감정기관에서 재산평가 금액을 확정하고, 시공회사 공사비와 사업추진 경비를 반영하여 조합의 이익금을 산출한 후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아파트 금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공제하여 조합원의 권리가격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고 아파트 가격보다 재산평가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자기 재산가치 만큼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미분양과 분양지연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인가 후 시공자 선정 및 계약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을 회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주민교육을 강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평가액이 적어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4조의 2에 의거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바, 정비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규정 이상 임대주택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건설업체들의 사업 철수가 예상됨으로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 에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 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장, 행정민원담당 등 관계 공무원 교육, 홍보 팸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21일에는 건설교통부와 국가청렴위원회 후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연합 강사들을 초청하여, 43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주민 및 정비사업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450명의 많은 인원 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명성 제고, 협력업체 선정, 계약시 유의사항 및 법적문제 등을 집중 교육,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바로 알리기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홍보물 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주민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 된 TF팀이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설명을 통한 민원 해소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하여 분열된 민심을 수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 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 제로 정비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권이 공개에 따른 재개발시장의 변동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극히 어 렵운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가 당분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고시지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동의없이 단계별로 추진토록 정비구역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구역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추후 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구역 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후, 동초교 북측 구역과 같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요구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 동장, 행정민원담당, 그리고 도심진흥과와 테스크포스팀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8일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구역별로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정 소송의 사전차단과 조합설립시 조합정관 작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시공사와 계약시 분쟁이 될 수 있는 공사비 지급 문제 등 사전 자문을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고소, 고발을 방지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재개발대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손실 및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임병오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요구에 대하여

중앙시장 상가주변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경제 살리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에 무차별적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영세상인 내지 재래시장의 운영난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자 2006년도 10월 29일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의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지원법을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주 중앙시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시장상가 400여 점포가 낙후된 시설과 노후화된 환경속에서 그 명맥만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마트의 입점과 쇼핑문화의 변

화로 역의 유출되고 있는 지역 자금의 회수는 적어도 우리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현대사업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시장은 낙후화된 시설과 쇼핑문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도 경쟁력 시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제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설새없이 앞다투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재래시장 영세상가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에 대하여

구도심 주민과 스스로 신의를 저버린 구도심 활성화 조례 규정을 무시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목으로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30일 제정, 구도심의 4대문안과 특화거리에 건축되는 건물 내부 수선비 의 30%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핵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7억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75건을 집행해오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신 이후, 단 한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도심에서 영업을 하시는 전주시민과 구도심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구도심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 영화를 가졌던 천년고도 전주를 유지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심각하게는 관선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실적 위주와 선심성 사업으로 구도심은 민선 단체장들의 복마전이 되어 그 피해가 도를 넘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책없는 대기업 유통산업과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등이 일자리 고용창출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자하게 칭찬 중에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 영세 상인의 상권과 특히 구도심 유통자금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대책 없는 직격탄을 맞고 한없는 공동화 현상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구도심의 폐해를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주백화점이 7년전에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전풍백화점, 기린오피스텔, 롯데오피스텔이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또 향토기업인 코아백화점마저 롯데백화점 입점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 4,732명이었던 전주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는 6.7%도 안되는 3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4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역시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문을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도청과 경찰청은 이전사업비 1,960억원을 들여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 하였습니다.

이후 구도청 주변 상가는 불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도청사 중심은 휴·폐업소가 속출하면서 구도심 상가 형 태는 1층 상가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지하층 2층이상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약 1천개 이상의 상가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신시가지는 살리고 구도심은 죽이는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째, 본 의원이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예산 편성과 관련지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지역 자금이 우리 지역에 채투자 되지 못하고 서울로, 외국으로 자금이 1조원 가량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영세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늦었지만 피해를 더 이상 방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목대 지역주민 현안 문제 중 이목대 주거환경 택지개발이라는 주제로 송하진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며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전 주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전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마을 교통 이목대 승암 마을은 현재까지도 행정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336세대, 803명의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지어 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송하진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7월 29일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2층 이하 경사지붕 등으

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이 곳 전체 건축물은 71.9%가 양성화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통, 이목대, 낙수정은 공원지역으로 도시 관리계획이 유사하여 낙수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곳 이목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축건물이나 개발행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역정과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곳 상류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문화마저 근대화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수세식 화장실처럼 배설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 인분을 하수도나 공원지역에 손수 내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 즘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치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모순이며 수치라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확정짓고 도시가스 시설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 도시가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 주민들의 현실은 도시가스는 커녕 고지대 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탄마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서는 올바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 아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는 노인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금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책이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시 다른 방법없이 잘못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입니다. 주변은 동정녀 순교자묘 치명자산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연간 천여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목대 주변마을의 주거환경이 이



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형이 높은 마을이라서 눈에 잘 띄고 있으며 재난재해도 자자한 지역입니다. 마치 도시 미관도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없는 전주시 행정으로 전주의 이미지만 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 시민의 생활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요구에 대하여

먼저 중앙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쇼핑문화 환경 개선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와 영세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 입점과 신유통업태의 증가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고유 유통업 및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해오던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의원님과 같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비와 햇빛 가림시설과 상가 리모델링 및 재래시장 이용의 제일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우리시의 중심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시설 환경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총 사업비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3개년동안 주차장조성, 상가리모델링, 상인교육장, 아케이드 사업 등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이미 확보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배정과 동시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대형유통점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운영, 맞춤형현장 교육실시,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등 시장 상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도심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라는 대하여

다음은 구도심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더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타 도시에서는 전례가 없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도심 4대문안과 7개 노선의 특화, 특정거리내 상가의 건축, 수선시 자금으로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활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구도심 상가의 리모델링 증가로 구도심 거리마다 빈 점포들이 새로운 상가로 변화하여 유동인구 유입등 구도심 상가가 차츰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4대문안과 특정 특화거리에 한정해서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서, 여타 지역 상가와 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주민들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주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특화거리 기반시설정비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구도심 상가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전북도의 지원 방향과 4대문 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자금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 지역경제와 영세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E마트와 홈플러스 등 2개소가 있는 바,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현지법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가가 될 경우 마트 입장에서, 서울 본사의 상품 일괄구입 분배에 의한 단가인하가 불가능해지고 본사와 각 지역이 조직과 인력을 따로 관리하고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효율, 비경제성으로 인해 결사반대 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마트의 현지 법인가 운동이 무위로 그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본사의 전향적인 수용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가 추진과 함께 영세한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기 입점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역 상품 취급 및 임대매장 지역민 입점, 지역 이용 업체 선 정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대형마트의 상거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점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향토슈퍼마켓 등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동 유통단지내 중소 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10% 이상의 물류비 절감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다만, 대형점 입점 규제만으로는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상인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 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구도심 인구유입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기능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인내심,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구도심 활성화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특화거리 조성이나 재래시장 현대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전라감영 복원과 한지종합지원센터조성계획을 추진하는등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도 모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현재 7개의 특화거리 중 걷고싶은거리, 차이나거리, 영화거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7억원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웨딩거리, 약전거리, 동문거리와 노송광장에서 영화거리를 연계한 문화광장 및 친수 공간 설치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 7월 14일 수립해 서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므로써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대 주변 자만 마을과 옥류 마을은 1966년 2월 10일 도시자연공원인 기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9월 20일 전주시기본계획 변경시 공원내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2005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공원 지역내 주 민재산권 및 건축행위 제한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40%, 용적율 100%, 2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편법 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녹지지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기린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전통문화 구역 주변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인구증가 등 여건 을 고려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 중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옥마을, 자연생태체험관, 전주자연형하천, 천주교성지, 건원대왕궁터, 한벽루 등 인근에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우리시 관문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지역 지형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 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상질 등 분노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당회사에 연락하면 즉시 분노를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난방 등 도시가스 시설 문제, 복지시설문제, 재난대책 문제 등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현재 지형상으로는 기반시설을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임시회('07. 9. 12 ~ 9. 13)

Q 구성은의원 (서신동)

▶ 성매매 집결지의 구체적인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9월 23일이면 성매매방지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래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과 함께 강력한 성매매 규제법을 실시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일약 반인신매매 모범국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줄어들었던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결지의 현황을 전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전무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22일 점검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선미촌 내 54개의 업소가 있으며 16개의 업소가 휴업중이며 2개 업소 폐업, 점검 하지 못한 업소 2개입니다. 그러면 34개의 업소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북인권지원센터 현장지원팀 두드림에서 주1회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줄어들기 시작한 업소 수와 종사자 수가 2005년 후반으로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여 현재 50개의 업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부록 <표1> 참조)

전주시는 서류에만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을뿐 경찰 자료와 민간단체 자료에만 의존하여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며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 되겠습니까.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시 자체 조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집결지 폐쇄 계획은 서류상 “단계별 폐쇄 계획수립”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민간업자가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 40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애 나서는 민간업자가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두번째, 집결지에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행정의 방치로 인해 무허가 영업이 만연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물이 20%에 달하는 등 집결지가 행정의 무풍지대, 불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

던 업소들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숙박업소 허가가 취소된후 전주시에서 영업 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주택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전보다 더 큰 불법과 탈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중 전주시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부록 <표2> 참조)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는 곳도 10곳, 건수로는 11건으로 현장지원팀 자료에 의거 한 영업업소 수를 50개로 추정할 때 전체 업소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부록 <표3> 참조)

이것은 전주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결지에 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있었던 탈세 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무허가 영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불법 탈세의 온상지인 집결지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경찰단속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의 경우 시정되라는 오명으로 전주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미촌에 대한 경찰단속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의 단속현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200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부록 <표4> 참조)

그러나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114건 업소(중복업소 포함), 선화촌 22건 업소는 행정처분되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정처분 기관인 완산구청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선미촌, 선화촌은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가 아님”이라는 문구로 행정처분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 해주었으며, 숙박업 영업에 대한 정의를 친절하게 삼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선미촌 업주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우범지대가 있으면 그곳이 감감한 곳이라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온상인 집결지를 그것도 전주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모른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용인하고 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집결지 실태조사와 폐쇄는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업주에게 고지하고 불법 영업 증거를 확보 단속·단수 조치에 들어간 후 처벌하는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고 계획도 전혀 없는 것은 시의 집행력과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집결지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주시의 문제는 전주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선미촌의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결지를 선미촌이라 부르지 않고 시청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미촌의 위치는 시청을 마주 보고 있으며 근 거리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통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에도 매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어 빠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게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반영할 예산과 제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결지 폐쇄의 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드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 협의회가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에 1회 회의를 한 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19일은 성매매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사건 발생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집결지 화재참사는 그 이후로도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북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사건, 2005년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광주 송정리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 집결지 화재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집결지 폐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단계별 폐쇄 방안을 세워 행정의 불법지대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성범죄 없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실태와 주차시설 현황은 여기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율이 65%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주차장 총

9천719개소 13만6천641면 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천278개소 11만8천615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17개소 1천836면,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경우 61개소 794면이 전부인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장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대책,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차장 부지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분양,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닌 음식점, 마트 등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제239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백원규의원님께서 택지개발내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현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본 의원이 택지개발 지역내 주차장 부지 관련 주차시설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현재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신동 관내만 해도 3곳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주차장은 유료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데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만 주차하도록 관리하는 업소가 태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층은 편의점, 감자탕집, 미용실, 2층은 노래방, 3층은 골프클럽, 4층은 게임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며 2층부터 4층까지 한쪽면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층은 패스트푸드점, 3,4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안경점, 빵집, 미용실, 카센터 2층부터 5층까지 병원,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은 1층 뒤편에 8면 정도가 전부입니다. 더구나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부지는 근처의 상업부지에 비해 1/3 정도 저렴합니다. 좀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패스트푸드점이 위치 한 부지는 매각당시 m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보다 m당 992,470원이 저렴하고, 안경점, 빵집, 미용실 등 복합상가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매각당시 m당 450,000원으로 바로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936,280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되팔 때는 인근



부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놓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사야하는 낭비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전주시가 현재 조성중인 삼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공사비 30억 중 건물매입비만 4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비를 포함하여 5억에 가까운 세금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현재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에 남은 체비지의 주차장 부지가 타 용도로 매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시 30% 이상이 타용도로 사용될 때 같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겠습니까? 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 주시는 2005년 7월 13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2년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억3천1백만원의 용역비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2010년까지 삼천2동, 인후동, 중화산동, 서신동에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용역보고서입니다.

본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차실태 현장조사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간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신동은 자동차 등록대수 1위, 장래 주차장 수급 전망 과부족 1위, 주,야간 불법주차 1위, 주야간 행정동 주차 수요현황 1위, 장래 수요예측 1위, 주차환경 개선지구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영주차장 순위가 4순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건축중인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신복합문화센터 터는 2003년 11월 13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동년 11월 17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주차수급 실태 조사가 시 작되기 전인 2005년 5월 13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동년 11월 설계현상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 조사의 현장 조사가 있던 2006년 3월 이미 작품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엄청난 주차수요를 예상하는 서신 복합문화센터부지를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 파악하고 조사하였으니 어떻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년 8월이면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됩니다.

부지면적 2,016m 지상1층/지하5층 규모 건물이나 주

차장은 지하1층 32면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같은 서신복합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전주시에서 한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 부서에서는 공한지주차장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한 잘못된 용역결과를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잘못된 용역대로 주차장 건립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성매매 집결지의 구체적인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집결지 폐쇄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폐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랜 역사속에서 집결지 폐쇄대책과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온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선화촌은 기본현황을 파악한 상태이며 선미촌은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드림과 앞으로 협의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는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내에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결지내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결지 내에는 도로목적의 토지를 제외 하고는 국가 또는 전주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국가 또는 시 소유 재산을 업소에 임대하거나 대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산구 다가동2가 20-1번지는 전주시 지분이 약20㎡ 정도로 1994년 도로개설을 위하여 협의취득 재산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완산구 전동3가 87-1번지는 도로에 인접된 사유지이며, 완산구 서노송동 694-27번지는 집결지가 아닌 인접지로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서노송동 693-12번지 내 시 소유 건물은 이미 멸실되어 개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만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지 않아 공부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집결지내 도로 등 국가 및 시소유 재산에 대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집결지 탈세업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 일대의 세금 체납은 지방세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이 주요 체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내역은 총 1명에 17건, 4,471천원으로 1명의 체납자 모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중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공매처분이 진행중에 있어 공매가 완료되면 징수 가능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집결지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은 총 5명에 4천 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소유부동산 7필지에 대해서는 기압류중으로 공매의뢰 예정이지만 압류재산의 대부분이 노후된 건축물로 공매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 및 예금 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채권확보 노력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네번째, 경찰단속 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미촌은 전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 도시재정비등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성매매 집결지 내에는 여관이나 여인숙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는 비등록 업소입니다. 현재 경찰관서에서 성매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비등록 업소인 관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등은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결지 불법 영업에 따른 단수는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조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단전조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단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요금미납이나 수요자 요구외에는 단전조치 조항이 현재로써는 미비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촌을 폐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미촌 일대를 도시재정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본 결과 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코아, 중앙시장, 홈에버등과 연계한 신유통마트 중심의 단지조성 및 문화, 여가, 위락 등의 기능이 복합된 주거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의거 일괄 매입 분양 및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둘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이상 개발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주상 또는 복합으로 재개발 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정비시 검토 예정구역으로 지정후 가능하며 주상복합건물 배치에 가능한 최소 단면폭이 80m-100m가 필요함에 따라 기린로변 대형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고, 현재 토지가 고가로 개발 채산성 부족, 지주 및 세입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결지의 폐쇄 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집결지 폐쇄 관계법령의 근거를 금년 내에 마련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관련법이 제정·공포 되면 구체적인 폐쇄·정비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상업용 부지로 운영되는데 바로 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택지개발 사업시 총 사업 부지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우리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27개소 1,711면이며, 그중 건축물 전용 주차장은 16개소에 1,158면입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법 제2조 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공공성이 강한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한 후 근린생활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하는 경우 건물 입주자와 입주업소 이용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상가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들 역시 고객 주차 안내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각 업소명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마치 특정업소 고객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올해 3월에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완산구 관내 주차 전용 건축물 16개소에 대하여 금년 들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면 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상 악용 사례가 있는 바,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총 19필지로서 현재까지 매각한 바는 없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공사비와 환지 청산금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한바 가능하면 교통특



별회계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순위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블록별 주차수급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진단하여 주차수급을 분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선정은 주차 공급율, 주차 확보율, 불법 주차대수, 공영주차장 필요면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시행 가능 여부 등 8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바, 20개소중 삼천2동이 1순위, 서신동은 4순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사해서 반영한 용역결과를 바로잡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 당시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지가 용역수행 당시 공한지 주차장으로서 용역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에는 32면의 부설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기존 공한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와 비교할 때 56면의 주차면수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신복합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토록 단계적인 대책은 물론 2008년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Q 권정숙의원 (비례대표)

▶ 특화거리의 활성화와 전주시 중장기 관광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복지,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시책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 하면서 특화 거리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 걷고 싶은 거리, 약전 거리, 영화 거리, 동물 거리, 공구 거리 이상 7개소의 특화거리가 슬럼화 되고 행정이 자칫 겹들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화거리라는 이름표만 달아 놓았지 구성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형식에 불과한 거리가 있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한 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등 7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연장 3,800미터에 총 공사비는 175억 6천3백만원으로 75억 6천만원에 기 투자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상가 연합회 등 민원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공여지책에 불과 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화거리에 75억여원을 투자 하였으나 특화거리에 있는 상가주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성은 제로 상태이거나 미미할 정도입니다.

75억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면 경제적인 효과나 결과물이 나타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특화 거리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차량진입과 시민의 형세로 만든 화강석을 깔은 도로가 파손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로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화 거리에는 폐업된 많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유동인구가 늘지 않고서는 특화거리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져 관광 특화거리가 될 수 있었다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할까 합니다.

첫째, 루미나리에 관광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낮에는 관광지 볼거리 관광을 제공하고 밤에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낮에는 걸어서 특화거리에서 한옥마을까지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야외 커피숍 등 쉼터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성 효과성 있는 관광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량을 통제하여 야외 커피숍, 콘서트장, 야시장 등의 개발로 특화거리를 활성화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특화거리별 당초 조성목적을 관광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웨딩거리는 웨딩문화컬렉션, 공구거리는 공구박람회 등으로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에는 특화거리에서 얻어가는 관광을 하고, 상가주에는 상가활성화로 경제적인 효과를, 시민들은 그로 인한 문화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검토해 본 결과 특화거리 중 일부거리는 특화거리로써 당초 취지 목적에 어긋나고 퇴색되고 있다고 있었습니다. 차이나거리와 공구거리 등 일부 특화거리는 차량으로 너무 혼잡하고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일부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어 특화거리 무용론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 권리를 위해 설치된 걷고 싶은 거리 안 자연의 길과 문화의 길은 오후 1시부터 8시 까지, 역사의 길은 주말과 공휴일 같은 시간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시간에 상관없이 차량진입금지 표지판까지 치우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화강석도로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진입차량으로 인하여 편안하게 맘껏 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특화거리라는 명칭만 붙여놓았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낭비의 단적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의지가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특화거리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 구도심과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전통이미지로써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큰 틀의 전주시 중장기 관광 정책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 되기전 관광 타운을 조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전주만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 호수 공원과 산책로와 관광 레저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큰 명운을 걸고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특화거리의 활성화와 전주시 중장기 관광정책에 대하여

먼저 루미나리에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수립과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과 구도심 상업 밀집지역을 연계하는 관광 루트 조성은 태조로~풍남문~건교 싶은 거리까지 연장 1,100m, 총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7개 특정·특화거리와 더불어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한옥마을과 건교 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연결루트의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라감영지 및 풍남문 지역을 정비하여 관광루트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옥마을과 특화거리를 연계한 구도심 관광 벨트화를 통해 계층별, 대상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거리별 특색 있는 각종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상설 운영토록 하여 먹거리를 비롯한 나이트 투어 상품의 관광자원화로 관광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화거리의 관광 상품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웨딩거리는 웨딩 관련 80여개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웨딩거리 경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웨딩문화결례선, 웨딩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공거리는 관련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20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전거리 등 기타 특화거리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특화거리를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특화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질서한 차량 진입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공영주차장 및 천변 주차장 등 인근 주차장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주변을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차량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별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자구노력이 절대 필요한 바, 자율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시와 적극 협의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주시 중·장기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관광산업의 불모지였던 전주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잠재되어 있던 전통문화를 자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급속한 퇴조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도시균형 발전과 전주시 도시마케팅 전략화를 위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각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인프라 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등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외래 방문객 유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및 생산효과를 높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계층별 다양한 특화거리를 연계시켜 도심 관광벨트를 구성해 나가면서 전주천, 삼천, 만경강을 친환경생태하천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명소로, 노송천을 비롯한 5개 하천을 친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오송제 등 10개의 도심 소류지를 친환경 테마호수로 조성하여 산책로 확보 등 시민 휴식 공간의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친환경 녹색공간과 어우러진 관광레저타운의 조성과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로 한옥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관광종합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위해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공공시설물 설치에 앞서 계획부터 시행,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특색을 살리고 전주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경관조성과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10월 중에 용역 착수할 계획이며, 경관법에 근거한 전주시 특성에 맞는 경관조례 등을 제정하여 한국적인 미가 살아 있는 고품격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창길의원 (진북·인후2동)

▶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대형마트 삼성 홈플러스는 건물 완공 후 1년여만에 개점을 하였는데 예상한대로 교통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주변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서로 엉키는 바람에 이수라장이 되어 교통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완공된 이후 1년여 기간동안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동안 매장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하필이면 추석명절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승인해 준 댓가로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임시사용 승인 기간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기존에 통행했던 사라진 인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종전의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뀌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과연 시민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 재래시장이나 인후동 동네 슈퍼나 소규모 마트, 우아동, 호성동, 주공아파트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 PLC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1999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이 2006년도 기준 1조 5000억을 상회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3위인 초대형 외국계 기업으로서 외국자본이 89%라는 전형적인 외국자본의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지분마저도 매각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한 다국적 유통기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홈플러스 매장에 우리농산물,

전주특산물, 전주음식, BUY전주상품 등 우리지역 제품이 납품 또는 입점이 되도록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또한, 지역 인제채용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연면적 기준이 얼마 이상이면 지방에 입점하기가 어려운가, 또 전주시 내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 애용하기, 내 고장 물건 사주기 등 애향심이 많이 필요한데 전주시에서는 시민포럼이나 각종 단체행사 등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계몽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절실함을 잊지 마시고 전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후2동 인덕마을에 대하여

인덕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에는 1940년대부터 무허가로 건축되어 61세대가 모여사는 인덕마을이 있는데 위치는 백제로변 전북지방조달청 뒷편 전북대학교 병원 부지이며, 지형상 급격한 저지대로 매년 수해 침수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구조가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는 바,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국유지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측과 인덕마을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했는지요. 협의를 했다면 전주시의 대책은 향후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시유지를 불하하여 집단이주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공영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악조건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내일을 기약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마을 공동보조금 지원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서서는 인정받은 넉넉함으로 그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줄 믿으면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삼성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삼성 홈플러스 개점으로 발생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은 지난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사용 승인 처리를 하여 9월 6일 매장이 개장되었고, 고객들로 인하여 인근 교통이 혼잡한게 사실입니다.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개장 후 3개월 이내에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협약된바 있어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완공 이후 1년여 동안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2006년 10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덕진마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 개점 하고자 하므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사용승인이 신청되어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측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었으나 행정심판은 각하 되었고,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우리시와 협상을 요구해 왔던 바 동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종 협의에 이르렀고 동 내용으로는 인근근터 1천여평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이면도로에 CCTV설치 등 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7월 25 일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 8월 1일자로 1년간 임시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므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삼성 홈플러스측에서 전주시에 기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전 전주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삼성테스코(주)와 이행협약을 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개선 대책외에 전주지역 특산품 판매 및 지역상생 방안으로 Buy Jeonju 상품관 코너설치, 전주시 특산품 및 4대농산물 전국적 판매확대, 재래시장 상품 특관행사 실시,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직접매입방식을 통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농산물 등 구매,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공익사업 참여, 시정홍보 동참, 각종 용역업체 지역업체 선정, 전주 한브랜드사업의 해외홍보 및 상품수출 촉진, 임대점포의 지역하부 배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전주시가 제시한 개선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2007. 8. 1 ~ 2008. 7. 31일까지이며 임시사용 승인기간 중 전주시와 협약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사용 승인기간 만료 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연장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통행했던 보행자 인도가 없어지고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물품 검수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대기차선 도로로 바뀐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당초 보행인들의 인도가 있었으나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시 홈플러스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삼성 홈플러스 건축물 쪽으로 이동 설치되었으며, 일부 자동차 진입로 부분은 인도가 없어지고 보행인들을 위한 횡단 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 엄청난 타격과 고통을 주는데 인근 모래내시장이나 주변 소규모 점포들을 희생시키기 위한 대비책은 세워 놓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점 입점과 신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오던 재래시장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회생 등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 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3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사업을 2005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모래내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201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중앙 통로의 노후된 아케이드 재설치 및 통로 재포장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만으로는 대형점 등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아동, 호성동, 주강아파트 주변의 슈퍼와 같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중에 있는 장동 소재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의 조합회원으로 등록하여 10% 이상의 구매비를 절감케 하는 한편, 동시에 전주 관내의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도 점포 상호를 공동브랜드화 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의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말살시키는 대형마트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의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근본원인은 공산품의 90% 정도가 역외에서 구입됨으로써 지역자금이 구매대금으로 유출되는데 기인 하는 바, 이의 근본 시정을 위해서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처럼 우리 지역의 다양한 우수공산품이 많이 생산되어 이 제품들이 많이 구매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를 기초로 신기술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 및 지적재산권 취득과 유명규격인증 보조율 인상 등을 전주경제키우기의 역점시



책으로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별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국세로서 납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차원의 역외자금 유출 시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에서 내는 부가가치세 만큼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특례조항 입법을 정치권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제품 납품·입점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지역 인력 채용 수치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한편으로 우리지역 상품의 입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효자동 소재의 한빛영농조합 브랜드쌀과 전주콩나물 및 일오삼김과 같은 우리 농수산물이 입점되도록 하고, 합씨네 토종콩, 명진 고무장갑, 지니스, 온고를 황도베게, 케이시티, 석정수, 위터킹, 하이트소주와 이강주 등의 11개 품목의 바이전주 상품이 입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로서 전주비빔밥 패스트푸드, 임실치즈피자 등 지역의 음식이나 특산품의 추가입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삼성 홈플러스측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행조항으로 요청한 역점사항이었으며, 추진 결과, 모집직원 123명에 119명이 지역민으로 고용되었고, 임대매장은 31개의 대상 점포중에 28개 점포가 지역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직원과 매장이 우리지역민에 의해 많이 채용 되거나 운영될수록 우리지역에 주는 소득창출효과가 그만큼 앞으로 추가직원을 모집하거나 임대매장을 추가 개설할 경우 지역민에게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지방에 입점이 어려운 연면적 기준은 무엇이며 대형마트 입점에 대비 향후 전주시의 입장이나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 개설요건은 자유등록제로 되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만 보면 개설의 규제가 어려워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규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개설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설요건을 자유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규제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최소면적을 3,000㎡에서 1,000㎡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 건의안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연대하여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에는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에 롯데마트와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되어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전

북도에 진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건축심의 등 적법절차가 이행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생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후2동 인덕마을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앞 인덕마을 주민의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인덕마을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추진 경위, 또한 우리시 입장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마을은 전북대학교 앞 국유지 약 21,947㎡ 부지에 68동의 건축물에 88세대 2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간 70~90년대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 1987년 전북대학교에서 우리시에 철거 협조 요청이 있을 후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전북대학교에서 1988년에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철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1998년 전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북대에서 병원 입구 5개동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 5월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6월에 전북대에서는 평화동 지안리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보상비 1,000만원 지급을 협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들과 합의 후 이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동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9동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장기점유권을 인정하는 국유지 불하나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정책에 대한 전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점유자에 대한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경부에서도 장기점유 건물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불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장기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지를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덕마을의 경우 관련 토지가 전북대학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관리권이 전북대학교에 있어 우리시가 불하 및 사용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인덕마을 주민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토지소유자인 전북대학교와 상의를 했는

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유지 관리나 처분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06년 6월에 주민과 학교측에서 이주를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전복대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유지 불하로 집단이주를 입안하거나, 공영 아파트나 시영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복대에서는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비롯한 주거안전대책을 해당 주민과 합의하여 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지급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덕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복대와 협의한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전복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Q 백현규의원(완산·중화산1·2동)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 설치에 대하여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산업화 이전에는 군사력이,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적 능력이,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의 기반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다른 가치보다도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빌게이츠, 우리나라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는 독서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천년전주의 전통문화와 교육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여 우리 전주시민은 교육 분위기의 필수적인 도서관을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시립도서관(완산도서관, 인후도서관, 삼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송천도서관)과 BTL 사업으로 평화지구와 아중지구 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것으로는 아직도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 년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비율이 전체 주택의 53%이고 건설물의 9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어 주거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마 을문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33㎡ 이상, 6석 이상의 시설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도록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주시의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표와 같이 위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우아주공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154개 단지에 98,498세대나 됩니다. 이 모든 공동주택이 도서관이 없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공동주택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으면 열악한 독서 환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가 공기업에서 시공 분양한 지구 마저 문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이며 쾌적한 환경과 누구나 쉽게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자유롭게 뽑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과제나 탐구 주제도 해결하고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이 각 학교라 생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까지 80억여원을 투입 19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해에도 92개교를 대상으로 3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학교 주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시민에게는 최고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선진 교육문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문고 설치의무 지역이 154단지에 이르고 문고를 설치·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무하며 이는 곧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문고와 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독서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서관이 없는 각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내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학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책도 많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 및 공공건물 등은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여 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교통이며 사회 전반에 장애우의 편리를 마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에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3에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명시하고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의증진용품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고 의무용품마저도 비치하지 않고, 비치하고도 전비용으로만 쓰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법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밝고 편리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장애인시설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천년 전주의 자존심 선진복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선진 독서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는 학습의 장과 문화공간이 꼭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자존심과 살맛나는 전주, 최고의 장애시설을 준비한 전주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 설치에 대하여

300세대 이상 154개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설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대책과 주민 독서 문화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 설치는 1994년 12월 30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2006년 1월 6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 개정 되었고, 법령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문고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 법령 적용을 받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의 문고 설치 대상은 현재 43개단지 36,217세대로, 그간 운영 실태를 파악한바 43개 단지 중 25개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18개단지는 문고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입주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무실이 나 입주자대표 회의실 등 법령 규정과 다르게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내 문고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사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이 없는 동의 경우 지역내 학교도서관을 개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현재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신축중이며,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BTL사업으로 2개의 도서관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전체 33개동 가운데 22개동에서 도서관 조성요구가 있어 도서관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갈 계획이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 60개소가 각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역에 기관, 단체의 복합 문화공간이 도서관으로 개방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교육당국과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적극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용품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용품 비치 실태를 살펴보면, 시 본청과 구청에는 점자 업무안내 책자, 휠체어, 확대경, 모사전송기 등 편의용품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으나, 일부 동사무소에는 점자안내 책자 등 편의용품 비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청기는 시 산하 전 기관에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면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제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앞으로 중앙예산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전주시 관용차량 운용혁신하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은 총 262대가 운용 관리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연료비 지출은 약 9억원 유지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도저히 통계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정치가 되었습니다. 차량구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1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부터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려서 공조직의 질서도 없었으며, 기술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 관리도 없었으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 절감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불변의 관행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여제 한 대로 오늘도 하면 그만이다라는 복지부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첨단을 가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변하지 않으려는, 아니 변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시대적 욕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현대자동차 상용관리팀에 재직중에

있으며 송천주민의 소중한 선택인 시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관리의 전문분야에 지난 21년을 재직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고 여기에 본 시정 질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용차량 관리 문제의 대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관리부서의 조직개혁이 성공한다면 더 나아가서 전주시 집행부 전체의 조직도 혁신적으로 점차 팀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전주시 공조직이 될 것을 본의원은 확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에서부터 정비관리 폐차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애써 성실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의 대부분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관한 비현실성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규칙 제1절, 차량 정수 배정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대·폐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나친 정비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구연한 결정에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는데도 사용연한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차량 시대의 내구연한을 적용하면서도 그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규칙은 지나치게 관리자의 권한을 확대시켜 오히려 치밀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 제 21조의 차량점검, 정비, 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규칙적용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문제에 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것은 차량별 유류소비 및 정비관리가 제대로 기록 관리 되지 않아 차량의 정비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방정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니 조사 통계 분석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주시의 관용차량 관리 실태입니다.

규칙 제24조 유류 구입 등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카드 결제의 방식의 도입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제25조 유류사용 정산의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유류소비의 표준이 차량의 운행모드나 연비등의 조건에 의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그저 필요하면 쓰는 형식으로 지급되어 고유가 시대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 해보면 잘 나



타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운전에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자동차 특성을 잘 살려 제작사가 권장하는 정비관리지침을 잘 준용한다면 자동차의 무상서비스를 잘 받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A/S 기간이 초과하여 일반 수리를 할 때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사업법에 의한 차량점검정비확인서를 받아 기 수리한 부분의 재 고장발생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는 차량의 사고, 고장에 대한 제 33조 보고규정은 있어도 이에 대한 객관적 처리지침이 없습니다. 이는 운전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관리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사고처리는 부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권익을 침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용차량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일이 문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일을 들춰내기 보다는, 즉 지금까지의 부실관리 문제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진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확보입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의 출퇴근이나 차량배치가 용이하고 일상점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관용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자동차시대입니다. 관용차량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량 운행, 정비 관리 전산화를 이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고처리 규정 제정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완벽하게 하여도 불가피한 사고나 대형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처리 규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 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정한 차량 구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장과 시의회 의원,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가칭 차량정수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차량관리팀 신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차량관리를 위하여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 총괄 차량팀을 본청에 신설하여 전주시 관용차량의 구입, 운행, 유류 관리, 정비 및 폐차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시정업무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장

비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잘 관리하여 쓰면 인류문명에 크게 공헌 하지만 잘못 쓰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맞는 관용차량 관리는 전주시의 효율적인 선진적 행정집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고유가시대에 예산절감을 위하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개혁적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차량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행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대부분은 청사내 주차장과 종합경기장에 주차하고 있고, 완산구청 청소차량은 완산구 삼천동 소재 국유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같이 전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일상점검 시설을完비한 관용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 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용주차장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완산구청 청소차량 42대의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내년도에 매입하여 관리실, 노면차 보관실, 운행차 휴식공간 시설을 갖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량관리 및 예산집행을 수기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차량관리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청의 경우 새울이란 내부행정 프로그램에 차량관리 시스템을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차량관리 전문가와 전산프로그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별로 배차, 운행, 유류 수불, 정비 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새울 전산 프로그램을 차량관리 전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주시 차량관리 규칙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별도 규

정이 없으며 과태료 및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완벽하게 운전을 하여도 상대방 잘못으로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을 노조와 협의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차량정수 조정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수 관리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신규정수 승인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수 승인 후에도 시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운송 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신규정수 승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설치문제에는 좀더 운영을 지켜본 후에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차량관리 전문가를 배치한 차량 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본청 재무과, 사업소 주무과, 구청은 행정지원과로 구분되어 차량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무담당자가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차량관리 전문가가 있는 차량관리 전담팀이 있다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본청, 사업소, 구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체제상 차량관리와 예산집행의 통합처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관리 전문 인력을 총괄 관리 부서에 보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유재권의원(삼천1·효자1·2동)

▶ 거마공원의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에는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이 145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마다 지역 특색화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사에서 박지성공원을 만든 것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에서, 덕진 체련공원 등 대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중에서 4개동 이상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삼천도서관이 설치되어있는 거마공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마공원은 삼천1동을 비롯하여 삼천2동, 효자1동, 효자2동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주부, 어르신들

까지 즐겨 찾고 있으며 면적이 20,580m²나 됴에도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꽃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공원입니다. 또한, 거마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에서 물만 뿜어져 나오기만 하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리가 잘 안된 분수원의 오염으로 각종 질병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마공원을 지역특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공원에 꽃이 없어 쉼터로써 부족합니다.

현 상태에서 꽃을 식재하지 말고 5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한 후 꽃나무 및 일반꽃을 식재하여 쉼터로써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또는 행사장이 없습니다.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익수영장에서 호문여중 앞까지 400m에 프라타너스 나무 41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눈병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프라타너스 나무를 백일홍 꽃나무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 290m에 이르는 대로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백일홍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뜨거운 여름날 벤치에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벤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꽃나무 그늘벤치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구대를 1개에서 2개로 설치하여 어르신 및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원 조성과 다섯째, 정기적인 분수원 오염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수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하진 시장님의 성실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4기 이후 8월 현재 전주시의 기업유치는 2006년도 41개사, 2007년도 54개사이며 이들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비는 82억2천6백여만원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우수기업유치로 인한 기업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전주시의 건전한 재정 육성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고용창출, 기업 유치 직원 및 가족들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력 활성화로 전주시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유치시 세금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법 제274조에 의거 감면되며 재산세 또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제23조에 의거 감면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수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2007년도의 경우 44개사로부터 미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9억1천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민선4기 보조금으로 지원한 82억원대비 11%수준입니



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외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근로자까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18개사 중 서비스 업체인 콜센터 3개업체는 신규로 직원 20명 이상을 채용하였으나 제조업체 15개사 중 신규로 20명 이상 직원을 채용한 업체는 1개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시 근로자 일정비용 이상은 전주시민을 채용한다는 협약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업유치 전략, 시민들의 생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 지역 상권 및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 중 해당기업 근로자가 전주시로 유입되면서 가족까지 함께 우리 전주시로 유입된 회사는 금강메디스, 미래듀 등 일부회사 직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역상가, 식당, 유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가족까지 전주시로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 경쟁력 활성화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주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째, 민선4기 이후 기업을 유치한 95개 기업중 첨단 산업을 선도할 우량기업은 몇 개 기업이며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업체에 공급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업유치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시로 이전한 회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만 법인세할 주민세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시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우리시지역으로 기업이전 후 신규로 우리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시 이에 따른 행정적인 인센티브 수혜 방안과 넷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유치한 기업 근로자와 가족까지 함께 전주시에 유입되어 거주인구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전주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거마공원의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거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특색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에 화목이 없어 쉼터로서 부족하니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꽃나무 및 일반꽃을 식재하여 쉼터

로써 공원을 조성하지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공원은 99년도에 조성한 공원으로 교목(키큰나무)은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15종 170여주가 관목(키 작은나무)으로 자산홍, 수수꽃다리 등 8종 3천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재 수종 중 봄에 피는 화목류로는 이팝나무, 산수유, 왕벚나무, 목련 등 6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여름철에 피는 화목류로는 자귀나무, 화화나무, 배롱나무 등 3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벚나무, 영산홍, 자산홍은 물론 기타 화목류를 추가로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도시공원 녹화사업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 공연장 설치와 주변가로수 수종인 플라타너스가 눈병 등 부작용이 있으니 백일홍으로 교체하고,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 대로변이 삭막하니 백일홍나무를 식재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설치를 검토해본 결과 거마공원은 현 시설율이 40% 수준으로 법적 시설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다달아 여유 비율이 없어 추가 시설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면서 불량하거나 불필요한 기존 시설의 축소 또는 대체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백일홍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삼익수영장에서 효문여중 앞까지는 플라타너스 103주, 광진목화사거리에서 거마공원까지는 은행나무 77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백일홍은 여름에 피는 꽃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로수로 식재하기보다는 공원지역에 독립수로 많이 식재하는 수종이며, 또한 백일홍은 뿌리부터 움가지가 잘 돌아나고 지하고가 매우 낮아 차량통행 및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보다 공원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거마공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식재된 플라타너스로 인하여 눈병 등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2년 주기로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종자 깃털 비산을 최소화 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벤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꽃나무 그늘벤치를 조성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마공원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물 주변 일부 수목의 생육불량 및 고사로 인하여 쾌적한

녹음공간이 일부 반감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도시공원녹화사업에 꽃나무 녹음식재 등 시민휴식공간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구대를 1개에서 2개로 설치하여 어르신 및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구장 조성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마공원의 시설을 여유 부족 등 여건상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여성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완산구청에서 금년도 9월부터 공원내에 야외헬스용 운동기구 12점을 설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분수원 오염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수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마공원내 분수는 1999년도 거마공원의 이미지 개선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조각에 분수를 접목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분수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관람목적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휀스를 제거하여 한여름 시민들이 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토사 등 각종 오염원이 지하물탱크에 유입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완산구청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물갈이와 세척을 실시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공원시설물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더 이상 분수원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결과 분수 배전반에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자체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경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

유재권 의원님께서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량 기업들이 많이 유치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후방 관련업체의 동반 성장,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기반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고 봅니다.

먼저, 민선 4기이후 유치한 95개 기업중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량기업은 몇개 기업이며, 우리지역 자생업체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4기가 출범한 이후 9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창업 19개 기업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 유치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부품 54개, 영상정보 9개, 섬유 5개, 식품 4개, 콜센터 4개, 기타 19개 업체로

○ 우리 시에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코자 하는 5대 신역동산업인 부품소재, 생물생명, 영화영상 산업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계 부품소재 분야 54개업체 대부분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주에 이전하거나 창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전주 기계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6~7개 업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기업으로 기존 생산라인으로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공장을 증설하고 기술인력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머지 않아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최근 기계부품 업종이 다수 유치되고, 첨단산업 분야 R&D기반이 확충됨으로써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원자재 구입, 운송장비 활용, 부품납품 등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자생업체 성장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4기 2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 전주경제 키우기의 핵심전략을 압축하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기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 7월에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유치의 절대적 여건인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60만평, 조성과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나노센터,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원, 탄소섬유 및 원천소재 개발



등 R&D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 전문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도 유치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현장학점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내 전 기업들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업의 애로나 민원사항을 즉시원하게 풀어주는 “민원 해결 솔루션 500”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비수도권기업이나 유망분야 창업기업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망 중소기업이나 스타 벤처기업을 중견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전 후 우리 시민을 신규채용시 행정적인 인센티브 수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제도상으로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80만원씩 1년동안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이 이전하여 신규로 20인 이상 채용 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 신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신규로 5명을 초과할 경우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하여 유치기업 근로자와 가족까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오히려 유입됨으로써 지역상권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 그 동안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유입된 인구는 78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인구 유입대책을 말씀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위해 기업이전 실상을 설명드리자면 기업이 이전을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통상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여 기업의 유치가 인구 유입으로 곧 바로 연결되지 못하며

○ 기업이전 초기에 고급 기술 인력은 기업과 함께 이주하여 종사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이전하기 전에 현지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단순 기능 인력의 경우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따라서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자녀교육 등 생활기반이 수도권지역에 정착된 가족들까지 동반이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전주 고유의 문화, 교육여건 등 우수한 생활환경은 물론 전주시민 정서, 무채해 등 살기 좋은 도시임을 적극 홍보하고, 근로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현지 체험을 통한 이주를 유도하고

○ 기업 근로자 가족들이 전주로 이주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만족할 수 있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Q 이명연의원 (인후1·3·우아2동)

▶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세금환급에 대하여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떠나없이 최고의 옵션을 내걸고 있는데 불박이장, 싱크대는 물론 신발장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식기세척기, 세탁기, 김치냉장고, 반찬냉장고, 비데, 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소형 LCD TV 등 그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빌트인(Built-in)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구 및 가전 제품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게 되고 결국 그 분양가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므로써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더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지역의 실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에도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고지서 발급 및 징수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며 징수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자치단체마다 환급과 환급거 부로 해석이 달라지는 데에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 또한 2년 동안 3번이 나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를 보면 국무총리 주재 IT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제외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결과 향후 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 받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5년 2월1 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19호에서는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세무과-10656호로 행정자치부에 재차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서 “개인이 법인으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옵션 계약분만 빼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엔 환급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입주한지 석달이 지난 경우에 이의제기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세법 조항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2005년 11월 대구시는 침산동의 한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빌트인 가전제품 값은 산정기준가에서 제외해 가구당 수십만원 조세부담을 덜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전주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신규 공동주택은 완산구에 광진 햇빛찬 아파트 외에 4개 아파트 2,402세대와 덕진구에 위브어울림아파트 외에 6개 아파트 5,201세대 총 7,603세대가 분양되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가전제품 금액을 세 대 당 100만원으로 추정하였을 시 등록세 76,030,000원, 취득세 76,030,000원 농어촌특별세 22,809,000 원 교육세 30,412,000원 합계 약 2억 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시장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답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 공급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현황에서 덕진구는 분양가 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에 과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완산구에서는 분양가외에 별도 옵션 계약한 가전제품 등은 선택자만 별도로 과세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왜 전주시 과세행정이 구청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설명 드린 행정자치부 세정과-467호 의 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다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세정과-467 호 “향후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원가 내역을 제공받아 아파트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 납부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기 바람”에 의한 우리 전주시 취득세와 등록세 공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 2월 16일 인후동 “위브어울림아파트”의 주민이 덕진구청에 빌트인 시설의 취득세·등

록세 과표 질의를 하자 그 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가전제품 등을 탈 부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고정 부착한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되었고, 본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킨 중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은 적법하다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직접 해당 아파트 내에서 조사한 바로는 주방용 소형 LCD TV는 나사 한두 개만 풀면 분리가능하였고 반찬냉장고 역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등은 언제라도 다른 것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탈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기존에 잘못 징수된 빌트인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환급해주시고 향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제 가능한 세금을 공제 후 징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모든 사항들을 덮어두고 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송천 복원시 공급수원이 아중저수지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과 아중저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진북 동 한국은행까지를 노송천 복원 1차 사업구간으로 설정하고 하천복원과 하수관리사업으로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차 사업구간으로 는 교동 군경묘지에서 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참 좋은 구상이며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난 2005년 12월 8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장 질문을 통하여 노송천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유지수량을 확보할 방안이 없으며 복원시 인도 폭이 너무 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보고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2007년 현재 어렵다던 그 사업이 희망에 찬 전주의 미래 환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었는지를 묻고 싶으며 이루어졌다면 몇 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과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중저수지는 2006년 1년간 통계를 보면 평균 담수율이 60% 정도로 61만 3천 톤 정도가 유지되었으며 188ha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아중저수지 상류에 있는 재전저수지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조금 안되는 1999년에 완공된 저수지로 26만 5천톤을 담수할 수 있는 작은 저수지로 34ha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15만톤 정도의 물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송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2005년 그 때에는 거론조차 없었던 아중저수지의 물을 노송천



의 주된 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2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석상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국철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상세히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아중저수지에서 노송천에 끌어 들이려는 유지수량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 8월 64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아중저수지 제방 붕괴를 우려하였고 이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 여수로를 낮추어 당초 120만톤의 저수량을 90만톤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여수로에 고무보를 설치하여 초과되는 물과 아중저수지 상류의 재전저수지 수량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드는 유지용수를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데 아니기 때문에 아중천 유지용수에는 변화나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작년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발표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작년 답변에서는 아중저수지 유지수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전 저수지 물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발표된 계획에는 재전 저수지 물의 사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아중저수지의 물과 낙수정 지하관정 은행로 지하관정 그리고 폐광산 유출수를 시굴하여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노송천 하류에 순환 펌프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수량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점은 아중저수지의 수위 배정이 묵방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재전저수지, 재전마을, 용계마을, 왜망실, 기린봉 등에서 아중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 12월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가야 할 물을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전저수지 물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아중저수지 물을 사용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아중천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아중저수지 여수로가 넘쳐흐르는 것은 1년 중 서너 번에 불과하고 가끔이나 물이 부족한 아중천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하천에도 물이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그 물을 이용해야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 시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물과 2년전 집중호우시 아중저수지 뚝의 붕괴를 우려하여 여수로를 1.2m 낮추었고 집중 호우시 제방 아래 거주하는 주민들은 때 아닌 피난의 짐을 챙겨들었는데 그 여수로를 다시 높이고 36만톤의 물을 더 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인 아중천은 어떤 방식으로 깨끗한 수질의 물

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돕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재전저수지와 아중저수지의 물은 첫 번째,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공사가 진행 중인 아중천 생태하천 용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아중저수지 제방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을 안고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좌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인후동 서낭로(500m) 도로개설 지연에 대하여

인후동 서낭로 중로개설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동 서낭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으나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주시는 1980년대부터 병무청 사거리에서 전주농고 앞 안덕로를 거쳐서 금암동 연평도 해물탕앞 백제 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8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600m의 전주농고 학교 내 구간과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낭로 사거리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구간 내에는 약 200여 미터의 비포장도로가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원은 조속한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2006년 추경예산과 2007년 본 예산에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200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지난 200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토지보상과 도로 개설비 합계 50억원의 예산 중에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년 동안 29억원을 들여 토지 와 지장물 보상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비는 1원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2008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한다 하여도 폭 20m에 길이 약 500m의 도로개설을 위해 보상하는데만 6년이 걸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 또는 6년 이상 오랜 시일에 거쳐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시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언제까지 인후중로개설을 미루며 끌고 갈 것인지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분과 절대 같은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주시 행정에 어느 누가 박수를 치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3월, 시민들의 원망과 탄성소리를 이 자리에서 애절하게 대신 전하였고 추경이나 본예산 때마다 관련부서에 재차 강조하여 설명 드렸는데 혹시 그때마

다 잊으신 것인지, 대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의 기준과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우선 집행된 사업이 없었는지, 있다면 왜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성실할시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의 우선선정한 배경도 설명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A 송하진 시장

▶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세금환급에 대하여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에 부과된 세금 환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용도, 형태, 목적 등 관계를 종합하여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능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은 건물의 종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행정자치부는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전주시 과세행정에 대해서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빌트인 시설 아파트는 총 12개소 7,603호이며, 그중 덕진구 2개소 1,364세대의 경우 빌트인 시설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별도 옵션계약으로 인한 과세 실적이 없습니다.

완산구의 경우도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나 다만 1개소(대림e편한세상) 652세대의 한 아파트단지만 빌트인 시설을 별도 옵션으로 계약하였기에 빌트인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별도 과세한 것이므로 구청별로 업무처리가 상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받은 후 공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자부가 2005년 IT업체와의 간담회 요구사항으로 빌트인 시설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분양된 빌트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빌트인 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일체의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중

하여 과세 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 북구청만 당시에 공제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덕진구 소재 위브어울림아파트 빌트인 질의 답변에서 탈부착이 가능함에도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브어울림 아파트 빌트인 시설에 대한 탈부착 가능 판단은 단순히 탈부착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종물로 보았으며, 주방공간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여 설계부터 주방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탈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트인 시설에 대한 잘못 부과된 취득·등록세는 환급해주고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 빌트인 시설 과세여부를 놓고 행자부에서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 재는 빌트인 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2007년 4월 행정자치부 공문 시달로 과세방침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간 일관되게 빌트인 시설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을 과세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노송천 복원시 공급수원이 이중저수지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노송천 복원시 공급수원이 이중저수지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좋은 구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송천 복원사업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몇 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과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송천 복원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날로 공동화 현상이 커가는 구도심 상권의 회복과 도시의 열섬해소,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옛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는데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2007년 1월 지역주민, 상가대표, 시의원, 관계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한국농촌공사 등 각계각층의 간담회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여러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업으로 부각되어 복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환경부, 전주시 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화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후 노송천 복원 민·관협의회를 2007

년 4월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및 관계분야 전문 가
등 18명으로 구성, 전주시청에서 4회(2007년 5월, 5
월, 6월, 8월)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유지용수 확보
방안, 하천 단면, 조정 및 식재계획, 교통처리계획, 침
수피해대책, 우·오수분리시설, 중앙시장 활성화방
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현 재 용역을 진
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여 가동보를
설치, 노송천으로 공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당초 노송천복원 유지용수로 아중저수지를 택한 이
유는 2005년 8월 64만톤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당붕괴 우려와 아중택 지 등 물리면적이 줄어들어
2006년도 한국농촌공사에서 여수토를 1.2m 낮추어
당초 127만톤의 저수량이 91만톤으로 줄었음을 확
인하고 한국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시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여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를 설치한다면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노송천
유지유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난 20년간 아중저수지 만
수위가 년 5회 정도로서 연간 180만톤이 더 저장되어
아중에서 노송천 유지용수로 122만톤만 공급하는 것
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중저수지 연간 총유입량
은 724만톤 중 농업용수 157만톤, 아중천 유지유량
75만톤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노송천 유지용수 122만
톤, 홍수시 월류량 314만톤 등 아중저수지 연간 총 유
출량은 668만톤이 되도록 하고 한계저수량 56만톤으
로 설정해서 수량 이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여 저수지 주변 경관과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갈수시에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감
안하여 노송천 상류 자체 지하수와 노송천 순환시설
을 이용하는 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방안 등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써 아중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아중저수지 여수토를 1.2m 높일시 제방아
래 거주하는 주민 안전에 대한 대책과 아중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천유지수를 공급하는지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간 이 문제와 관련 한국농촌공사와 여러차례 협의
검토한바 아중저수지 여수토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홍수 예방을 위해 수위센서를 설치하 여 일정량의 수
위가 올라가면 가동보가 자동으로 개폐되고 저수량
이 방류되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므로서 홍수시 홍
수조절 효과와 갈수시는 수원확보 효과가 있어 고정
보에 비해 매우 안전한 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아중저수지의 안전 한 관리를
위하여 제방 안쪽 상부까지 사석 쌓기와 파라펫트 옹
벽을 설치함은 물론 제방 포장과 의자 등의 편의시설
을 설치, 깨끗 한 환경과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물리구역 주민들이 농지를 경 작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
계저수량 56만톤이 될 경우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
고 자체 순환시설 등 을 가동 공급하겠습니다,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유지용수에 대하여는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아중천에 필요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후동 서남로(500m) 도로개설 지연에 대하여

서남로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 500여m 구
간 도로개설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로 500여m 규모의 도로개설에 6년이상 걸
리는데 이와 같은 곳이 또 있는지와 그렇게 된 사유
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로는 백제로~안덕로~전고사거리까지 연장
2,850m 폭 20m인 중로1류 1호선으로서 총사업비
269억원중 지난 2004년까 지 159억원을 투입하여 백
제로~인후2동사무소, 인후오거리~안덕로, 전고사거
리~동초등학교까지 총1,722m를 연차별 투자하여 구
간 별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초등학교~인후오거리 구간
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80%
의 토지매입을 하였고,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2010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도로계획현황을 보면
2,707개노선 734km로서 현재 2,189개노선 560km는 12
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이 완료되었으며, 미개
설 도로는 518개 노선에 174km로 1조 6,100억원 정도
의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되며, 그간 도로개 설
사업이 민원 위주의 소로개설 사업과 교통량이 많은
대로 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 대부분의 도로개 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로와 중로, 대로에 이르
기까지 한정된 예산형편상 사업 시작에서 완료까지
6년이상 10여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감
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표적인 지연 사례로써는 남부순환도로 10년째, 전
주진입로 9년, 전주천 좌안도로 8년, 송천동 한양아
파트~동부우회도로간 송천중로 8년, 서노송동 코아
앞 소로개설 9년등 오랜기간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
행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통해
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
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우선순위 기준
은 무엇인지와 시장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은 세
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사업
부서의 예산편성 의뢰를 받아 중기재정계획 반영여

부와 사업의 기대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부신시가지와 같은 공공개발사업과 공동 주택사업 등 민간 개발에 의한 주변개발여건 및 교통유발 추세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해나가기 위해 우선적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남로는 계속 사업으로서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사업이 먼저 집행된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임병오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전주문화축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전주시 문화축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 정책에 대해서 전주 천년 맛잔치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문화축제 국비확보에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켜라라 주제를 가지고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주문화축제가 더 이상 우리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먼저 주장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각종 행사를 만들어 치루며 행사규모를 질과 양면에서 국제적으로 외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도 민선 4기를 맞아 기존의 문화행사를 대폭 정비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역적인 특색과 여건에 맞춰 새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유치하는 등 천년전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이런 노력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치러지는 문화행사는 한방약령축제, 한지축제, 단오제와 올 11월 처음 개최되는 전주천년의 맛 잔치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 가운데 전주시의 지원을 받는 몇몇 행사는 그대로 성공리에 축제를 마치겠지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행사들은 축제가 끝날 때마다 끊임없는 후유증을 앓아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전통의 도시 전주를 표방하며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치러왔지만 정작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는 등한시해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도내에서 치러지는 행사 중 남원 춘향제는 아니더라도 전주에 비해 전통과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김제지평선축제 3억원, 무주반딧불축제 1억5천만원, 특히 임실 필봉농악은 금년에 2억 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주시와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견주어보면 전주 단오제와 쌍벽을 이루는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후 매년 4억9천5백 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인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옥마을 지킴이 의원으로써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치러진 전주단오제는 행사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가 문화행사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지만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전주 천년의 맛 잔치 축제만이라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히 준비해서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아 국비확보에 차질 없도록 시장께 서는 전주문화축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 천년 맛잔치 축제의 한옥마을 개최에 대하여

전주의 천년 맛 잔치 축제를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주 문화 행사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20일 풍남동 동사무소에서 풍남제와 단오제 행사 설명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풍남제와 단오제 주관부서인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장현욱 실무과장과 축제행사 관련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각종 자생단체 임원들을 모시고 금년부터는 풍남제와 단오제 행사를 덕진공원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고 행사의 전 문화와 풍남제의 새로운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문화 축제를 전국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자 자생단체 임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단오제는 몰라도 전주의 가장 큰 대표적인 풍남제 행사까지 덕진공원으로 아무 대책 없이 가져갈 수 있는냐고 격분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반응에 놀란 관계관계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가을에 치러지는 ‘전주 천년 맛 축제’ 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옥마을에서 치르겠다”고 약속하며 가까스로 설명회를 마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설명회라기보다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던 전주시는 풍남제 행사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옥마을에서 덕진공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이마저도 부족해서 꼭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겠다는 전주 천년의 맛 잔치마저 사전설명회나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전주시의 편리한 임의대로 지난 8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송하진시장께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말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내용을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전주시 행정에 참담함과 불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주시의 행정 횡포와 난맥상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동안 송하진 시장께서 천년전주를 꿈꾸며 전주를 가꾸어온 취지에도 전적으로 위배되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을 배제하고 치르는 전주 맛 축제는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여론임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주시는 지역주민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필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왜 한옥마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 주된 이유가 코아축에서 코아아울렛 매장을 빌려주거나 임대해 주지 않아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전주 맛 축제와 관련해 코아축에 질의한 공문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아축은 개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전주시의 공적인 사업이기에 언제든지 임대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코아축에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차원은 물론 천년전주의 향기가 서려있는 한옥마을에서 전주 맛 잔치를 꼭 개최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월9일 풍남제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직시해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 천년 음식축제 신설은 11월 중 한옥마을에서 반드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을 상대로 전주시 행정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나친 행정의 남용을 초래한 크나큰 사건으로 불리워지고 말았습니다.

한옥마을 주민과 구도심에서 영업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수천의 상인들은 빼앗긴 풍남제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주 천년 맛잔치는 약속대로 한옥마을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모래성에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민을 상대로 두 번 다시 파전을 뒤집듯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문화축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전주문화축제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축제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축제 중에서 우수한 축제만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축제 예산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된 축제는 총 52개 축제로서 최우수 축제 5개, 우수 축제 9개, 유망 축제 13개, 예비 축제 25개이며, 이중 최우수 축제는 3억원씩, 우수 축제는 1억원씩, 유망 축제는 5천만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1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하고 도에서 다시 5~6개의 지역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평가와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축제 중에서는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등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받았습니다. 전주문화축제 중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2년 연속 우수영화제로 선정되어 작년에는 5억 5천만원, 금년에는 6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통합 운영되었던 전주문화축제를 축제별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부터 분산 개최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축제보조금 예산에서 2천 만원을 축제 건설팅 비용으로 확보하고, 전문건설팅 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수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주 천년 맛 잔치 축제의 한옥마을 개최에 대하여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겠다는 당초 약속 이행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천년의 맛잔치는 전주가 맛의 고장으로

서 전통음식의 산업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새로이 개최하는 음식관광축제입니다.

음식축제는 특성상 다른 축제와는 달리 음식의 전시, 체험, 경연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실내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야외공간도 필요하는 등 축제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음식축제가 한옥마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옥마을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한옥마을내에 소재하고 있는 코아아울렛 건물을 주 행사장으로 하고, 태조로를 포함한 한옥마을 일원과 관내 음식점 등을 부대행사장으로 적극 검토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코아아울렛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코아아울렛 측에서는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축제장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을 해움에 따라 부득이 주행사장을 화산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당초 음식축제가 한옥마을 중심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한옥마을 주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실망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최되는 음식축제 기간 중에 한옥마을에서도 김장축제 등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음식축제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아아울렛을 음식축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공문의 공개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아아울렛 건물을 전주 천년의 맛잔치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월 중에 축제 주관단체인 (사)풍남문화법인에서 코아아울렛 소유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바, 회사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 7월말에 (사)풍남문화법인에서 다시 코아아울렛 소유회사 관계자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한 바, 현재 코아아울렛 건물에 대해 매각 협의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축제 행사장으로는 허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말 담당과장이 직접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코아아울렛 건물을 음식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똑같은 이유로 허용이 불가하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아아울렛 사용승인 요청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구두상으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관련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축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장소를 가급적 조기에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아아울렛을 축제장으로 제공한다면 한옥마을에서 음식축제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11월중에 개최 예정인 전주 천년의 맛잔치는 행사계획이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었고, 타지역 관광홍보 등 각종 대내외 행사 때마다 홍보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맛잔치 홍보 부로서를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에 배부하고 언론 방송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온 현 시점에서 축제장소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축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와 대 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으로 금년에는 이미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김광수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 법무행정 강화 방안에 대하여

오늘 제가 전주시의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전주시 행정에 정통한 한 선배 변호사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에서 전주시가 시민에 대한 법률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행정처리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법무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로 평가를 대신하셨습니다.

법무행정 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저런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주시 법무행정의 문제점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한 이격거리 내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시설물 설치허가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전주시장의 명의로 2006년 6월 석유 판매업 등록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주유소 측에 조건부 등록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고,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신축하던 업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등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6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곧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H종합건설에서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처럼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할 수 밖에 없는 미온적 행정처리로 1심과 2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하여 3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소송 사례처럼 법적용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전주시의 행정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준 일련의 사건들과, 두번째 민사소송 사례처럼 32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07년 9월 현재, 전주시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총 83건에 이르고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은 총 8건에 청구금 총액이 무려 26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전주시민이 납부한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81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05년 31건, 2006년 49건, 2007년 9월 현재 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주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손실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패소원인별 사건유형을 보면, 대부분 사유토지의 점유에 기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펼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나 기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은 후 원인행위에 대한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즉 전주시로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보존기간 경과로 당시의 서류가 폐기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토지 브로커들이 제기한 소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시대나 60~70년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으로 인해 전주시가 떠안은 패소부담금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4년간 총 250건이 피소되어 이중 131건이 패소, 88억원의 패소부담금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현재도 20여건의 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4년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만도 6억 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행정의 누수나 공백으로 인한 재정낭비이며, 이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법무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법률문제에 있어서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의식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지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은 수십·수백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아예 법률군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덕진구에 홈플러스를 개장한 삼성그룹같은 경우는 150여명의 변호 법무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어 수십·수백

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기업에 상납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단 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의 내용파악을 위하여 담당자 면담과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당사건을 합의로 조기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소송발생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 제도하의 단순한 법률자문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떠안게 되는 패소부담금을 조금만 줄여도, 즉 승소율을 조금만 높아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소송이전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완벽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악덕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주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의 법무팀을 강화하여 판례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내고 정부기록실의 문서를 뒤져서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로나 하천부지 소유지 등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 산하 법무팀은 소송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업무담당과 계약직 7급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전주시의 민사·행정 소송을 단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만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조직상의 법무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법무행정 강화 방안에 대하여

김광수 의원님께서서는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처리 의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고액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그간의 미온적 행정처리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며, 기간 법무팀을 주축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과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 소 제기 30일 이내에 사건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함께 모여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적 분석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시의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저조한 실정이나 2005년은 81.5%, 2006년은 82.1%로 점차 상승하여 올해 9월 현재 85%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실무 경험에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사건에 전문적인 대처와 금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자문을 활성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변호사의 채용문제 및 행정의 접목, 근무기간, 성과보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과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및 법무연찬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

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는 각종 분쟁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행정작용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여 소송의 일부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처리절차와 청문 등을 법무팀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주시의 주요 업무 추진시 사전에 6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또는 법률자문 토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률적 분쟁을 소송이전 단계에서부터 보완 해결하는 예방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와 행정처분담당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2회 이상의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소송기법, 노후의 소송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의 내실 있는 법무연찬 강화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완벽한 법률 행정서비스와 함께 법률위에 잠자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덕 토지브로커 개입으로 매년 급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피소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제기로 시소유 재산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무팀의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가인 악덕 토지 브로커로부터 국·공유 재산이 잠식당하는 행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고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4일 승소함에 따라 공시지가 36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온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정규법대를 졸업한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15명이 모여 법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유재산 되찾기와 주요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악덕 브로커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동아리 활성화로 전주시 행정로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의 법률 마인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 익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무팀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선 비조직기구인 법무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인력증원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법무동아리를 주축으로 도로부지, 소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 미이전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2010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 상당의 목표 를 추진함으로써 악덕 브로커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오송지구(송천동)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송천동 오송지구 26만4천㎡의 땅중 한솔 솔파크, 진 흥 W-park, 현대 I-park, 2,542세대가 도시계획 아파트 단지계획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지형은 건지산 산허리 해발 80m에 있는데 60m 까지 깎아가면서 도로를 내면서 20m 중로가 만들어 지고 또 부근은 오송저수지가 있고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공원지역과 비행안전지역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상 가장 악조건인데 3개 아파트 단지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오송지구는 전주시의회 특위 의 감사대상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했으므로 사업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아주 잘 했어야 하고 건축심 의, 아파트단지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했어야 하는데 주변환경을 고려한 세세한 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사업이 시행사별로, 진 흥 더블파크, 유로레스, 아이콘스 이렇게 시행사별로 3개씩 따로 따로 모자이크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도로, 교 통, 초등학교 중학교, 하수체계, 근린공원, 녹지비율)이 부족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입주민의 불편이 뻔할 것이고 나중에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로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난개발의 현상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서곡지역, 하가지구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 을 하면서 분양원가를 최고로 상승시키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한데, 그래서 사전예방 보완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는 왜 중요하나,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케이블, 가스, 통신등 7개의 가닥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되면 다른선으로 가면서 왜곡되죠.

도로 중로-소로 연계성, 도로가 중로가 있으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끊기고 개설되지 않고 출퇴근시 교통체증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위의 지구단위이나 토지구획정리없이 기부채납 사업으로 모자이크 되다보니 도로소통 소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자의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부서 직원과 1에서 6번항목까지 세세히 도면을 놓고 검토보고를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요약하면 6가지로 대별되고 몇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은 노폭이 16m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8m 도로입니다. 중로를 내는 것은 중로 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고 소로는 소로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도로가 되어서 중로 기능을 못하고, 두번째 한솔 솔-park 동쪽 20m 중로 1-53은 옆에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훈련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소가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대에서 업무협조, 도시계획 미협의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주요양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를 깔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주요양원은 수도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점이 있고, 세번째 오송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옆 동쪽에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어있지 않았습다. 왜인 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는 바로 한솔 솔파크가 분양원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사유지로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지 도상의 도로이지 실제로로는 아니라는 말이죠.

네번째는, 송천 6만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지산 장덕사입구에서 동부우회도로 까지 6m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24와 소로 1-222인데, 쪽 낀데 중간부분에서 끊겨 있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동부우회도로로 빠져요. 2,554세대는 동부우회쪽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막혀있고 덕진공원 우회도로 쪽으로 가야하는 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대중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은 2,454세대가 빠질 수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소통하는 1-53도시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변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예비군 대대 앞의 사도로로 다녀 야 한다는 것이죠. 2,545세대면 차량이 한 5천대, 6천대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 도로없이 한쪽이 막혀있으면 통행량에 문제가 생 기겠죠.

여섯번째, 송천주민 6만여명의 사랑을 받는 건지산 등산로중 60%정도는 장덕사 입구로 돌아다니는데, 입구 등기점인 데 지금 3m의 오솔길 같은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20m로 넓어질때, 요즘 산을 가는 추세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악산이나 가지만 노약자나 병약자 등 불편한 사람들은 건지산 이 휴양처더라고요. - 병원 휴양시설같이 - 그래서 그분들이 끊 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호 대기시간으로 쉽게 말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 거동불편자 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해찰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올라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등산로 접근, 전주시내가 다

그립니다. 황방산 서곡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 산와 주거지는 꼭 통행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태이동 통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 을 설계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보이지않는 함정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2007년 7월 18일 현대 아이콘스 현장사업소장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천동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몇명이, 4명이 농성을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관철할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문제점은 2009년 9월이면 2,554세대가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 끝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빈공간은 시가 해야죠.

왜, 교통영향평가 해주고 주택영향평가 해줬으니깐 나머지는 시가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0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보이지않는, 지금 내가 입체적으로 말하지않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1-12라는 중로가 현대 4차 앞에서 아이파크 5차 쪽으로 신설되는 20m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가 건지산 해발 80m되는데 60m까지 쪽 올라가서 깎아 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20m도로가 8m도로로 확 내려와, 그러면 시야가 보여야하고 각각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 때 운전자가 차를 어떻게 돌려, 90도 각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중로 2-12는 송천동에서 덕 진공원 우회도로를 따라서 현대4차 그쪽에서 쪽해서 사격장을 거쳐서 예비군대대를 거쳐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를 향해서 동북부, 봉동 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인데 35사단 이전계획에도 사격장과 예비군 대대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된다는 말이에요. -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 2,500세대 이상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통체증은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소로와 중로는 덕진구청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하세월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계획 자체를 잘못했고, 아파트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대규모 민원이 생길 것이니까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구청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가 평가되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교통영향 평가 유료레스하고 아이콘스 것을 보니까 세번이나 심의유보를 했어요. 서류가 다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얏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엉망이면 하수관거도 엉망이겠죠.

건지산은 오송지구 26만4천여평에 짓는 지역에 3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없을때는 계속이지만 물이 늘어나면 개천으로 변해서 수마지역이에요. 그래서 최근 3,4년동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지면 도로

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진흙탕이 되어서 덕진구청에서 폐로이다로 다 걷어냈습니다.

예전 오송지구 264천평은 물이 저류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었어요. 물을 조금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상류에서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밑에 수로를 보니까 하수관거를 2.2m하고 2.2m 가로 세로로 되어있는데, 이 하나가 물을 다 받아내서 해야하는데 물이 갑자기 왔을 때는 어디로 가냐, 아파트는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다 지하실에다가는 지하실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비 왔을때 가 보니까 벌써 모 아파트 동쪽삼면은 물이 들이받쳐서 세척을 황토로 다 깔았더라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오수 계획선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죠.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그리고 3개 아파트 단지가 오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근린생활공원조차도 없고 산책하는 공원이 없어요. 단지계획은 충실해서, 단지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계획만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근린생활 정도는 있어야지, 만명이면 요새 자자체로 말하면 1개 면단위는 됩니다. 그러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인공소류지를,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에 물을 약간 저류해서 소류지를 만들어서 호수 수변공간에서 물 흐름 완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3개 회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운정신도시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개천을 8km를 만들어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인공폭포,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전주 혁신도시도 황방산에서 돌아오는, 천잠산에서 돌아오는 소류지와 바람, 다 풍향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19세기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 및 각종 민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송지구는 논과 밭 습지를 매립하여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는 연약지반으로 아주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로 중로 개설시 소로들 의 도로를 낼때 관계 규정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시험관리를 하고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신일아파트가 있고 현대 2차 현대 4차가 있고 현대주택등 단독주택에 2천여세대가 몰려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돈 만원씩 건어서 데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소음민원 현수막이 걸려있고 밤마다 동대표들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런데 아무런 현장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공사 사전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에서 했어요. 5월 29일날, 7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 속에서, 민원



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를 해야지 시청에서 시의원하고 관계국장, 건설업자, 시행사 불러놓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마인드의 발상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외래에 있다이거지.

그리고 주변도로에 지금 덤프차들이 토사를 파내기 위해서 다니는데 옆에가 연약지반이다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바라라고 소음 분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8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작동도 안되요. 그래서 “뱃데리가 나갔어요?” 청정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인가, 전주 시내가 다 이쪽저쪽 혁신도시나 서부 신시가 지나 공사현장의 소음측정이 제대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주민과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열섬, 바람, 내일이면 조레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60m 에 1차 용도로는 더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송하진 시장은 생태관광도시나 열섬현상에 대해서 시의회 공청회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건지산에서 오송저수지는 냉바람을 막는 인공벽이 되고있지, 바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어서 현대 3차 나 주공이나 이쪽은 또 열섬으로 있는 것이죠.

왜 그 바람 때문에 그래도 약간 괜찮았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면 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주풍향 바람의 통로조사와 오송저수지와 건지산의 냉기류의 생성조사, 지표면의 온도가 어디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했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의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레스가 시행하는 아파트 주변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대대간에 사격장 소음도 있지만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탄피가 날아올 수 있고 무선 통신장애등이 있어서 입주후에 민원이 다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하자보수가 단지에는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2년 밖에 안되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아파트 주민과 군부대가 충돌하면 전주시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것이고 동부우회도로가 노폭이 35m인데 설계는 실제 18.5m가 되니까 35m로 기분 좋게 오다가 노폭이 감소되면서 우회전 차량과 이 차량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이것은 도심속에 생활형 도로가 되는데 인도개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330억 든다고 하는데 한쪽이 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남쪽측면이라도 인도를 동산동에서 차량등록소까지 내귀가지고 송천도서관과 솔내청소년 수련실, 그리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할때가 되었다. 그러면 160억입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메

가월드에서 농산물 시장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도서관까지, 구간구간 사람이 밀집된 아파트 구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서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발단리 마을이라고 153세대 531명이 살고 있는데 고립된 섬이 되었어요.

왜, 전 라선 철도가 지나가 동부우회도로가 인도도 없는데 35m가 지나가,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사람들은 경작하고 살다가 송천동을 구경하려고 오는데 저 발단리 사거리로 1km이상 넘어가요.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도개설과 함께 4m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좀 미흡한 부분, 오송지구 방대한 것을 20분 내에 소화하려니까 우세두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오송지구(송천동)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

먼저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구 진흥더블파크 외 2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진흥더블파크 동쪽 중로 3-36호선 외 7건의 문제점에 대한 입주 예정전까지 미개설 도로개설완료 대책을 수립해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 “오송지구”는 서부 신시가, 하가지구, 효자4·5지구 등과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북도에서 사업 승인한 진흥더블파크와 우리시에서 사업 승인한 현대아이파크, 한솔 솔파크 등 3개단지 2,542세대로 사업장 주변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 도로개설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로소통의 연계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별로 작성된 답변을 먼저 드린 후에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

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호선입니다.

6m노폭의 반쪽도로로 축소되어 중로기능에서 소로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W-park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9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중로1-85호선을 비롯해서 총 5개 노선 2,161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 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부지 동측의 중로3-36호선(B=12m, L=259m)에 대하여는 폭12m중 6m는 개설토록 했고 나머지 미개설 도로 6m에 대하여는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토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은 주변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시에 개설토록 사업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활용 설명)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 그 다음에 중앙에 진흥 W-park,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현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진흥 W-park 우측에 있는 도로가 반쪽으로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게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6m로 개설을 하고 대신 12m도로 폭까지는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m는 앞으로 공사비가 투자를 해서 이쪽 개발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솔 솔파크 동쪽 중로 1-53호선입니다.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대대 미회부로 기부채납도 못 받아 도로 기능을 못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솔-park는 금년 4월 13일 1,2단지 총 860세대가 사업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부지내 중로2-81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폭 12~20m로 95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 주대대와 사격장 인접의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1-53호선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35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예비군대대 부지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사업계획 부지에서는 제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라든가 또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저희들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도면활용 설명)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에 있는데 전주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것이 대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솔파크의 부지가 아니고 대대의 부지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계획선은 되어있지만은 현재 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이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초교 동쪽 중로(2-74)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아파트단지와 학교 간 도로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부지는 1997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었고, 금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협약이 완료되어 현재 30학급 규모로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솔 솔-park아파트 중간지점의 중로2-74호선은 관련기관 협의시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전주 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는 남측과 북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면 통학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개별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오송초등학교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두개의 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육청이나 한솔파크 쪽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덕사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소로1-124호선과 소로1-122호선 구간 간선도로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인데 중간에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I-PARK는 금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소로1-124호선(L=573m B=10m)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에 포함 된 299m에 대하여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택사업에 미포함된 잔여구간 274m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122호선은 일부 개설이 되었습니다. 2개 구간 약 100여m가 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지역의 개발상태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노선은 지적하신대로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어져서 호성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소방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개설을 사업주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근이 두군데가, 동부우회도로쪽하고 바로 오성초교 옆 부근 두군데를 포함해서 약100여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를 이런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동부우회도로가 소통되는 중로1-53호선이 도시계획 조차 되어 있지 않아 2,500여 세대 3개 파트 단지의 동부우회도로 진·출입이 비포장 개인 사유지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 북측지역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으로써 94년 10월 7일자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천마지구로 지정을 해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중로1-53호선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마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전에 말씀드린 1-53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가 계획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천마지구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때 반드시 계획선을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지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지산 등산을 위한 20m도로 횡단에 대한 접근대책에 있어서는 안전에 필요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부분개설 되고 있음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교통추이를 감안하여 신호처리라든지 차선 설치라든지 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장덕사를 이 지역주민들이 가기위한 등산로를 탈때 현재 이 도로가 20m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중로 1-12호선과 소로 2-677호선의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1-12호선은 총연장 1,020m 폭20m로 대로 3-20

호선에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재 송천 현대아이파크에서 600여미터를 개설중에 있고 나머지 400여미터는 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m 도로가 8m로 노폭감소 및 도로가 끊겨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 면, 중로 1-12호선은 대로 3-20호선을 거쳐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앞 광장으로 접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노선은 중로 1-12호선과 연계된 별도의 소로 2-677호선으로서 이후 중로 1-12호선 잔여구간이 개설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로 1-12호선 및 대로 3-20호선은 예비군 훈련장 중앙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동부우회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677호선은 총연장 156m 폭 8m로 송천 현대아이파크가 개설중에 있고, 송천 진흥더블파크 3차 사업으로 개설중 인 소로1-195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야 및 시각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중로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후가 개설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구역 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라든가 이 소로가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소 이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가 충분히 가격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연계해서, 중로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로1-12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순환도로이지만 예비군대대와 사격장 때문에 지도상 도로일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12호선은 97년 1월 31일자로 현대4차 아파트에서 오송저수지 부근까지 1,020m가 폭 20m로 결정되어 600m를 현대 I-PARK에서 개설하고 있고, 예비군대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는 대로 3-20호선이 폭 25m로 820m가 결정되어 있으나 예비군대대로 인하여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형입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송지구 및 천마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35사단과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로가 여기에서 대

대입구까지는 20m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우회도로, 봉동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미는 여기까지는 25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대대 중앙부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현재 한솔 솔파크, 진흥 더블파크, 현대 아이파크 등 3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규모는 총 14개 노선에 4,391m로써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약 56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배수의 하수관거 체계와 3개 아파트 단지에 인근소류지를 만들어 인공호수, 수변공간의 물흐름 완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협의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천동 신일아파트 부근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 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의 관경, 구배 등을 검토 협의 하였습니다. 우·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지구 3개단지는 열섬완화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내 자체 수변공간을 확보 하였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호수 등 물흐름 완충시설 설치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흥더블파크는 마무리공사인 내부공사중이고 현대아이파크와 한솔 솔파크는 공사중으로 단지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연약지반 대책, 시공설명회 개최, 국제공인수치기 소음측정, 소음민원 방지 대책, 열섬완화와 바람길 확보대책, 한솔아파트 입주

후 민원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의 연약지반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일환으로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시공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대만산 소음측정기를 사용측정하고 있으나 이외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공사 공정별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과 시공사 입회하에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송천동 오송지구의 한솔 솔-park, 현대 I-park, 진흥W-park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시점이 2004~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열섬 완화와 바람길 확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열섬완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치형태를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 등으로 하도록 권고 등 협의하고 있으며, 열섬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3개단지는 친수공간인 벽천분수 등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9~92% 설치하여 지상 녹지면적을 30~32%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천동 유노레스 단지는 사업부지 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인접 배치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및 피탄 방지벽 설치와 무선통화장에 해소를 위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군부대와 아파트 단지 인접구간 울타리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상기 조건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 3-5호선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 1류 7호선은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대학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200m, 폭 20m로 송천동 남북측을 잇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그간 민간개발에 의한 주



공, 현대, 신일 등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까지(연장 1,100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천동 현대 4차아파트~팔학골~대학로로 연결되는 1,100m 구간이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하신 중로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송천동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로 3류 5호선은 의원남께서 지적하신 덕진공원 우회도로와 송천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연장 407m, 폭 12m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2002년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16필지중 10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대로1-1호선으로 색장동삼거리에서 동산역까지 연장15km 폭 35m인 대로로서 1991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쪽~차량등록사업소까지 4.7km를 확장하였고, 동산고교~동산역까지 0.3km는 2003~금년 여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장 구간은 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5.7km, 이중역~색장삼거리까지 4.3km로, 총10km에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는 개설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동·북부권 외곽 우회도로였으나 현재는 도심도로가 되어 차량정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 별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를 포함한 송천동 비행장선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km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인도 미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심하여 확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0억원 정도가 추정되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남관우의원 (진북·인후2동)

▶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책 추진 상황을 보면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책 업무의 경우 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토수립,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지금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한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 중산층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여 국가나 지방할 것 없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계층간에 대립과 마찰 또한 우리 사회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어둡게 만들고 가고 있어 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도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나 의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찬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전하는 전주건설과 전주시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한 송하진 시장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관리 대책에 대하여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 왔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다행히 비커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 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에서 우측 100미터 작은 호수가 신의 축복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지역 전주천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지역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남관우 의원님께서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매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오고 있음

○ 의 원님께서 “관리자나 담당자가 바뀌어 시책추진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는 시책 추진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선 순위나 집중도 등이 달라지는 경우나 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시효가 소멸된 시책의 시책일몰제에서 나타나는 경우이며, 항상 행정의 연속성을 견지하며 시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인 제약, 시민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재정투자의 한계, 기타 여건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에 부딪쳐 추진이 지연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음

○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시는 민선4기에 들어와 각종 시책이나,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 관리자나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제”를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실천해오고 있음

○ 또한,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와 150대 역점사업 및 공약사업 평가 등 다양하고 주기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먼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는 전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에게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한시적 일자리와 청·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시적 일자리는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노인·여성 등을 위해 4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7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도 총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59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지원교육사업,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만개 일자리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7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전주경제기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에 300개 이상의 기업유치 및 창업으로 6천명 이상의 고용창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콜센터 유치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센터에서는 구직자 맞춤형교육과 취업만남의 장을 상설 운영하여 1천2백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카본밸리를 조성하여 부품소재기업 및 연구소를 100개 이상 유치함으로써 2천명의 관련 인력을 고용 계획입니다.

콜 센터 3개업체를 유치하여 500명의 여성인력 취업과 신기술연구 및 맞춤형 직업교육, 인턴사원 등을 통하여 2천4백명의 인력을 양성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45백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취업정보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대책 외에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동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 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등 청·장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관리 대책에 대하여

진북동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21개소로 총연장이 95km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는 전주천 연장 12.5km, 완주군 상관면 시정계 ~ 삼천합류지점까지입니다. 12.5km에 해당되며 6개의 보와 여러 곳에 여울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시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많은 시민이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질이 양호하여 하천 내에서 물놀이 나뭇잎을 하는 시민이 늘어가고 있으나 하천의 특성상 위치에 따라 여울 등 깊은 웅덩이가 형성된 곳에서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26개소와 한벽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위험안내 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 왔음에도 지난 8월 6일에 쌍다리 위쪽 여울에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기존보를 철거하고 여울로 개량하였으나 빠른 유속으로 인해 깊은 소가 형성되어



물놀이를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수영금지과 안전사고 위험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양안에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당시 강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울이나 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울은 고수부지 보호와 산소공급으로 수질 정화 효과가 있고 소는 어류와 수생식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은골 쌍다리 위험지역 보완대책으로 지난 8월 11일 안전웬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전주천의 물이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른 곳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웬스 등 안전시설과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전주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특구 개발 제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무궁해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촉매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 형태도 문화적 지역 환경의 조성, 문화적 독창성 진흥, 관광 서비스와 문화·체험 중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000년 2,0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5,00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는 중국시장을 고려한 관광·기업·물류 허브로서 새만금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 관광객은 2005년에 5천만 명을 기록한 후 2006년에는 3천5백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주시의 관광객은 2005년에 330만 명, 2006년에 380만 명을 기록하여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타 시·군 과 비교해 볼 때 2006년 기준 남원시 450만 명, 무주군 420만 명, 고창군 390만 명에 이어 도내 14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5대 신역동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주경제키우기 5대 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두 번째인 생태관광산업의 요지는 문화 생태 공간 확충과 문화와 생태 환경을 연계한 태극형 생태 관광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와 연계된 생태 관광자원 개발 항목에 있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벽루·전주천 등 생태 관광기능 강화, 오목 대·치명자산·완산공원·화산공원·동물원·덕진공원 등을 건강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고뇌가 깃들인 계획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전주의 지리적 이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거시적 안목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 북부권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데도 북부권에 대한 지리적 조건, 인구 증가 요인 분석,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가 고려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관문인 이곳은 첫째,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둘째, 첨단 부품소재 단지, 혁신도시, 35사단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라는 점입니다.

전주 북부권은 혁신도시 35사단 부지 개발 및 첨단 부품소재 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장차 새만금이 개발됨에 따라 인구 유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전주IC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외에 종합 가족 휴양 공원을 비롯 전주~군산 간 벚꽃 100리 길, 하루 2천 여 명이 찾는 월드컵 경기장, 교통공원, 전주 수목원, 호남제일문, 북전주 화훼단지가 있고, 3Km 내외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 교지인 초남이 성지를 비롯, 농촌체험 곡천마을, 폐교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도강초등학교,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원동 하회재, 원 동 정보화마을, 바이전주 상품인 전주막걸리, 전주이강주,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등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지박물관은 팔복동에 자리잡고 있는 노스케스코크 공장 내에 있는 종이 박물관이 최근에 한지 박물관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1년에 약 10만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만경강 습지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며, 밀밭, 청보리밭, 포도, 원동배, 복숭아, 토마토, 수박 등 친환경 농산물이 4계절 생산되는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만경강 생태습지와 어우러져 가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 이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흡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텐보스는 2시간 거리에 후쿠오카등 3개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및 간선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연계 체제를 형성하여 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1,520km²의 면적에 1992년에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지금도 세계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곳 북부권이 I.C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하우스텐보스보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과 인구 증가 요인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부권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역이 만경강 생태하천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광객 증가와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생태 하천으로 가꾸어질 만경강과 북부권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생태·체험 관광 특구라는 큰 틀로 개발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테마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 동물원의 적합지라고 판단되는 청북마을 하회계 부근으로 이전하고 현재 조성 중인 전주 I.C 가족 휴양 공원과 본의원이 조사한 15개의 문화 관광자원을 테마로 엮어서 테마파크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물원은 협소한 면적, 놀이기구 노후화, 동물사의 노후화, 해양 동물 등 다양한 동물 부족, 온실 식물원 부재, 주차시설 부족 및 동물병원 부재 등으로 관람객과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27억 원 예산 투입에 고작 9억여 원의 수입으로 매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동물원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물원은 관람,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30년 된 노후화된 시설과 좁은 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 확충, 최첨단 놀이시설, 동물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갖춘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C 인근에 전주비빔밥 센터, 바이전주 우수상품 판매 센터,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센터를 설치 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과 흡입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도강초등학교는 농경역

사박물관과 농촌체험관으로 조성, 농경의 발달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지류를 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을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어떨는지요.

셋째, 전주이강주, 전주막걸리, 한지공장, 한지박물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화훼단지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체험과 견학이라는 테마로 전주이강주 체험, 전주막걸리 체험, 한지 체험, 농경 체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전주우수상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그림3>과 같은 구상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 특구가 지정되면, 전주시의 상징적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특구와 더불어 양대 거점을 축으로 진정한 태극형의 관광축이 형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태·체험 관광 특구사업은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즉 디즈니랜드를 만들 기 위해 은행에서 300번 이상을 거절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바친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63만 전주시민은 송하진 시장의 결단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꿈과 야망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월트디즈니(Walt Disney)보다 더 원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만 타하지 말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전주시 남부권에는 전통문화 특구, 북부권에는 생태·체험관광특구라는 양대 거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다가오는 환황해권 시대에 전주시가 세계적인 자치도시로서 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변모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 북부권에 생태·체험 관광특구 개발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전주 북부권 일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 체험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자는 의미있는 제안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가고 있는 생태관광산업



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만경강 유역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지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 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만경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환경의 지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 난 2001년 전북도에서 전주천 지구를 포함하여 총 6개지구로 나누어 200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지구는 도심 진입부로서 환경과 만남의 장소, 하천과 도시의 만남을 테마로 도시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위주의 조성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질개선 부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면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은 '당해지역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거나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아직은 부합되지 않아 당장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북부권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지는 것과 전주IC 주변 가족휴양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춘 테마파크 조성, 도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제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북부권인 청북마을 인근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지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원 이전문제는 현 동물원 부지의 제약성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전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고 난 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북마을 인근 부지를 비롯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2002년 이래 2005년까지는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 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저는 취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계류 동물사와 스톱키하우스를 신축하고 동물 신구입식과 동물체험 이벤트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 다.

그 결과 2006년 하반기에는 2005년 하반기에 비해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되고 2천여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에도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와 8천6백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동물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2010년까지 3개년 간 다양한 볼거리와 테마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관람과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IC 인근에 비빔밥센터 및 바이 전주 우수상품 판매센터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하고 민간투자 의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된 도강초등학교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지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강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된 이래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학생을 다시 수용할 계획에 있는 등 교육목적의 활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협의체나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전주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및 15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 어메니티 중심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이강주 화훼단지 등 북부권의 풍부한 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과 견학의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지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전주이강주, 종이박물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 연계함으로써 관광 산업화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관광을 양대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 구상은 우리시 관광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신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있는 전주 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중에 하나인 생태관광 산업 육성 전략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국주영은의원(송천1·2동)

▶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고유가와 기후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한 시대에 전주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으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배럴당 38달러이던 중동 두바이 원유 가격이 90달러 내외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올라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국가적으로 보는 국제수지 악화와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관련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킵니다. 서민들에게는 물가인상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20년까지 20%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교토시는 2012년까지 10%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부터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기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대체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풍력발전소에서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17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비응도에 풍력발전소 10기를 준공하여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신흥정수장 침전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사업 5억7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이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사업 5억6500원, 남원시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 5억7300만원, 고창군 축산폐수이용 열병합 발전사업 7억2500만원, 완주군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2억7800만원등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지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BDK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도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바이오디젤유는 유채나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생산하며 경유보다 발암 위험을 94%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 매연,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물질을 5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유 대신 1톤을 사용하면 2.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대체에너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대체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정제되는 바이오디젤유를 사업화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시장개 제안 드리며 추진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먼저 시민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단체, 부녀회, 에코에너지텍, 자활후견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고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한 학교단위, 아파트단위와 협력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식용유 수거업체가 18개가 있으나 모두 타지역업체입니다. 전주시가 직영으로 수거를 전담한다면 수거량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생산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용 유채시험사업 단지인 부안과 BDF생산시설을 갖춘 정읍, 군산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전주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만큼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예측되고 있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폐식용유 하루 수거량이 1.5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제하여 청소차 215대와 버스81대 총300여대의 1년 간 연료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차량은 총 79대(완산구 38, 덕진구 41대)로서 연간 경유 사용량은 6억원입니다. 관용차량부터 시범적으로 바이오 디젤유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오 디젤유사업이 정착되면 원료인 유채재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 농업의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연구단지화 농생명클러스터와 연관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농업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대체에너지로서 연료절감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대중화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전주의 열섬현상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는 전주시 대체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위 BDF사업화에 대한 네 가지 세부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관리의 체계화와 기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전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기록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대에는 정책의 실상이고 후대에는 역사 자료가 됩니다.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여 성장과 발전을 축적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07년 4월 5일부터 동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광역시도 단위로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관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과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기록물에까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록문화전통이 강한 전주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기록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최근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록물과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규칙보완 및 (가칭)전주시기록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기록물 관리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시의 각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관의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자체보 관 기간이 경과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각 부서의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장을 자료관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규칙 5조에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출석 시에만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를 이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율을 보면 전주시 기록물은 양구청 포함 총 13만 7천여 건이고 이 중 전산화 완료된 기록물은 3천800여 건으로 25% 정도 입니다. 전산화는 90%이상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도 99%가 각종 계약서·도시계획·시유재산목록 등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전주시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 정 성과 등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 현대사 100년 동안 전주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소장의 가치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방관 속에 훼손되고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민간기록물 관리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을 만큼 민간기록물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민간 기록물도 공공기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전주시는 특히 전통문화도시로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민간부문의 기록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고 공공부문은 1차적으로 전주시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수집 하고 2차로 전주시자료관에 일정기간 보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했 으면 하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도 시조성 사업 및 한스타일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현재 한스타일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도청사 부지 내에 같이 설립한다면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시기록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도시로 성장·발 전할 수 있는 전통성과 잠재력을 지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박물관에 조선왕조 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의 장점을 잘 살려낸다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 도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전주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 사업이 놓여있습니다. 그만큼 변신과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 속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기록문화도시로서 자랑스런 전주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실의 문제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사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9월 산자부에서는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0.5%에 이르는 바이오디젤 5의 혼합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까지 높이는 계획과 청소차나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에 쓰이는 바이오디젤 20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보유 전용주유소 보급 그리고 주유시설과 함께 의무시설로 된 정비시설에 대한 외부위탁계약의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의 하나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국내 조달 비율을 현재 30%에서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마련 중 에 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유채기름 생산을 위해 유채 재배 면적을 1천5백ha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

해 ha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운동원 합 등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연합하여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 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상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바이오디젤용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가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수소연료전지, BIO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연구는 물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하여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급사업으로는 효자동 제1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250억원의 민자를 들여 태양광발전소의 설립을 추진중이며, 도청사 주차장 한켠에 시간당 130Kw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비롯하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도 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진상 군산과 같은 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또한 유채 대량재배 등의 사업은 어려우나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한 폐열회수사업,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그리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에탄올 생산사업 등은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기업들과 연계 이미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연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카본밸리 조성을 통해 우리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중추 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장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 첫째,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가 절대적인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에서 소개해 주신 일본 교토의 쿠라마구찌 마을도 약 10년 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우는 별도의 수집통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기 수집일과 수집시간을 정해서 수거책임자를 두고 수집중이며 그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아직 구상단계로서 앞으로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직영은 물론 수거업체를 통한 위탁수거,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 수거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단체, 여성단체, 주민자치 조직등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



해 시민들의 동 참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생산시스템의 구축은 우리시에서 수집 가능한 폐식용유 총량을 산정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판단하여 우리시는 기존 바이오연료 관련기업과 연계 할 것인지 별도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유도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소차량은 물론이고 시 소유 디젤차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지자체 전용유소소의 건립과 함께 대형차 바이오디젤 전용인 바이오디젤20 지정유소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지역은 부안 등 평야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집단화된 유채재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부의 경관농업직불금 지원사업과의 연계와 농민회, 농협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가 소득 면에서 기존 수도작과의 비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안해주신 내용은 우리시와 학교, 환경단체, 시민단체, 부녀단체, 의회 등 주요 추진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록물관리의 체계화와 기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기록물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칫 소홀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기록물 관리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주사고가 있었으며, 전주사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기록물관리의 본고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앞으로 실질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기록물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기록

물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기록물 1만1천71권중 42%인 4천611권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시 정책입안과 성과 등에 대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창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관련 민간 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운영규칙을 조속히 수정·보완 하겠으며 전산화 등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인력 보강과 예산 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를 최대한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 기록물을 전통문화중심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록물은 관리보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기록물들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뛰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시해 주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박물관이나 전주역사박물관, 대학의 박물관은 물론 관련기관 등 기록물 관리에 노후가 있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부문 기록물도 공공부문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주시기록박물관을 한스타일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구 도청사 부지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문제는 도 단위까지는 의무사항이고 시·군은 임의사항 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는 막대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우선 전주시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 단위 관련 기관을 전주시 구도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의하는 방안, 또한 시가 구도심 청사부지에 설치 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써 미래로 가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김상희의원 (효자3·4동)

▶ “덕진공원 물길을 터라”는데 대하여

전주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문화도



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트폴리스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종목을 반대하게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 145개의 공원중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이 수십 년째 물길에 막혀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막힌 물길을 소통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덕진공원은 공원으로써 전주의 상징이고 명물입니다.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4만 5천평 경내는 남쪽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과 취향정과 더불어 풍월정, 연지정, 연화교, 연지교, 음악분수대, 연화정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어린이 화장, 신석정 시비, 김해강 시비, 전봉준 장군상등도 있습니다.

특히 단오절에는 연못물로 부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머리감기와 떡 감기로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단오 창포물 잔치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덕진공원에서는 천년 고도 전주, 천년의 전통 단오제를 펼쳐 단오주부가요제, 전통무예시범, 단오맞이 열린음악회, 명인명창 국악공연, 전국 국악경연대회, 단오 장사 씨름대회등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덕진공원은 전주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연이 심어져 있는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지어진 철근구조물 연화정과 현재 덕진공원내 연못과 문화적 정서와 어우러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두번째, 연화정이 들어서서 자연연못 덕진공원에 피해는 무엇이며 그 대책으로 무엇을 세웠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연화정의 체납액은 그동안 얼마나 되고 체납된 세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연화정으로 인해 그곳에서 배출되었던 오·폐수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다섯번째, 현재 덕진연못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연못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연화정 철근 스텔라 건물 위치가 덕진연못의 정화수가 솟아오르고 있는 위치임을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일곱번째, 모르코 계셨다면 문헌과 덕진공원 주변 덕암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연화정의 건축으로 덕진연못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연화정은 세수 수입도 미진하고 또한 연화정의 건축으로 인해 물길에 막힌지가 어언 30여년이 지나면서 덕진연못은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 연못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철근 건축물 연화정을 철거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아트폴리스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의 상징이며 명물인 덕진연못을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서야 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덕진공원 연못을 굳이 풍수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주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이곳은 물을 얻는 중요한 터인 것입니다. 즉, 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물로 창포놀이를 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그 물길에 막혀 현재는 덕진연못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63만 전주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덕진공원 내 축제 때 창포물로 먹이나 머리를 감는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가 아트폴리스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준거를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대책, 물을 얻는 치수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상기하면서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덕진공원 물길을 터라”는데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 연화정이 덕진연못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연화정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덕진공원 연못 수질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알고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먼저 덕진공원내 철근구조물인 연화정과 덕진공원의 문화적 정서가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은 1980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식기아를 엮은 건물로 건축되어 1983년 준공된 건물로써 건축 당시 덕진연못 중앙에 습기에 취약한 전통양식의 목조건물 보다는 습기에 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진공원 정서에 어울리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지금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화정으로 인한 덕진연못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화교와 연화정은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처럼 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보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운영면에서도 민간에게 임대해 하다보니 사용료 체납과 임대사업자의 운영상 문제로 전주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남문휴게소를 시민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을 위한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와 같이 연화정도 앞으로는 재임대 하지 않고 전문가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연화정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의 1층은 편의매점으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 사용허가를 하여 첫 해분 사용료 121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년치 부과분 242백만원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체납사유는 입찰 후 전영업자가 영업장소 인계를 늦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로 영업개시가 1개월 반가량 늦어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용료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압류한 재산, 임차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화정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정은 화장실이 없는 간이 휴게매점으로써 대소변에 의한 오염량은 없고 다만 생활용수가 발생되는데 정화시설을 통하여 인근 조정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27년이 경과된 정화시설과 배관시설 등도 조기에 교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이 썩어가고 있는 덕진연못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많은 검토와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연못 수질 오염은 상류실개천 물을 상시 유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담수된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필요한 수원확보를 위해 공원내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5천톤의 물을 담수하고 있어 현재 수량확보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화정 위치가 덕진연못의 정화수가 나오는 위치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같이 각종 문헌과 주변 어르신들의 증언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화정으로 덕진연못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다섯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원수유입, 오염원인 제거 등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로써 앞으로 전문가

와 협의해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연못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연화정을 철거해야 한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연화정 철거문제는 전주시민들이 수십년간 이용해 온 친숙한 시설로써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철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아트폴리스 계획과 연계하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박현규의원 (호자3·4동)

▶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에 대하여

장애우의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최대약자인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 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 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데 비장애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모 기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고,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 몸이 아파서

라는 응답이 76.1%로 이는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한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970명이 참여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분야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평균 2.77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8점으로 이는 현재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310개 건축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 69.42%인 반면 전북은 63.03%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신축된 전라북도청이 84.69%이며 이어 전주시는 75.9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전주시 공약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겠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도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편익증진을 위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신축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술지원체계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 와 장애인 당사자인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인력 6명이 14개 시·군을 관 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제대로 편의시설 설치와 조사에 역부족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에 서는 기초 시·군·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등록장애인 29,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 운용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전주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도로 어디를 가나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어 전주시에 약 1,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몇날 몇일이 걸려 광주에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광주에서 사람을 불러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인 손해를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나 문화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맙니다. 자기표현을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원천봉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불행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익증진에 대하여

박현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방안으로 각종 자료조사와 통계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평소 공약등을 통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서 평소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공공·민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확충, 횡단 보도 시각장애인 점자브릭 및 음성 안내장치 설치 사업 등으로 2007년도에는 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998년에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2004년 16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12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편의시설 진단 및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7개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도면, 재질, 설치동선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기술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동 센터가 조속히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센터가 설치되면 교통, 건축 등 관련부서 및 구청 시민생활복지과와 새로 설치될 편의시설지원센터 공동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사전심사는 물론 정기·수시점검을 하고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통휠체어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할 대상에는 분명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이동권의 제약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많은 제약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제약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전통휠체어입니다.

현재 전주시 등록 12급 중증장애인 6,300여명 중 전통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수리센터가 없어 고장난 휠체어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이 나면 서울 및 광주지역에 있는 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출장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전통 휠체어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한옥마을 관광대책에 대하여

저는 한옥마을 관광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탐방객들로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기린로 갓길변에는 하루평균 4~5대 이상의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한옥마을을 답사, 문화체험을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학급별

체험교육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신수학여행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40여명에게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무르고 체류하는 학습장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학습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주민들이 테마민박 확대, 한옥형 컨벤션 건립,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 체류형 관광대책을 주문했습니다. 2008년 전주시 예산서에는 그 염원과 희망이 고스란히 빠져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또다른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사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한계점을 보았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경주 타워를 만들고 한옥형 한옥형 컨벤션 호텔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등 수학여행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한옥 컨벤션, 테마민박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제까지 1999~2009년 까지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체류형 관광숙박 단지가 전무하다보니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매월 외국인이 600~7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의 우송대학교, 카이스트대학, 서울권대학교에 외국인과 유학생들의 방문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방문증가로 안내하고 통역하는 관광통역 안내원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주시가 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관광 통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비정규직 계약고용 불안으로 2007년 11월 30일 전주시에서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며, 2007년 12월 1일은 이메일로 구두해약 서면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 4년에서 7년까지 박봉에도 자부심하나로 버텼다고 하는데 보따리를 싸라고 하니 너무도 허탈했답니다.

12명의 관광 통역안내원이 교대로 번갈아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약으로 10~11개월단위 고용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였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의 관광통역 안내원의 근무연한은 6년차 근무자 5명, 4년차 근무자 1명, 3년차 근무자 2명, 1년차 근무자 4명입니다.

모두 대졸.대학원졸업, 외국에서 체류한 유학 경험이 많은 고학력 베테랑 전문통역 안내원 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6. 8.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 합대책으로 취업보장을 계약하지 못하고 불안한 내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월 100만원 수준의 자 존심이 상하는 박봉이지만 가치의 자부심으로 전주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임무로 건디 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 규직 정규직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2명이 무기계약을 했고 각 시군의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서도 그 대책을 계약직

으로 전환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 가로변 도로명이 오류가 있는데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도를 가지고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과 명소를 찾아다니는데 실제있는 지도와 전봇대에 붙어있는 가로명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옥마을 대표가옥은 학인당인데 학인당 길에 학인당이 없고 학인당은 향교로 강암로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스토리텔링(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공모전에서 문화재청상을 수상한 전주 한옥 골목의 재발견내용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골목이라고 하면서 더 세분화된 골목 해설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의 골목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재미있는 가치가 생활이 녹아있는 골목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불편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아파트나 신주상복합건물의 신도시가 가지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신적, 정서적 풍족함이 남아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의 골목길, 찜짓길, 도로, 가로명은 역사성, 명소성, 문화성, 현재성 등 마을의 유래가 녹아있는 도로명과 찜짓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동, 풍남동 토박이 주민들과 도로명, 찜짓길을 답사한 결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세심하지 못했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많은 외지인이 찾는 한옥마을 새주소 사업은 각별해야 했습니다.

첫째, 이목대와 오목대에서 이목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선초기 완산지도에도 이목대와 오목대는 분명히 잘 표시되어었습니다. 꼭 오목대의 남쪽 능선 위에 있는게 이목대인데 현재 이목대는 기린로 동쪽에 있는데 그쪽을 이목대 1길, 2길, 3길로 했는데 그쪽은 전주이씨가 발생한 발의산이 있습니다. 발의산 1길, 2길, 3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류된 원조는 전주시에서 발행한 우리고장 전주의 1982년 241쪽에 되어있고, 향토사학가 2001년 작춘선생이 만든 완산고를 맥박에도 204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현대 향토사학가들의 사적지 오류표기로 인해 현 문화해설사, 사학자, 대학교수들도 잘못된 위치로 해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초기 완산지에서는 분명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목대와 이목대를 지도 상에도 옮겨놓은 것입니다. 현재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인당 길입니다.

학인당은 은행나무길 동쪽에 있는데 향교 3길, 향교 8길로 남천교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 학인당은 은행나무쪽 서쪽에 있습니다. 교동 토박이 어른께서는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8경의 하나인 남천표도(빨래하는 아낙)을 연상시키는 빨래터가는길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오목대 1길, 2길이 잘못되었다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길입니다. 오목대는 기린로변에 있는데 오목대 길은 성심여고에 있는데 삼성 전당포 부근에, 원불교 교당있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 래서 그 길은 동서로 쭉 되어있는데 향교길이 있다가 오목대길로 있다가, 그러니까 오목대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데 향교 와 오목대가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옥마을만은 마을에 유래가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통부근의 그 길은 좁은 쌍갈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좁은 쌍갈래 길이었으면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m부근에는 삼성전당포와 삼원당 한약방이 있으니까 전당포 길이라든지 삼원당길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한 명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전 뒷길 동문 3길은 너무 편의적으로 작명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선각들이 다니던 길이고 전주사고, 조정단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할 수 있는데 성심여고 있는데 일방통행이 끝나는 그 도로에서 동문까지 쭉 동문길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역사와 명소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세심한 이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찜짓길의 멋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향교길도 1길에서 8길까지 있고, 쌍샘길은 1길에서 6길까지 있습니다.

쌍샘길이나 향교길은 8길까지 있을때 아름다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냈으면 스토리텔링의 관광골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목대와 이목대를 가로지르는 쌍샘길은 우측은 쌍샘길이지만 좌측은 양사재가 있습니다. 양사재는 향교에 부속건물로써 전주초등학교에 초대 초기 전신이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머물렀던 대한민국 시조 가람에 원산지입니다. 근대 전주 한옥마을은 채 100년이 못되었지만 마을의 역사는 유구하며 아기자기한 여러 이름을 살려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명들이 제 이름을 찾아서 관광객들에게 스토리 텔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마을 분위기를 지켜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어디가 한옥마을이예요?"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퇴조로가 넓어지고, 은행 로가 넓어지고, 대형 한옥건물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을 보면서 한옥마을다운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각인력이 약하다는 반증입버다.

경주에 양동마을에 가면 아늑한 마을분위기가 있고 안동 하회마을 가면 유교문화권에 사대문 마을이 있고, 남원에 흥부마을 가면 흥부 놀부처럼 아주 아늑한 그 마을분위기가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마을 분위기를 보러왔다가 넓어진 퇴조로 확장하는 은행로를 보면서 신 한옥마을만 보고 있습니다. 동네가 잘려나가고 어귀가 바뀌고 신 한옥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옥마을 주민들이 요새는 부동산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문화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늘어나서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



한 주민문화, 생활문화를 보러 외국인들이 옵니다. 왜 영화세트장이 아니고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보러왔는데 그런것을 볼수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는 개성 한옥마을을 박연폭포 선죽교등의 관광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개성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 유동 인구 관광객은 년80만 ~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가다보니까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백화점 수준으로 고객관리를 해가지고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한옥마을과 남원의 광화루라든지, 서해안의 갯벌마을, 진안의 마이산이라든지, 무주에 덕유산등을 연계하고 테마상품을 만들어서 두시간 세시간까지 관광이 1박 2일,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한옥마을에는 5개 민간위탁시설이 있고 5개의 직영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록에 방문객들의 소리와 생생한 기록, 좋은 고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편집되지 못해서 좋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세계적인 보고서가 집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공동탐처럼 만든 살아있는 용역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생,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일반 관광객 등 계층, 연령, 직능별의 목소리를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 한옥마을을 관광백서를 발간하여 여러 분야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대 민간위탁시설, 임대직영시설의 시설이용자, 관광객의 설문, 인터뷰, 리포터의 통합백서를 발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한옥마을 관광대책에 대하여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숙박시설 확충계획, 관광통역 안내원의 무기계약 전환, 가로명과 도로명의 오류에 대한 정정, 한옥마을 분위기 조성과 한옥 생활문화 육성방안,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 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 테마민박, 숙박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은 총 8개소 47실로 1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에 양사재, 풍남

현, 학인당 등 3개소를 확충하였고, 동락원은 2008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원불교 교동교당 부속건물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옥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형 한옥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옥숙박시설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업체 등과 한옥형 유스호스텔 등대형 한옥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전통문화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문화시설 건립시 숙박이 가능한 특화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 관광통역안내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관광 통역 안내원은 2002년 월드컵 당시 고학력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어 매년 12~13명의 관광 통역 안내원을 공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드려 함께 드립니다.

본 관광통역 안내원은 한옥마을, 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3개 관광안내소에 배치·근무하면서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동행투어를 주 임무로 지금까지 관광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근무하는 등기간제 근무형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점차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전주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및 국제행사가 늘어나면서 전문화된 관광 통역 안내원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된 근무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의 증대와 기능과 역할의 증대정도를 보아가면서 타지역의 운영실태와 정부의 고용정책등 전반적인 분야를 참고하면서 관광통역 안내에 대한 고용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에 골목길 쌈짓길 명칭이 역사성과 마을 유래등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오류사례를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재단·재해, 물류비의 절감 등 시민생활에 편리한 주소체계를 제공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도 까지 1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2,546개노선, 건물 61,000동에 대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완료 이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는 물론, 새주소를 활용한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새주소 안내지도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새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옥마을의 도로명 또한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칭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밝고 역사와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洞지명위원회'를 통하여 도로명 초안을 마련한 후 향토사학자와 사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명을 2001년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 2천5백여개나 되는 많은 도로명을 부여한 관계로 고유지명이나 역사성이 일부 미흡한 도로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과 시민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지역주민과 향토사학자,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새로 구성될 새주소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류된 도로명을 2008년 상반기까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을 마을분위기와 한옥생활 문화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간의 소극적인 보존방식에 의존한 나머지 주거환경이 열악해 많은 주민들이 아파 트단지 등 신시가지로 이주함으로써 슬럼화와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주거지의 매력을 상실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 한옥마을이 도심에 자리잡은 유일한 한옥 집단촌으로서 근대 건축사 박물관이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생활 문화 체험공간으로 손색이 없음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포켓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도로, 통신설비, 도시가스 공급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주신 대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만으로는 전통적인 마을분위기와 골목길 문화, 생활문화를 계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거주민 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한옥마을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저렴한 민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김치, 된장 등 전통적인 밑반찬을 판매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사업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한옥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가꾸고자 하는 애정이 살아나 한옥마을 공동체 등 각종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본 한옥마을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지원되는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이 채택되어 주민 스스로 골목길 답장 바꾸기, 쉼터와 정원 가꾸기 등 한옥마을에 걸맞는 한옥생활 문화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오는 12월 동짓날에는 기존 문화시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옥마을 “오픈하우스 축제” 개최를 기획·준비중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주한옥 마을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만이 갖는 특색화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기록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관광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기적인 관광백서 발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옥마을의 미래를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창길의원 (진북·인후2동)

▶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7년 11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동암고등학교 옆 효자 5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펼쳐 전북경찰청, 전라북도청과 함께 효자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전북체신 청, KBS전주방송총국, 중소기업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보훈지청,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농촌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차례로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5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전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전주 세무서마저 내년 덕진구 진북동에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택지개발지구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완주군청 마저도 지난 8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청사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완주 군 용진면 운곡리 잠장동 주변 185만㎡ 일원을 선정하여 2010년 마무리 예정으로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교실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벤트를 열고 도심 주차장 개설이나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나마 (구) 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이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정책으로 몇년 전부터 중이동과 경원동 다가동 일대에서 시작된 공동화 현상이 인 근 노송동, 진북동, 인후동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년 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둘째, 신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구도심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공허한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넷째, 떠나는 농촌이 떠나는 구도심 돌아오는 농촌이 돌아오는 구도심으로 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6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25년전 변창했던 6지구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6지구는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사거리, 전북대병원, KBS전주방송국 등에 둘러싸여 있는데 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그후 공공기관들이 속속 등지를 틀어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는데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등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 중 대다수가 6지구를 떠날 계획이어서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살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분별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삼성홈플러스, 사학연금회관, 한국전력공사, 농협중앙회, 일부는 상업지역인데 반하여 완주군청과 전북지방조달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 12층으로 되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최고 4층까지 밖에 건축할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동화의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나 삶의 의욕상실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다음은 수십년동안 미개설중인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시가지를 통과하는 시의 국도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완산동 다가공원 주변과 중화산동 기전여자대학교 부근 및 진북동 도토리골과 어은골, 서신동 롯데빌라, 중산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적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 아주 미약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및 안전대책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얼마전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발을 헛디디 낙차가 큰 아래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전주시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계획 구간내에 초등학교와 교회, 사찰,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전주시의 대표적 무관심지역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은 1998년에서 2010년까지 13개년이지만 2008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P103쪽에 13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14년간 계획한 사업내용이 2011년 끝내겠다고 나와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예산행정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P107쪽과 대조해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가 갈수록 몇십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사업 한벽교에서 완산교구간의 완료는 2005년 5월 2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고, 2단계사업 완산교에서 서신교, 서신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3월에 끝나치고 연장 2,140m 구간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이후 투자액은 0원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어은교 서신교 구간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서신교 사거리에서 진북교로 오는 도로는 6차선 구간이 급격하게 2차선으로 도로폭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잠재적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구간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며 선형이 불량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거환경 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부여해준과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시장님 케츠프레이즈처럼 따뜻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2007년도 세부사업 내용과 2008년도 세부사업 내용이 서로 상이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고로 이 분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작성한 도로개설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2011년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셋째, 남천로(전주천좌안도로)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A 송하진 시장

▶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먼저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느 도시나 안고 있듯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와 함께 토론, 그리고 전문가등의 자문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년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고장 전주는 후백제와 조선 왕조를 탄생시킨 역사의 주역으로 과거 농업시대에는 나라 전체의 식량 공급기로서 역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기개 높은 고장이었습니다. 6~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 중앙집권적 압축성장과정에서 역사의

뒷켄으로 밀려나 지금은 경제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축 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 가슴가슴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키우고 살아온 자존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전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민선 4기 시정지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는 외형적 팽창위주의 공간개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를 충실히 하는 공간구조 개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본적인 핵심 방향으로 삼고 먼저 구도심 일대를 전통문화와 한스타일산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역사 축으로 바로 세우고,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등 미래도시 성장축은 전주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도시활동축은 생태와 문화등 생활한 경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쉽지 않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구도심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과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돌아오는 구도심이 되기 위 한 전주시의 노력 등에 대하여 질문등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 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어 온 바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 외곽지역 의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되어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비교해볼 때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시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문화적 컨텐츠를 바탕으로 구도심의 재생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복원, 한문화진흥원 건립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립미술관이나 시립음악당 등 대대적인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송천 복원사업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형 생태하천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몰려드는 친생태형 푸른 녹지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인근 도심 노후지역이 활성화 될 수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국제적 전시 공간, 회의장, 호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 리시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도심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유동인구의 증가 및 업무시설의 유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기능이 보다 더 새롭고 활기찬 상업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구도심활성화 조례 제정과 7개의 특화·특정 거리를 지정한 후 걷고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등을 조성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대형 유통업에 밀려 침체된 기린로 전자상가 의 활성화 사업과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 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옥숙박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의 슬럼화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 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2008년~2014년까지 연구비 1,22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생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향 과 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차원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14일자로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는 201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생에 따른 지원과 추진방향이 마련될 예정임으로 동 계획이 확정되는 결과를 지켜본 후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전주시의 대비책과 6지구 공공기관중 대다수가 이전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공동화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우리시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되어 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마음 아파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구도심권에 대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을 목표로 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한브랜드 육성, 35사단 이전등 여건변화를 수용할 장기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본 6지구는 금암동 및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서 인근에는 건지산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에 따른 덕진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해 1997년에는 공원주변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2005년 7월 국토법에 의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을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던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6지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경관계획 용역을 통하여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여건변화 등 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예정된 공공기관의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오히려 현재보다 인구유입이 많고 활용가치가 있는 연수원 등으로 바꾸어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특구를 지정·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 리시는 지역적으로 산업, 인구, 교통, 생활권 등 발전추세에 따라 북부권은 산업시설, 남부권은 주거 및 문화시설, 서부권은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

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은 익산~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향후 5개년의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고 당초예산 반영액 뿐만 아니라 이후 확보 가능액까지 추계하였기 때문에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 일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 배정을 조정하다 보면 중장기 사업들이 계획보다 변경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공년도인 2011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서신교까지 4,1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한벽교~완산교까지 2,010m를 폭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7억원을 투자하여 여기 완료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은 완산교~서신교까지 2,140m를 폭 12m~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전주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로서 시내중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천변도로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노후건물정비로 인한 도시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시 급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얻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상 2008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좌안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비는 보상비 40억 공사비 110억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및 지작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착공할 시기와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개설 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적극검토하고 착수구간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을 하면서 2008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송천1·2동)

▶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변경협약 강행에 대하여

저는 저를 사랑하는 송천주민의 선택으로 전주시의회에 들어온 후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근원과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본의원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난 닢 이 과제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239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질문 한 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조에 의하면 3단계 1 차 사업만 BTO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고 3단계 1차사업만 20년으로 하던데 1,2단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1,2차 시설을 포함한 20년 협약을 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걸쳐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께서는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의원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번 질문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 주민들의 고통은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 모든 일이 싫어지는 망각적 상실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망각적 상실감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순환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배출하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고통과 악성이미지에 의한 손실은 왜 송천동 주민만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에 진행하다가 송천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2년 해양투기 금지기간 이 다가오자 다시 송천동에 건설 하려다가 또다시 송천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명분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용퇴하여 송천주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송천동에 슬러지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송천주민이 반대 하니까 일부에서는 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송천동에 있으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 시민 모두 안방에서 앉아서 입 장 바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소각방식이 최선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에게 유용하며 적합한지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 기술의 발전은 지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기술 발전은 향후 몇 년이 최고점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기술은 건조기술, 소각기술, 탄화기술, 열분해 가스화 기술 등으로 다양 하며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런던 협약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내에 보급된 기술에 한할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기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함수율을 최대로 줄이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운반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송천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거기 슬러지 처리시설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익성을 위한 발상이지 주민 감정이나 기술적 측면의 당위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재까지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정책 이 주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대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축구장 건립은 담보상태이 고 본의원이 그렇게도 아우성치면서 주장 하였던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인 생물반응조 덮개 설

치사업은 이제야 기획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단계 1차사업의 잔금으로 건설한다면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축구장 및 테니스 장 주민 편익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집행부 입장은 바로 전주시 집행부가 송천주민과 시의회 전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의 대전광역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위쪽을 복개하여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등 많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과 함께 하기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있는 부지도 이용하지 못하고 잡초에 토끼가 뛰어놀게 하더니 이제 겨우 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려나 하였는데 이마져 허무맹랑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전주환경사업소는 1,2차 시설에 대한 배출수 환경기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600여억 원을 들여 고도처리 시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4년에 이 공사는 2007년 4월15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 되었고 다시 2007년 11월3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고도처리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주민의 하늘을 찌르는 민원을 줄여줄 그 어떤 계획도 설계에서 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송천주민들의 원성을 심각하게 생각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 져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전무 한 것입니다.

또 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음식물침출에 의한 부하와 증가로 여과지 및 탈수기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의 노후로 인한 불량으로 시설 보완을 위해 약 6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하여 공기를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 턱키방식의 공사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변경 협약의 일정도 이를 예상하고 협상일정을 조정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경협약과 관련하여 시민회에서 법원에 변경협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전주시 입장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에서 불필요한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속셈입니다.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독재 유신 정권 때 국회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변경협약 관련 간담회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원들의 의견은 송두리채 몽개버리고 공사도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변경 협약을 체결 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곡의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에서는 보고를 거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본의원이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전주시는 1,2차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주개발과의 변경협약을 2007년 10월 5일부로 서둘러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협약을 했을까요. 변경협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가 끝나고 가동을 하여 본 후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공사의 경우 65억이 들어가는 추가 공사에서 여과지 및 탈수기 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 불량으로 잘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사를 다 해봐야 나오는 슬러지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변경협약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이었을까요. 정리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추진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과 연계시킨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축구장 건설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지금까지 악취와 하수시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송천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전주 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시장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변경협약이 고도처리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협정한 것은 시설의 성능검증이 끝나기 전이라 정확한 기초자료 산출이 어려워 협약조건의 산정이 부정확하다고 생각 되는데 변경협약을 서둘러 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넷째, 변경협약에 의하면 토달 년24억 원의 처리비의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하수처리비가 연간 91억원으로서 지나친 시민의 부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제248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 전주환경사업소도 시설공단으로 조속하게 가야만이 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환경사업소가 된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을 흐르는 물은 임실군 관촌면과 신덕면의 경계를 이루는 슬치재 아랫녘에서 발원합니다. 유서 깊은 한벽루를 휘감아 갈마음수(渴馬飲

水)의 지형을 갖춘 다가산을 돌아 추천정에 이르러 삼천천과 합류 합니다. 전주천은 팔복동 추천대교를 지나면 국가 하천이 됩니다. 국가 하천이라 특별하게 관리하여 매우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전주천의 그 아름다운 갈대밭도 추천대교에서 끝나고 시민들이 조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천길도 추천대교를 지나면 자갈길로 바뀝니다.

어느분들은 자갈길이 건강에는 더 좋다고도 합니다. 하천 옆 공한지는 가꾸지 않아서 설치류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장마에 몰아붙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어지럽기 짝이 없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공포의 하천으로 변합니다. 이를 두고 송천 팔복 동산 주민들은 하수처리장과 함께 살아가는 업보라고 합니다.

모습도 같고 생활도 같으며 민족도 같고 똑같이 전주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대교 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며 하천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송천주민들만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도 국가 하천이라는 이유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끝나게 되어 7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무엇때문에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중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사업에 따른 변경협약 강행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전주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시장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 는 전주환경사업소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서 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친화형 환경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공원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 처리시설과 연계추진 하는 문제와 관련 송천동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린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는 총31만6천㎡로 1·2단계 부지가 19만7천㎡, 3단계 부지가 11만9천㎡이며, 이 3단계 부지중 5만5천㎡로 조성된 공원부지는 2016년 인구



81만명에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비하여 확보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 원 이용자가 없거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이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전주환경사업소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본사업소 인근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등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8일 자재선정위원회 개최결과 국내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체에 해가없는 친환경적인 잔디와 테니스장 그리고 농구장의 바닥재를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약 5억 4천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용역이 2007년 7월 20일 중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당초 계획보다 소요 예산이 과다하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생활반응조 덮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덮개시설 예산에 3단계 증설사업 계속사업비 잔여예산을 투자하기로 정책결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생활체육공간은 앞으로 덮개시설을 추진해 가면서 본 사업 완료 후 주민편익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아주시는 주민여러분께 유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준공전에 서둘러 협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은 '90년과 '97년 준공된 시설로 2004년 말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는 방류수질 BOD기준 처리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고도처리사업을 착공하여 2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2월에, 1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10월에 완료되어, 2006년 11월부터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하여 2007년 6월까지 성능시험운전을 한 결과 수질 및 슬러지 함수율이 설계목표치에 미달하여 시공사인 GS건설의 부담으로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여파지, 탈수기, 악취방지시설 등을 증설하는 보완 공사를 하기 위해 2007년 11월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도처리공법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유입수질 오염 부하량에 방류수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수처리공정이 완료된 2006년 10월부터 기존배출량 1일 94톤보다 현재까지 증가한 1일 160톤이 발생하여 설계치를 상회하였으나 변경협약은 고도처리 설계값을 참조하여 1일 142톤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처리 개선공사는 일반시설과 달리 준공 전 일정기간동안 운영자가 직접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협약 체결 추진은 시설준공과 관계없이 고도처리 시설개선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시설 준공 전에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적 부

담이 추가되지 않아 2007년 10월 5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경협약에 따른 연간 24억원 인상으로 시민의 하수도요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처리비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과 슬러지 처리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24억원 정도로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이 주 증가요인으로 발생 하였으며 이번 변경협약은 지출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시비 부담을 억제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인상된 운영비 또한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리비 인상은 법적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적정한 하수처리비의 투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켜가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곧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 43.43%에서 16.9%를 인상하여 2007년 59%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문제가 적다고 보며 시민부담은 과중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환경사업소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야 공공성이 확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41회 임시회 서면질문, 248회 2차정례회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기준1, 2단계를 포함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1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의회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17일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같은해 7월 19일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 2002년 2월 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우리시에 의하여 중도 해지시 협약서 제69조에 따라 민간투자금 약 1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은 단기간에 축적 될 수 없으며 최소한 2~3년은 운영해야 기술을 축적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뒤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을때 본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과 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만경강과 전주천, 소양천의 3개 국가하천과 전주천, 삼천 등 18개의 지방하천으로 총 21개 96.1k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시내를 관류하는 주요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합류부까지 7.2km에 대하여 120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삼천교에서 추천대교까지 8.1km에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124억원을 투입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급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천 지방하천구간 과 삼천을 연계하여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팔복동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총연장 7.9km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6여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천 상류의 아름다운 갈대밭과 산책로가 추천대교 하류는 자갈길로 변하는데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면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산책로 조성 현황을 보면,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시공한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 합류지점 까 지 7.2km에 대하여는 고압블럭 포장을 하였으며, 추천대교에서 삼천교 까지 지방하천인 삼천의 8.1km 구간에 대하여는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투수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 5.7km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포장하지 않고 쇄석을 깔아 하천에서 산책 등 여가활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판리청의 하천공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책로의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득이 쇄석을 깔아 산책로를 조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시기에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세부 내용이나 집행결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22조와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정비 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의거 용도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 이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산책로 포장을 위하여 수차례 환경부와 협의 를 하였으나 산책로 조성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한 포장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 며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 산책로 포장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는 물론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원 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산책로 포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들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하천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포장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 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에 건교부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으로 자연석 호안 1.86km를 조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환 경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아 2006년까지 자연석 호안 조성 3.18km, 수제 13개소, 산책로조성 10.89 km 및 휴게공간을 비롯한 14개소의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14억원을 들여 수생식물 66만여 주 식재와 수 제 2개소, 사석 깔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7개년동안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공정이 자연석호안 조성 5.04km, 수제 15개소 등 물 속에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 분들이 사업의 진행 상태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은 대부분이 물역세 등 수생식물 식재 820여만 주 및 하중도 2개소, 자연학습장 1개소, 화전보어도 1개소 등이 대부분의 공정을 차지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 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주관사인 우진건설과 (주)동도, (유)내일종합건설 3개사의 공동계약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공 사 중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동도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계획 공정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동안 정상화 대책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현재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 안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바, 수생식물 30천㎡ 식재와 하중도 1개소, 신평보의 어도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북부권 개발의 방향을 생태체험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광인프라를 양대 축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축과 남부권 전통문화관광축으로 설정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권의 전통문화 관광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주변 관광시설의 연계와 개발 방향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옥마을 홍보시스템 구축, 조선왕조실록 복원화 사업, 전통문화관광 체험단지, 아·태 무형문화재단 유 치 추진 등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난개발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 도청사에 한스타일 진흥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 전통식문화 체험관 건립,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에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치 추진, 한옥마을 인근에 한국전통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 경기전에 유물 전시관 등 실로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설들은 분명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시설들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들의 연관성과 배치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시설물을 짓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렬이나 나열식이 아니고 시설간 연관성이나 집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옥마을 지구가 추진중인 상가사업들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최적의 입지에 건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발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개정된 전주시 한옥 보전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한 한옥마을 내 각 지구별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형 개발의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보다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입니다.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재로는 한옥마을, 태조어진, 조선왕조실록, 한식 등이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소재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과 상품성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포장되어야 할까요?

한옥마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주만이 갖고 있는 한옥마을의 특징은 주거형 한옥이라는 점과 조선시대 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양식의 시대 적 변천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타도시의 한옥마을과 차별성을 갖는 마케팅 소재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조선시대 발상지라는 점 또한 마케팅에서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식입니다.

전주하면 비빔밥, 한식으로 유명한 맛의 고장이라는 점입니다. 비빔밥은 상대적으로 상품화에 성공했으나 한식을 그렇지 못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한식과 별반 차별성이 없어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맛따위 건설을 통한 상징적 의미의 부여하고 음식점을 비빔밥과 한식 음식점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면 다음으로 홍보전략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 한옥마을 홍보시스템을 20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바 있고, 2008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휴대용 단말기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 홍보로는 전주시 홈페이지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방법, DM 및 이메일 발송, 각종 관광 박람회 참가, 연중 개별 팸투어,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비즈니스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고 마케팅 전담팀과 홍보팀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전년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0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발성 관광형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먼저 여행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행상품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상품, 테마를 중심으로한 테마형 상품, 학술연구를 위한 세미나용 상품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차별성 있고 독특한 여행상품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기념품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내 전문전시 및 판매시설을 통해 수많은 관광 기념품들이 이 지역 공예인들의 손을 거쳐 판매되

고 있습니다. 이 곳 공예인들의 왕성하고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본 뜬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조선왕조실록은 판권을 확보하여 대학, 도서관, 개인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기념품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벤트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한옥축제 등도 맞춤형과 더불어 좋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드리며, 한옥마을 운영자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관광기념품은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넷째,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과 활용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 한옥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신축, 중·개축 및 수리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을 건축할 때 70년대 양식으로 짓느냐, 일제시대 양식으로 짓느냐, 조선시대 양식의 복고풍으로 짓느냐의 문제가 있고, 남부 평야지대 양식이나, 중부권 양식이나, 북부산간지대 양식이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의 위치 방문과 대문의 형식과 문양, 외양간이나 헛간의 위치 등의 한옥건물내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목조기둥에 기와만 없다면 한옥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료조사를 통해서 연대별이나 건축양식별로 정형화된 샘플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옥을 신축할 때는 한옥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를 세분화하여 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옥을 보존관리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옥마을 내의 한옥은 건물주에게 관리를 맡기는 체제입니다. 정기적으로 한옥을 점검하여 제대로 보존할 관리기준 마련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의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신축, 중·개축 및 수리시에 정형화된 한옥모형을 제공하고 보존관리를 체계화 하였으면 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전통한옥 건축을 위한 장인 육성 등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옥집 짓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는 한옥 건축 장인, 관리보존 전문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장인은 가치 있는 한옥문화 정립을 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학습과정을 통해 건축 장인을 배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시에서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한스타일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옥뿐만 아니라 한스타일의 전문분야의 걸쳐 인력양성이 필요한 바, 평생학습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양성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요?

끝으로 문화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문화재로는 풍남문, 경기전, 오목대 등 7개소와 문화시설로는 강암서예관, 한옥생활체험관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총 20개소의 시설이 있으나 경쟁력에서 보면 남산한옥마을이나 안동화회마을, 지리산 청학동 등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각 문화시설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깊이 있는 프로그램, 전주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품전시회, 워크숍, 사료조사 발표회 등의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객도 수용이 가능한 주차시설과 숙박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시설의 경쟁력 향상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요하고 급속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구도청의 문화시설사업, 전통문화체험단지사업 및 조선왕조실록복문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0년 이 되면 전주는 전통문화 도시로서 명실공히 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3년 후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현 시점이 전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님께서서는 지난 회기 북부권 생태체험 관광단지 개발제안에 이어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분야별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시 난개발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제시의 필요와 지구단위 계획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 전주시의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1차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음은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시행, 지난 11월에 완성하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20년간 전주전통문화도시로서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임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추진과정에서 시설등간에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유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한옥마을 내 각 지구단위계획시 용역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7일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지구에서의 비 한옥 건축물의 증가, 일부지역에 정비효과가 편중되는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 10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 설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07년 8월 3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때문에 용역기간 중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한옥마을 공동체 등 많은 자생단체 등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의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데는 한옥마을, 태조어진, 조선왕조실록, 한식 등이 주요 소재라는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단편적인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꾸준한 연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 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은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시대별 유형별 분류를 해 나가고 이에 더해서 내력있는 고관을 이축하는 등 건축양식에 시대적 변천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타 도시의 한옥과 차별성을 갖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조어진은 전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정신적 지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주 경기전으로 조속히 복원되어 전주 경기전으로 돌아 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복원하는 등의 시도도 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앞으로 태조어진 등과 함께 관광상품 개발과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인 완판본 소리, 부채, 비빔밥, 서예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전시 및 체험의 문화공간을 건립하여 한옥마을 콘텐츠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맛 춘 조성과 한옥마을에 맛과 멋의 거리조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전주음식문화와 전통의 멋이 조화를 이루는 전주를 대표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스토리텔링 등 전주 맛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전통한식 해외현지화 기술개발 연구, 전주음식 브랜드 강화교육, 전주10미를 활용한 신 메뉴개발 및 브랜드화로 특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수립에 이은 홍보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공동 홍보 마케팅 협력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곧 문을 열게될 관광공사 전북 지사는 앞으로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최초로 해외지사화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에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TPO(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와 공동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순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을 겨냥해서 유엔사무총장 관저에 한지 리모델링을 계기로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초청으로 2008년도 전주 한지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홍보는 전주의 문화자산인 한지와 비빔밥, 한옥등을 앞세워 전주시가 먼저 추진하고 그 후에 민간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계 속에 전주의 친구를 만들어 한지와 한옥 한식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전주도시마케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지로드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외마케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왕에 추진했던 방식과 보다 새로운 방식들을 모두 가미하여 ON/OFF 상 홍보 전략도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여행상품개발, 관광기념품 사업 강화, 이벤트 추진 등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행상품 개발은 현재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를 연계한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급별 체험교육형 수학여행, 대가족 체험여행,

전주본관 성씨 족보문화 체험여행, 종교 체험 여행 등 다 지역과 차별화된 여행상품 개발과 특히 인접한 시군 및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여행상품 및 나아가 백제 문화권 도시와의 연계 코스 개발로 전주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사업에 있어 명품 수준의 관광기념품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천년전주명품으로 온(ONN)브랜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우리 무형문화재들이 함께 미국, 일본 등 해외마케팅을 위해 명품가구를 만들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해외 마케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기능, 디자인, 가격 등 대상별 선호도를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이벤트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전주한지문화축제, 한옥마을 감장축제, 산조예술제 등을 한옥마을에서 집중 개최함으로써 역사문화유적지, 한옥, 전통예술인,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운영과 주말상설공연, 전통문화장터 등 다양한 공간연출을 통해 각각의 축제와 행사를 특성화 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올해 동짓날 “한옥마을오픈 하우스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집 대문을 열어 자기집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과 예술품을 팔수 있는 축제로 주변 문화예술인의 집과 민박집 문화시설이 연계하여 거주 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 한옥마을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옥마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벤트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제시해 주신 많은 제안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과 활용기준 정립 필요성과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경부터 한옥 집단지역을 형성하여 1970년대까지 한옥 신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이후 기존 한옥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과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증·개축을 통한 공간변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특징은 문화재나 기념물처럼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라 한옥의 공간구조가 바뀌는 한옥의 창조적 계승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한옥이 적어 시대별 대표성을 갖추고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고택을 이축하여 제대로 된 전통한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사료조사를 위한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지난 11월에 착수하여 한옥마을 전체 건물의 실측과 년대별 양식을 분류하고 있으며

한옥건물과 관련된 이야기 및 가족사에 관한 자료를 채집, 기록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세부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유형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주신 한옥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옥마을에 한옥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본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옥 보존을 위한 한옥보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폭넓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한옥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점검에 필수적인 목수, 와공, 미장공 등으로 구성된 한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한옥을 점검하여 한옥이 제대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통한옥 건축을 위한 장인 육성 등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내에서 한옥 신축은 보통 문화재보수 건설업체보다는 개인 목수를 통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리는 대체적으로 지붕누수로 인한 기와 및 서까래 일부 교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4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부터 본격 착수하게 될 신기술지원센터 내에 한브랜드 과정에 설치하고 여기에 한지, 한식, 한지 공예등과 함께 한옥건축 장인 육성도 함께 포함하는 과정을 설치할 것을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한옥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를 위해서 기술자를 분야별로 등록화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진정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은 시설특유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혼례, 한지공연, 전통가양주 시음, 소주 내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한벽구장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 최명희문학관 월례문학 세미나, 판지쓰기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별로 나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의 재위탁을 계기로 타지역에 문화시설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따라 한옥마을 등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통합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한옥마을 중심의 특색 있는 통



합 프로그램 운영, 종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한옥 마을 내 문화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새로 건설되거나 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김중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의 수 많은 국가들은 산업화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오로지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 사계가 뚜렷했던 한반도에 겨울다움이 사라진 오늘,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전 세계에서 여름철 기후가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략한 현실과 맞물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도시계획 또한 교육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백년지대계로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개발, 재구획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개발일변도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구도심에 공동화에 대하여는 전주시민 대부분이 전주의 4대문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덕진구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진북동, 금암 1·2동, 덕진동과 인후2동 단독주택지의 경우 오랜기간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거리 조성 6건, 경관조명시설 2건, 기타사업 1건 등 총 9개 사업에 기 투자액 124억 6천8백만원 을 투자하였으나 아직까지 구도심이 활성화 되었다는 이렇다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붓

기식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계법령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고가 입찰 방식의 땅장사로 전락함에 따라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되었고 이로인하여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는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결과론적으로 신량한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야 말로 구도심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유인즉 전라북도청 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유지되었던 상권이 완전히 초도화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70-80년대 전주시 최고의 주거지역이자 각종 공공기관의 자리매김으로 그간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이 운집해 근무했던 6지구가 이제 서서히 삭막한 거리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유인즉 KBS전주방송총국을 위시해서 전북채신청,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전북도시가스, 농협중앙회(완주·전주),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케이티엔지 등이 줄줄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였거나 금 명간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북 본부의 효자 5지구 이전과 완주군청의 용진면 이전 계획까지 감안한다면 6지구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도심 공동화 지역으로 낙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팔복동에 위치해 있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및 경찰학교도 이미 이전계획을 마쳤고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또한 이전계획을 마친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0년도부터 이루어진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는 동전주지구, 효자1지구, 화산지구, 삼천지구, 효자2지구, 서신2지구, 삼천2지구, 서신1지구, 서곡지구, 평화3지구 등 10개지구 약 500만㎡(152만평)의 총 사업비 5,616억 8천 2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동전주지구 약 64만㎡(19만평), 사업비 98억 5천 2백만원을 제외한 9개지구 90%가 완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는 총 12개지구 약 680만㎡의 총 사업비 1,499억 8천 6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등 144만 5,244㎡, 사업비 554억 1,600만원의 사업이 완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하가지구 425,928㎡ 사업비 452억을 제외하고, 효

자4지구 380,429㎡ 사업비867억, 효자5지구 493,691㎡ 1,120억, 서부신시가지 2,519,690㎡ 4,560억, 효천지구 673,000㎡ 1,900억 등이 모두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한 향후 5년 이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약 1,000만㎡(350만평)규모의 혁신도시가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이 완산구에 집중되다보니 덕진구와의 불균형 또한 상당히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참여정부의 최대 공약사업이자 최대 관심사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기업 지역 분산정책으로 한국토지공사 외 15개 중앙 공기업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서있는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역행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을 중간지점에 약 91만㎡(28만평) 규모의 삼봉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간 간헐적으로 들어서던 완주군내 공동주택이 최근 계속적인 건축을 통해 신리에 위치해 있는 826세대 규모의 신세대 지큐빌을 위시해서 봉동에 건설중에 있는 주공2차 및 파란채등 도합 22개 단지 약 10,000여세대가 들어서 4인 기준 약 40,000여명의 인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자료에서 보듯이 전주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996년도 전주시 인구는 582,136명으로 이중 완산구가 314,164명, 덕진구가 267,972명으로 약 46,192여명의 차이보였으나, 2007년 11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27,362명으로 1996년도에 비해 7.7% 45,226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완산구가 350,464명으로 11.5% 36,300명이 증가한 반면, 덕진구는 276,898명으로 3.3% 8,926명이 증가하여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73,566명으로 그 폭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극적인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고 단지 민선 2기, 3기 김완주 시장시절 100만광역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 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난 50여년간 팔복동 1공단과 2공단 이외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인 대규모 공단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었음은 실로 개탄을 금할길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지역내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 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가지 문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

로서 구도심을 전주의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 외에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완산구 대비 덕진구의 인구 증가율은 자연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완산구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완산구로의 전출과 완주군청의 이전계획 및 삼봉지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한 완주군으로의 전출로 그 동안의 미미한 인구증가가 감소추 세로 돌아설 위기에 있는 바, 덕진구 인구 감소 방안 및 인구 유입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들어선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는 약 2,032 세대이며 금년말과 2008년 초까지 효자5지구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 현대아이파크, 우미린, 오펜라하우스, 송천진흥더블파크 등 약 8,000여세대의 신규 입주세대로 공급 과잉이 초래되고 있고, 더불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완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는데 효천지구 673,000㎡에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만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의 온난화 현상과 열섬효과, 또 대구보다 온도값이 높은 이유가 뭘니까. 전주를 중심으로한 외곽지역에 과거에는 전답이 들어서던 것을 전부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벼나 임 아라든가 이런데는 물론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논농사를 지었던 논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벽 을 쳐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천지구 또 여기를 개발한다,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들어오셔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구도심 공동화 및 공동화가 예상되는 6지구에 거주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전주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상권하락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전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중앙동이나 6지구에 장사가 잘 될때 천만원씩 가던 땅이 백만원 2백만원이 간다고 했을때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빚어지느냐는 말이죠.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또다른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심 공동화 심화 및 공동화 예상, 지역 불균형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전주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덕진구의 인구유입을 통한 전주시의 인구를 유입시킬 확실한 대안이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계획에 따른 약 220만㎡(68만평)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첨단 기술을 소유한 부가가치가 큰 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35사단과 밀접한 팔복동과 동산동 중간지역의 농지, 송천동과 봉동 삼례 중간지역인 호성동과 전미동이 지역에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단을 공급함으로써 완주 첨단 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꾀한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주시가 100만 광역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니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무분별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염려를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염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등을 통해 구도심을 전주에 두바이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용도지역을 근린생활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세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도별 토지개발 수요에 근거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간적 위치 및 면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된 관계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찾아서 2005년도에 구도심지역에 한하여 전주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구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사업과 완주군청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덕진구 인구유입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감소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인구유입을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팽창하였으나 도심지역 인구가 신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도심상권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산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덕진구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지역에는 혁신도시와 35사단 부지개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만성동 복합단지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팔복동 일원에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1, 2, 3단계 사업 등이 모두 덕진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면 미래 성장구역인 덕진구와 북부권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3천㎡에 대하여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총 1,880억 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시설 등 총 4,178세대 13,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2005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계획을 입안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우리시에 서는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과 정비계획 등을 참고하여 협의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 택지수요 및 공급전망을 판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에 의한 미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공동주택 미분양실정을 감안한다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

업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에 의견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듣는에만 그치고 있고 개발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는 건설교 통부장관 직권으로 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 따라 동 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온난화와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주시 개발사업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6지구의 부동산 가격하락, 상권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금암동과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 한 지구로써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 여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가 동 등으로 이 지역의 상권침체와 부동산 가격변동에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되나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 받고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깊이 검토해 본 바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구상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전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대한주택공사 전북 지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 4·5지구와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가 지구와 효천지구 그리고 민간협약에 의거 계획된 35사단 부지개발 등 전체 7개지구 8,096천㎡가 있으며 신규로 구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 공동화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와 전주시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35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완주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여 호성동, 전미동 등 인접지역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완주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은 모두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팔복동과 동산촌 사이 농지는 우리시에서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 예정지역으로 1,817천㎡ 부지에 약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R&D 등 최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주군 삼례, 봉동과 우리시 의 호성, 전미동 사이 농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기업체들의 공간용지 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제안을 이후 차분하게 구체 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박혜숙의원 (비례대표)

▶ 한스타일 및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경제 여건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과 한식, 한지와 함께 우리의 전통 멋을 추구하는 한소리와 한춤, 그리고 한방이라는 이른바 전주의 여섯 가지 한(韓)스타일은 사업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건 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각 사업에 대한 투자배분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옥보존이나 한지 사업에는 해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무려 9년째 행사를 이어 온 한방엑스포는 연간 행사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며 한방 산업 역시 뚜렷한 사업발굴이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방엑스포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소극적인 행사추진 등을 이유로 한방엑스포 행사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명을 통해 관리 감독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송시장의 기



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 주시는 완산구 전동3가 일원과 다가동 일원에 약전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 투자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오는 2014~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 사업이 늦어지자 당초 약전거리 조성을 요구하며 민원을 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차이나 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한방엑스포 장소에 따른 질책과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라 올해 한방엑스포 추진위원들은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태조로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넣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엑스포가 해마다 전통문화 축제 성격으로 행사가 치러지면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전통문화국이 아닌 경제국 신성장산업과 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축제 성격이 강한 한방엑스포 행사는 문화인이나 문화전문가들의 협조나 홍보는 물론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축제인가? 아니면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조직 개편시 전통문화국으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방엑스포 행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산삼부스 홍보는 요란했습니다. 여건상 전시 조건이 맞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볼 수 없었으며 내빈을 위한 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한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방음식 아울러 의약까지 개발하는 현실을 볼 때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서는 한방전시관 신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문제입니다.

한옥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방비 50억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5억원을 확보한 반면 전북도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5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광부는 급기야 내년도 예산확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의회까지 찾아가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확보돼야 할 20억원의 도비가 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이상 전북도와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는 주요 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에 많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임시장이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 시작하셨던 사업이며 특히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은 대표적 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 전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김완주 도지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한스타일 및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께서 한스타일 한방과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방엑스포 행사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한방산업 활성화에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약령시는 대구와 더불어 350여년간 전국 2대 약령시로 명성을 떨친 곳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주를 전국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약령시를 부활하여 올해로 9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한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방도시 전주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높이는 축제의 장으로 열려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근 고령화 시대가 촉진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서 한방의 산업화를 통한 시민 소득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주약령시 한방엑스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방산업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학관, 한방체험관 운영, 한방음식, 한방 기능성 식품 등 전시·체험행사 등에 중점을 두어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으며, 특히 한방산업화를 지향한 새로운 시도와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행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산업화 축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타지역 유사 축제와 차별화된 전주약령시의 정체성 확보, 행사를 주관하는 약령시제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이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전주 한방엑스포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우선 내년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한방관련 단체, 대학,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여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명실상부한 한방엑스포로 자리 잡도록 행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2003년에 한의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5년도에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또한 전주경제 기우기 5대 신역동산업으로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을 기치로 한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한약재 품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우수한 약재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한약재를 소재로 한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를 통한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약전거리를 중심으로 한약재 유통, 한방 기능성 식품, 한방의료 기능을 집적하여 전북지역 한방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의료, 전주 음식, 전주 전통한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투자 우선 순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한방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전북권의 한약시장 유통의 집적화를 통한 한스타일 한방산업의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간 연장 540m는 지난 2004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구)도청에서 완산교 구간 500m에 대하여는 2008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시 사업비 50억을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우선 선도시업으로 연계하여 국비를 2015년까지 확보해 추진하는 조건부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일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건복지부와 직접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엑스포는 전통문화 축제 성격이므로 조직개편시 전통문화국으로의 개편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현부서인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으며, 문화인들의 협조나 홍보, 행사 진행 등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전거리에 한방전시관 신축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마는 한방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약전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한방엑스포를 활성화시키며 한방관련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는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전거리를 포함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시 직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비 확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도시조성을 위한 도비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1월 완료한 바,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50대 50 원칙에 의거, 2007년까지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역시 50억원 을 확보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2008년도분 국비 30억원에 대한 지방비로써는 도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6년과 2007년도 분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특히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도지사님을 방문해서 만나서 수차 건의도 드렸고, 또 도의원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지사님, 우리 도의원들과도 주기적으로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4기 주요 공약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서윤근의원(인후1·3·우야2동)

▶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3월 오늘과 같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전주시 택시문제의 난맥상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일상화된 불법 탈법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전주시 2천5백여 택시노동자, 이에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주시민들 모두가 난마처럼 얽히고 섞인 택시문제의 피해자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택시문제의 높은 장막을 느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30여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불사르는 등의 극단적 항거를 유발 시켰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이 뒤엉킨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택시면허권, 지도감독권 등 택시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전주시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경영,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회계와 경영합리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우수기업 육성과 부실기업 퇴출 등이 바로 그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25개의 법인택시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보광운수라고 하는 운수업체입니다. 이 보광운수의 불법 탈법은 가히 택시문제의 종합세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직원들로부터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원천 징수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공단에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광운수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상의 횡령입니다. 직원 수가 150여명이니 몇 년간 수 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보험금이 사라졌습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되는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조세특례 제한법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복된 부가세 경감분 역시 역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감안하여 유류세액의 인 상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전주시는 매 분기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인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 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광운수에 지급된 보조금만 1억9천만원이 넘습니다. 연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기에 모든 연료를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보광운수에서는 직원들에게 전부 돌아가야 맞지만 역시 한푼도 직원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공단측에서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가 중간에 가로채고 직원들의 보험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 보조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할 유가보조금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지어 전주세무서까지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다시피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모두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면허의 기준,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등의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여 운전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택시 회사에서의 7년 이상 근무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나 열악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저 참고 견디며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이 독소조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내려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미 춘천, 인천, 강릉, 원주, 목포,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광운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거침없이 무시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사납금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까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1인1차제'는 전주시 관내 25개 회사 모두 보유택시의 40% 전후 수준으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16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1인1차제는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불법이며 규정되어 있으며, 무리한 운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면허권을 가진 시장님은 보광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비문서인 동일회사 7년 근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택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조사,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 기구인 '택시행정 자문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의원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전주시 택시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보광운수의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대책과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규정중 근속년수 개정, 그리고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미 지급하고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한 보광운수의 면허취소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운수는 1971년 3월 원일기업을 설립하여 2004년 3월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서 1999년 회사 부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입니다.

보광운수에서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분 까지 11억5천6백9십3만5천원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키로 노사간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는 사업경영이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고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 지급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급등함은 물론 승객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운수업체 모두가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보광운수는 현재 10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152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사업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또다른 여파들을 감안해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 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한 자를 1순위에 묶어놓은 것은 근로자를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의견으로 규정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와 전주시내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해서 운정중인 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 최초 공급시기인 1978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호남지역은 동일택시회사 근속년수를 7~8년 이상, 수도권 지역은 10년 이상, 충청지역은 6~7년 이상, 영남지역은 7~11년 이

상, 강원지역은 2~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7년도부터 동일택시회사 10년 이상 근속경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던 근속월수가산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5년이상 동일 택시회사 근속중인자를 관내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증인자로 2007년도에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일 택시회사 근속규정은 근로자들의 회사선택권을 침해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규정 폐지나 개정문제는 폐지에 따른 또다른 반발등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법인택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와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시 택시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 택시행정자문단"을 구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택시행정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은 앞서 말씀드린 보 광운수의 경우처럼 택시행정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님과 고문변호사, 그리고 노무사 등으로 자문 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Q 오현숙의원(비례대표)

▶ 병·의원 무상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통과로 전주시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하여 0세 아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사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방문하여 접종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물론 영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진찰로 안전성을 높이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실시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2006년에는 병·의원 예방접종 대상의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전주시만 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예방접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출산율이 증가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접종율이 27% 증가였습니다. 이는 병·의원



에 등록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예방접종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추게 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을 받는 한달 인원을 보 면 전년에는 1,964명, 2007년에 4,640명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한달에 4천 600여 명이 편리하게, 또한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아 영아때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 지 않겠다고 하니 전주시의 사업기준 판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 따름입니다. 전주시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과 국고보조 책정 여부에 따라 사업의 올바른 평가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의적 원칙하에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 적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의원무상예방접종 사업은 전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영향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가 있는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새해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을 보았을 때 전주시가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주시의 학교급식 예산은 2006년 21억, 2007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억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는 13억5천44만3천원으로 대폭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식비가 2007년 17억1천4백만원에서 2008년 3억5천5백만원으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 산량 부족과 보관상태 불량, 도내 농산물의 부족, 일부학교에만 지급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시 한 예산 삭감이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부식 예산을 삭감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6만5천845명 학생들에게 3억5천5백만원의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근시안적이고 생색내기식의 문제해결방식이니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 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써 농가의 소득 확대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부식비의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등을 통한 농민과 학생 모두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과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2008년도 내에 수립할 의향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삼은 2003년 설립 당시 전주시독학원의 이사과 거의 동일한 이사로 구성되었고, 기본 재산이 된 토지는 전주시독학원의 교육용 부지로써 임대나 증여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용부지를 무상출연 한다는 허위증서로 법인설립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실이 밝혀지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법인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시정요청을 하는 등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덕삼과 전주시독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2007년11월28일 전주시방법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신축자금 3천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전주시 에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16억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주시독학원의 교직원과 전학장이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독학원은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마련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복지관 이용을 못하게 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하며 운영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설립허가 취소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설립보조금에 대하여 환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전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덕삼 및 전주시독학원을 상대로 사기, 공무집행방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 16억3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기행각과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애꿎은 주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었

습니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기 독학원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면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전주시에 소송을 진행하고 주민을 볼모로 삼아 시간을 끌것이 분명하며 복지관 문제가 장기화 될 것은 자명 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이 법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여 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전주기독학원은 전주시와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만 심각해 질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수 조치 후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 의 능력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06년 12월 20일 제239차 본회의를 통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수입은 9억 6619만 3,000원으로 2006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하고 2007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6,619만 3,000원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9억 3,619만 3,000원이 지출 될 예정으로 기금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07년 예산 마무리가 되고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현 시점에서 2007년 수입으로 1억원의 예산 이 출연되어 7억3천2백2십7만천원이고, 2008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전주시에서 집행할 때 얼마만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생각하며 여성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전주시의 현실을 입을 수 있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송하진 시장의 여성 정책 마인드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면서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홈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전주시 우아동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철저히 숨긴채 지역업체인 덕진마트를 앞에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삼성홈플러스로 차명개점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전주시에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 하였었습니다. 이에 삼성홈플러스는 전 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8월1일자로 1년간 임시승인을 해준바 있는 부도덕한 업체입니다.

또 다시 삼성홈플러스는 STS개발(주)를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신청하여 지난 7월 3일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4층 지상27층으로 연면적 13만9,661(㎡)의 건물로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개층의 면적이 2만7천400 ㎡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에 대해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006년 12월 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을 것과 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약속서를 받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기 보 다는 약속서도 STS개발(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 전주시 행정의 안일한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한 STS개발(주)와 삼성홈플러스의 행태는 규탄받아야 마땅한 사안인 것입니다.

STS 개발(주)는 경상남도 진주에서도 SM21이라고 브랜드를 위장한 뒤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홈플러스에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자 경상남도에 이행각서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STS개발(주)의 손을 들어주어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사례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12월 5일 STS개발(주)와 체결한 약속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A 송하진 시장

▶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이 시민혜택이 많은 수



해사업임에도 2008년 예산편성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원칙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각 국·소·구청별로 예산 실령액을 배정하고 국·소·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 원칙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시민수혜도, 사업의 우선순위, 가용재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인 경우는 가급적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최근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재정 전반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3억 9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고 병·의원 접종률 향상이나 정확한 접종정보 등록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자체사업 추진은 예산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전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2008년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05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주식과 부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주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부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 부식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아직 전주시 관내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재배하는 일부 농가 외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없어 각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 대부분이 타지역 제품으로서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않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2007년부터 전라북도의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로드맵이 2010년까지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도 사업의 협력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교육예산이 2007년도에 100억원이 넘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도 서울 장학숙건립 등 많은 교육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학교급식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여 변경하였으며 앞으로 관내에서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조성, 친환경 브랜드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농민과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부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Buy-Jeonju우수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부식비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500여억원 정도인 우리시 예산형편상 부득이하게 부식사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삼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덕삼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운영하고 있는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이 부지문제로 인해 1년여 동안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전주시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6억3천5백만원에 대해 환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에서 덕삼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국비 481백만원, 도비 561백만원, 시비 561백만원 등 총 16억 3백만원을 지원받고, 법인 부담 4억원등 총 20억3백만원을 들여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덕삼 설립 당시 전주시독학원에서 덕삼법인에 무상출연하기로하여 조건부승인한 기본재산(부지 1,807㎡)이 교육용 재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승인되었고,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2007년 1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덕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권과 취소처분권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아울러 신축보조금 역시 국·도비가 포함된 복지사업입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는 물론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수조치 후 복지관을 새로 마련하자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개소가 완산구 관할구역내 소재하고 덕진구 1개소는 송천동에 소재하였던 덕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덕진구 관할 구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또한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1998 년도에 설치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시에서 7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수익금을 합하여도 조성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시 출연금으로 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전액 계상하지 못하고 1억원만 반영 한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시 예산 사정이 별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 과거와 달리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단순히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 조성을 잠시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부에서 수행해 오던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간 여성발전 기금의 활용도를 분석해본결과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식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일시에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서 지속적으로 여성사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홀플러스 입점 의혹에 대하여

효자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삼성홀플러스 입점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삼성홀플러스가 STS개발(주) 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경남 진주시의 경우처럼 STS개발(주)에서 추후 행정심판 등을 통하 여 대형마트 입점을 할 것으로 예측 되는바, STS개발(주)과 체결한 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행정심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주상복합건축물은 2006년11월 교통영향평가가 우리시에 접수된 후, 2007년 4 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되었으며, 지난 5월에 지하 4층, 지상 27층 공동주택 291세대와 판매시설 58,231㎡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후 2007년 7월 2일자로 건축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삼성홀플러스가 STS개발(주)을 앞세워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우리시에 제출된 서류와 삼성홀플러스측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며 STS개발(주)이 삼성테스코(주)의 계열회사도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유 지분이 동명이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STS개발(주)은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신청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등 주상복합건축물이 관계법령상 가능함을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판매시설의 구체적 용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 1층과 지상1, 2층의 판매시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철물, 전자재, 가구 등 건축자재 위주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여 우리시에서 그것을 입증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2006. 12. 5일자로 약약서를 공중 받은바 있습니다.

약약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약약서는 법적으로 제출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우리시에서 판매시설 부분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하자 사업주체인 STS개발(주)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에 대형마트를 하지 않겠다는 약약서를 공중까지하여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서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처럼 행정심판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STS개발에서는 대형마트를 입점하기 위한 어떠한 징후도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앞으로 대형 마트 입점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기 제출한 공중 약약서와 건축허가 조건사항 이행요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내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대형마트 입점 규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임병오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또 다시 가속화시키는 사안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도심의 어려운 실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역사이래 구도심 있는 동사무소가 12개동이 3개동으로 통·폐합된 현실이 두 번 다시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또한 대책 없는 신시가지 개발의 소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도청과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이전입니다.

도청과 경찰청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찍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빈 점포와 땅값이 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숨지며 가슴치는 소리를 전주시장에서는 듣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주시는 마지막 남은 전주 보훈지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마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시킴으로써 구도심의 말살정책처럼 또 한번의 충격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끝이 없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가능치 않는 구도심 피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의식마저 둔화되거나 만성화되지는 않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구도심 주민여러분!

전주시는 아직도 구도심의 어려운 사정도 모자라서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은커녕 전무한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구도심에는 노인복지 정책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2004년도 인구 10만명당 1개소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을 결정해 놓고 유독히 구도심 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구도심 노인들은 학대 이상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 건립 정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당사자 보다 인구만 많은 것으로만 방침을 정한 것은 노인복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은 방침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정책도 현실성 있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편견 없는 노인복지 정책과 차별 없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과 노인복지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송하진 시장님께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 방

침을 2004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입니다.

전주시는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기 전 1982년 최초로 금암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고, 두 번째로는 1994년 안골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2년 서원노인복지회관이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시 2007년 9월 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입니다. 인구대비 10만명당 완산 3곳, 덕진 3곳에 대하여 회관 건립 방침을 정하고 대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시비 168억 2천 2백만 원, 국비 41억 4천 8백만원, 도비 15억 8천 7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25억 5천 7백만원을 확정짓고 이미 덕진 3곳 완산 1곳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산 2곳 중에서 삼천·효자는 12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서학·평화는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회관 최고 정책 입안자인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노인을 위한 방침이어야 하고 그럴리아 없겠지만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의 억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방침은 불변하고 영구적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확충 건립 방침은 노인들의 복지증대와 고령화 시대의 사회 복지에 하나의 정책이 되어야지 행정편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전주시가 스스로 정한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은 법이나 규정, 전주시 조례에 근거한 방침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의 9.30일 현재 인구는 62만 6,978명으로서 인구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8.6%로 5만 4,184명입니다. 구도심 인구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등이 4만 4,894명이고,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수는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5,483명으로 15.3%에 달하며 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서신동, 중화1동, 중화2동, 효자4동의 인구는 10만 3,670명인데도 노인복지회관이 2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도에서 중화산동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인구 10만명당 1곳을 배정하는 방침에 위배되고 더욱이 4개 동의 노인인구수가 7,047명으로 노인복지회관 1곳당 실질적으로 3,523명에 불과하여 구도심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주장이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건립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구는 많고 65세 노인 인구수가 적어도 복지회관건립이 방침대로 가능하고 반대로 인구는 적어도 실제 65세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노인복

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는데 전주시는 이에 준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도심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율이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 서학·평화 노인복지 건립 2007년, 2008년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기 계획에 수립해야 사업의 예산이 절차상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소리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물며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스스로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전무하다는 증빙 자료를 보면서 전주시 경로 효친사상이 이렇게 무지하고 전무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측은지심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입니다. 청천동지할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약 5,500여명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이어서 본 의원은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추진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는지 시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역의 노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데 시장이 마음 한번먹고 기침 한번 크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구도심 노인분들의 실정으로 봐서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어 몸소 몸부림치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꺼져가는 희망에 불을 지피는 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정책마저도 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대화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전무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도심은 UN이 정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4% 고령화 사회에서 15.3% 이상으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더더욱 침해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구도심에 계시는 65세 이상 5,50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나이 먹고 늙은 것이 억울한데 전주시 복지 정책마저도 타 동 노인들 같이 노인복지회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처를 받는 구도심 노인분들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려 보신다면 차마 이렇게 차별하

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바라는 구도심의 수 많은 노인들 가슴에 돌을 던지고 또 던지겠습니까? 그 노인분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자화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깊은 상처에 병들어 있는 구도심 노인들한테 희망의 불씨를 더 이상 짓밟지 마시고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본 의원의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임병오 의원님께서서는 지역구 사업에 누구보다 강한 애정을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기본방침의 제정근거와 그 방침이 영구적인 것인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권역을 정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방침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결정된 방침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기본 방향을 존중하여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주시가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회관 1개소 건립 방침을 정한 이유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는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건립 중에 있어 노인 인구 9,143명당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갖추고 있어서 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들자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포항에는 1개소, 고양시 2개소, 청주시 3개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천 3개소, 성남시 2개소, 수원시 3개소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구도심권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정성과 구도심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여부 및 추진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법령에 의거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수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를 구간별로 통계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등 (구)도심권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절대



수는 적으나 비울면에서는 많은 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6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거나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도심권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작은생활문화 복지공간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Q 장태영의원 (삼천2·3동)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주제로 먼저 전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소각 자원센터에 63억을 들여 2007년 3월에 총괄 준공한 연면적 4,111㎡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이 10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준공이 되고서야 3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어 5월 8일 수탁자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된 이후 협약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12월부터 위·수탁 운영협약에 들어가 내년 2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련 물품 미확정 및 구입예산 전무라고 적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 협의 후 소요예산 2008년 본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파악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이고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차액이 있다면 2월에 어떻게 개소 운영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제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3,38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무실, 사우나, 헬스장 시설로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노동단체에 독립채산제로 위탁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관 수개월 전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개관준비를 하였고, 2005년 도 본예산에 4억원의 개소비용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사전에 면밀한 수익성 판단을 통해 설계변경 등 시설물 효율 극대화 수탁 2년차에 자립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에 냉각기 5천만원 시설보완을 하였고 내년에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보강공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으로 전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자체수입으로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상임위에서 형식적인 독립채산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이 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 3천만원, 내년도 운영비 3억원 중 2억원이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전주시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 집니다. 계획된 시설을 그 건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더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주시 반상회보 천년전주 12월호에 보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국내유일의 성공사례라는 제목아래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소각장 주변을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고 화려한 변신을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한 전기 판매대금 연간 8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2007 전주시정성과라고 선전에만 열 올리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먼지에 쌓여 가며 굳게 묻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이고 친환경적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까?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입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에 자리한 생태공원, 역대 방송시설을 갖춘 야외음악당, 부설 설계가 의심되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게임장, 노면 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을 적자 없이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차례 관련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시민혈세가 누수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주민편익시설 정상화 방안과 전주환경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300백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백억(국비 30%, 도·시비 20%, 민자 50%)를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R&D센터 및 홍보관 1동을 건립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위치를 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즉 소각자원센터 부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과 시설 이전에 따른 입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주시가 이미 입지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역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에 달하는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은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많은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성상별 수거체계, 분리체계, 재이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에 있어 전주시가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기간 중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범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은 모범적인 분리배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배출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결과와 예측에 맞춰 감량과 재활용에 동참한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이용,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재활용품 처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곧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 가구류와 가전제품을 소형차량에 운반, 고치고 수리하여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단계에서 집계차로 폐기물로 만드는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장비 체계와 발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종 폐기된 대형-소형 가전제품류도 분리하고 해체하면 나사하나 버릴 것 없는 자원이 되고 곧 돈이 되는 게 재활용 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선별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무상태의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4천 3백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전주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라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구역제, 재활용품 및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전면민

간위탁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방송사의 시사프로에서 전국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취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민간위탁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전주시 입장이 있고 서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라는 판단을 통해 청소행정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여 행정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합 수거된 단 1%도 분리되지 않는 압축베일쓰레기를 1일 100씩 소각하는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거거부라는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민이 신뢰하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공동 2업체, 단독주택 2개 업체, 총 4개업체) 생활쓰레기 4개권역 수거운반(4개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의거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톤당 29,700원, 2006년 지급액 1,135백만원, 단독주택 톤당 39,810원, 2006년 지급액 1,040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는 톤당 평균 56,820원, 2007년 3월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액 799백만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51,000원, 2006년 지급액 3,658백만원을 지급하여 약 6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주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톤당 처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폐기물 시설 운영비 지급과 수거운반 처리비 계약은 경제성을 앞세운 업체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노사문제와 이른바 싸늘이 수거와 이중계근 등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 효과가 미흡하고 감량화 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고정비, 유동비, 이윤을 따져 지급하는 체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용역비 산정기준과 운영비 지급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문제가 대두되어



그 개선을 위한 대책위 운영이 있었고 최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민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각방식과 그 입지조건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전주시 청소행정 대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압축배일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Recycling-Town 건설 등과 관련한 전주시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와 주민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물품구입 내역, 그리고 2008년 2월 운영개시를 위한 부족예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 운영시설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2007년 3월 준공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동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장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농구장, X-게임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의 수탁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전주시 폐·축·법 조례 제6조의6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집기를 보완하고 위·수탁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집기류 구입등 5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헬스장 운동기구와 편익시설 등 집기류 구입등의 명목으로 3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2008년 본예산(안)에 2억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예산에 확보하여 편익시설이 조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판단한 근거와 수익구조 분석이 있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보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시의 경우 대부분의 편익시설 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독립채산제 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참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과 냉·난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다만,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축·법 제20조에 근거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편익시설로 별도의 수익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설보완이 적정한가는 주민협의체와 꾸준히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장, 실내체육관등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까지는 아직 적극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우선은 편익시설의 정상운영에 전념하고 추후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Recycling-town 건설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조성 입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견해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과 홍보관, 재활용 연구센터가 집적 된 Recycling-town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29일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조성입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입지 모 집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한 입지 적정성 검토, 각종 현황조사는 물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입찰 안내서 작성, 기타 인·허가지원, 주민설명회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ecycling-town 조성시 국·도비 지원여부와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고보조 관련 환경부 주관부서를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신청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고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경우 도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 사업비중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억원 가량을 우리 시가 단기간에 투자할 경우 부분적인 재정 압박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원의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 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질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격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으로단순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를 소각을 통하여 열 및 전기에너지로 회수하는 전주권 소각자원

센터를 건설한 바 있고, 또한 전국 최초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재활용 전용공단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조성부지의 95%를 매입하였고, 201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현재 재활용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거체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에 주안점을 두던 청소행정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효율적인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금년 7월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거점 수거를 계획하고 내년에 6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폐가전 제품의 수거를 의무화 한 생산자 책임제 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2006년 7월부터 전북지역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협회를 통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와 가전제품은 한국 생활자원 재활용협회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 폐기물 수거시 인력 수거가 어려워 집계를 장악한 차량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가능한한 파손되지 않도록 수거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2008년도에 권역별 재활용 센터를 추가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 관련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직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수집·운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동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일반적 추세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공단설립 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매체에 일부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민간위탁 후 꾸준한 지도 감독과 면밀한 모니터링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간위탁 본연의 목표인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압축배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야적중인 압축배

일 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립장에 반입되었던 생활쓰레기로서 2006년 7월부터 소각자원 센터에 이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 및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불연물질이 함유된 압축쓰레기를 소각전에 파쇄·선별 처리후 가연성만 소각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된 2006년 이후에 생산된 배일쓰레기만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소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압축배일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폐기물부터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필요시 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선별기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선별기 도입이 어려울 경우 쓰레기 성상이 양호한 배일쓰레기는 소각하고 잔여 쓰레기는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247회 5분 발언과 금번 시정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을 미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Recycling-town 건설 등 재활용 관련 시설의 확충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지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쓰레기와의 전쟁에 따른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위탁처리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전주시의 종량제봉투가격과 시민들께서 부담하시는 처리수수료가 우리시와 유사한 전국 도시에 비해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련 민간위탁 용역비 산정기준이 종전 톤당 산정방식에서 세대수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과 직접 일괄 계약방식으로 위탁 계약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현재는 단가방식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용역비 지급체계를 사안에 따라 전환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의 변화와 참여, 그리고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인 성공의 요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조지훈의원(완산·중화산1·2동)

▶ 전주의 성장동력(전주·완주의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천년을 넘어온 전주!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 자부심은 참으로 남다른다.



저 또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전주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도시들의 발전과 쇠락을 지켜 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음을 그 자부심만큼 크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인구는 5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의 소득 수준은 전국 도시 평균에도 못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거리를 찾는 청·장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의 최대 화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접 시·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당연히 전주와 완주도 통합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주와 완주는 오히려 소모적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전주·완주 통합의 목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목소리들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며 본의원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의 발전 방향을 찾고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저는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사이에 오고간 모든 공문서를 뒤져보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상호협조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씨앗을 찾고자 했던 제 노력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은 총 10여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소한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커녕 작은 의견교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와 완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감정 섞인 논쟁을 벌인 것 외에는 단 한차례도 당사자간의 직접적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 전체영역에서도 단 한번의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전분야에 걸쳐 그나마 2005년 5월에 전라

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등이 IS전선 이전과 관련한 투자협약서가 유일한 상호 협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에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9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에서는 이 조합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61조에는 그 권한과 역할을 제16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내용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된 대표적 사례로는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2월4일 설립하여 48명의 정원과 약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수단 및 시설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부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설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03년10월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에 맞춰 2004년1월20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155명 정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였으며, 총104.8km²(약3,171만평)의 면적에 84,406억원의 사업비로 물류와 비즈니스 중 심도시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공조체제를 통한 수년간의 전략수립과 단계별 공동대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냈고 자치단체조합까지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전주와 완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단초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전주시의 면적은 206.28km²로 전라북도의 2.6%에 불과하지만 완주군의 면적은 821.04km²입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027.32km²로 전라북도 면적의 약13%로 서울특별시의 1.5배가 넘습니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1차산업이 0.1%, 2차산업이 14.0%, 3차산업이 85.9%인 반면 완주군은 1차산업이 60.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21.1%로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완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은 우리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가능성 등에 대해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밀하고 적극

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상호협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속도경쟁에서 낙오”, “전국 10곳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 마무리 못해” 이게 오늘 신문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이 짐작되는 기사제목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일대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 10,145,000㎡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이 들어서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의 공동주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태를 보면 혁신 도시내에 행정 경제 담장이라도 둘러칠 기세입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일의 선과 후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행정절차등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토공에서 그 보상을 책임지지만 전주와 완주가 분명한 주인의식으로 지금부터라도 토지보상등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시행과 완공 그리고 대상 기관들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송하진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봉동이나 삼례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둘째, 새만금시대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서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있는 새만금에서 김천간 동서횡단철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군산과 익산 전주 그리고 진안 무주를 경유하여 김천에 이르는 총120.9km 국비 2조4,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호남 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기반시설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보고 단계에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 발전종합검토보고에서 주장하는 완주산업단지 경유에 대해 적극적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시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영화 촬영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주 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 유치에 나선 전주시는 2001년에 4편의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2006년 한 해에만 60편의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 영상물이 전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영화촬영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영상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화후반 작업

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야외촬영세트, 후반제작의 순환 구조는 더 많은 로케이션 후보지를 확보해야 더 높은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주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의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지금의 담보상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신 전주경제기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서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 한해에만 589만명이 전주를 다녀갔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같은 계획서에서 ‘이는, 딱히 볼거리가 없는 전주가 문화관광만으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전주에 붙잡아 두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안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관광산업을 전주에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완주군과의 공동관광 상품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까지 13,463백만원의 사업비로 145,000㎡의 대야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군정방향에서도 동상 대야저수지 주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개발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에서 체험관광하고 일박 후에 완주 동상의 자연생태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완주군과 협조한다면 대둔산 관광객들도 전주비빔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숙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화관광 상품의 하나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경기전의 역사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 유림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1차로 선택했던 위봉산성을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위봉폭포까지를 거치는 코스가 있어 야 적어도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한지의 산업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도 33억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일대에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그리고 한지의 주재료가 되는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연계 가능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



업 유치를 위한 공동 활동 방안 마련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단과 향후 조성계획까지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현황을 토대로 적어도 산업 육성방향과 기업 유치 활동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이미 구성되어있는 전주 경제기우기운 동본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불황이 없는 송천동의 경제활동은 완주산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생의 길 공동발전의 길을 송천동에서 발견합니다.

비용의 효율성과 경제가치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주시의 중요한 성장동력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당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나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무사안 일이며 책임 회피입니다. 계단을 놓아가듯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짚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음 천년의 전주를 이어가고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검토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하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건설교통부는 특화 사업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변 좌우안의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공모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전주시가 응모한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지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시대상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도시 지표의 평가 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원인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변 좌안에 형성된 구도심 지역인 용머리고개와 완산칠봉 북쪽면 지역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전주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는 낙후되고 고도제한 지역과 공원지구에 묶여 그야말로 쇠잔과 황폐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률 0%에 가깝고, 4000명에 이르던 완산초등학교는 학년 당 겨우 2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올해만 10차례가 넘는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왕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의 성장동력(전주·완주의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공동발전 전략과 협조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행정구역의 떠나 큰 틀에서 인접 시·군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해서 전주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것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인 만남을 자주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LS전선등 기업유치와 전주·김제·완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모범적인 정책제휴를 통한 성공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공동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가시적이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간 공동의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마인드를 보다 새롭게 함으로써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완주군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방안을 수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혁신도시의 주체는 전라북도로서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채널은 기본적

으로 도 민관학협의회를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전북도의 주관하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건설해 오면서 기관배치 도시부 용지 배분,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적도 있지만 기관배치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합의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 등은 전주·완주 부단체장 이 공동위원장으로 8차에 걸친 보상협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의 궁극적 관건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은 제주등 타 도시에 빼앗겼지만 앞으로 토지공사와 전북도, 완주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는 이전을 위해 예를 들면 이전기관 직원가족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등 완주군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방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시대 서해안 배후도시로서의 물류·산업 기반강화 공동노력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연장 97.4km로써 1조 7,6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9년에 수립된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본 사업이 2020년 이후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새만금 개발등 지역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07.11.30일 고시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횡단철도를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08년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라북도 및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주산단을 점유하는 문제는 완주군은 물론이고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완주군과 협조체제를 구축 완주지역의 촬영 후보지도 발굴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종합영화촬영소가 금년말 완공되면 전주에서 로케이션 촬영부터 후반제작 작업까지 영화제작 전 과정을 끝낼 수 있어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촬영도시에서 영화제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 인근지역에서 로케이션 촬영이 이뤄지면 영화사들이 제작비용 절감을 위해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이용하거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구축되어 있는 후반제작 장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영화촬영 유치 및 로케이션 후보지 물색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내 1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완주지역에서도 봉동 야외세트의 효자동 이발사, 송광사 벚꽃길의 가문의 영광, 완주산업단지에서 한반도 등 22편의 영화를 촬영한바 있습니다. 완주지역 촬영후보지 발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영상위원회와 함께 완주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주와 완주를 잇는 일체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금의 답보상태를 돌파할지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역동산업인 한스타일 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문화적 생활권역에 있어 사실상 공동의 정서와 공간을 갖고 있는 완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관광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통문화와 자연생태환경 및 휴양·레저 등에 대한 상품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의 문화생태관광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위해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시·군까지도 포함한 관광상품 개발을 이미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화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천주교의 성지 치명자산이 있는 전주, 전주김씨 시조묘가 있는 완주, 새만금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전주관광의 새로운 전환점과 돌파구 마련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소양면 일대 천년한지 천연박물관을 계획과 연계가능성 및 상호보완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BUY 전주 상품으로 완주군 소재 기업까지도 포함하여 추진해 오는 등 상호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검토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한지는 서서학동 흑석골을 비롯 구이, 상관 등 완주군 지역에서 전주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며 명성을 지켜 온 것을 보면 전주와 완주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의 지원사업으로 한지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게 될 한지관련 R&D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지만 전주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한지제조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한지의 기술과 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조선왕조실록 복본사업에는 대량의 한지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국산 다회로 생산은 전주 인접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과는 함께 수행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전주 한지산업특구지정사업에도 완주군이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과 체험관 건립,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등 전주가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기술집약형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활용방안 마련과 상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공단과 조성계획 포함,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11만㎡ 등 총3개 지역 248만㎡를 산업단지로 조성 가동 중이며, 또한 공무원교육원 인접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팔복동 5개지역의 협동화단지 등 총 114천㎡가 산업용지로 조성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팔복동 등 북부권에 233만7천㎡의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와 만성동 복합단지 내 260천㎡ 등 총 259만7천㎡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28만8천㎡는 2008년 6월에 착수 200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2단계 23만2천㎡와 3단계 181만7천㎡, 만성동 복합단지내 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현황은 335만8천㎡ 부지에 약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완주산업단지와 307만4천㎡의 부지에 44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이고, 41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인 완주 과학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각각 100%와 96%의 산업용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은 공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313만㎡에 2005년~2012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하여 자족형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2006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조속한 공동활용계획 수립과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부품소재 산업은 우리시 5대 역동산업의 주요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전략산업이며, 완주군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전주권 발전의 키워드요, 전라북도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주의 첨단기계벤처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의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분야 연구 및 개발, 기업유치 등 기능면에 있어 상호 보완적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 시·군 간 공동 활동 계획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전라북도의 추진전략계획에 따라 기능이 배분되어 전주는 R&D중심, 완주는 관련 산업체 유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두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접점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자치단체간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의 구성은 제약도 있을 수 있고 본래의 뜻이 왜곡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관련 순수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 간에 구성토록 하여 의견을 집약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서의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적극 동참하고 고무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시장의 희망을 전주경제키우기 운동본부에 전달하고 구체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완주군 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2년까지 총 259만 7천㎡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예정이고 완주군도 313만㎡를 조성 공급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까지는 충분한 산업단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되어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주시가 완주군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개발되어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 가능지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하여

첫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관련 용머리교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부의 공모내용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시범도시와 시범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모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시범도시 신청은 기초지자체별로 특화된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유형은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형으로 6가지 분야입니다.

지난 8월말 1단계 대상도시 평가를 끝내고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 옹모기간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옹모한 사업내용과 사업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에 시범마을 사업으로 전주 향교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분야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건교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그 도시의 문화정체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사업중 문화관광부와 문화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와는 구도심 주거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옥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1단계 사업으로 전주의 근간이 되었고 동학혁명의 주 무대였던 완산동일대의 역사문화권을 정비 하고, 2단계사

업으로는 한옥마을과 풍남문, (구) 도청사, 객사를 짓는 도심권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에서 150억 규모로 추진 중이며 동학기념마당, 용머리 잇기, 완산공원 명소화사업, 동학군 서문입성로, 용머리 고개 골동품거리정비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표 평가를 통해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도시 지표의 평가내용과 전주시의 평가 결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서 총 7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였으며, 특히 우리시가 응모하였던 문화도시 부문은 가장 많은 26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1차 도시대상 평가 결과는 2007년 시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원칙으로 정확한 결과를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상하지 못한 원인을 자체 진단해보면 1차 도시대상의 평가지표대부분이 주택, 주거환경, 상하수도 등 도시 기본인프라를 평가 하는 지표가 많아서 신흥 도시들에 비하여 도시인프라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상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범도시 선정은 2차 평가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대상에서 전주시가 순위안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그간 추진해온 실적이 월등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 도시대상 분야에서 뒤쳐진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이므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한 한옥마을주변의 성과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비전을 확실하게 부각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준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사업에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도시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 주거환경 등 기본 도시인프라로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늘여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수물 제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친수공간 확장, 택지개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년전주 건설의 각종 사업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 도시인프라로 도시지표를 높여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살고싶은 도시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서로 원하는 바이고 회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2차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전북대학교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용머리고개의 시범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여 러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시의 장점 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 시범도시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용머리고개와 완산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계속해서 시범사업에 응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머리고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전주시 계획과 전북도시가스 측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용머리고개 완산칠봉지역은 열악한 주거여건임에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주민대표들께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시에 수차 방문 건의되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을 시작하여야 하는 대명까치아파트 입구부터 (구) 완산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의 도로가 2006년도에 하수도 사업 후 재 포장을 실시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이 지역이 대단위 미 공급지역임을 감안하여 연간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늦었지만 타 지역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시가스 측에서도 해당지역이 열악한 주거여건임에도 수차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결과 주민부담금이 평균 70만원 정도이나 이 지역은 여건상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공사 시행시 주민들의 낮은 신청율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 당장은 도로굴착이 가능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강영수의원(서신동)

▶ 황방산 공원관리에 대하여

송하진 시장께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예술 도시국을 신설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 황방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서부권에 위치한 황방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전주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부 신시가지, 서쪽에는 혁신 도시가, 북쪽으로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추후 황방산은 명실공히 전주의 중심에 위치한 명산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산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황방산은 해발 216M 경사가 완만하고 남녀 노소가 부담없이 등산할 수 있어서 부권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1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이 산책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면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전주 근교의 가장 친숙한 산으로서 효자동과 팔복동, 상림동과 만성동을 잇는 산으로 전주의 주 출입구인 서부우회도로에 위치하고있어 전주를 찾는 대다수의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방산에는 수천년부터 내려오는 확인되지않은 고인돌군이 여기 저기 산재해있고, 남쪽에는 지방문화재인 황강서원과 문학대가 있으며, 북쪽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사방을 방비하는 4대 사찰중의 하나인 서고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신흥사와 일원사 감천사 등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당시 양민 학살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애환을 같이한 산으로, 특히 서부 신시가지 개발도중 출토된 청동 거울과 환두대도등 1,3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점 등으로 보아 황방산은 전주 도심형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더할 나위가 없으며 많은 유적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볼거리가 많은 산이기도 합니다. 산정상에서 보면 전주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북쪽은 답답한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 넓은 들녘이 있어 전망대 역할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그야말로 황방산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동안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조용하고 옛 것을 중시하는 양반의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고요한 도시에서 활기차게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황방산의 대부분인 98%가 사유지로 개발이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황방산 공원을 전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전체 시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전주를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탑을 건립하여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인 전주의 전경과 황방산에 산재되어있는 문화 유적과 넓은 만경 평야 그리고 서해 바다와 새 만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칭)전주 타워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전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유적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및 역사문화도시다운 옛 놀이시설을 갖추어 가꾸어 간다면 황방산 공원은 금상첨화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전주는 무궁의 태권도 공원과 새만금 특별법 제정및 새만금 사업의 효과로 전주의 미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고 대 중국 교역의 중심지가 될려면 전주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황방산 공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전주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주 타워와 황방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천년고도 전주를 전국에 알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춰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황방산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5년간 126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과 파고라 및 등산로를 정비한 바 있어 산의 규모나 면적에 비하여 너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투자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추후 황방산 공원관리에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방산은 자연공원으로 총 2,218,000㎡중 약 98%인 2,167,780㎡가 사유지로 개발이 난이하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속의 황방산은 98%가 모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황방산에는 침엽수와 활엽수등 12종의나무가 자라고있으나 생육이 왕성한 아카시아와 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주종으로 수종갱신이 불가피한 상태로 사료되는 바, 푸른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가꿀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체육시설이라고해야 고작 5년간 700만원의 예산으로 3점의 허리돌리기 및 바디실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등산로 정비와 파고라 및 정자 설치 외엔 너무나 열악하고 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많은 체육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40여년 전 황방산 2~3부 능선까지는 수십년 수령의 토종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전주의 공단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수입원목에 붙어있던 솔잎혹파리와 소나무좀벌레가 번식하게 되어 거의 전무하게 멸종된 상태라는 설이 무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문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이래에 현재까지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는 지, 과거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의 경과와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업으로부터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황방산과 덕진 공원의 노송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황방산 정상 봉우리엔 사유지로 판단되는 분묘 2기가 있고 고인돌과 같은 바위가 있어 장기적인 공원 구실을 하기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타워건립이 불가능하다면 2~3층의 팔각정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황방산 공원관리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전주지역의 발전여건이 변화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황방산 공원 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전주타워 건립,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확충, 사유지 매입 그리고 수종갱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방산 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방산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전주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전주타워 건설과 황방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황방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문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07년 4월에 발주하여 금년 7월 에 완료할 예정으로 시내 전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지역의 특성, 계획의 방향 등 큰 그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방산 종합개발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 수립된 황방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주타워 건립은 황방산이 가장 적지인지의 시민의견 수렴과정과 시행시 진입도로 신설가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와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등 쟁점이 있으므로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지난 5년간 공원의 규모나 면적에 비하여 미흡한 투자였으므로 공원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황방산 공원에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정자 3동, 운동기구, 가로 등 시설, 등산로 정비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양 구청과 본청의 확보된 예산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급히 필요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황방산 공원의 98%가 사유지로 개발이 난이하여 이대로 방치한다면 도심속의 묘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황방산 공원관리는 98%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공원은 황방산 공원 외 10개 공원이 사유지로 약 8천 6백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묘지 등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유지 문제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공원관련 법 개정등을 타 자치단체와 협력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침엽수와 활엽수등 12종 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소나무나 편백나무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달라는 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원녹지 조립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조립지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선4기에 들어 푸른 전주 가꾸기사업을 시정 의 최우선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방산 공원의 수종갱신사업은 지형과 토양 생물서식 공간 등 자연적 여건 및 전체 98%에 달하는 사유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1사1산 결연사업 등을 통해 편백이나 소나무등 침엽수 위주의 수종갱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지가 98%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얻는 어려움이 매우 크므로 의원님들과 뜻있는 황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방안등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열악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보강에 대하여는 앞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선정하여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40여년전의 솔잎혹파리 피해 후 현재까지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했고 과거 법적 대책 전개 경과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0여년전의 전주시대 부분의 산림 보존 실태는 원시림에 버금가는 울창한 숲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목수입의 급증으로 소나무좀 등 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팔복공단과 인접한 황방산과 덕진공원은 수입 원목의 해충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기록을 수집·조사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에 대한 조치의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피해보상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푸른전주 가꾸기 차원에서 1사 1산 결연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방산 정상 봉우리에 분묘와 바위가 있어 장기적인 공원 구실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전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2~3층의 팔각정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황방산 정상 봉우리는 전주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어 팔각정 등 전망대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현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을 살펴 볼 때 자연공원의 정상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자연의 훼손 문제, 사유지 매입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많은 쟁점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황방산 팔각정 건립문제는 시간을 두고 시민, 전문가, 시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민선 2기인 1999년부터 추진되었던 경전철 사업은 용역비로 3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민선 4기 들어와 지난 2007년 8월에 백지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6년 11월 제 239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인구 차량 및 도로중 가울의 세 부문에서 자료가 부풀려져 있어 수익성과 경제성 예측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막대한 예산부담이 예상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전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경전철 사업 백지화에 동의합니다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경전철 백지화의 대안으로 중기

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기적으로는 바이모달 트램(Bi Modal Tram)이나 초저상 굴절버스 등 새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중기 계획으로 합당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구조적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유효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법률적 근거를 대중교통육성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보니 대중교통육성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측면과 운수업체의 '영리목적'이 서로 상충하여 요금과 노선을 둘러싸고 버스 회사와 시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서 부산시는 조정 역할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시행 3년 만에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머리 없는 몸통과 같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파행이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복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문제와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외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방향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 BRT시스템 적용과 바이모달트램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다음으로 BRT시스템의 적용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 도입에 대하여 시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철 도입의 이유인 친환경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에코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의 도입 현황을 고양시, 서울시, 행정도시의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Bus Rapid Transit)을 도입하였는데 개통 이후 버스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고양 BRT 시스템은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 시스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선 보내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갖춘 지능형 교통 체계로 2006년 10월부터 고양시 대화역 중앙로와 서울 수색 사 이 15.6K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호역에서 경기도 하남시까지 10.5Km와 서울 화곡역에서 인천까지 18.2Km의 두 노선은 수도권 교통 본부에서 시범으로 BRT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역시 지난 6월 모든 지역이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BRT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스템(U-City)을 도입하여 BRT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 교통수단으로 반영해 그린 대중 교통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BRT 시행 후 전체의 16.5%가 버스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76.2%는 버스 운행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BRT 도입에 대해서는 59.3%가 잘한 일이라고 답변 반면 41.5%는 잘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나 버스 이용객의 74.6%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와 행정도시는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인 BRT로 재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전주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BRT시스템 도입과 바이모달트램(Bi Modal Tram)을 대안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도입된 굴절버스보다 향상된 최첨단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07년 5월 제1회 건설교통 R&D 성과포럼에서 본 모델을 신 개념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바닥고가 35cm로서 승차감이 우수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둘째, 무공해 CNG나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시설 제도 및 도상이 불필요 합니다.

셋째, 잔디식재 전용선로 포장이 가능하여 소음 흡수, 미관 증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열섬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철 대비 건설비가 60%로 저렴하여 사업비 대비 고효율의 신 교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바이모달트램이 올 해 안에 출시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형에 알맞은 대중교통 수단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전주시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육성법 제3조를 보면 1항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 지원의 강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 육성과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 9조에는 국가가 간선급행버스등 대중교통의 구축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최근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에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면 의미 없는 용역 발주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안)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전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내 교통체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예측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는 교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지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란, 공영제와 민영제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체제를 말하면서 서울시 등에서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 체제를 채택하고, 영국 런던에서는 노선 입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 관리제의 준 공영제도는 노선 운영권을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수입금 공동 관리기구로 귀속되고 이를 각 노선 별로 운행비용에 따라 운영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운전자의 적정수입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노선조정의 용이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미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재정 지원 등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마산시가 2007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송사업조합 내 위치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61개 업체 7,472대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3년에는 97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5년에는 1,249억원이 증가된 2,22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1.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의 경우에는 운영업체에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정산팀을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13개 업체 970대를 대상으로 2005년 7월 4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04년에는 4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시행 후인 2006년에는 217억원이 증가된 25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수송실적은 15.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비용 저효율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준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별 사례를 보면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대, 버스이용객수 증가여부와 버스 노선 개편의 효과 등 논란이 되고 있으며, 둘째 준공영제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제도의 효율성 확보 여부, 서비스 평가 제도 실효성 여부, 재정지원제도의 미흡, 노선의 인·허 면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들 사이에서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쟁점사항에 대한 제도적, 이론적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객관적인 버스운행 자료 확보와 가용재원의 확보는 물론 철저한 운영계획, 노선계획, 요금수입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평가 및 상벌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감차와 노선폐지, 그리고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쟁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2007년 우리시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64억원의 재정지원금이 3배이상으로 증가한 최소 2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성공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면허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와 운수업체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시공무원,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버스업계,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입금 공동관리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버스의 정시성, 경영합리화, 버스운 행정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넷째 원활한 경

영합리화 및 노사관계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한 경영의 개선,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 수입금 관리의 배분 기준과 요금제도를 위한 법적제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내버스 400여대는 현재 전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완주군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행적자분 부담비율의 확대와 운행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선 감축, 완주군 자체버스 운영 유도, 지선·간선체계 도입 등 완주군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시간을 제공하고 완주·김제 지역과 중장기적인 광역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금문제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요금 수납의 구조적 문제점 및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 예를 들어 교통카드 사용을 제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50%인 교통카드보급률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외지 적자노선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장하던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장묘시설 관리,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공원관리 운영사업 등을 대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으로는 이사장을 선임하고 본부장 및 직원을 특별 채용하였으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금년도 6월초 개청을 목표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공단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지노선과 적자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영제 도입문제는 먼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 연구와 면밀한 분석은 물론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BRT시스템 적용과 바이모달트램 도입 의향에 대하여

신개념 교통수단인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 적용과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RT(간선급행버스)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 환승정거장, 환승터미널, 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 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역의 도로와 교통시설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

통 서비스의 저하와 교통체증의 가중 등 이의 대안으로 필요해진 개념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등 선진국에서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BRT도입을 위해 검토를 한바 녹두길 등 총 연장 20.3km에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필요하며 공사비는 406억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으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버스 이용객이 시간당 3,000명 이상 되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시의 도로여건과 대중교통 여건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이모달 트램 도입의 경우에는 이는 도로와 레도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수조전지 또는 CNG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하고 의원님이 조사한 것과 같이 시간당 1만~1만5천명을 수송할 수 있고 건설비용은 km당 100억~300억원정도 소요되며 승차감이 우수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30일 바이모달 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저상버스의 표준모델인 아이랑의 시승회는 있었으나 검증되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RT 시스템과 바이모달 트램 도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으로 전액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재정부담으로 BRT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바이모달 트램의 개발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미래 지향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장단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에 시행한 전주시 장기 발전계획은 주로 공간구조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때문에 교통문제는 총괄적으로 되지만 교통 수단 문제까지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따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을 해주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면서 논의할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오송지구(송천동)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지난 제246회 시정질문에서 오송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대책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바 보완사항에 대해 여섯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진출입 도로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었는데 1-85에 송천대로와 접하는 부분, 약 150m의 구간이 개설되지 않고 나머지 잔여구간 1-85

에 동부우회도로가 뚫리지 않으면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행사인 진흥더블파크로부터 1,450m의 4차선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지만 전주시가 해야 할, 그리고 한술 파크가 공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종점부분에서 도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아서 교통 상습 정체구간이 되고 있는데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로의 기능은 소통과 회복입니다.

한술 솔 Park 공사 중단에 따른 오송지구 입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입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2007년 4월 13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8월 6일날 착공신고를 받았고, 11월 28일날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 요청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 해야 할 도로가 사업중단 되면서 오송지구 입주민, 인근주민, 전주시 예비군 훈련소, 전주요양원, 삼화택시 회사들의 진·출입은 비포장도로의 좁은 노면을 곡예운전 하듯 겨우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어 동부우회도로 진출입이 불편합니다.

한 사업자가 오송지구 (주)유노레스, 한술 솔 Park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송지구 아파트 단지에 주거의 질과 교통의 질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로 3-36, 중로 2-28등등 도로연계, 주변 교통순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번째는 오송지구내의 소로개설 문제입니다.

중로 1-85의 기본 메인도로에 시점과 종점이 막히다 보니 소로의 기능이 중요해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122에 미 개설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해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넷번째는, 오송지구의 오송초등학교는 3월 2일날 개학했는데 2010년도에 개교할 오송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용지를 다시 사야하고 학교용지갯길이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로 부터 전주시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교육청으로 사용승인을 해줘야만 학교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는 송천동 2가 산36-4로 오송중학교는 2010년 3월 30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토지계획의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현재 오송지구 내의 진흥 더블파크는 완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20일까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오송중학교라든지 학교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아직 미확보했고 또 4차선을 확보하면서 국방부 땅들의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이 미 이행되어서 완전 승인이 되지않다보니 등기권리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민들로서는 소유권의 제한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향후 재산상의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도로의 디자인이 반영된 산책로 조성 및 건지산 등산로 진입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자락 중로 1-12우회도로는 도로 구조 기능에 대해 노폭 20m 도로, 인도 3m×2개해서 6m가 빠지면 14m 도로인데 이게 4차선입니다. 3m 정도의 작은 노폭에서 14m로 넓혀지다보니 어린이, 노약자,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은 통과시간이 길다보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비대칭도로로 보행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노폭을 감소시키면서 교차로 부분에 각을 주어가지고 보행자가 빠른 시간내에 다닐 수 있고 횡단보도 전으로써 스쿨존같이 장치를 해서 교차로의 안전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송천동 주민들이 어린이부터 교통장애자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논리를 말하냐면, 1-12도로는 차량등록소까지 뚫어지는 4차선 우회도로인데 예비군 훈련소가 그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예비군 훈련소는 35사단 이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중로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비대칭 도로로써 산책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문화시설 공간으로 이용했다가 예비군 훈련소가 이전을 하고 차량등록소까지 중로기능을 회복할 때는 다 철거를 하고 4차선 도로로 하면 된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개설중인 가련산길의 절개지 법면 처리에 대하여

생태환경디자인을 이용한 법면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련산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머리에 기계톱을 댄 것 같이 벗겨져서 소나무는 흉칙하게 있고, 이런 면에 어떻게 하면 생태디자인을 잘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는 6차선에 폭 35m의 광폭의 도로입니다. 연장 1,400m가 공사중인데 지금 가련산은 굴착하지 못하고 -연약지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래서 가련산 허리가 대절토부로 절개되고 있습니다.

전주 진입로로써 송천로와 만나는 지점으로 교차로가 형성될 예정인데 그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시미관, 디자인, 경관조성, 색채검토, 우수대책 등 심도 있는 검토회의와 보완, 모형과 스케치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지고 21m의 절개지 처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모형과 스케치의 시물레이션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보다보니까 설계업자, 디자인 업자가 갖고 오며는 종이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색이 그대로 맞아들어가고 디자인이 맞는데 시물레이션으로 해야만이 근사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디자인 설계는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설계용역중인 송천동-팔복동 간 도로의 다리에 대하여

송천동과 팔복동에 다리가 14m, 200m의 200억 공사비가 들어가서 서곡광장까지 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다리에 대해서 주제가 있는 다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문화공간이 있는 명품다리, 디자인, 경관설계를 추구합니다. 최근, 서곡과 서부신시가지에는 2개의 명품 다리가 생겼습니다.

난간의 조형물, 디자인, 야간조경까지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더욱 기대가 촉망되는 명품다리가 또 세번째 탄생합니다. 서학동과 풍남동, 교통을 가르는 남천교입니다. 폭 16m에 82.5m로 공사비만 120억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지도에도 나오는 아주 명물의 도로입니다. 이 다리의 특징은 기존다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옥형 누각이 다리의 보행구간에 있으며, 아치형 교각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명품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리는 차량이 통행하는 기능에서 테마가 있는 문화적 성격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의 하버브리지, 캘리포니아 금문교, 세느강 다리, 일본의 간사이 공항의 바다를 뛰어넘은 간사이다리, 한국의 서해대교, 삼천포의 연륙대교, 다도해 다리 등은 다리의 미래적 기능과 리브 디자인의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서곡과 송천동에 있는 팔복동 다리가 전주천 하류 만경강이 시작되는 송천동과 팔복동 장기민원인 다리 개설은 송하진 시장의 공약인 다리사업입니다.

만경강을 동서로 나누는 팔복동과 송천동 주민들이 사는 전주천 하류는 여름이면 악취 민원과 썩은물이 진동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강변문화가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전주천 상류인 삼천 둔치는 영화, 음악, 레저, 기점놀이 등이 삼천둔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강변문화가 부러운 지역입니다.

추천대교 아래 만경강이 시작되는 송천, 팔복 천변지역은 익산국토관리청의 국가하천 관리 지역으로 산책코스, 운동기구 설치 등이 하천 보호법으로 제약을 받아 제대로 된 체육,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송천동과 팔복동을 잇는 다리가 명품 다리로 설계되어 명물이 되었으면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과 팔복동 다리에 있는 토목설계의 과업지시서를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목설계만 있지 디자인 설계가 빠져있습니다. 그냥 토목설계에 나와있는 과업지침서였지, 시방서의 내용이었지 아트리폴리스를 하고 있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이 과업지시서에는 녹아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사도시 그라츠는 남북을 가르는 무어강(강폭 40m)이 흐르고 있는데 그 40m의 강폭을 이용해서 중간지점에 카페를 만들고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강변문화를 만들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소통로

와 보행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는 바이패스 통과기능이 아니라 시각적 문화의 커뮤니티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명품의 다리가 되어서 팔복동과 송천동 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공 공간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난간 디자인 조형물 및 야간조명 설계, 다리하상의 수변설계등등입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총 107개 인데 하류지역에 물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지역은 동부우회도로 발호와 삼례교다리, 그리고 추천대교, 송천동과 팔복동에 새로 놓을 다리, 4개정도 되는데 흙탕물들의 수변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계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물다리는 때로는 통과도로의 다리가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면 거기에서 음악회도 열수있고 영화도 볼수있고, 그래서 이벤트 공간으로써 팔복동 주민들과 송천동 주민들 이 다리안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부족한 생태 문화공간으로써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설계가 이런 과업지시서 내에 있어 야만이 드로인을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A 송하진 시장

▶ 오송지구(송천동)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먼저 오송지구 도로개설 및 미 개설 구간 소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송지구 진흥W-Park 입주 후 송천대로와 연결되는 진출·입 연계도로 미개설로 교통정체가 상습화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송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송지구와 주변지역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계속된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일부 구간선도로와의 연결도로들이 개설된다면 우리시민들의 통행여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오송지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여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향(도표활용 설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85호 중로입니다.

여기 길이는 연장이 1,355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늘색 부분 1,055m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고 이쪽에 180m는 한솔파크가 준공시까지 개선의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120m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 도로 체증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을 가는 구질이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구질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완공시에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원님이 짓거한대로 통행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아파트 한솔파크가 미분양이 심화되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평형등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이 조율한 결과 하반기 9월 경에 재 착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경에 재 착수를 하게 될때 이때 우선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이쪽부분에 중로 1-22 도로의 계획입니다. 현대 3차 아사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150m, 회색부분은 개일이 되어있는데 호성로와 연결된 120m와 뒷 부분 160m 아직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120m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저희가 설계라든가 토지매입등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뒷 부분은 저희들이 한솔아파트 입주라든가, 입주 후에는 여러가지 교통의 영향이 미칠것 같으니까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만 개설된다면 기존에 이 도로가 있기때문에 약간 선형은 돌아가지만 통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지적해 주신 오송중학교 부지문제입니다. 35사단 부지가 이 도식에서 보면 540m가 됩니다. 이 필지가, 저희가 아직은 35사단의 관계에서 절차를 이행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관계 때문에 2011년 정도해서 저희들이 35사단과 저희의 땅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중학교는 개교년도가 2011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35사단, 저희가 중재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건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무상양여의 관계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는 해주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땅에 매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지적하신 항목중에서 저희가, 이 도로 기부채납, 진흥 더블파크가 7월 20일까지 임시사용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과정에서 두필지 18m가 지금 미 매입되어서 있는데 도로 공사는 끝나있고 미 매입된 18 m, 6평이 약간 못되는 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사용 기간 이내에 기부채 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송중학교 부지에서, 3개 아파트 업체에서 이 부지를 사서 교육청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3필지가 미 매입되어 있습니다. 앞에 진입로 부분과 사유지, 그 다음에 35사단 토지인데, 개인 사유지는 무리가 없이 추진이 될 것 같고, 종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35사단 부지는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주황색부분인데, 이 도로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개설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김남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소로에서 장덕사로 올라가는, 노인들이 산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에 선형폭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다는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차량방지턱 보다는 조금 차량통행에 원활을 주면서도 통행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20cm정도 되고 폭은 3~4m의 경사를 잡아서 10m에서 15m까지 넓이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좋게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저희가 설치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개설중인 가련산길의 절개지 법면 처리에 대하여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까지 개설중인 가련산길의 원대한방병원 부근의 절개지에 대해서 도시미관 경관조성 등 보완과 절개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대한방병원 입구에서 가련교에 이르는 가련산길 개설사업은 270억원을 들여서 총 연장 1,40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약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대한방병원 옆 대형 절개지가 발생한 것은 본 도로가 가련산 자락의 일부를 통과하도록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구간이고,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다보니 부득이 약 21m 정도의 경사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사면의 토질은 대부분 강도가 매우 강한 경암이며 경사는 1:0.5의 급경사로 계획되어 있어 이러한 경사면은 자연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본 지역이 시가지 구간으로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예상되므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벽면 녹화 공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점토를 부착하여 풀씨를 파종할 수 있는 파드라 공법, 나뭇잎을 식재할 수 있는 나뭇잎 설치 공법, 잔디를 심을 수 있는 녹생토 공법등 할 수 있는 모든 공법을 최대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변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방법들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특히 전주 진입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설계용역중인 송천동-팔복동 간 도로의 다리에 대하여

송천동과 팔복동 간 다리개설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토목, 다리설계에 치중하여 디자인 설계가 미흡하므로 명품다리로서 경관과 디자인 설계를 보충하도록 촉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평리 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로 1-10호선으로서 폭 20m 연장 2,600m로 한국재 생공사에서 송천동 신평리를 연결하는 교량 200m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과거와 달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은행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 대하여 단순한 교통기능만 갖는 도로가 아니라 주변경관과 지역의 특성 도로가 갖는 성격과 기능에 맞는 도로 경관개념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예술도시에 맞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 또한 전주천, 건지산, 황방산, 전주공단 등의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계하도록 지침을 용역기관에 부여하였으며 교량은 조형물과 야간 경관 조명을 반영토록 하고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교량 디자인에도 전국 최고의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후부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박혜숙의원 (비례대표)

▶ 덕진예술회관 운영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운영과 덕진예술회관 및 도립국악원 주변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멋진 문화를 시정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핵심프로젝트로 아트폴리스 예술적 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를 지향한다는 전주시의 비전에 대해 본 의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잘 추진되어 전주가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도시, 아시아 최고의 전통문화 예술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덕진예술회관 운영과 국악원 주변 환경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진예술회관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 문화활동 참여확대를 통한 문화체육지수 일등도시 실현을 위해 소규모 문화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년 전에 반공강연장으로 건립된 덕진예술회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예술공연을 치르

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연 장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진예술회관은 1980년 설립되어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회 및 전시물 설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 시설확충 및 개보수공사를 거쳐 덕진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종합예술공연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무대 및 공연준비 공간이 협소해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전문예술공연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374회(166일) 사용되었으며 그 중 유료대관은 169회(83일)로 40,733천원의 대관료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관일수보다 대관용도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대관용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 행사가 37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호인 등의 발표회가 20회, 교육(민방위 등)이 18회, 전주시 예술단원의 공연이 12회의 순이었으며, 그밖에 정연대회 7회, 일반행사 6회, 어린이 뮤지컬 6회 등의 용도로 대관되었습니다.

이는 덕진예술회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문 예술 공연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 예술회관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 예술단이 덕진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예술단의 공연도 합창단 7회, 국악단 4회, 극단 1회로 교향악단의 경우 단 한 번도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2007년 정기연주회는 소리문화전당에서 5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3회 거행되었으며 그 외 규모가 큰 4회의 공연도 예외 없이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시립국악단은 5회의 정기연주회 중 4회를 소리문화전당에서 치르고 1회는 덕진예술회관에서 치렀습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6회의 정기연주회를 소리문화전당 3회, 덕진예술회관 2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1회 각각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극단은 6회의 정기공연 중 2회는 소리문화전당에서, 1회는 덕진예술회관에서 열었으며 3회는 여러 민간소극장에서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4개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장소는 소리문화전당이 14회(5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덕진예술회관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4회(16.0%) 그리고 기타 3회(12%)로 덕진예술회관에서의 공연이 4회에 그치며 교향악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덕진예술회관이 전주시의 예술단들조차 공연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덕진예술회관이 어린이집 학예발표회나 민방위 교육장이기보다는 전주시의 4개 예술단의 정기 또는 특별공연 등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품격 높은 전주 문화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매도시 및 단체들과

의 교류공연 또는 유명 공연을 유치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자 본거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덕진예술회관이 갖는 커다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지원액은 인건비가 322,624천원(66.6%), 공공요금은 83,100천원(17.2%) 그리고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78,336천원(16.2%)으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그 비중이 6.1%에서 16.8%, 또 23.3%로 매년 크게 높아졌으나 낙후된 시설을 유지하는데 크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보수공사내역을 보면 2005년에는 무용단 연습실, 극단 탈의실 시설을 2006년에는 합창단 바닥재와 연주대 시설, 교향악단 연습실 조성 그리고 2007년에는 모형땅굴 철거, 공연장 난방 보일러 구입, 도장공사 및 환경정비 등이었습니다. 실제 공연과 관련되는 무대 및 공연시설에 관련된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결국 덕진예술회관은 명칭만 예술회관이지 문화예술공연을 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주시의 4개 시립예술단이 변변한 연습실을 갖추지 못하고 덕진예술회관 내 부속건물이나 가건물에 머무르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연습실에서 기량을 연마해 예술성을 높여야 할 단원들이 상가건물과 조립식 판별, 가건물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덕진예술회관을 철거하여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회관을 신축하여 시립예술단들의 연습과 상설공연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덕진공원, 경기전,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자고 가는 문화예술관광 상품에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덕진예술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예술회관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 예술단의 연습실 공간확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덕진예술회관 주변의 낙후된 환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덕진예술회관 주변은 덕진공원과 함께 유명 전주비빔밥 식당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내외국인이 찾고 있는 전주 관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2008년 아트폴리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덕진예술회관과 덕진공원 주변 환경에 관련된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시장님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덕진예술회관 바로 앞 도립국악원과 덕진노인복지관 송천동 진입도로와 덕진공원 옆길 사이로 고물상, 빈집, 다가구 거주주택, 고정 포장마차 등이 무질서하게 자리하고 있어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덕진 공원 아니 고품격 예술적 도



시 아트폴리스 전주의 관문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곳이 전주관광의 관문으로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의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커녕 퇴락한 도시 주변부의 황량한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총 35,164㎡로 그 중 개인소유는 15건에 10,381㎡이고 국·공유지는 16건에 14,402㎡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이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덕진공원과 연계하여 전주의 상징성을 담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과 출향인에게는 애乡심을 심어주고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는 전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추억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의 기대효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아트폴리스사업에 덕진예술회관 주변 환경정비를 포함시켜서 덕진예술회관의 신축과 함께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랜드마크로서 전주의 새얼굴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덕진예술회관 운영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박해숙 의원님께서서는 덕진예술회관 및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사랑과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덕진 예술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예술회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덕진예술회관은 1980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반공 교육장으로 설계되어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시설 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덕진예술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문공연장을 3층 규모로 신축할 경우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비지원 가능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본 바 있습니다.

예산은 1회에 한하여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80억원 정도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므로 시로써는 일단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처럼 예술회관 신축은 전주시, 특히 덕진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물원,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공원과 연계하는 가칭 새로운 전주 Art Hall로 신축하여 덕진 일대를 공연예술의 산실이 되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

통문화 축과 함께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또 하나 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시립예술단의 연습실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열악한 조립식 건물의 작은 공간을 예술단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연습장 문제는 예술회관 신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우선은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등 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폴리스 사업에 덕진공원 주변을 포함시켜 덕진예술회관의 신축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덕진공원 주변은 덕진예술회관, 도립국악원, 덕진노인복지회관, 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회관등 문화시설과 동물원, 체련공원 등을 가기 위한 주요한 입구인데 반해서 그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은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평소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온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덕진공원 주변은 현재 도시계획상 덕진공원 조성계획에 주차 장 및 녹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유재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트폴리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 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차근간이 될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전주시 경관계획의 실천계획에 덕진공원 일대를 아트폴리스 조성차원에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시설배치 등 도시경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청취 그리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덕진공원 주변이 시민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Q 백현규의원 (완산·중화산1·2동)

▶ 전주시 산업의 균형발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현 전주시 통계자료에 현황을 보면, 인구 증가는 2000년부터 정체 상태며 경제적 자립도는 34.6%로 머물러 있습니다.

전주시 사업체는 2006년 말 현재 39,396개로 종사자 수는 16만6천716명이며, 2003년에 기업유치 45개업

체, 2004년 에 49개업체, 2005년에 103개 사업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5천백49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습니다.

산업활동의 현황을 보면 1, 2차 산업의 종사자는 2005년 27.97%에서 2006년 7.34%로 감소 추세인 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는 2005년 72.03%에서 2006년 92.6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산업인 제조업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사업체수가 443개이고 종사자는 9,578명으로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주 전체 사업체대비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여 산업구조가 생산직과 3차 산업이 잘 어우러진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에 집중이 됨으로써 생산직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 전주의 실정입니다.

특히 3차 산업의 서비스업 중 이러한 산업들이 너무나 크게 발전하다보면 여성으로써 기피할 수 있는 음식점, 숙박업 등에 비중이 많이 됨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이 좋은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어려운 직업으로 인해서 여성 일자리 부족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협의회 설립운영, 선진문화 산업시찰, 투자유치 공동 노력, 노사관계 모범 사업장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주시는 주위에서 말을 들어보면 기업하기 어렵다,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이 기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 하고 있는 기업주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의 윈스톱 서비스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추진을 할려면 현재도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오고자하는 사람들, 기업주들의 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현 실정을 탈피하고 생산성 있고 경제적인 균형이 잘 어울려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또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행부의 계획 및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전주에 유치한 기업의 토착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우리 전주는 경제 살리기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키우기와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2005년도에 (주)티앤시를 비롯 103개업체 종업원 2,132명, 2006년도 에 (유)도경을 비롯하여 80개

업체, 종업원수 2,500명, 2007년도에 (주)프리엠스를 비롯 72개업체, 종업원수 1,277명의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설명회 및 방문상담으로 투자유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과 특히 부시장님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어렵게 유치된 기업을 향토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육성 발전 시키고 토착화 하여야 하는데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즉,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동향(同鄕)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고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보니 생산성 저하되고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기업의 유지 및 확장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 기업 종사자가 현주소를 전주로 두지 않고 있으며 전주 시민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 기업유치 투자금액을 보면, 2006년 2007년에 171억4천만원, 즉 시비 112억8천2백만원, 국비 58억5천8백만원을 기업 이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행정적인 사후 관리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후 기업들의 형편 및 애로 등에 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을 토착화 시키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공단내 녹지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지금 전주시의 시책 중 5대 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추진을 위하여, 즉 예술도시를 만들기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 공해가 없고 살기좋은 전주,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거듭나며 열섬현상의 방지를 위해 푸른 숲가꾸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전주 산업단지를 보면 도로 주변에는 숲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면 숲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 팔복동 공단 주변을 보면 거의 숲과 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녹지 조성이 겨우 되어 있고 협동화 단지를 주변을 보면 녹지 공간의 공원이나 숲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3단지, 4단지에 가서 보면 안에도 포장으로 전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안에도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공단 자체안에 도시계획 설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내 중심권만 할 것이 아니고 팔복동 공단에도 그러한 숲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는 분들이 쉴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단에 푸른 숲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R&D단지 구축을 5대역동 산업의 생물생명산업에 포함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천년 전주건설과 5대 역동산업을 계획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한스타일산업, 21세기 신산업화 생태관광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 영상산업,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할 생물생명산업, 차세대 기술집약형 부품소재산업을 추진하여 시민생활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서해안시대의 배후 중심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고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역동산업 중 생물산업 분야에 기능성 식품, 발효 식품 중심의 특화산업 육성으로 기능성 식품 임상 시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방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전주 음식의 산업화 구축과 발효식품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며 전주 천년의 맛잔치를 전국 최고의 음식 산업 축제로 만들고 전주 한방 산업으로 한약재 품질 인정기관 육성과 약령시로서 약전거리를 조성하고 한방 산업화를 위한 한방 엑스포 축제를 개최하여 전주 한약재의 세계화 추진등 이러한 것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청정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여 생물생명산업의 육성발전 전략 계획을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의 발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산업식품 산업 크리스트 전초기지를 우리 전주에 두어야 된다고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주는 농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전주의 전통적인 맛 공장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기초 및 원천기술과 연계가 용이하며 발효식품연구기관 및 식품교육여건이 다수 형성되어 있고 교통망도 전라북도에서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국가식품 산업 크리스트 전초기지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5대 역동산업에 같이 부합해서 개발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R&D 단지 구축을 전주시의 5대 역동산업과 같이 병행해서 5대 역동산업의 생물생명 산업에 포함하여 역동산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산업의 균형발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백현규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후 토착화 및 사후관리, 공단의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중화산2동 화산체육관 건너 일부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일자리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는 크게 여성, 노인, 청장년층 등으로 34개 사업 103억 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은 크게 사회적 일자리, 직업교육, 취업 알선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사회적 일자리 알선을 위하여 지난해는 동부화재 콜센터 등 3개소 520명 등 총 1,1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금년에는 콜센터 300명, 보육교사 100명, 가사간병도우미 86명, 복지도우미 60명, 기타 254명 등 총 800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주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지난해 전통공예 75명 등 총 465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 일자리와 연계시켰으며 금년에는 도배전문과정 25명, 웹 콜 마케팅 과정 25명, 방과 후 지도사 과정 25명, 피부 관리사 과정 25명, 포장 디자인과정 20명, 기타 330명 등 총 450명 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지난해 7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3배가 넘는 250명의 취업을 알선할 목표로 현장을 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창구 운영에 12백만원 증액된 82백만원을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지도사 양성 등 324백 만원의 예산을 신규 확보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업에는 양질의 인력을,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에 유치한 기업의 토착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업유치 후 기업들의 형편 및 애로에 대한 관심, 전문인력 보급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유치한 기업을 토착화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렵게 이전한 기업들이 향토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 리시가 이전기업의 애로 해소와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

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번째로 이전기업 애로해소와 관련한 시책으로 이전기업의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관내 모든 기업들에 대한 전담 공무원팀을 구성·운영 기업으로 솔루션 500활동을 추진한 결과 작년의 경우 한전주 이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도로포장 등 기업으로 136건을 신속하게 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전주경제 키우기 시민운동본부 산하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파이낸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3개 지원사업 부를 조직해서 기업이전 구상단계부터 정착시까지 애로부분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전기업 전문인력 지원시책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사업, 취업박람회, 고용촉진훈련, 인턴사원제, 취업알선센터 등을 운영하여 업체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력한 신기술 연수센터를 201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팔복동 친환경 복합단지 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는 자동차 기계부품 관련 등의 첨단 및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 전북도내의 미취업 대졸자 및 고학력자의 청년실업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실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 및 준 고령자 이주노동자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및 평생 교육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1만여명씩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이전기업 토착화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어려워진 기업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조만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비용을 현재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입지보조금과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방안,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한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팔복동 협동화단지의 사례처럼 산·학·연·관의 협력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각종 기술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이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전기업의 신속한 애로 해결과 섬세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현장을 찾아가 애로와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공단내 녹지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공단지역 녹지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지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업단지로 거듭나야하는 바,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주변의 나무심기와 소규모 공원조성 등의 녹지공간 확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동화 4단지 앞은 인도가 새롭게 개설된 구간으로 가로수와 화단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가로수는 5월에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는 이팝나무 37주를 이어 인도 화단에는 조팝나무 3,000주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팔복동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푸르고 즐거운 삶의 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정시설등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R&D단지 구축을 5대역동산업의 생물생명산업에 포함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R&D단지 구축을 전주시의 5대 역동산업 중 생물생명산업에 병행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5대 역동산업 중 하나인 생물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건강산업인 기능성식품과 발효식품을 특화하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유치는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전북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최고의 선물이자 전주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에 생물생명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장비들이 있는 바이오 단지와 연계하여 국가식품산업 R&D단지로 확장 개발한다면 별도의 R&D단지를 개발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지역을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우리가 추진 중인 생물생명산업 육성과 맥을 같이하면서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생물생명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동의 바이오단지를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R&D 전초기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8년 1월 도지사 초도방문시 적극 건의하였고 1월 30일 시의회도 전주유치 결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에 접촉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Q 유재권의원(삼천1·효자1·2동)

▶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일선행정에서 전주시 교통의 원활하고 쾌



적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하면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청관과 함께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내 혼잡한 지역의 교통신호 체계 시스템과 함께 이와 연관된 횡단보도 개선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더욱 경제적인 시간 단축과 교통소통 원활화로 명량하고 쾌적한 교통행정을 이룩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혼잡한 차량정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절별 시간대별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그리고 방학 등을 고려하여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중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 하고서도 미처 조치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한 답습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10M 이내에 있는 신호체계는 대도로에 있는 신호체계와 교통신호시스템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천1동 세창아파트 인근으로 이곳 교통신호 체계와 백제로에 자리잡고 있는 교통신호체계가 일정치 않아 교통사고등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있음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로와 바로 인접한 신호시스템이 일치하기도 하고 반대로 30분도 안돼 대도로와 바로 인접한 신호시스템이 불일치 하고 있는 등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물론 유사한 지역의 대도로와 바로 인접한 교통신호시스템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시스템의 정연화로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는 등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행자를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시스템 제안입니다. 병목지역 사거리 등 교통신호등에 있어 보행자는 대각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교통신호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부구간은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의 불일치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민들은 시간에 쫓겨 불안 초조해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대도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커질 경우 직진 대각선으로 동시에 보행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좌회전 신호와 직진신호 시간을 일치시키는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차량의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보행시간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술도시국의 역할에 대하여

신설된 예술도시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

니다. 앞서도 전통의 멋스러운 속에 새로움을 창조해 나갈려는 시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전주시민들은 자부심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도시경관, 건물, 교량, 녹지 등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어 착오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만 도로경관에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도 중요하지만 지방도는 물론 주요도로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위한 도시 전체가 종합적이고 획일적으로 구성이 될 때 전주만이 갖는 도시,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와 조화롭게 꾸며져 한껏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디자인 도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도로 디자인에 대한 기획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국도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최고의 공공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년전주 예술도시, 전주시민의 무한한 자부심을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대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10m 이내에 있는 신호체계의 불일치 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에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의 첨단교통모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1년 11월에서 2002년 11월까지 115억을 투입하여 첨단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많은 보완 작업을 통해 지금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은 교통량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낮시간과 밤시간 그리고 심야시간 등 각 시간대에 적합한 5가지 형태의 신호 연동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운영형태가 바뀌는 시간대에서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등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 삼천1동 세창아파트 인근 사거리는 교통량이 많은 곰솔나무길과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삼천도서관 길이 만나는 곳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근 신호를 연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근시간대에는 삼천도서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호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

습니다.

조속히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신호 불일치 원인을 찾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행자를 편안하고 빠르게 하는 교통시스템 개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는 290 개소로 신호 체계의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등은 도로 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 조사한 교통량, 주변 신호의 연동등을 고려하여 변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향의 차량흐름이 정지되기 때문에 신호 연동시스템의 운영에 제한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방식은 팔달로의 대륙빌딩 앞 교차로 등 3개소로서 앞으로 이와 같이 교통량이 적고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여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회전과 직진 동시신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좌회전과 직진신호를 일치시켜 운영하는 경우는 교통량 조사를 통해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의 교통량이 비슷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명주골사거리와 평화동사거리 등 56개 교차로에서 동시신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전문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호체계 및 신호 시간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예술도시국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은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 정책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경관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주요도로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디자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로경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요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과 같이 수백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국의 브리스톨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단기간에 공공디자인에 주력을 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습니다.

브리스톨의 경우 불필요한 도시의 정보와 가로시설물을 제거하여 시티맵 한 장만 있으면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노버의 경우는 특색 있는 전차 정류장을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금번 조직개편에서 기초자치단 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도시국내에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예술도시국은 앞으로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념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거시적인 경관관리에서부터 작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트폴리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근간이 될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은 전주시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경관과 도로 건물 등 도시 구조물들이 이루는 인공적인 경관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으로 하천, 가로, 도로, 녹지 등에 대한 유형별 경관 계획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도, 주요도로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디자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시 도로경관분야에 있어서는 도시 정체성의 부각을 위해 상징가로 조성과 보행자 위주의 가로정비사업 등 도로경관 형성사업에 예술도시 품격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등과 같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은행로 일방통행과 실개천 및 찻자공원 조성, 가로별 가로수 수종을 달리한 아름다운 도심 가로망 녹색공간 조성 및 그린터널 조성사업, 화산체육관 벽천 및 도심 교통섬 친수 공간조성사업, 백제교 야간경관 조성 및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조성 사업,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디자인의 개선, 팔달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가로경관은 형태와 색상 및 규격, 시민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분야별 기준을 만들어 노선별, 구간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오는 4월에는 벤치, 볼라드, 보도블럭, 가로등, 맨홀뚜껑 등 공공시설물의 표준안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아주 작은 공공시설물 설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4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격도시 아트폴리스 전주 만들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08. 9. 9 ~ 9. 10)

Q 구성은의원(서신동)

▶ 전주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전주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자료 없는 행정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7년 제정되고 1998년 개정된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행정자료 및 도서관의 수집〉에 의하면 각 기관의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책자 또는 유인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1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되, 시와 구의 경우에는 각 과장 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각 서무담당 이, 동의 경우에는 각 동장이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들어서 단 1권의 책자도 현재 행정자료실로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완산도서관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주시 행정자료실내 전주시와 관련된 책자는 171권에 불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족하네 누가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보기위해 오겠습니까? 물론 전주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현재 시청 2층과 지하에 전주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2조에 기록물 의 정의를 전주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전주시 자료관 98% 이상이 문서로만 이루어져 있어, 책자나 타 자료를 손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서고의 유수량이 13%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발생 기록물은 관리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서고가 아니라 문서창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료를 열람,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북대박물관에서는 한옥마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된 자료 중 1976년 전주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이조문화권 개발계획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을 바꾸면 한옥마을에 대한 용역보 고서인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전주시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 있어야 할 자료가 아닙니까? 물론 전주시 행정자료실과 시 의회 도서관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7년 2월에 발행한 "삼천문화자원조사 보고서" 입니다. 2년의 문화자원조사를 걸쳐 500부 발행한 이 책은 삼천동의 마을, 마을의 유래와 주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책 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6년 12월에 지역신

문 기자가 쓴 "전주전에 미라보 다리를 놓자"는 책입니다. 다리, 축제, 전 통문화, 새만금, 구도심, 도시정책에 대해 전세계의 관광지와 비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도 2005년 12월 지역신문 기자가 쓴 "한옥마을을 거닐다" 는 책으로 한옥마을 안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알기쉽게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2008년 5월에 발행한 책으로 전주시 퇴직 공무원이 쓴 "지역관광의 경쟁력, 이제 공무원이다" 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할 책입니다.

(책 을 들어보이면서) 이 책은 올 해 6월에 발행한 책으로 전주시와 전북대 BK2사업단에서 전주시 한옥마을스토리개발사업 결과보고서 로 작성한 "전주한옥마을을 구술열전"으로 한옥마을의 고택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역사를 구술한 책입니다.

이상 몇가지 예로는 책들은 모두 발행된지 2년도 채 안되었고, 전주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우수한 책 임에도 불구하고, 완산도서관을 비롯한 시립도서관은 물론이고, 전주시 자료실, 각 구청 민원실(책이 비치되어 있음), 시의회 도서관에서 단 1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3개월도 안된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의 경우 해당 과에 1권만 보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든 책을 제외하 고도 전주문화재단에서 전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책들이,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전주학에 관련된 책들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으나 관련 과에만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도서관 뿐 아니라 각 구청 민원대기실,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동네의 작은 도서관, 지역아 동센터, 복지관까지 보내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야할 책들이 담당 직원들조차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다고 다 전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책 들은 널리 고무 보내야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에 잘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한옥마을이나 동네에 대 한, 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연극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시청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행정자료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자료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은 그저 문서의 글씨일뿐 지난 2년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도, 자료를 수거하는

책임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발행되는 전주시의 각종 용역보고서와 책자가 나오면서 사라진다면 기록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현재의 모습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 과별로 용역보고서나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역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수시로 직원이 바뀌고, 부서도 바뀌는 상황에서 자료가 오래 보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자료가 보관된다면, 훗 날 세계적인 학자가 전주의 한스타일사업에 대해서나 축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해도, 아니 전주의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려고 해도 자료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무분별하게 보관되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 째, 전라북도내에서 행정자료실이 청사 밖에 있는 곳은 전주시 뿐입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면 전주시행정자료실을 기획예산과에 10평 정도 규모로 별실과 서가, 독서대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행정자료실은 완산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 내 행정자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비좁은 문제가 있지만 행정자료실이 청내에 있지 않음으로 대출도 안되는 자료를 근무시간내에 찾아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자료실의 현황을 보더라도 자료실이 청사 밖에 있는 곳은 전주시 뿐이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장수군이 일반도서를 함께 열람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과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이 실과의 발간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료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행정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 도서관 기능을 하면서 1일평 균 180~2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 자리잡힐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의 행정자료실 일과후 열람편의를 위해 개방시간을 2시간 연장,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독서경영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행정자료실에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해 매달 15권씩 추천도서를 정하고, 500여 권의 책을 구입해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빌려가도록 했습니다. 매달 초 전 직원에게 “새벽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올 3월부터는 시청 홈페이지에 “독서경영”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독후감이나 행정이디어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재정규모가 전주시와 비슷한 타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시가 행정자료실 운영과 활용도가 가장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국회도서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청주시

의 정보격차 해소 및 행정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시청 1층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근 인력을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시청관련 자료와 각 부서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책자는 물론이고 일반도서까지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일반도서 구입비로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시청 지하 1층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상근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도서 구입비는 3백만원 정도이고 공무원은 물론 안양시민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항을 소개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전주시에서는 공간이 부족 하여 행정자료실은 완산도서관 종합자료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전주시 자료관은 시청 2층과 지하로 나누어 문서를 쌓아놓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기록관장은 행정자료실, 간행물관리업무등 기록관의 유사한 기능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에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보다 앞서 나가야 할 행정에서 오히려 민간보다 더 도서관과 행정자료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행정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자료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첫번째, 청사 안 행정자료실 설치와 행정자료실과 전주시 자료관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자료실의 설치를 시청내에 하여 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사내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그에 대한 단계적 실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 자료관과 행정자료실의 통합에 대한 단계적 계획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료관은 기록관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서고와 열람 및 정보공개 행정자료실, 사무공간, 전산실, 업무공간이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행정자료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장소가 부족하여 청사내 부서가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자료실은 청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도대체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과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칙”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사내 행정자료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자료실의 조건과 전주시 자료관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수거, 관리의 책임부서나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행정자료실을 기획예산과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록물 관리를 행 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계에서 주 1



회, 또는 월 1회 수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 한 타 지역에서 오는 책과 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운영요령)〈행정자료 및 문서의 수집〉제5항에 의하면 “문서접수책임자는 간행물 또는 도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1부를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기록관 운영규정에서도 제2조 기록물의 정의 중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각 과와 부서에서 오는 수많은 자료들이 걸봉투도 뜯지 않은 채 담당직원에게 의해 쓰레기통으로 직행해, 버린 자료를 주워서 모은 것만 20박스 정도를 모았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의 소중한 자료와 책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1차적인 검토를 거쳐 수거, 관리가 된다면 유용한 자료들이 사장되는 손실을 막고, 굳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러 가지 않아도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이에 대한 대책, 현재 타 지역에서 발송되어 오는 자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자료실은 공개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도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는 물론이고 일반도서를 포함시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에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소양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네번째, 블로그를 이용한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행정자료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행정자료실 운영도 중요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은 필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료관 문서전산실에서 전주시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은 정부의 정보공개 방침에 맞춰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행정자료실을 통해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공간과 정보교류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면 전주시의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용역 자료 관리에 대하여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는 예산서에 용역비로 계상된 용역만 2006년은 25건에 10억 8723만원, 2007년은 25건에 18억 3582만원, 2008년 현재 13건에 4억 8671만원을 진행했습니다. 2년반동안 용역비로만 63건에 34억 97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내용상 문제는 없는지

는 차치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2년반동안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결과 33건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용역보고서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보관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전에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2003년 이후의 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반의 용역보고서가 30건만 남아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 형식만 남은 다당성 용역, 폐끼고 또 폐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용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용역보고서의 관리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의회에는 도서관이 있고, 3618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용역보고서는 단 한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전주시행정자료실에도 최근 4년간 단 한부의 용역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 다.

전주시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1~2년이 지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전혀 새로운과에 배치되었을 때, 최근 몇 년간의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각종 책자와 자료들을 가까운 청내 행정자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용역비를 줄여 자체 아이디어로도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용역 표절시 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1부씩 시청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에 비치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는 담당자가 행정자료실과 시의회 도서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용역보고서의 경우 기록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영구 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용역자료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전주시 자료관(문서전산실) 문 앞에 붙여 있는 경구를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자취입니다. 어제의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나침반이며,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청사안 행정자료실 설치와 행정자료실과 전주시 자료관 통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행정자료실은 총 8028종의 8862책을 전주시 도서관의 종합자료실내에 30여평의 공간에 행정자료로 보관 중이며, 도서관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여건상 도서관에 행정자료실이 있어 관리와 활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기록관 종합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개정하고, 7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청사 신·개축시 1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총괄할 수 있는 기록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자료실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청사 주변 인근 건물을 입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자료실의 수거, 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책과 타지역에서 발송되어 오는 자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부 우편 물 및 등기우편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는 해당 부서 또는 도서관으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타부서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도 부서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달토록 하고, 청사 내 행정자료실 확보 시까지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 이관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자료실은 공개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는 비 전자 기록물 DB 구축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1만 여권에 대해 보존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및 기록물 검색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사랑 동아리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를 이용한 사이버 행정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의사소통 공간과 정보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시의 행정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 행정자료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주시 홈페이지내 사이버 행정자료실을 따로 구축하여 전주시 발간자료, 환경백서, 의정백서등을 수록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정 정보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역 자료 관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용역보고서를 시청과 의회에 각 1부씩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용역 성과물의 관리 및 자료비치 실태를 보면 발주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직원 간 자료 공유 부족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용역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하여 과거에 생산된 것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영구 기록물로서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마다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록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용역보고서를 보관 관리토록 하고 전자계시관에 용역성과물 자료방을 구축하여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시민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용역현황 코너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용역보고서를 기록물관리부서와 의회에 제출토록 제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국철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8월 12일에 실시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선정한 문제입니다. 이번 청소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 입찰로 이 법에서 정한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즉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이후 등록 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전주시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연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탈락업체의 법적 대응이 있자 적격업체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다 안되니까 인심 쓰듯 물러서는 모양을 볼때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현장설명회의 설명과 다른 이중적 태도입니다.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직원 숫자는 평가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 있어서는 직원 숫자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행정경험이 갖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단순한 말실수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이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대다수 응찰업체를 기만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체명 표기에 따른 업체선정의 공정성 시비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관련업체 입찰시 응찰업체가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업체를 감점 처리한 것이 다른 아닌 전주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게 전주시입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와 원칙보다 상황과 논리에 따라 고무줄 행정이 된다면 누가 전주시 행정을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심사위 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선정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절차를 불패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의구심을 갖는 첫 번째 이유로는, 전주시는 심사 전nal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추첨이 이뤄지기전에 이미 심사위원이 통보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정행위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심사위원 선정에 의구심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심사위원으로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는데, 특정대학의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상식밖의 평가 배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결백을 증명하고 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선정시간대를 전후한 통화기록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배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청소를 이들에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보다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 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루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와 이들에 한번 청소를 하겠 다는 업체, 과연 시민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시민의 생각과 다른 행정, 그래서 이들에 한번 청소를 하겠다는 업체에 손을 들어 준 전주시의 행정을 과연 시민들은 인정하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 거의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짜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자의대로 선정하고,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그에 맞는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심사점수와 기본서류점수의 분리문제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와 기본점수를 분리해서 채점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에서는 응찰업체의 기본요건 점수가 사전에 채점되어서 합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의심을 키우자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류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상과 같이 나열된 문제점만을 보더라도 허점투성이인 행정행위를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되었다면 징계를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행정을 지향하는 전주시 공무원의 자세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이번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접하고 사태를 파악 하고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무력화되어 버렸습 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것은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 씀드리면서 요구한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가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엘리트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투명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겠습니까만 관련 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명한 전주시 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구역과 관련하여

다음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 감리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건설사업감리, 즉 CM방식을 추천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을 들어 CM방식으로 확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주시는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CM방식이 아닌 책임감리방식으로 전환해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 감리에 비해 다소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CM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먼저, 공고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 개최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덕진구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는 업체가 수탁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전주시 관내로 사무소를 옮겨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결정되어 위탁업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의 내용 중 참가자격 부분에 명시된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규정으로 보아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삼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실제 평가에 있어 직원 수가 평가점수에 합산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는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담당부서인 자원관리과장이 사업의 취지와 평가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점수 산정시 직원 숫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가격제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격을 높게 써내서 점수를 덜 받더라도 사업제안서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업체명 표기에 대한 사실을 왜 묵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로 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술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사업은 입찰이 아닌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 심사 위원회는 기관 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설명회 때에도 참여한 업체에게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설명하였으며, 기관소개서는 회사 설립일, 임원진 구성 등 각종 현황과 재원 조달능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명을 표기하도록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 선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은 심사전일인 8월 11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까지 경찰관 2명의 입회하에 경찰관이 직접 컴퓨터 무작위 랜덤 방식에 의하

여 추첨하였으며, 추첨순위에 의거 현장에서 전화통화로 심사당일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바 추첨 전에 미리 심사위원이 통보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대학에서 심사위원이 대거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추첨순위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타 대학 심사위원이 출장과 수업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부득이 순위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심사위원의 개인별 평가표는 심사위원 성명과 업체명을 이니셜로 표기하여 이미 제출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평가표의 공개는 사생활 비밀보호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 배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업체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양심에 따라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심사기준표는 사업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업체의 제안서 접수일인 7월 30일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공정성을 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점수와 기본 서류 점수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격에 대한 복수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결과에 의거 사전 제시한 사업비가 예정가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또한, 업체의 재원조달능력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가격제한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평가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와 합산한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음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에게도 심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심사에 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요구하신 응모업체 신청서류는 회사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 인적사항 등이 있고 2순위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처리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료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한게 사실이며 결국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심사위원별 업체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전부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든지, 심사위원을 자의로 선정하였는지의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명예는 물론 시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 발생 직후 즉시 감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업무 미숙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되어 담당 과장 인사조치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겠으며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CM 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CM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위해 계약관련 법규 및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 는 조항에 의거 재입찰 공고시 또 다시 유찰될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턴키공사로 발주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의 기획,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단계 (Life cycle)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M용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전면책임 감리용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의 장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공무원이 더 연관하고 노력하는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완벽한 시공으로 성공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의지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김상희의원 (효자3·4동)

▶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 제작과 열섬저감을 위한 전주시 종합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제작과 열섬저감을 위한 전주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27일 전주시의회가 주최해서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백서로 남기고 집행부에 조치를 강구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가 곳곳에서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를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으로 형식맞추기를 위한 수동적 사업들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남긴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전주에 대해 실질

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기초적인 패러다임을 과학적 증거들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 또한 2006년 9월 6일 살기좋은 생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담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매우 떨어져 결국은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효과에 따른 대안들이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주의 풍도(風圖)에서는 계절풍, 국지풍, 산곡풍(지류풍), 사면풍, 평야풍, 수 류풍, 기류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의 생태적 보존지역 분석이 매우 필요하고 고지대 공동주택의 바람길 수치 모델링 실시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풍도(風圖·바람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열섬저감을 위한 경우는 녹지축과 물의축(저수지와 소류지 및 벽천과 분수 확보), 인도(人道)축을 지적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전주가 열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심외곽에서 바람을 일게 하는 모악산 축을 기점으로 기린봉, 남고산, 완산칠봉, 곤지산, 화산공 원, 황방산, 건지산 생태와 녹지축 연결만이 가능하고 어렵게 얻어낸 바람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지에 있어서도 녹지율이 10%가 늘어 날 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건물의 2.4배 녹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 예로 제주시는 1980년부터 각종개발사업으로 2889ha(약874만평)의 산림이 사라져 80년대 평균 14일이었던 일수가 최근 19.8일(2001-2005년)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반면 대구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인도(人道)의 시멘트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투수콘을 철거했고, 지금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 도심의 열기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전체 면적 49%(베들렌34%)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3도가 낮아져 피서지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 겸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반에 걸쳐 식재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전주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땅에 효과적인 식재를 위해서는 식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만개의 잎이 달린 15m의 단풍나무가 여름철에 한 시간당 증산하는 물의 양은 220리터(61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산량은 고성능 에어컨 15대의 냉각효과를 버금가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역시 한그루가 하루에 0.6kg의 수분을 방출함으로써 대기열 에너지 36만kcal을 제거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7대를 10시간 가동한 효과인 것입니다. 이만큼 열섬화 해소 방안으로 는 도시 숲과 도시 공원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바람을 일게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도심 유흥지의 습지 조성 및 대규모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온도를 강하시키는 역할과 복개천 철거를 통해 하천기능 복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효과를 얻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 물었습니다. 첫째, 바람길 확보에 따른 지금까지 집행해온 집행부의 사례를 듣고 싶고 전주시 미래의 바람길 확보를 위한 바람길 지도 즉, 풍도 제작으로 인한 실사구시적인 대안들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風圖)로 인해 바람길에 걸리게 되는 건축물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번엔 열섬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집행부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중기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열섬 저감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곳곳에 작은 분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예술성이 가미된 대규모 분수 등을 많은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볼 때 전주는 지형지세가 말굽형으로 바람길 확보에 매우 부담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 접근법으로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 효과를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집행부가 신속하게 계획한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5가지 항목을 63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 제작과 열섬저감을 위한 전주시 종합대책에 대하여

바람길 확보에 따른 그간 전주시의 추진사업 사례와 미래의 바람길 확보를 위한 바람길지도 및 풍도(風圖)제작으로 인한 실사구시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바람길의 확보를 위해서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를 제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는 6호, 그 이상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도록 주택조례를 2007년 10월 5일 개정,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답상형을 반영하여, 43개 단지 4만 8861세대의 예정지구 중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10개 단지 8908세대를 답상형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재개발 재건축 중인 단지도 답상형을 적용해서 바람길 확보에 유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2008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6개단지 2529세대는 답상형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였고, 개정된 주택조례에 의해 판상형 공동주택

13개 단지 6,499세대를 건물의 길이를 제한하여 적용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제작은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제작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국내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예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선행사례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여 의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바람길 확보를 위한 풍도(風圖) 제작시 바람길에 걸리게 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및 신규 사업계획승인시 건축물 배치와 형태, 피로티 구조 등 단지별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적극 조정 권고토록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식재, 분수, 소류지활용, 건물색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열섬저감을 위한 중·단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열섬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등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현재 계획이 완 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식재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그린터널, 도시학교 숲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2015년까지 도심내 건축구조물로 된 삭막한 인공지반을 녹음이 푸르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사업, 담장 헐기 사업 및 소규모 자투리공간에 수목 식재사업, 기존도시숲과 도시공원과의 자연스런 생태통로 연결을 위한 녹지축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분수 등 친수광장 및 건물 색채에 대해서는 도심주요광장에 주민친화력이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심속 노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등 열섬저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7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동안 계획하고 있는 8개의 친수광장 조성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분수와 휴게시설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날달에는 화산체육관 앞 벽천분수를 준공하면서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백화점 앞, 화산체육관앞 광장, 홈플러스 앞 등 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노송천은 금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코아백화점 앞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 0.7km구간에 2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속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열섬저감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친수공간(분수, 벽천, 연못, 실개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2007년 1월 개정,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수공간 설치는 13단지 6108세대에 반



영하여 설치 및 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열섬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2007년 10월 주택조례를 개정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80%이상 설치하는 7단지 3612세대에 반영하여 설치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단지 내 친수공간 확보, 바람길을 차단하지 않은 배치,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 열저감 우수 수종을 식재하고 건축물의 색채는 저채도 도색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시 옥상조경, 신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열섬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도심 소류지 활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류지를 보전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냉섬효과(Cool Island)의 열섬저감을 위하여 소류지 68개소 중 도심권에 위치한 10개소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평화동 지시제, 송천동 오송제, 팔복동 구주제 3개소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자동 황학제·서은제·신용제, 평화동 학소제, 팔복동 지장제, 송천동 신흥제 등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도 포장시에도 도로개설시 도시미관과 유지관리 및 열섬저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친환경제품을 선정시공하여 열섬을 저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열섬저감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작은 분수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바, 시민들은 효율성과 예술성이 가미된 대규모 분수를 원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열섬완화와 도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하여 8개소의 주요 광장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의 친수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 해 나가면서 가족단위의 물놀이가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물놀이 공원이나 대규모 분수 등에 대하여 여론수렴 등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을 위한 대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4일 각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저탄소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저탄 소형 산업구조 전환,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길 확보와 열섬저감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는 환경과에서 이를 종합 추진하고 있으나 금후에

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T/F팀 구성 운영 또는 전담 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소 운영에 대하여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 선정이 또 다시 시민의 우려를 낳고 언론의 질타를 받는 행정의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찰조건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소재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지켜야지 왜 어기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심을 시민으로부터 받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응찰업체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입찰의 기본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낙찰된 업체에 전주시 전직구청장과 발주부서의 과장을 지낸 인물이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낙찰 되게끔 하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의 입찰도 수탁자가 반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찰 행정의 미숙이 드러난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또 이런일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께서는 이일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둘째, 엇그제 9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사무소를 전주시에 둔 시점이 공고일 이후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2위 업체인 T사로 결정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선정위원회서 결정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번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운영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금액 낙찰제를 도입하고 시민 모니터링제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성과금을 지원하는 최저금액 낙찰후 성과금지급제도등의 혁신적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전주시 입찰행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도시경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술도시국을 새로 만들고 지금까지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트폴리스과장까지 특채하여 전주시 도시경관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하진시장께서 전주의 이미지를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 전주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주를 새롭게 가꾸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회 또한 흔쾌하게 동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현수막 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도시경관에 현 수막게시대와 시 지정벽보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예로 들어 소규모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를 중시하면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지난 5월 31일로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재위탁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사무 업무는 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은 지난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고 본 의원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조례를 위반하고 또한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위탁한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누누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임을 또 다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은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해괴한 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고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진심은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시장께서는 무효에 따른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이를 변명으로 일관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포함) 이전 문제에 대하여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106연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은 사격장을 포함해서 35사단과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비군 훈련장이 전주시 북부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탄이 날아 다니는 일이 도심에서 일어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해서는 결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35사단 이전부지 1.15km(35만평)를 포함한 주변 1.95km(60만평)를 천년전주 미래성장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에코타운으로 차질 없이 개발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성장의 중심에 사격장이 포함된 예비군 훈련장이 사단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 피 사격장은 송천동과 호성동 사이 건지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인근에는 송천동 진흥더블파크,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동아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인구 밀집 주거지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오송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과 면학분위기의 장애는 강조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100여 미터 거리에는 오송제가 있는데 오송제에는 많은 철새들이 날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제는 전주시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나는 총소리는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동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도로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송천동과 호성동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중로 1류 85호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데



도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없이는 결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문제 에 있어서 35사단 이전과 동시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계획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과 함께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에 대하여

전주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소업무 민간 위탁 사업은 그간 전문기관의 용역, 환경미화원 노조 설득과 노조의 대승적 차원의 시 방침 수용, 그리고 시의회의 전폭적 지원 등 꾸준한 노력과 오랜 준비하에 좀 더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심하고 추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입찰 행정의 미숙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참가 자격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자격 요건을 별도로 구분했어야함에도 전체를 허가자격 요건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 발생한 일입니다. 당초 발주처의 의도는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역내 많은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계약행정의 미숙함은 선례답습 행정의 표본으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등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이행중으로 신상필별로 경중을 올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결정된 1순위 업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선정업체의 참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받아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지난 9월 3 일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미숙으로 피해를 입은 당초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최저금액 낙찰제와 시민 모니터링제 의 도입 등 최저금액 낙찰 후 성과급지급제도 등의 혁신적인 입찰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금액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 공사비 300억이상의 경우 최저가 낙찰율을, 300억미만에 대해서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고 있고,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인건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금액 낙찰제의 적용시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기 선정된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주기적이고도 객관적인 상시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하여 재위탁 여부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입찰행정에 대한 특단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시평가시스템 외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나 각 종 공사계약시 사업부서와 계약 · 감사부서, 조달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계약행정 심사팀을 구성하여 공고문에 대한 사전 협의등 처리절차에 대해 꼼꼼히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겠으며, 관계 직원들이 감사원, 조달청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계약 업무와 관련한 직무연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현수막 게시대 협약 연장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조례를 위반 하여 무효인바 무효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에 대하여 98년 3월부 터 2004년 2월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게시대 유지 · 보수등 시설물 관리대행을 위탁해왔으며, 2004년 6월 1일부터는 민원인들이 현수막 게시 신고를 하기 위해 완산 · 덕진 양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문제와, 광고효과가 좋은 장소에 부착하려고 광고업자간 과열 경쟁하는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물관리 대행에서 옥외광고물 신고업무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위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협약기간이 지난 5월 31일로 3년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월 2월 25일자로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가 신설되어 조직개편이 3 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런 와중에 실무부서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의회동의 절차시기를 실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

는 지정정보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벽보관과 게시대의 위탁관리 종료시점이 게시대 5월 31일, 벽보관 9월 30일로 4개월 간의 시차로 서로 상이하여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차선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한시적으로 재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동의없이 행한 민간위탁은 하자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벽보관과 게시대를 함께 묶어 민간위탁을 하겠으며, 금년 10월중으로 의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 실효성과 법적관계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관계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이에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실한 대책과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 위탁시설 정기평가와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마련, 민간위탁실명제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더욱 발굴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포함) 이전 문제에 대하여

35사단 이전과 함께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 위치한 지역은 1994년 10월 7일 전주시기본계획수립시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과학기지의 배후 주거기능역할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14만 5000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된 예비군 훈련장은 35사단과는 달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향토부대로써 거주지를 단위를 하여 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지역은 북부권의 체계적인 개발 및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불가피 할 뿐 만 아니라 사격소음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 급속한 도시화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천동 북측 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예비군 훈련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등 국방부와 협의를 통

해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유재권의원(삼천1·효자1·2동)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한 전주시의 환경정책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에게 수수료 부담 등으로 날로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만 가는 안타까움에 이를 바로잡는 정책 시정이 펼쳐져야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고 자 2008년도인 금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 자동차 정밀검사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 등 4개항목을 검사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질소산화물, 엔진관련검사를 추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유독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인 2007년도까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배기량에 따라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 것이, 금년, 2008년도부터는 4만 80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 차 등부과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추가검사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만 3000원에서 3만 9600백원 가량의 검사수수가 상향 되어 자동차 소유 생계형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가져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행정기관의 탓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검사에 따른 안내 홍보가 미흡하여 적기에 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를 끝내면 당연히 자동차 환경배출가스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이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병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2008년도 7월말 현재 4590대 차량에 5억 1400여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주시 및 전북도내에 실시 가능하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는 전주시 16개 업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도내 시·군중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배경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사대행기관의 일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동차소유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중검사 문제점에 대하여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차량 정기검사기간 지연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며 배출가



스에 대한 검사지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과 소관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현대인에
게는 과태료를 해결하려고 행정기관 방문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두 부서에서 처리하
고 있는 과태료 업무를 한부서에서 통합하여 one-
stop의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
니다.

▶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과 복합터미널 건립 및 화물터미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다음은 35사단의 이전, 서부신시가지의 완벽한 내실
등 거침없는 광역시로의 발돋움을 차곡차곡 준비하
고 있으나, 이에 따른 넘어야만 되는 종합터미널의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민선 7
기때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후 추진계
획에 대해서 전혀 담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운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청이 설치되어 개발의 바람을 한껏 높이
고 있으며 정비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전주의 중장기
적 발전을 고려해볼때 도심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터
미널은 전주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전은 조
속히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암동에
소재한 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평균 1380대의 시외버
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승객 또한 1만 5000명 정
도입니다. 인근 고속버스터미널 또한 1일 평균 620
대의 버스와 7000여명 승객들이 이용하는 거대한 다
중집합시설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시외버스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으로 인한 차량소통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
과 쾌적하지 못한 주변환경의 여건 등으로 전통과 문
화의 중심도시 전주를 찾는 방문객 및 외래객 그리고
외국인이 전주에 대한 첫 인상은 실망으로 시작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의 이전 그리고 나아가 두 터미널이 함께 운영 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상
황과 사업완료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해 답해주시고,
둘째, 아울러 대로 및 이면도로의 대형차량 및 화물
차의 밤샘주차, 불법주차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
량을 시외곽 지역에 집결 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의
건립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도시계
획지정 등 진행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기 복합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건립은 인근 새
만금사업 추진과 함께 병행하고 이에 연계한 우리시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
각되어 집니다.

A 송하진 시장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배경과 검사 및 대행기관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물
으셨습니다.

자 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배경은 대기환
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차량이 많은 도시의 대기오
염 해소방안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2년 서울·경기권
을 시작으로 2006년 광역시, 2008년에는 인구 50만
이 상 도시에 한하여 시행됨에 따라, 창원·청주·포
항 등과 같이 전주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 해양부에서 관할하는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도 위주로
실시되었고, 정밀검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
스에 대 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원화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의 시정을 2007
년 11월 ~ 2008년 1월 동 안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제도 및 검사 등을 자동
차관 리법상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
월 17일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 어, 내년 3월 29일부
터 통합 운영될 예정인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원화에
따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이중검사에 대한 홍보대책 및 과태
료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가 신규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2007년 10월부터 교통정보 전광판
18개소 및 시 홈페이지, 티브로드 방송, 각 신문사 에
보도·방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자동차 관련단체 회의시 전단 및 포스터 현
수막 등 18만매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게첨하였고,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정밀검사 개시 40일전,
30일전, 10일전 등 3차례에 걸쳐 개별안내문을 발송
하여, 정밀검사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을 숙지하지 않거나 차량의 소유자
와 운행자가 달라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과된 과태료는 전주시 세입이며 일반재원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2개 부서에서 처 리
하는 과태료 업무를 통합하여 One-Stop의 신속한 민
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업무 통합문제는 앞서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법령이 2009년도 3월중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바 법령개정후 자연스럽게 One- Stop
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과 복합터미널 건립 및 화물터미널 건립 계획에 대하여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이전, 나아가 두 터미널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상황과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1974년도에 건축되어 1일 평균 1380회 1만 5000여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건축되어 1일 평균 620회 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2007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합 실, 승강장 등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리모델링 한 바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또한 2007년도에 자부담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외부도색, 고객대기실의 신설과 냉·난방 설치공사 등 리모델링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용객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계획 및 복합 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외·고속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도심내 교통량 증가와 터미널 인근 주변에 영업용 택시 등이 장시간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설 노후로 시민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심외곽에서 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시, 에코타운 조성 등으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배치 등을 고려해 볼 경우, 장기적으로 터미널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다만 현 시점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까지 할 경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건립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장기적인 대안으로 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외곽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지정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2008년도 9월 현재 3284대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차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새벽에 출발하고 늦게 귀가하면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여 매연과 소음발생, 교통사고 우려 등 민원이 발생되어 지난 한 해 동안 1694건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밤샘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어 화물차량을 시 외곽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 터미널 건립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8만 9151㎡의 규모로 전주장동 유통단지를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31일 준공하였는데 이중 4만 1680㎡가 화물터미널 부지로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장동 유통단지내 화물터미널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Q 임병오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최대의 당면문제와 시급성을 요하는 토지개발공사와 경남 진주에 주택개발공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혁신도시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송하진 시장을 상대로 몇가지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6월 12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적은 혁신도시 추진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낙후지역 발전촉진의 목적으로 참여정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함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을 균형있게 건설하는데 목적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배치계획이 발표되었고 2005년 11월 30일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으며 2006년 11년 23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31일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3월 4일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8년 3월 18일 기반시설 1공구 가 착공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면적 및 이전기관을 보면 조성규모는 307만평 중 완주군이 195만평, 전주시가 112만평이며, 입주기관은 총 14개 기관 중 전주에 토개공을 비롯한 7개 기관이 입주하고 완주군에도 7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총사업비 1조 542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7년 4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90% 진척되었고 금년에 3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선도기관인 토지공사가 2011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이 통·폐합 대상에서 토·주공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자이며 선도기관인 토지개발공사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전 14개 대상기관 연간 전체 예산은 23조 원 중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이 무려 22조원으로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985명으로 전체 이전 3487명중 28.3%를 차지하고 1년 납부하는 지방세가 2007년도의 경우 469억원에 이르는 기관인데도 최근 들어 토지개발공사가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토·주공이 포함되면서 전북에 있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지공사와 경남 진주에 있는 주택공사와 통폐합문제로 전주 혁신도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주·완주에 있는 토공의 불안한 운명이 자칫 잘못하면 63만 전주시민에게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은 송하진 시장께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를 제일먼저 착공한 자치단체에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혁신도시사업을 독려했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을 착수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에 착공으로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주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주·완주 도시 계획 및 입주기관 배치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라면 크나큰 과오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이며 전주시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지 송하진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과 진주 주공과 통폐합과 관련 해서 전주 혁신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께서는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도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연구원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대효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연간 일거리 창출 2만 6000명, 생산유발효과 1조 9300억원, 부가가치 8330억, 교육생 3만 1780명, 연간소비 1900억원, 이중 현재 토지공사가 혁신도시를 조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대로 연간 토공의 예산 22조이고 2007년 지방세를 469억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토공·주공 통폐합이 설왕설래하다가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추진단이 토공·주공을 통폐합 대상기관을 포함 발표하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토공 전주는 통합반대, 진주 주공은 통합 환영을 외치면서 이제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해서 일부의 비판과 함께 전주시는 유비무환의 기회마저 놓쳤다는 원망이 찾아지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하진시장께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공유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 대응과 이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서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도시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해서 절실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사업은 사실상 유래 없는 국책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우리한테 언제 이만한 혁신도시 사업이 두 번 다시 유치가 가능 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과한지 몰라도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은 신이 내린 마지막 국책사업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공은 2007년간 22조의 사업기관이고 본사 지방세도 469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토공유치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미 새만금 배후도시로 전주가 아니라 김제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대전에 이어 60년대 6대도시 내지 7대도시였지만 전주시는 경쟁력을 잃고 끝없이 타도시에 추월당하고 후퇴하여 청주, 안양에 이어 16위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개공 유치 문제는 전주시의 사활을 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안에 따라서 전주 시민과 역사앞에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전주 시민과 모든 관련단체가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고 크기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10일 전남 나주시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혁신도시 정책후퇴를 질타하는 나주시민 5천명이상이 참여 혁신도시 건설추진 결의대회를 촉구하는등 강력한 항의와 결사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은 정부에서 대기업과 외국의 기업까지 강력히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다행히 민영화 계획에서 이와 무관치 않게 빠져 나갔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무슨 이유로 이 시급한 혁신도시 토공유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왜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가 토공을 당초 계획대로 전주·완주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간의 전주시 발전 40년 후퇴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사업은 군산, 부안에 있는 새만금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는 더도 없는 생명과도 같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 되면 우리 전주시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안일하거나 미온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탈피해서 전남 나주 이상으로 대책을 세워 전주 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의무와 책임이 송하진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께서

는 이후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도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 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양 기관이 통합이 되면 본사가 경남 진주로 갈 공산이 클 것만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연락을 부탁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임병오 의원님께서서는 전북혁신도시가 착공이 늦어져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혁신도시에 관련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동안 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는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완주간 갈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먼저 착공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는데, 전주시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혁신도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면적대비 88%, 공공유지를 포함하면 97%가 협의되었고 지장물 보상은 가옥대비 68%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부분은 지난 3월 18일 1공구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시공측량과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는 전주와 완주의 2개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안을 결정하기까지 타 혁신도시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게 되어 향후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혁신도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보상 협의거부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실시계획이 전국적으로 작년말에서 금년초에 승인되어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거의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추진 일정상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 지자체간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좀더 폭 넓게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계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에서 공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의 보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정부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기반시설비 지원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앞서 착공한 제주도 등에 실제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 이전기관 중 기대효과가 가장 큰 토지공사의 전복이전 추진계획과, 세번째, 토 공·주공통폐합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전북으로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하게 될 주택공사가 통합대상 기관으로 분류하여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확정된 후 통합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는 14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지방 대학생 취업기회 제공등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토공의 통합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토공·주공 통합 논란이 제기된 지난 4월 터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혁신도시시·군·구협의회를 통하여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 10회, 성명서 발표 4회, 세미나 개최 1회, 주무장관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그중에서 특별히 전주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2개 군이 합쳐진 관계로 도와 협력하는 관계가 보다 힘을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중앙부처 방문 등 중앙 관계자와의 면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언론·시민단체·주민 등과의 홍보활동, 혁신도시 관계기관과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토공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회차원에서 천막농성, 성명서 발표 등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공사 또는 통합기관이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원안대로 전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단계별로 강력



하게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전라북도·도의회·전주시·시의회 그리고 완주군과 역할을 분담하여, 언론홍보·성명서 발표·서명운동·프랑카드 게첩 등 주민홍보와, 중앙부처 및 국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단계 대응전략으로 오는 9월말경 정부의 토공·주공통합 발표 이후에는 28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시민 상경투쟁, 100만인 서명운동, 세미나 개최, 통합기관 전주이전 중앙 건의 등 대정부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기관 전북이전 계획에 대하여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토공과 통합기관의 전북이전 문제는 전주시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 전북도내 각계 각층의 인사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Q 강영수의원(서신동)

▶ 공원녹지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녹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에는 132개에 21,092km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과 묘지공원이 있으며, 대부분 경사지인 야산은 소나무 숲으로 덮혀있어 산소의 공급과 오염된 공기정화 작용은 물론 태양열 차단과 열섬현상의 감소효과 및 대기중의 습도까지 조절해 주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밖에도 도시의 경관은 물론 휴식공간의 제공 및 자연 생태계의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총력을 기울여 그린터널과 도시학교숲 조성사업등 11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는 전주에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도시건설 컨셉과 맞아 더욱더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에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덕진조경단 일원과 황방산 일대, 덕진공원등 전주시내 일원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천년전주의 전통문화도시다운 면모가 갖춰져 있었으며, 특히 덕진공원내의 소나무는 전주 단오제의 그네뛰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소나무가 소나무 좀벌레 병충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종합병원 원장 강 전유씨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80년의 전주 소나무 좀 2차 대피해 발생은 전주제지 소나무 야적지의 소나무 좀에서 확산 발생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숲의 주종을 이루는 재래소나무가 좀 벌레에 시달려 고사 위기에 처해있어 1970년대 이후 또다시 전주지역이 최대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빠른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공공부분 식재는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나무 이팝나무 등 큰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내용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무부서는 현재, 소나무 좀 벌레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덕진공원은 물론이고 서신동 일원의 전 공원에 소나무 좀 벌레가 확산되었으며, 전주 시청 앞뜰에 있는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까지도 좀 벌레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 전역으로 이미 확산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노송광장은 수억을 들여서 조성한 나무이며, 우리 시청앞에 있는 소나무가 한그루가 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러한 소나무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활용설명)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의 피해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이 좀벌레가 이미 먹혀들어가서 세순을 갈가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진공원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어떻게 세순이 잘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입니다. 위애가 전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근린공원 소나무 좀벌레 피해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서신동 서부공원에 있는 소나무 좀벌레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동 서일공원 소나무 좀벌레 피해상황입니다.

마치 소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든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산공원 좀벌레로 죽은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좀벌레가 솔잎에서 죽어간 것을 본 의원이 채취해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나무 좀벌레로 인한 피해입니다.

세순을 갈가먹고 저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이 뚫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나무의 좀벌레가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천년 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의 달라질 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청정전주, 녹색전주, 생태전주의 꿈을 펼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무를 심는 실적위주의 행정보다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열 나무의 식재보다 20-30년생 한그루의 소나무를 죽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년 동안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3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중 심은 나무의 관리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나무관리에 허점을 들어 내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는 나무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식재된 나무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녹지 관리비를 대폭 증액하여 관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1975년도 소나무 좀 벌레의 확산에 의하여 전주시의 소나무가 전멸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또한 현재 소나무 좀벌레의 확산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방제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에서는 2008년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푸른도시조성과와 양 구청 녹지 관리팀에서 산림병충해 예찰 조사원으로부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소나무 병충해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산림병충해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찰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방제실적을 보면 덕진공원내 소나무 좀 방제를 위하여 4월에서 5월까지 3회에 걸쳐 고사목과 고사지를 채취하여 불에 태워 없애는 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나 소나무 좀의 생태를 보면 알에서 유충까지 4월부터 9월까지 생육하고 있어 최소 9월까지의 본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월 이후 방제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나무 좀벌레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하여는 전주시 팔복동 소재 제지공장과 협력하여 소나무 고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소나무 좀벌레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획기적이며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 팔복동 제지공장은 소나무 좀벌레 집하장으로 이곳에서 좀벌레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소나무 좀벌레 방제에 앞장서야 하고 일정부분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여섯째, 전주시에는 자연적인 자생소나무 숲이 있기도 하지만 민선이후 시청 앞 농수광장 숲 조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소나무 1그루에 수백만 또는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녹지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식재한 소나무를 조사하여 약제 살포, 영양공급과 시비실태 등을 기록 전산화한 소나무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번째,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임업직 현원은 5급 1명을 포함 19명이 가로수를 포함 132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서부 신

시가 택지 개발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등 많은 시설물이 이관되어 관리 인력과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관리로 인한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공원 관리 부서엔 전문 직인 담당 및 직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에서 녹지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느니 묻고 싶습니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공원관리를 하기위해선 전문 인력의 적소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나무 좀의 성충으로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소나무속의 유충이 성충이 되어 수피를 뚫고 외부로 탈출해서 당년에 자란 신초의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소나무진액을 섭취하므로써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또 성충이 되어 또 다른 나무로 이동하여 반복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주다가 가을이 되면 월동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듬해에 또 2차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1차 피해 발생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방제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내 공원과 아파트단지에 식재한 소나무, 또 자생 소나무숲등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공원녹지 관리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님께서 평소 공원과 녹지의 관리 그리고 산림병충해에 대해 애정과 열정을 갖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아주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푸른도시 전주를 꿈꾸는 저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써 끝없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무를 심는 실적위주의 행정보다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신 수목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조성사업은 2007~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300만그루 식재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원년인 2007년에는 총 58억원을 투입, 도시·학교 숲 등 6개 사업에 가 로수 1,017그루와 22개소의 녹지대 78,000㎡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그린터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산의 부족등 아직 많은 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목 관리예산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시 재정 형편상 관리부문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했음을 인정 하면서 식재된 나무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내년부터는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으로 잡초제거 등 단순한 수목관리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적극 활용하



졌으며 이와 함께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위해 녹지시설물 종합 관리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1975년도 소나무 쯤벌레 확산으로 전주시의 소나무 피해상황과 최근 소나무 쯤벌레 확산에 따른 방지대책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덕진공원을 비롯하여 전주시 일원 공원과 산림은 푸른 송림이 울창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에 이르러 전주지방의 소나무 쯤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류 병해충으로는 소나무썩을 비롯하여 솔잎혹파리, 솔나방, 솔껍질깍지벌레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나무 쯤벌레 피해로, 특히 덕진공원, 노송광장, 근린, 어린이공원 등에 일부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 병해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양 구청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를 목표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방제실적으로는 덕진공원 내 소나무썩 방제를 위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고사목 및 고사지를 제거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7~10일 간격으로 예방 약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한 편, 노송광장 소나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4월~7월까지 6회에 걸쳐 스미치온 약제를 이용한 방제실시와 함께 영양제를 3회에 걸쳐 투입 하였고, 소나무썩 고사지를 전지해 줌으로써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 통섬 및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심권에 식재된 소나무는 병해충 방제차량을 활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우리시의 병해충 방제실적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1,300주 정도를 시료 채취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목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가로수에 주로 발생하는 흰불나방·진딧물·각지벌레 등 기타 해충을 포함하여 총 180ha를 방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덕진공원내 소나무썩 방제를 5월 이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8. 6. 1~8. 31까지 3개월간 시 본청 및 양구청에「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방조사원은 산림 관련 분야에서 20~30년간 근무실적이 있는 전문인 3명, 산림보호감시원 11명, 총 14명을 선발하여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적기 방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소나무 쯤벌레의 산란시기는 3~4월 중순으로 방제 적기인 4~5월중에 덕진공원내 소나무 방제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5월 이후에는 방제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사지 제거 및 영양제 투입 등 기생하고 있는 쯤벌레 박멸로 생육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소나무 썩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하여 팔복동 소재 제지공장과 협력하여 소나무 고사원인 규명 및 소나무 썩 발생원인의 이동경로를 역 추적하는 방제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소재 제지공장 및 제재소등에 반입되는 원목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나무 썩 등 감염목의 경우에는 목재이동 제한조치 등 행정적 조치 후 강력한 방제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목에 대하여는 병해충 검증 전문 기관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국립산림과학원에 신속하게 의뢰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항구적 방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시스템에 의거 우리시와 제지업체, 병해충검증 기관과의 방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주 팔복동 제지공장에서 소나무 쯤벌레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원인발생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 하계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썩 발생원인에 대해 제지업체를 지목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팔복공단 제지업체의 원목으로 인해 소나무썩이 확산 되었다는 역학조사 및 과학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상대로 방제비용을 구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기업체로 하여금 소나무썩 예방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민선이후 노송광장, 근린공원 등에 조성된 소나무를 조사하여 약제살포, 영양공급, 시비실태 등을 기록 전산화 할 수 있는 소나무 관리대장 작성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2008에 걸쳐 민선4기 이후 가로화단 등에 식재된 소나무 186그룹에 대하여 12항목 및 7기능에 대하여 수목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공원 등에 식재된 주요수목 및 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소나무에 대하여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개발로 인한 공원 관리시설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녹지관리 업무가 가중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직 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녹지면적은 262.28km이며 도시공원 145개소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푸른전주만들기 시책으로 녹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녹지직 등 관리인력은 복수직렬 포함 총 26명에 현원 또한 26명으로 결원은 없으나 그중



녹지전문직이 20명으로 6명은 행정, 시설, 농업직 등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6명의 복수직을 녹지전문직으로 가급적 배치하고 인력진단을 통해 점차 증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속의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 다른 소나무로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월동처에 잠복하여 이듬해 2차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1차 피해 발생시 근본적인 방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나무좀은 소나무의 수세가 약할 경우 발병 하므로 도심의 경우 공해로 인한 수세의 쇠약을 방지하기 위한 미량원소 투입으로 수세를 유지하는데 주력 하겠으며 소나무좀의 산란시기인 3월 중순 ~ 4월 중순경에 메프유제와 다수진유제의 혼합 약제를 중점 살포하고, 친환경적인 순간 주사 방제 방법을 확대 시행하는 등 소나무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국주영은의원 (송천1·2동)

▶ 아트폴리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먼저 아트폴리스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운영지침을 만들고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는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를 만든다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최소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2008년 5월까지 52건의 자문이라는 적지 않은 실적을 남겼고 전주시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계획에 따른 활동을 전개할 시점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트폴리스 초기 추진과정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 통로를 통해 방향성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아트폴리스는 단시간에 끝나는 제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장기적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추진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외국의 아트폴리스 사례는 시민의 참여가 있었고 관과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보장하는 근원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트폴리스를 추진할만한 전주시의 행정력은 미흡하고 시민의 참여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아트폴리스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별

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대시민 캠페인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와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입니다.

아트폴리스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이 브랜드가 세계속의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주변환경과 문화적 요소가 무엇인가, 아트폴리스를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시만이 갖는 개성 있고, 독창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즉 아트폴리스의 목적인 지역마케팅이 성공적 결실을 맺게 되면 가장 먼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전주시의 특성을 가진 상품의 육성은 아트폴리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연관되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폴리스의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취약지역의 문제입니다.

아트폴리스의 사업영역은 주로 도시 건축물이지만 유적지나 명소, 공원, 도로등 도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만을 생각한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부분들이 소테마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테마로 합쳐지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트폴리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취약한 곳은 한옥마을 주변 전동·교동 일대와 서학동, 완산동, 노송동, 인후동 일대 등입니다. 또한, 선미촌은 도시중심부인 시청 맞은편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거시적인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 위주로 진행된다면 이들 취약지역은 화려하고 멋진 그림 뒤의 초라한 소외가 우려됩니다. 이런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웃만 번지르르 하게 입었다고 품격 있는 신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지 다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아트폴리스 개념을 도 입했다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면에 철학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비로소 품격 있는 도시로서 내면을 갖추는 것이 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포함되어야 도시 브랜드로서 전주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행정 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 합니다.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차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 감축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 176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38개국은 의무감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10위, 1990년대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1위 국가여서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UN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후 에너지 지도 제작, 기후변화기금 1천억원 조성을 시작하였고,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추진 협약체결, 광주광역시와 과천시, 제주도 등은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U-UN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올 해 시장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가는 가운데 산업시설이 적은 전주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정부나 기업에 판매하여 전주시 재정을 살찌우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및 수송부문이 49%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정부문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문은 고작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수송과 가정부문(84%)에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주시 이산화탄소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두 가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입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재활용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두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유 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지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유가 가동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바이오디젤유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제 248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과 생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주시 관용차의 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미 환경단체와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착수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인데 폐식용유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는 수거체계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타 자치단체의 베끼기가 아닌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본인의 발의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사용을 줄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의식적인 부분, 즉 갈수록 고급화 되어 가는 자동차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시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이 출근수범하여 자전거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전주건설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아트폴리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아트폴리스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트폴리스의 추진력 문제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트폴리스 부서에 대한 교육연수, 워크숍 등 별도의 프로그램과 대시민 캠페인 전개, 관련업 종사자 교육 정기적 시행,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제 도시는 아름답고 실용적이면서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관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대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요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성공한 세계 선진도시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며 비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과 같이 수백년에 걸쳐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가 있는가하면 영국의 브리스틀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단기간에 공공디자인에 주력을 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확립, 주민참여와 자발적 규제를 통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지난 2월25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도시국과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바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념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거시적인 경관관리에서부터 작은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트폴리스 정책을 이 부서들은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아트폴리스 도입 원년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트폴리스를 규율하고 추진해 나갈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아트폴리스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과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국제세미나 개최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등을 10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은 디자인 발전 확산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위에 구체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대 시민 캠페인 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 아트폴리스 전주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시와 디자인 경영, 도시 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 관련업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과 디자인 정책포럼, 선진도시 아트폴리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이 완료되는 12월경부터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추진방향과 경관형성사업 추진, 경관협정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중집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아내기 위해 경관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 시민단체, 민간 관련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아트폴리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아트폴리스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전주시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내부의 디자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부터 3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꾸기 협의회안에 아트폴리스를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시 전체를 아트폴리스 위주의 정책으로 성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아트폴리스의 방향성으로 아트폴리스 궁극적 목적 속에서 관광산업과 지역특성적 상품육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통문화자산이 관광 인프라가 되는 것으로 아트폴리스 전주 프로젝트의 근본인 전주다움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생태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고 풍부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과 영화영상산업의 인프라, 그리고 국내 한스타일을 총괄하는 한문화진흥원 등의 건립과 한지, 한식, 한옥, 한소리 등이 유명한 한스타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금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BI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도시 이미지의 창출과 구체화, 그리고 활성화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등 도시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아트폴리스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Onn브랜드, 한지상품, Buy전주 상품 등 지역특화상품 육성을 통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구도심과 취약지역을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재생시키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취약지역의 적절한 조화와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의 전체를 규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근간이 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경관계획은 5대 축을 중심으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연경관과 도로, 건물 등 도시 구조물들이 이루는 인공적 경관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으로 전주시 5대 경관축은 역사관문축, 신구조화축, 수변축, 환상녹지축, 서부신시가지축으로 되어있으며, 4대 경관권역은 북부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 신시가지경관권역, 자연경관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사업과 주민 자율적 경관협정을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주변과 서학동, 완산동 그리고 노송동, 인후동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인 경관축별 경관형 성사업과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과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과 관리성, 소통 등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충경로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정책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과 전주시 구도심과 취약지역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슬럼화 된 지역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인간미가 넘치고 삶이 살아 숨쉬는 디자인 고품격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토의정서 1차시기 만료 해인 201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한편, 우

리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린 스타트네트워크를 구축중에 있으며 먼저 시범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Low Carbon, Green Jeonju 비전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을 위해 폐식용유 수거가 중요한데 수거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의 수거에 있어서는 배출원인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치킨집등에서 매월 25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체계는 환경단체, 재활용 수거업체, 각동 부녀회와 수거 전문업체간 파트너십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단체와 행정에서 홍보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서신동 공동주택 각 단지내 재활용수거함 옆에 20l의 용기를 배치하여 부녀회에서 세대별 수거요령 홍보와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송천동 등 공동주택 단지로 확산 수거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은 부녀회나 통반장 등 자생단체를 통한 수거홍보와 수거 전문업체 등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집단급식소 및 치킨집에 대해서는 수거 전문업체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업기간은 2008 ~ 2012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08 ~ 2009년까지로 폐식용유 수거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총 218,000세대 중 1%인 2,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3 단계는 2010 ~ 2012까지로서 전세대가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폐식용유 배출 수거를 생활화하여 CO₂ 감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한, 바이오디젤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폐식용유 월평균 예상배출량은 250톤 정도로서 2009년 도에는 30%인 75톤을 수거하고 2010년부터는 전량 수거하여 도내 생산업체와 환경단체 간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09년도에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60톤 정도는 상반기에 시 관용경유차 및 청소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유·운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10년부터 생산되는 180톤 정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는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거가 관건이므로 폐식용유 수거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등과 같은 CM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

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자전거타기에 남다른 관심이 많아 지난 7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어 제정 공포한 바 있듯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타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이고 건강을 챙기면서 자동차 사용을 줄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열섬 저감 등 일석 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전거 매니아가 아닌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들이 자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전거도로 동선이 끊겨 차도로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는 노선은 서로 연결하고 턱 높은 인도를 낮추는 등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자전거도로 정비와 지하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설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으며,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2007년도말 기준 3.2%로써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전거타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서서히 교통분담율을 끌어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축될 전망이나 정확한 수치 판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 이용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격주마다 1회를 자전거타기 행사를 시행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버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일 생활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과 약속하는 자전거 타기 선포식을 한바도 있으며 이에따라 시민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권정숙의원 (비례대표)

▶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간내에는 주차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공용주차장을 비롯하여 구도심 시유지 공용주차장부지 등 80 필지 138,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간내의 이 엄청난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시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대방안을 펼쳐 나간다면 전주시민이 교통정체로 떠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 주차장부지는 원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일반인한테 분양된 후 여건에 따라 건물이 2층에서 5층까지 세워진다면 그 건물내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도시계획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총 건수는 30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특히 서신동 지구를 보십시오.

서신동 지구에 9필지 10,005㎡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서신동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에서 이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토지가격은 평 당 4~5백만원이상 높은 가격이고 특히 적절한 주차장부지가 없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인후동 1가 907-1번지 일원 3,196㎡는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미 조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지역에 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전체 매각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시장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지구의 주차장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한테 매각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수립시 각종 행정적 규제나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지를 비롯하여 효자지구 등 택지개

발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용지가 있는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부지를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내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전체위원의 30% 이상)에 대하여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 현재 90개 위원회중 1,234명의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 행정, 문화, 복지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알차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전문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10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문가 위촉면에서 남성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된 반면 여성은 전문가로 위촉이 안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권역이었던 토목, 건축분야, 도시공학, 정보통신에도 대학교 등 학계, 전문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의 중요시책 반영시 여성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살기좋은 전주시 건설에 남·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보이지 않는 전주시 행정의 누수를 보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년전주 건설에 일조할 것입니다. 특히, 주부들과 관련이 많은 생활쓰레기 관련 기금운용 관련 2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변동에 여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에는 더더욱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도 배려가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 총원 1,234명 중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30%이상은 목표가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 규정을 각 위원회 구성시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물가나 쓰레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민감합니다.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이 전체위원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을 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남제와 관련하여

풍남제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제는 1967년 5월경 풍남제란 명칭이 제정된 이후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 역사의 정체성 변질과 축제로써의 경쟁력이 뒤로 처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역 역사를 담은 축제 명칭변경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변경보다는 운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 풍남제조례는 존치하고 있으면서 풍남제란 문화축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행정의 이중성과 객관성없는 행정집행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풍남제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은 종합 축제로 펼쳐주실 것인지 분명한 시정의 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풍남제조례가 있는 한 전주시 역사가 살아쉽쉬는 풍남제는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게 풍남제 문화축제를 전주시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은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서부신시가지지를 비롯 효자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에도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부지를 원천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사업비 충당 등을 이유로 그간 민간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개발 완료한 서부신시가지내의 19개소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하가지구 6개소와 효자4.5지구 7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예정지인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체결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기 분양받은 공용주차장 부지를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추진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아중구확정리사업 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 총 29필지 18필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가 대부분 타용도 및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개선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년 4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차장내 증축 및 적치물 설치 6건과 상가전용 주차장 표기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차장 입구에 공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용주차장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도시공간 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6월 현재 21만 8천대로 전년도에 비해 6천대가 증가하여 주차난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로 삼천2동, 인후3동, 중화산동, 서신동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는 1개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 삼천2동과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중화

산동 및 서신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150면을 완공하였고 풍남문 주변에 7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한옥마을 주변에 5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외에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전체위원의 30% 이상)에 대하여

각종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분야 위촉시 여성위원들도 위촉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노력은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도에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포함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를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코자 지난 2003년도에 전주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체위원의 30%이상 여성위원 위촉을 명문화하였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권장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시민참여형 시정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위원회는 총 92개 위원회에 1,243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위촉직 여성위원은 192명으로 2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대비 4.7%로 증가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시 각종위원회중 여성, 보육, 급식, 건강 관련 위원회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시, 주택, 도로, 재난 분야 등은 여성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분석결과와 같이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청소관련 위원회, 주부환경감시단 등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위촉시 여성위원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생활속에서 경험과 상식이 통하는 보통시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 여성이 참여하는 인력 풀을 만들어 임기가 끝나거나 신규로 만드는 위원회에 의도적으



로 가입시켜 나가는 등 보통여성들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풍남제와 관련하여

전주 풍남제를 풍남제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속 개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남제는 연중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오절은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제의와 놀이를 즐기던 것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향토축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단오제는 1959년 전주 시민의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단합을 꾀하고자 단오절을 축제로 부활시켜 전주시민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풍남제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도로서 그해 5월 3일 풍남문 중건 2백주년을 맞아 그동안 단오절에 하던 전주 시민의 날 전후의 모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 풍남제라 칭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남제는 48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주시민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풍남제 고유의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지고 현대적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미되면서 독창성과 정체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이 약한 축제로 전락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러한 이유로 매년 풍남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고 이에 따라 풍남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전주문화축제 컨설팅 및 시민,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가 풍남제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건전한 향토축제로서의 정통성과 의미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풍남제를 단오제로 복원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풍남제를 시민대동제 성격의 단오제로 복원하여 개최하고, 11월에는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 음식관광, 도시 명소화 구축을 위해 전주 천년의 맛잔치란 음식축제를 신설해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풍남제의 역사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민화합을 위한 대동 한마당잔치로 치루어졌고 전주의 풍남제를 주관했던 풍남문화법인에서 그대로 주관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단오제를 전주의 맛과 멋의 역사를 담은 넓은 차원의 문화축제로 더욱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전주시 풍남제 조례의 개정등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회와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밝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박혜숙의원(비례대표)

▶ 늘푸른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늘푸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에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시급성에 대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또 그로인해 시정된 부분과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서와 전주시민으로 거주지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시 제출하고 퇴소 시 타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난 후에 퇴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1인1실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실 거주는 2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주시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관리인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입소자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완료되어 본국에 입국한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도 입소자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타인이 임대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주자로 어느 호실에 살고 있다고 관리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거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로청소년아파트임에도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어 개선을 요했지만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개의 호실을 리모델링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보교환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권장하였지만 노후건축물이라 내부의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비품을 마련하여 휴게실의 이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의 공간은 지속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비품으로 마련한 도서는 수시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대의 컴퓨터는 민간위탁 시설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더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잠금

장치를 하여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전주시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서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임대료 인상, 외국인 청소년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으로 과연 전주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홍보를 하였는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퇴소시키고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현 재 100세대에서 휴게실을 제외한 99세대에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임대료 인상이 2년도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은 고려해야 될 것이며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외국인 근로여성들의 입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외국인들의 사고 나 사건발생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매우 어려워 경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미처리로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소자 명단에는 있는데 1년 체류기간이 지나 본국에 입국했는데도 전주시나 관리인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보조금이 지원된 한성여관에 전주한지 벽지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리모델링 보조금 8천만원 지원에 내부수리 벽지는 전주한지 벽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 벽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한 스타일,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중저가호텔을 브랜드화 하여 전주한옥마을, 객사, 견고싶은거리, 영화의 거리를 잇는 관광루트와 숙박시설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건전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가족체험 관광실현과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 내외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 오랜 전통의 한성여관을 한옥마을 인근 호텔 숙박시설로 개신하고자 도비 8천 시비 8천 자부담 1억6천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8월 ~ 2008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 활용과 수학여행단 등 중저가 맞춤형 숙박시설을 통한 국내외의 단체 관광객 유치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

는데 건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본 의원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1번에서 12번까지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12번에 “공사 시행시 바이전주 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 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의 행정 서류조건에 불과한 것입니까?

첫째로, 한성여관 리모델링에 관련 벽지 사용에 전주한지를 쓰지 않고 남원 지리산한지를 사용한 이유를 한성여관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성여관 관계자는 그동안 구도심 살리는데 고민을 하면서 주변상인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을 닫지 말라는 권장도 하고 본인 역시 전통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권장만 했더라면 가격차이가 있지만 전통전주한지로 벽지 리모델링을 했을거라며 오히려 전통전주한지를 홍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남원 지리산 한지벽지를 사용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주한지에 대해 홍보나 권장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주한지에 중점을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또, 전주한지가 아닌 남원 지리산한지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주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 사업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개선,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와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사말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자부담으로 총7억여원의 예산에 2,278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님, 법인택시기사님, 시민여론 등 지속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네비게이션 부착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므로 네비게이션 부착은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예산 지원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늘푸른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늘푸른마을 관리인에게 내부규정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 임대 아파트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에서 위탁관리 되어 오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탁기관에서는 입소규정 중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인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독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조건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여성을 입주시키고 본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여성을 입주자 명단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여성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현재 2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상 외국인 근로여성은 입주가 불가함에도 입주시킨 것은 위탁기관에서 운영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여성 2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퇴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입주신청시 입주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입주실태를 파악하는 등 입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휴게실 출입구 문을 잠금장치한 이유와 휴게실에 있는 비품을 위탁시설에서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차원에서 입주자들의 휴게실 이용시, 관리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난 방지등을 위하여 휴게실을 잠가 두었으나,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실은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당초 위탁관리 기관인 청소년자유센터의 비품으로 위탁관리가 전환되면서 컴퓨터를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나은 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임대료 인상과 외국인 근로여성 입주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연령의 조정, 입주대상 확대방안등 아파트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점 등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열정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리모델링 보조금이 지원된 한성여관에 전주한지 벽지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한성여관 리모델링과 관련 내부벽지는 남원지리산 한지를 사용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성여관 리모델링 사업은 여관과 모텔등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단체 및 가족 관 관광객들이 건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금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주시 전주한지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성여관을 일반 호텔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비즈니스 관광객과 가족, 그리고 국내외 단체 관광객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 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당초 주요 개선사업 내용에 신감각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업소 대표자에게 구두상으로 전주한지 사용을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아트마케팅을 도입한 예술적 실내장식을 위해 룬과 복도를 한지로 리모델링하고 실내 조명등을 전주이미지에 걸맞게 한지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 9월5일,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도 공사 시행시 바이전주상품 및 전주한지제품 등 지역업체 생산물품 사용에 협조해 줄 것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자가 최초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한지 등 한스타일 개념이 도입된 중저가 호텔 도입을 하겠다고 설명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성여관측은 우리시의 제안대로 한지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시공후에 확인한 결과 인근 전북지역인 지리산특산 제지에서 생산된 한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측에 전주한지가 아닌 지리산특산제지 한지를 구입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오래전부터 친분과 저렴한 가격때문에 시공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주한지의 산업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전주한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점검을 몇회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은 도에 지원과 함께 2007년 12월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2008년 5월에 정산 검사가 완료된 사업으로써 개인택시조합에서 정산보고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 성격상 개인별 주소지가 각각 다르고 독립된 운송사업 행위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로는 조합과 합동으로 2,278대에 대한 샘플링 조사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비게이션 설치후 개인택시 2,278명에 대한 서비스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태도가 다르겠고, 또 도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할 문제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니다만 일부 기사들은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여 친절하게 인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도록 조합으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각종 지부별 모임시와 운수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인데 네비게이션 부착으로 개인재산만 증액됐을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사업은 최근 고유가 및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 그리고 도시이미지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조에 의거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사업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도비 보조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일반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 인택시와 일반 법인택시와의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 그리고 운수업계 등과 함께 의회와 교통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영상저장장치등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백현규의원(완산·중화산1·2동)

▶ 식품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 중 국가 식

품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여건 활용과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농수산물, 축산물의 유통과 브랜드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3년 국비와 시비 1백70억원을 들여 전주 송천동 2가 일대 1만8천평 규모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 청과, 채소, 수산물 유통의 편의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1995년 전주 이마트 입점을 출발로 1998년에는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대형 업체등의 잇단 개점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 히나 금년에는 유가 상승 및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가 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도매시장의 운영이 위축되어지고, 시설의 노후화와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도매시장이 더욱 외면 당하면서 운영에 차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하진 시장은 2008년도에 노후된 시설부분 투자를 시점으로 외부시설인 지붕보수, 건물 외벽 도색과 전기시설 교체 및 도매시장 부지 정비와 내부시설인 정매장 내부 지붕 프레임 도장, 건물내부 도색, 냉동 가스시설, 냉동 고압액 배관교체, 간판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물류비 절감과 신선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신속한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매시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2008년도에 개선사업비 14억1200만 원을 지원, 낙후와 노화된 시설을 보완, 경제 희생의 원동력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전주시는 5대 주요 농산 생산품목인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선정 전주의 브랜드 상품으로 BUY 전주를 만들어 홍보와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워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민·관이 혼연 일체가 되어 낙후된 전북 농산물의 판매전략을 가일층 높이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전라북도의 중심인 우리 전주시는 전북 도민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지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우리 농민들의 침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현실은 문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산 농가는 약 20,000여 가구에서 한 우 230,413두, 돼지 1,245,973두를 키우고 있으며, 2006년에 소 32,413두, 돼지 1,251,925두를 도축하여 전라북도 일원에 공급하였으나 소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 유통의 침체와 파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축

산 시설의 완비와 유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통이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시스템화 되지 않아 소비자나 공급자 축산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는 약 616개의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날마다 도매시장이 없는 관계로 전주시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새벽같이 다니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에도 도축시설을 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유통의 시스템을 이룬다면 우리 전주의 제정과 축산 농가의 회생 및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식육점의 육류 도입이 개별적이고 원할치 못해 비용과 관리에 힘들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위생관리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구매를 전남이나 충청지방에서까지 가서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성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적이고 광우병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물류 유통에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주시의 지원 하에 현대화 및 활성화로 나가고 있는데도 전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전주시 지역 특성상 타 시도에 경쟁력이 열세여서 타 시도에서, 지금 급식업체나 이런데가 거의 납품을 타 시도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복숭아, 호박, 미나리, 배, 장미를 전주 5대 농산물로 지정하여 브랜드화 및 상품화하는데 있어 공급처 현황 및 확보는 어떠하며 홍보와 판매 전략을 어느정도 성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매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부분 지원을 하고 축산물 시장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축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원활한 유통과 상품가치를 높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주시의 5대 역동 사업 중 하나인 생물생명산업으로 기인하여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로 전주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에서 주관하 여 순창의 고추장, 고창의 복분자 등에 역할을 빼앗기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식품 연구소와 특화 사업의 발굴과 함께 축산 유통 시스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형성해 온 식품산업 관련업체와 기반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 명품을 개발하여,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 축산 가공, 유통의 상품화를 개발하여 전주 비빔밥과 함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지원방안은 있는지요?

현 대적인 도축시설과 가공 시설, 유통 센터를 통한 축산물의 유통으로 위축되어진 축산농가 회생과 우리 전주 시민은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격의 안정화 및 최고의 맛을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 다섯가지의 질문내용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식품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백현규 의원님께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93년에 개설된 이래로 내부적으로 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외부 환경적으로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의 경쟁적인 개점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이용객 감소와 거래량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후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 관계인들과 함께 시장현대화와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 결과 우선 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에 착수, 지난 2007년부터 2년간에 걸쳐 16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부지 아스콘포장, 건물외벽 도색, 공공화장실 정비, 수산동과 청과동 지붕보수 및 전기시설 교체, 냉장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매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방향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내부 도색과 간판정비 등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시설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생산자측에서는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직배송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로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측에서는 공공기관·병원·학교·급식소 등 대량소비처에 대한 납품가격이 인하되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 셋째로 도매시장 고객편의시설로는 농수산물 경매장에 고객용 카트를 비치하여 물건구입 후 고객차량까지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욕구와 웰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 선별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다양한 소비변화에 대응하고 파고라형 고객쉼터를 도매시장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도

매시 장 고객의 대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매시 장 고객용 홈페이지 개설로 고객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도매시장을 고객 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농수산물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농산물 공급능력상 한계를 갖는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지 못해 수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거나 감귤과 같이 지역의 기후와 토성상 한계로 생산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거래 물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농산물 중개상이 타 시도에서 구매를 하는 물량부족의 문제점과 생산자와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의 다양한 소비욕구와 웰빙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타 시도에서 구매하게 되는 품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적인 거래물량 확충을 위해 생산자가 보다 많은 물량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인 생산지 마케팅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으며, 거래물량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구매자의 섬세하고 다양한 품질욕구를 충족시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중개상과 소비자의 선호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주 5대농산물 공급처 현황 및 확보, 홍보와 판매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9년에 우리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고 품질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5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대응을 위해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 5대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여 판로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복숭아의 경우 473농가에서 연간 5천250톤, 배의 경우는 177농가에서 연간 4천50톤을 생산하여 생산량의 70%를 서울 가락동시장, 30%는 도매시장·전통시장·대형마트·직거래장터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배는 금년에 미국·러시아 등에 315톤 수출한 바 있고 미나리의 경우는 87농가에서 5천8백톤을 연간 생산하여 생산량의 70%는 서울 가락동시장, 30%는 도매시장과 광주·대전·성남·의정부 지역으로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호박의 경우는 120농가에서 3천8백톤을 연간 생산하여 생산량의 80%는 서울 가락동시장, 20% 도매시장과 수도권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장미의 경우는 17개 시설농가에서 1천880만 송이를 생산하여 생산량 전량을 서울 양재꽃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금년엔 일본, 러시아 등으로 12만5천송이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5대 농산물의 판로는 확충되어 있으나 문제는 품질고급화를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을 지금보다 더욱 높이는 게 관건인 바 이를 위한 홍보 및 고품질

판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을 통해 품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함은 물론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제품 신선도를 유지하고 5대 농산물별로 작목반간에 브랜드를 통합하는 등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입증된 5대 농산물을 특성화시켜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숭아와 배에 대해서는 과원 현대화와 제품 선별기 지원, 미나리의 경우는 하우스시설재배 지원과 자동포장기 지원, 호박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고 장미의 경우는 부직포와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수출 품목인 배와 장미에 대해선 수출 물류비 지원등 판로 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과 유통의 상품화 개발을 위한 축산물유통센터 설립검토와 우리지역 농축산물의 대형마트 납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도 같이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은 소비자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지역 축산물 가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식육포장 처리업소이며 이곳에서 고기를 등심·안심·양지 등 부위별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국거리용·구이용·찜용 등 용도별로 포장해서 우리지역 내 모든 정육점·음식점·단체 급식소 등의 최종 소비처로 유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37개소이며 그중 12개소만이 위생처리시설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아직 지정받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전제로 위생처리 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산물유통센터의 개념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과 같은 축산동을 건립하여 위생처리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소와 같은 축산물 중도매인을 집결 입점시킴으로써 중간물류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육점·음식점·단체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안·법상의 시설기준에 의거 부지 6천평과 건물 3천평이상 확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공영 축산물유통센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여부와 운영문제등 추진여부와 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Q 유영국의원(팔복·조촌·동산동)

▶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민선 4기 송하진 시장 출범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팔



복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공업지 역은 1966년 지정된 이후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전용공업지역등 팔복 1·2공단 지역은 공업용지로서 기반을 갖추었으나 그 외 반룡 등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내 비정형 주거가 형성되어 주거와 공업기능이 상호 상반되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은 이주를 권유하고 신규 시설물들은 홍보를 통해 건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큰 구상을 실현하는 포석을 짜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소규모 작업장, 고물상, 폐차장이 난립되어 있어 도로등 기반시설 정비 시 애로점이 많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실제 활용할 쓸모 있는 부지는 없는 아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된 시설물의 이전과 신규시설물의 제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팔복동 공업단지를 무공해 도시형 첨단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를 위배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청 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실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폐석면의 미세 먼지는 2km 까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며, 장애는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테크노 파크와 전주공고 옆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업체의 입주로 향후 전주시 기업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첨단단지 옆에 버젓이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근으로 들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업체 입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계속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꼬불꼬불 한 골목길,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산업폐기물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혜택의 소외, 교통의 소외에 주위 공장의 오염과 소음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제한으로 수십년째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토지 매매도 안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사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소음, 공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기업주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요?

만약 이 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된다면 필히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주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거주민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공업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건전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지만 본 지역은 난개발된 시설물들이 소규모로 군데 군데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연부락 주민들과 기업주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의 70%가 기업 환경에 불만족 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유는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거주민과의 마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90%가 주거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한 이유로 소음과 악취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연부락과 공업지역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두지역간 잦은 마찰로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부락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요?

이 곳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을 없애 주고 한편으로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북부권의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장님, 난개발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지만 자투리 땅을 합치면 넓기만 하건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면서 고민하셨던 시장님!

본 의원은 최근 팔복동 공업지역 일대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곳 팔복동 공업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개발을 제대로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

하고 그냥 두자니 전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아 마치 계곡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시의 문제점으로 과다보상비,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우려, 이주대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시대에 교통의 요지이며 주변에 혁신도시와 완주공단, 만성동 법조타운, 송천동 에코타운을 연결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의 요충지이지만 주변의 화려한 발전과는 반대로 점차 슬럼화 되어가서 종래는 전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한 현실 앞에 그 대안이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미비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유상, 반룡, 동곡, 학산 마을뿐만 아니라 새방초, 태평, 비석날 마을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구역의 14만㎡의 부지를 포함하여 저공해 친환경 기계부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구역은 전주천을 따라 길게 북쪽으로 이어져 있어 전망이 좋고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대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조성용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익금을 공업지역 거주민의 이주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하여 일부 세대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공업지역 거주민 668가구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구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서부 우회 도로에 인접해 있어 연구소, 기업지원 기능의 시설물이 포함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구역과 3구역의 개발은 높은 분양가로 사업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첫째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둘째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므로 2구역을 같이 묶어서 주공을 대상으로 시행자 확보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대안이 불충분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할 때 방법은 떠오를 것이며 그런 노력 없이 어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이 계획은 작게는 팔복동을 변혁하는 대형프로젝트 일 것이며 크게는 전주시를 바꾸는 대역사일 것이기

에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안에 대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히 말하건대 전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일에 적극적인 행동과 추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현상 문제점 대책순으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집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팔복동 공업지역은 도면과 같이 196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2년의 세월이 흘러 나왔습니다. 현재 아시는대로 휴비스 부분이 1공단 지역이고 이 부분이 2공단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추천대교가 되어있는데 인접지역에 13개 마을이 신북 1·2·3, 야전, 감수, 반룡 이부분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복동은 그간 60년대 말에는 25천명이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13천명밖에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빠져 나간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마만큼 팔복동 지역은 약 40여년간 개발에 뒤쳐져있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친환경 복합단지로 약 9만평,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사업 7만평이 하나로 마트 건너편입니다. 서부우회도로 편인데 이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3단계 사업으로 여기가 팔복초등학교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있는데 이 부분이 5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천억을 투자해서 주공과 협약체결을 해서 2012년도, 3단계까지 첨단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려는 PI센타가 여기에 있고 공무원 교육원이 이 부분에 있고 말씀드린 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업체가 바로 태평마을에 인접해 있고 전주 공고가 이 부분입니다. 불과 직선거리로 200m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상마을, 반룡마을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린대로 폐석면은 반경 2km까지 비산됨으로해서 인체에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전주시의 허가관청이 아니지마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1일날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기본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 개발구상이라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40년의 과거를 반성하지는 측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강구해서 이 개발을 난개발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세월을 보내왔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팔복동 지역은 본의원의 지역구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공단이 있는가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첨단산업단지
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최근 7월 21일날 폐석면을
비롯한 11개 업종의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환경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버젓이 서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입
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의 삶
의 애환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여
기에 해냈어요. 그러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
다. 시장님이 가서 살아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가 시가 허가관청
이 아니라고 해서 11개의 부서를 도시계획, 산림, 건
축, 문화재등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도 주민들
한테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없이 이상없다고 통보를 해주니 환경청에서
는 OK싸인이 난거죠. 이런 행정이 우리지역에서 벌
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내가 허가관청이 아니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업체가 와 있다는 것은 안될 일이고 또하나
13개 구역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
게 되면 이 부분에 첨단산업단지가 이자리에 들어오
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근에 있는 마을들이 13
개 마을들을 여기에 유상, 반룡, 이 부분 이 7개 마을
인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업체가 산재해 있
습니다. 정말 진안 마이산처럼 폐기물이 쌓여있어요.
그런 정도로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분
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4.5만평이 되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서 추천대교를 지나며는 송천동 신흥리
하고 팔복동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북지구를 비롯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
쪽이 일반공업지역인데 주거용지로 바뀌서, 땅값이
저렴합니다. 3,40만원대밖에 안되요. 그렇게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적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이고 덕촌마을에 노스케
스코크가 있습니다. 60여가구 살고있는데 여기에 악
취, 공해, 냄새를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표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다가 고 팔복동이 이제
부터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산만 타령하
지 말고 금후 대 책을 세워서, 더군다나 첨단 산업단
지가 조성되며는 여러가지로 풀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팔복동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정정해주신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현명
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40년이 다된 팔복동 공업지
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복동 공업지역의 자연마을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은 약 6백 2십만 2천㎡의 공업지역 중 1산업단
지 및 2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백 48만㎡
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첨단기계벤치단지 및 협
동화단지 등 11만 4천㎡를 산업용지로 개발하였습니
다. 최근 협동화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등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009년까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
단계 29만㎡와 2010년까지 2단계 23만 2천㎡, 2012년
까지 3단계 1백 81만 7천㎡ 등 약 2백33만7천㎡를 추
가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 라서, 그간 난개발된 공장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개
발 계획중인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시 새로 조성
된 단지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 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별 건축을 제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신
고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조정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계습
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하
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
체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바,
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들에게 해명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여의동 관내
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8
월 7일 전주시방환경청에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월초 허가청인 전주시방환경청으로
부터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현행 법규상 결격사유는 없으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신한 사실은 있
었습니다. 이 사안이 관련법령에서 의무화된 공청회
나 주민설명회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내부이중벽의 밀폐형 공장형태로 처리공정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덮개형 밀폐차량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전주시환경정청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관할 구청장도 허가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취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이전 대책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의 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으므로 공업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마을은 약 22만 5천㎡ 면적에 13개마을을 약 6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건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의 소요로 우리시 재정상 단기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2 단계 사업 완료후 분양실태를 지켜보며 추후 산업용지 부족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협동화단지 조성 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업지역이 자연마을 주민들과 입주공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1966년 2월 10일 6.2km로 지정하면서 일반공업지역(4.1km), 준공업지역(0.7km), 전용공업지역(1.4km)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결정 하였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산단, 2산단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인구가 많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장래 공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나 시 재정등 형편상 체계적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동 지역은 친환경 첨단산업권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1,2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업종은 소음 악취등 공해유발 업체는 엄격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업 위주로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진 입로 확장, 오· 폐수관 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보다 폭넓게 건축행위 및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을 서로 인접한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복동 제1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14만㎡에 약 415동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지가 및 다수의 건물로 인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산업단지와 경쟁력 상실로 수도권 등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3구역 또한 여건이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구역의 개발방법인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지 재개발은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김광수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 전주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팽창과정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외곽을 확장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왔던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화산택지, 효자택지, 아중택지,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천지구, 만성지구, 35사단이전부지 개발, 혁신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해 왔고 현재도 개발 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추진단을 두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전주 인구는 거의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지의 외연만 확장되면서 성냥갑처럼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발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 즉, 예전의 4대문 안쪽이 급속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대폭 이전하면 소위 6지구라고 하는 지역도 급속하게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문화도시를 재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은행로, 태조로, 남천교 개설 등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구도심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많은 내방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구도심, 소위 4대문안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버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달동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노송동이나, 태평동, 서학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동 일부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심정 지구, 학봉지구 등 14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국비 440억, 시비 440억원, 총 880억원을 투입해서 현지개발 방식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겨우 52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개년 사업중 4년째인 2009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겨우 합쳐서 222억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머지 3년동안 660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인 택지개발은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이를 막기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데 시장에서는 조합내부의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2012년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억원만 반영한 것을 보면서 과연 시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시가지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전주시민이고 그 사이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달동네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예정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완료 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위 현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개발 방식이라 함은 기존에 소로를, - 대개 6미터 소로 중심이죠. - 소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새로 신축 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소위 현지개발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슬

림화 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발방식이 단순히 도로계획선에 소로를 뚫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넷째, 전주시의 재정을 잘 관리해 오신 송하진 시장 덕택에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삼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광수 의원님께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세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현재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개발은 인구가 정해진 상황에서 구도심 공동화 및 이를 막기 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현상 및 도시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상주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택지개발된 사업지구는 서부신시까지 조성사업지구 외 23개소 1,185만 1천 평방미터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하가지구, 효자5지구이며, 개발예정지구는 만성 복합단지, 효천지구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과거에 우리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열망들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은 외부적으로 팽창하는 정책들을 계속 써 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외연적 확대는 당연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4기 이후에는 외연적인 팽창보다는 오히려 내재적인 발전, 충실화에 정책의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규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여 신규 택지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수요에 맞게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7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44개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44개소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6개소이고 조합원과의 원만한 협의로 조합설립은 4개소가 인가 되었으며, 이중 삼천주공2단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7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법률적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일부의 이해부족과 조합원간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구역에서 시공사를 내 정 하였으나,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지구도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참여 포기를 선언한 지구도 있으며, 또한 일부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제척을 원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척된 지역을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는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급속히 침체된 주택경기과 겹쳐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안 중 하나로 민원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위와 비대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조합원들의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함께 공개녹지, 도로확장 등 기부채납 부지면적보다 용적률 증가율이 낮아 사업성이 결여 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2009년 초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법 개정 등 건의를 통해 금년 6월 28일 이후부터 우리시에 권한이 부여되어 종전보다 4개월 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추진위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계획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소외된 지



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8개 지구에 902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완료 후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도 18개 지구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금년 6월 20일에 최종 구역지정 고시를 통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우선 토지매입에 주력하였고 도 로 · 주차장 ·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간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 상 다소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까지 총 88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 문제는 2008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후 소요예산 710억원은 균특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비의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시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채 등 빛도 많이 갠아서 재정형편이 나아졌는데 2, 3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획기적인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더욱이나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하여 부족 한 시비에 대하여는 가용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목표연도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세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김명지의원(우아1·호성동)

▶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요즘 전라북도 각종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제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회 내에도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이 송두리채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 품격 예술도시 조성이나 가장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등의 전주시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책들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하지 합니다. 이러 한 현상을 전주시장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여 밝은 전주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 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걷고 싶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 거리를 만들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오거리 문화광장, 도심주차장개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 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구)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등이 추진 중 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만 커가는 것 같아 쓸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 공동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난 개발 등으로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진 도심속의 버려진 땅을 업무와 주거, 레저, 쇼핑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도심의 과밀화와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미흡하기만한 공동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번창했던 덕진구 6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청이 떠난 구도청 도심은 이미 전주시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사례로 변해버렸고, 제2의 공동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6지구입니다.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전북대학병원, KBS전주방송총국 등이 자리잡고 있는 6지구는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

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복채신청 등이 등지를 틀고 전주에서 가장 내실있는 행정타운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이 도 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텅텅 비어가는 흉물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보훈지청 전북지부, 전주세무서는 이미 전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 전복채신청, KBS전주방송총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 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전주사무소, 완주군청 등은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 기관들과 함께 했던 소규모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먹고 살길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하는 겁니까? 전주시는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 택지개발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주시나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인구유입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하나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5,6곳의 도심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 어낼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름한 외형보다는 약자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 칠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소식에 의하면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시지가 10억 원대도 안 되는 현 주택공사 전북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릇 공사라하면 일정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공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위기를 탈출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피주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어찌 하여 살피주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명분 과 원칙을 세워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전 서신동 대한방직 내 공유지를 도유재산으로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

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도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나 편의시설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비하면 그동안 6지구에 위치해 있던 각종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신사옥들을 건립해 하나 둘 이전을 완료하는 현시점이 도래하도 록 전주시는 무슨 대책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이전에 가는 새 건물을 보아도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대폭 갖춘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 주택공사 전북본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 금껏 공공기관의 혜택이라고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의 돈벌이 정도였던 6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야 하는 겁니까? 복지혜택, 문화혜택은 커녕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6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 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각종 공사나 기관 이름을 붙인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말로만 펼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도심의 활력을 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속되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의원님께서서는 도심공동화 현상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과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전반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지구에 위치한 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대응 및 활용방안, 영세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 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전주를 발전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 었으나, 도시의 외형을 확대하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전주만의 특성을 잃고 천년전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도시면적의 공간적 한계로 도시의 외연 확대



정책에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전주발전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에는 전주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기관들로 인해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바와 같이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6지구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의 경우 2011년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대학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중에 있고, 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이전 완료예정이며, 토지공사, 채신청 및 농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정책적 대응으로 활력 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심기능을 창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중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조기에 수립하여 민선 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청 등 6지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주변지역의 상권 및 주거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북대 및 의과대학등 인근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는 구청사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동화 대책 없는 기관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민관 협의체를 이전 공공기관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대비책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 이전청사는 해당기관에서 타 기관을 유지할 계획에 있어 빈 건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만약 빈 건물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과감하게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6지구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

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부의 활력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급을 실무진으로 하는 도심공동화 대책 T/F 팀을 구성하여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이미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전주발전을 위해서 5대 권역별 특성화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았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심부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상주인구 및 사업체수가 10%이상 감소한 지역은 중앙동, 풍남동 등의 도심과 도심주변의 금암, 덕진, 인후동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도심 상업지역과 주변의 노후·불량 지역으로 상주인구의 감소와 상업·업무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는 중앙동·풍남동·노송동·동서학동·서서학동 등 남부도심권역, 덕진동·금암1·2동, 송천1·2동 등 북부도심권역과 팔달로 권역, 6지구가 포함된 백제로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라감영 복원 등 다수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12월중에 마련하고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전문가 토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부터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팀 신설까지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관련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책협의회, 도심기능 대책 협의회 등 민간협의체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재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재생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사업구상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서윤근의원 (인후1·3·우아2동)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5년전 대부료 30억 1천원으로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던 업체가 그간 33억 9천4백만 원의 대부료를 체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몇 년간 위탁주체인 전주시와 수탁업체였던 월드컵개발간에는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어졌고 결국 전주시민들은 강제집행이라는 쓸쓸한 결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

간위탁사업은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줄을 서있는 월드컵 예식장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 주시가 받은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목표였던 시설위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은 고사하고 그간 업체와의 다툼 속에 낭비되어진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전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 후유증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수탁업체들의 물 양식적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수익의 극대화만을 쫓으며 합리적·공익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조급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전주시의 모습들은 문제의 본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은 지나간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간지에서의 표현처럼 전주시의 시설운영 방안을 놓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다시 침착한 평가와 판단력과 방향설정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자꾸 옛일만을 타령처럼 반복하며 소모적 평가를 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구호와 정신무장으로 발 빠르게 접수하고 밀고나가는 모양새가 자꾸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기능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추구의 덫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로써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전주시의 발주를 통하여 2007년 8월 제출되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개요설명에서 타당성검토가 경제성,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홈페이지나 2008년도 경영계획서를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며, 동물원 휴게실 위탁동의안에서도 구체적 수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의 소위 나비골프장 설치계획도 역시 수지타산을 앞세운 시설보강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시

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여론과의 충돌도 이러한 인식과 방향의 기저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물겠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를 갖춘 법인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자기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전후로 하여 대 시민 메시지 한번 없이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위탁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명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단을 통한 골프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직접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서울 월드컵경기장내의 노을공원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이후 9개월 규모로 조성했던 난지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올해 11월 1일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당시 하루 187명이 이용하던 이곳은 지금은 12배가 늘어난 하루평균 2,286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생태공원화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그 넓은 공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주시의 문화소비욕구와 문화생산전력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3개월 일부만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한 전주시의 시책사업인 컨벤션센터를 골프장 부지 한 편에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관계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내용은 전주시의 강제집행 이후 곧바로 골프장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가나 여론수렴의 과정과 행위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골 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제정과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시 6개 분야 19개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 기재되었기에 의회의 동의 를 득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안전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결산 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공단조례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고 공단이 출범 한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떤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 님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인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 아래쪽 아중천 복개종점부터 소양천 합 류부까지 2,88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한 부분 개통된 아중천 둔치의 산책로는 벌써 주민 들의 휴식과 운동욕구를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 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적극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 계 공무원들께 우리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지적되고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없 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제출된 예술도시 국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아중천 사업에 대 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인 아중 천 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시행, 둘째로 재해사 전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아중천 조성사업은 몇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으 며 그 중 제일은 수질개선으로 표현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하천의 절대 필요조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의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 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대어린 시각으로 팀의 활동과 용역의 결 과, 그리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의 마련과 그 궁극 적 성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막연한 그 시점까지 바짝 말라버린 아중천을 지켜보고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중천은 생태도 없고 하천도 아닌 죽어가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한번씩 올 때면 그나마 썩어가던 하천바닥 이 조금씩 정화될 뿐 현재의 아중저수지 독에 막힌 아중천 중·하류는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실입니다.

수질개선 이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천 이 있고 생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아중천 주변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상황 타개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 과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 시피 노송천을 흐르게 될 물의 대부분은 아중저수지 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며, 이미 아 중저수지의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하루에만 6천5백톤의 물을 저수지에서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로 아중저수지는 1.2미터 높이의 가동보가 세워질 예정이고 현재는 바 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전주시의 노 송천 복원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중저수지가 조성되었던 원래 취지인 농업 용수의 안정적 확보의 보장이며, 둘째는 아중저수지 의 수원이기도 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중저수지와 아중천을 끼며 살 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노송천 복원사 업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노송천을 들춰내 다시 살리기 위하여 현재 살아있는 아중천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방향을 설정 해 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의 최우선 가치는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민 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있으며, 결코 이익의 극대 화 또는 사업행위가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성격을 갖고 설립된 공단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와 함 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 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은 경장경비의 5할 이상을 경장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책임 경영의 의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민편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 독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골프장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문화 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골프장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7월 결정된 사안으로 민간위탁이 당초 의도했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해 처음부터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고 보통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성공한 위탁시설로 보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등 끈질긴 쟁송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월드컵골프장의 유지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공단으로 하여금 당연히 공단의 업무로서 빠르고 슬기롭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잔여재산 정리와 잔디 등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사랑받는 대중 골프장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공문화 방안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업무로 전주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그리고 장묘시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등 6개분야 19개 시설과 사업을 확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시설별 개별 위탁동의안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11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의 의회 의결시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재된 체육시설, 주차시설, 장묘시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청소년 임대시설, 덕진공원 등의 사업은 최초 조례 제정으로서 당시에 조례제안서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결로서 이미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후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컵골프장의 경우도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동의를 받아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은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관련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중천의 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먼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46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복개종점에서 소양천까지 2.9km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양안 에 5.4k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호안 자연식생기와 교량 2기 및 운동시설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과는 별도로 시비 3억원을 투입해서 운동 시설과 초화류 식재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아름다운 아중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소재인 점토블럭으로 2.5k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의자·진입계단의 편의시설과 허리돌리기 및 족구장 등의 운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 제공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촌천, 조정천 등과 같이 상류 지역이 저수지로 되어있는 모든 하천이 그러하듯이 본 아중천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강우시에만 여수도를 월류하여 아중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시에서는 아중천 뿐만 아니라 노승천 복원에 따른 장기적인 용수 확보 등을 포함한 물 문제 전반에 대한 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등 전문가와 협의하고 물 관리 종합대책 TF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1월 19일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는 물론, 수질개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므로써 미래의 물 관리 정책방향과 지표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아중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물이 없는 하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풍부한 하천 유지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추진 중인 노송천의 유지수는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30일 공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담수량은 91만톤이나 가동보 1.2m 증고시 약 36만톤이 증가되며, 1987년에서 2006년까지 20년간 강우 자료를 이용해서 장기유출 분석한 결과 연간 자연담수량은 724만톤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용수 확보 방안으로 아중저수지 준설, 제전저수지 여수로 1m 증고, 신규 암반관정 개발 등으로 연간 130만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총 자연저수량은 854만톤으로 판단이 됩니다.

188ha에 소요되는 농업용수 공급 157만톤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저수지 중발량 27만톤, 여수로 유출량 319만톤, 노송천에 221만톤을 공급하고 아중천에도 13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기철 및 심야시간대등은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차원에서 농업용수 한계수위 관측이 가능한 표지판을 앞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설치해서 누구라도 쉽게 확인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송천의 유지용수량은 1일 7,000톤 정도로 이 중 아중저수지에서 6,500톤, 노송천 자체에서 500톤을 공급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는 아중지역 택지개발에 따라 물리면적이 288ha에서 188ha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수적으로 안전한 1.2m 높이의 가동보 설치로 확보될 여유량을 노송천에 공급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수지 유지관리 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도 1967년에서 2006년까지 40년간의 강우자료를 분석해서 여수로에 가동보 1.2m 설치시 1일 6,500톤 수량확보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노송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여유용수의 확보를 위해 아중저수지 준설, 저수지상류에 대형 관정 5공 개발과 제전저수지 가동보 설치 등으

로 1일 3,500톤 가량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아중천에도 공급할 계획에 있어 아중천에 흐르는 유지용수의 양은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천 유지용수는 노송천, 아중천 뿐만 아니라 건산천, 전주천 등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서 가능한 많은 유지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현재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는 바, 본 용역에서 소양천, 만경강을 활용한 용수확보 방안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물 부족 현상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관심과 조언을 통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Q 유영국의원 (팔복·조촌·동산동)

▶ 푸른도시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300만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부 계획은 146개의 공원조성,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확충과 정비, 도시 벽면 녹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표1>과 같이 교목과 관목을 합쳐 총 12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식재비로 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2만 그루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8개소 포함 135개를 조성하였고,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도시벽면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푸른 도시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며, 부대효과로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도시 조성사업과 아트폴리스 사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는 공공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는 총체적인 도시경관이며 구성요소(건물, 도로, 조성물)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 관리 원칙을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방향은 전주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 계획 (vernacular landscape planning)과 생태경관계

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은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하에서 일관 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비전인 역사전통의 도시, 녹색의 도시가 결합된 최종적인 목표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아트폴리스 정책의 대전제 하에 조성 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조사되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전주천과 삼천천, 7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보존하고 공원화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오송제, 지시제 등은 도로 인접성이 좋고 식물 종이 다양하여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수변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2005년 전면 개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하면 수변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공원 체계에 의한 공원 분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남 보성군, 화성군, 송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주암호를 개발하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서재필 박사 기념공원, 고인돌 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 시내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는 장미축제로 유명한 대구 월광 수변공원, 코스모스길이 장관인 울산 선암 수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분포한 전주객사, 남고산성을 비롯한 31개의 문화 유적을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과 결합하여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 유적 이외에도 지명에 대한 연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았다는 노송동과 송천동, 감나무골, 명주골 그리고 한옥 마을내의 은행나무길 외에도 지명을 조사하여 가로수 조성시에 특화된 계획으로 심어서 전통성을 살린 명물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덕수궁의 돌담길을 비롯하여 충주시에는 사과나무 거리가 있고 서울 산수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산물인 사과에 착안하여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써 청주사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수동거리는 특정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옆으로 늘어선 잡화 상점들과 걷기 좋은 가로수길이 결합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물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창조적 착상을 통해 조건을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트폴리스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에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서 전주만이 갖는 특징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진입로, 노송광장, 시청~아중리의 느티나무길 이 모두가 어느 차지단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의 전주만의 특징적인 컨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선택과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6조에 은행나무·느티나무·벚나무·이팝나무·단풍나무의 5종을 주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매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인위적 피해에 회생 능력이 강한 나무,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식재한 128만 그루는 위에서 언급한 수종 외에 특별한 수종이 없는 무난한 나무 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의 특화된 계획이 없거나 조정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나무 심는 숫자에만 급급하다보니 특색 없는 녹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배치시에는 도심지, 교외지, 강변로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공단지역, 관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수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단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면, 열섬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플라타너스를, 상업지역은 수형이 아름답고 아담한 수종을 심는다면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수종의 선택과 배치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청주시 진입로 플라타너스길입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평천 죽전교까지 4.4km 구간 에 걸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주시 진입로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진입로 가로수길은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주종 외에도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특정 지역에는 특정 수종을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이란 그린벨트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을 합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을 말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약수를 뜨고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택가 뒷산, 공원에 조성한 숲, 건물 앞에 조성한 녹지, 심지어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수까지 모두 도시 숲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에는 아직 부족하나 전주시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58개 도심 내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공유지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총연장 700Km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사유지 중 유휴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하의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 유휴지의 총 면적과 즉시 도시숲으로 활용가능 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과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세부 계획을 갖고 있는 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재된 수목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생명력 속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수목에 대한 관리는 3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양구청 건설과, 공원 수목은 양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서별 개별 관리는 업무의 중복과 관리의 비효율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및 서부신시까지 조성 등으로 녹지량이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 어지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앞 다퉈 예산 및 인력 증강으로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3배 이상 증 원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녹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명실공히 도심 녹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발돋

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목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주시만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목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거나 도시숲별·일정구간의 가로수별로 섹터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지적인 계획만 세워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될 것이 아니라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습득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 조직 체계에서는 시청과 구청 간 업무 중복 및 일관성 부재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전주시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사업소와 같은 일관된 지휘 체계를 갖추어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 1인 1평 갖기운동은 2010년까지 1인 2.5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30억원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서울의 뚝심 35만평이 그린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한때는 최고의 우범지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범 지대를 뉴욕의 대표적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 연간 2,000만 달러의 관리비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가꾸는 것도 전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유지 중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역사가 살



아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서 전주시의 비전이 일관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 협약 대응 문제와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시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와 정성을 결집한 답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푸른도시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유영국 의원님께서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으로 수종의 선택과 관리, 그리고 시민의 참여방안까지 고견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아트폴리스 정책과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전주만의 특징이 없다 하시면서 컨셉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트폴리스 전주를 구현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폴리스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5개 경관 축인 관문·역사축, 하천축, 환상녹지 축, 신·구 조화축, 서부 신시가지축과,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 정책과 연관된 사례로는 새로 재조성한 한옥마을 내 은행나무 길에 한옥마을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한옥 지붕 라인을 가리지 않는 키 작은 나무 위주로 식재하였고, 은행나무 길은 기존 녹지경계선의 획일적인 직선에서 탈피하여 보다 정겹고 자연스런 곡선으로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조경시설물로 벽천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게 경관 연출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곰솔나무길 경관자원을 특화 시킬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식재 수종을 조형곰솔로 선정하여 특화된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기본 방침으로 도심 내 전통문화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과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급년부터 시행단계에 있어,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흡하나 점진적으로 경관 축의 개념

과 원칙 속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시 전주 지역에 맞는 향토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도시공원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우리고장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특징을 살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명시된 가로수 수종 이외에 전주시만의 특성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로수 수종 선택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노선과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 주고 있고, 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은행 등 5종 이외에도 특색 있는 거리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남동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곰솔나무길에는 곰솔나무를 식재 중에 있으며, 또한, 현 반월동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아름다운 길들은 더 특색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 길도 필요하다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 각 구간의 특성 및 도시경관을 더욱 미화 시킬 수 있는 수목으로 수종갱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권역별·노선별·구간별 도시공간 구조 및 지역의 특성에 합당한 특색 있는 수종이 식재 될 수 있도록 단 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하여 기존 가로수종 생육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토질에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이 없는 유흥지의 총면적과 도시숲으로 활용가능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후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계획에 유흥지를 포함 추진할 의향과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결과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담장 없애기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300만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도로와, 폐천부지, 보행자 전용도로, 교통섬, 200㎡ 이상의 사유지 및 공한지 등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중 무단점유로 사용중인 토지를 포함한 유흥지는 196필지 18,075㎡로 대부분 100㎡이하의 면적이나 의원님이 제언 하신대로 토지와 주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녹지공간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09년도에 전주시에 배정된 균특예산 전체 72억원중 30%인 20억원 을 반영함과 함께 도비



4억, 시비 16억원을 부담하는 등 총40억원으로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급한 사업대상이 발생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 부담액을 늘려서 성공적인 푸른도시가 가꾸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번째, 수목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 관리지침 수립, 수목별 이력카드, 섹터별 관리가드 작성등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의향과 관리예산 추가반영등 녹지관리체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녹지분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보강을 통한 사업소로의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2차년도인 현시점에서 볼 때 점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122%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재위주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서 2008년 10월에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시산하의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추진중인 전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과 병행해서 DB구축을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한국적인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조성은 물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술도시국을 신설하였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푸른도시조성 관련 소관 업무의 범위는 본청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녹지 조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 구청은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과 중요도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현재 조직관리상 인력 및 사업소 설치의 사업의 진도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만들기 사업에 민·관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여름철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은 당연한 것이며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시민단체 14명, 전문가 12명, 기업체 9명, 언론 5명, 교육기관 4명, 시의원 6명, 공무원 6명 등 총60명

으로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2월 27일 창립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도심속의 시민숲 조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4건의 우수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직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화동 관내 국도변 왕복 4km 무궁화 1,000주를 심어 무궁화길을 만들고, 평화주공 그린타운 2단지 진입로 1,200m에 자생화 꽃나무 식수를하여 아파트 숲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인후동 통학로 1,000m에 소나무 등 들꽃마당 조성사업을 하였고, 푸른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주수목원에서 시민과 학생 2,000명이 참여하는 들꽃체험학교와 우리마을 푸른숲 체험학교를 운영하는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 7월에 사단법인 푸른전주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민간차원에서 도시숲 만들기를 위한 시민헌금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생기념·돌·입학·개업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월 11일을 숲의 날로 지정해서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민·관·어린이 등 300명이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나무 300그루를 식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도시 숲 만들기를 가꾸어나가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확대해서 활발 하게 전개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하여 건설된 경기장입니다. 공사비만도 당시 1157억원이 소요된 전주의 자랑이요, 전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수려함은 전주문화의 자랑인 전통의 합죽선과 희망의 솟대를 본뜬 설계로 전주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건축미의 극치를 이룬 작품중에 작품입니다. 합죽선은 세상을 향한 자아의 표출이고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벗이며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유선은 인생의 평이한 삶을 상징하고 있으며 펼쳐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편익의 문제도 있지만 파란만 장한 인생역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사람이 들면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화가가 들면 훌륭한 화폭이 되기도 합니다. 소리꾼이 들면 득음의 경지에서 오장육부를 틀어 토해내어 인간과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천상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네 기둥은 솟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솟대는 정월대보름에 마을 어귀에 내걸어 복을 부르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

장은 전주로 들어오는 나들목에 떡 버티고 서서 전주 시민의 삶의 희망을 말하는 합죽선과 솟대 의 뜻을 담아 부귀영화가 창만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전주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하면 시민의 믿음직한 희망과 휴식공간을 주었는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커녕 근심거리로 전락하여 버린 것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절망을 넘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나 송하진 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죠. 차마 내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월드컵경기장의 임대에 대한 계획과 계약이 이미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란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허술한 관리 계약으로 인한 피해(弊害)가 민선 4기 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질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전주시 공직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일련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은 어떤 시설물인가. 월드컵 경기장은 총면적 56만 2929㎡ (170,286평) 건축면적 5만 2249㎡ (15,805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수용규모는 4만 2477석 주차장은 4008대로 설계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직경이 3m, 높이 60M의 거대한 네 개의 솟대를 상징하는 기둥이와 이어프로 연결되어 마치 가야금의 현과 같이 균형을 이루며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상부에서 자연적 진동을 완충시키기 위하여 75cm가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으며 초속 35m 강풍에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움직이며 이 움직이는 수치는 시뮬법에 의한 안전물 계측장비가 설치되게끔 정밀하게 계측되어 전산처리 분석 관리자에게 통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 된다면 휴대폰으로 그 이상을 알리는 최첨단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시설문제를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정리하여 놓은 홍보관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구에는 유희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전주의 풍요를 기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은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으로써 흔쾌히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집행부 여러 분! 역사의 기록은 현재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사실적 기록과 정확한 객관적 입장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애시 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가 문제라면 애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경기라는 역사

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주에서 월드컵이 열렸다는 것은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경기가 열린 월드컵경기장 건물은 영구적으로 전주의 역사와 함께 이어가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만약 월드컵경기장의 역사적 보존을 소홀히 하여 경기장이 훼손되거나 손상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중대한 직무소홀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 대한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오늘의 월드컵경기장 운용과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관리예산의 적자를 이유로 시작한 수익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니 급기야는 법원으로 달려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시정이 이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골프장에 대하여 강제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전주시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골프장이 명도집행되자 여기에 투자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도를 분석하여 판단하기로 월드컵경기장 위탁자가 모집한 투자자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은 전주시에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거론한다면 그 답은 입장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우나 임대료 채납 3억원, 예식장 임대료 20억 4000만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주시민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월드컵경기장을 이르러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게 설계된 건축물이 비록 인공건축물이지만 천박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것은 예술의 혼을 담아서 아름다울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감히 수려함이 고요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려한 경기장 이 지금 관리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네 개의 기둥 관리하는 경기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기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장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력기간별 최대 최소 평균치 기록 자료를 일 년 중 단 8일을 선정하여 자료 요청 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중에 8일을 요청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문 입구에 그려져 있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무지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합판으로 가려져 버렸고 불쌍사나운 페이트칠로 덮여 버렸습니다. 무지해도 유만분수이지 이 정도면 가히 무지의 무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의 건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전시되어 있던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경관리 문제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수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 드렸습시다만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지 시민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나무와 공원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인공 건축물은 수목과 어울려야만이 그가 치가 중대되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월드컵경기장의 수목관리는 어쨌느냐, 거액을 들여 심어놓은 소나무는 고사되어 죽음의 화신인양 그루터기만 흙물로 남아 있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보조목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철사줄은 소나무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인간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갈 것입니다. 소나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처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 소름끼치는 신음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어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수려한 야간경관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의 강 제명도집행 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처리정책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월드컵 경기장의 추후 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변형시켜 버린 동문입구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영원한 전주의 영광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분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달하는 중차대한 홍보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본 의원은 복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우리 시민이 잘 알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의 관문이고 전주의 야간경관에 중대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바 넓은 주차장에 태양열 발전 시설을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한 야간경관 시설을 하

여 전력의 절약과 아름다운 경관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고사 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보식하고 보호를 위한 보호목과 철사등의 제거와 관리 체계를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경기장건물 스탠드 아래에는 약 5300m²(16.00여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품센터를 만들어, 예를 들어 비빔밥을 홍보하는 코너라든지를 만들어 주차장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전주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국내 경기보다는 국제경기기에 적합하게 지어 졌고 또 앞으로 도 국제경기를 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는 바 지금까지 국제경기(A매치)를 한 건은 얼마이며 앞으로 유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월드컵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먼저, 월드컵골프장에 대해 강제 건물명도 소송 집행 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강제집행된 월드컵골프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마치고 운영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주)월드컵개발에서 위탁받아 2005년 4월부터 2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시설이었습니다. 당초 체결된 30억 1천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화해 조정 결정을 받아 결국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월드컵골프장의 시설물을 인도 받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후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월드컵개발 측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클럽하우스 내 골프용품점과 매점 그리고 락카룸 등 지상권에 대한 사유재산의 민원에 대하여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 중에 있으며, 추가 건물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주)월드컵개발 추정상 6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000여명 정도의 투자자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소송제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투자한 선의의 시민이 있다면 안타까운 면이 있으나 다만 이는 월드컵개발과 사인간의 당사자끼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한 대책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통해 소중한 전주시의 재산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영업을 중단한 사우나의 경우는 금년 1월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우나 대표가 구속수감 되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12월 3일 대부계약을 해지하였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자진 명도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2009년 1월 중에 명도 집행을 단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영업 중인 예식장의 경우는, 당 초 2004년 10월부터 대부기간이 산정되었으나, 각종 공사비(수도, 가스, 전기 인입 공사, 누수 공사 등)의 자기 부담 문제와 영업기간의 지연 등을 이유로 2008년 11월 27일 대부기간 연장 및 대부로 감액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채납 대부로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납부를 독려한 결과 지난 12월 4일 5000만원을 납부하고 매주 3000~5000만 원을 화해 조정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화해조정 결과와 대부로 납부 약속의 성실 이행 상태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경기장의 추후 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의 수입은, 전북 현대 프로축구단과 축구 동호인들의 주·보조 경기장 사용료,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등의 임대수입, 여유 공간의 사무실 임대 수입과 만남의 광장 등 야외 공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의 경우 지난 10월 30일 명도 집행을 이후 정상운영시까지, 잔디 훼손 및 시설물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직영 여부 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골프장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식장과 사우나의 경우는, 사법부의 화해조정결과와 예식장 측의 납부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우선 시의회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스포츠 또는 문화 관련 시설 등 업종전환 방안 등을 포함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변형시켜버린 동문입구 타일그래픽 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입구 상단에 설치된 타일 그래픽은 2002 월드컵 경기후 노후가 진행 되어 드디어는 2006년 말경에 타일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면서 떨어져나가는 등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월드컵경기장이라는 특성과 작가의 작품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일부 보수를 통한 작품 복원을 작가와 협의한 결과 그림타일의 특성상 작품의 일부를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어쩔 수 없이 철거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시 복원 여부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관은 현 예식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02월드컵 이후 홍보관 이용율이 저조하고, 예식장 수익사업으로 인해 2004년도에 철거하였습니다. 당시 전시된 물품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서측 로비에 홍보관 물품 일부를 비치하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 홍보물이 일부 존치되고 있는 경기장 서측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보완 시설 등을 통해 2002 한·일월드컵의 영광을 보존하고, 전북의 축구 문화의 역사와 발전상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태양열 발전시설을 만들어 이 전기로 전력의 절약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명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이미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투자비 용에 비해 절감비용이 낮고 회수기간이 긴 단점이 있고, 경기장의 여건상 태양광 집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종합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용전 력 80kw를 얻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지원금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설치자 투자비용만 3억원이 소요되나,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약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금 회수하는 데만 약 4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는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수선 등 유지 관리비용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술력 향상과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고사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보식하고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조성 당시 전부 논의였던 부지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수불량등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생육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보식 및 생육불량목 교체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목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중으로 대형 소나무 지주목을 해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의 수목 생육 여건 개



선을 위해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드컵경기장의 토양 환경에 적합한 대체 수종을, 전문가와 협의 선정하여 수목을 보식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식재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만큼, 최근 수립한 수목관리 지침에 근거 2009년부터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장 건물 스탠드 아래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품센터를 만들어 전주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도 개선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스탠드 하단 일부는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부된 상태이고, 말씀하신 건물 스탠드 아래 부분은 실내주차장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식품센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내내부 면적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식품센터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장은 국제경기에 적합한 시설로 국제경기 실적과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 전용구장으로 전주의 자랑스런 훌륭한 시설물입니다. 2001년 12월 월드컵축구경기장 준공 이래 2002 한·일월드컵 3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후, 그간 국제경기 행사는 매년 1회 정도씩 치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피스컵대회, 2004년 AFC 챔피언스리그, 2005년 남·북한 남·여 축구대표팀이 한판 승부를 벌인 2005 동아시아 축구대회와,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추계 한국중학교 축구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크고작은 전국대회 및 동호인 클럽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 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 홈구장으로 사용되면서 매년 K리그전 약 20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유치비용에 대한 경제적효과 등을 냉철히 평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의 실익이 있는 국제대회에 한해 적극 유치하여,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월드컵경기장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해 개선책 등 방향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오현숙의원 (비례대표)

▶ 성 산업 축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산업 축소를 위

한 전주시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어 4년이 경과된 지금 전주시에는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업형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과 선화촌, 중화산동과 아중리에 있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 집결지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수가 중화산동 168개소, 아중리 18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는 성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매매 영업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 본 의원은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는 문제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면적이 253만 5846㎡이고 이중 상업지역은 20만 4032㎡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2개 블록 28필지인 9272㎡가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인텔은 업주 없이 손님이 직접 돈을 내고 들어가 숙박할 수 있어 이점을 악용한 숙박시설이 생겨나면서, 그 주위에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가 함께 들어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중화산동과 아중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사회개발 전공 이성우 부교수 등은 2006년 서울시연구 6월호에 실린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 증가하면 총 범죄는 1.1% 감소했고, 주택 연상면적이 1% 늘 때마다 총 범죄는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숙박, 유흥업소 면적이 1% 증가할 경우 총 범죄가 2.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 및 위락시설 2개 블록 28필지에 한하여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아중리와 중화산동 보다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262%~685% 적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소로 및 중로 변으로 하고 층수도 5층이 하로 제한하여 간선도로에서 시각적으로 차단되도록 계획하였고, 현재는 주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아 부각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을 선미촌집결지 폐쇄에만 국한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한 폐쇄에 대해서 지난 제24회 회기중 구성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개발을 통한 집결지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성매매 업소의 폐쇄시마다 개별 매입이나 전, 월세 임대로 시민단체들의 이용시설로 활용하게 하여 점차적으로 폐쇄를 늘려가겠다는 것인데 이마저

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매매 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의 사업 연계성에 문제입니다. 성매매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된 부서는 가로교통과, 식품위생법은 환경위생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보건소,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자활에 관한 부서는 여성정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숙박업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부서의 특성에만 맞추다보니 행정처분 등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일관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매매 방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더 축소된 문제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2004년 성매매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의 공무원과 교육청, 경찰서, 법조인, 관련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기능은 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내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연 2회의 정례회와 수시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나 2008년 10월 15일 아동 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출범하면서 해체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는 여성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어 이전보다 기구가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표현물과 성산업과 관련된 업소들이 넘쳐나고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판매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시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것에 강력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똑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이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게을리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망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올 것을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품격 도시 아트폴리스 전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서부신시가지에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들어서고 있어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성산업 축소를 위해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선미촌의 폐쇄로 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업 축소와

관련된 전주시의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성매매 업소의 축소를 위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여 업소 폐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여성아동보호 전주시연대가 출범하였지만 성산업 축소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성 산업 축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는 성 산업 축소 방안에 대하여 거시적 차원의 분석을 통한 전주시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 등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아중·화산지구등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상업지역 대부분이 숙박 및 위락시설로 건축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전체 개발면적 253만 5000㎡중 상업용지가 8%인 20만 4000㎡이고, 이중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2개 블록 28개 필지 9272㎡로 전체면적 대비 0.36%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초기에 숙박업소 등이 시설됨으로써 염려스럽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면적외에는 더 이상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개발사업시 전국적인 추세도 이러한 시설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만성복합단지, 에코타운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을 최대한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된 숙박업소는, 사전 전주시교육청의 환경정화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가 없을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관할구청에 신고 수리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 및 위락시설은 금년 10월과 11월 각 1개소씩 2개 숙박업소가 신고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고 수리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



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는 즉시 행정처분과 고발등을 병행함으로써 성산업 업소로 전락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미촌 폐쇄와 별도로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결지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과 관련, 2006년도부터 성 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90명에 달하는 여성이 탈 업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선미촌내 토지, 건물, 업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2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법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우리 시청 및 도심 주변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선미촌 재개발 특별지원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요 거점지역 우선매입을 통하여 선미촌 정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부지매입을 통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집결지 폐쇄까지 연계·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결지 폐쇄만이 아니라 성산 업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관련 시민단체와 집결지사업수행기관,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통하여 성매매 방지 의식에 대한 계도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홍미영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 17 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여성인권단체들로부터 재상정 움직임이 있어,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 계도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산업관련 행정처분이 가능한 여러 부서를 총 망라한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부서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서가 각 분야별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실적은 전체 153건으로 옥외광고물관련 100여건, 위생업소 미성년자 고용위반 등 53건 등이 있으며, 안마시술소의 경우 단속 기간에만 임시방편으로 옥조 시설을 폐쇄조치 하던 것을 강력한 폐쇄조치를 통해 재사용을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관련 위법사실 적발 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매매집결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하여 모두 허가취소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 산업은 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통합적인 조직이나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나,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점검대상 및 목표설정과 단속실적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성 산업 축소를 위한 행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도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구의 별도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15일자로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경찰, 의료기관, 교육청, 여성관련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여성부의 세부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위원회 신설 억제 방침에 맞추어 성매매방지 협의체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아동유괴·성폭력·가정폭력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내에 성매매방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집결지사업과 관련한 성매매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출범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고, 성매매방지소 위원회를 상시 운용,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능중복폐단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대하여도 관련단체와 전문가 및 관련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국주영은의원 (송천1·2동)

▶ 민생경제 대책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

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긴급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문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는 성장이고 민생은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기틀을 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주시와 시장의 노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 207개, 탄소밸리 공장 유치, 바이전주 업체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방향을 오로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더욱 어려워지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의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하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양산되어 소비가 줄고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공급과잉으로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되고 하위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 시민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 동향의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절대값이 0~200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지수가 80~12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는

2008년 3/4분기 현재 생활 형편을 71p, 현재 경기 판단을 39p로 우리지역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114p)와 의료비(116p) 등 고정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고정 지출이 아닌 외식비(77p)와 여행비(75p)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잘 나타 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 민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명(47.9%)으로, 전체 노동자 16,104천명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 3」을 보면 비정규직 종사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총 비정규직 840만명 중 460만명으로, 비정규직 54.9%가 영세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감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26만명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당장 전주시의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오히려 임금 격차가 0.2% 더 벌어져 차별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울산 북구청 산하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올 해 들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안산시, 성남시 등에는 민간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산업도시에 비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전주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고용불안 해소, 재(再)고용, 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엄연히 전주 시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일보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조사 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보다 영업환경이 더 힘들다는 답변이 75%, 종업원 줄였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60%, 전국 평균소득 보장 때 직업을 바꾸겠다고 81%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달별이 최저 생계비 1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62%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번 달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 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입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응책은 경제 침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소비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소매점과 재래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자영업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5~2배 이상이 많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파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전주시에서 시행 또는 지원해온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半)영리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은 1996년 11.3%였던 것이 10년 내 6.6%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9%를 차지한 걸로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현재는 빈곤층이 20%에 근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보면 13만의 시민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표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4개에 채용인원은 121명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9년도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년간에 한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후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2009년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완결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유지될 때만이 더 많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노동의 기회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선별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실의에 빠져있는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의 전주시 구직신청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한 구직신청자 중 70%가 신입 형태로 전반적인 취업경쟁력에서 미약한 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은 고된 노동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20~30대가 기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더욱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 45명, 2008년 80명을 육성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취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한 바 이 사업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직업의식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시민모임 등 주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돕는 활동을 전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소비자 물가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도권 내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복지정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 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누수가 없는 지, 복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어느 때보다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난방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는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송하진 시장님!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비대한 중소기업위주의 산업 구조에 유난히도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비정규직이 많은 도시가 우리 전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광주시와 같은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의원의 민생대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64만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민생경제 대책에 대하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가차원은 물론 이고 우리의 지역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제조 업분야 의견청취회의를 필두로 기업 규제개혁간담회와 금융기관장 간담회등 민생경제 릴레이대책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시책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민생경제

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 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기능과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도하는 바,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방식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민간단체의 자율기구로 설립하느냐, 아니면 전주시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산하기구로 설립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시에서 파악한 9개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중 울산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에서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 추세로 우리시도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노인회 전주시회등은 조례 제정없이 민간자율단체로 설립되었고 이에 대해 전주시가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언젠가는 비정규직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지원센터의 설립방식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지원센터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되어 비정규직들이 해고의 불안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가 중소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03년부터 28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주차장설치, 상가점포 리모델링, 아케이드설치, 고객 화장실 신축 등 시장 기반 시설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동택배차량 보급 등 시장 고객서비스체계 구축과 점포경영 선진화 교육, 그리고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마케팅지원, 재래시장 장보기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시민 소비촉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는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의 문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특



화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시장은 노송천 복원에 따른 젊은 층과 가족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노천카페, 먹거리시장 육성등 미래내시장은 청정 농산물 집적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구도심 재래시장과 주변상가를 연계한 시장통합상권을 개발하여 개별 시장이 갖는 고객흡입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통합 상권에 대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입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7월 장동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2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고 설립당시 80개 점포에서 현재 350개로 증가하였으며 소형슈퍼의 물류비가 15%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센터를 통한 조합회원 중소점포의 물류 조달규모액이 1백억원을 초과하는등 중소형 점포의 물류경쟁력 제고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물류창고 확장 사업을전개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소형물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책으로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의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그 핵심기능은 전북신용보증기금을 토대로 소상공인 자금을 융자 상담하는 일선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북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34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현재 도내 지원대상 3,369명중 56%인 1,892명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총 277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소재한 전주지역의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시작된 금년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바, 도내 지원대상 351명중 56%인 196명의 전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총 2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자금에 비해 특별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앞으로 경제 난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특별자금수요 역시 그 절대규모 만큼은 더욱 증가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강화에 필요한 전북신용보증기금 추가조성을 위해 현재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전주시와 각시군의 추가출연 규모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심도있게 협의하겠으며 현재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도 전향적으로 지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조

항을 신설하는 등 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조례개정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추가확충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특례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전주시의 별도의 지원 자금 출연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적 시장은 리에 의해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어 의원님의 질문과 권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8월, 의원님의 선도적인 조례입법제안을 기초로 우리 시는 금년 1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지난 11월 28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전국 155개에 불과하고 전북지역은 10개이며 우리 전주지역의 사회적 기업 역시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초창기인 관계로 앞으로 더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 육성 주문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금년에 4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은 행정역량을 기초로 현재 노동부로부터 6개의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문화 예술 관광분야와 환경 에너지 절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 기업에 준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과 이차보전 방안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방법을 강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이 재화인 경우에는 지자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생산물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주요 실행계획으로 입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2년 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인건비 지원을 단절한다는 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대응책 마련 주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정부의 존없이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지원형 수익구조 구축과 수익구조 구축의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후원기업과의 연계형 사업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시가 역점추진하는 공공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취약 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와 실업문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이중에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일자리 창출이 기업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이라고 봅니다.

제 조업분야에 있어서 기업유치와 창업을 통한 안정적 고용확충에 매진하여 온 결과 지금까지 2년간 156개의 기업유치 협약이 체결 된 바,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동안 협약 체결한 이전대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여 투자와 고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 이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여성인력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용 효과가 큰 콜센터 9개를 유치하여 민선4기에 1,3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의 경우엔 LG파워콤 콜센터 270석, 한국쌍용화재 90석 등 360석을 유치하여 부족하지만 360여 명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신기술연수센터를 국내 최초로 국비 2백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내년 말부터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젊은 취업인력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일자리 준비프로그램과 청년실업자 고용방식의 인턴사원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첫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 준비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11억 3천만원의 예산을 2009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자동차 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양성사업, 고용촉진훈련, 콜센터 예비인력양성사업, IT·CT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영 화영상 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청년실업자 고용방식의 인턴사원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10억 3천만원의 예산을 2009년에 지원할 계획인 바,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 인턴사원제 운영사업, 행정인턴형식의 청년직장체험연 수, 청년실업자를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고용하는 공공근로방식의 행정업무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청년취업지망생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시책들을 더욱 확충하여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 전주를 떠나지 않고 또 떠나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10명의 소비자물가 모니터요원을 확보하여 지방물가 지수 관리품목60종과 중점관리품목 52종에 대하여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수 동향체크 외에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자원을 활용하여 대형마트의 부당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점품목별 가격의 부당한 책 정감시와 유통기한과 식품원산지표시 준수상황점검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결과를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우리시의 정책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많이 정보제공과 합리적 소비자선택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가모니터링단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신 것과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현재 33개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6명이 배치되어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 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시책을 말씀드리면, 시중가격 4만원 정도의 20kg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절반 가격 인 2만원에 차상위 계층 1,300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가정의 위기극복을 도와주는 긴급복 지로 금년에 550세대 9억4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내년도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위기를 맞은 저소득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생단체 조직 등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더욱 강화 하겠으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올 동절기에 13,100여 세대에게 15억 9천여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희망나눔 이웃돕기 사업으로 금년에 16,000세대 6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7억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렵고 힘든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동절기는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구·동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기관,



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속에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소외된 가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기구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로서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를 지난해 하반기에 발족하여 운영지원단, 파이낸싱지원단, 기술진흥지원단, 마케팅지원단, 일자리지원단으로 사업단을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인데다가 운영채원 부족으로 만 족스러울 정도의 활동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역점 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의 시민운동 실천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탄소산업과 영상산업 바이오산업 등 주요 역동산업 포럼을 통한 시민적 관심과 역량 결집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차원에서는 현재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민생경제 TF팀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생경제 대책위 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기구를 둘것 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를 민생경제 대책 위원회로 확대개편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르면 12월 중에 민생경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주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의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과 방향등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동물원의 종장기 발전 대책에 대하여

동물원은 1978년 4월 전주시민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로 연평균 80만명이 다녀가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게놀이공간입니다.

전국에는 2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동물원 있는 곳은 광역도시 다섯군데만 있고 유일하게 전주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관계자에 의한 전주동물원에 대한 평가는 수목과 자연이 짜임새 있게 어울어진 생태환경이 좋은 전주동물원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원 시베리아 호랑이에서 사자, 곰, 표범, 기린, 코끼리, 낙타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동물들에서부터 전주동물원의 특화되고 경쟁력있는 동물인 침팬지, 다람쥐원숭이는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고 어떤 동물원에서는 코끼리도 없고 시베리아 호랑이도 없는데 전주동물원의 경쟁력은 100개 종류의 773마리를 보유하고 있어 종류의 다양성입니다. 그간 우리는 동물원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남한의 야생에서 사라진 호랑이를 전주 동물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주 동물원이 없었다면 어린이들이나 보육시설 초등학생들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전주 동물원에는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참수리, 흰꼬리수리등 독수리사, 공작들도 동물원의 인기 조류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6년간 동물원의 관람객과 년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 5억9천881만원이 투자되었고 62만2천975명이 다녀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100만명이 다녀갈 것이고, 10억이 투자될 것이고 8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약 6년간의 통계치를 내며는 약 52억 74백5만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415만1,076명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통계에서 알수있듯이 가장 적은 투자로 1년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온다는 것은 전주에는 휴양놀이 문화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래도 동물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2002년 이후 1500이상 투자한 한옥마을의 년 관람객수가 이제 막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50 억 투자하고 80만명 가까이오며는 한옥마을과 동물원의 투자가치에 대해서 관람객 통계를 살펴보면 동물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지만 유무형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짜임새있게 연결동선을 잇지 못하고, 시설 및 동물에 대한 투자만 한다면 동물원은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물원의 홍보대책을 보면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이야기(스토리텔링)하는(문화해설사처럼) 동물해설사가 필요하며 관람객들에 대한 홍보책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원의 미래지향적 방향은 휴게시설, 놀이공간, 동물관람, 아름다운벽화, 상상력있는 동물사 등 동물과 공간미술, 문화가 흐르는 체험학습 관람시설의 아트폴리스적 동물원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은 산능선 비탈 달동네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관광객들과 사진사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상상력 있는 동물사의 신축 그림과 벽화가 있는 동물사의 디자인은 동물원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문화예술, 상상력과 더불어 즐거움이 있는 장소마케팅으로 변해야 할것입니다. 최근 2009년도에는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알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주차시설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면서 동물원과 동물들이 피해를 볼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먹어리, 눈먼봉사, 시력저하, 치매걸린 동물들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거나 동물들을 학대하는 법들
을 잊어버리셨나요?

덕진동1가72-4, 72-5(전), 72-29, 72-30(답)총 10,810㎡
의 면적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서 대형 라이트가 하늘
높이 솟으면 그 피해는 동물들이 깊은 수면을 할수
없습니다.

한쪽 구역은 불을 켜놓고 자는 동물원이 됩니다.

직 접 현장에 가서 직선거리 50m이내에 닭목,평과,
금계, 은계, 오골계, 백자보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칩
팬지, 원숭이, 낙타, 얼룩 말은 직접 간접 피해 지역이
고 농선에 있는 독수리사, 매, 부엉이등 야행성 조류
등은 간접 피해 및 활동 노출 방해지역이 될 예정입
니다.

동물들의 장애등급을 더 심화시키는, 조명탑 대책과
대체부지는 생각해보시지 않았는지요? 동물원 부근
은 동물들 입장에서 설계되고 보살되고 지켜져야 합
니다.

100여종의 다양성 있는 전주동물원의 773마리의 식
구들은 동물원이 비좁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1997년 11월 11일 제140회 전주시의회 기
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동물원 인접토
지 매입의 공유재산 제안설명요 지에 당시 재정경제
국장께서 동물원 땅이 비좁으니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조정 및 각종 동물시설물 설치를 제안했으
며 당시 동물원 장의 속기록 내용에는 소풍객들이 한
꺼번에 몰려오면 휴식공간이 모자라고 비좁아 연차
적으로 주변 땅을 매입하여 동물원의 부지와 시설 을
확대하는 골자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의
동물원에 대한 인식은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전에 동물원이 비좁다고 구입한 7,653㎡의 부지
가 체육시설로 변환하면 동물원을 위한 전주시의 장
기적 땅은 더이상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강씨문중에 땅이 있고, 한쪽은 전북
대 땅이고, 나머지는 대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
기때문에 더이상 동물원은 포위당해 있습니다. 하를
로밖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대책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힘없는 동물들과 동물원을 보존하고 지키
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물원은 여러번 이런 수난을 겪었습니다.

2002 년 초반에는 간이골프연습장을 지어놓고 수익
이 나지 않아 폐쇄조치 했으며, 2006년 개장하여 14
년 무상사용의 스톱키하우스(토지 2,236. 건물239.1
㎡)는 개점휴업중입니다. 번번히 동물원 부지와 주변
은 시행정의 정책판단 오류로 그 피해는 동물들과 시
민에 게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원의 가치(유·무형)브랜드 향후 중장기 대

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물원의 공격적 마케팅, 스토리텔링 홍보책
자, 동물해설사 배치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조명피해 대책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대
하여 답변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동물원의 중장기 발전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동물원의 가치와 마케팅 그리고 체육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먼저, 동물원 유·무형의 가치와 브랜드에 대한 향후
중· 장기 발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개 원 30년의 연륜을 쌓아온 전주시 동물원은 타 동
물원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보존된 각종 수목 조성
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속의 건강 휴식공원이며 동물
보유 규모나 관람객 면에서도 전국 13개 동물원 중 5
위에 해당하고 있어 전주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동물원에 대해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 러나 민선 4기 들어 2007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전
주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자체 수립하여 금년에는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신 축, 어린이 워터 존 운영, 벚
꽃 명소 조성과 함께 관람 · 미관 · 이노베이션 등에
8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복합 형
관리사무소 신축과 야기 동물놀이방 · 곤충관 운
영 · 동물병원 신축, 그리고 웰빙 산책로 조성 등
59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기
대하시는 다양한 관람 · 체험 · 놀이가 가능한 복합
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
골프장의 운영 및 폐쇄와 같은 정책적 결함의 재발방
지와 동물 원 개원이후 3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전주동물원의 옛 명성을 되찾고 확실한 투자계획을
보장하여 전주동물원만의 특화 브랜드를 키 워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격적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홍보책자 발
행, 동물해설사 배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앞으로 64만 시민과 외지관광객이 전주 동물원
을 방문하면 보고 놀고 체험하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
래를 펼칠 나갈 수 있도록 동물과 공 간미술, 문화가
공존하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 물 애니메이션 상영, 공작실, 전시실,



동·식물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형 사무소를 신축하고 내 품안의 꽃시슴 등의 동물 페인팅 장, 어린이 동물 진료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동화되는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홍보책자는 사육사들의 동물특성해설 교육자료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랑, 번식, 습성을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물해설사 배치하는 이미 금년도에 동물특성해설 자료준비와 사육사 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학생, 단체관람객등의 신청을 받아 총 300여회에 6,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사의 동물사양관리 시간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2009년도에는 서울대공원 사례에서와 같이 동물관련 퇴직자, 동물애호가 등을 동물해설가로 양성하여 사육사와 함께 직접 동물과 접촉해보는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함께 앞서가는 외국과 국내의 동물원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명 피해대책과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주차장은 정문앞 제1주차장과 제2, 제3주차장 사이에 체육시설이 위치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체육시설 경계를 따라 대형포장마차의 고착화 및 동물원 정문앞에 노점상이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축구 농구장)을 제2, 제3주차장으로 이전 설치하고 체육시설이 있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서는 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부지와 동물사 간의 거리가 가까워 동물들의 사육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함께 1997년에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이유에서 “동물원 부지가 비좁아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조경 및 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음에도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동물원에 대한 인식이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물원 주차장 정비의 당위성과 덕진체련공원의 체육시설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매우 의미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검토한 축구장 농구장의 이전은 단순히 조명문제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소음 등 동물들의 사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98년도에 계획된 토지매입을 통해 동물원의 확장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동물전문가, 체육관련 단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농구장, 축구장의 이전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태습지를 이용한 학습 체험공간 조성 등 동물원을 확장하는 구상도 함께 검토하여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동물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폭넓은 식견으로 개선책과 대안 마련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중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올 한 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제 패닉상태로 몰고간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다름아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환율은 두배이상 상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기업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 또한 감소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한 풍전등화같은 상태로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불투명하여 제2의 IMF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경제 패닉상태에 빠진 오늘 전주시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 당국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10여년간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 이상과 최근의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크나큰 과오없이 대체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더 나아가 살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최초 개발을 위하여 개발지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신지중화 사업과 행정복합형 신 도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 사용검사 후 6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현재 전주시가 개발한 체비지 총 717필지(약 5천3십9억원)중 매각이 유보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163필지(약 1천3백4십3억 원) 약 26%가 분양되지 않아 전주시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 거주민에게 인접지역환경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었으나 이 또한 수익성이 없어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 소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이를 분양원가에 되팔려고 하여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실로 시민들의 재정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주시 공동주택의 최근 평당 분양가는 1999년도 약 290만원대였으며 2001년도 코오롱하늘



채 및 현대에코르 약 32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부지 분양의 영향으로 포스코 1차의 경우 470만원대에서 대형평수의 경우 510원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도 약 560만원, 2007도 약 610만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0평형대 이상의 경우 분양가는 2007년도 기준 7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불과 5년여만 에 200% 이상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만 분양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분양 예정가는 150여만원 정도였으나 2003년 8월 전주시의 최고가경쟁입찰로 인하여 예정가보다 두배 이상인 309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당시 분양을 앞두고 있던 포스코 1차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선량한 전주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는 1997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2003년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으로, 불과 5년전의 전주시 도시계획 척도를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최소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시행해야하고 나아가 수익성과 개발가능성을 보고 시행하므로써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익성 창출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나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전주시는 물론 인접지역환경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한 원 거주민 및 일반 분양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전주시민들 모두에게 수익은 커녕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첨부된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면적 76만평 중 일반주거용지의 단독주택 비율은 20.6%를 차지하는 15만 6천여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허황된 계획으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은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발이 묶여 있다보니 투자가치가 하락되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여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식당 호프집 선술집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수익성은 커녕 손님이 찾아와 식당을 찾거나 가볍게 맥 주 한 잔하러 해도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삼천동으로 나가야만 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또 다른 문제 점은 그 동안 전주시의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서신지구

의 경우 27.6%, 아중지구의 경우 18.6%, 하가지구의 경우 29.8%의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4.1%의 1,800세대만이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되어 여타 택지개발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지거래나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20% 정도로 조성하였다면 서부신시가지가 이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주 들은 그나마 수익성이 기대되는 원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며 전주시의 원룸 허가 현황을 보면 덕진구 820개동에 9,400여가구, 완산구 1,388개동에 약 16,000여가구가 있으며 원룸촌이 형성된 대표적 지역으로는 완산구의 서신동 395개동, 중화산동 2가 180개동, 효자동3가 388개동이며, 덕진구의 금암동 전북대앞 밤나무골 146개동, 우아동2가 및 인후동1가 아중리의 428개동 등으로 주로 인구 밀집지역과 대학교 부근이었는데 효자동3가의 경우로 바로 서부신시가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 과 비교하여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용검사 후 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룸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동3가의 경우 총 388개동의 원룸중 2007년도 및 2008년도에만 서부신시가지 에 169개동의 1,651가구가 허가를 득하여 지역내 원룸중 약 44%가 서부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로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주창하고 동년 7월 전주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 위촉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동년 8월 아트폴리스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동년 12월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5대 역동산업 과 함께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에 주력하고자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하고 과장, 담당, 실무자 등 3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아름답 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고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서부신시가지가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주시의 한치앞을 예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현재 원룸촌으로 둔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공공기관들은 그간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밑바탕이 되어왔으나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도경, 중소기업청, 보존지청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미 서 부신시가지에 입주하였고, 이밖에도 KBS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한 3개



기관이 공사중이거나 이전허가를 득하였으며, 통계청을 비롯하여 이전 계획을 세운 기관이 약 1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및 육지구의 공동화 현상 예상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참여정부 시절 지방 균형발전을 모토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간 지방 균형발전의 모토가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 내부의 균형발전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또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발미로 땅장사에 급급하여 전주시 도처에 산재해 있던 대형 공공기관 모시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오로지 체비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 노력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개발되어 사용감사 후 6개월여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께 물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전주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체비지 매각, 즉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공동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여타 지방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아트폴리스)조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전주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전주시민들이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타개할 묘안이나 대책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서부신시가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촌으로 인하여 여타 지역의 원룸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본의 아니게 기존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로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공가에 대한 시의 지원책 또는 매입 등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서부신시가지의 미분양과 미입주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원룸 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 고추나 상추나 심어 농사나 지어야할 정도라는 자조적인 의견인 만큼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만일 상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조례개정 등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서부신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종철 의원님께서서는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원룸 문제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전주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체비지 매각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 9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만 가격경쟁이 아닌 추첨방식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은 2003년 8월 22일 우리시에서 감정평가하여 책정한 예정가격 3.3평방미터당 170만원 정도로 분양 공고하였으나 당시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한 참가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3.3평방미터당 278만원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입찰방식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문제는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토지공급 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 개정시 경쟁입찰 방식의 문제점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원룸촌과 관련하여 시가 표방하는 명품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내 단독주택용지는 1,773필지에 52만 4천평방미터로 전체 조성 면적의 1.337필지 39만 3천평방미터, 체비지는 436필지 13만 1천평방미터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용 위주로 계획되어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 2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주가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9건이 건축허가 되었고 이중 53건이 사용 승인되었 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볼때 기존 아파트 주변과 전주대학교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입주될 공공기관과 기존 시가지 혁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를 예측하고 건축이 성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가구 주택 건축 붐은 이후 경기상황 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아트폴리스를 강조한 민선4기 이전에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에 서부신시가지 권역이 포함되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트 폴리스 개념의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주를 대상으로 홍보함은 물론 토지소유자에게는 원룸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신시가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민들의 재정적 고충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 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구도심에 대하여는 김명지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의 지난 목요일 시정에 대한 질문시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중앙동, 풍남동 등 남부도심권 역, 덕진동, 금암동 등 북부도심권역과 팔달로권역 6지구가 포함된 백제로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대책 협의회, 도심기능대책 협의회 등 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 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서부신시가지내 원룸촌으로 인해 여타지역 공가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해 주택매입 등의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2004년에서 2015년까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총 5만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의 공가에 대해서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재까지 총 91동을 매입, 이를 보수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공가에 대하여는 관

련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더 많은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으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매각대상 체비지는 총 715필지 62만평방미터로 이중 74.6%인 552필지의 46만3천평방미터의 분양이 완료되고, 이중 25.4%인 163필지 15만7천평방미터가 미 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택지중 서부신시가지가 최대규모로 기존 이중지구·화산지구의 경우 등을 볼 때 상권형성 등 시가화 정착을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 상 본격적으로 단지가 활성화되기까지는 택지조성 후 적어도 5년에서 10년정도의 주기가 필요하나 그래도 서부신시가지는 도청과 경찰 청 등 공공기관의 입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후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계획 정책은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토지주 및 전문가, 시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김현덕의원 (삼천2·3동)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11월 12월 환경미화원들은 삼천2동 골목길 등 가로수 낙엽 수거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골목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수거하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다 낙엽이 많은 삼천 2동 등 가로환 경 미화원들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삼천2동처럼 주택가 골목길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명이 1일 최대 0.5t 가량의 낙엽을 수거하는 등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식 청소시간이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오전에는 1~2시 전부터, 오후에는 5시까지 1시간 연장해 골목길 청소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축된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업무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최소한의 인력충원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가로, 청소, 교통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라고 평평이 날 정도로 쾌적한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다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청소 인적자원이 많아 청소행정 운영이 충분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나아져야 할 시가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체계가 깨져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 주시에서는 청소관련 고가장비구입과 부분적 위탁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청소 상태를 살펴보자면 특히 퇴근이후, 휴일 및 공휴일 승강장 주변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등 이면도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전주시는 대로변에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간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몇 개의 쓰레기통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추후 설치 및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에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40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26명입니다. 18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은 효율성이 심히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고 청소행정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미화원을 전주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인력을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 등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 째, 골목길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만 설치당시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주민들의 호응으로 잘 활용된다 싶더니 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통도 이왕이면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전주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혐오설치물이 아닌 친근감 있는 쓰레기통으로 도심에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도 수집하고 도심에 조형물로도 활용한다면 아트폴리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를 위한 설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활용폐기물 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주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를 전주시의 청소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는 달리 지역별로 쓰레기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시스템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 쓰레기별로 용역 위탁하지 않고 몇 개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위탁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쓰레기 종류별이 아니며 완산구, 덕진구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로변의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몇 개의 쓰레기통이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와 추후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월드컵을 계기로 설치된 쓰레기통은 대부분 회수·폐기 하였고, 현재는 공원지역 등을 제외한 대로변에 10여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형태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원형 또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주로 대로변,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구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가로청소원과 기동처리반이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여부는 현재 설치된 쓰레기통 조차도 담배꽂초나 휴지류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투입하여 쓰레기장화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추가설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대로변 쓰레기통을 항상 청결토록 유지·관리하되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환경미화원 인력 축소와 관련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대안으로 미화원을 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와 이에 따른 가로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미화원 인건비 등 보다 효율적인 청소문제를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도에 실시한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개 권역은 직영, 2개 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정책 결정 후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이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인력 추가충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 결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2개권역의 적정인원은 163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어 자연 감소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독주택 및 상가지역과 가로청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개동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현장에서 매일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미흡한점을 보완하는등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청소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등에 대한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데 이어 생활쓰레기는 4개권역중 2개 권역을 위탁함으로써 합리적인 위탁시스템은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상시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고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배출원에서의 원천 감량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배출량 비례제를 2008년 10월부터 단독주택 4개 동 지역에서 기존의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배출량 비례제의 전면 시행이 예정된 2009년 4월부터는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례는 행안부 주관 예산절약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 째, 골목길 등에 설치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주변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수거용기도 전주이미지 에 맞는 디자인으로 수집과 조형물의 두 가지 기능이 병행 될 수 있도록 제작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2007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총 1,338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 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청소관련 봉사단체 회원, 일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거함 색상과 배출품목, 그물망 크기와 색깔까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로 고질적인 불법투기를 상당부분 억제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재활용수거함 주변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일부 불법쓰레기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점 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끈질긴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대책의 강력 추진과 함께 직영과 민간위탁업체의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로운 분리수거용기의 제작은 설치한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수거용기를 새로이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측 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거용기를 제작하거나 교체할 때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의 종류별 위탁에 따라 수거시 해당업체의 쓰레기만 수 거함으로 수거 후에도 쾌적한 거리 청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산 덕진구를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상별로 위탁한 결과 업체간 잔재물 정리와 관련하여 서로 처리를 미루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일체를 하나의 업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일괄수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직영방식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던 사례의 예를 들면, 각종 쓰레기 성장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서로 기피한다든 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특성이 다르다든지, 자연감소 된 미화원의 미충원에 따른 청소공백의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성장별 민간위탁이 진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구역별 일괄위탁과 성장 별 위탁 수거체계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별 일괄수거 방식은 청소행정의 여건 변화나 민간위탁 평가분석 등을 통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Q 강영수의원 (서신동)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전주시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 표아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 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제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5개 팀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주요시설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고 이미 전주시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문제는 시설관 리공단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한 개의 시설물을 놓고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의 경우 올해 게이트볼구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역시 전출금과 사업비 등으로 모두 15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쪽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다른 한 쪽은 관리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물이 온전하게 설치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보완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관리 감독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상비 절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의 숫자를 214명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134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해 인건비로만 43억 7600만원, 운영경비로 61억원 등 모두 1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 계획이니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시민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의 수익성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 체육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골프장 운영문제가 터지면서 관리 공단에 골프장 운영을 넘겨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관 운영이나 화장장 시설, 쓰레기 판매사업 등에 기대어 수입 을 창출하는 정도이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수익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물원의 놀이시설 위탁 운영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자에게 내 년 상반기까지 운영권이 넘어간 동물원 놀이시설은 당초 전주시에 연간 3억 6550만원씩을 납부해 오다가 두 번째 위탁과정에서 연간 1억원으로 낙찰되어 결국 전년 보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무려 2억 655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 이 2008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나 40일후인 2008년 4월 22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전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수행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드림랜드의 위탁은 주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 사료비마저 제대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동물원으로써는 수입금 감소로 동물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동물원은 대전동물원이 문을 연 후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형편없는 동물 사육장과 놀이시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십 년 전에 투자한 낡은 시설물로 경영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의 시설물은 18년 전인 1991년 5월에 설치, 개장한 노후 된 시설로써 전주시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 보다는

수도권이나 경인지방 등 타 지자체의 어린이에 비해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 추구를 영유할 수 있는 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낙후된 놀이시설을 현대식 놀이기구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창출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료 징수 대신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덕진 공원은 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 놀이의 현대화 놀이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수익평가를 실시한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적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관리 공단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내의 골프장과 사우나 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호한의 대지에서도 연약한 새싹은 돌아나듯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잘 극복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태권도 중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입원과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맛과 멋의 고장, 천년 전주의 애향의 도시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 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전담부서가

없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7월 8일 창립하여 체육 시설 관리운영, 주차장 운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장사시설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덕진공원 관리운영, 수입인지 판매사업 등 총 7개 분야 19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종합경기장 등 10개의 체육시설은 영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족 초기단계로써 미흡한 점도 있리라 생각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공익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부서관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도 권등 타 공단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시에서(전주시의 경우 5천만원이상), 응급복구등 소규모 수선비는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관 이원화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현안업무와 쟁점사항에 대해 매주 관련부서 TF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고자, 사안별로 공동설계와 조사 그리고 쟁송문제는 전주시 법률팀과 공동 대응 하는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직체계상 이원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경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은 당초 전문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이 214명으로 책정되었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인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단에 추가 대행할 경우에도 업무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경상경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기간제 인부사역을 억제하고, 노후 수도시설물을 점검·보수하여 수도요금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 1억 5000만원을 자율 절감하여, 인턴사원 4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12명을 채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설립의 장점인 원가절감 노력과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으로 동물원 내 드림랜드 시설물의 현대식 놀이기구시설을 보강하는 방안과 덕진공원 보트장 등 현재 민간위탁 시설



물을 직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 드림랜드 시설의 경우 2008년 4월 계약만료일을 전후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었으므로,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주어서 공단의 수익성을 확보했어야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드림랜드는 1992년 3월에, 동물원 활성화 및 시민편의 차원에서 민간투자에 의하여 1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2002년 3월 12일 기부채납 이후 기존 사용자와 1차 사용허가로 6년간 운영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22일부터 2년간 일반경쟁에 의한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당시 2007년 8월에 최종 완성된 한국자치경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1단계 공단설립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충분한 관리능력과 풍부한 경험에 있어야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5월에는 시설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놀이시설물이 18년 전에 설치되었기에 새로운 시설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현 드림랜드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동물사와 근접하여 음악소리, 고함 등 소음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금명간 발주한 동물원 장기발전방향 학술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임대시설인 보트장은 2006년 4월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무리한 낙찰금액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트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2007년 7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8년 8월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래 지향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8월 이후에는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화산체육관 지하실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고 2층에 탁구장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동물원 매점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고 월드컵 사우나가 정상 운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 운영을 과도하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으로 수익과 공공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 조와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내의 골프장과 사우나시설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0월 강제집행된 이후, 우선은 골프장 잔디관리가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판단되어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한 기초장비를 구입하였고, 잔디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프장 타당성 용역 검토 내용에 의하면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하는 경우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 전주시민에 대한 그린피 할인, 고용창출, 골프의 대중화는 물론 연 39억 9000만원의 매출과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어 시 재정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을 조기에 정상운영 하기 위해 5월중 골프장 조례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골프장 인력 충원, 안전시설물 설치, 골프장을 둘러싼 각종 분쟁 해결등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는 골프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제공할 예정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03년 7월 7일 연간 대 부료 1억 2100만원, 대부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1월 사업주 구축으로 영입이 중단되어 대부료가 장기 미납되자 2008년 12월 3일 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2일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전(前) 사업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바, 상주 유동 인구가 적고, 과도한 설비투자 약 30억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여건은 전(前)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양호하게 현존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약 500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2009년 하반기에 완공되는등 사우나 운영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사우나 운영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민간에 대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적지 않은 대부료등이 사우나 운영업자 모집에 최대 변수로써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목욕장업의 성격이 공공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현재까지는 공단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사우나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대부계약 등의 행정절차이행을 통해 성수기인 2009년 9월경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 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권정숙의원 (비례대표)

▶ 한스타일산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민여론 가운데 전통 문화중심도시로 우리 전주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할 일 중 몇 가지를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는 수대를 이어온 전통 장인들이 무형의 인적자산으로 소중한 많은 문화유산을 지켜 내려오면서 스스로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뒷받침을 통하여 계승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터넷은 물론,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지원도 하면서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노력으로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의 값진 삶이 높이 평가되어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천년 전주의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고, 전통 장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은 학술적으로는 정립되었지만 현장에는 못 미칠 것입니다. 학술적인 부분과 직접 현장에서 대를 이어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천년 전주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전주에서 생산하는 한지를 조정에 납품하고, 그 한지로 모든 문서와 서책 편찬에 사용하였습니다. 닥나무가 매우 귀한 여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까지 이르자 지방관찰사가 닥나무 재배를 장려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악지역에 많은 닥나무가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닥을 사가는 상인이 있어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으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의 발전과 공업화로 인해 한지산업이 시장경쟁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몇몇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지마저 가격이 싼 외국산 닥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제 농촌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한지의 95%가 수입산 닥으로 생산한 한지입니다. 외국산 닥으로 전주에서 한지를 생산하면 전주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0% 전주한 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닥을 재배하고, 그 원료를 가지고 전통의 기법을 사용하여 생산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전주 한 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에서 시행한 한지의 사용 및 수요처를 보면, 국내의 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가와 학 교 등에 한지사용 협조, 각종서류 한지사용(인 · 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표창장 등), 관공서 및 신축아파트 등의 한지벽지 인테리어 시공 협조공문 등 소극적인 한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은 행정의 지원 없이도 가능한 규모이지 않

나 봅니다. 한스타일 사업의 핵심인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자하여 급년 완공될 전주 한지산업진흥원에 연구실과 실험실,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지산업 정책에 관하여 지금처럼 명맥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주한지를 브랜드화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한지산업진흥원을 건립해서 성과가 없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한지진흥원 완공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전주한지를 브랜드화 한다면 품질이 보증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 한지의 재료인 닥은 국내산인지요, 아니면 수입산 인가를 밝혀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가 여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지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국내의 한지제품 홍보와 판매시 한지공예품 보다는 한지상품 또는 제품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여부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요처 발굴계획은 있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급종이에 비해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한지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특수고급 한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옥마을 내 주차장은 1400대를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1400대 중 한옥마을 내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은 355대이고, 나머지는 노상주차와 코아아울렛 주차장, 성심여중 · 고,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을 살펴보면, 인근 주민들과 직원들이 주차하고 나면 실제 관광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태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내 주차장 확보계획을 2007년도에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지부진하고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입니다.

시장에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설치 지연 사유와 주차장 설치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한옥마을 내 한옥숙박시설은 한옥생활체험관을 비롯한 9개소 183명 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옥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려면 호텔과 고급 여관 보다 특색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유숙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는 화장실이 갖추어 있지 않고 샤워실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 투숙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 대하여 편의 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전주 동헌은 신축연대가 사료에 나타나지 않



나, 태조 때 완산부로 승격하였고, 태종3년 전주부로 고쳐 부르고 종2품 부윤을 파견하여 다스린 것으로 보아 태종때 신축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 정확한 신축 연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758년 전주관관 서노수가 다시 짓고, 1890년 화재로 소실되어 1891년 또다시 중창하였습니니다. 1934년까지 전주군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일제강압에 의하여 1934년 완주군 구이면 전주 유씨 제각으로 이축하여 사용해오던 중 현재 소유주가 전주시에 기증하여 전주교동 향교 옆에 이축중에 있습니다. 전주동헌은 당시 건물규모가 정면 7칸이었으나 전주 유씨 제각으로 이축되면서 정면 6칸으로 축소되고 내부공간의 형태도 변형되었으나 고층 없이 지난해 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축을 시작할 당시부터 사전 동헌 복원에 대한 고증을 받아 이축을 추진하였다면 현재 조립중인 동헌을 1칸 늘리려는 것과 내삼문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원형 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는 불가피 하게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 고증 없이 동헌을 이축하는 관계로 현재 원형복원을 위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과 내삼문 그리고 전통한옥 건립에 투자되는 예산은 후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값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보다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변경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은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시에서 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한 시설이 전통문화센터 등 7개소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민간위탁시설에 매년 많게는 8억원 작게는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통문화센터는 훌륭한 건물이고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이 공익성이라 보며, 또한 이 공익은 전주시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8억씩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얻어진 공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수익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지, 공익에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몇 년째 지원했고, 지원총액은 얼마인가 밝혀주시고, 언제 자립하여 독립 재산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지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전시관도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초창기는 활성화가 안되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약 130만명으로 이제는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도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공예품전시관의 지원총액과 자립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전통음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하면, 전국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전주의 음식입니다. 작금의 전주음식을 보면 타 지역 보다 퇴보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식 음식 현상은 아무런 연구 없이 식당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음식맛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연구기관 하나 없이 식당위주의 음식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연구 없이 전주음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한정식을 비롯한 비빔밥등 전통음식에 관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업소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전주비빔밥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비빔밥에 관한 추진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한스타일산업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현실적 행정대책의 수립 및 실천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전통장인을 위한 관련 시스템 마련등 전통 장인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전통문 화도시로 성장하려면, 전통장인들의 숙련된 기술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취임초기부터 강조하였으며 그 성과로 전통기술의 현대적 활용을 모색하는 온 브랜드가 한국적 스타일로 급성 장하면서, 세계적인 가구박람회인 밀라노와 베를린에 한국 최초로 참가하여 높은 호응을 받으며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는 전통장인을 배려하는 제도마련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를 통해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음식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명인명소 지원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하고 2006년 12월에 명인·명소 각각 1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기술을 새로운 디자인과 접목하여 주목받고 있는 온 브랜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존과 관리차원에 머물러 있던 전통기술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작단계이므로 아직 무형문화재나 전통의 맥을 잇는 장인들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전주 시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예능분야에 1분,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서른분(3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보유한 전통자산이 보호, 보존자원을 넘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문화산업적기반으로 거듭나려면 현재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전주전통공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협력시스템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유한다면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생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정숙 의원님의 전통장인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주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이룩하고자 하는 전통장인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지산업추진의 정체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전주한지산업진흥원 완공후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한지하면 전주가 떠오르는 정도 오랫동안 최고 품질의 한지 생산지로 인정받았으며, 현재에도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의 60%가 전주 및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지는 1980년대 말까지,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에 50여개 업체가 있었으나, 폐수 등 환경문제로 인해 90년대 초 현재의 한지사업협 동조합이 위치한 팔복동으로 22개 업체가 집단 이전하여 한지를 생산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양지의 발달과 값싼 중국지에 밀려 현재는 10여개 업체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옛 도2청사 부지에 총 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연면적 3553㎡ 규모의 한지산업진흥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지산업진흥원의 주 기능은 연구 개발 및 기업지원으로 한지산업의 기반 기술 및 핵심생산기술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산업화 추진을 통해 한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지산업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1단계는 실용화 단계로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신상품 개발, 품질인증제, 기업지원 등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것이며, 2단계는 2013년 이후 자립화 단계로, 기술이전수입, 인증료 수입, 각종 연구개발 공모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여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예산이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진흥원 내에 체험공간 및 홍보관을 마련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타 지역 사례 등을 비교·연구하는등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닥 사용에 있어 국내산, 수입산 중 어느 재료로 한지를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은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한지원료의 재료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닥나무는 기후, 풍토 조건에 따라 섬유질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를 사용해야만 지(紙) 천년견(緇) 오백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한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한지의 대체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한지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닥나무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산 닥 섬유 가격은 kg당 2만 5000 원으로 수입산의 3배 수준이며, 100% 국내산 닥 섬유로 한지를 생산하기에는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산과 수입산 닥 섬유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주한지의 명성을 되찾고 품질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한지의 품질기준마련, 농가와의 닥나무 계약재배 등을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한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은 현재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한 상태이며, 금년 말 이전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지의 품질 기준 마련 즉, 인증제 사업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지역 닥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농가와의 연계 사업을 위하여는, 우선 우리시가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시유지 4헥타에 3만 5000본의 닥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경제성 실험성 분석을 거쳐 계약재배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지의 품질은 소재와 물, 토질,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지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시기, 상품의 차별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한지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지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지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장인의 혼이 깃든 예술적 작품의 성질이 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화지의 경우도 아직 표준화 및 규격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계기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한지산업진흥원 완공 후, 한지의 치수, 성능, 기능, 재질 등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를 통한 전주한지의 표준화 및 규격 화로 품질향상과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전주한지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문화행사 참여시 전시품으로, 한지관련 공예품 및 작품 위주로 전시물을 구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지산업과 관련된 상품 위주로 전시물을 구성하여 한지의 기능성 및 우수성 홍보에 주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 째,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수요처 발굴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한지의 수요처창출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 전주한지를 홍보하고, 산업화,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시장개척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내 수요처 발굴 사업성과로는, 행자부, 경찰청, 서울시등 관공서를 대상으로 표창장, 임명장등 각종 인허가증과 전주시 관내 학교에는 졸업장을 전주한지로 보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기원 태권도 단증과, 고급아파트 벽지로도 전주한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주지역등에 시범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한지를 포함한 한옥형 아파트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엔본부 게스트룸과 반기문 사무총장 관저에, 최근에는 뉴욕총영사관 관저에 한지 인테리어사업을 통해 전주한지 우수성이 세계에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제안으로 미국회도서관의 고문서 복원용지로도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닻, 전주한지의 품질만 인증이 된다면 웰빙시대를 맞아 신축아파트의 벽지는 필수품으로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함은 물론, 1억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서예시장에도 우리 한지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완공될 한지산업진흥원이 개원되면, 한지를 응용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건축자재, 생활용품, 첨단소재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고 기타 한지공예품, 악세사리등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수요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옥마을 주차장 및 숙박시설의 대책에 대한 질문 중 먼저, 한옥마을 주차장 설치 지연사유와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옥마을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355대 정도이고, 노상주차장이거나 남부시장 천변주차장등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대수가 1000여대 정도가 있으나, 관광객의 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한옥마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200여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관 앞 21필지 3350㎡의 부지에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위치 변경, 부지매입의 어려움, 전세 입주자의 이전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총 18가구 중 10가구를 매입 이전하였으며 주차장 설계를 위한 건축설계 경기가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순 작품이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 및 폐기물처리설계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4월말경 부터 소유권이 확보된 건축물부터 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지난 3월25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도시

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되어 주차장이 시설결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미매입 부지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건립,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한옥숙박체험시설은 9개소 이중에 위탁 1개소, 임대 3개소, 민간 5개소입니다. 이들 9개 한옥숙박체험시설마다 국악과 다도, 전통예절등 다양한 테마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숙박체험시설 9개소의 전체 객실 수는 60실로 이중 화장실과 샤워장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은 39개실이며 공동 또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객실이 21실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객실마다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은, 우리시가 위탁 한옥생활체험관과 민간시설인 동락원, 양사재 등 3개 시설이며 3개 시설 이후에 확보된 숙박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설 등은 전통적인 한옥을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객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유주들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헌이축 사전 고증으로 값진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의원님 질문중 동헌 이축시 사전 고증 없이 이축하는 관계로 원형복원을 위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헌 이축은 전통한옥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축보다는 가치 있는 고택을 발굴 이축하고자 많은 노력 끝에 동헌과 금구고택을 기부 받아 이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받은 당시 동헌 건물은 일부 주요 목재가 부식된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어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해체 이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형 복원을 통한 옛 동헌의 위상을 재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 자료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동헌과 내 삼문이 변형된 흔적을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고증 설계기간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고건축사의 용역과 동헌복원 자문위원회로부터 역사적 자료 수집, 현장 실측조사를 통하여 고증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9월까지 동헌과 금구고택 이축을 완료하여 사라저기는 전주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전시킴으로써 천년 전주의 맥을 되찾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니다.

다섯번째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에 대한 질문 중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의 지원기간과 지원 총액 및 향후 자립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현재 전주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등 5개의 문화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2002년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8년 동안 한옥마을은 물론 전주시를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2002년 8월에 개관하여, 8년여 동안 전주의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과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세시풍속 운영 등 전주의 전통문화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총 67억 1400만원으로써 매년 평균 8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개관 첫해에는 12억원이 지원되었지만 그동안 예산절감과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금년 지원액이 8억 5천만원으로 약 30%정도 줄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예품전시관 역시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8년여 동안 전주지역의 공예인 육성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재 전북권의 12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공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예품전시관에 지원된 예산액은 총 12억 1800만원으로써 매년 평균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예품전시관에는 전주업체의 지원 강화라는 전주시와의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바이전주관과 온브랜드관을 신설 운영하여 지역 상품에 대한 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운영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물론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완전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위탁기간인 2010년 말까지는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되, 운영실태 및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한 후 2011년도 재 위탁시부터는 지원액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무상위탁 또는 문화재단 등을 통한 직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통음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중 먼저, 한정식을 비롯한 비빔밥 등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기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 관

리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농업기술 개발 및 조리장인들의 대도시 이탈로 맛이 전국 평준화되어 맛의 고장 전주만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메뉴개발, 조리, 테이블세팅, 친절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주음식브랜드강화교육 및 맛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정식 및 한옥마을 내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메뉴개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교육과학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한식세계화 조리인력양성 및 전주맛아카데미를 운영(1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한스타일진흥원에, 전주음식 연구, 전시홍보, 체험교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안에 전주비빔밥 및 전주음식 전문연구팀을 별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음식관련 연구·산업기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비빔밥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비빔밥은 조선3대 음식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99년 일본, 미국에 비빔밥상표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비빔밥연합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비빔밥명인 지정 및 무형문화재 등록, 후계자 육성, 비빔밥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통한 표준화작업, 국내외 프랜차이즈, 해외 판로망 구축 등 10여년 동안 세계적인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우주식 전주비빔밥 개발, 캐릭터 상표등록, 브랜드상품개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완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본 2개소를 포함하여 9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10개국(미,일,독,호주,뉴질랜드,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카타르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황을 보면 2005년에 10만 달러, 2008년 30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에는 40만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인발굴·인력양성·프랜차이즈 확산 등 기본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전주비빔밥 세계화 클러스터 구축, 포장·냉동 등 관련기술개발, 고기능성 상품개발, 다양한 브랜드상품 개발, 인증제를 통한 품질 관리, 원활한 국산식자재 보급체계 구축 등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정숙 의원님의 전통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지적과 개선해야 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 김상희의원 (효자3·4동)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 변경 용역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성장위 주의 개발론은 '더 빨리'와 '더 많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치유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의 원점을 인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파괴되므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물리적 인 인공 환경에만 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친환경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총체적이며 학제 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주거의 인공 환경은 인간과 관계, 그리고 인공 환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개선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서남부권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 3000㎡면적에 2005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 시설등 총 4178세대 1만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2178억원(조성비 616 용지비 1,562)으로 300억원 증액, 사업기간 만료가 2012년 12월로 6개월 지연되고, 수용인구 총 4091세대 1만 2300명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철 의원께서 2년전인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데만 그치고 있어 사업 중단을 비롯한 전주시의 입장전달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의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용역(5월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 확보를 위해 변경한 계획들입니다. 그들의 수익성만을 위한 계획으로 학교부지 마저 교육환경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로변으로 이동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도로쪽으로 뺐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도로 변은 학교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뺐 이유는 이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곳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전주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뺐히 알면서도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전주시 입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 반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총 15개 단지에 2374세대이며, 85m2 초과 주택은 16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효자5택지, 하가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장기적 지연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토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맞추려는 수법에 전주시는 올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다분히 수익성을 노려 근린생활시설을 넓히면서 학교용지를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독주택 용지내 주차용지 부족,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가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삼천면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장기사업 추진계획 2017년-2021년 모악산과 하천 축을 연계한 통경 축 설정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시기가 표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개설, 새내길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삼천좌안도로 개설,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 등의 이 지역 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동과 삼천동 행정구역이 함께 배치된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예를 들어 효자지구, 아니면 세내지구 등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 지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즈음해서 전주의 자존심 전주의 마지막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결국은 1종 주거지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최악의 상태인 원룸촌으로 집행부가 유도하고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가 없는 미시적 집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적 생태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수익성만을 쫓아 다니는 한국토지공사 사업성 논리에 전주시 집행부가 휘말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은 지난번 답 변처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순 답변은 64만 전주시민이 원하고 있는 답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전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치관이 실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토지공사가 수익성을 고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학교용지 위치변경, 주차공간의 부족, 우전초교 앞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2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 이때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조화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우리시는 용역이 완성되기 이전 토지공사의 용역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수정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촉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지개발 계획

에 포함되어 있는 삼천 좌안도로 개설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에 심의 요청 중으로, 동의 승인후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삼천변 공동주택 배치문제도 용역완성 이전 전주시 경관축의 관리구역과 통경축에 대한 기본원칙을 들어 토지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주시 의견 이행여부를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동주택 건립 승인 과정과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도시생태유지 등 하천변 위압감 해소와 개방감 확보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수변공간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서남부순환로 개설 등 교통정체 해소에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남부순환도로(폭 35m 연장 1,220m), 삼천 좌안도로(폭 25m 연장 1,460m) 2개 노선이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도로개설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지조성공사에 앞서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은 2009년 9월경에 실시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등의 의견을 참고,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삼천동에 걸쳐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지구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뜻이 깊으신 제안으로, 개발계획 변경전에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정할 경우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 등이 반영되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의 거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 김현덕의원(삼천2·3동)

▶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 및 근린공원 조경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236회 정례회 때 삼천2동 등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께서는 시정에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 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 215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는 약 22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삼천2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는 대부분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 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청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에 바짝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불량난으로 인하여 화재가 났던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또한 나무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왔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 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일괄하여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집행하지 마시고 삼천동이면 삼천동 일정구간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확대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동 등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2동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 대하여 시장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천2동 근린공원은 전주시의 녹지와 균형 잡히지 않은 상수리나무, 잡풀, 소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

다. 삼천2동 주민들은 삼천2동 근린공원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전주시의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컴퓨터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아름다운 녹지를 일부 시민들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본 동영상은 2008년 10월경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대형 화면을 봐 주시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정읍방면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우전교까지 큰 대로인 도변에는 약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시민들의 손에 무참히 상처를 입혀 전주시를 찾아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리를 채취하기 위하여 벽돌과 블록 등 심지어 오펜마를 이용하여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시장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길 가로수 플라타너스 수종갱신을 일정구간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천2동 근린공원을 특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녹지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 및 근린공원 조경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김현덕 의원님께서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 및 근린공원 조경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를 관상수로 수종갱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도 제236회 정례회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은행나무 등 22종 4만 9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삼천동등 3개 구간에 총연장 8.3Km 걸쳐 1029그루가 택지조성과 도로개설시 식재되어 현재까지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천2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 택지조성 당시 식재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면서 무성한 나무 수형으로 인해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고압선 접촉으로 안전사고 우려등 시민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우선적으로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

수 관리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고, 그중 4억원을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삼천2동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컴퓨터 특성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천2동 그린공원은, 삼천 거마경로당 옆에 위치한 1만 1334㎡ 면적의 공원으로, 1992년 삼천택지개발 조성시에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입목상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하층 식생목이 잘 정비되지 않아 경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공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전반에 대한 입목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상물을 통해 설명해주신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동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로수 훼손사태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훼손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의원님의 가로경관 및 공원 수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박혜숙의원 (비례대표)

▶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부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은행 돈줄이 다 막혀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말쑥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녹색뉴딜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다, 해서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게 됐으며 유치에 열을 올렸던 콜센터가 지금은 오히려 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남원시의 한 콜센터는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남원시에서 5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2008년 12월 1년 4개월 만에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연말을 기해 설립한지 1년 2개월만에 114 전화번호부와 파란텔레콤이 부도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6월 18일에 114전화번호부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하여 2007년 9월 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10층에 100석 규모로 연간 20여 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고, 전주시역에는 10여개의 콜센터에 여성 상담요원이 종사, 연간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주시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 6억 1500여만원과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전주시가 그 동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서 100석과 파란텔레콤에 50석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해 버렸고 이 두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시, 전체 지원금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9년도 2개월 동안, 전주시 종합고용센터의 자료 현황으로 보면, 장애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수는 20대~30대가 625명, 40대~50대가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도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고 부도나 직장 폐쇄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콜센터 6개 업체에 740석, 쏟아 부은 돈만 27억 3700만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이 콜센터가 연속 부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미 부도 난 114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지원한 6억 1500여만원과 사무실을 폐쇄한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지원한 8700여 만원을 회수할 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콜센터 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운영의 묘를



살려야 간반 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민생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동참하게 하며 또 여성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성의 자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하는 현재 덕진구에서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반, 반찬가게 창업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반 등 자격증 취득반을 완산구에서는 플라워샵반, 제빵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닥종이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교육비와 강사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능하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교육시간이 모두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당시부터 우선권을 주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 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간에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더 안정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봅시다. 주간에만 교육하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야간반을 개설하여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설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께서 콜센터 유치사업의 전면적인 점검과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의 야간반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창출 전반에 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114전화번호부 콜센터와 과란텔레콤 부도로 그간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회수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14전화번호부는 2007년 9월 대우빌딩 10층에 입주한 100석 규모의 광고 수주업체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등에 6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14전화번호부는, 타 콜센터에 비해 여성 근로자 취업연령을 50대 초반으로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년 10월, K사와의 광고비 수수료 문제로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유동성 자금압박으로 금년 1월 2일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114전화번호부에서는 2009년 3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지난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재개하라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14전화번호부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직원채용을 시작할 계획으로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대표이사에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지원금 회수문제는 지난 1월 5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원금 회수를 위해 2009년 1월 5일 사업장 봉인 조치와 함께 임대보증금 1억원을 압류하고 보조금 환수반납고지를 하였으며, 기업 회생절차에 따라, 다음주부터 영업을 개시되면 6개월 이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과란텔레콤은 2005년 11월 17일 서노송 동 대우빌딩 12층에 입주한 50석 규모의 SK텔레콤 통신기기 전화판매 회사로 8600만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6일 경원동 덕숭빌딩 4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정부의 개인보호 강화정책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어 작년 12월 15일 사업장을 자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회수를 위하여 파란텔레콤 대표 이 정민 소유 재산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소재 장미아파트 4채에 대하여 2009년 2월 12일 근저당 설정을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원리금을 반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납조건은 1년거치(이자상환) 1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채불임금과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파란텔레콤의 경우, 퇴직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전원 지급되었으며 114전화번호부는 퇴직자 33명에 대하여 임금 2600만원과 퇴직금 3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현재 채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3일, 대전지방법원의 114전화번호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대전지방법노동청에 채당금 5700만원을 신청하여 2009년 4월 10일경 채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콜센터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센터 산업은 막대한 기초투자비가 투입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고용창출 및 최대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컨택센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센터 1석을 유치할 경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연평균 200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11개사 1265석 규모의 콜센터를 유치하였고, 현재 파란텔레콤과 114전화번호부를 제외한 총 9개사 1145석의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콜센터까지 포함하면 약 1500석이 운영되고 있어, 연간 약 225억원의 임금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콜센터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성장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콜센터 부도시 시 지원금 전액 회수에 대한 문제는 작년 7월부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업 중인 콜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임금채불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와 유가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으로 솔루션과 병행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시가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지원 교육을 야간에도 개설·운영하여 더욱 많은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여성일자리갖기 지원사업으로 여성직업능력교육을 18개 과정 450명을 실시하여 가사 및 육아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훈련교육기관에 1억 2300만원을 지원, 실내조경 인테리어, 피부 관리사, 도배 전문가 과정 등 22개 과정 600여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한 부모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야간반을 개설하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야간반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야간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강사 등 제반 운영비 부담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야간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식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와 참여도등을 분석, 야간반 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오현숙의원(비례대표)

▶ 택시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주기적으로 요금인상이 되어도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택시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전주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행정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14일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을 올리고 거り요금도 올린 바 있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기 위해 택시업계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상황과 자치단 체별로 요금 인상시기가 다를 경우 혼란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택시 사업주들일 뿐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요금 인상의 수혜를 입기는 커녕 택시를 타는 손님 이 한층 줄고 사납금 인상과 연료비 부담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 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돌아오는 것 없이 요금 인상과 더 많은 부담만 지게 될 뿐입니다.



택시업계의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지 문제와 준대중 교통수단으로써 택시가 공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그 의미를 잃고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택시행정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문제 또한 너무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먼저 전주시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주시 24개 전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주유한 부분까지 회사가 주유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고 매입 자료로 이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전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회사가 주유한 금액과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택시회사와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합해져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합해서 발행되었습니다. 택시업체가 주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매입으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방식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팔복동 S교통의 2005년 유가보조금 신청서입니다. 오후 수량 40 l로 표시된 것은 1인 1차제를 하는 차량입니다. 이상한 것은 40 l가 지급량인데도 오전 수량으로 28 l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가보조금 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 주유액과 그에 따른 실제 유류보조금 개인지급대장을 사업주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가보조금 신청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최소한 정확한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따른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액, 세금계산서, 그리고 실제 지급대장을 택시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탈세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에 의법 조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과다청구 등 불법의 혐의가 짙은 S교통에 대해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1차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택시 근무는 2교대제가 줄고 택시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하향시키고 있는 1인 1차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의 방치 속에 1인 1차제의 통상적 기준인 30%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주시의 1인 1차제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광운수는 100%, 신진교통의 경우에도 8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인 1차제 운전자는 2교대 운전자에 비해 2~3시간 추가 운행을 함에도 기본임금 및 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사고율 또한 교대차량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 50개 택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인 1차제 등의 근무형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택시 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은 택시업체와 택시노동자들이 자율교섭을 통하여 1인 1차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1인 1차제의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 주십시오. 끝으로 전주시에 신고된 택시 회사들의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24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중 14개가 산업별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노동청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1개가 전북도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가 전주시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행의지를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는 24개 회사에 차량대수 1599대 20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어려운 조건을 견디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 택시행정의 또 다른 현주소입니다. 택시사업주들은 운전자들을 구하기 어려워 1인 1차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운전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택시면허를 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실제로 택시 노동자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택시사업 주의 고충에 대해선 말하지만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택시 행정으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택시와 관련하여

오현숙 의원님께서서는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사업주의 실제 지급대장 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보조금 청구시 주유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7년 타 시·도의 일부 주유소 업주가 화물차주와 공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대장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 등 부정 청구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에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허위 청구 사실 유무 등을 조사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전주시도 금년 1월에 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적발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탈세관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로 의법 조치등 재발방지 대책과 시교통에 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국세를 탈세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해당 세무서로 하여금 조사 하도록 협조 요구하겠으며,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시교통에 대하여는, 사실 유무를 조사하여 불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중지와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

나, 앞으로는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인 1차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1차제는, 장시간 근로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개인택시보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등으로 택시운전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운전자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1차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지난 2007년 2월, 광주지방법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재조치를 요구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회사들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불법 내용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업체 단위노동조합은 9개 회사이며,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고 된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중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택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이명연의원(인후1·3·우아2동)

▶ 전주시 대중교통 미연결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소수시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과 아름다운도시 전주 만들기 사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 33개의 행정동에 221개의 마을이 있는 상황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예비차 10대를 포함하여 402대의 버스가 121개 노선을 매일같이 대당 11회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21개, 덕진구 15개 총 36개의 마을에는 아직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 곳곳의 마을에 혼자서 버스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7세미만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6610명의 어른과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택시라는 또 다른 교통수단도 연결되지 않아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연결점에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멀게는 2km까지 되는 것을 볼 때 마냥 회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산골짜기 외딴집까지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도로 측면공간 일부 확보와 회차지 공간조성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중형 승합차를 마을버스로 대신하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점까지의 운행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항상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에 참고로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36개 마을의 현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로수 수종선택시 인도블럭 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전주시 도로변 인도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의 적합성과 산소발생량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되어 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수종은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식재 후 가로수 주변 경계석과 인도블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 식재되었는지 궁금하여 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곳곳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참고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도로변 인도블럭을 교체한 현황을 보면 교체 사유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를 실시하였고, 연간 약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서와 같이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와 경계석, 심지어는 도로까지 뚫고 나오는 부분은 전혀 문제의식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식재방법이나 가로수 수종선택 그리고 가로수 주변 공간확보면적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가로수 주변의 인도블럭은 교체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보니 어린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의 보행시 넘어지기가 일쑤이며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보행 중 보도

블럭이 흔들거려서 물이 튀겨져 나오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는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사고에 노출되어지고 노약자들은 보행 중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가로수 식재시 수종선택에 있어서 뿌리가 옆으로 뻗는 나무가 아니라 아래로 내리는 수종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월이 지나 나무가 크게 자랄지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주변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문제시 되는 곳들의 인도는 조속히 정비하여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주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에서 깨끗한 전주를 만들고 소중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땅속에 묻히지 않고 재활용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 나오게 되는 캔, 유리병, PET병,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전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38개의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수거하여 재활용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에서 매일수거를 하고 있다는 분리수거대에는 평일인데도 여기저기에 재활용품들이 수북히 쌓여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누구든지 자신의 집 앞이나 자신의 상가 앞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고 구석진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 또는 지저분한 또 다른 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다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전반기 제주 도비교시찰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 및 쓰레기 배출대를 클린하우스란 이름으로 야간조명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관광도시답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회 예산정책 연구회에서 지난 3월 2일 서울시 은평구청을 방문했을 시 은평구 내에 재개발지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수거대가 전혀 없이 길가의 투입구에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지하통로에 흡입시설을 갖추고 지하에서 자동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한 도시를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338개의 총 제작설치비 3억 2264만 5000원을 투자한 대당 24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알뜰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5~6개 150만원, CCTV 2대 설치비 150만원, 계량기, 전등, 폐건전지 등 보관장소 제작비 1200만원 함께

1500만원 580개소 87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클린하우스가 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렸듯이 1개소 설치비에서부터 62배가 넘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 전주시가 쓰레기로 얼룩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 내 가 아닌 도심 외곽의 길이 140m 교량 재가설 공사비 91억원 중 미관 관련 공사비만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수탁대행업체의 해당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트폴리스 전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시 구석구석에 나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것도 폐전전지수거함 표시 아래에는 수거망도 없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량의 재가설 공사에 경관공사비가 투자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주시 도심외곽 그것도 타 도시민의 왕래가 거의 없고 통행량도 그리 많지 않은 길이 140m 교량의 재가설 공사에 경관공사비가 20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대중교통 미연결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먼저, 마을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과, 진입로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에 회차지를 조성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시내버스가 1일 121개 노선을 392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36개 농촌마을은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적게는 150m, 많게는 2km를 걸어 다니고 있는 형편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노선조정, 순환노선 확대, 무료 환승제와 비수익 노선으로 시내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16개 지역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운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운행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회차지가 없어 시내버스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 반월동 암실마을은 노선을 변경하여 조기에 운행되도록 하

겠으며, 거주인구 및 소규모사업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확장, 교행 공간 확보, 회차지 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형 승합차를 마을버스로 대신하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운행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시내버스노선체계는 도심지역과 시 외곽 지역 및 인접 시·군 지역을 직접 연결하고 있어, 노선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 증가, 노선평균 승차인원 감소, 수익성 및 운송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6개 마을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대부분 마을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지역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마을버스 특성상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가로수 수종선택시 인도블럭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도로변 인도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수종선택시 인도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24개 노선(244km)에 은행나무등 22종 4만 9666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은행나무(25%)와 느티나무(23%)가 전체의 48%로 주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가로수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본 바와 같이, 여러 노선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블럭, 도로경계석 들림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천근성(淺根性) 수종인 낙우송, 메타세쿼이아 조성 지역인 평화동 만내1길, 가리내길 등의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올해 초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인도요철이 있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완산구 관내 9개 노선 4170m와, 덕진구 관내 5개 노선 2052m 등 총 14개 노선 6222m로서, 현재까지 완산·덕진 각각 2개 노선씩, 모두 4개 노선 550m를 정비 완료하였고 400m는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요철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노약자나 장애인등 시민들의 안전 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천년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수종선택에 있어서 생육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부합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노선에 대하여도 녹지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선진적인 나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2007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총 1338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청소관련 봉사단체 회원, 일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거함 색상과 배출품목, 그물망 크기와 색깔까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 미관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으나 재활용수거함 주변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불법쓰레기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폐전전자수거함 등 일부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그물망 등이 없어진 곳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번 기회에 모두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대의 개선은 타 도시 벤치마킹 등 도시미관과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관광객과 시민의 왕래가 많은 한옥마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시범설치하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과 설치장소 확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량의 재가설 공사에 경관공사비가 투자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은 삼천교 재가설 공사의 내용과 경관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가설된 (구)삼천교가 재난 위험시설 C급으로 판정되어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고 2003년도에 임시가교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대형 덤프 등 중차량 통행으로 소음·진동이 심하고 용접부 이탈이 진행되고 재난사고 우려가 있어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삼천교 가설공사는, 폭 20m에 연장 140m를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91억원 중 경관 및 조명공사비가 20억원으로서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의원님의 말씀 또한 충분히 이해와 공감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삼천교를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완산체련공원과 모악산 등산로 및 금산사 진입로, 그리고 지난해에 준공된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삼천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삼천교 밑을 통과하고 있어, 명품교량으로서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3차례에 걸친 아트폴리스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의 경관시설 및 조명시설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경쟁력의 기본 요건인 공

공디자인이 국가 및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민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삼천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여 아름다운 전주 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교량으로 만들 필요성도 함께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통영의 통영대교, 사천의 창선·삼천포대교 등 요즘 모든 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의 견해 또한 신중히 고민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은 어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늠하기 보다는, 전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감응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의 크고 작은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임병오의원 (중앙·풍남·노송동)

▶ 외국어고·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얼마 전 임실 기적이 임실 사기로 뒤바뀐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을 놓고 많은 주민들은 지역교육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직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인재 양성 사업의 충성 없는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기공식을 가졌던 98명 수용규모의 '풍남학사' 일 것입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는 말로써 배 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참 의미를 전주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역 인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고 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꾸준히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서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 염원 속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설립된 전북과 학교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에 의해 익산으로 2005년에 설립된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군산으로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군산시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경쟁일 것입니다. 사회 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시민모두의 염원속에 2002년 9월부터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쟁을 통해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여왔지만 2003년 2월 22일 군산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진행된 유치운동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적 접근과 지역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전주시는 다시 급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구체화 하였지만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군산교육청, 전교조 등이 시점의 부적절성을 들어 시기상 조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또다시 전주시의 외국어고 유치는 지자체의 욕심으로 치부되며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는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여건 조성에 있어서 최적합적 기준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의 유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 우할 도공·주공 통폐합 법안은 전북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토·주공 통합법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였고,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으로, 정부는 통폐합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통합을 전제로 재무분석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사와 사업부의 유치 전으로 변모될 공산이 큰 것으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은 이해득실을 고려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혁신 도시특별법에 따라 특수 목적고 설치는 도공·주공 통폐합의 시점에서 전주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의 의미는 혁신도시 유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인구 유입에 매우 유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산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및 새로운 특목고 유치는 전주시가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주는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써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64만 명의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도시의 모티브를 줄곧 지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교통,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많은 교원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우수학생을 지도할 외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보습기관이 풍부함에 따라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된 유명학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여건 조성이 좋아 타 시·도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으로 우수인재양성(63억원 조성, 2016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추진과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32명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141명으로 확대(8억 8000만원) 하여 외국어 능력향상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실로써의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교육 대란의 시대 속에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상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함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제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문계고가 도입됩니다.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30개교 2010년을 목표로 울산



과 강원도가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고는 21개교 우리 지역의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 는 6개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2011년까지는 150개교 지정, 운영 방침)과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2011년까지 50개교 지정, 운영 방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는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지역 균등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 며 입시위주의 특목고가 아닌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영재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주시의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가 이르는 못하지만 또 한번의 기회가 시기적절하며 현실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산고등학교 는 전국적인 명문고로써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량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산고는 2000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2008년에는 15억 85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도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대 38명 입학과 2009년도는 28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산고 입시 현황을 보면 총 384명중 71명이 도내 출신으로 18.5%에 그쳤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출신 합격자는 181명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효과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상산고의 명성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현황 속에 또 다른 대안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의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충원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전주유치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산시와의 유치경쟁에 실패하고 2004년도 국립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를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촉구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

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것은 교육뿐입니다. 전주시 교육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헛되지 많이 하고 타시·도처럼 우수인재에 양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외국어고·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임병오 의원님께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각종 교육환경개선 사업, 평생학습센터운영, 풍납학사 건립,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등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둘째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질문해 주신 임병오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받은 도 교육청에서는, 전주에서도 외국어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시가 사립 외국어고를 유치할 경우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어고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제반여건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로서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 6일에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명문고인 상산고등이 있어 타 혁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가족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의 특목고의 유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수의 증감문제, 특목고의 지역제한으로 인한 수요의 판단, 그리고 국비등 교육재원의 확보, 시민여론, 교육계의 협조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유치시기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와 외국이고, 특목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교육인프라가 가장 우선입니다. 수도권소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는 초·중·고 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바, 국비를 지원받아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유치할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기업유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목고 유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여건등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시고, 특히 혁신도시 유치 추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병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전주시 보행자도로 안전에 대하여

전주시는 천년도시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도시로서 아트폴리스 명품도시로의 꿈을 준비하며 사업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특징은 도시계획과 건축물의 경관과 더불어 도심 곳곳이 광장과 보행권 확보등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OECD선진국들의 도시들은 편리한 자동차 환경을 포기하고 녹색교통수단 보행자가 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 좋은 도시란 걷고 싶은 도시일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일본의 가나자와시장을 만났을때 라마다 시장계의 소원은 구도심에 택시도 못들어오게 하고 모든 시민들이 전주로 말하면 4대문 근처에서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해나 에너지문제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게 차도는 물론 보도마저 주차장으로 내주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가 거리는 걷기 괴로운 거리입니다. 특히 도로가 이러한 지언정 대한민국 주택가의 도로는 걷기 괴롭고 불편한 도로입니다.

특히, 장애자와 노약자들에게 더 큰 불편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중심도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배경은 보행권 침해로 인해 인권침해 실태 및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검토가 2007년 1월에 있었으며, 보행자가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를 났을때 법에서는 교통보행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묻도록 판결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전라북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는데 관리하자상 도로관리 기관인, 일부인 자치단체도 15%를 배상하라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이 2007년 7월 8일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가 사고가 나도 구상권을 청구 받을수 있는데 그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판결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주시도 2000년 1월 전주시도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9년도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 제정하고 발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국가에서도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2년도까지 1조 5천1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이 확보되면서 보행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율 중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중에 사망했다는 것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입니다.

특히 6m미만의 생활보도 사망사고도 47%(2008년)입니다. 주목할 것은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7년 통계로 보면 14세이하 어린이 128명(63.4%), 61세 이상 고령자 1,110명(52.2%), 전주시 노령화지수 43.6%,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시민 1,000명 당 46.6명, 2007년 11월말 29,258명, 전년대비 6.5%증가 노령화 지수와 장애인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구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공사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설치를 선택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인 사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인구10만명당 5.28명으로(네덜란드 0.51명, 스웨덴 0.55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주시의 도로를 보니까 대로는 54개 노선에 152km의 총 연장길이를 가지고 있고 중로는 314개 노선에 233.5km가 있고, 소로는 2,784개의 노선에 441km의 총 연장길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로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간 무엇을 했는가, 작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주택가나 공동주택의 생활형 도로, 12m미만 도로를 우리는 소로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주시 예산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동부우회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백석제 입구까지 약 25억의 시비가 되어있는데 국비가 25억이 있고, 그래서 대응 시비로 되어있었습니다.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 요목 실천사업 69번에는 장애인에 위한 도시생활에 공약이 있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데도, 이 공약이 아주 중요한 공약인데도 예산 환분 되어있지않다는 것은 이 공약이 사문화 된다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데 예산의 배정순서에서 밀린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도를 위해서 2010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전체 보도 1,634km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453km를 정비합니다. 계획안에는 평탄성, 경사, 틈새, 보도턱, 시공방법 등 5가지 보도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5억의 시범사업을 받은 아주 훌륭한 동네입니다. 2009년 동충로사업에 안전환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42억을 투자하여 장애인, 여성, 노약자들을 위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6m이하의 소로를 일방통행로로 235개 노선을 지정했으며, 26개 신설도로는 보행권 안전확보를 위한 소로를 개설했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제언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우선도로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연도별 장기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각 학교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생활권안전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보행권확보는 생활환경정비의 기본축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소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제정한 전주시 보행권확보에관한 조례 제3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종류는 보행환경개선, 교령,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등입니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제정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폭 10m 이상 도로, 통학로, 보행권확보 필요 및 지역주민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수렴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간 보도설치(학교, 복지시설에 연결되는 도로) 등입니다.

전주시를 대표적으로 샘플링 하여 구도심과 아파트 신도시로 나눠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1979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약 30년동안 했습니다. 1,2,3,4지구, 6지구가 어디냐, 백제로 있는데 이후2동에서 금암동 일부지역입니다. 7지구가 어디냐, 송천동지역입니다.

그런데 7지구가 대토지주들이 좀 많이 있다보니가 지구지정을 받지못해서,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보니가 난개발 지역이 송천동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와 소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학교주변에 소로나 상가는 차와 시민들이 숨박꼭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의 안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현장확인 사례를 사진과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쌍용아파트 주변을 쌍용길이라고 하는데 노폭이 8m인데 연장은 480m이고, 성황당길은 송천 파출소에서 제일아파트 구간에 10m 노폭에 600m의 도로인데 인도가 하나도 없고, 보람길이라고 회생약국 비사별 사거리에서 송천성당까지 8m의 300m길이기도 마찬가지이고, 송학로라고 제일 이지역이 문제인데 10m의 노폭에 210m의 길인데 아침에 차하고, 송천동이 한 5천세대가 그길로 쏠아지고 있고 솔내여고가 있어서 통학로인데 차와 보행자 학생들이 같이 즐겁게 가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통학로입니다.

송연길이라고 짧은 구간의 270m의 연장길이에 8m 노폭은 솔빛중학교와 전라고에 통행로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도 차와 사람들의 인파속에서 아침출근길이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문제가 되고있는 송천주연길이라고 뜨란채 아파트를 비롯하여 3,000세대는 인도가 없다보니 차와 사람과 취객이 혼돈되어있는 노폭 10m에 연장길이가 150m 도시입니다.

이게 신흥 아파트지역을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했고 구도심에 오래된 주거지역은 더욱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흥아파트 지역과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샘플링해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은 필수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부터 문제가 있겠나, 하여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건축심의과정에서 보행안전자 도로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도로 사업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억5천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보행자를 위한 3m도로가 되어있는 지역이므로 보행자도로, 안전도로의 시범 사업지역이 아니라 가로경관과 가로환경정비에 아트폴리스적 접근의 도로이지 보행안전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형 도로로써 6m필의 주거 이면도로라든지 12m미만의 소로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이런 보행 권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해서 조례, 예규, 훈령이 있는데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2010년도 부터는 예산안에 보행자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

하고 주민공모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면 쉽게 접근할수도 있고 또 아니 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본 예산에 보행권 확보 예산을 해주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일부분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성립되면 올해안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때 필요한,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사업계획및 중장기 계획,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야겠고, 보행환경 현황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47%가 보행자 사고입니다. 차도 안전하고 보행자도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노력이 교통약자들에 희망이었으면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성을 갖는 보행환경 구축을 요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보행자도로 안전에 대하여

김남규 의원님께서서는 2006년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제 시행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설도로 인도설치 의무제는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에 의한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주시 예규로 2006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신설되는 도로폭 10미터 이상 도로와 도로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중에서 통학로 및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보도설치 요구시 의견을 수렴하여 인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침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으로 8개 노선에 인도 1,609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스쿨존 정비사업 시행으로 42개 노선 8,358미터의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행중심 도시건설을 위해 신규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인도시설은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이나 2010년 본예산에 보행권 확보 용역안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및 보행환경현황 조사와 연차별 계획내용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다소 있어 이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 개설된 중로 및 소로의 인도 미시설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포함한 전수조사 용역을 최소한 내년 본 예산까지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아트폴리스 추진과 연계한 걷고싶은 도시, 보행자가 편한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준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철영의원(삼천1·효자1·2동)

▶ 전주시 청소년 자원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주, 그리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전주시 전체 인구의 25%, 16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아동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청소년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이며, 그 지역의 미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역량을 길러 내는 것이 중요하며, 능동적인 민주사회의 전주시민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나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백서 및 한국 청소년 상담사 상담통계에 따르면, 학업성적, 왕따, 이성문제, 진학문제, 음주, 흡연, 폭력, 자살 및 인터넷 중독문제 대한 상담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 렇게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지원 센터 등이 있는데 그 중 전시 청소년 지원 센터는 비상근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상담 업무외에도 시설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학교 출장상담, 부모교육, 여름캠프, 학생무료 심리검사등 청소년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상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상담순서가 밀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3월 12월에 발표한 운영지침서에 보면, 한두명의 인원으로 상담은 물론 활동지원까지 추진하여 청소년 지원역량이 부족하고 지역



내에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처불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각종 학습 활동과 공연 및 문화행사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는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있으나 전문 상담사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의 안양시와 안산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08년말 기준 63만3천370명이며,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수는 15만5천202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수는 비상근소장 1명과 부장 1명, 상담사 1명 등 총3명으로 상담 실적은 1만561건이고, 2009년 예산은 1억 5백만원입니다.

우리과 비슷한 안양시는 2008년 12월말 통계 62만 279명중 청소년 인구는 24.6%인 15만2천 385명으로 우리 보다 적지만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수는 총 26명으로 전주시의 약 9 배, 2009년 예산은 8억6천3백만 으로 우리시의 약 8배입니다.

안산시 역시 2008년말 73만4천731명의 23.1%인 16만 9천754명의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의 총수는 21명, 2009년 예산은 4억8천만원입니다.

물 론, 국비 지원의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 즉, 지역사회 위기의 청소년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의 상호연계 시스템구축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사업을 지원 받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인적 물적 서비스 규모차이는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야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대체 전주시 청소년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청소년들의 고민조차도 제대로 상담해줄 수 없는 불쌍한 전주시 15만 5천202명의 청소년들에게 시장께서는 뭐라 변명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실태가 어떠한지 더욱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산시는 전주시보다 인구도 청소년의 숫자도 약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전주시보다 많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청소년은 앞서 설명한 CYS-Net 사업유치로 전주시보다 양질의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국 비는 3천8백만원 지원 받지만 자체 시·군비는 1억1천만원으로 전주시의 8천 5백만원 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CYS NET 사업이 국비와 자체예산 50

대 50 매칭예산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청소년 인구가 전주시의 약 1/50 정도인 순창군 예산이 전주시 예산을 능가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임실군의 청소년 인구수는 전주시의 1/30 수준에 불과 하지만 예산 지원과 직원 수가 많다보니 상담 실적이 전주시의 두배 가량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청소년 문제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안양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상담센터 직원 수 9배, 예산은 8배에 상담 건수는 약 10배정도인 12만4천 280건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는 1천6백27명으로 전주시의 약 1/100 밖에 안되지만 도비 지원은 2천만원씩 일률적입니다.

각 시·군의 인구 비례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도의원과 해당부서 공무원 및 도지사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좀 더 많은 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보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비추어볼때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전주시와 무관한 듯 합니다.

15만5,202명의 전주시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재원과 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만족할 만큼의 계획은 아닐지라도 본 의원과 전주시민, 그리고 15만 5천여명의 전주시 청소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부쩍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정불화등 경제난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유행병처럼 텔런트나 영화배우등 스타들의 잇단 자살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베르테르 효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본 의원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 전주시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안정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치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장차 우리 전주시민에게 다시 크게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지역구인 효자 1동과 효자 2동, 삼천1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써 지역구 내의 현안사업문제를 시장께 문제제기하고 답변을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옳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과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비교표를 통해 심도 있게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와 안산시 등 타시의 청소년지원센터는 CYS-NET사업까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상담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비해 우리시는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상담건수 등에 대해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시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YS-NET사업은 정부방침이 우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인근 시·군을 담당하고, 또한 권역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도청 소재지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중복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그리고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사업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상담 원 39명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은 62,334건, 위기청소년 연계지원은 19,792건으로 대부분 수혜자는 우리 시 청소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권 역별 청소년 전화 상담체계를 말씀드리면, 전북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간의 경우 완산구는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덕진구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완산구, 덕진구를 총 망라하여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존정하는 우리 김철영 의원님이 지적하고 제시한 바와 같이 16만여명에 이르는 청소년에 대해서 향후 미래 전주를 이끌어가는 전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등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비지원이 2천만원 씩 일률적인 것은 청소년 수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비확보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도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예산에 비해 자체예산이 적음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의 청소년 수에 관계없이 도비 2천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전북도에 문제제기와 건의를 통하여 2010년부터 사업 실적 등 시·군 별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시 청소년지원센터 자체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93백만원이던 예산을 금년도에 12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5백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군보다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계발시키고 사회참여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나가고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거시적이고 세심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호황이 결국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나라는 경제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미국발 미국형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결코 단기간 내에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IMF당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환관리의 구조조정을 한바탕 이룬 탓으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리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예측되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사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경제정책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를 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방의 실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한 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2%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1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작년 2분기 9.9%에서 3분기 5.8%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가 4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한 것입니다. 소비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 했다고 합니다.

대형 판매점이 이러니 중·소매업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 1분기 이래로 최대 폭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경제 동향보고를 보면,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경제는 부진 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 활동 및 고용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2월중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서는 0.7%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6.2% 감소하면서 부진이 크게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북경제는 붕괴에 이를 것 이란 예측도 공포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2009년도 1월중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효과 및 백화점 판촉 강화 등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 비 2008년 12월 3.3%, 2009년 1월 20.7%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롯데마트 전주점 11.27% 증가, 송천점 12.23% 상승된 것입니다.

이는 신규 개장에 따른 판촉 경쟁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소매점 및 판매액 증감을 추이와 고용관련 주요 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2월중 도내 취업자수는 79만 1천명으로 전월 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달에 2천명씩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 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모 일간지에 투고하여 주장 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

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고임금의 정규직 인원은 줄고 임금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임금 지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현재 추산하면 850여 만명, 이 땅의 노동자의 50%(2008년 3월 현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인지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 넣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입니다. 이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여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창구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폭주하였는데도 은행원은 옛날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는 뭘 말하느냐, 아무리 은행이 흑자를 내어도 소득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가만 살찌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주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익분배는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다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땅의 노동자만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고 저임금 지대의 임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즉,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세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고용 유지 및 신규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중부세 폐지 또는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는 희망을 걸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퍼 추경 예산안이 무려 28조 9억원에 달한다는 수퍼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 5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등입니다. 이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에 배분될 것이고 이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본의원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경제에 대하여 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 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틀에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어느 지자체 하나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만 경제가

나아지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서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게 접목시켜 신속하고 뛰어난 경제대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마련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 키우기 5 대 역동산업이 있습니다.

한 스타일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 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중장기적으 로 투자가 계속되어 몇년 또는 몇 십년 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난을 예상하고 마련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 5대 역동 사업 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 솔 직하게 본의원도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는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상 측면에서 전주 시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제국 예산은 약 649억원이고, 성장 산업 과의 예산은 약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진흥 과는 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산업과의 예 산은 2008년에는 90억원이었는데 2009년에 무려 123.8%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전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급격히 추락하 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전 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단기적 대책은 전주 시에는 없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송하 진시장께서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대책은 있 어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속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이나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 다. 그러나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수퍼 추경에 맞춰 전주경제에 맞는 대책을 세 워야 하는 것이 당연과제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의 업무에 대 한 마인드, 즉 심리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으로써 행 동과 능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업에 서는 신입사원 채용시 마인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 여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를 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여 전주시 공직자들이 어떤 심리상태인가에 따라 작게 는 전주시민의 안녕과 크게는 전주시의 발전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교위 공직자, 즉 마인드는 어떠한가?

물론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전주시민이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전주시 공무원인가에 혼란이 온다면 전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적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정리한 대안의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TF팀을 구성하여 특별 관 리를 해야 합니다. TF경제팀에 최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드관리 보다는 소프트관리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과감하게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일몰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업이 되었어도 근무를 잘 하 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계를 내고 평 가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탁 취업 교육에 있어서 수료후 취업한 후에도 근무 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소위 3D 직종이라는 업종에 대 하여 시설개선 및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 원을 하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소상공 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상 어려운 수급자에게 집중 되어 있지 않고 혹 부정한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예산이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감시하기 위 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2009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 를 위한 조기집행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조기집행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 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본의원 이 상세하게 점검해본 결과 예산 집 행만 진행되었지 집행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평가에 의한 정책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업 진행후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에 어 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년도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란, 노가 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며, 사가 노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려는 일시적인 선심성 환대 에 의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더욱 아 닙니다.

노는 신성한 노동력에 의한 노력에 의한 정당한 노동 의 대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며, 사는 노의 진



솔한 협력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하고 정직한 분배를 통하여 노와 사의 진정한 공생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간부 몇명의 의식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부교육, 산업시찰등 노사 정 화합을 위한 예산 투입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고 예산 또한 혁신적으로 늘려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인 즉 전주지역의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전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추락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실업자들의 양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약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이중 15조 2천억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실업대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생경제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뛰어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송하진 시장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예산집행에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러나 단순히 중앙의 지침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지방재정의 경기부양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재정운용의 묘를 살려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실을 조기집행 상황실로 운영중이며, 매주 금요일 민생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 를 갖고 조기집행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전주시 전체 예산 중 민간에 대상으로 집행 하는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금 이 신속히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시 지급하는 선금 대상액 404억중 현재까지 15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도 보다 많은 하도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원도급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의 간소화와 단축으로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진행하여 발주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총 285건의 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월말 확정했던 이월예산을 1월말 조기 확정하였고, 저소득층 관련 경비의 우선지출을 통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예산현액 1조 1,236억원 대비 23.1%인 2,597억원의 조기집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6.1%의 1.5배에 가까운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의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실공사나 시민 불 편의 최소화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1억원 이상 259개 사업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 책임 담당제 를 시행하여 주1회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8년과 2009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후 사업평가와 평가후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와 실업 문제 해소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0대 전략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분야를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일용인부가 하루 약 400명 정도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연 인원 585명에 대해 19백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신규채용근로자,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반기 1회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의 장기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업체와의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수료후 훈련생에 대한 수료율과 취업률을 집중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 근로사업 분야는 매분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중 업원수에 따라 지원인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취업실적이 우수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인원배정시 취업률 70% 이상인 경우 요청인원의 100% 배정, 70%미만인 경우 요청인원의 50%를 배정하는등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고용실태분석을 통해 이직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사내교육 강화등 기업과 함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와 협약식, 간담회등 지원대상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인난, 취업난 완화를 위한 취업 박람회 수시개최, 취업을 제고를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기간 조정,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를 건립하는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줄이지 않고 일자 리창출과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지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신청 기업수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실업자교육 훈련생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으로 간부 몇 명의 의식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투입 방법을 과감히 바꾸고 혁신적으로 예산을 늘려 전주지역의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근로자 간부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등을 하고 있으며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주지역 전체의 근로자를 위한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그 방향과 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할 생각이며 노동관련 전문가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근로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산업정책이나 기업육성, 기업예우 등의 시책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에 대하여도 타당성 검증과 진정한 노사상생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추경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 건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의 경제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의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지난 1월에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민생경제 극복 대책반(실업대책팀, 중소기업활성화팀, 소상공인활성화팀, 시민생활지원팀, 농촌경제활성화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민생경제 T/F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추경에 산 집행에 실질적인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되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을 보강하는 방안 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팔복·조촌·동산동)

▶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작금의 경제 불황은 낙후된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에게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운 삶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선도할 마땅한 산업 하나 없는 데 최근 국토해양위에서 주공·토공 통합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새만금의 개발과 탄소산업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탄소산업은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는 무공해 차세대 산업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전주의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탄소소재는 금속, 비철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성이 우수한 신소재입니다. 탄소 소재는 고대사회부터 인류가 사용한 전통소재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가 최첨단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소재는 방위산업 무기체계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로 선진국이 공급을 기피하며 견제하는 국가 전략물자로 국내수급이 긴급히 요구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탄소산업은 환경, 에너지, 나노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기술에 탄소



복합재, 탄소나노튜브, 인조 다이아몬드의 3가지가 선정될 정도로 차세대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소재의 한 분야인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1/5가 가볍고 강도는 10배 강할 뿐만 아니라 전도성, 내열성, 치수안정성 및 내화학 약품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강도, 고탄성 첨단 소재로서 항공우주, 방위산업, 반도체 등 고부가 복합재료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대부분 낚시대, 골프채 분야에 사용되었고 90년대부터 산업용 소재 항공기의 구조재,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소재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산업용 소재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탄소 소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나 원소재의 기술개발 부재로 연간 6,750억원 규모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3대 메이저 업체를 앞세운 가격 덩핑 전략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덩핑판매는 국내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마다 국내의 탄소산업 육성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탄소산업이 높은 투자비용, 낮은 이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섬유의 세계 수요는 2000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60,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 러나 상기에서 밝힌 대로 탄소섬유 등 소재분야에 대한 산업기반이 미미한 우리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품소재 산업이 강한 일본의 주요 산업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의 산업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대일본 무역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낙후된 전북의 전주 팔복동에 차세대 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자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며 탄소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시장경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방침 정책에 대응하여 전주의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에 발표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방침에 따르면 10년간 8천500억원을 투자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로 2015년에는 소재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급한 소재산업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나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품과 차별화된 정부 주도의 소재산업 육성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국비확보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요?

둘째, 전라북도의 전북권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활

용할 방안과 전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육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조 32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분야,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농기계 분야의 3개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탄소벨리 프로젝트는 탄소섬유, 플라스마, 탄소나노튜브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천소재 기술 개발부터 생산기반 구축까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성그룹과의 협약체결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제4의 물결이라는 플라스마도 대덕 특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특히, 플라스마는 냉각장치가 필요없는 우주로켓 엔진부터 인공태양까지 응용분야가 광범위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온 플라스마는 전주, 저온은 군산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같은 탄소벨리 프로젝트는 선도기관인 KIST 전북분원이 기업체와 어떻게 연관을 맺을 것이며 산·학·연 등 추진체외는 어떠한 공역을 해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분산 투자가 되거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간 유지됨으로서 용두사미의 결론도 예측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자동차·기계부품 분야입니다.

전북은 GM대우와 현대차, 두산인프라코어 등 승용차와 상용 완성차사를 비롯해 중장비와 특장차 라인이 집적화된 전국에서 유일한 곳으로서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해 전체 수출액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연계된 도내 중소 협력사는 200개사 정도로 부품소재 공급률이 10%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90%는 울산과 광주·전남 등의 부품소재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특히 전장부품과 도금 등을 중심으로 타 지방 의존도가 높아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완제품 조립라인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품소재 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되는 업체는 대기업들과의 공급 약속이 있다면 쉽게 전북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연구원 전북센터가 개원되면 이 연구소와 중소기업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개입하여 전북소재 중소기업체와 기술지도, 생산, 공급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탄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분야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식품산업에 쓰일 농림수산 원료생산에 필요한 IT융합형 차세대 농기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국 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군산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핵심부품, 산업기계 부품 모듈화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북대를 비롯 전주대, LS산전과 동양물산,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농업용 로봇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선도할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 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전주시 기계탄소기술원의 원천기술 공급 및 연관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셋째, 기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에 추진 중인 탄소밸리조성사업은 탄소섬유와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관련 산업을 집적화해 탄소섬유 원천소재 개발에서 응용제품까지 일괄 양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협약이 속속 잇따라 이뤄지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탄소복합재 관련 기업들까지 입주하면서 탄소밸리 구축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탄소섬유 시험생산 장비를 구축한 후 올해 안으로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유일의 완전한 탄소섬유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2013년이면 연간 1,000톤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국내 수입량의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탄소섬유에 대한 연구·개발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섬유 시제품을 내놓았고 올해 안에 탄소섬유 원사인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개발을 위해 160여억원을 투자, 3300㎡부지에 건평 2310㎡ 규모의 시험용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200톤의 탄소섬유 원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40억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 양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1,500㎡에 탄소나노튜브 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북과 전주에 탄소산업의 꽃이 피는 감격적이고 흥분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소재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어낸들 도내에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탄소산업은 알맹이가 없이 단지 화려하게만 보이는 껍질뿐일 것입니다. 즉, 탄소밸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 응용분야 기업체들의 탄탄한 생산기반이 요구되지만 현재 전주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기업 유치에서도 탄소산업 분야, 또는 부품소재 산업 관련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과 집적효과를 발생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계

획은 무엇인지요? 더구나 팔복동에 조성중인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의 3단계가 2012년에 완료되는 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산업 응용 분야의 기업체 유치와 활성화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국방기술품질원, 전북대 기술혁신 센터 등과 국방벤처타운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 협약이 의미하는 바는 탄소산업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의 신소재 개발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실 공히 전북과 전주를 전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조건을 구슬 꿰듯이 잘 꿰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밸리 사업이 성장하고 탄소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됨에 따라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인력양성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전 략산업인 자동차·기계 산업 현장에선 최근 3년간 700명 가량 부족했고, 신재생 에너지도 신규 일자리는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대학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사선 응용기술, 융·복합 산업 분야에만 일부 2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양성과정이 설치됐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민간 기업 연구소 역시 300여 개로 전국 대비 1.47% 수준으로 낮고, 그나마 영세한 벤처기업에 설치된 것들이며, 연구원은 박사급이 4.1%에 그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 이유가 도내 연구원들의 대우가 타 시·도의 연구소들에 비해 낮고, 교육·문화 등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 복서부 권에 특목고 설립, 대형병원 건설등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여섯째, 완주군 테크노밸리와 의 역할분담, 또는 협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 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했지만 완주군의 테크노밸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20만㎡규모로 조성되고, KIST전북분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4만㎡ 규모로 유치됨으로서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경쟁관계가 주도권 싸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탄소산업의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수년 내에 내수시장 공급량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실정에서 주도권 싸움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



려 역할 분담이나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의 첨단산업단지와 친환경산업단지 그리고 완주군의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대형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이 일대를 탄소산업 메카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2015년까지는 소재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른 정책과 예산 투입은 분명 우리시로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라북도도 2009년도 국가예산을 4조 4,8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3조 6,700억 원보다 22%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기준 정부증가를 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의 사상 최대 국가예산확보라는 결과는 수용성 높은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및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도 정부와 전라북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전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비빔밥하면 전주하듯이 전주하면 탄소라는 말이 회자되도록, 또한 탄소산업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연구와 고뇌가 깃들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탄소소재 개발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 헌신하시는 전주탄소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주를 살릴 차세대 무공해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깊은 관심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 탄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가 이상으로 연구하시고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처음으로 탄소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방침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전주의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국비확보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발표한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방침이 있기 이전인 2003년도부터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는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시 소유 재단인 당시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필두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의 소재로서 탄소섬유와 CNT 등 미래소재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

을 받아 탄소섬유 개발에 약 100억원, 원천섬유개발에 100억원 등 총 44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차구조 탄소섬유소재 기술개발, 에너지 저장용 탄소소재 국산화, 기계항공 경량소재 개발 등 탄소소재를 활용한 융·복합 소재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사업과 전주시 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수집과 전문 기능 중앙정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시장의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전라북도의 전북권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활용할 방안과 전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육성사업은 전주 중심의 탄소밸리, 군산 중심의 자동차 기계부품 클러스터, 김제 중심의 농기계클러스터 등 3대 클러스터에 12개 주요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간 인위적 배분이라기 보다는 기능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기계부품 클러스터의 경우 군산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차세대 지능형 센서시스템 개발은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 사업은 전주탄소기술원에서 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고온 플라즈마 사업도 위치는 완주군 이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북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사업은 전주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연구원도 그 추진 범위는 군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와 완주, 정읍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의 전주 생산애로기술 지원센터의 경우는 현재는 우리지역에 부족한 6대 생산애로 기술의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농기계와 산업기계 부품개발로 그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산업은 어느 한 분야와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닌 각종 특화기술과의 융합과 복합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지역 연구기관 및 혁신기관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기술, 성형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모기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기업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망 및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2년이면 탄소섬유 및 CNT 개발이 완료되고 본격

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모여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친환경복합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1단계와 2단계 개발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고, 3단계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의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우리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탄소산업 관련 기업이 우리시에 이전하거나 투자할 경우 최고 투자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국 최초, 전국 최고의 지원이라는 유치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5년후에는 관련 기업이 약 100여개, 연매출 1조원이라는 전주 탄소밸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진도를 보아가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은 현재 우주항공산업과 스포츠산업 등에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방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산업이나 건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에도 그 범위를 크게 넓혀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적인 전략은 탄소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되 그 분야는 첫째, 자동차 경량화사업, 둘째, 풍력발 전기, 축전기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셋째, 첨단기계기술과 연결하는 국방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내 자동차 대기업과 이러한 사업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어 전주국방벤처센터를 개설하고 관내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와 전북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구슬 꿰듯이 잘 꿰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도록 착실하고 차분하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계 자동차 및 탄소산업이 우리 지역의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주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학에서도 서서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학과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비전대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현

장 교육장을 개설하여 금년부터 연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북대 TIC에서는 매년 900명을 대상으로 재학생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총 460억원을 투입 하여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에 전주신기술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건축을 마치고 내년 부터는 연 1만명에 달 하는 신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되어 부족한 기술 인력의 충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과 복서 부권에 특목고의 설립, 대형병원 건설 등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좀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감응코자 합니다.

또 한, 부족한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36억원을 들여 국제탄소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이곳에 일본, 러시아 등 국 내·외 탄소전문연구소 10여개가 입주하여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테크노밸리와 역할 분담 또는 협력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5년전 부터 탄소섬유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늦어도 내년 말에는 양산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지역과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서 탄소섬유의 대량양산과 이를 활용한 융·복합 기업의 권역내 유치를 통해 전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탄소산업은 단순히 분리된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IT산업과 접목되고, 기계산업과 융합하고, 소재산업과 결합되며 모든 첨단산업과 어울리는 기간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중심 거점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중추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과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힘을 합해서 추진할 때 전주하면 탄소라는 수식어가 빛이 날 것이며, 지역간의 경계를 벗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소 도시로 거듭나고, 완주는 물론 인근의 김제와 멀리 군산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에 대해서 시정계를 초월한 국·도정의 소상한 부분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전주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민선 4기의 많은 정책 중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사업은 도서관사업 확충일 것입니다.

서신도서관의 개관에 이어 아중 평화도서관의 설계 및 사업진행, 9개의 작은 도서관의 개관,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개관, 아파트 문고의 확장, 64개 전주시 사립 문고 등 그리고 여러개의 도서관 자원봉사단체도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도서관 사랑모임이라든지 열린독서 어린이 연구소라든지 어린이 독서 연구회가 그렇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7월 현재까지 6개 분관도서관 이용통계를 조사하면, 2008년 월 대출자수는 47,000명이고 월 이용자수는 242,000명이고, 2009년 월 대출자수는 67,305명, 월 이용자 수는 270,414명입니다.

도서관대출은 작년보다 41% 급증했습니다.

2003년 한국 도서관 통계, 전주시립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는 832,907명으로 월 69,400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최근 개관한 서신도서관의 이용객은(일일) 주말이면 3,200명, 방학이면 2800명, 평일에는 2,000명으로 전주시 도서관 이용율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선4기, 도서관사업을 대폭 증가하시고 작은 도서관을 10개나 추진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국장, 도서관 사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서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분야가 도서관사업이라고 합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필두로 10개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작은 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에 의하면, 비록 작은도서관(110m~350m) 규모이지만 일일 이용객은 방학 때는 130~200여명(평일 2배)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은 좋은 이용시설로서 주민들이 만나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근자는 대부분 1~2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의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항목에는 협소한 공간, 상근인력 부족, 독서, 동화구연 등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부족하

고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운영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일수록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역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초기단계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개선해야 할 작은 도서관 문제점은, 작은 도서관 초기 안정화를 위한 인력체계개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열리고 있고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는 곳은 4곳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 운영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적당한 예산의 가이드를 타당성 조사한 후 당장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순차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5개의 작은 도서관은 모두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으며, 익산시도 6개 작은 도서관에 월 백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안정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위탁받은 단체에서 공공급을 내는 정도였고 두곳을 빼놓고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에 형식적 계약관계가 되어있었고 시에서는 겨우 60만원 지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2개의 작은도서관의 잘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호성 작은 도서관은 방학때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대출권수는 최하 300건에서 최고 900건, 2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순번을 교대하며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며 호성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습니다.

노송 작은도서관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대로 운영비도 내놓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으며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10개중에서 6개는 위탁만 받았지 위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 이용객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인력체계의 불안정, 사서의 절대부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도서관은 주 이용층이 어린이와 특히 초등학교생 등 대부분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관심과 사업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큰 아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7개 정도입니다. 서울시내도 대형서점 말고는 어린이들이 책을 맘껏 접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도서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강서구로 4개가 있습니다.

2006년 세계 도서관 대회 첫째 화두는 어린이의 책읽기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운동이었습니다.

전남 장흥 송산리 어린이도서관 이야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장흥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티코차랑에 2년 동안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 주세요”라는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티파기 공사를 하여 티코차랑은 폐차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 절실히 함을 깨달은게 도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인구64만중 약18%인 111,180명의 13%가 어린이입니다. 67개 초등학교에 54,141명 학생이 있습니다. 6개 도서관의 어린이실과 1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주를 이루는 작은 도서관운동을 기대합니다.

작은 도서관의 관계자를 만나 이용객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 이용층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중요한 것은 이용층이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작은 도서관이용자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도서관이 중요합니까?

지식정보화와 문화콘텐츠시대에 지식과 정보 문화소통은 도서관이 가장 좋은 훌륭한 곳입니다.

미국의 시애틀도서관은 세계최고, 최근 신축, 도서관 사서들의 연수 코스로 벤치마킹대상입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85개 지역분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미테랑도서관 등 세계 각국 선진국은 도서관의 인프라와 정보지식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5개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2008년 5월에 수립했습니다.

2009년~2013년까지 300여개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생 1,500명을 기준으로해서 학교 도서관에 사설교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을 농학, 의학, 과학기술, 국가 대표급 국립도서관 설립운영 현재 8만명당 하나 수준에서 5만명당 1개수준의 공공도서관으로 증설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현재 6개에서~7개가 더 늘어나 13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하니 앞으로 국비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전주시도 5개년 도서관장기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증장이 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이 중요한데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천, 경남 김해군 등 많은 지자체가 도서관 5개년 계획 아래 도서관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2004년 8월 수립 후 계획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증장이 계획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준비했다면 오늘의 문제는 예측가능하고 쉽게 고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작은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사서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총 정원 때문에 사서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 사서를 교육을 시켜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도서관 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완산도서관에서 다 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분관과 작은도서관이 시스템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시민사서 양성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도서관문화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깊이 접근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 전문사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그 동안 시행하여 배출한 문화해설사들의 한옥마을, 또는 시티투어 해설사가 있는데 2년의 교육을 거쳐서 전주시가 수료증을 줘서 채용을 해서 시간당 얼마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열린도서관 학교를 운영해서 수료증을 줘가지고 전문사서 강사를 썼을때 책읽기, 듣기, 데스크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31일날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신 열린도서관 학교를 시민사서 양성도서관 학교로 전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말합니다.

세번째,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실태의 최대 문제점은 예산이고 예산의 과부족은 운영비의 부족으로 파급되며 전문사서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절대 부족한 전문사서를 쓸 수 없는 것은 매번 답변하는 공무원 총 정원제 이유입니다. 전문사서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 도움을 주고, 읽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전주시립도서관에 전문사서가 행정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지에는 2010년 작은 도서관 예산책정 가이드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공공시립도서관 사서부족 결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BTL사업으로 순연되고 있는 아중, 평화 도서관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도서관의 설계, 시공, 감리까지를 도서관 전문가들, 해당 시의원님, 지역주민 대표, 여성, 학교선생님들, 다양한 사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설계에서 완성까지 시민중심 도서관이 완공 되길 바라는데 답변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도서관 건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설계, 운영계획)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발전위원회로 변화되어서 후원금도 받고 운영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품으로 도서관이 옮겨갑니다.

다섯번째, 서부신사가지에 9번째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구획별 블록



별 지구단위 계획 지역이다보니 접근성과 공공성, 장소성을 고려한 도서관부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장 좋은 지점에 도서관이 입지하도록 공유재산취득의 절차를 미리 선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송하진시장께서는 전주가 도서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율도 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도서관 시장님의 브랜드와 명성이 후세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주는 문화교육도시입니다. 문화와 교육인재의 요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시의 명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부권 도시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는 송천동 아이파크, 호성동 진흥 w-파크는 3천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아이파크는 지금 입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의 사격장훈련의 안전사고, 사격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비군훈련장(전주대대)는 향도예비군 설치 시행령 5조에 근거, 거주지를 전주시에 있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주거의 질, 교통문제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북부권의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동부우회도로 진출입, 특히 송천동 오송초 정문에서 예비군 대대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도 아닌 비포장 사유지를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변의 시가화 예정용지도 2010년이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시장님은 2008년 9월 9일 양용모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성동과 송천동을 잇는 북부권의 생활형 순환도로 미개설 부분 900m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생활권역)도 이제는 입주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아파트지역에 둘러 싸여 있어 주거환경의 변화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난개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묵인할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도시계획 계획도 없는게 난개발 아닙니까? 한솔 솔park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3일 사업계획 승인되었는데 공사를 하지않아 시행자가 기부채납 약속한 도로는 미개설 되어 주변의 교통 연계성 또한 순환되지 않고 송천동 오송지구 주민은 아침이면 교통정체를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주변의 노인복지시설, 택시회사는 가스공급은 커녕 상수도 하수도도 연결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에서

수질악화는 매년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예비군대대의 이전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는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부지물색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행의 단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기다릴 게 아니라 부지를 찾고 부지가 떠오르면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이행을 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향후일정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 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포함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공공도서관 정책 진흥을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살기 좋은 전주, 품격 있는 전주, 경쟁력 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전주로 만들고자 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도서관 정책을 민선4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6개의 도서관 외에 추가로 2개 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심 지역과 신시가지 인구 밀집지역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11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이외에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주거밀집 지역에 아파트문고 등 총 27개소의 도서관이 있어 우리 전주시민이 하루 8천명 이상 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작은 도서관 3개소가 완료되면 총 30개의 도서관이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안배를 통한 독서환경 조성하고 질 높은 독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독서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이 확충되면서 마스터플랜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8월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04년~2024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20년간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의 각 분야에서 전주시 도서관의 정책개발과 계획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도서관

과 아중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도심 도서관 건립사업과 서부신시가지에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역거점으로 공공시설내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도 가급적 많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의 이용과 공공시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구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필요 하다면 기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구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사서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21세기의 도서관 발전은 전문 인력의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도서관 환경은 기존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필수 요소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2년간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온고를 시민대학을 통해 약 200명의 도서관 자원활동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린도서관 학교를 개칭하여 공공도서관 자원활동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해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원 활동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사서 학교를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작은도서관 예산증액 대책과 공공시설도서관의 전문사서 부족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초 동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요금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선정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운영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사서 인력은 향후 온고를 시민대학의 독서관련 전문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문사서직원의 증원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직원 총 정원제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인력 충원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아중, 평화도서관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서관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도서관 전

문가, 해당 시의원등 다양한 사람을 구성해서 설계에서 완성까지 시민중심 도서관으로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공공시설인 도서관은 당연히 해당 시의원님, 도서관 전문가, 각계 교수, 지역민들을 사업초기부터 완공까지 의견을 같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아중 평화도서관 건립은 당초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과 세계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선사업대상자가 건립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 중이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2010년도 건립비 40억원을 투자하여 1월 착공 201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중도서관은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판단에 따라 위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부신시가지에 9번째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도서관 부지가 미 확보상태이며, 도서관의 입지를 위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 집중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될 때를 대비하여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연히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을 건립한 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지물색, 대안마련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추진하여야 하며, 향후 일정, 그간 추진경위 등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 106연대 2대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덕진공원 북측 327,566㎡부지에 1980년도에 창설되어 그동안 전주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전주대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해당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북부권의 도시 확장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 및 사격에 따른 소음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94년 10월 7일 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과학기지의 배후



주거기능 역할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478,00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전주대대의 이전을 공감하고 급년 초부터 국방부와 35사단을 방문하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2009년 4월에는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요구를 공문으로 정식 건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에 35사단으로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2009년 6월에 확정된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그 하위계획으로써 상급부대에서 향토사단 군 구조 개편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전 또는 폐지 등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송천동 한솔 솔파크 아파트는 2007년 4월 13일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0년 11월까지 연장을 요청 한 상태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 우선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인근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박혜숙의원(비례대표)

▶ 북부권 송천동에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6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덕진수영장 폐쇄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60%가 40~60대 여성으로 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개념의 덕진수영장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개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덕진수영장을 철거키로 한 뒤, 도의회의 승인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전라북도에 폐쇄 재고를 요청했고 김원주 도지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실무진은 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며 재개장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주시가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9월 2일 의안심사를 하고 9월 8일 수영장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과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겉포장으로 속내와 다른 모습으로 팽팽하고 있는 모

습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월 2일 전주 스포츠타운을 2015년 완공 한다는 발표 내용에 보면 덕진구 장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스포츠타운의 경우 오는 2012년에 착공해 2015년 완공기로 했지만, 테니스장과 실내수영장 등은 완주군과 통합문제로 스포츠타운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덕진수영장이 재개장되는 것인지 덕진 종합운동장 일대 종합개발계획에 수영장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본 의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 처리문제와 상관없이 그동안 남부권에 비해 문화혜택이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에 수영장을 하나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한 달에 걸쳐 북부권 수영장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서명을 받으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의 시민이 북부권인 송천동에는 농촌마을,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이 살고 있으며 인구비례,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영장 유치를 해야한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된 이후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셔야 할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북부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서민들의 유일한 사회복지 개념의 덕진수영장이 폐쇄된 후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삶을 위한 수영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인 송천동에 수영장 건립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의 하나인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너무나도 절실한 현안임을 밝혀두면서 완주 전주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호성동, 송천동 주민을 비롯한 북부권 완주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송천동 지역에 당연히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두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해 본 의원이 파악한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 수는 144,385명이며 그들의 자녀는 58,007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결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8%에서 2008년 11.1%로 불과 7년 사이에 3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 사회 적응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49.5%가 초등학교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상에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아동의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은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집단따돌림, 어머니 등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인한 언어발달 장애, 학습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력이 불안정하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또래집단에서 친구들과 간의 갈등이 표출 되는 등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중앙가정지원센터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의 문제는 그들 부모들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빈곤이 대물림 되고 인종적 편견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2세들이 성장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들 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초기에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 6세 미만 자녀수는 약 2,400명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육되는 자녀수는 1,253명으로 약 5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구사불능과 이로 인한 소통 등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말 기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809명으로 이는 전라북도 전체 4,812명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9년 6월 현재,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가족은 총 455세대 563명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시설과 현황은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배우자 교육, 시부모 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인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전주시에서는 올 7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비해 너무도 미미한 지원정책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비단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

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언어교육에서는 아동을 위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아동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 양육과 연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보육시설 부모의 자원 활동으로 연계하고 그를 통하여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북부권 송천동에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금년 초부터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 유치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향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 처리문제와 관계없이 남부권에 비해 문화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에 수영장을 건설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스포츠의 분야 별, 종목별, 지역별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중장기적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내 체육시설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덕진동과 장동을 위주로 한 북부권에 비교적 많은 공공체육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나 수영장의 경우 완산수영장이 시외곽인 남서쪽지역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에 거주하는 수영 동호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수영장 추가건립 문제는 기존 덕진수영장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처리방안과 그리고 기존 스포피아 수영장의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권 송천동 수영장 건립문제는 여러 가지 연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역별 시설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이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사회가 다민족사회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문제,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다문화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이주여성 출생자녀는 총 949명으로 6세미만 다문화 아동이 527명, 전체 다문화 아동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주여성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127명으로 24%만이 이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아기 초부터 언어발달과 문화 등 열린 마음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보육시설 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하여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지도사를 배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한 22명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및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등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DB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재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현재 전주시의 결혼이주여성은 1,344명으로 2008년도 809명에 비하여 66%가 증가하여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949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수준별로 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센터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22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역량 강화 등 다문화가정 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과 연계한 언어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현재 센터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

으로 아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재 교구 800점 이상의 구연동화, 그림책, 퍼즐, 블록, CD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문화강사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을 파견, 관련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어머니라 문화이해 및 이중 언어 적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현재 예수병원 외 14개 병원으로 구성된 무료진료사업, 전주시보건소의 산모도우미제도, 건강검진사업, 전북대학교 대학생과 다문화가정자녀와의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방과후 학습지도, 치과의사협 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무료진료사업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지가 및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후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다방면으로 양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기관 단체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망을 합니다.

네번째로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672개소의 보육시설에 21,6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정 자녀는 64개소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10인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2개소, 3명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7개소이며, 53개소는 1명에서 2명을 보육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이용하는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정부의 통합보육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5명 ~ 10명 이상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시범 지정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아동을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특수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672개소의 보육시설중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64개소에 대하여 육아정보 나눔터를 먼저 설치하고 육아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민과의 상호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0개소의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아동이 다니는 해당 보육시설에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요일별로 결혼 이주여성들과 육아경험 나누기, 육아정보 나누기, 육아상담 문화체험 등 자녀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시 경제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를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으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난 속에 과연 전주시의 경제 정책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통찰해보고 전주시의 경제정책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대에 시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도 같은 시기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시의원과 집행자의 시장은 체감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서민을 위한 정책에 시장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위한 농로포장, 도시가스 보급사업, 맑은 물 공급 사업 등은 시장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더욱 확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시정 질문때 경제문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치솟는 생활품의 물가는 하늘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임금을 동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결이라도 하여 회사를 다닐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만 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쌍용사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아파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이 땅에서 할 말을 잃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기침체에 접어든 경제난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나 결코 낙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코스피 지수만 1600선을 오르내리지 실물 경제는 오히려 악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전북은 아직도 주생산업이 농업인데 금년 농사를 지어놓고 봐야 전북지역의 실물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세계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고용여건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이라라고 전망은 하되 불확실성이 높아 그리 믿을 것은 못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전주시에서, 아니 정부주도로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였던 예산 조기 집행 등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월, 불용 예상현황 분석표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의 조기집행 현황분석이 되었습니다.

100%진행을 완료한 사업은 현재 전체예산현액에 9% 수준이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체에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2010년도 이월가능성이 높은 집행을 10%미만의 부진사업은 106개 사업으로써 1,962억9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대비 20.3%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50억이상의 대응사업이 7개사업에 1,252억14백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별로 집행부진사유를 유형으로 보면, 경기 침체등의 영향을 받는 사업,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체비지매각 및 관련 사업 871억, 설계 입상 당선작 공모 등의 절차로 인한 지연, 한스타일 진흥원건립 95억원, 보상 마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82억원 집행사유 및 시기 미도래,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204억원 등입니다.

상기와 같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가능성이 높은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의 부진 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집행부 자료를 직접 질문 자료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데 전주시에서는 자체 평가 시스템이나 각 부서에서 정확한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본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다음은 2009년도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선된 인허가 건수는 환경과 19건, 보건행정과 10건, 재무과 6건, 양구청 각각 3건으로 총 41건이라고 합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단축 운영은 2008년 293종(65.5%)에서 2009년 301종(68.1%)으로 2.6% 증가 하였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관에서 하는 일은 절차도 복잡하고 위압적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많았음에도 오늘에 국민들은 관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시민의 공감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해보면 행정절차가 아예 법적으로 불필요하게 길어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이 있고 둘째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은 무엇인가, 민원인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법령 정비나 조례의 개정을 거쳐서 개선하여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기본적 소양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정비 이전에 시장께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대시민 봉사정신의 고취, 행정의 숙련, 행정전문인의 육성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MOA(이행각서), MOU(양해각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자치단체의 사업은 중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주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나 통계를 보자면 MOA, MOU의 체결현황을 보면 되는데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 드린 후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는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총 168건으로 성장산업과 소관이 총 133건의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그야말로 협약문서의 기본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대단히 형식적인 양해각서가 남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를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1. 전주시는 00플랜트(주)가 우리시에 이전 또는 투자함에 있어서 회사가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공장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전주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지원함은 물론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3. 전주시는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 공장등록등 제반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플랜트(주)가 전주시에 이전 또는 투자하면서 연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한다.

2006년 7월 12일, 전주시장 00플랜트 (주)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해각서내용이 얼마나 선언적이고 부실한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아무리 양해각서가 법적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해도 시민에게 하는 약속이니 만큼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은 잘 지켜졌느냐. 물론 아니죠.

성장산업과 소관 양해각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93개 업체 중 이전완료 30개사, 이전 예정 31개사, 이전 의심 10개사, 이전불가 10개사,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업체가 22개사에 이르러 30%이상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9년 들어서는 좀더 협약서 내용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께서도 직접 싸인도 하시고 내용중에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는 얼마이고 또 고용창출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협약서가 상당히 진보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진보를 해서 한번 협약을 맺은 업체는 반드시 전주시로 오게끔 해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 완주군민은 전주·완주 통합에 지대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지는 7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사고입니다만 애당초 전주완주는 하나이었습니 다. 민족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이며 경제생활권도 하나 이고 시민, 군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지는 것인데 이는 완전한 정치인의 몫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전주완주 통합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인이 마음을 비우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론을 외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논의를 주도하는 분들께서는 나에 입장, 정치적 앞날의 걱정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면 반듯이 시민이 살려 낸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코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고 또다시 시민을 실망시키고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누차 완주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였고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 앞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이른바 전주, 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10여개 사업을 말씀 하였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도 흔쾌히 양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완주군에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주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32%입니다.

완주군 인구가 8만3천7백여 명에 농업인구는 27,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2%가 되는 완주군 농민들의 걱정을 전주시에서 털어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사업을 살펴봐도 하겠습니.

현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프로젝트를 보면,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구입비 지원등 6개 사업에 22억6천8백, 유통혁신분야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신축 분야는 6개 사업에 31억 6천만원, 경영혁신분야 3개 사업부분 22억 3천만원, 활력증진분야 1개 사업 5억2천만원, 복지 혁신분야 3개 사업에 5억원, 이런 사업이 완주군에는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과거에 농촌기술센터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송하진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농촌기술센터를 부활시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농촌진흥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완공하기 위하여 8,000억원의 예산으로 터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연계된 사업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조직개편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인력양성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하여 종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여도 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대 시민 민원 만족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paradigm)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마인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대시민 민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전주시와 기업체간에 협약한 MOU, MOA가 세부적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바, 이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천가능한 부분만 정확하게 발췌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장산업과에서 주관하는 협약업체 총93개중 이미 전주이전을 포기하였거나 지지부진한 업체가 32개사에 이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는 전주 완주 통합에 앞서 현재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주군민이 통합 후에 “아 좋다, 과연 전주하고 통합해도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정책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경제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먼저, 양용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경제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관련 농어민에 대한 희망에 비전 제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어려운 농촌과 서민의 입장에서 충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우리 시 경제정책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에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상반기 집행을 32.1%의 1.8배에 해당



하는 57.3%인 5,65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올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 또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면에서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나라경제의 위기를 조기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우려 등 부작용도 당초에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공사신고센터와 조기집행을 위한 1억원이상 책임 담당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1건으로 녹두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공사관련 시정요구 2건,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등 진정민원 4건, 서남로 개설공사 관련 등 시민불편신고 3건, 기타 건축법 등 관련 질의 2건이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공무원 책임담당제는 259개 사업장별로 6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현장 확인 후 주 1회 국·소·구청별로 자체 보고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서장 주재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스타일진흥원 공동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를 해당업체와 협약을 통해 조기 집행하여 약 8천 3백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었고, 신한카드사와 협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선 지급 후 정산을 통해 190억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공익사업 보상금 256억원을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여 농업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조기 집행하여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 설계반 운영 등, 특히 민간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 42개 대규모 부진사업의 중점관리를 통해 부진사유와 해결방안이 포함된 카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단계 참여자가 실명으로 등록하고 이력이 관리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정부가 입안하고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각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정책을 시행했으면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정부와 별개로 우리시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이 어느 한 자치단체에만 국한해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광역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 사후평가가 시행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

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평가를 각 부서별로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변화하는 대 시민민원 만족에 대하여 이론적인 틀 제시와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 민원 만족을 위해 기존교육의 틀을 깨어 시내버스 체험,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시민의식, 문제의 성격 등에 대응하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적극 동참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하는 자세, 무사안일한 자세, 고압적인 자세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태도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개선방안과 협약업체의 조속한 협약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써 민선4기 들어 우리시가 전통의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땅값과 공업용지 부족 등 타 지역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기업유치 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오로지 뜨거운 열정과 미래비전 하나로 버텨온 기업유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이 척박한 땅에 새싹이 트듯 작은 결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청송을 간혹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세·네 번씩 작은 승합차에 몸을 싣고 서울과 인천 멀리는 부산, 울산으로 “이전 한다더라”는 소문만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발걸음이 지구를 7바퀴 돌았을 거리인 273,30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살던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부지와 투자여건은 물론 종업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주거환경, 교육, 문화 등 수많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깃기업이 결정되면 많게는 수십 번의 방문과 초청을 통해 설득과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기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각서 체결이 형식적이지 구체적

으로 하고 시민과 약속이니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시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협약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그 기업의 요구와 주문에 맞춰가며 입지용지와 투자비용 등을 함께 마련하는 전략을 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민선 4기 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주공과 함께 53만㎡의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중 30만㎡를 금년 11월에 분양하고, 2단계 23만㎡도 내년 말이면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올 초부터는 MOU체결 당시부터 구체적인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들어 타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 133개 업체 중 이전의심 10개, 이전 불가능이 22개사로서 성공률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발 경제 한파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몰락 속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주에서 기업의 투자를 70%이상 끌어냈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실패로 분석하신 32개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주시와의 약속을 어긴 기업은 5개사입니다. 나머지 27개사는 경제 한파로 인해 투자와 이전을 망설이는 상태로써 앞으로 경제가 다소 풀리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실현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도록 노력해 가되, 기 체결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시는 기업유치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치 초기단계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업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는 사전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량기업 선별을 위한 눈높이를 올리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질적인 기업유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도시근교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희망있는 전주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취임당시 129억원이었던 농업예산을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22억 8천만원 대비 40%증액된 2009년도 32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농업 육성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문제는 조직 확대 앞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과 농업 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하

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농업인조직(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복숭아, 배, 미나리 등 전주시 특산농산물과 집단화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조직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과 전문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위하여 연 15회 이상 교육 하는 농업인 대학을 현 연간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주시 농업을 이끌 어가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들어 추진하였던 우리시의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농사현장에 투입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농로 100%포장 프로젝트 추진하여 현재 경지정리지구 45km에 대한 농로포장 완료율을 앞두고 있으며, FTA협상 등 농작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축산 13개분야에 196억원을 투입하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단지 201ha를 지정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전량을 전주시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미를 비롯한 5개의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융·복합된 지역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촌소득금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까지 늘렸으며 대부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4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하여 10억원의 영농자금을 경영 위기농가에게 융자하여 농가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이 밖에도 많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10년간의 전주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첫째, 2000년대 이후 과잉 생산된 쌀 대책으로 생산비 일부 보전을 통해 우리콩, 사료작물 등의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여 쌀 생산을 줄이는 한편 수요가 많은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겨울철 대체작물인 우리밀 335ha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00ha 계약이 약정되어 많은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밀 제분공장을 비롯하여 우리밀을 재료로 하는 (주)새롭식품, 지난 9월 초 완공되어 일본과 수출계약을 맺은 (주)전주전통 모주공장, HACCP(해



썩) 인증을 추진 중인 (주)강동오케익 등 대량소비처 유치를 통해 우리밀 판로를 개척하고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전주를 우리밀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밀을 주원료로 한 라면, 빵, 전병, 국수, 피자를 5대 식품산업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2010년부터 국·도·시비 포함 총100억을 투자하여 전주에 대규모 화훼유통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화훼가 서울양재동 화훼공판장으로 출하되어 가격이 형성된 후 다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어, 막대한 물류비가 소요됨에 따라, 전북권 및 중부권의 화훼를 집산할 수 있는 5천평 규모의 화훼유통시설을 전주지역에 조성하여 연평균 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20억원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품목별로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의 농업구조는 고령화가 누적되어 2020년 이후 농업인구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개방화속에서도 우리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등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과 출하기반구축 등 기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될 농업관련 이전기관과 연계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에 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완주군에서 추진해 왔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 프로젝트등이 그대로 유지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플러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지원하여 획기적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는 R&D 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D 기능을 최대한 완주군 지역과 연계시켜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동부산업권은 관광농업 기본지로 구축해 나가는 등에 구체적인 방안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발표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제정책과 전주 완주통합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앞으로 대비하여야 할 사항까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양용모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Q 유영국의원(팔복·조촌·동산동)

▶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전주의 북부권 개발일 것이라는 데는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 전주시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만성지구개발,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착수, 집적화된 환경업체 이전 추진, 40년 된 노후 산업단지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 탄소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R&D 기반 구축, 문화적 볼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에 자치센터, 도서관 건립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하진 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 28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도도동, 강동동, 도덕동, 남정동에 걸쳐 2,378필지(6,155,142㎡, 약187만평)에 이릅니다. 농지법 제 28조에 의해 1992년에 지정된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저해당해 왔고 소유주들은 지금까지 17년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여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일찌감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농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08년 6월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해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위치가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해서 활용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전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 전만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했으나, 2008년 6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농지가 없어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전주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활용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완주군과의 통합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바 통합 이후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및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통과하고, 전주의 관문인 전주 I.C가 인접해있는 곳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은 줄곧 전주 발전전략의 중요한 요충 지임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새만금 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이 지역이 육지에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관문 이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 어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지대체제도가 폐 지·시행되는 시점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위상을 재 정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농지대체제도 폐지에 따른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의 관문인 이곳은 호남 고속 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 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팔복동 공업단지, 혁신도시, 에코타운, 완주공업단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 후 전주시 비전을 담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전주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최근 착수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2004년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거론 되기도 했던 성덕동 일대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에 대한 활용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결코 새만금을 빼놓고 거론 되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의 비전이 새만금의 배 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을 때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계에서도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육성 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 흥지역의 해 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해제 계획은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전주시 북부권의 개발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 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북부권을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 다. 전주시에서는 4대문 복원사업을 통해서 전통문 화도시로서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에 있 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북부권의 만경강 일대에 본의원이 주장한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도 시와 친환경 생태관광도시가 결합한 도시를 건설한 다면 더욱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구지정은 현행 법률상 어렵기 때문에 향후 북부권 개발 계획에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개발방향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 출범 이후 3년 동안 기업유치 262건에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 생각하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주시 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촌동 동산동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한 부 지확보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촌동, 동산동 일대와 농업진흥지역은 교통이 편리 하여 기업유치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덕동 일대는 한 때 혁신도시 후보지로 물망 에 오를 정도로 지리적 잇점이 많으며 전주시에 투자 하려는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부족한 기업유치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셋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활용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 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탄소 기술원이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국내 27위의 대기업 인 효성그룹이 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 연간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성그룹 외에도 탄소관련 상당수의 업체들 이 우리시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탄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47조원으로 일본이 시 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연간소 비량 2,500t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주 에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40%의 수입대 체 효과가 있으며, 연간 5,000억원 매출 과 5,000여명 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전주시의 탄소섬유 개발 파트너로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효성그룹은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장부지로 330만m²(100만평)이상의 용지를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성덕동 및 농업진 흥지역을 활 용하여 부지를 조성하는것 등 다각적으 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효성그룹의 공장부지 확보문제가 아 니라 전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내 상당수의 탄소 관련 기업의 수요까지를 고려하여 보다 대규모의 탄 소공단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조촌동, 동산동의 부지를 활 용하는 방안이 지리적으로나 완주군과의 통합을 고 려했을 때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은 국내 독점사업으로서 전주기계탄소기술 원과 효성그룹을 비롯 나노기술센터·테크노파크, 그리고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의 탄소테 크노밸리·KIST전북분원과 연계된다면 강력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예상됩니다. 완주군과 통합되었을 때 는 탄소산업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급



상승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탄소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전주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 완주군과 통합시에 완주군에 조성되는 탄소 테크노밸리·KIST전북분원과 연계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부권 개발의 방향은 한마디로 탄소 공단과 생태·체험관광지가 어우러진 도시 내의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경강 줄기를 따라 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성덕동, 여의동, 농업진흥지역 일대를 탄소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팔복동 공단, 혁신도시, 에코타운, 법조타운, 완주공업단지라는 주변의 거점과 연계되어 앞으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선결 조건입니다.

본의원은 대체농지 없이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전주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전주시의 발전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기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민,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고민이 깃들인 성실한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북부권 일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이에 따른 북부권 전략수립과 공장부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 북부권 발전을 통해 새만금 배후도시로 우뚝 설 것을 바라는 뜻으로 다양한 자료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 착수된 전주시기본계획 용역에 북부권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곳 전주의 북부권 개발입니다.

북부권은 조촌, 동산, 팔복, 호성, 송천동 등으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와 만성지구, 종합스포츠타운, 대규모 유통단지, 35사단 이전 등을 포함하고 새만금과 수도권 연결축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전주 성장동력의 중추지역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복, 조촌, 동산 지역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 첨단 부품소재산업 및 탄소섬유 산업, 생물생명산업, 그리고 신기술연구센터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를 견인해가는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시민은 물론 전라북도민의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수준 높은 국내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갈 것입니다.

원동, 장동, 성덕동 일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농업농촌의 기능을 관광 자원화 하는가죽중심의 체험형 생태보전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화 되고 있는 35사단 이전부지의 에코타운조성과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북권 혁신도시 등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전주의 북부권이 새만금 군장광역경제권과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과 연계된 배후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 교육 행정 R&D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북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금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 지역의 장·단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미개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로, 북부권 개발계획에 만경강 일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포함하여 조성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 2007년 9월 제246회 임시회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북부권 일대에 만경강을 연계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청정농촌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다양한 테마별 생태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시 북부권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경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도 4대강 이외의 만경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만경강 동진강 마스터플랜 용역을 7월 23일 이미 착수하여 내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시의 업무 협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북부권은 생태 문화 관광 수질개선 농림 지역개발과 어우러진 만경강 생태 체험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과 이 지역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덕진구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경지정리된 농지 2,378필지, 약 615.5ha로써 우리시 벼 재배 전제면적 3,450ha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농민 삶의 질 향상,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 기계화 영농실현 등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2009년까지 3개 년간 농로포장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5농가 201ha의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무농약 쌀 27,000가마를 생산, 148개 학교 89,123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공급하는 쌀 생산 청정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꼭 해야 할 행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을 위하여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은 1971년과 1973년 경지정리를 완료하였고, 특히 200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8ha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수로 폭을 넓히는 대규모 정리를 완료하는 등 농지가 집산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지의 여건, 기계화 영농을 위한 예산투입, 정부의 국가 식량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 식량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편리한 농업환경 과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을 해제 한다는 것은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한 입장을 현재까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 등 상황이 유리하도록 해 나가는 동시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궁리해서 이 문제를 정밀 지혜롭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같이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도 앞서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대기업인 H사와 계약을 맺고 탄소섬유생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부터는 양산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대단위의 전용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으로서 그 규모는 대략 300만㎡이상(100만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H사의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기업의 기술개발 보호를 위해 비공식적인 사안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공업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근 시군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주군소재 테크노밸리와 KIST분원, 전주탄소기술원, 전주탄소밸리가 밀접히 연결되는 전주권 탄소산업 인프라구축에 힘을 기울 이면서 우선 전주로 미리 이전해 오고자 하는 탄소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와 유치기업을 위한 입지부지로는 올 11월에 분양하는 친환경복합 1단지과 내후년에 분양계획인 친환경복합 2단지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하는 친환경복합 3단지 등 총 200만㎡정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으로 주공과 함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도 산단 휴·폐업 부지와 개별 입지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기업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북부권의 발전 전략과 탄소산업 조성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강영수의원(서신동)

▶ 전주실내체육관 조속한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와 구명단 공탁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실내체육관은 1973년도에 준공되어 연 인원 210만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전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체육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3억원이라는 성금이 마련됐을 정도로 체육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체육과 문화, 그리고 어울림의 한 장으로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채 36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실내 체육관은 체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를 외면한 채 그저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의 실내체육관은 쾌적하고 아늑한 어울림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낡고 병든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흔히 체육과 문화를 가리켜 공해없는 고 부가가치 산업이며, 미래 투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열악한 조명시설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실내 분위기, 문화의 척도라는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 관람석 좌석간의 거리가 최소 35cm는 이격되어야 하는데 28cm 정도의 관람석 구조, 즉 어린이 전용의 관람석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높은 관람석 배치로 인하여 관객과 공연자의 하나되는 일체감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냉난방 시설과 4,800석 규모의 소화 할 수 없는 비좁은 157면의 주차장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실내체육관은 2001년부터 KCC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이용하여 프로 농구시즌에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시민들의 이용을 전연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전주 실내체육관 현실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에 설치된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은 실내체육관 바닥의 지반이 지금 침하가 되어 바닥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기는 지금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는데 도료가 저런 상태로 쭉 떨어지고 저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습기가 위에서 차기 때문에 도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저기도 지금 페인트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8cm의 의자입니다. 저기를 앉아 있어보면 앞에까지 다리 무릎에 닿을 정도로 제 체격에도 저렇게 거의 닿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관중석 상태가 저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KCC에서 사실은 관중석을 좁게 3,500개로 할려고 좀 큰걸로 할려고 하니 오히려 관객의 수용이 적어 KCC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저것은 아주 본부석이 저 위애가 있어 6, 70년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중석의 본부석의 위치입니다.

다음 저기는 입구 들어가는 위에 보면 케이블선이 보이고 있죠. 다음 한 번 보여드리죠. 저기는 벽이 지금 균열이 쭉 가 있는데 페인트로 해가지고 저게 잘 보이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잘 보이지를 앓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쪽 보여주세요. 저게 멋있게 저렇게 실내체육관이 외부에서 볼 때는 멋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과연 우리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나 해외,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이용 하는 실내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국내 체육인과 문화인을 향해 손짓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북 체육은 그동안 올림픽 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체전에서 전북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여 체육 강도로서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전북 체육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전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은 물론, 국내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비롯하여 28개의 전국 대회와 국제 인라인 대회,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11개의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12만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전주를 방문하였음은 물론, 300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오래전 전주시에서는 총 사업비 3,450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1층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또 2단계 사업으로 실내 체육관과 테니스장을, 그리고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대로라면 실내체육관은 이미 작년 10월에 착공되어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맞물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외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 단계에서 스포츠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내 체육관 건립 문제를 분리하여 신속히 추진하실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말뚝이 잡힌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을 과감히 분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관객과 관중이 하나되어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구명난 공탁행정에 대하여

다음은 구명난 공탁행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법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시효 소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탁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권리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탁의 주체가 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소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탁 사실을 망각한 사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탁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리스트 부재와 업무의 해대로 인하여 시효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2009년에는 10건, 2010년에는 16건의 국고귀속 예정 공탁금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본의원의 자료 제출 다음날 상당액의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세액 공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행공탁의 경우, 상대적 소액으로 판단해서인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 세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천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진 전주시 재정 상황으로 한푼 한푼이 소중한 지금, 공무원의 안전한 사고와 소홀한 문서관리로 인해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이 의미 없이 사라지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기회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탁행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다음을 준비하는 토양이 되고, 두 번의 실수는 조직에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탁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실내체육관 조속한 건립 추진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님께서서는 스포츠 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 방안과 공탁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항상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 실내체육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각종 체육경기과 행사 개최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스포츠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실내체육관은 2005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CC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어 전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안들의 문제점이 당연히 도출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에 실시한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 964,553㎡를 운동장

용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재원부담 문제를 감안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과 연계해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그리고 2단계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 양여 조건에 따라서 가급적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들을 해왔으나 경제위기 등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 건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단계별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시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전주 완주 통합시 체육시설 배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멋진 전주실내체육관 하나 갖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모든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관계없이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도 앞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실내체육관은 준공이 된 지 36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람석간의 거리,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 등이 현대와 같은 웰빙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체육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KCC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으로서 농구 시즌에는 각종 체육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등 시민의 불편이 매우 커서 체육관을 새로이 건립해야 하는 시급성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실내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 건의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검토 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타운 내에 좌석수 7,000석 이상의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내체육관은 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단계별 구분없이 실내 체육관의 입지 문제와 국비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과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구명난 공탁행정에 대하여

공탁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푼한푼이 소중한 2009년 하반기 세입 비상 상황에 이같이 시 재정 세입 관리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조속히 법원 공탁금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의 협조를 얻



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공탁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무부서 체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채권 현황 자료와 연계해서 공탁금 소멸 시효 기한이 남은 공탁금을 우선 먼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공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매 및 공매 절차, 결과에 따른 공탁금 수령절차, 대법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공탁금 확인 및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채권관리 등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 인계 인수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하며, 매년 1회 이상 공탁금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탁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탁현황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 되고 있는 체납세관리, 재정관리 등의 전산시스템과 공탁금 관리를 연계해서 공탁금을 누수없이 수령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소중한 세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Q 김중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먼저 전주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몇년 전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을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하였고,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2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온 OECD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 비용이 평균 GDP의 2.3%이며, 특히 출산율이 유럽 최고 수준인 프랑스는 GDP의 약 4.7%로써 1년 예산이 약 1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의 0.4% 약 3조8천억원으로 프랑스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한국에서 시행하려면 복지부에 1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비해 오고 있지만, 이제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범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 총 인구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11,011명이 증가하였지만 연도별 증가

율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출생아 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2,981명이 감소했으며, 가임여성인구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6,802명이 감소, 혼인 건수 역시 2007년 3,653건에서 2008년 3,490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는 2007년도 9,179명에서 2008년도 8,121명으로 최근 들어 1,0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반해 출생아수, 가임여성 인구수, 혼인건수,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의 감소 추이를 보여 저출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주시 총 인구의 증가는 결국 지속적일 수 없고 인구 증가의 근간이자 동력인 출생아수 감소 추이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 100만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오랜 바람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지속적인 기업유치사업으로 2백4십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천여명의 고용인원과 3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라도 출산을 저하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돼, 전주시의 암울한 미래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232개 지자체 중 14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최근 일관된 규정이 없이 각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환경에 의존함에 따라 자율적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크고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한계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시적이며, 격차가 큰 탓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맹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전라북도 내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5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구분 도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 총 3곳만이 셋째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곳의 지자체는 첫째아 혹은 둘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북지역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출생아수 15,878명 중 5,853명으로 전북지역 출생아수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는 현재 가장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출산장려에 관련된 조례조차 전무인 현실입니다.

이것에 앞서서 언급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한계나 문

제점으로 인식할 사안은 아니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좌시하며 출산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못하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 시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혀 저출산의 본질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현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 793명에게 총 2억3천7백9십만원, 2008년도 633명에게 1억8천9백9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전라북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에 30%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기인한 보조사업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셋째아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도의 지원 기준과 같은 출산장려금의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어떠한 통계 기준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지 단지 막연하게 전라북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소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외에도 전주시는 출산장려시책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신부 철분제 지원 사업이나 넷째아 이상 차량용 보조시트 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에 있어 얼마나 단일한 자세로 일관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은 제도화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32곳 지자체 중 147곳의 지자체가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중 9곳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제도화는 전주시의 출산장려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보편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실정에 따른 출산장려 관련해 시책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었기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 지자체의 출산 장려에 관한 시책들을 사례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임신부에게 10개월간 매월 20회씩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를 발부하고 있는 전남에 강진군,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등 출산 육아용품 신청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 광역시에 수성구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이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63만 인구의 청주시는 지속적인 양육지

원금 지원을 통해 양육과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구 70만 인구의 안산시에는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학자금 지원을 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보다 구체적 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등 일석이조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포항시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보험자를 자치단체장으로 피보험자를 출생아로 하여 만기 시점에서 주계약 부분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는 만기 환급형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세입 조치함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시책 개발의 적극적인 노력은 일시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가능한 양육, 보육, 교육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출산 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모범시책으로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개발의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관련 시책은 그동안 책임있는 담당부서 없이 내부처치이나 상위 규정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단위 사업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화 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복지, 경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전주시의 어떠한 비전과 장미빛 청사진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다는 확신을 담아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며 장려금액과 대상의 확대 적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화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는 시민의 요구나 정책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지원이 포함된 출산 장려 시책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안적 도입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을 보장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등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쓰나미처럼 서서히 몰려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의 기회를 놓쳐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하여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신 빈곤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지난 2007년 10월 5일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여,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무산되어 현재 담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조례 기준에 따른 전주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은 총 1,450세대이며 2009년 8월 보험료 기준 산정금액은 1천169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 중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지자체 중 올해 제정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은 전주시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례 제8조 조항을 보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무시됨은 너무나 방약무인한 태도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급여 혜택이 중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자주 가야 할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제때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주시민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1,450세 대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를 하루빨리 지원하여 전주시의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복지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출산 장려 시책과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시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최근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때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WHO 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라북도 1.31명, 전주시 출산율은 1.22명으로 전국 출산율 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료 지원, 임신부 영유아 건강 관리 시책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2005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1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202명에게 10억4천7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임여성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395명의 여성에게는 불임치료 시술비를 450만원에서 8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의 보육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 발급 이용과 셋째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 문제이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바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둘째아이 이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임신부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재정 대책에 대한 판단 등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계에서 도출된 저출산 극복의 시급한 과제는 보육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정지원,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

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큰 투자로 보고 의원님께서 마침 적절히 지적해주신 점을 계기로 적극 반영해서 획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수립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로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출산 장려금액 및 대상 확대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5년도부터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22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원 중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액으로 인해서 효과성보다는 1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인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장려금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규모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출산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응 시책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경제력을 저하 시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가 출범을 해서, 여성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마련된 미혼 남녀 결혼지원, 임신부 배려, 보육강화, 가정 친화적 직장 분위기,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5개 역점 분야 43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례제정 이전이라도 가칭 저출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낙태 예방,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우리시의 맞춤형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전주시 출산장려 시책개발과 지속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 및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보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향후 조직개편시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담팀을 보다 명확히 지정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출산에 대한 전주시의 자료 수집 분석 및 출산장려 시책개발 등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하여

전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 리시에서는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빈곤가구가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 산하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민생안정 T/F팀 13명을 배치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빈곤가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4,419가구와 장애 수당을 지원하는 중증 경증 등록장애인 1,134가구,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 451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는 별도로 기타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비를 가구당 월평균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641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이후 지원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 정책입니다. 65세이상 노인가구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지원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임의적인 지원보다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할 국책사업으로써 전주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유보하고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1,500여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4천원이 부과되어서 1,200여 가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



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간접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오현숙의원 (비례대표)

▶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은 총 공사비 1,13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3,151㎡로 2006년 9월 29 일 준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김제와 완주의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반생활폐기물 300톤과 압축포장폐기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200톤 용량의 소각로 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평균 25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의원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일련의 문제는 소각장 운영에 있어 전주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또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불모로 삼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전주시는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전주시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이 입회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서에는 1조 목적을 비롯하여 10조 효력 및 상설 조항까지 소각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4조 폐기물관리 조항에는 ‘소각 적정외의 폐기물은 반입 및 소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로 인하여 이 규정을 처음부터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긴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전주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압축포장쓰레기입니다.

이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한 481,974톤의 압축포장쓰레기로 전주시에서는 14년 동안 소각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포장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유리, p_H병, 타이어 등 소각하기에 불량한 성상으로 인하여 소각로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고 소각장 위탁 운영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물론 압축포장쓰레기도 선별해서 소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1,133억을 들여 만든 소각장의 수명이 단축되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보듯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전주시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되어 전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큰 문제 일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정 쓰레기 반입시 지역주민과 수거업체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점, 조례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1순위의 권한을 준 점, 부적정 폐기물 반입시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은 이 협약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반입 저지의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성상은 매우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불모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의 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은 20년입니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전주시에서 현명한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하여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전주시 클린행정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광역소각장의 운영과 관련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서 생활쓰레기 및 압축포장쓰레기를 선별 소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지금 단계에서 별도의 선별시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사전 분리 배출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실정으로 계속 홍보 계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포장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43만9천톤을 반입, 압축 포장하여 야적한 전주, 완주, 김제시의 생활쓰레기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사회적 낙인현상 등으로 매립장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 된 압축포장쓰레기를 2006년 발생분부터 1일 100톤씩을 광역소각장으로 운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로 수명이 단축됨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소각장 건설계획 시 압축포장쓰레기를 병행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해서 소각로 수명 단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상이 양호한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하고 소각이 어려운 잔여 쓰레기는 최소화시켜서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 환경과 인간존중 기본권을 최우선 지향하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관련으로 인한 제반 사항

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축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을 토대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협약체결 이전인 2004년 8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안을 받아 김제시, 완주군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 합의안을 관련 시군의 관계자 입회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2006년 12월 26일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약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약 요구를 주장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당초 협약 요구안을 최대한 완화하여 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의 농도를 완화시키거나 소각대상폐기물을 전주시에서 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기판매대금 70% 지원 요구를 미지급으로 반입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로 확대하고, 제재기준인 1회 부적정 반입 위반시 5일 반입금지를 경고로 완화하는 등 수차례 협의의 조정을 거쳐서 최대한 완화시켜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보아 반입 저지 문제는 시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제재기준 등을 조정해서 쓰레기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협약을 수정하는 사항은 양측의 또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매우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 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의원님과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현명한 해답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Q 권정숙의원(비례대표)

▶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53개 시설에 대해 총 428억여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총예산액 대비 민간위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3.83%에 이르렀으나 2009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4.12%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예술 분야에 11개소 20억 2천만원, 사회 복지 분야 16개소에 39억6천1백만원, 청소년 어린이 분야 11개소에 19억8천4백만원, 청소 환경 분야 8개 사업에 224억1백만원이며 이밖에 단순위탁사무가 7개소에 104억6천8백만원이 올해 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과 위탁비용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효율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전주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진지한 통찰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위한 다음의 사항을 시장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의 민간위탁 결정 과정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경우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물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 위탁기관은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주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떤지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내년 예산안 보고에는 소리문화관과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3대 문화관 운영 예산으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로부터 시설물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입니다. 위탁시

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나 예산편성의 절차 과정보다도 곧 완공될 건물이나 예산부터 확보하지는 생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 여부나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출연기관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에 대한 책임성보다 편의주의에 치우쳐 운영되는 한 위탁기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적정의 위탁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 서비스적인 운영방향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마치 사유시설처럼 공무원의 퇴근시간에 맞춰 끝 퇴근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외지인이면 누구나 빼놓지 않고 찾는 관광 명소임에도 정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간에는 이미 운영을 마쳐버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일반 민간업소와 비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탁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위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어야 하고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위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에는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고 시설물들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위탁기관 평가가 한마디로 엄격하지 못한 채 다시 재위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평가보고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즉, 평가결과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추후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체계화된 평가 지표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위탁심사에서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있

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며 수탁 운영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민간위탁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 혹사되고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문화시설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명중 정규직은 44명 비정규직은 41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48만5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사자 대부분은 이처럼 낮은 봉급과 연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불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규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스스로 이에 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민간위탁 경영평가 시 관리직급에 대한 내부평가 적용, 철저한 업무분담과 위탁 종사자 의 처우개선 사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하여 차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방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 출연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행사성 축제와 같은 사업이 과다하다면 출연기관의 업무가 민간위탁시설 업무와 차별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현재 지원 예산도 확대되고 직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이 이관되고 지원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주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출연기관의 예산집행은 정산의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연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앞으로는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출연기관을 빗대어 관료제의 비효율적 운영방법이지 않느냐는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민간위탁의 규모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얼마의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민간위탁예산은 총예산의 4.12%로 428억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진행된다면 전주시는 민간위탁의 과부하의 굴레에서 허우적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재정에서, 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 측정에 따른 전주시의 직영이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지역 내 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별 행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얼마의 규모 범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송화진 시장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시정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권정숙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 전주시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해주 셧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심과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대문화관 운영예산이 사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편성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 처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면밀한 사전 기초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구상단계를 거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대상 사무 확정 및 수탁업자 선정방법 등의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기본계획 보고 및 조례 제 · 개정등의 시의회 심 의 · 의결 후 자격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법무부서 협의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원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위 · 수탁계약 체결한 후 마지막으로 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절차이행 등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의 다양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여부를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마을에 건립중인 소리, 완판본, 부채 등 3대문화관의 경우는 현재 공정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3대문화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수차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3대 문화관이 체험위주의 문화관이고 기존 문화시설의 민간 위탁에 대한 공익측면과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직원 pool 관리등



의 장점이 있는 기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검토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준공예정 일정을 감안하여 금후 전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유물구입을 완료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알차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개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전주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반영한 부분은 의회 심의일정에 맞춰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설의 운영방식에 맞지 않은 수탁기관은 과감히 교체되고 교육목적의 공공성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관광객 3백만명 시대를 이끈 주된 요인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상징인 전주 한옥마을의 양적, 질적 성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한옥마을내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판매 체험시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전통 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전주한옥마을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개관시간 연장 등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예품 전시관의 경우 2005년부터 휴관일 없이 지속적으로 개관을 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축제기간과 하절기 주말에는 2시간씩 연장 근무를 실시한바 있으나 평일에는 극소수의 방문객만이 찾는 실정으로 연장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제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선 관광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익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등 관련 시설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들은 내년 말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조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민간위탁기관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외부용역이 아닌 전주시 자체 평가단을 구성 시행키로 결정하여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표, 평가 지수 등을 작성 시행하였고, 2007년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는 물론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을 통해 위탁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간위탁 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는 단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전반에 대한 시설간 순위 경쟁보다는 경영컨설팅차원에서 4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좀 더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업그레이드 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 10월 자체감사 대상기관 확대운영 방침을 세우고 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근거 및 감사 주기를 마련하여 2007년도부터 출연기관 5개소 및 민간위탁시설 40개소 등 총 4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감사결과 공통된 지적사항인 협약체결사항 미 이행, 자체 운영규정 미 준수, 회계 담당자의 회계업무 미숙 등에 대하여는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16개소를 감사대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체계적인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결과 활용방안 구체화에 관한 사항은 평가결과에 대해 차기 민간위탁 선정시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타 시설에 전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통보,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별 공통된 주요 개선사항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시설관계자 교육을 확대하여 시설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준수 및 자체 운영규정 이행 여부,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결산)보고의 적정성 여부, 인사, 재산·물품관리, 시설 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하여도 주기적으로 꾸준한 지도·감독으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는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평가지표 개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 보다 강화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승계는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

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동안 수탁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행한 후 차기 위탁자 선정시 민간위탁 운영의 모든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및 고용승계 문제는 전적으로 수탁기관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민간위탁운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종사자의 인적 구성에 의해 좌우 된다고 판단하므로,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여건 속에서 시설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시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사항을 보장하는 방안, 또는 매년 시행하는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부 업무와 예산이 출연기관에 이관 또는 지원된 만큼 공무원 수의 감소와 예산 집행시 정산의무가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실태의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은 모두 5개소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개원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의 경우 짧은 역사임에도 2005년 대통령표창을 비롯하여 2007년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1위, 2008년 전국 9개 혁신기관평가 전국 1위에 이어 2009년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에서 전국 100여개 혁신기관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방만한 운영과 내부적인 행정 운영 면에서의 미숙함을 보이는 등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내실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특화시켜 시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반영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산이 한 톨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

립니다.

둘째로, 지난 2007년부터 시 감사실을 통해 실시하였던 자체 감사기능을 좀더 보완하고 강화하여 적발위주의 감사보다 예방위주의 정책감사, 현장지도를 통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 하여 문제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0년 조직 개편시에 다양한 출연기관 업무와 우리시 고유 업무의 영역을 면밀하게 심사 분석하여 우리시 조직의 기구와 인력이 중복되지 않게 재조정 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기능을 한층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향후 전주시 민간위탁 진행의 규모와 범위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한옥마을에 많은 문화시설 등이 건립 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시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원리 원가개념 등을 도입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화산체육관, 월드컵골프장, 사우나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으며 그 후에도 위탁시설의 증가와 함께 재정적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 민선4기 초인 2006년도부터 민간위탁 시설사무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2007년 2월에 시의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토론회를 개최 하여 민간위탁시설 관리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당시 민간위탁 48개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 실시여부” “시직영 전환”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여 48개 시설사무 중 44개는 지속운영하고 승마장, 인조잔디축구장, 로울러장 등 3개 시설은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는 운영을 중단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사무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 실행제 실시” “정기감사제 시행”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민간위탁시설사무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시설·사무 자체운영규정” 및 “인건비 지급 기준” 등 마련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민간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고문번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모든 부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으로는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및 책임경영체제하에 전문적 운영이 지속가능한 전주 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단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체육시설, 골프장, 화산체육관, 사우나 시설 등을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 하여 시민



들로부터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신규시설이나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야별 행정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예전부터 시설운영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똑같은 시설이라도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3가지 유형을 통해 가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정책 결정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탁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며 차기 조직 개편시 기존 53개 민간위탁시설과 사무는 물론 신규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공단 등 출연기관 위탁, 시 직영 등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위탁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 분석하는 사전 절차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전문가가 요구되는 시설의 직영을 위해서도 전문가 영입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님께서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연구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식견으로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을 점검해보고 향후 전주시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 하신데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Q 김광수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 전주천 복원 10년, 다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은 전주천이 복원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전주천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김완주 전시장 취임직후 시작되었던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한벽교 상류지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총 7km를 복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0여원이 투입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회고해보면, 당시 이사업의 명칭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 이었고, 따라서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1999년 12월 4일, 제 16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업의 명칭 자체를 전주천공원화사업에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공원화 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근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관찰탐방로조성, 관찰데크설치 등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에 강하게 반

대하였고 유수량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시설할 예정이었던 덕진보에서 한벽보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수질오염을 이유로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의 덕진보는 현재 수질오염 때문에 철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은 공원화사업에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펌프장 설치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도약 50여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 현재는 전주천의 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복원 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주천은 2001년 환경부 지정 자연형하천 조성 전국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제5회 일본 강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들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천은 수만년 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사행천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래 섬 자연석과 모래 자갈층 등이 스스로의 수질 정화기능을 담당하면서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공원 밑은 물이 절벽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용소를 형성하고 되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막아 둔치를 만들 어 게이트볼장이나 간이 농구시설 등을 지어 놓았지만 둔치가 끊임없이 침식되면서 토사유출만 반복되는 한편 반대편에는 모래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인간의 오만일 것입니다.

전주천 좌우안 둔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매설 물들이 묻혀 있어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흐르는 물길은 현재 일직선에 가까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천은 현재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가 사진촬영으로 증명해낸 수달을 비롯해 쉬리, 갈려니, 버들치 등 1-2 급수에서 서식하는 20여 종에 가까운 어류가 발견되고 있고 백로와 해오라기 등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각시바위 부근에서는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등도 어김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갯벌 등이 제법 무성하게 번성하고 물억새가 늦가을 도심정취를 그윽하게 자아내기도 하지만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쇠무릎, 갈퀴 덩굴, 가시박 등이 식물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억새밭이 있어야 할 곳이 황량한 미국쑥부쟁이로 뒤덮여 버렸고

창포는 외래 식물들 사이에서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주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수량을 확보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주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하천처럼 도시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뒤덮이면서 지하수맥이 고갈되어 버렸고 비가 내리면 빗물을 보관할 숲이나 토양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일시에 전주천으로 몰려들어 급류천인 전주천을 범람시키면서 급속하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갈수기에서는 유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만 가속화됩니다.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인 건산천의 경우 이미 완전히 복개되어 버렸고 그래서 전주천의 유수량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겨우내 묵었던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를 우기때 일시에 전주천으로 쏟아내면서 하류의 수질오염만 극도로 악화시켜 버립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갈수기때 전주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이곳이 환경부 전국지자체 최우수 사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관거와 오수관거의 분리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고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파손이 심해서 그나마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밤에 불을 밝히고 더욱더 조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엄청난 양의 토사유출이 반복되는 다강공원 아래의 구간처럼 일직선으로 만든 일부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인 배스 볼루길 등의 퇴치와 외래식물인 미국쭈박쟁이 돼지풀 등의 제거로 하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기 때 전주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과 아울러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시민들의 민원사항 중 자전거도로 문제는 전주천의 생태복원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둔치가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나 이동의 최단거리라는 측면에서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둔치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 좌안 둔치에 하천생태계 교란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폭 1m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화천이나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산성천은 생활하수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과 질소 성분에 강한 돼지풀 등 외래 식물만 무성하게 자라 여름에는 모기의 서식처로 산성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천 상류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천은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안고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산성천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 산림환경 연구원 자리에 들어서게 될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오염된 산성천은 방문객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천 복원 10년, 다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64만 우리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인 전주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당초 전주천은 7,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바람에 힘입어 수질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고기가 살 수 없을뿐더러 심한 악취발생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기피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환경부 주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연석 쌓기 및 식생블럭 형태의 저수호안 조성 및 갯벌 갈대 등 60여 만본의 수생식물 식재, 체육시설 및 고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에 정성을 기울여서 결국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충고와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주천은 자연생태하천의 모습보다는 천변공원으로써의 습터 역할에 그쳤을 뿐이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재의 전주천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완벽한 오수의 차단, 충분한 유지용수의 확보, 자연스런 물길 복원 등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직선으로 설치된 전주천의 호안 블록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하천과는 달리 도심하천에서 물 흐름대로의 하천조성은 인접 주거지의 문제, 도로교통 문제 등의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다가공원 앞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저수호안의 조성으로 다가공원 앞 바위와 부딪히면서 인근지역의 산책로 및 저수호안이 해마다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산책로 및 고수부지가 일부 유실되고 게이트볼장이 깊게 세굴 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반복되는 호안유실에 대해서는 하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다가공원 앞 구간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저수호안을 다가공원 방면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가능한 원래의 유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호안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너무 빠르게 만들거나 급한 경사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한 자연의 순리에 어울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래어종과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하천생태계 복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정보를 철거 또는 가동보로 개선하고 여울 및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류의 이동이 활발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게 된 크나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베스와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도 같이 올라옴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종의 제거는 기존의 토종 어종과 섞여있어 선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면 산란시기에 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년 4월에는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포획도구를 전주천과 삼천 합류지점인 금학보에서 10만개 의 알을 제거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산란시기에 전주천과 삼천의 주요지점에 포획도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또다른 이유인 유해식물에 대한 제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주천, 삼

천, 만경강, 이중천 등 도심하천 모두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식물인 쭈뼛쟁이, 돼지풀,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외래식물의 생육시기인 5~7월에 양 구청, 봉사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하고 있으나 면적이 워낙 방대하여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16.2km구간에 하루 200여명을 투입하여 700여 만본 의 유해식물을 제거하여 상당부분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하천을 뒤덮게 되므로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하천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투자는 최소화하고 외래식물이나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서에서만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퇴치를 해나가 생태하천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번째, 갈수기시 전주천의 유량확보 방안과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확보 방안에 앞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면의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우수의 유출속도가 빠르고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건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하천뿐만 아니라 덕진공원 유지용수 및 빗물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금년 11월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의 유지용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우선적으로 3단계 하수처리수 8만톤을 주요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건천화된 노송천, 건산천, 이중천 등의 유지용수로 재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천 및 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 조성, 저류지 신설, 상관 및 구이저수지 증고 등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 대책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객사천, 원당천, 산성천 일부 등 21.5km에 대해서는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건산천, 노송천, 산성천 상류지역 등 27.6km에 대하여는 아직도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2012년까지 총사업비 310억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질오염 문제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미생물을 활용한 EM공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전주천 좌안 둔치에 폭1~2m 정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천은 고수부지 폭 20~40m에 폭 2m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이후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가장 친근한 생활공간으로 정착되면서 평소 물론 무더운 여름밤에는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으로 붐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생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생태계와 시민의 욕구충족 양자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 산책로에서 걷는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간의 안전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이 또한 건강한 자연을 만들고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여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가능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천은, 동서학동 남고산성 아래 관성묘 인근에서 시작하여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2.33km 규모의 하천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고 도시화에 따른 하천의 지형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6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성천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고시된 산성천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5~8m로 되어있는 현재의 하천 폭을 12~16m로 확장하거나 제방 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홍수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내용과 하천 주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량 신설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심하천 중 유일하게 개수되지 않은 하천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산성천 개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08년 5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점 추진 등으로 신규사업에 미 반영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수질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야산성아파트 하류구간에 대하여는 2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사업을 '05년 기 마무리하였고, 상류지역 자연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수질 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전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남고산성을 잇는 생태문화 관광벨트 구축

을 위하여도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병행하여 2012년까지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하류 구간 190m를 우선 복원하고 상류지역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까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전주천의 생태계, 수질오염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과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 김남규의원 (송천1·2동)

▶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 있는 7개의 저수지와 68개 소류지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책과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인 강수의 특징 때문이며 물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물부족은 식량 생산에 절대적이었으며 산업화시대 산업용수는 공장의 원천수입니다. 최근에는 물이 부족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활용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난화와 열섬화시대에 물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지점에 분수와 워터존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농성천의 복개 및 재생사업, 한옥마을의 실개천사업과 비교하면 전주시 관내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관리 운영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산에서 개울과 계곡으로 저수지 소류지의 담수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전주천과 농성천의 수량 수질관리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는것 아닙니까?

1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부대효과가 파급되며 선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수지와 소류지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는데 전주시는 인식은 있으나 관리 운영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7개의 저수지와 농수로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농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우아동과 호성동에서, 전미동 조촌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수로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출장소가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호우때 전미동과 호성동의 참외 수박농가들은 물에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친에도 있었습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덕진구 32개, 완산구 36개가 있으나 최근 2000년 이후 12개가 매립이나 아파트단지 편입 공원조성 시가지조성 등의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소류지의 기능이 퇴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열섬현상에 대한 자연



적 냉풍소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는 56개의 소류지가 전주시(친환경 농업과와 구청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류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56개 소류지중 47개가 1945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들로 6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저수지의 뚝관리와 저수지의 높이, 수문관리는 물을 담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수문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수문 수로의(여수토와 여수로) 주변은 누수화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세고 있기 때문에 담수 저수기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의 담수를 위해 준설은 최근 10년사이에 56개 소류지중 5개 소류지가 2009년 (국비3억2100 만 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류지의 평상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방치되다보니 어떤 저수지는 담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의 유입과 순환이 안되어 기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소류지는 기능을 못하여 오물쓰레기장이 되었다가 재생된 팔복동 구주제(생태공원)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8월5일 생태회복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행사가 송천동 오송제 저수지에서 있었습니다. 우수한 토종 어종의 다양한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서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저수지에 불법 낚시꾼이 수문을 열쇠를 부수고 파헤쳐서 만수위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방류된 치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토종 물고기들의 간섭현상으로 생존율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는 소류지는 어떠한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동원되어 수문을 임시로 용접하여 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문관리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물이 빠지면 소류지는 오물처리장처럼 변하고 투기오염물질로 도시주변의 소류지는 항상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본의원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방류한 환경부서는 소류지관리는 다른과(친환경농업과)라고 했습니다. 물과 저수지 수로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이고 생태소류지관리는 환경과이다 보니 소류지 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8개의 소류지중 농업용수의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환경과로 이관하여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으로 하든지, 소류지생태공원으로 관리하든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제 기능이 부서별로 협조되지 못하여 물관리, 소류지관리 따로 소류지생태공원관리 따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분명히 하여 소류지의 기능이 제 역할과 제대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주시 소류지관리 정책사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생태공원 도심소류지 10개를 단계별 추진하고 현재 4개소(신용, 학소, 맛내, 성곡제)는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조성은 지시제, 오송제, 구주제, 서은제, 황학제입니다. 소류지의 구체적인 시설확인 운영은 양구청의 농축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류지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소류지 운영, 관리, 생태공원조성이 시청의 친환경농업과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 시청의 환경과로 부서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용도에 대한 혼선과 일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홍수조절 및 담수기능을 포함한 농업용수 용지인지 도심속에 편입된 도심소류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의 소류지인지 부서를 분장하고 운영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천동 신흥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는데 예코시티 (주)태영에 의뢰하는 개발 방식보다는 전주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코시티 개발 때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예상가능한 답변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간 이러한 방법과 감박수에 중요한 소류지가 매립되고 무너진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성동의 만수제는 만수초등학교로 부지 편입되었고, 송천동의 시천제는 솔내청수년수련실로 매립되었고, 소류지는 소유부서가 재경부의 공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서류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매립이 쉬운 경향이 많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싶어서 송천동 신흥제는 꼭 전주시에서 생태소류지공원으로 계획과 절차를 이행하는게 더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류지로서 원형이 보호되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농업용 수리시설 소류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소류지관리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진구 장동 소재 기저저수지를 비롯한 7개의 저수지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7개의 저수지 수혜면적은 858ha이며, 56개 소류지의 수혜면적은 303ha입니다. 시에서는 56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일상점검, 농농기 전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시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류지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류지의 안전관리 및 소류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소류지 대부분이 1940년대에 축조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 기능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의 발달과 개발로 인해 수혜면적이 대부분 소멸되어 15개소는 이미 농업 생산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집중 호우시 산 계곡수를 받는 홍수조절용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41개소만 농업용수로 활용·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09년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농내제, 삼산제, 신흥제, 후곡제, 하회제 등 5개소의 소류지에 대해 5만 1,866입방미터의 준설을 실시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수시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류지에 예산을 투자하여 권양기와 수문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소류지는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기후조절 측면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 그 지역의 대기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조절 기능으로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인식을 같이하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안하신 소류지 운용방안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사용역은 먼저, 금년도 6월에 제정된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해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관내 소류지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가용재원이 넉넉치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체위험 소류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고지원을 받아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류지의 현황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소류지의 용도에 따라 부서를 지정,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전주시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 56개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로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할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수리시설로서 소류지 기능이 상실된 도심소류지(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소류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소류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여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천동 신흥제 기본설계는 에코시티 의뢰 개발방식보다 전주시에서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도심소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보존하여 도심열섬현상 저감 및 시민휴식 공간과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신흥제를 포함한 10개 소류지에 대해 생태호수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북부권 개발을 위한 35사단 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어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신흥제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에코타운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사업추진중에 있는 사단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서 신흥제 뿐 아니라 백 석저수지, 세병호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류지의 매립으로 인한 토지 개발은 없을 것이며 신흥제 등 사업지구내 소류지에 대해서는 토목사업 형태의 개발이 아닌 생태공간 복원차원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도심속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환경과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물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소류지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Q 장태영의원(삼천2·3동)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지난 2009년 4월 8일 제261회 정례회 저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몇 가지 개선되지 않는 문제와 특히,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민간 제안 방식에서 정부고시 방식으로 급선회한 집행부의 판단 배경과 근거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공신력 실추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법으로 반영한 혐기성 소화방식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재 기본 계획상의 혐기성 소화공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며, 또 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방침 이어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민간제안 방식 추진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에 대한 검토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와 추진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거꾸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번째로, 아직도 전주시는 어떠한 비교우위도, 환경부 자문, 국내외 선진공법에 대한 비교시찰,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혐기성소화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주시는 기후변화대응 25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분야에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 사업추진 이라고 혐기성소화방식 특정 공법을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마치 혐기성 소화방식만이 국비지원대상인 것처럼 반영한 전주시는 환경부에 확인 결과 건식(사료화, 퇴비 화)방식, 혐기성소화방식, 탄화 방식 등 모두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광역시설인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자원화, 에너지화, 연료화 방식의 공법 다양성과 선진기술을 경쟁유도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설현황과 공법의 비교우위를 통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실상 용역과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내용에 대해 전주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번째, 무려 1,106억원 달하는 사업비의 실재내역입니다. 2008년 5월경 입지선정위 회의자료와 정부투·융자 심사자료에 약 1,264억과 150억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사업예산은 기본계획서에 근거하기를 시설공사비 600억(음식물 415억, 재활용품 90억, 대형폐기물 32억, R&D 홍보관 63억), 부대공사비 100억(주민편익시설 60억, 진입도로 23억, 침출수 이송관로 17억), 주민보상비 60억, 부지조성비 38억, 부대비 68억(용역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866억에 하수슬러지 240억을 산술적으로 더한 액수가 1,106억입니다.

이중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비는 2008년, 8월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공법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혐기성소화방식의 경제성 검

토에서 톤당 건설비 0.91억원을 환산하면 273억이 되어야 하는데 142억이 부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과 연계하여 병합처리방식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도 없고 공법검토가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공법 검토와 기준없이 천 억대의 사업예산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는 이를 민간투자자로 가겠다는 결론을 더합니다. 우리시가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떤 공법으로 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판단과 기준은 없고 천억대 사업예산과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는 결론만 정하는데 2억원에 달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세번째, 입지선정에 따른 부지공모는 종합타운, 즉 클러스터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폐기물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의 전단부에 반드시 필요한 엄청난 열원을 포기한채 오히려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전주시는 기존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성을 상실하여 앞서 지적한 과대 시설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갖추는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정사업의 단초를 원천봉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네 번째,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우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폐기물시설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던 중 7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전주시가 민간투자방식을 정부고시방식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지난 6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우리시 재정상황과 환경부 정책방향등 최근의 동향을 볼 때 민간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고 책임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천한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또한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대한 사전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변호사 자문과 기획재정부 의견이 '기준에 의하여 업체선정시 법적 하자 없음' 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 발주방식 현황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대다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붙임자료 1과 같이 타 자치단체 발주방식 현황을 설치중 시설과 기 설치된 시설 현황을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붙임자료 2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별 장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시찰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 자료는 똑같은 자료와 보고 내용에서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붙임자료2, 단점과 기타란에 명기한 염려까지도 그대로 인데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막고, 또 다른 경쟁을 유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시 사업으로 선화한 것이다.”고 시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음식물 처리시설 공법으로 혐기성 소화방식, 1,106억의 사업비,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 제안사업을 제안 받고, 그 중 두 가지는 취하고 한 가지는 버렸습니다. 정부고시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주시는 지난 9월 민간투자격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수행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전주시슬리치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 끼울 단추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선진지 시찰,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빼끼기 수준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허술한 공법 선정과 그에 기초한 과대한 사업비 내역으로 재정사업 추진원칙을 처음부터 포기한 채 현재 민간투자 방식의 무의미한 논쟁을 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담보하였을 때 확보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상식적으로 환경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설의 규모, 공법, 운영계획을 입안한 뒤 타당성조,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예산 규모를 산정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슬리지 공법은 유동상소각방식 검토 중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새로운 공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병합처리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지공모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끼워 넣어 시설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집행부와 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국비지원 가능한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으실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전문학적 사업예산의 조달과 2012년까지 해당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가? 라는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방식에서 민간제안방식과 정부고시방식의 차이중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제안방식이 그간 집행부에서 주장한대로 정부고시방식에 필요한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등의 제3자 선정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

자가 제안하는 과도한 사업예산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시기를 사전협의를 하여 처리시설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법선정 및 설비시스템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안들을 발주처인 전주시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선택적 선정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으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경계시하고 우려하는 환경성 문제, 그리고 발주처인 전주시의 최대현안인 에너지 회수와 효율에 근거한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성, 민간기업이 갖는 창의적 기술력과 시스템의 평가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설비가 고유하게 갖는 사업적 운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참여를 보장하는 컨소시엄을 요청하고 투자조건에 필요한 요구를 사전에 협의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민간제안방식은 결론적으로 자본능력 시공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주시와 협의가 가능한 민간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시설 준공이 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량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통합운영에 대해 제안한바 있으나, 전주시의 답변은 불가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각자원센터 입구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00% 천연가스 차량 교체를 추진하면서 양구청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차량교체 하지 않습니다.

14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위탁업체 청소차량중 천연가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심재생사업을 한다는 종합경기장 야구장주변에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청 차고지는 전주의 나들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의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 확장을 시장께서는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완산구청 차고지는 몇 번을 이야기 하지만 2004년도에 6개월만 임시로 사용한다고 집행부가 이미 그 위치의 부적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삼천천의 수질을 개선한다고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는 삼천천 하천부지에 위쪽으로는 수 십억 복구비용이 들어갈 중인동 사금채취 불법현장으로 방치되어 있고 아래로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비포장 하천 제방도로에 쓰레기봉투를 야적하고 완산구청 청소



차량차고지를 운영하는게 무슨 이유로 그토록 타당
한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 수당이 2010년에 양구청 합해
232,800,000원입니다. 현재도 소각자원센터 주민편
익시설은 수집역 건설비로 지어 졌다는 전설만 남아
있을 뿐 지난 9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인근 지
역주민에 한하여 이용이라는 합의뿐 내년도 예산지
원을 통한 활 성화의 운영방침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
니다. 정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의한 전주시 청소차량 통합차고지 운영은 지
난 5분발언 내용과 함께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
계의 기본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감량배출과 분리수거,
성상별 수거운반, 성상별처리 결과물 재활용 및 재이
용, 처리시설 열원 회수 에너지화, 수거차량 장비의
친환경 연료화 및 효율적 정비체계,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 편의시설 제공, 기설치 운영시설과의 집적화
와 시너지효과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개선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송하진 시장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
고 계신 장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
차량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
면 밝혀 주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사업추
진계획을 수립, 2008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과
사업부지공모를 통하여 입지를 선정 하였고, 2009년
에 입지결정고시와 사업추진방식을 민간투자방식
중 정부고시방식으로 결정, 현재 민간투자 적격성조
사 및 하수슬러지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시행중에 있
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
획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의시 의원님들
께서 민원처리 및 보상대책, 입지선정에 관한사항,
진입도로계획과 처리용량 결정, 시설간의 배치계획
의 부적정 등 많은 사항을 질의하 시어 당시 답변 드
린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센터의 여열 에너지
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계획
누락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기존 음식
물자원화시설장의 시설실태 및 이전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

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술은 사료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형용량을 처리
하는 방법으로는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화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처리공법 비교를 위하여 2008년 두차례, 2009년
한차례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현장견학 및 2008년
12월 음식물류 쓰레 기특성과 적정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시 초기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나 장기적인 운영 측면과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 및 폐수처리
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 이 적정한 것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간투자 적격성조
사 용역과정에서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 등으
로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 자문을 받아 우리시에
가장 적절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
으며 또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때 만약 기본계획
상의 공법보다 더 좋고 안정적이며 운영비도 절감되
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고시내
용에 포 함해서 최적의 공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
여 공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토
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건
해와 현재 진행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준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0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중 국비 30%와
시비 10%, 민간투자 60%를 투자하는 것으로 국비확
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9억 8천만원 예산확보와 2010년 국비 10억
1천5백만원 포함 34억6천5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 민간투자 정부고 시방식 추진계획상 행정
절차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도 시행중에 있어
사업추진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며,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은 다른 사업과 달리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매
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2010년 3월부터 용
지보상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사업자모집공고)
와 7월중 사업시행자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
행 후 늦어도 2010년내 공사착공하여 사업완공계획
기한인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
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민원해결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차량 차고지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시내버스 100% 천연가스 차량교체를 추진하면서 양구청 청소차량은 교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14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 청소차량 중 천연가스 차량은 몇대인지를 물으셨고, 현 완산구 차고지의 부적정을 인정하고도 그대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청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차량교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완산 16대중 10대, 덕진 14대중 8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노면 청소차량(12대)의 경우 천연가스차량 미 생산으로 교체를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면청소 차량도 천연가스차량으로 이제는 출고가 되고 있는 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차량 대 · 폐차시에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청소차량은 총 147대로 천연가스차량이 2대, LPG 차량이 34대이며, 나머지 111대가 경유로 운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 청소차량 교체시 경유차량보다 차량 톤수에 따라 대당 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청소차량부지가 당초에는 효자동 소재 광진래미안 아파트 부지를 이용하던 중 사유지가 아파트 부지로 매각되면서 현재의 차고지인 삼천동 소재 국유지를 '03년 3월부터 불가피하게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부지확보의 경위로는, '07년 10월 제24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의시 '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당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 매수 승인이 되어 현부지(6,307㎡)를 7억8천6백만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운전원 및 탑승원의 쉼터가 열악한 실정이고 주변정비 등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도 총 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조립식 관리동을 설치하여 운전원 및 탑승원 48명 정도가 점호장과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교행 문제는 청소차량이 새벽시간대 출차와 오후에 회차하는 관계로 차량교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용 쓰레기봉투 야적의 경우는 시민불편 신고에 따라 수시로 불법 건축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건축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처리업체에서 수탁을 하는 관계로 임시야적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위탁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개선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통합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청소차량 차고지 경우 현 야구장 인접공터(663㎡)를 2008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1월 3일까지

3년간 무료 임대 사용중에 있으며 운전 원과 탑승원 등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무상임대기간의 만료시점에 맞춰 향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덕진구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소차량 차고지는 휴일 및 야간 차량 주차용으로 이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점호 및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의 집적화와 시너지 증진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차고지 운영과 개선 방안으로는, 구청별 청소구역의 작업 효율성과 운전자 및 탑승원의 출퇴근 등의 접근 용이성, 주유 및 차량 정비 등의 편리성과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등 모든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강영수의원 (서신동)

▶ 전국규모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대하여

다음은 2010년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규모 대회 유치는 우리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해만 해도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국민 생활 체육 대축전을 비롯한 8개의 전국규모 행사가 우리 지역 전주에서 펼쳐져 전주시 추산 84억 4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주에서 연속 3회 이상 개최하던 대통령배 전국 수영 대회와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 그리고 스쿼시 대회의 경우, 1억75백만원의 유치비용을 투입하여 6억5백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3,000여명의 내방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연속 유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앙 경기 연맹과 전북 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주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개최년도 1월 중순에 진행되는 중앙연맹의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개최지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 경기연맹에 유치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계로 전국대회 유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등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장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300여개의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건축예산을 빚미로 전국대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과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는 선수 및 가족을 체류하게 함으로써 크고 작은 지역경제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그들로 인해 우리시를 알리고 교통하는 민간 홍보사절의 역할의 기반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 교부세는 국세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를 인하에 따라 금년 대비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재정보전금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등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는 금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금 등 복지수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민선 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인접 시군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라 세출은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정책의 순위가 되고, 우선된 정책에 따라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인한 우리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된 학생 중식 지원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와 내년도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결식아동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결식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결식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될 우리네 이웃입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내 급식과 학교외 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내 급식은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학교외 급식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급식전달 방식은 식품권 지급 방식과 도시락 배달방식,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권 지급 방식은 2010년 기준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권을 발행한 후, 대상 아동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권 지급 방식은 이용 아동의 낙인감 유발은 물론 김밥, 분식 등의 편식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영양 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 결식아동들이 매월 1~2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식권을 수령하고 음식점 이용시 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동들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판단해 전자카드로 교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식아동들이 편리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권을 사고판다든지, 아이가 아닌 어른이 식권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식품권 사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자카드 운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지원 대상자 중 담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방학중 급식지원 필요여부와 급식지원 방법을 조사하여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급식지원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전주시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입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국규모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대하여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의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동계, 하계 스포츠 도시로서 매우 크고 작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 해에도 9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숙박업, 음식점 등 84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어 왔음은 물론 스포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국대회 중 전주에서 3회 이상 연속 개최해온 대통령배 수영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전국학생 스쿼시대회가 이제는 전주대회라고 할 만큼 인지도를 넓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계속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 체육단체의 역량과 중앙연맹과의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교부세 감소 등 사상초유의 재정난으로 예산 형편상 어려움때문이었으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상 급한 수영과 싸이클, 스쿼시 대회 등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 전국대회의 경우도 개최시기 등을 조정해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전국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강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강영수 의원님께서서는 우리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결식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결식의 배경에는 부모의 실직·이혼·가출로 인한 가족해체와 만성빈곤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며, 결식아동이 심리적·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지니

게 된다는 중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 방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전달방식은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급식,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등 급식, 식품권 및 부식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아동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보한 12,000명과 전주시 자체 발굴자 2,000명을 포함한 총14,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21명은 도시락배달,1,200명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급식소를 이용하고, 12,779명에게는 식품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있어서 지원 받는 아동들의 낙인감 유발, 심리적 위축과 식품권 분실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서울시와 속초시 등 지자체에서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카드 사용으로 급식아동의 낙인감 해소 및 이용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개학시 전자카드 회수율이 저조할뿐더러, 이용업소인 마트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단말기설치 사용임대로 월1만2천원, 가입비1개업소당 5만원, 통신료 월평균 8천원등 연간 5천만원이상을 지 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타지자체 사례 등을 여러 모로 검토하여 대상아동들의 심리적 위축 및 낙인감으로 인해 건전한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두번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대상 아동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재조사후 아동 급식 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신규자 및 누락자 발생시에는 수시로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 12,000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등을 통하여 재조사 후 전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결식의 우려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도 있게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 강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Q 국주영은의원(송천1·2동)

▶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부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경기장과 주변의 13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생시키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이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포괄된 비즈니스코어로 개발시켜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식으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설명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전주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을 수정하여 뉴타운건설이라는 대형프로젝트로 규모를 확대한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고 계획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상위계획에서는 '천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 이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전주시를 다 핵구조의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권역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권, 문화예술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상업권, 주거휴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덕진동 일대는 문화예술권에 속하며, 이 권역의 발전 방향은 문화·생태·체휴 등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의 발전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의 유치와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문화요소를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한편, 구도청사에 전라 감영을 복원하고 한스타일 센터를 건

립하여 연계시키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래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상 구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상업지구가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거를 포함한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 아파트의 미분양율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프로젝트로 진행할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시 44개가 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까지 겹쳐있는데 이를 외면한채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순조로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밝힌 노후화된 도시의 재생이 목적이라면 이곳보다 오히려 완산동 일대나 기차촌 일대, 그리고 인후동 일대가 더 시급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에 대한 총체적 계획없이 뉴타운 건설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다른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그속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의 위상은 무엇인지, 전주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속에서 본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재정비촉진사업은 비즈니스 코어로 개발하여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무역, 행정, 금융, 관광, 숙박, 국제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덕진동 일대만의 계획을 세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와 숙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도청에서 가까운 서신동에 금융과 무역 행정이 가능한 시설 설립, 그리고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를 문화관광 포인트로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계획은 최소한 50년 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사업비가 확보되

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건설사업은 사업자를 몰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민간투자자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전철 사업에서 시간만 촉매다가 행정력 낭비와 전주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채 폐기되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다면 그동안 준비과정에 들어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넷째, 전주시의 타 재정비 사업과의 또 다른 불균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타 재정비추진구역의 불만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44건입니다.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려 44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노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전주시에 기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자칫 이것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뉴타운 건설은 불만을 표출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민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의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추진사업 역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지만 또 다른 재개발로 상가세입자와 건물주의 추가 부담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 조합비 부담과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들의 추가 부담금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관광촌이었는데 도시가 쇠퇴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펠론축제를 기획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에 꽃축제·단풍축제로 확대를 했고 관광산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한 때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고 결국 2006년도에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바이도 마찬가지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행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건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익창출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국제회의만을 유치하는 계획으로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회의가 활 성화되고 본 센터가 제기능을 하려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최소한 몇십년 후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계획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역행정, 금융, 숙박기능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다 큰 틀에서 각 부문을 조화롭게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의원 역시 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식 대형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자칫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종합경기장 재정비 추진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시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A 송하진 시장

▶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추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에 대

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진종합경기장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테니스장을 대체시설하기로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으로써,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 보다 광역적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규모 단위 개발보다 개발효과도 크고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혜를 받으면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현재 2차례의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차 중간 용역보고와 함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신청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배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지로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덕진종합경기장과 터미널 일대는 사실상 전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중장기 개발계획 속에서도 에코타운, 법조타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 지 행정타운 그리고 팔복동산업단지와 전통문화 중심지역의 한가운데이며, 우리시 소유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여 컨벤션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체전 유치도 불가능한 현재의 2종 육상경기장을 스포츠타운 내로 이전시키면서 1종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등 스포츠 시설 집적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까지 구축하고자 한 프로젝트로 최소의 비용으로 컨벤션과 관광, 스포츠 3가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종합경기장만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특히 주변지역은 건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검찰청이 2012년 말까지 만성지구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수행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도시, 건축,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 휴식시설이 한곳에 복합 배치된 집적도시(Integration City)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이 배치된 집적도시로 개발되면 전주 구도심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전체적 관점에서 기능적 연계를 통한 권역별 배치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업성이 보장되지 불확실한 사업에 민간 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과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재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은 시가 개발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사업이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해, 교통, 환경 평가부터 건축계획까지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주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 관리하며,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의는 종합된 의견을 추진계획에 반영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25곳의 재개발사업은 해당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 공공에서 일정부분을 참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재개발 사업방식보다는 실현 가능성면에서 높다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비 산출은 지구지정 용역이 끝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비로 1조원이 예상되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는 2천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구역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년초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추진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형 PF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수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토지대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개발을 하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건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Win-Win 하는 모델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를 통해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낙후지역 도시재생 계획과 주민의 불만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는 낙후지역의 총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4+1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1 권역은 중앙, 노송, 서화동 등 한옥마을 등을 아우르는 남부도심권역, 그리고 팔달로 주변의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팔달로권역, 종합경기장 주변 및 덕진공원을 포함하는 북부도심권역, 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는 백제로권역, 그리고 팔복동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노후산업 단지 권역 등입니다.

이들 권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년전주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국장, 과장, 계장급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31회의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타 지방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 추진사업들은 중앙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과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조성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용머리 고개 상징광장 조성 사업비 등 국비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쇠퇴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국비 6억원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 재생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후동 단독주택지 정비사업은 집수리, 주택관리, 도우미 파견 등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며, 전주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전 지역의 노후주거지 관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보수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공원조성, 주차장 확충 등의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 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및 건물주 부담금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서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조합결성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받은 후 주민이주, 건물철거, 공사착공, 준공 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입주가 시작되고 동시에 조합결산과 청산을 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인허가 등 준비기간으로 3, 4년, 공사기간으로 2,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와 부담금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세입자 문제는 권리금 거래가 있는 상가세입자에 한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담금 문제는 관리처분시 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결여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상가세입자간 권리금 분쟁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11월 28일부터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으며 이를 적용하는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상향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이외에도 상가세입자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립 총 세대의 17%이상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촉진계획 수립시 적극 도입하겠으며, 2~3개 구역씩 순차적으로 순환 개발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시에 전세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컨벤션센터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는 총 10개소로써 현재 수원과 춘천 등에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컨벤션 센터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현실로 우리시



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컨벤션센터의 적자운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시설이면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물론 새만금 관련산업의 연계를 모색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상업시설은 광역수요 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고, 문화시설은 단지내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화를 확보하여 명소화 시키면서 호텔은 부대시설 기능이 특화된 비즈니스형 특급 호텔로 건립하는 등 시설간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동 배치를 통해서 단순한 컨벤션 기능을 뛰어넘는 동반상승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김현덕의원 (삼천2·3동)

▶ 전통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시장께서 그늘진 곳에 복리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시리라 생각되고 그 어느해 보다 따뜻하리라고 기대를 힘껏 모으면서 시장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 등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인회는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신청 당시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의 명의를 일치하지 않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 상권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게 전매한 상태이며 실제 상가 운영 또한 재래시장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 각 상인회별 영업 상가 총 합계 점포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라 함은 점포의 상권 밀집지역은 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가 풍남상인회 중 다수가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 면적 및 신청 당시 보다 1평에서 10평이상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해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00주단의 경우 신청 당시 48.75 제곱미터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영업 점포의 면적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점포가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숫자의 점포 면적 신청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48.75제곱미터가 37개, 약 15평이 되었습니다. 16.25제곱미터 16개, 5개 점포입니다. 32.5제곱미터 37개, 약 10평 정도의 점포입니다.

이는 신청 면적 신청 현황을 관련조례 규정에 꼭 맞추기 위해 한 것이며 전주시 보조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운용 등 각종 행정적 수혜를 받기 위한 서류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이 신청 당시 전주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재래시장 상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한지 3년이나 경과한 후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당시 상인회 신청서와 현재 영업점포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시장명령 등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재래시장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회원은 다른 상인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남상인회 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인회 등록 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가입된 매곡교상인회 회원들이 풍남상인회 회원 탈퇴후 매곡교상인회 등록신청을 전주시에 제출한다면 상인회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담당 공무원은 상인회 운영 조건에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과 풍남문시장이 국비 5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통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국비사업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장의 의지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 50억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부지 위치가 결정되어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주들과 협의가 순탄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

한 주민들의 공청회 및 주민여론수렴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과 중앙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야간 주차료율과 시간당 주차료 및 1년간 수입, 지출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다음은 삼천거마공원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삼천동에 소재한 거마공원은 도심속의 공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구장과 모정, 청소년들이 즐기는 농구장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땀방이 서식 습지가 있어 생태계 보존에도 많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도서관이 공원속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에 1천여명, 방학중에는 2천여명이 찾은 정도로 도심속 최적의 장소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잘 묶어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가꾸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를 상징하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생태를 상징하는 땀방이 서식 습지가 있으며, 쉼의 장소인 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에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심어 5년후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내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어 열섬을 예방하고, 도심을 더욱 푸르게 조성하여 푸른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을 잘 조성해준다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숲속의 도서관을 선물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지형이 평지로서 어르신들이 산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자랑스런 명소입니다.

제한된 공원이지만 잘만 조성이 된다면은 어떤 시설보다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원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저 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생태문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어 전주시가 추진하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기후 변화대응사업 등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A 승하진 시장

▶ 전통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등록 및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풍남문 상인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입된 풍남문 상인회를 탈퇴하고 매곡교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시장 및 상점가안의 전체 상인 1점포에 1인 기준으로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풍남문상인회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위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2월 8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7일자로 가칭 매곡교 상인회 등록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자의 다수가 기존 풍남문상인회 회원과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업무구역의 일부가 중첩되어 금년 4월 1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업무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곡교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풍남문 상인회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풍남문 상인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업무구역을 총회를 통해 매곡교 상인회가 업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제척하는 의결을 통한 변경 등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상인회 운영조건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접수된 풍남문 상인회 등록신청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당시의 건축물의 점유 총 토지 면적 대비 점포수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점포의 면적은 등록 시점과는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공부상 면적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개별 점포를 정확하게 측정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등록함으로써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풍남문 상인회의 경우 그동안 택배도우미사업, 시장 가요제, 소풍카트기 비치, 상인대학 운영,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 예산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으며, 동문상점가와 공동으로 문화 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등록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풍남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세세한 부분까지 재론해서 존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익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점포의 면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파악을 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나가고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그리고 풍남문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2009년 3월 27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으로 그중 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33억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 센터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용역이 시행되는 기간에 동문과 풍남문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의 추진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회, 지역주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현재 구상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동문 상점가의 경우 문화센터 건립, 먹거리촌 조성, 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입구 조형물 설치 등이고, 풍남문 상점가는 전통체험관 설치, 먹거리 시범점포 조성, 체험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등입니다.

이외에 간판정비, 포켓공원 조성, 벤치시설 등 시장 환경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과 경영 현대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도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시비 6억 6천 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 1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전동 187 - 1번지 외 16 필지 2,919평방미터에 노면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8천 6백만원과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설명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매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의 보상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라북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7명의 토지주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0월 22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이주를 미루고 있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명도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실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조성하는 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 60%와 시비 40%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제1항, 전주시주차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실태를 질문하신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101면으로, 주차료는 시장내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30분은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야간이 동일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1년간 운영수지는 수입 5천 9백만

원에, 지출 6천 6백만원으로 7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은 2층 3단 철골조 146면의 시설을 갖추고 2008년 10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상가에서 발행 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무료로 30분 초과마다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주·야간이 동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운 영수지는 수입 4천 1백만원에 지출 6천 1백만원으로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 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은 설치 목적에 맞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 공원 조성에 대하여

다음으로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라는 의 원님의 제안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에 생태문화 공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267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정례회 상임위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문제 이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이고 추정사업비는 440억원, 사업기간은 1998년 9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였습니다. 시행자는 전주시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맡아서 했고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5항에 의거 한 지방식 도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인구 및 세대수는 14,923인 4,033세대 정도였고 1996년 12월 택지 개발 예정지구 승인하였고 1998년 9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4년 6월에는 토지공사 자체 용역발주가 되었고 2004년 7월 용역착수하였습니다. 토지공사는 2004년 8월에서 12월에 행정절차 이행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시행자도 변경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05년 8월 공사 착 공,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어 조금 늦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에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전주하가지구 시행자 변경 협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 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주진입도로인 대 1-17호선 이계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구간의 도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사 준공전까지 “갑” 이 사업비를 부담 개설하고 발생하는 잔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을” 이 지정한 장소에 무대 사토기로 한다. 다만 하가지구 편입구간 길이 300미터의 토지 보상은 향후 토지공사에서 환지계획에 반영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 습니다. 도시개발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내의 간선시설은 당연히 토지개발촉에서 부담해야 하며 동법 제 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주시에서 한방병원도로의 개설도 토지공사에서 진입로인만큼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한국 토지공사 전북본부와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체결된 이 협약서에는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몇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가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그러니까 한방병원 옆 도로가 되었습니다.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의 개발 수익금을 우선 사전 납부 - 사전 납부에 대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 함으로서 도로 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주하가지구의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공하고자 한다 라는 목적하에 제3조(개발 수익금 사전 납부의 규모)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 비 270억중 우선 전주시가 요청한 150억원을 정액으로 하되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익금 범위내



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사전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기 분 양 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2007년 4월에 50억원, 2007년 10월 초에 50억원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납부하기로한 50억, 나머지 50억은 납부되지 않았습니 다.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이 단 조항이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갑은 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까 정산을 해봐서 손실액이 발생되었으면 이미 받은 납부 금액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이 조항에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사전 납부금은 “갑”의 통보한 계좌에 입금 의뢰서에 입금한다.

제5조 (개발 이익금 정산) 본 협약서 제4조 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입금한 납부금액은 추후 도시개발법 제68조 3항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에 의거 전주시 특별 회계에 귀속될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시중 이자를 치는 겁니다. 정기에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0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 토지공사 전북 지역 본부장이 팡, 팡 도장을 잘 찍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개탄스럽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자지간의 재산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해서 체결해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노력해서 안되면 안되고 이런 양해각서도 아니고 150억을 주고 받는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정산을 해봐서 남으면 주고 남지 않으면 안준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협약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여도 인근의 진입로는 시공사에서 개설하는게 현재의 전주시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는 지난 2007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 다. 나머지 50억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실 협약서 때문에 한두푼도 아닌 50억원의 전주시 세수가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07년에 받은 100억원도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결정이 나면 전주시에 불리하게 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협

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세수의 손실에 관한 사항임으로 또한 저는 의원이니가 이렇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단 한마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세입 손실로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 다.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 저기 계십니까는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나, 그렇게 따지니까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공론화된 사항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련 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도공에다가 현재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 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억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공동인 것 같이 여기 저기 찢어서 썼습니 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예결위원회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2010년 예산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가 뭔가 하는 문제로 해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 예산이 338억 6천만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예산이겠쎄. 77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도로과하고 양구청 도로과는 지금 과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고민하는겁니다. 사업비가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50억원을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아도 되겠쎄. 100억원을 돌려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아찔해서 정신 금단 현상이 일어날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에 미리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왜 전주시에서 개설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4조 말단에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조항에 의해서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 받았으니가 괜찮고 100억원이 되겠죠. 전주시에서 토지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협약을 할 당시의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소상하게 진술시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일이 잘못되서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때 생각하기만 해도 참 큰일 났습니다.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한 달여간에 거처서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에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1,800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문제에 대하여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서는 우리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체결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수익금 사전납부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지난 2007년에 미리 받은 원대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억원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한방병원 가련교를 잇는 가련산로는 송천동 등 북동부권과 서신동, 효자동 등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주 간선가로망으로서 민선2기부터 개설요구 민원이 많은 시급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장기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6년 5월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련산로의 개설에 투자된 270억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10억원, 2007년도 125억원,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55억원으로 총 투자비 26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한국토지공사측으로부터 하가지구내 도로 편입부지토 제공을 받았습나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미리 받아 당연히 전주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가련산로 도로개설사업예산에 편성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좀 더 원활을 기 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진입로는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진입로 개설비를 왜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협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지구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택지경계로부터 200m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전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자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아' '97년 2월 20일 개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8년 9월 4일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및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이자부담 등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만약 사업 유보시에는 토지행위제한 등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에서 중단하라는 의견과 시 재정과 분양이 어려워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괄 현금보상을 통한 개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택지개발사업은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 시행시 분양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이 우려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정부투자기관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주택공사는 참여 의사가 없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천변도로 1,589m를 사업지구내 포함하여 폭 12m를 20m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간선대로 1-17호선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1,100m 중 하가지구 편입구간 300m의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잔여구간 토지확보와 1,100m 전구간 공사는 전주시가 부담 개설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2004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를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에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토지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청산은 사업완공 후 실시하여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주 진입로인 대로 1-17호선은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완료시까지 완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주택지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가련산로의 조기 완공과 시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 2월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분양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에 5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납부할 50억원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회차별 분양대금 수납이 어렵게 되자 100억원만 납입하고, 50억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인 청산 결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전 납부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을 기초로 한 것이며, 협약서 제5조 개발이익금 정산도 사전 납부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손실액 보전시 이자까지 계상해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 대책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공동주택지 3블럭에 대하여 그동안 제일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영여건을 사유로 계약의 당사자인 LH공사에 수차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나, LH공사는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납부 상황에서의 계약해제 요구는 수용불가함을 주장하며 잔금 납부 이행을 계속 촉구해 왔으며, 2009년 9월 9일 제일건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측에서 제일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하가지구에 대한 개발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유는 우리시에 납부한 100억원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미 제일건설로부터 중도금을 수납한 상태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551조 및 565조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른 해제는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100억원의 반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협약과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오현숙의원 (비례대표)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년전주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정방침 첫번째는 힘찬 경제로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가를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전주시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총 3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118억 2천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남부시장, 중앙상가, 풍남문상인회, 동문상인회, 중앙버드나무상가, 모래내시장, 기린로전자상가 등 시장 4곳과 상점과 4곳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첫 순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주시의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이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중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화장실사업으로 축소되고, 상가리모델링 사업이 고객편의시설 사업과 주차장확보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례로 2007년 중앙상가 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 아케이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8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지원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은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주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했고 2008년에 지원되었던 예산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아 전주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11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각 시장의 필요한 사업들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걸림돌에 걸려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것 같아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경험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확인과정 조차없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들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하면 전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후 사업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데 전주시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전주시의 지역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형평성을 잃은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 28일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질의 물건을 보급하고 상인들에게는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남부시장 상인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기에 이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남부시장변영회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면적은 77.8㎡로 약 24평입니다. 남부시장변영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2억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높게는 2천3백만원과 가장 낮게는 6백6십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같은 해인 2008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평당 보상가는 434만원으로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매입비는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이곳은 남부시장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가구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과 형평성이 없다며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전주시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저온저장시설은 남부시

장변영회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한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사업비 정산과 이 시설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찔린 돈 쓰듯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 민간대 민간의 계약관계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에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주시는 똑같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보조금의 관리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상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의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변영회가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태조사,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이 따라야만 이 전주시가 목표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다소나마 완화 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SSM 입점규제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대형마트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등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확보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더하여 전액 예산투자으로 이루어지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개설 및 포장 등 공동 기반시설 구축과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소방 전기시설, 기관정비 등 고객편의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상인회에서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2월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올려 보내며, 3월중에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하여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며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자부담 10%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약속서만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으며 의지는 확고한지, 또 상인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에 흠은 없는지, 현재까지의 투자 사업과 연계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하게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급적 자부담이 없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지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개선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시작한 경품 및 쿠폰발행과 같은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 가요제 등의 홍보이벤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정보화 지원,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 특판행사 지원 등의 경영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시설투자과 소프트웨어 지원분야가 접목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악화일로로 전통시장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차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쇼핑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16년까지의 한시적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우리시의 전체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추면서 현재까지 투자한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적은 투자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의 부지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매입한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주차장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되었고,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를 남부시장 상인회에 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며, 부지는 당시 실거래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상 시점이 유사함에도 단위면적당 보상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이용 상황 등 입지조건과 위치, 선호도, 영업상태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좌우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남부시장 상인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보상가격이 높게 평가 지급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사업수행의 투명성을 좀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 구성은의원(서신동)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을 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성인지 예산서(제26 조)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제3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2008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는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부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 받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부는 2006년 김포한강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분석 등 7개항목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 3월,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익산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12월 4일에는 여주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시가지와 공공시설물 설계과정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하이힐을 신어도 구두굽이 빠질 염려가 없는 여성친화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재래시장, 공공청사 등 22곳 공영주차장에는 임신부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장보다 50센티미터 폭을 넓힌 여성친화형 주차장(214면)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여성친화형 화장실을 만들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CCTV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와 도시개발 분야에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5년간의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의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3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앞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전주시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7일과 8일에 걸쳐 조사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주시 공무원 총 1834명 중 1148명이 답변하였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질문에 17.8%인 204명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8.2%인 439명,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9%인 505명이었습니다. 전주시 전체 공무원의 82%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권한이 없는 하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다.”로 답변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남성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는 답변

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기획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무관심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몇 달에 걸쳐서 여러차례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은 10%미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별, 소속별, 연령별, 직급별 통계와 분석은 향후 예산정책연구회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로를 묻는 질문에 50.6%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고, 공무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답변은 20%인 141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여성공무원에게 집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의 체계적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체계적 성인지교육을 위해 교육이수자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에 어디에도 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전주시는 성별영향평가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55개 기관의 85개 과제가 분석되었고,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관련부서의 사업 뿐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복지, 건설, 교통 모든 분야의 주요사업에 필요합니다.

그 실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성별영향평가로 공중화장실 법률이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여의 수가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79초로 남성의 45초 보다 길고, 용도도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 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로 성별영향평가로 교통부문이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는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약 167센티미터에 매달려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 여성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로 이런 불편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객차마다 10센티미터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 170센티미터와 여성용 163센티미터로 번갈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2010년에 책정된 예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요정책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타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으로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 정책책임관회의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조정·협력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모든 부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적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기구가 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배분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권한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국·과장님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의 확보, 공무원 예산분석 역량 강화, 추진체계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분석양식 개발 및 단계적 확대 계획

이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수립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목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 여성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왔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었습니다. 식량농업부는 농업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년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배분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한 농촌 총각의 문제와 출산을 저하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여행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만족하면 가족이 만족하고, 결국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건 도시건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어린이, 노인도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전주시는 지자체중 살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시청 청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성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전주천 산책로에 대하여

전주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전주천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3.8킬로미터를 사업비 3억 7300만원을 들여서 소형고압블럭을 깔았고, 삼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7킬로미터를 4억 1900만을 들여서 칼라투스콘으로 포장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생태하천으로 살아나면서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공원이자 운동장이고,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천과 다르게 전주천은 소형고압블럭이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배수를 위해서 경사를 기울여놓아서 편안하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나 눈이라도 내리면 사방이 물폭탄 투성이어서 바닥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접근이 어려워지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를 우레탄 등 걷기 편한 재료로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

나 전주시는 친환경 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삼천과 같은 투수콘으로 포장한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전주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에서 전주천, 삼천 이용자를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천은 1일 기준 500명, 삼천은 1일 기준 700명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삼천쪽에 많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산책로의 불편함도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천대교에서 미산교, 미산교에서 만경강 합류점 까지 전주천 산책로를 투수콘으로 포장했는데, 기 조성된 한벽루부터 추천대교까지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금학보부터 추천대교 구간은 또 투수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8억 2천만원의 예산이면 전주천 산책로가 모두 투수콘 등 적절한 포장재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나머지 모든 구간을 투수콘 등 적절한 포장재로 포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언제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A 송하진 시장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전주천 산책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더 늦기전에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실시되도록 계획수립 등을 해 주실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각 부처가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지방차원의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예상 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착실한 준비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출산·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차원의 도입으로 반쪽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성인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도입에 대해 선구적인 통찰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심사·집행·결산 및 성과평가 등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 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시정을 이끌어가는 국·과장 등 관리층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내실있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각 실국과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정부 해당 부처별로 금번에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입수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무엇인지, 그 리고 어떤 양식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교육 방향은 성인지 예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3요소인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방향”, “사업 총괄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특히 각 국·소·청별로 향후에 성인지 예산 사업목록으로 제출해야 할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사업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영향 분석사업”에 대한 이해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기관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추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하 성인지예산센터 전문 연구원과, 실무적으로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 작성 지침을 수립하고, 시달한 기획재정부 관계 관을 초빙하여 도입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차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론과 제도, 그리고 실무의 3자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2010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시범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시정발전연구원 사업 등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토대로 앞으로 실국별로 작성해야 할 성인지 예산 사업에는 크게 “양성평등 사업”과 “성별 영향 분석사업”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념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었는지 평가·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할때, 성별 영향평가의 대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 사업”이 많은 여성관련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만이 아니라, “일반예산 사업” 즉,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성별 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시 시정발전연구원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세번째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국·과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문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경제·교육·복지·건설·교통 등의 부서에도 예산의 성인지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관장하는 추진체계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중심의 여성정책조정 회의나 여성정책 위원회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시행 준비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여성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 4월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해당 부처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목록을 선정하여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단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기획관리국이 주관부서가 되고, 여성정책부서인 생활복지국의 협력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단체와 각 실국으로 구성하여 각 실국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구도로 전주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 TF팀 구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하셨는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므로 향후 시달될 정부지침에 따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담을 방향은 첫째,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 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에 사업수혜대상자의 성별 구성비 및 성별 대상개인의 연령이나 직업 등 개인현황분류와 성별로 대상 집단의 유형 규명 등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배양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둘째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한 바, 각 실국이 성인지 대상사업을 집행한 후에 사업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성별영향 평가결과, 수혜의 성적 차별성을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예산분석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 포함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분

야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말 평가를 거쳐 포상금 또는 유공공무원 표창이나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천 산책로에 대하여

전주천 산책로 중 투수콘 포장이 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한 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이 2001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완료 이후 생태계 회복으로 수질이 1급수로 깨끗해지고 갯벌들, 억새, 수크령이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더불어 쉬리, 수달 등이 서식하는 등 우리 시민에게 가장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산책로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하천의 산책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천은 완주군 경계인 원당교에서 추천대교까지의 12.2킬로미터 구간 전체에 폭 3미터의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환경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취지에 따라 포장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전주천의 하류구간인 추천대교부터 미산교까지 4.3킬로미터 구간에도 폭 2미터의 투수콘으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중리 북개중점에서 소양천 합류점까지 2.9킬로미터 구간에는 1.5미터 내지 2.5미터 폭으로 점토블록 및 황토로 포장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천 한벽루에서 서산동 삼천 합류점까지 7.2킬로미터 구간은 2001년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환으로 고수부지 산책로 폭 2미터는 고압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이곳을 찾고 있는 시민들은 투수콘 포장이 되어 있는 타 하천의 산책로에 비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로 포장공법에는 투수콘 포장, 탄성 포장, 점토블록 포장, 황토 포장 등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 하천의 유속, 유량, 홍 수빈도 등 자연적 상황과 하천의 생태, 이용도,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각 포장공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주천의 산책로 포장 재질 개선에 대하여는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장 좋은 대안의 포장 재질로 교체·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천 전체구간에 대한 산책로 포장 교체는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되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고 상류 수해 복구지역은 고압블록을 대신하여 금년도에 투수콘 등 다른 포장공법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침하되거나 유실되는 지역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포장공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김종철의원 (인후1·3·우아2동)

▶ 노송천 복원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전주시 노송천 복원 사업은 민선4기의 최대 중점 사업중 하나로써 도심속 복개하천의 수질오염 등 문제를 해소하고, 수변공간 확보와 함께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를 창조하는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제2의 청계천사업으로 불리며, 전주시의 신 랜드마크로 부각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즉 노송천 복원 사업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을 원칙으로 하천폭이 최저 5.7에서 12.6미터, 깊이 2.5에서 4미터 규모로 개울 양쪽에 산책로를, 자연석으로 쌓은 호안 바깥 양편은 폭 4내지 6미터의 도로개설을, 하천 수심은 20센티미터 규모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물고기와 곤충이 살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을 위해 군경묘지에서 건산천 합류 지점까지 총 3.4킬로미터 구간의 기본계획을 수립, 1단계로 노송광장에서 한국 은행까지 1.1킬로미터 구간을 2007년에서 2010년 사업비 3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2단계로 시청앞 광장에서 군경묘지까지 2.3킬로미터 구간을 2011년 이후 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단계별 추진 방침이며, 총 사업비는 85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노송천 복개구간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노송천 복원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 등의 세부추진과정을 통해 2008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습니다만 하지만 노송천 복원 사업은 주민의 민원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며, 현재 1단계 사업 추진현황도 총 694미터 구간 중 중앙성당에서 구 한양예식장 구간 216미터까지만 진행되었을 뿐 나머지 구간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노송천 복원사업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변모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송천 복원 사업의 관건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8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원천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셋째는, 주민들을 얼마나 잘 이해시킬 수 있는가? 넷째는, 주민들이 되겠습니까. 현재 전주시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주시 재정상태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노송천 복원사업의 생명인 유지용수 확보는 전주시가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

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한 사업지연은 현 복원사업 추진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프로젝트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대책은 아중저수지 물을 주 용수로 확보할 계획이며, 여유용수 확보 방안으로 아중저수지 준설과 재전저수지 여수로 증고 및 신규 암반관정 개발, 그리고 노송천 주변 지하수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방안에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에는 1일 최소 7천톤, 연간 255만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중저수지는 현재 만수량이 91만톤으로 증고시 127만톤 확보가 가능하며, 총 유출량은 연간 724만톤으로, 이중 221만톤이 송수관로 연결, 자연유하 방식으로 노송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전저수지 또한 여수로 증고 후 연간 약 13만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중저수지와 재전저수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물을 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수지는 주변 농가 수가 321세대와, 73세대로써 농업용수가 각각 연간 157만톤, 10만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저수지 물은 주변 농작물 경작과 아중천 생태하천용으로 최대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서운근 의원님께서도 아중천 물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아직도 이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용수 활용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최근 전주시는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방안을 다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3단계 고도처리를 거쳐 1일 8만톤 가량의 방류수를 끌어올려 14.1킬로미터 송관을 이용 노송천에 7000톤을 흘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수 자체가 대부분 분뇨입니다. 분뇨가 어떤 것인지 의원님을 잘 아시죠? 생활하수, 음식물 침출수, 공단폐수 등이 유입된 것으로 방류수 수질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즉 방류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맑은 하천으로 물고기와 곤충, 또한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식물들이 함께 서식하며, 도심 열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친환경 도심 생태하천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정 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관저수지 물을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관 저수지는 대성수계 보충수원으로 일일 1만 5000톤을 취수하여 시민에게 급수하고 있는 상수원



입니다. 현재 상관 저수지의 저수용량은 약 214만톤으로 91만톤인 아중저수지의 약 2배에 달하는 용량으로, 특히 장마철 우수기때 상관저수지의 발원지인 만덕산 협곡 줄기 서쪽으로 흐르는 그 위에 10킬로미터 이상의 마치 계곡과 동쪽으로 흐르는 10킬로미터 이상의 외압 계곡의 원수량은 지리산 뱀사골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계곡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이 요구해왔던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최근 전주시가 누차 밝힌 사안으로 내년 말까지 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을 진행하여 담수율을 높이고 이 용수를 노송천 유지용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관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 본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상관저수지와 왜망실 그 사이에 있는 재가 마봉재입니다. 마봉재 기슭에 상관저수지 협곡과 아중저수지 상류인 왜망실 계곡이 같은 능선에 있음에 따라, 가압장을 설치하여 상관 저수지 용수를 펌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상관저수지 협곡에서 마봉재를 가로 질러 왜망실 계곡까지가 압펌핑을 하여 아중저수지까지 용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 되어온 상류 수원확보를 통한 자연적 기능 강화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중저수지에도 충분한 발원용수의 확보가 이뤄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물 부족으로 인한 아중천 산책로의 악취 문제, - 아주 심각하죠. 1일 4, 5백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산책로에, 돈을 6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산책로에 악취문제가 심각한데, 이 또한 이로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관저수지에서 대성 정수장까지의 기존 송수관로가 연결돼 있음에 따라 현재 리베라 호텔까지 연결된 아중저수지의 관로를 상호 연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방안은 송천동 하수처리장 방류수 사업에 책정된 송수관로사업 예산과 대비하여 효율성을 따져보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송수관로를 한옥마을의 낙수정 지하관정에 연결하면 한옥마을 실개천까지 살아있는 생태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전주시민이, 또 외지 시민이 찾은 우리 한옥마을 실개천, 실개천 준공할 때 여러 언론매체의 많은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실개천이 너무 좁기도 하지만 물이 냄새가 나고 물에 이끼가 끼어서 1주일에 한번씩 물을 씻어내야 하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 물이 왔다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개천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안으로 이런 물을 끌어들어서 낙수정에 지하관정을 연결하면 한옥마을에 있는 실개천의 물도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물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을 위해 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T/F팀까지 구성,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없는 저수지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며, 노송천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아중저수지나 재전 저수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곧 해제될 상관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풍부한 용수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부족에 대비한 하천관리 차원에서 전주의 동남쪽 지역, 동남쪽이라는 것은 동쪽, 남쪽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선상에 동쪽에는 소양면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간에 상관, 서남쪽에 구이 지역이 있죠. 전주시의 상류인 이 지역에 물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댐 건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들과의 갈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노송천 복원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민원에 따른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초기에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모든 사업추진에 너무 낙관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막상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 했을 때 대응책이 미흡하여 사업의 중지와, 재추진을 반복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1단계 사업 추진은 216미터까지만 진행되고 있고 구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까지 구간은 건축 자재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을 또한 55%에 불과하여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일부 찬성 주민 여론들만으로 주민 전부의 여론인양 단정하여, 노송천 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전주시의 입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인들에게는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은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단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벌써 가건물을 철거한 지가 3년이 넘어감으로 주변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영업 손실 또한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중앙시장 현장을 다섯 번 이상 가봤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아우성은 무지하게 크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질문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 고통, 장사가 안된다 이거죠. 오픈시켜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송천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효율성과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 주변 환경개선 사업, 생태복원 사업, 문화관광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 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인 아트로폴리스과, 생태복원과, 도로과, 주택과, 경제진흥과 등 각 부서의 방만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집약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이 어렵게 될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별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생색내기식 사업진행이 이뤄져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노송천 복원사업의 예산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 국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 공유의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집약적 관리부서의 신설이나 TF팀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청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노송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에도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은 이제 단순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주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장 10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향후 전주시 브랜드로서 100년, 아니 천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 개발이 아닌 도시 전통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인접한 '걷고싶은 거리'와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천년전주 혈맥 잇기의 진정성이 갖춰진 준비된 생태하천 복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제대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우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 송하진 시장

▶ 노송천 복원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서는 우리시의 중요사업인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신 랜드마크 명품 노송천의 탄생을 바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노송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송천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에서 동부시장 ~ 노송광장 ~ 중앙시장 ~ 한국은행 등 3.4 킬로미터를 흘러 건산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우리시는 우선 1단계로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 구간 약 700미터에 대해 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지난 2008년 6월 착공한 바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는 모범사례로 인정, 우선 지원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적극 지원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서에도 전주 노송천과 프랑스 비에브르강의 사례를 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알리는 등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송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없는 하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풍부한 하천 유지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추진 중인 노송천의 유지수는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008년 9월 30일 공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송천과 아중천 용수공급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농어촌공사와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아중저수지 담수량은 91만톤이나, 가동보 1.2미터 증고시 약 36만톤이 증가되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의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유출 분석 결과, 연간 자연 담수량은 724만톤으로 판단됩니다. 어유 용수확보 방안으로는 아중저수지 준설, 신규 암반관정 개발, 노송천 주변 지하수 활용 등으로 연간 약 130만톤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어 연간 총 자연 저수량은 854만톤이며, 이중 잉여수 1일 1만여톤을 노송천과 아중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심하천의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은 우리 전주시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물부족 상황에 대처코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가시책을 반영한 검토 안 중의 하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연구로 상관저수지 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상관저수지는 전주천의 지류인 수원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용수 공급용 저수지로 유역면적은 25.9평방킬로 미터이고, 총 저수용량은 214만톤으로, 현재 1일 약 1만5천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대성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동서학동, 완산동 등 고지대 일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상관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관저수지 협곡과 이중저수지 상류인 왜망실 계곡이 같은 능선임에 따라 가압장을 설치하여 상관저수지 용수를 활용하자는 '안'을 검토한 결과, 송수관로 3.9킬로미터, 가압 설비 등 2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유지비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번째로, 상관저수지에 서 대성 정수장까지 기존 송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 리베라호텔 앞 관로에 상호 연결하자는 '안'을 검토한 결과, 송수관로 0.8킬로미터, 가압설비 등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유지비가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안은 상관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중천의 수량 부족문제와 노송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갈수기에 전주천 유지용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의원님의 정책적 제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물부족 대비 전주 동남쪽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하천관리 차원에서 댐건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부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댐 건설계획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댐건설은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댐건설 예정지역이 완주군내 이므로 이에 대한 자치단체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 상관저수지, 구이저수지 등에 대한 중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논의 하겠으며, 또한 완산구 색장동 일원의 하천변에 31만 6천 평방미터 면적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토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항구적인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기공식 이후, 하천복원 공사 기간중 매출액 감소와 복원 사업이후 도로 폭 감소로 인한 상권위축 우려 등으로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상인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간의 협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공식 이후 주민대표들과의 20여 차례의 면담과 3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지난 3월 25일 본격적으로 복원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소통, 그리고 협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시에서도 더욱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송천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노송천 주변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소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송천 복원 후 최적의 영업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시로 만나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이 복원되어 명품공간으로써 지역상권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중앙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사업 추진의 조직체제와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리부서 신설이나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조직개편시 노송천 복원사업을 위해 별도로 '노송천 복원팀'을 신설하였고, 노송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송천 주변 간판정비, 건축물 입면개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가로환경 정비 등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7대 프로젝트에 노송천과 함께하는 문화재생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닥터를 지정하여 관련 전문 교수님들과 해당 사업부서 담당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머리를 맞대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송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2009년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 117억원을 포함 총 198억원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본 사업을 모범사례로 인정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에도 중앙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부들은 물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성당에서 한국은행까지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어 2010년도 사업 마무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 최초의 지방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은 예산확보도 매우 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합의 되고 인식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청계천의 물길의 열린 이후, 도심지 복개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으로써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와 지역주민의 염원 그리고 우리시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하나된 결과로 전통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Art-Polis로 가꾸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송천복원 사업은 행정이 하천의 물길을 열고, 물길은 시민의 마음을 열어,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며 전주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 노송천이 우리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명품 노송천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사를 드립니다.

Q 서윤근의원 (인후1·3·우아2동)

▶ 아중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아중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중도서관은 2005년 2월, 구체적인 공식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평화도서관과 함께 BTL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아중도서관은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고 또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물론 BTL 때문에 약간의 표류를 거치긴 했지만 평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수립되었고 설계공모가 마쳐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 착수가 되어서 1년 정도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평화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BTL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채 원점으로 사업을 되돌렸던 우는 한번으로 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BTL추진을 포기하고 전주시의 직접건립으로 새롭게 방향을 틀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심기일전의 자세로 정력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부지선정 문제로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전주시를 향하여 주민들이 내어뻐는 수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은 결코 비싸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전주시 최고 정책결정기

관인 전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비판과 책임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 건립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이 터덕거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위치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주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이 필요하면 여론수렴의 장을 열어주며,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곧 전주시와 전주시회의의 몫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민주적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토론되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민회의'의 장을 전주시가 주도하여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이 부족하다면 두번, 아니면 세번까지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과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현명하고, 또한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전주시회의의 합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전주시립 아중도서관이 문을 열고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인후동 선변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던 이날, 주민들이 격렬하게 성토했던 내용은 바로 전주생명과학고내에 건설중인 골프연습장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민기본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전주시내 주거밀집 지역에 골프연습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학교가 골프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학교내의 학습용 골프장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



장입니다. 학교는 이 골프연습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골프연습장 코앞에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 문제, 늦은 밤까지의 조명에 의한 피해, 그리고 교통체증의 문제까지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입니다. 공공교육기관의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예산과 교육기관의 문제이니 전주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전주시민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현격하게 역행하는 듯한 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전주시가 계속 뒷집만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강행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역할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아중천 수량 확보에 대하여

아중천 수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광수 의원님의 전주천 관련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식견높고 내공이 쌓인, 그리고 명쾌하게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질문 과정에서, 그리고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외래어종 퇴치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으로 아중천에 외래어종이라도 고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아중천은 건천입니다. 물기만 있고 비가 오면 잠깐 흘러내리고 완전한 건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 뛰게 하고, 그러했을 때 두루미라도 날아와서 물고기 잡아먹고,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량확보의 문제인데 그것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송천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했었고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송천이라고 하는 시류에 편승해서 생태하천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 하나로써 전주시가 생태도시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고, 정말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려내야 할 것들은 빠르게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천 수량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아중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서운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중도서관 건립 조속 추진”과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연습장 문제” 그리고 “아중천 수량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중도서관 위치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책 결정과 함께 조속한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 가장 많은 전주,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로 만들고자 가치 있는 도서관 정책을 민선4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6개의 거점별 도서관 외에 시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13개의 작은도서관과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60여개의 사립문고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 여유자금 및 연기금의 투자처를 제공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로부터 BTL 사업방식으로 평화·아중도서관 건립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각종 원자재 값 상승, 국내경기의 침체로 건설경기 위축과 더불어 금융환경의 악화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BTL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평화·아중도서관 건립은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도서관은 현재 현상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평화동 신성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총 3,000평방미터 규모로 67억 3천만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중도서관은 당초 BTL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기린도시자연공원 지역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예정지역이던 기린도시자연공원 내 지역과, 노동청사 뒷편 사유지, 인후3동 주민센터 근처 노의주차장, 그리고 인후3동 주민센터 터와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4개 지역의 부지를 놓고 예산 투입의 적절성, 이용시민의 접근성, 부지 규모 등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까지 적정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중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도서관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

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금년내에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수렴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협의, 최적의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설계공모 등을 거쳐 늦어도 2011년 착공, 2012년에는 아중지역 주민들이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중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주생명과학교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전주생명과학교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 모색에 대한 입장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골프연습장 건설로 인하여 학교측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출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내 골프연습장 허가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차원인 교육자치가 선행되어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 해결할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학교측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고민하고 방법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주요쟁점인 소음문제, 야간조명피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도교육청과 해당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만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합의점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도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 아중천 수량 확보에 대하여

물 없이 말라가는 아중천의 수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중천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시고 타도시의 선진사례를 제시해 주신바도 있고, 진행 중인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진입계단, 산책로, 수질문 제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인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중천의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특히 물이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염려되는 현실에서 아중천의 수량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중천이 2006년부터 시작한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현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심속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량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촌천 등과 같이 상류지역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천이 그러하듯이 영농을 위하여 일정수위에 도달할 때 까지는 하류로 물을 내려 보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송천복원공사로 인해 아중저수지 물이 아중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노송천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아중천 인근 주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송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아중천의 유량 확보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노송천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3월경에는 노송천의 물길을 여는 것과 더불어 아중천에도 계획된 용수 공급으로 어느 정도 유지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아중천을 포함하여 하천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중천 유량 확보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상관저수지 물을 활용하여 아중천과 노송천 모두에 유량을 풍부하게 하자는 대안은 또 다른 아중천의 유량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이 방안도 위에서 제시한 방안과 더불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중천의 유지수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 제임을 인식하여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양용모의원 (송천1·2동)

▶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상생에 대하여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빛이 완연해 지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봄인데, 또한 희망의 계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눈·비 속에 햇빛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친데 뒷친격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설프고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들먹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 115.0포인트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웃돌고 있습니다. 1월중 실업자 동향은 2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2.6%로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취직하기 힘들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서러워지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의 권리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하겠다고 해서 대규모 정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이 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때 거리마다 직장마다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구호가 뭘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 하고 살았습니까? 삶을 쫓는 중노동에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삶에 투쟁은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 나들이 한번 가는게 소원이었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앞에 쓰러져 우는 아내를 부려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린 노동자가 어디 한 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겨 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노동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허나 이런 봄날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

들어 집요한 노동자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권하에서 고통 받는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에게 힘찬 투쟁의 응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선 4기도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전주시정 성과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주요 시정 성과로 첨단산업 불모지에서 탄소산업의 중심지화,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신흥 체험관광도시로 부상, 평범한 도시가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변화, 누구나 10분 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시정평가 결과 총 96회 우수이상 평가를 받아 명품행정 지자체 영광이라고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 사업 무산과 혁신도시 등 정부사업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3·3·7 정책으로 전주의 웃음을 키웁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돈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의 주요 시정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 속에 우리 1800여 공무원의 공로는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 전주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보람찬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부터 공직은 천직이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청렴을 근본으로 하고 공직에 몸담은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기본이 청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렴이란 관리의 복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렴의 근본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끊임없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인 인격과 청렴에 대한 소신 또한 시장의 근본에 서야만이 시민이 사랑하는 반듯한 전주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결국 청렴한 공무원상에 그 근본의 취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인간중심의 전주시정 속에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정당한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공무원 중 약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또한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말살정책은 이미 공무원 노조의 불인정, 전교조 노조의 탄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본의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간다면 공무원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며 대 시민 봉사의 질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다음은 우리 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74분의 장애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는 행정직이 33분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7급이 26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급이 늦었다거나 차별대우를 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 실증과 비교 통계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전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만족할 만 하게 개선되어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7일에 실시한 간담회 내용 중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인사규칙) 개정을 요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노력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정부의 노조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노조에 대한 정책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가야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00여 공무원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에서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인사상의 평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승하진 시장

▶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상생에 대하여

먼저, 공무원노조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노조는 과거 힘든 역경과 노사간 갈등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서는 노조 간부들과의 정례 및 수시 간담을 통해 청원 암검진 확대, 휴양 시설 확충 등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신뢰속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10월 20일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자가 조합간부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하루 빨리 적법한 설립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상 주어진 권한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대등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수시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동안 유지해 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장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다음은, 장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및 인사상 평등을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체 공무원 1814명의 4.1%에 해당하는 74명의 장애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17일 중증장애인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개개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타 부서 희망전보 3명, 거동이 불편한 5명에게는 공익요원이나 행정인턴과 같은 전담 보조 인력 배치, 저운으로 관절 등이 시려 고통을 받는 1명에게는 개인 전열기 사용 허용과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학적 보조의자 1개를 제작·제공하였고, 또한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핸드레일과 휠체어 동선 안내도,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 및 호출벨 등을 개선·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장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상 평등을 위해 그동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장애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우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는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시 장애 공무원 74명은 정원 1814명의 4.1%로서 법적 의무고용 비율은 초과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9급 행정직 공채시험에 채용예정인원 21명 중 4.8%에 해당하는 1명을 장애우로 선발해 주도록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공무원들은 가급적 당사자가 원하는 부서에 전보해주는 희망보직제가 정착되도록 하고, 중증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배치하는 한편 장애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33.8%인 본청의 장애인공무원(25명) 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등 우리 장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상황과 제도적 개선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는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5월 29일자로 과감히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용모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장애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과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결코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Q 오현숙의원 (비례대표)

▶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책과 방법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배제되고 자기 욕심을 채기는 사람들과 개발수익을 노리는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전주시의 행정이 전주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용산 4구역 참사가 생각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주민들의 마찰과 함께 법적다툼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및 이해갈등, 반목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주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25곳과 정비구역지정 7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된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에 13평, 16평, 19평형의 소형아파트였고, 신축될 아파트는 26평형 29가구와 33평형에서 55평의 아파트가 613가구로 총 642가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헌집 주면 새집 얻는다는 환상과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문제입니다.

신축될 642가구 중 20평대의 아파트는 29가구 밖에 없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의 분양률은 10% 안팎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파트 재건축은 서민들에게는 새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채 결국은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번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왕벌지역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에 대한 전 시공사의 20억원 가압류를 비롯하여 효동지구와 이동교 인근의 행정소송 제기, 전라중교 일원의 추진위원간 내분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끊임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 등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조합설립에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향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적인 민원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의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경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비롯해 가련산 일대, 전라중 일원, 터미널 주변, 터미널과 종합경기장 사이 등 5개 부지로 나누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해 생활권단위의 재정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적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을 반영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4월 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밑거름이 되길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마련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주시에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은 주민공람과 의회의 건만 청취하는 절차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제곱미터(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제곱미터(30평)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소형 평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기반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주거지형으로 지정하였습니까.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 19만 3550호의 주택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16.35%입니다. 이중 아파트의 보급률은 72.3%입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가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전주시는 이를 감당할 만한 부동산 경기나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덕진재정비촉진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26평형) 이하 세대 건설비용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80%에서 60%로 완화된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90%에서 80%로 완화된다고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발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서민의 주거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건설은 누구의 배를 채우게 해줄까요? 바로 시공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전주시는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용이 완화된다는 것만 신경 쓸 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이곳의 2837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9년 7월 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담당부서인 비전사업팀에 요청한 주민설명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97%의 주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찬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재개발 후 분양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평당 100만원의 부지에 대해 재개발이 되면 350만원을 준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와 같게 아파트 평수를 인정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쫓겨 날까봐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기반시설 만을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의 상정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한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송하진 시장

▶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쟁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 민원조정기구 설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구 중 추진위 승인 25곳, 정비지구지정 9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 중 삼천주공 재건축사업 1곳만 관리처분 인가가 된 실정입니다. 6개지구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비대위간 내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상호간 중재등 노력해 왔으나 법령조건 미비 및 상호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조례가 시급히 개정되는 대로 이에 근거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분쟁이 조속히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추진위와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정비지구 지정시 단 1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나 조합에서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할

경우 아파트 1채를 분양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주민들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알이두면 유익한 재개발·재건축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하여 해당구역 주민, 주민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사업추진 절차, 진행과정, 회계 관련 사항을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25개 지구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주거환경연합, 바른 재건축재개발 전국연합,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주민들과 추진위, 조합 위원들에게 투명성 제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알이아 할 기초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소형 토지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예상면적은 약 107만평방미터 정도이며, 사업구역은 가련산 공원경계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로 설정,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95%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7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우리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게된 배경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민간주도형 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민편익 증대와 도시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게 되며, 이는 언뜻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원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부터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에서 제외된 소형 평수 토지는 주거지역은 180평방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0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형평수 토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투기 방지를 위하여 매월 부 동산거래 신고사항을 분석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거지형 개발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및 2,837세대의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형이라고 해서 지역 모두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방식이 구역별로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단계로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들은 건축계획 등 27가지 계획이 반영되는 촉진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업무들로서 그 중 아파트 미분양 및 용적률 완화등에 따른 예상문제는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총괄계획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포함된 2837세대 6540명의 이주 대책으로는 이 또한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3년씩 시차를 두고 1~2곳씩 개발하게 함으로써 600~700세대 정도씩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서민보호를 위한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도 촉진계획 수립시에 반영시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과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조건을 이행하면서 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전시·컨벤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덕진재정비촉진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지정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을 보면서 재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특히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앞으로도 지역별, 분야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Q 이명연의원(인후1·3·우아2동)

▶ 서낭로(인후중로) 개설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전주시의회 8대의원으로 서 지난 4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더더욱 바빠진 일정속에서도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후동에 대로도 아니고 중로개설이 이렇게까지 늦어 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인후중로, 즉 서낭로 미 개통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와 2007년 9월 12일 제246회 임시회에 이어서 세번씩이나 거론하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본의원은 답답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중로 서낭로는 기린로변 병무청사거리에서 백제로 대학병원 입구까지 폭 20미터에 총 길이 2850미터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을 1980년대부터 계획해서 병무청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의 1700미터와, 생명과학고에서 백제로까지 500미터를 2004년에 완공하였고,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약 500미터 구간은 2009년 11월에서야 가까스로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공사 구간인 생명과학고에서 인후2동 주민센터까지의 640미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공하겠다는 계획과 2008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투입을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올 2010년에는 단 한 톨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억원, 그리고 완공 예정해진 2014년에 4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본의원이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대화에서 학교측의 의중을 확인한 결과 학교를 가로지르는 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이 또한 전주시 계획과 맞지 않은 것 같아 시장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에서는 서낭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지하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만약 지하터널 공사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표시된 공사비로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하며, 둘째, 중로개설 공사에, 그것도 2850미터의 중로개설 공사에 20년이 넘는 기간을 계획한 전주시 공사 사례가 또 있는지를 묻고 싶고, 셋째, 서낭로 공사 총 계획 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공사방식에 있어서 지하터널로 가지 않고 일반도로를 계획 하였을시 공사비는 약 2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이라는 공사계획 마지막 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한다면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사 소요기간이 이렇게 짧은 것인지 묻고자 하며, 다섯째, 공사예정 구간의 인근도로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학생회관 앞길과 인후1길, 그리고 명주 길의 교통정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교통정체로 인한 기름의 낭비와 자동차 연기로 인한 환경 악화 등을 생각하시고 공사계획을 앞당겨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A 송하진 시장

▶ 서낭로(인후중로) 개설에 대하여

서낭로(인후중로) 미 개설구간에 대하여 지하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공사비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는 총 2850미터 구간중 2200미터는 구간별로 완공하였으나 전주생명과학고를 관통하는 650미터 구간은 미 개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미 개설 구간 650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차도 또는 일반도로의 공사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일반도로 공사방법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95억원을 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주생명과학고내 학교부지의 지반차이 및 학교측의 요구로 일부구간 130미터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3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시 도로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생명과학고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중로 개설공사에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계획한 전주시 공사사례가 있는지와, 세번째, 서낭로 개설공사 총 계획구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중로개설 공사중 서낭로와 같이 공사기간이 20년 정도 소요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낭로는 예전에는 시내 중요거점도로로 화물차 등 통행이 많았으나 현재는 기린대로 건철로 사이의 보조기능을 갖는 가로망으로써 도로연장이 2850미터로 우리시 중로중 제일 길고 여러 지역이 연결되는 실정으로 구릉지 등 지형적인 여건과 학교측으로부터 선형변경, 지하 차도 반영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낭로 구간중 백제로와 인후2 동사무소까지는 1980년도에 제6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완공

하였고, 교통량이 많은 병무청 오거리(시점부)부터 전주동초등학교 뒤편 오거리까지는 1997년, 전주 동초등학교 뒤편부터 안덕원까지는 2009년에 마무리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부지 관련 도로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1일 도로선형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선형이 변경된 전주생명과학고를 관통하는 미 개설 구간 650미터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8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9필지(14,200제곱미터)중 3필지(1134제곱미터), 지장물 3동 중 2동을 매입하는 등 조기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지하터널이 아닌 일반도로 계획시 약9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법이 지하차도가 아닌 일반도로로 개설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14년까지 도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지 만 지하차도로 개설할 경우 추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근도로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학생회관 앞길, 인후1길, 명주길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고통 해소를 위하여 공사계획을 앞당겨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여고 입구,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 학생과학관 앞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로 인해 시민 불편이 많음에 따라 우선 교통전문가, 경찰서, 학교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방법에 대해 전주생명과학고와 충분히 협의하여 서낭로 개설사업이 최대한 단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서낭로(인후중로) 개설공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6장 5분 자유발언

제1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현황

제2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제1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현황

기간 : 2006. 7. 24 ~ 2010. 6. 17(제235회~제270회까지)

회기	일 자	질 문 의 원 명
235회	06.07.24, 08.03	김현덕,유영국,이명연, 강영수,김상휘,서윤근,양용모
236회	06.09.04, 09.15	김상휘,송경태,양용모, 김남규,김명지,김주년
237회	06.11.01, 11.03	김상휘,양용모,이명연,장태영 국주영은,김종철,송경태,유영국
238회	06.11.17	권정숙,김종철
239회	06.11.23, 12.20	김남규,김현덕,서윤근,송경태,양용모,임동찬, 김상휘,김창길,남관우,백현규
240회	07.01.16	강영수,김남규,김상휘,남관우,유재권,임동찬
"	07.01.22	구성은,김현덕,양용모,유영국,이명연,장태영
241회	07.03.09, 03.16	김상휘,송경태,장태영, 조지훈
242회	07.04.11, 04.16	구성은,양용모,유영국, 국주영은,남관우,임동찬
243회	07.05.15, 05.17	김상휘,송경태,오현숙,유영국, 김광수,남관우,양용모
244회	07.06.15, 06.25	구성은,김남규,김상휘,김철영,남관우,유영국, 권정숙,김현덕,박혜숙,양용모
245회	07.07.10, 07.24	김상휘,김창길,양용모,장태영, 국주영은,김남규,박현규,이명연,이원택
246회	07.09.07, 09.14	김상휘,최주만, 김남규,송경태,장태영
247회	07.10.23, 10.30	권정숙,김상휘,양용모, 김남규,남관우,임동찬,장태영
248회	07.11.22, 12.20	김상휘,김현덕,양용모,이명연,장태영, 김주년,송경태
249회	08.01.24, 01.30	국철, 김광수, 김남규, 김상휘, 유영국 박현규,양용모,임병오
250회	08.02.20	김남규,김상휘,양용모,이명연
251회	08.03.12, 03.19	국주영은,김상휘,양용모, 국 철,권정숙,송경태,이원택,임동찬
252회	08.04.14, 04.17	김명지,양용모, 국 철,김남규
253회	08.05.20,	김광수,김남규,김상휘,남관우,서윤근
"	08.05.23	국주영은,국철,권정숙,양용모,유영국,장태영
254회	08.06.11, 06.20	김남규,박현규,양용모,유영국,이명연, 김현덕,백현규,이원택,임동찬
256회	08.07.10, 07.24	김상휘,서윤근, 국주영은,권정숙,여성규,오현숙,유영국,이원택
257회	08.09.05, 09.11	박현규,박혜숙,송경태,이명연, 김남규,김현덕,남관우
258회	08.10.17, 10.23	김상휘,김철영,김현덕,송경태,양용모,오현숙, 김남규,박혜숙,유영국,이원택
259회	08.11.19, 12.17	서윤근,양용모,오현숙, 강영수,김상휘,남관우,박혜숙,백현규
260회	09.02.09, 02.13	국철,김상휘,박혜숙,유영국,이명연,임동찬, 국주영은,김남규,서윤근,양용모
261회	09.04.02, 04.09	김상휘,남관우,송경태,양용모, 구성은,국주영은,국 철,박현규
262회	09.05.12	김상휘,남관우,박혜숙,서윤근,오현숙,임동찬
"	09.05.15	국주영은,박현규,양용모,유영국,장태영
263회	09.06.11	강영수,김상휘,남관우,박혜숙,송경태,임동찬
"	09.06.16	국주영은,권정숙,김광수,오현숙,유영국,장태영
264회	09.07.06	김광수,김상휘,김현덕,박현규,박혜숙,양용모
"	09.07.22	김남규,남관우,백현규,서윤근,임동찬,장태영
265회	09.09.03, 09.10	김상휘,남관우,이명연, 박현규,임동찬,장태영
266회	09.10.14	국주영은,김남규,김상휘,김종철,유영국,이명연
"	09.10.20	김명지,백현규,서윤근,양용모
267회	09.11.23, 12.21	김상휘,남관우,최주만, 김명지,박혜숙,백현규,유영국,임동찬
"	10.01.21	국주영은,김상휘,김현덕,양용모,유영국,임동찬
268회	10.01.27	강영수,김광수,김남규,김종철,박현규,박혜숙
269회	10.03.29, 04.05	박혜숙,송경태,임동찬, 구성은,서윤근
270회	10.06.17	오현숙,장태영



제2절 회기별 5분 자유발언

▶ 제235회 임시회('06. 7. 24 ~ '06. 8. 3)

●●● 김현덕 의원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먼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삼천2·3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63만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름철 휴식처 근린공원, 삼천천 방역대책,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63만 전주 시민들을 위한 도심 곳곳에 작은 소공원 즉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부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모정, 의자, 분수대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피서지로 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주부나 어르신들은 더위 피서지인 공원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의 근린공원은 더이상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내 보안등은 완산구에 82개 공원 1,119개 보안등, 덕진구에 50개 공원, 450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두워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삼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활개로 주부들과 노약자들은 밤에는 소공원이 더이상 피서지가 아니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추가 설치와 청소년, 시민, 주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각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내 근린공원을 자주 순찰하고 바르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완산9천4백여만원, 덕진구 7천5백여만원이 고작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원수의 확대와 년 1회 피복 전원 지급 등 예산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사기양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여름철 공원을 휴식처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은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밤이 되면 모기와와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삼천 천변에 가족 또는 동료끼리 장시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삼천천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 전부터 완산구 및 덕진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 및 수거를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청진에서, 덕진구는 제국건설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완산에 3,200여개, 덕진구에 2,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다습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썩는 악취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각종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대부분 상가와 함께 있는 밀집지역으로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은 가득 차버리고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이나 버릴 곳이 없어서 찾아서 해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깨지거나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즉 각 교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시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하” 선거구 팔복·동산·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오랜 장맛비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은 기차역과 터미널일 것입니



다.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 평가는 바로 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 버스 터미널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 소유자인 금호산업에서 3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위치에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지와 시설로써 버스 터미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조성되어 26년이 지나는 동안, 나날이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전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 터미널 이전에 관한 용역에 이어, 시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주 시민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최근 컨벤션 복합시설 예정지인 전주 종합경기장에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과 함께, 혁신도시내 컨벤션 시설 건립 방안이 제기돼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릇 도시 계획처럼 중요한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사업에 대해, 그저 단체장 재임 기간 중의 개인 업적으로나 삼으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35사단 이전, 법조타운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하는 전주시의 현실을 좀더 냉정히 분석하여,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 가는 천년 전주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권의 중심축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종합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전주는 이제 비전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애향심으로 전주를 굳건히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

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에 서 지난 1998년부터 수십억원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한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후속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기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송하진 시장께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전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단순히 왕래하는 시내버스 노선 수준의 경전철을 건설하므로, 병행 소통 과정에서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고, 교통 수요도와 사업성이 낮으므로 만일 무모하게 추진된다면 교통 불편과 재정 압박을 초래할 애물단지를 만드는 거나 다름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03년 ~ 2005년) 운영실적을 볼때, 시내버스 400여대가 시내곳곳(인근 시·군지역 포함)을 하루종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4만 7천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 합니다.

갈수록 자가용 차량은 증가하는 관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시내버스 탑승율(60명기준)이 50%이하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수요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해 실시한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전철 2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도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자를, 경전철은 16만명, 버스는 42만명, 택시는 20만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경전철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2013년에 하루평균 경전철 이용자 16만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2개 노선이 하루종일 각각 평균 7분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19시간 동안 총 320회 정도 왕복하면서 매번 왕복시마다 평균 500여명씩 이용하여야 가능할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수요 재조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지원하 는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사업비의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40%만 재정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0%와 도비 10%를 지원 받으면 전주시에서는 10%인 500억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사업 여건이 우리시 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성 때문에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47%를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43%를 재정지원하는 것



으로 오랜 협상끝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도 감안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여 약정수익 미달시에 보장하는 기준을 75%까지 5년간, 65%까지 5년간만 적자를 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계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든가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인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참고로 배부해드린 별지에서 보듯이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과 140만명의 광주 지하철 이용률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수요, 건설지원금, 사후관리 지원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더이상 추진하기는 부적합한 사업임이 확실하다 사료되니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장께 서는 깊이 인식하고 보다 냉철히 판단하여,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중단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번 5.31 지방 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신 서신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전주시를 통과하는 국도 1호, 17호, 27호선 등이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면서 시가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전주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도로는 전북 남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 등 주변 시군과의 기능적 통합을 위한 주민 편의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계약한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계획을 보면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서부터 종점인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구간 공사가 용지보상 및 발주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체는 주변지역의 도심화와 국도17호선 및 전주역을 통과하는 동부우회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심각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 주무부서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6년 11월중 용지 보상 계획 중에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현재 용지보상에 대해 예산확보 등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전무한 상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연계하여 필요한 만큼의 용지보상 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용정-용진간의 용지 보상비를 조기에 편성 투입, 집중관리하여 편입대상 토지 소유자, 동부우회도로 이용자 및 일반시민 등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중인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용정-우아간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용진-용정간 총 공사비 2,140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전주 시 관내 국도대체도로가 효율적인 간선 우회도로망을 구축하고 전북 남부에서 발생하는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서신동 지역에는 일명 화산 덕진 처리구역이라고 하는 하수관거 사업을 2개 구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은 서신동 E-마트에서 제일 아파트까지이고, 다른 구간은 서신동 풍년제과에서 서중학교 옆 삼천까지입니다. 공사기간도 2006년 5월 4일부터 2007년 10월 25일까지로 무려 1년 6개월이나 됩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서신동 풍년제과 앞 도로 주변은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긴 기간에 걸친 하수관거 공사로 인하여 차량 소통은 물론 주민들 보행의 불편으로 영세상인과 노점상인들은 막대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수관거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은 긴 구간별 공사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게 짝박짝박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구간을 50m 또는 100m 등 지역 및 공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행정을 펼쳐주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은 작은 행정에도 만족해 합니다. 많은 시민은 작은 노력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주 시민은 작은 결과에도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을 탁상의 행정보다는 민생 현장의 실정과 주민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등원해서 첫 5분발언의 기회를 얻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을 앞두고 천년고도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서는 자연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지향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즉 지형지세의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공주택지 허가로 덕진구의 경우는 15층 이상 공공주택건물이 342동에 35,649세대와 그리고 완산구의 경우는 15층 이상 공공주택건물이 541동에 55,532세대가 외곽으로 건축되어 자연기류의 기본인 풍도(風道), 다시 말해 바람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다는 대구보다 전주는 더 뜨거운 도시로 전락하였고 전주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찜통도시심 속에서 더위를 먹어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천년의 전통문화 도시,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풍수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수는 흔히들 비과학적이어서 도시개발 적용이나 고도제한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 염려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년 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인근 모 도시에서 껍핍을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에 풍수 적용은 대다수 시민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공감함을 확인한 바 있고 오히려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쾌적한 환경 도시 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풍수론 적용은 천년고도 이미지 부활과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 창출에 보탬이 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공간과 건축에 있어서 풍수론을 다양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풍수론은 배산임수를 원칙으로 하고 택지법과 공간배치법으로 도심의 쾌적성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틀은 현재 환경부와 중앙 언론 및 관계 단체에서 주창하고 있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풍수론은 자연의 흐름을 막지 않는 자연론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주변경관 살리기와 바람과 물의 조화로운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며, 뒷산보다 건축물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맥과 지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치산치수의 기본 틀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도심에 생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 통로인 녹지공간이 보존되어야 하며 넷째, 도시계획 입안자와 환경 및 풍수학자, 현지 주민이 참여해서 민주형 합의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및 도로의 좌향배치로 자연흐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여섯째, 자연 개발에 있어서 우선 개발 범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론을 적용한 도시 계획의 전반으로, 전주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풍수론 적용은 이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주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며 찜통 전주가 아닌 자연의 흐름에 잘 적용된 쾌적한 도시, 천년고도 문화도시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담당부서는 이제라도 전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풍수론 적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서윤근 의원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3동·우아2동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서윤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시라 최근 화제가 되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변에 나타나 무참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 영화속 괴물과도 같이 대형할인점의 지역경제에 대한 무차별적 습격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터인 전주소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송천동에 입점을 준비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반려라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역의 중소 영세상공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전주시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물가 인하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대형할인점이 입주한 구역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영업중인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설립에서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규제권을 갖게 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및 특별법 등이 5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함께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지역경제 보호와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살리



기가 전시성, 구호성 행정이 아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부단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사랑합니다.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드렸는데 요즘 이 말같이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송하진 시장께 전주 35사단의 이전에 따른 개발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아니 전라북도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송천동 주민들에게는 삶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고 앞으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전주의 미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35사단 문제가 지난 선거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금도 전주 시민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5사단 문제는 전주 시민의 꿈이며 송천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전주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전주시는 서둘러 35사단 이전 문제를 협약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주 시민에게 밝혀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59만평 35사단 개발에 대하여 민간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 계획의 제안내용을 보면 총 부지면적 59만평을 주택건설용지 26만평 44.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동주택 22만평, 단독주택 4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2만평, 공공시설용지 31만평, 이중 공원녹지가 15만평, 도로 11만평, 학교 공공청사 등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5% 정도의 공동주택 및 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또다시 북부권에 새로운 콘크리트 불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물론 협약상 완벽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는 하나 기업이 편법을 동원해서 이익 극대화에 몰두 한다면 결국 기업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호소하고 미는 개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유인물로 중간 내용은 대략하도록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볼 때 35사단 이전 문제는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만대에 물려 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서둘러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친주민적, 그리고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35사단 이전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전주시에 촉구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주시는 35사단 이전 문제를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하신 정책으로서 앞으로 2년안에 재검토해서 35사단 이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전주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236회 제1차 정례회('06.9.4 ~ '06.9.15)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호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아닌 이번 여름도 전주가 심한 찜통 더위로 달궈진 사안들을 이대로 직시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열섬 현상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다같이 겪는 환경문제이긴 하지만 전주는 몇 년 전부터 도시화 과정에서 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과 생태축 파괴로 찜통 전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주 시민은 찜통 더위를 겪어야만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내년 여름 역시도 에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열섬 더위에 또 다시 시달려야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도심 곳곳에 전주정서에 맞는 수종 식재와 전주천, 삼천 수량 늘리기와 바람 길을 막는 난개발 허가를 고려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녹지관리, 환경관리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섬화 대책을 중심으로 전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펼쳐내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가 열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심 외곽에서 바람을 일게 하는 모악산 축을 기점으로 기린봉, 완산칠봉, 화산공원, 건지산 생태와 녹지 축을 연결만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지율이 10%가 늘어 날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그 건물의 2.4배 녹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는 1980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2,889ha

의 산림이 사라져 80년대 평균 14일이었던 일수가 최근 19.8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반면 대구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펼쳐 도심의 열기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전체 면적 49%가 콘크리트로 덮여있는데,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 3도 낮아져 피서지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겸 벤치마킹 장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반에 걸쳐 곳곳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전주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땅에 효과적인 식재를 위해서는 식재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만개의 잎이 달린 15m의 단풍나무가 여름철에 한시간당 증산하는 물의 양은 220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산량은 고성능 에어컨 15대의 냉각효과를 버금가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역시 한그루가 하루에 0.6킬로그램의 수분을 방출함으로써 대기 열에너지 36만 kcal를 제거하는데 이는 15평형의 에어컨 7대를 10시간 가동한 효과인 것입니다.

이만큼 열섬화를 해소 방안은 도시 숲과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이어서 바람을 일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것 입니다. 또한 도심 유흥지의 습지 조성 등으로 온도를 강하시키는 것과 복개천 철거를 통해 하천기능 복원도 바람을 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주를 클린정책으로 전주시민을 꾀통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연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전주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부분)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부터 친자연적 도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63만 전주시정을 꾸려 가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의 뜻은 직업재활이요, 직업재활의 뜻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이며 시각장애인은 채 5%도 안됩니다. 그것도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에 87%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종인 안마업이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실낱같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2,501명의 전주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18만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극한투쟁으로 급기야 사망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날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보건소, 진료소는 물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등에 안마사를 배치하여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질병치료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회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동과 건축물 접근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 약자들은 더욱 더 불편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98년부터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시공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설물이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여 사회적 보호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노인,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편의시설 시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첫째, 기존 편의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부적격 시설물은 규정에 맞게 재시공, 설치해야 하며 둘째, 신·증축 건축물 준공 검사 시 편의시설 점검평가서를 제출토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는 민간시설물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현장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건축물당 40여개가 넘는 편의시설물의 적합 설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치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눈을 가리고 가까운 화장실이나 계단을 내려가 보십시오. 짧은 거리의 이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들은 모든 사람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 접근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뜨거움속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정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삼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어쩌면 전주의 마지막 천연의 습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건지산 오송제를 알고 계신지요. 오송제는 송천동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모처럼 오송제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보았습니다.

“뚝뚝뚝 뚝뚝새 논에서 울고 뻘뻘뻘 뻘뻘새 숲에서 울면 말 타고 서울 가신 우리 오빠 언제오시나.” 오빠가 서울에 말 타고 무엇 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빠를 그리는 노래는 뚝뚝 울음 소리가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운 오라비가 그리워질 때 생각나게 하는 뚝뚝기가 노니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오송제입니다.

진한 푸름이 오송제를 감싸고 있고 잔잔한 바람결에 흐르듯이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진녹의 도화지에 잉크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하늘빛과 물길빛이 어찌면 저리 청아한지 감탄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파란하늘, 푸른 물결, 진한녹음이 어우러진 오송제는 티 없이 맑은 소녀의 가슴같이 가을을 맞은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청객의 발자국에 놀란 뚝뚝기가 모가지를 길게 빼고 날아 올랐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를 결코 해치려 온 게 아니다.”

가을을 훌쩍 뛰어 늪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락을 이룬 연꽃이 만발하여 수줍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푸른 연잎 사이를 굳세게 솟아 오른 꽃대는 찬란한 자비로움으로 꽃속에 숨겨진 황금 꽃술을 안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연잎을 방패 삼고 창을 든 무사처럼 서있는 갈대들의 군상은

늪에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엉키고 설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어디 한 군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애써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송제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리 떼의 호위를 받으며 부처의 마음을 안고 빈객(賓客)이 날아왔습니다. 청아한 몸짓을 우아하게 저으며 서서히 늪으로 나타난 것은 백로인가. 왜가리인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가 병풍처럼 군상을 이뤄 살랑거리는 바람에 맞춰 손을 흔들고 빈객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송제를 내려오는 저의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송제 바로 밑까지 밀려올라온 아파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는 오송제를 삼켜버릴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도로계획에 의하면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자동차검사소 앞길을 잇는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송제 바로 뒤로, 건지산을 양분하는 그런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송제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지산과 오송제를 살려주십시오. 오송제를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돌려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송제는 가꾸고 보살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물려주신다면 아마 천년 전주에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고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순항과 한 브랜드에 대해서 5분발언으로 나온 송천1,2동 김남규의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한브랜드 허브거점 도시를 꿈꾸는 송하진 시장은 민선4기 문화정책에 좋은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국비 예산 30억이 반영되어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순항을 하고 있으나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1년, 2년 터덕거려 왔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처 용역이 수립되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책사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또 국비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이광철 의원께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킵니다.

법과 예산이 있을때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20년간 17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비사업으로 분류할때 국책 연구기관인 KDI나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용역 보고서를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것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예산서에 유인물이 올라가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꼼꼼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선4기는 민선3기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이광철 의원이 문화관광위 소속이고 이 지역 출신 조배숙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김명곤 장관께서 주무 장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몇 차례의 기자회견 갖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말로 반갑지만 아직도 타 도시와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다음에 한브랜드 허브도시 기자회견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과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몇 말씀 첨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개 분야 59개 과제는 시기별 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이 미흡한 채 방향 제시 수준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검토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혁신역량처럼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지 너무나 가지수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한브랜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전주시와 내용적으로 행정적으로 호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례적인 워크숍은 한 예일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와 전주시 전통문화추진국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선정과 예산 배정이 사업의 성장에 종가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브랜드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의 돈이 중요하지 전주시 재원의 한계로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어떠한 것과 호흡 절치는 아주 중요한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선3기와 문화관광부가 호흡을 잘 맞춰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민선4기에도 좀 호흡을 잘 맞춰보라고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아시아문화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용역이라든지 한브랜드 엑스포 개최라든지 해외동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태 무형문화전당 건립 등이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호흡을 잘 맞춰서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록 출판쪽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글과 한국학과의 브랜드 개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전략적 과제로 선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한 전주사고가 경기전내에 있으며 18세기 완판본이 만들어진 출판 문화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고전문화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고 소설이 태동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글이 서민속에서 대중화 되었으며 고전문화과 고소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판소리가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 및 한국학이 한브랜드 사업 영역으로 전주의 정체성을 찾는 전주판 한브랜드 영역으로 복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안동이 한국학의 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전주의 한국학과 안동의 한국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안동이 한국학의 본산이라 자처하지만 양반문화, 유교문화, 사대부 문화의 집대성으로 영남 선비들의 문화를 대변한 것이라면 호남 지방의 전주 문화는 정신적으로 호남 지방의 문화는 선비와 양민의 계층화가 아닌 사설문화가 아닌 대중적인 대동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한글과 한국학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서 풍류가 나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안동과 차별화할 수 있고 한브랜드 전략 기지로서 한브랜드 영역을 다가가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 전주에 의미있는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첫 민간 주도의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고전문화연구원이 전주에 설립되어 한국 고전의 우리말 번역과 국역 성과물을 산학협력 역으로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학의 정체성을 계승할 것입니다. 경기전의 전례를 기록한 경기전의 전라도 관찰사의 일기인 완영 일록의 번역을 위한 고전 번역 예산도 전주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5분발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관계 국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명지 의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속해있는 우아1동, 호성동 출신의 김명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의 도내 정차 역문제를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호남고속철 정차역 채택도 문제는 국회 채수찬 의원이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 역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 채수찬 의원의 주장을 떠나서 진심으로 전북 발전을 생각하고 호남고속철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호남고속철 정차역을 익산 역으로 고집하는 한심한 소아병적인 태도는 버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호남선 KTX 익산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가늠해 보면 고속철 정차역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지난 11일 익산역을 통과한 서울행 KTX 열차 가운데 승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열차는 새벽 6시 13분에 익산역을 출발한 열차로 승차 인원이 157명이었고 나머지 열차는 승차 인원이 겨우 30에서 50명에 불과합니다.

이날 익산역에서 내린 하차 승객은 더없이 초라한 형편으로 적게는 단 2명만 내린 열차도 있었고 대부분 20명 안팎의 승객이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속철 정차역을 익산 역에 두고 있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승객이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남 고속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라선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서울에서 전주를 찾는 외지 사람들은 고속철을 이용할 수 없는 전주를 오지마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호남고속철 정차역을 익산 역으로 확정하는 한, 고속철 정차에 따른 전북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익산 정차역은 이용 승객이 거의 없는 동네 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호남고속철 전북 정차역은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는 물론 완주와 임실,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 동부권에 사는 사람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채수찬 의원은 정차역을 행정구역상 익산시로 하되 전주와 군산, 김제와 가까운 지역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며 본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북 지역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고속철 정차역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속철 전북 정차역

은 익산 역이 아닌 전주와 군산, 김제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이한수 익산시장은 어느 일간지에 신께서 소원을 묻는다면 세 가지 소원 모두 고속철 정차역을 익산 역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겠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이시장의 입장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 승객도 별로 없는 익산 역에 익산시의 미래를 감안해서 정차역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행여 이시장께서는 앞으로 조성하게 될 혁신도시와 김제공항 건설 등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국책사업 보다 오직 익산시민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전북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속철 정차역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문제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방안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년 의원

전주를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삼천3동 대왕 장미아파트에서 광진 모악아파트에 이르는 중로 1·3호선의 15년간 방치된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긴박한 도로 사정은 편도 1차선으로 갓길이나 인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절름발이 도로로 전락되고 무늬만 도로라는 쏘아지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보행은 물론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인도나 갓길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아침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는 매우 심각하게 극심한 교통 정체로 운전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변 일대는 거의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지역으로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로개설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피곤함을 이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농민들에게 뼈아픈 이중고의 짐을 지우는 격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는 구이방면과 금산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한 심한 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소통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에 크나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나 갓길에 없는 일반차도를 보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큰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한다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용와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의 개교로 인하여 어린 초등학교생과 중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항상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과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등하교길이 항상 매일 같이 긴장하고 무섭고 불안한 등하교 길이 된다면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도로 폭 20M의 중로개설 사업비와 보상 및 공사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도 도로개설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횡포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열악한 보행권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시원한 도로 툭 뚫릴 수 있는 도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시는 그동안 교통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3동 대왕 장미아파트에서 광진 모악아파트에 이르는 중로 1·3호선의 도로개설에 관련하여 중로개설이 정이라도 어렵다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갓길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37회 임시회('06.11.1 ~ '06.11.3)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가 천년 전주를 위해 전통문화 축, 현대도시 문화 축, 미래도시 성장 축으로 세분화한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21세기 천년전주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 야경을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화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미지가 비슷한 경주와 야간경관을 비교해서 보면은 아쉽게도 전주시 집행부와 경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현저한 사고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주도 '천년전주' 처럼 '천년경주'라는 기치 아래 '천년경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청사는 물론이고 유적지마다 야경을 최대한 살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안압지의 경우는 곳곳에 오색 조명을 설치하고 주말이면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여 낮보다 밤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도 '천년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의 경우는 한정된 곳 전통문화센터, 효자다리 등 몇 곳 이외에는 야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63만의 전주 시청사와 시민 27만의 경주 시청사의 밝기를 2005년도 사용한 전기료로 보면 전주는 11,850,000원이고, 경주는 11,570,000원이었습니다.

인구가 3분의 1인 경주와 전주는 비슷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전주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둡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아직도 소비와 투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데라는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아닌 투자의 밑거름으로 보며, 전주의 야경을 밝게 함은 흡입 관광객을 늘리고 전주 야경의 추억을 제공하는 것은 회귀 관광자원까지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 쓴 만큼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고, 또한 침침한 구도심도 살리고, 전주의 밤을 밝게 하여 일거삼득하는 경제론인 것입니다. 경주의 경우는 이미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주요 유적지에 조명을 설치했으며, 누각과 연못과 주변 나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전주도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도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시청사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면서 까지 컴컴한 건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야경을 아름답게 조명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명을 추가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소 밤이 아름다운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전주의 야경을 살려 관광 상품화하는데 주력해주시기를 담당부서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전주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천년전주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께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 삼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양용모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굴된 송천동 청동기 유적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 앞에 인간의 삶이란 것은 자연을 떼어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시공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인간 본질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의 인간의 삶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갈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에서의 자연 공원은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슬로건을 내건 제4기 송하진 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유구한 역사의 전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역사적 의미는 진정 인간이 살만한 문물이 번성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있느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준공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공사의 송천동 현장에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공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원삼국시대 마한의 주거지 66기, 수혈유구 24기, 도량 유구 1기 토기가 대규모로 발굴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적지가 발굴 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라는 불행하게도 안내 간판

하나 세워져 있고 화장실도 없고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져 있는 황량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나타나 문명으로 가는 길목의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고대 유적지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교육의 현장이나 관광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인류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왕에 조성되어 있는 송천 제1공원이 유적지에 걸맞는 시설과 사진을 첨부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역사 시설을 만들어 청동기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시로 정해져 있는 송천제1공원의 이름을 송천청동기공원으로 명명하여 줄 것도 삼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인식차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어린이들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조그만 공원이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인간이 삶을 꾸리기 시작한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송천동 청동기 유적지를 깨끗하고 내용있는 송천청동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등 5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7대 전주시의회 제21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주골이라는 역사성을 고려하여 인후동에 잠사과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 내에 공간을 만들어 과학축전, 과학연극, 과학영상제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더불어 의상학과 발표회 그리고 전문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주골 주변을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의류타운으로 조성, 발전시키는데 구심점이 되게 하고자 촉구하였으나, 관련부서의 무관심으로 얼마전 인근 도시에서 잠사과학박물관과 함께 체험학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는 전주시가 생사를 걸고 노력한다는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택한 생활 영위와 후손들의 희망 있는 앞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약 600년전에 만들어진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를, 그리고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500년, 1000년 전에 몇 대에 걸쳐 완공하고 아직도 내부에서 미사를 볼 수 있는 성당과 그 역사를 관광 상품화하여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으로 대대손손 국가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국내외 여행객의 일정중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슨무슨 박물관 견학이라는 것입니다.

제주에 돌 박물관, 해양박물관, 서울에 김치박물관, 교통박물관, 충남 천안에 우정박물관, 우리전주에 역사박물관, 종이 박물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철도, 화폐, 비행기관, 카메라, 로봇, 전기, 신문, 판소리, 만화, 국악 박물관 등등 이러한 박물관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지구의 생성 원리에서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로봇의 작동원리, 우리 인간의 탄생 역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업 즉, 박물관 유치사업과 지역특성에 맞게 전주 인근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머루, 왕포도 등이 추가되는 와인박물관, 맛의 고장 전주답게 음식박물관, 전주의 대표적 특산물 부채박물관 등을 설립한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전통문화도시, 역사가 숨쉬는 도시 전주를 들려야만 대한민국 여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되었을때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를 충분히 생동감있는 도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부서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이용이 용이하고 한옥마을과 인접한 전주 동부권에 대대적으로 박물관을 유치 하여 전주 서부권에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며 생활하는 동부권 주민과 전주시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살기좋은 전주,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주시정 방향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10월 31일 도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완주 모악산 주차장 유료화 방치에 대한 전주시의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을 통해 보다 분명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3년 완주군이 주차장 유료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을때 본 의원이 완산구청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에도 언론을 통하여 중언미 진입로 정비와 완산체련공원 주차장 조기완공, 현재 운영중인 도계마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등 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15일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권 모악산 일대의 종합발전계획과 역시 완주군의 주차장 유료화 방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완주군의 주차비 징수 방침 현실화에 직면하여 전주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수수방관하였고 그나마 발표한 내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먼저, 중인초등학교의 휴일 운동장 개방 합의와 완산체련공원 주차장을 1년을 앞당겨 준공하고 이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였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등산객이 시 계획대로 차를 주차하고 등산할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길 구간의 사설 주차장과 도계마을 공영주차장과의 2Km 이상의 거리를 등산객이 차를 포기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해성중고 부근에서 끊긴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중인동 도로 여건에서 중인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주말에 학교 운동장은 유소년 축구와 생활축구 동아리에게 먼저 개방 되어 있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완산체련공원의 주차대수 규모는 시설되는 전체 체육시설 규모 대비, 완공되어 시민에게 개방할 시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등산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는 완산체련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등산객은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완산체련공원은 올 연말에 발주할 3차분 공사 내역에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1순위입니다.



3차분 공사와 마무리에 필요한 약 50억의 예산 편성이 내년도에 가능한지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이것이 가능하다 해도 2005년에 조성된 테니스장, 2006년 상반기에 조성된 축구장 시설 등은 시설만 되고 2년 이상 방치될 전망입니다. 또한 완산체련공원을 비롯하여 전주시 체육시설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에도 등산객들이 주정차한 차량들로 현지 주민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농사철에 농기계를 운행하지 못하고 차량이 교행하지 못해 차량이 한번 엉기면 10분, 20분간 짜증과 욕설이 오가는 실정입니다. 중인동 삼거리에서 하봉-비단길 부분과 도계 공영주차장까지 도로포장 및 차량 교행구간 정비 등 도로정비는 고사하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주차단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시내 버스를 돌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다섯째, 중인초등학교 부근과 중인동 버스종점 부근부터 차량 통제가 되지 않고,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운영중인 도계마을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는 현실감이 없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할 주말에 근무 규정이 없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을 청원경찰 수준의 상근 인력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단순 주차문제 해소 차원이 아닌 전주시민의 가장 편안하고 자연적인 휴식처가 되고 있는 중인동 모악산 일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도계 공영주차장을 버스종점 아래로 이전하여 현지 주민과 공존하고 실질적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끝으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원만한 상호협조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전북의 명산 모악산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인 전라북도도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 마련에 노력해 줄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국주영은 의원

한스타일화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스타일화 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스타일화’ 사업은 ‘한국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사업으로서, 6개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한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천년고도 전주는 전통 문화적 특성과 요소가 많아 한스타일화 사업 추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망을 갖는 것은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타일화 사업이 우리의 바람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보다는 디지털 정보문화에 익숙하기에 한스타일화사업을 계기로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스타일화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스타일화 사업에서 각 분야별로 집중적 연구를 통해 ‘브랜드화’ 하고, 이것을 세계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할 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리만의 독특함을 갖되 현대적 의미를 가미시킨 상품만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 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한스타일화 사업은,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용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목적이 소실되고 이미지사업,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관·학 협조체제와 관련분야 전문가 발굴, 인력양성 시스템 등 튼튼한 기반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보해 줄 것입니다.

셋째, 아시아권의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과 확대를 위한 한스타일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지원 및 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한스타일 관련 기준수출업체 등 민간부문을 근간으로 육성하면서, 외수시장 확대를 위해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들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압박과 관련 전문가의 부재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분



야 중 우리가 자신있는 한옥, 한지와 한식까지의 3개 분야를 1단계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하는 방안도 시장에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한식, 한방 3개 분야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따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타일 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한스타일화 사업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기에 공공성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한스타일화 사업을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만 머무르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한스타일화 사업이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연상할 때 제일 먼저 전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스타일하면 전주는는 생각으로 한스타일화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 아닌 늦가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연일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어 가뜩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전주시가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 부지를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실시함으로써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볼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내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의 이상과 최근에 서부신시가지와 하가지구 등이 끊임없이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전주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역기능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997년

280만원을 시작으로 2001년도 320만원, 2003년도에 450만원,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 600만원 등으로, 이는 평균 산술 금액이며, 50평형 이상일 경우 평균 금액보다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 현재 분양중에 있는 에스케이뷰의 경우 45평형이 평당 690만원이며, 89평형의 경우에는 평당 899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금액의 분양가로, 인구 140만인 광주광역시 분양가 800만원대 보다도 전주시의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땅값이 싼 전주시의 분양가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 정도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정가 방식이나 추천방식 등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10년새 3배로 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 분양 예정가는 196만원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평당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분양을 하다보니 평당 467만원으로서 예정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었으며, 그간 아파트 분양가 결정 전례를 보건데 분양가가 평당 약 1000만원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토지공사를 통해 하가지구 공동주택부지 12,000평을 분양하면서 약 300억원대의 개발 이익금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위해 100억원대의 기채를 낼 예정이며, 이는 전주시가 사업을 토지공사에 일임하면서 도로개설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을 토공에 일임하였다면 도로개설 또한 토공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사업 완료후 이익금 정산을 통해 100억원의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이며, 나아가 전주시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택지 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의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만을 고집함으로써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예정가 방식이나 추천방식 등을 채택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고하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정
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께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의
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전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송경
태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없는 서민이
제일 서럽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주택재
개발지구를 몇 개소 지정했더니, 8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대를 넘어섰
다니 하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대형아
파트 보급으로 시민의 주거복지는 향상될지 모
릅니다. 그러나 집없는 서민은 도시개발의 힘의
논리에 밀려 자꾸만 자꾸만 변방으로 밀려나가
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9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
시 장애인 수급자 주택보급률은 겨우 11%에 불
과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장애인 주거형태를 살
펴보면 자가주택은 11%, 전세는 13%, 임대는
27%, 월세는 26%, 기타 23%입니다.
집없는 장애인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
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당 제도
를 도입하여, 현재 4천여세대가 넘는 전주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분양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재개발 지구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서
민 임대아파트를 분양토록 의무화하여 더불어 함
께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금 및 융자금 연장 지원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넷째, 독일의 킬하우스 센터처럼 주택공
사나 민간기업에서 복지아파트 겸 복지 공장을
공급하여 복지시설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장애인
이 노동을 하며 상환할 수 있는 소시얼펙토링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품위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척도는 주거
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장애인들에게 올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주거복
지 정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
지 정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
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경제 활성
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점과 이를 더욱 잘 가꾸
자는 의미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에 대하여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
면, 2002년도 7,800여평 부지에 11개 업체, 고용인
원 81명, 매출액 70억원으로 시작한 전주첨단 기
계벤처단지가 2005년도에는 18개 업체에 고용인
원 223명, 매출액 229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 현재는 20개 업체에 고용인원 300명, 매
출액 300억원이 예상됩니다. 2006년 매출액은
2002년 대비 약 450%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것
입니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2005년 산업자원
부 사업 평가에서 전국 25개 기술혁신센터중 당
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현재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아이
템으로는, 폐수 처리시설의 신기술 터보블로어,
휴대폰의 전자파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
스틱 등 다수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
니다. 이들 아이টে에 대해 국내외 우수 기업의 협
력 요청 및 수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의 기술력은 불과 4
년 만에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전북의
전략 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신기술의 지속적
인 개발로 전북 경제를 선도하고 팔복동 공단을
활성화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업 환경과 지
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전북도의 전략
산업인 기계, 자동차 산업의 T자형 클러스터 중
심 축으로서 역할과 함께, 향후 전라북도에서 추
진하는 첨단부품 소재 공급기지 조성 사업의 연
구, 기술, 인력 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허브
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업 초기의 업체들로서 장비, 공간, 기술
부문의 지원과 더불어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케팅 등 종합적인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지방 중소 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지원 기관들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활성화 하고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기계 자동차부품의 세계적인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께서 더욱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38회 임시회('06. 11. 17)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 및 지방채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11월 현재 전주시 소유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182억3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경쟁체제하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탁자에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시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백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4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외에 사업평가를 실시한 민간위탁시설은 8개 시설뿐이며 2006년도에는 48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설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1회 실시하였으나 다른 위탁시설과의 차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위탁시설별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횟수는 연1회에서 분기 별 1회로 평가결과 잘된 점은 다른 위탁시설에 전파하고 개선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종 시설별로 하위 평가를 득한 수탁자에게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백 평가 시스템이 잘 되어 운영되었을 때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시설 이후 시설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주시의 행정재산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후 시설물이 얼마나 노후되어 예산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민간위탁후 시설물의 노후화는 수탁자 평가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협약서 작성의 투명성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해선 모집공고부터 심사결과에 이르기 까지 공개 및 수탁 신청자 전원에 대한 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시 협약서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재계약 및 만료 시점에서 수탁자와 심한 마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휴게실,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과 컨벤션 등은 그 단적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약서 작성시 협약서 내용의 공중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사전 조언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없이 책임있는 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억5천6백만원이며 전체 1,657억6천7백7십만4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 37.4%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5%이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채무상환비율 3.43%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순수한 이자로 지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무거운 짐을 짓지 않도록 강력히 검소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 읍인가 싶더니 조석으로 찻잔함마저 감돌아 어느덧 동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이 본의아니게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의 경우 2006년 7월 14일 이를 고시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18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28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10개소, 사업 유형 유보구역 5개소를 포함 총 61개소의 130여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재개발사업 28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16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5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5개소 총 43개소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준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은 91.3%이며,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625,246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의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말 현재 미분양된 전주시의 공동주택은 약 2,000여 세대에 달하며, 금년말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1 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5개소에 약 2,400여 세대, 2007년도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11개소에 약 7,300여 세대, 이후 2010년까지 8개소에 5천여 세대에 분양 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세대를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금년 말까지 약 9,600명, 2007년말까지 약 29,200명, 2010년도말까지 약 20,000여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들어설 예정인 43개소 공동주택 1개소당 약 5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만6천여명 등 총 144,800명의 인구가 있어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 무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하가지구에 12만9천평, 효천지구에 20만3천, 효자4/5 택지지구에 26만4천, 35사단 지구에 60만평,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85만평 등 총 4,046천여평에 달하

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는 통상적으로 15%에서 2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동주택이 건설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주택 보급율이 91%를 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285만평 규모의 혁신 도시가 형성될 시점인 2012년도나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크게 도급제와 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께서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싸게 좋은 집 한채 마련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데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고급에 미치지 못하여 딱지 하나에 몇 천만원에서 몇 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되어진다면 모르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칫 밀빠진 독에 물북기식의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율 및 공동주택 보급률, 주택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담당과인 도심진흥과에 인력을 추가 배정해서라도 선량한 시민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등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인 즉 재개발, 재건축 붐으로 인하여 자칫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 의원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주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39회 정례회('06. 11. 23 ~ '06. 12. 20)

●●●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2006년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사업 추진 실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403명이 있고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우즈베키스탄 9명, 기타가 26명으로 총 664명 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로는 여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업내용은 한국어에서부터 머느리 교육, 창작 정착 프로그램,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600여명중에서 겨우 30에서 200명까지 사업비는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전주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총 누적 건수는 약 12만 9천건입니다. 한국남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27.4%로 4쌍중 1쌍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농어촌은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5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2세라고 하는 코시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현황은 7,998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6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는 지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기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 위치, 사회문화적 조건, 외국인 부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가족과 노동 상황, 양육과 자녀교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아버지의 교육관등이 이 문제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센터나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민자는 72.5%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기본

적인 한국 부적응으로 자녀교육 2세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인으로 충분한 사투리까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방치는 필수적인 문제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깊게 조사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그 외국인 부부 관계를 보면 살아 있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이 한 90%로 되어있고 10%정도가 겨우 그래도 행복지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가정 폭력, 언어폭력 여러가지의 빈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의 쉼터, 보호소까지 생겨서 전주에는 15가족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추진은 다양화된 문화, 생활 체험에 열거되어 있을뿐 핵심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쉼터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을 강화해서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구청장께서는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구 현안사업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문화의집 정부 지원 중단 및 해당 지역주민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5개 문화의 집에서는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주시에서 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의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행정동 단위가 아닌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1·2·3동을 묶어 삼천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삼천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약 10만명에 달하고, 전주시 5개 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46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전주시의 5개 문화의집은 지원예산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주시 33개의 주민자치센터보다 지역문화의 첨병으로서 월등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이 1억 정도로 문화의 집과 지원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상가상 매년 문화의집 별로 연 1천만원 정도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200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문광부에서 지방정부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문화의집에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중단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전주시의 대응책을 논하고 항구적인 운영안정성과 지속적인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화의 집의 본원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에 있다는 의식의 깨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96년부터 조성하고 운영하였던 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의집 또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문화의집 복권기금 중단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전주시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새벽 7시부터 하루 꼬박 8시간씩 전주시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70만 6백원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67만 9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시와 업체간 협약사항에 존재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도 책정되어있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씨 아주머니는 월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6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위탁,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 및 업체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 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크고 작은 불법, 탈법 행위는 부지기수로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도 불법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없이 확대되어 왔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뒤 그늘속 보이지 않는 칼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민들 그중에서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청사 외주용역 이후 전주시는 매년 1억5천여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통한 재정건전과 효율화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팽개쳐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고된 육체를 딛고 창출되어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권력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힘없고 소외된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전주시가 형성시킨 고도의 저임금 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측의 세부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복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전주시와 위탁계약 후에 제출한 업체측의 용역착수계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 천 7백35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된 3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총액을 합하게 되면 총 2천4백48만원에 불과해 서류상으로만 2천2백87만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저임금 및 불법, 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 및 외주정책과 최저가방식의 낙찰 관행,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계약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기에, 가난과 차별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또한 행정이기때, 전향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전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하며 준비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재활이요, 직업재활의 꽃은 고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요, 전주시 장애인 취업률은 약 27%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2000년도에 13,489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6,925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한 전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및 훈련시설, 취업 상담소, 취업 후 지도센터 등은 단 한 개소도 없으며, 자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겨우 한 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6명의 장애인이 보호 고용되어 있으며 약 10%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월 5만원 이하의 훈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전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은 작년에 10억5,485만4천원에서 금년에는 29억33백만원으로 178%, 여성은 작년에 1억1천1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35%가 증액된 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작년에 4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3천5백만원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직업재활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은 총체적 부실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팀을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지역의 공공의 목표를 실현하는 모델로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과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각각 1만4백44명, 2만7천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공장 및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청소 용역, 빌딩 용역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중심사업장 모델을 개발 시행하고 시·군·구에서 2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45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사회적 기업형 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천년전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심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칠줄 모르는 뜨거운 열기가 가시는 듯 하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에 가을은 기절하여 버린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이와 차가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초冬の 초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전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루 40만3천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바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전주개발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없어서는 안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는 주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그 배설물은 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산업이 발달하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 곧 지구오염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오염 문제는 인간이 다시 해결해야 하는 업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에서는 인간오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는 적당히 숨기고 처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저기압이 형성된 날은 악취가 나고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은 폐허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여 전주시방환경청으로부터 수질 오염에 따른 부과금을 받는 문제 투 성이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주시가 받은 벌금이 자그만치 4억7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하수종



말처리장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악취에 인근 주민이 시달려야 하고 왜 전주시가 위탁된 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대신 맡아야 하고, 어설픈 행정 처리로 인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분명한 답을 받아 저는 전주시민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 직무에 대해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 시 산하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 시 남노송동 64번지에 소재한 원산파크 아파트 96세대, 비교적 작은 아파트로 총 주차대수 44대중 지상에 22대, 지하에 22대 이중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블록 담장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2002년도 3월 준공시부터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4년간 단 한번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뜰이나 어려운 주차난과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활용치 못하는 원산파크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산파크 주차장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내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철차상 준공시에 주차장 진입로 도로로는 준공 당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법원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후 사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 관련부서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를 준공 처리 해줘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입니다.

반면에 시 관련부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5항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51조를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전에 단 한번의 지도 계몽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중부서에 고발당해 한 사람도 아닌 절반 가량이 세대당 50만원씩 총 46

세대가 2300 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이중성을 보면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당해도 되는 것인지 시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1년도 아닌 4년간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 시간에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없이 부당하게도 지하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원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정례회의에 만전을 기하시는 허광 의사국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새롭게 재 창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아가 전통문화 도시다운 정신문화를 얻기 위해 2007년 역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확보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그동안 전통문화도시 천년고도라는 기치 아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판짜기에 분주히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문화센터와 전주권 주변을 중심으로 전주 풍남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와 이모저모의 작은 문화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해왔던 문화 축제를 보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독특한 정서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축제가 시민 안으로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축제는 시민의 정서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문화로 거듭나 지역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행부는 전주 막걸리를 상품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정서를 안고 '막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막걸리 열풍으로 막걸리 축제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는 음식과 연계한 막걸리 문화, 전주 막걸리집 명소화를 위한 육성 대책, 막

걸리를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고품질로 전통생활속의 막걸리를 독특한 술 문화로 정착 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 프로젝트’의 전반은 막걸리 전문점, 연구기관, 음식의 관광상품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막걸리 정서문화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프로젝트’는 많은 안주의 다양성을 상품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삼천, 서신, 경원, 효자, 평화동 58개 업소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막걸리 안주의 다양성으로 콘텐츠를 부각했다면 그 이면의 정서적 콘텐츠도 함께 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걸리 집의 문화 정서를 예로 들어보면 옥쟁이 막걸리집, 소리꾼 막걸리집, 문화예술인 단골 막걸리집, 사투리 잘하는 막걸리집, 젓가락 장단을 잘하는 막걸리집 등을 상품화 해서 전주 막걸리 문화를 정서적으로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프로젝트’만큼은 기존의 축제처럼 내면이 충실되지 않은 축제에서 벗어나야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외형과 무형이 균형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역시 다양한 문화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천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잘못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형적 걸치레보다는 정신문화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집행부에게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 김창길 의원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께 약간은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 몸이 완쾌가 안되다보니까 치료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의사일정에 혼선을 빚어서 그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마지막 회의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명의 전주 시청 공무원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63만 전주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아름다운 미담이 회자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보상금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여 따뜻한 온기를 불러 일으켰

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선행을 베풀어 지역사회를 밝게 해준 우리 관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인후2동에는 1940년대부터 건축된 70여 세대가 모여사는 인덕마을과 고지대로 인하여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동절기에 먹을 물을 마을회관에서 길어다 먹는 생활이 곤란한 집들이 살고 있는 산동네 용수마을이 있는데 그중 인덕마을은 종합의료시설로 최첨단을 갖춘 전북대학교 병원건물 옆에 수십년간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에 지형상 저지대로 매년 수해침수와 아울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구조가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주거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전북대학교가 토지 명도소송에서 승소,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이 야기되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도 납부하였고 전주시 일선 행정에 적극 동참하는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등 관계 기관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주민들은 시청사에 찾아왔지만 미온적인 전주시의 대응에 시민들은 냉가슴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인덕마을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인덕마을이 저지대라고 한다면 용수마을은 그에 반해서 너무 고지대인지라 딱딱딱 붙어있는 집들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물론이고 상수도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세대들이 있어 겨울철 눈이라도 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하수 물조차 얼어버리면 먹는 물 마시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완산동 용머리고개, 서학동 완산칠봉, 교동 한벽당, 진북동 도토리굴, 풍남동 이목대 등 이러한 지역들이 전주시에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 슬로건 취지에 맞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인정 많은 넉넉함으로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약간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전주시의 문화라고 하는 훌륭한 부분은 한층 더 발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드리며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명의 전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



청하여 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메리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입니다.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숨어있는 무형의 자산,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우수성 및 전수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천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브랜드 사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발굴하고 세우는 것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라는 자산을 꼽고자 합니다. 지난 1982년 태동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는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현재 51개 체조회가 구성되어 3천여명의 시민들이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학교, 체육관, 광장 등에서 건강과 활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 전주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첨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해마다 1월이면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해마다 전주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90여명을 비롯하여 도내 200여명의 지도자를 심화 양성하면서 전라북도로 그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또 서울, 부산, 강원은 물론 제주도에서 까지 앞다퉈 참여하는 전국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째 회를 거듭할수록 교육 희망자가 넘쳐도 여건이 열악하여 120명씩 밖에 지도하지 못한다는 소식은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기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생활체조의 메카임을 증명하듯 창립하던 1982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운영체계를 갖춘 199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전국 생활체조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하며 전주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10회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대회는 전국 49개팀 4,000여명이 참가해 단일 생활체육 종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전

주를 전국에 알리는 명실상부한 대표 경기로 자리하면서 TV중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3천여명의 회원들이 풍납제, 전국체전, 월드컵 등 크고 작은 전주시 행사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 평균 80여 차례 이상의 시범공연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주시 민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선두주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조의 건강적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경로당 20곳과 14 개 학교에서 생활체조를 익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전주시 보건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뇌혈관 사망자수와 당뇨병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을 넘고 10년전보다 자살율이 3배나 늘어나는 등 시민의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락 생활체조의 체계적 확산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미 정해진 6개의 한 브랜드 외에 우리가락 생활체조로 더욱 잘 알려진 전주시 생활체조를 “온고지신”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해 럭키 세븐, 7개의 한 브랜드로 더욱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체계적으로 확산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관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열의를 갖고 온 체육지도자들이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교육을 받고 매주 연수하는 지도자들이 작은 카세트 하나에 몸을 맞춰야 하는 실정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옛것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한 브랜드”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락 생활체조”에 대한 지원 및 연수시설 확보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주시 우리가락 생활체조”는 웰빙이라는 코드에 맞는 세계적 한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명의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도 없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워져버린 날씨에 우리의 마음은 겨우살이 걱정이 앞서



며, 특히 불우 이웃과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됩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복잡한 사회 변동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노인 인구는 2006년 8월 현재 50,062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전주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 비율이 6.2%이며 노령화지수 27.3%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8%, 노령화지수가 37.9%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의 증가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한 장기요양의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 병상 및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요양병상 및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 요양 병상 확충 계획을 별지1과 같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노인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책과 요양 병상 확충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과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 혜택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별지2와 같이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대문구의 11곳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복지를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 건축 가능 면적은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되어있는데 거의 상가 용도의 택지가 되고 보니, 지역주민의 주차 이용이 어렵게 되고 주차난 해소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가 아래 표와 같이 90% 이상이 상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분양할 때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한 것인지 90% 이상이 분양이 된 곳은 상가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하여야 할 주차장 부지가 상가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말았으니 시민의 주차 공간을 없게 만든 셈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당시 주차장 용지로 지목을 한 것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따른 대책과 택지개발 후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곳은 어떠한 일이 있

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년전주,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시가 노인복지 문제, 요양 병상의 턱없함, 소외받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지원, 택지개발 내 주차장 부지가 제구실을 하여 주차난 해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청정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제240회 임시회('07.1.16 ~ '07.1.22)

●●●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전주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고급 승용차를 제외한 소형차만을 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동차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장에 요인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완산구는 (유한회사)평화시스템에, 덕진구는 (유한회사)전주폐차장에 위탁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한건당 차종에 따라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소유자 또는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견인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어 실적 위주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견인 업체의 유리한 조건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산구 5,515건, 덕진구는 3,930건으로 총 9,445건을 단속하였으나 고급 차종인 에쿠스, 또는 체어맨,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은 상황이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를 견인할 경우 기어부분과 미끄럼 방지장치 손상이나 견인중 발생하는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고급 차종인 에쿠스, 체어맨 또는 외제차의 견인은 단 한 건도 하지않고 서민들이 소유한 소형 차종만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시장으로 평평이 나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위



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소형차를 가진 서민들에게는 왜 엄하게 차등 견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후 견인업체 선정에 고급차종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든지 견인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진정 선진사회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이 잘사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요구이며 바람입니다. 시장께서는 작은 행정에 도 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 위원입니다. 63만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o west! 서쪽을 향하여!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해안 시대는 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이 연대와 교류를 넘어서 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축의 이동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이며, 새로운 시장이 서쪽에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국가의 운명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연대와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주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보는 일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와 공장과 식당과 터미널에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국 내거주 외국인은 1백만여명이며 2050년에는 2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397명이며, 전주시 외국인 현황은 2,560명이고 결혼이민자 온누리안이라고 하는데 664명입니다.

또한 도내에 산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300명이고 그 중 830여명이 전주권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인권 문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거주자 2세

들의 교육문제 등 이제까지는 NGO기구 인 인권, 노동, 종교단체의 프로그램에 머물렀으나, 지금부터는 제도권에 흡수되는 포용과 통합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주를 이해하는 소통과 협력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26일 결혼이민자가족 사회 통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예산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장기 지속이 의심스럽습니다.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구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첫째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고 네 번째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에는 17개의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이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타운, 경기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는 4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시아 이주민 센터를 건립, 운영 예정이고, 전주시에서도 폐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외국인 다문화센터 운영을 기획했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인 예산규모 2억5천만원 정도의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를 활용한 (가칭) 아시아 이주민센터 대안학교 성격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과의 직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를 뛰어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 소통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첨부를 바랍니다.

●●● 김상희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맞이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은 전주시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2006년도 한해동안 잘못된 운영 체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 중국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중국과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연을 맺게 된 곳은 하얼빈의 청일국제외국어학교로 무료학생 5명과 1천만원 지급학생 3명을 파견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이국만리로 8명의 학생이 보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방학을 통해 귀국한 학생과 학부모는 청일 국제외국학교의 교육 환경 및 기숙사 위생 상태의 열악함을 보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학교라며 빠른 시일 내 보안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교사들이 급여를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부도위기의 학교였으며, 최근에 알게된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1년 과정의 어학을 이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상식 밖의 학교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의 엉망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수조차를 여과할 수 있는 정수기도 없었으며 부식을 보관할 냉장고 하나없는 기숙사 시설을 설명하고 현지 조사와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현지 조사는 커녕, 청일외국어 국제학교는 독립운동을 하신 모 장군의 자손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상적인 학교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정도의 학교 운영과 기숙사 운영은 양호한 편이다 라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일관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파견된 어린 학생들이 무료와 1천만원 수혜자라는 허울때문에 귀국을 과감히 서두르지 못하였고, 학교답지 않은 곳에서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청일외국어국제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견했던 대로 초·중등학교가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대안 없는 직무유기로 결국 인재양성이 아닌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외국에 대한 불신을 준 개악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초등 1명, 중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뒤늦게 다른 곳으로 전학을 서둘러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주시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인재양성 발굴에 맞는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학교 선정 및 인재발굴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검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하얼빈 초·중·고 시범학교로 급하게 전학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 및 청일국제외국학교에 학생을 파견한 뒤 방치해온 경우를 집행부 담당부서는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은 앞으로 인재양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주시 재개발을 펼쳐야』란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의 첫 번째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진북동, 인후2동을 비롯하여 전주시에 무려 28개 지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서신동 바구벌을 포함하여 9개 지역은 이미 시공사도 선정된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한 번의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단 한 번의 실수가 전주시 경제와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각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주소를 둔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모두 먹여치우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갈 뿐 전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 경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주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므로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관여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귀찮은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려는 태도는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시가 관여한 일 중의 하나로 지분제와 도급제 문제를 들 수 있습



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전주시 전광상 도시관리 국장께서 각 재개발 지역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는 전광상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주시에서는 도급제 방식의 재개발 공사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지구입니까? 거의 모두가 도급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주시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를 감안한다면,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개발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서민들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해서는 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지분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와 공개입찰은 형식상 절차일 뿐 도저히 상식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선정하는 소위 정비업체와의 계약 관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은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아니하고 정비업체를 물밑 교섭으로 선정하였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게 될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업체들이 과연 전주시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재개발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제시한 시공단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오르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은 지역이 전북인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도 또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건설사의 폭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단가가 높으면 분양가도 높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

주시에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 명의 인원만 가지고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이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600년 전의 전주가 지녔던 활기와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유재권 의원

삼천1동, 효자1,2동 출신 유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희망찬 새해에는 황금 돼지의 해로 바로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의 것이 되는 뜻있는 정해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요보호대상자 세대에게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행정관청의 선행이 1회성 행사나 얼굴알리기를 위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정해년 내내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삼성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완산구 266개소, 덕진구 252개소로 총 5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난방비로 경로당별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기름값은 2007년도 1월 현재 전년도 대비 유가는 20% 급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난방비 보조금액은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주시의 고유가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경로당 중 도시가스가 아닌 경유 등 난방유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은 삼천동 광진목화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하여 완산구는 142개소, 덕진구는 151개소로 총 2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도시가스가 경유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경유 등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도시가

스시설을 설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293개소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경쟁력 즉 자생능력이 떨어진 시설은 해당 시설이 자생능력을 갖추 때까지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2006년도 조건부 미인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은 삼전동 사랑과 평화의 집, 호성동 천국 나그네 등 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 운영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자생 능력이 떨어져 시설 운영자는 현상 유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몫으로 자연적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에서 누려야 할 각종 복지혜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시설이 되기 전 미인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었으나 신고시설로 전환한 이후 보조금이 뚝 끊겨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복지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은 타 시설과의 통합을 권유하거나 복지시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진심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오 의원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많은 사안 중에 지독한 경제 사정으로 수많은 서민들은 삶에 지쳐 한없이 원망섞인 한숨 소리에 상처만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일부나마 시민들 사이에 삼성그룹의 이학수 본부장이 도지사,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이 전주시장이 되었으면 고용 창출과 경제 사정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냐는 좌초섞인 목소리도 분분합니다.

송하진 전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단순 노무자들은 하루 일거리가 없어서 시름을 달래려는 탁주 한잔을 목에 적시려해도 탁주 한잔 값이 없어 전전긍궁하며 절

박한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대 시장 중에 송하진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 치더라도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사업을 공무원,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의례적이거나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전주시의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억원 중 16%인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유사시인 청주시는 재래시장상인 연합회가 지난해 발행한 재래시장 상품권은 51억원을 발행하여 48억원을 판매하였고 94%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와 우리시의 상품권 판매 차액은 무려 45억으로 지나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주시 상품권 판매 정책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수수료 면에서 우리 전주시는 상품권 판매수수료 1.5%를 전라북도에서 새마을 금고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수수료 1%를 다시 상인 연합회에 지출시켜 주면서 우리시와는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비교해 볼 때 전주시는 행사 일변도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판매 제도가 전무하여 판매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여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는 재래시장 장보기를 1년에 몇차례 한 두번 치루고 마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월 1회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는 전반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발행 지원은 전주시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생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판매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제살리기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재래시장 상품권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귀가 들리지 않아 말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라 불리는 농아인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옛 말에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과 동시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보기에 일반인과 똑같이 때문에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어려움이 적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차단됨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농아인들의 현실입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전주시에 등록된 27,479명의 장애인중 2,310명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들리지 않으면 글로 쓰면 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언어교육을 받지 못해 인지능력 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2,364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국어교육의 부재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취업자는 노점상, 건축 일용직과 학생을 포함해도 168명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6.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이 열악한 청각장애인의 현실에 기초하여 몇가지 복지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화통역센터의 직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도 수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도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수화통역사가 없는 한 의사소통 문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로 다가옵니다.

다. 전주시의 경우 수화통역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 전주시지부 부설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3명으로 수화통역사 2명, 농통역사 1명입니다.

수화통역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이사할 때, 법원에 가야 할 때, 취업 상담이 있을 때 등 출장통역이 많으며, 그 때마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 사무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은 필요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사소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부족하여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들이 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사무실 관리, 운영까지 맡고 있는 현실에서 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수화통역사와 직원의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학문맹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동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교육과 인지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수화통역사가 진행하는 한글학교가 개설되어야 하고, 독서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지부 사무실에는 책장은 하나 있으나 책이 반이상 비어있고, 요리책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빌려가지 못하고 베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글을 배워서 쓰고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준에 맞는 문화 향유와 독서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운영과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 2세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세 교육에 있어서 2세가 정상으로 태어나도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언어를 배우지 못해 일반아이들과 인지능력에서 2~3세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가 아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전주시의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장애 없는 사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란 주제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3시에 출근하여 하루 온종일 냄새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리 날씨가 덥고 무더워도 땀에 옷이 흠뻑 젖고 현기증까지 나는 지독한 쓰레기 냄새를 참아가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의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차량과 가로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에는 400여명에서 해마다 자연 감소하여 현재 250여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시가지 확장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아예 없는 동도 있으며, 1개동에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결원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정원제를 실시하여 결원이 발생할 시 즉시 충원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2군데 있습니다. 완산구는 삼천동 세내교 부근에 있고 덕진구는 종합경기장에 있으며, 편의시설은 일체 없으며 방범시설이 전무하여 도난, 화재 등 물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완산차고지는 2004년 3월 15일 화재가 발생되었고 겨울철 난방시설이 없어 물을 사용하는 노면 진공청소차가 동파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전주시에서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후에는 샤워 등을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산, 덕진의 통합 청소차량 차고지로 모든 청소차량들이 마지막으로 청소일과를 마치는 장소 즉,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샤워

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전주시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에는 태평 휴게실 등 3개소이고 덕진구에는 진북동 소재 적환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점호 장소는 완산구가 6개소, 덕진구가 5개소로 총 11개소이나 휴게실은 8개소로 3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산구의 휴게실이 없는 전고앞, 교동, 평화동 등 3개 점호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완산구 효자휴게실 및 덕진구 관할 휴게실 5개소에 에어컨 등 샤워장 시설을 갖추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청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큰 천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삼가 의원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올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세배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을 제출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하여, 지난 12월 의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1982호를 2007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 대한 정책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점용료 인상에 대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 점용료 인상은 기존의 전주 1개당 연간 점용료의 600원에서 850원으로 41.5%를 인상하였고, 지중배전기함, 종합 유선방송 단자함 등 지상 시설물은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8%, 수도권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직경 3M를 기준으로 5,250원에서 7,250원으로



38.1% 인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되어 이미 전 지자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울산시같은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등 도로점용료 전반에 걸쳐서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에서는 어떤 현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주시는 지난해 8월에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시행령이 지난 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직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3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준비해봤다가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켰으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일찍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2005년 227건에 9천7백694천원, 2006년 도로점용료는 2억7천3백1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같은 회사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도 도시가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점용료를 전주시 도로점용료에 준하기 때문에 사유지나 공동주택에서도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 동산,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200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예로부터 행운을 전해준다는 돼지해를 맞이하여 전주시민 모두 부자가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경로당은 2006년말 현재 520개소로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39.7%인 19,8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520개소 경로당에 연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마다 올해부터 난방비와 운영비를 똑같이 80만원과 76만원씩 156만원, 간식비는 이용자수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의 일부는 아파트관리소에서 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다소 여유가 있으나, 시 지원에만 의존하는 단독주택 경로당이나 농촌마을 경로당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냉방 시설면에서 에어컨이 구비된 곳이

있는 반면 선풍기에 의존하여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환경면에서도 어떤 경로당은 이용자를 충분히 수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4평의 협소한 공간에 20여명이 발하나 제대로 뺄지 못하고 웅크리게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은 풍족한 곳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곳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상과 악을 통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정한 지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비인가 경로당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곳까지 포함하여 본 의원 추정으로 20여곳 이상에 이용자수 400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비인가 경로당은 주로 농촌마을과 시내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연료비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용되는 곳은 개인이 전기료와 연탄값을 각출하여 근근히 운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등록조건에 맞지 않은 비인가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곳 어르신들의 불편과 애환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520개소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환경과 시설을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급한 곳부터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이 365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살핌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희망의 200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2007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새해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자꾸만 움추려드는 서민들의 생활속에서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힘들었던 지난해는 빨리 잊고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시름하는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구석구석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량으로서 대부분 주택가에 비치되어 있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6%정도가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고, 44%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별도로 수십만원의 비용 지급을 하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감량의무 사업장 구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 2조 2항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전주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는 시 공동수거 용기에 버려서도 안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좀더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는 56%도 전량 적법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주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각 학교에 맡기지 말고 공동주택에서의 처리 방식으로 시 공동수거 용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고 셋째, 관련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주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도 관련 부서의 느슨한 행정절차 및 예산부족 타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는 적법 여부를 떠나 예전처럼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처리시에는 주택에서 배출시 부담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인격형성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에만 몰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

주시 청소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조속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희망의 2007년, 새로운 전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 차게 뛰어 보자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만복을 부르는 정해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금번 회기 중 이루어진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방향과 적극적인 추진계획, 특히 전통 문화 도시 선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계획과 각오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주를 방문하였고, 경기전을 찾은 자리에서 지적된 그리고 그간 지역 문화전문가들 사이에 공론화되고 있는 경기전 보존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8월 고궁박물관에 태조어진을 대여, 전시하던 중 태조어진 훼손 은폐 문제가 알려지면서 전주와 경기전의 상징과도 같은 태조어진 보관 장소 문제가 지역문화계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태조어진의 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어진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경기전 내 전시된 어진과 이안관련 유물 가마 등 장엄구 유물을 제대로 보관, 전시할 유물전시관 문제가 대두되어 전주시가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문화재청이 예산지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이번 전주 방문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문제가 아닌 태조어진과 조경묘, 조선왕조실록을 유일하게 보존하였던 전주사고터, 예종태실과 비 등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 문화, 전통을 오롯이 대표하는 사적의 격에 맞는 경기전의 종합적인 보존 대책을 지적하고 시사한 점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상징적 문화유산이 경기전이고 태조어진이라면 그간 경기전의 외형적 복원에만 치중하여 유물의 복원, 보존, 관리에 소홀한 잘못된 관리 실태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씩 외부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증에 기초하고 기준과 지침에 근거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경기전에 모셔져 있던 태



조어진 훼손사건은 상징적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었던 어진을 잘못 관리하고 심지어 훼손하고 은폐하던 중에 왕실문화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고궁박물관에 초대 받은 태조 어진이 훼손된 점은 오죽하면 서울에 주저앉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면서 다소 비약되고 황당한 논리 같지만 현실은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경기전 앞에 더 이상 세인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하마비, 어진만이 아니라 진전 내에 있는 장엄구의 보존대책, 복원된 부속건물들의 활용문제, 경기전 관련 자료 및 유물복원, 진전 제사의례 복원, 조경묘, 전주사고터, 예종태실과 비 등을 시급히 종합적으로 사적 차원의 격에 맞게 복원,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담할 민간거버넌스 조직과 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사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전주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언제부터인지 경기전 경내를 비롯한 안팎과 태조로 등에서 마치 그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치러지고 있는 몰상식한 문화축제, 행사공연, 장소 사용 등이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경기전에서 개최되어야 할 행사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여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전의 장기적이고 격에 맞는 보존대책이 있기까지 현재 계획된 경기전 개방 문제를 포함하여 대책과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41회 임시회('07.3.9 ~ '07.3.16)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천년 전주를 위한 미래도시 성장 축 계획을 보면서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로 변모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일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본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학술용역 기본 구도는 공간 범위를 옛 도청 청사 부지와 인근 완산 경찰서, 지방경찰청 별관, 그리고 주변 사유지 등을 포함한

8,930평으로 확대하고 전라 감영지는 역사성 회복과 과거, 현대, 미래를 연결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공간이 되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복원지 성격은 '도심속의 역사공원'으로 규정했으며, 전체 복원지를 고건축 부문과 현대건축 부문으로 나누었고 고건축 파트는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연신당과 응청당을 복원하고 현대건축파트는 전라감영 전시관과 공방 및 시민광장 등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감영지 복원 예산은 734억원대로 기존 도청사 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선화당과 내아 등 감영의 주요영역 복원 1단계 사업 280억원, 청사인근 부지매입 추가 작업 2단계 사업 301억원, 전라감영 역사공 원 광장 존 3단계사업 153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감영 복원은 이 지역의 기운과 자존심의 상징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복원은 원형대로 전체복원, 부분복원, 축소복원,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합한 퓨전 복원 등 다양한 논란이 지금까지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전라감영 복원 밑그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관광단지 형태로 편리성에 집중 무게를 둔 용역으로 부분 복원과 퓨전복원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는 현대적 감각과 편리성 보다는 후백제 견훤대왕과 정여립 장군과 전봉준 장군과 함께 했던 전라도 기운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 관계부서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감영 복원을 당대에 끝내려는 속단을 금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대와 미래의 기본틀을 근거로 현대식 건축물을 등장시켜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부각하여 용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대건축물 자리에 고 건축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동선 만큼은 편리성을 감안할 때 현대식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의 도시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모두에서 밝혔듯이 이 지역 기운과 자존심의 마지막 상징입니다. 졸속 결정보다는 전통문화 도시다운 기운을 찾기 위해서는 계획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과 다양한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진지한 공청회를 몇 차례 거친 후 실시 용역이 결정 되었으면 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라도의 마지막 자존심과 전주 정서의 상징임을 끝으로 말씀 올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 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천년 전주 알찬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동 영구임대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복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풍남문에서 송구와 영신행사를 마친지 채 4시간도 안 돼 장기 체납 아파트 임대관리비 2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강제퇴거 당한 후 승합차에서 생활하던 지체장애인이 차안에서 가스버너를 켜 놓고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평화1.2 동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과 1995년에 각각 준공된 평화공공 1단지과 4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하 7평형에서 최고 12평형대 등 총 2,873세대 5,8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5% 인 590세대에서 총 1억9천482만의 임대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대부분인 세입자들의 1인 당 한달 평균 수입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2만원과 중증장애수당 7만원 등 총 39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편 매월 평균 지출금액은 7평형이 10만 3천원에서 12 평형은 15만 4천원이며 나머지 23만6천원에서 28만7천원은 인간의 최저 기초생계비인 식비와 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문화 복지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장기체납으로 인해 9가구가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노동력과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이 임대관리비 장기체납으로 인해 언제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생활 안정을 조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유기적 사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장기체납자 양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실현하고자 민선4기 송하진시장이 밝힌 시정방침의 첫 번째가 ‘힘찬 경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린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계획과 발전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교육 환경과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 기업유치 등의 지역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고 혁신하는 관건임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를 인재육성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해외연수 지원 등의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전주시의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에 많은 기대와 높은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주시에 제안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울로 대학 진학하는 우리 전주의 인재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주 장학숙’ 건립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전라북도 장학숙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수용 인원이 본관에 숙실 154실, 2인 1실 기준으로 남자 96실에 192명, 여자 58실에 116명 총 308명과 지난 2006년 청운관 고시관이 개관되어 숙실 64실 1인 1실 기준으로 남자 49실 49명, 여자 15실 15명 총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비해 수용 능력의 제한으로 입사정원을 매년 시·군별 배정하고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어 전북장학숙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실력은 갖추었지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형편상 지원대학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으며, 여자의 경우 현재 전북장학숙에 시설 배정된 남녀수용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신규 입사생 배정인원 108명, 남자 62명, 여자 46명중 전주시 배정인원은 17명 남자 10명, 여자 7명에 불과하며, 신청인원 176명의 10%도 채 선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장학숙 입사 여부로 판단하고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애틍는 심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도, 기업유치의 성패도 바로 이러한 교육환경과 시설에 좌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장학숙 학생들의 사후관리와 시설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과거 교육도시의 위상과 면모를 되찾고, 지역인 재육성의 실질적이고 백년대계의 첫 발로서 '전주장학숙'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 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조지훈 의원

사랑해마지 않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 들어오는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조지훈입니다.

본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쓴 소리 한마디 할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시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느슨한 행정을 용인한다고 하는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최근 행정을 바라보면 행정위원장으로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등학교생 25명, 중학생 40명, 고등학교생 35명 등의 해외연수생 총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교생들을 해외연수 대상으로 모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오늘 벌어지는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모집한 초등학교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변경된 후 지난 12월 정례회와 1월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초등학교생 해외연수생을 모집한 것은 능률행정, 엇장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지역을 공모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은 65세이상 노인, 64세 이하의 중증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자들에게 수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 정부 지원의 60에서 8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 올해 예산에 11억1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즉시 전주시민 67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전주시는 공모마감 시한까지 신청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무사안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는 주유소 등의 위험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효자동3가 781-1번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불과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둔 787-24번지에 이미 터파기공사까지 마친 주유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유소가 모든 행정절차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6일에 석유판매업조건부등록을 마쳤고, 동년 8월 22일에 건축허가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20일에 완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취급설치소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위법 시설물임을 인지한 관련부서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법한 시설물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먼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 사례들과 관계된 분들이 한 밤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는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단 전주시 행정 풍토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치이고 끌려 다니지 말고 업무의 주인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일하는 자세의 쇄신과 행정 풍토의 쇄신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따뜻한 힘이 시 행정의 뜨거운 에너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42회 임시회('07.4.11 ~ '07.4.16)

●●●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하는 제8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5월 3일 제1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14일 제33회 전주대사습놀이, 6월 16일 제49



회 풍납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전주시의 축제가 전주의 문화를 안팎으로 알려 내고,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창성있는 주제의 발굴, 차별화된 세부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학적인 축제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축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축제 평가과정이 합리적 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축제의 평가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축제로 개선 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평가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제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평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자체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축제 평가 과정을 보면 5억이 투입된 풍납제와 1억5천이 투자된 전주대사습놀이 의 경우 평가예산 자체가 전혀 없으며 자체 평가로만 축제 평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축제의 개선을 바라겠습니까? 두번째, 평가를 받아야 할 조직위원회가 평가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축제의 주관 단체가 전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단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평가에 참여한 축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평가를 용역에 맡긴 국제영화제나 약령시제전의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조직위에서 공모하고 심사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를 골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객관성이 없는 평가, 부풀린 허수, 한정된 범위의 평가 등 평가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 주국제영화제의 경우 매년 행사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관람객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관객의 호감도나 태도만을 분석하여 평가할 뿐 영화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영화선정의 적절성이나 독창적인 영화제로서의 정체성 여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풍납제나 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은 객관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관람객수 통계를 근거로 축제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약령시 한방 엑스포의 경우에는

약 18만 명 경제유발 효과는 94억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축제 평가가 향후 축제들의 개선을 위해 잘 활용되고 있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인 22억2천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축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주시가 축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모든 축제는 일정 규모의 평가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하며 평가 단위는 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가 지원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시민의 기대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의 참여관찰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평가 내용을 검증받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상시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매해 축제를 기획할 때 전 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사항, 시행계획을 축제조직위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반영받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축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올해가 지역축제 평가 과학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도 전주시 발전에 각고의 노력하심에 삼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봄은 일년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이 넘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 운송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라북도 물가



대책실무위원회에서 3월 20일부로 850원에서 17.7% 인상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8개 분야 119개 노선 276대, 3194회의 운행 횟수의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 감차운행은 35개 노선 52대 630회 현 운행 횟수의 13.8%가 감차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통약자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해준다고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기 그지없고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확대 유지하기는 커녕 불편하게 해서 이용 고객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120번 민원, 전화 접수 등에 올라온 시민들의 민원은 350여건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몇의 민원을 읽어봤습니다. 울화통이 터 집니다! ~ 전주시장님, 버스비만 올려놓고~, 웃기지도 않는 시내버스 시간, 오늘 버스시간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중학생의 호소를 포함해서 많은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주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요금 인상과 노선개편, 일요일, 공휴일의 13.8%에 달하는 감차 운행 등을 좀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범 운행 등을 해서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는 업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3.8%의 감차운행이 실현되면 과연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투명한 개선 효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직 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은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채불 현황을 보면 회사는 약 5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이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2일 만근으로 따져서 주 45시간에 140여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업계에서와 전주시는 중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일련의 개편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

기적으로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주시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대중교통의 공영화나 준공영화의 추진에 반드시 시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의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게끔 집행부의 다시한번 신중한 관심과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 전주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하천인 전주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천은 전주시의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관촌평야에서 발원해 전주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만경강의 제1지류로서 지금 지방 1급 하천이며 길이는 30km, 유역면적 31.53km²입니다.

전주천정화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19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한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 등으로 인해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4~5급수의 하천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 되어 쉬리, 모래무지, 붕어, 각시붕어 등 11개 종류의 물고기 이외에 다슬기, 반딧불이 유충 등이 서식하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자연형 하천정화 우수 사례로 뽑혔을 뿐 아니라, 한·중·일 7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일본에서 열린 강의 날 대회에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킨 모델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천의 지속적인 하천정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 중심 하천인 무심천, 성남시 중심 하천인 탄천과 비교했을 때 강의 길이는 엇비슷하지만 유역 면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도시열섬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06년 9월에는 매년 전국의 도시를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제5회 강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고, 행사 장소가 전주천이 아닌 전주시청과 전북대 등에서 치러졌다는 점과 행사 내용도 각 지역의 사례 발표와 콘테스트를 통한 격려와 시상으로만 끝난 점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축제로서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천의 날 행사는 전주천변을 따라 미니마라톤, 꽃씨뿌리기, 사진전, 하천청소, 방생, 전주천 그리기대회, 백일장 등 참여와 교육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일본의 강이 날 대회나 호주 브리즈번 River Festival, 미국 의 Haw River Festival "Learning Celebration" 등 외국에서는 민·관이 하나 되어 시민의 축제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사랑 시·도민 실천대회를 민·관이 공동 개최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도민, 민간단체, 기업체, 군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기념행사와 함께 정화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외국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생태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민·관 공동의 실천적인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타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천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의 날 지정을 통해 전주시가 푸른전주,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재화

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중심으로 구조조정되고 공장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연유합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0억원 투자기준으로 볼 때 1990년에는 64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나, 2001년에는 25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수준으로 급락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절실함에도 기본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90만명의 공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시기에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추세인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우리 지역의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조례 제정 및 사회적기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과 더불어 취업난이 해결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온 자활후견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장애인공동작업장 등 관련기관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경우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청소용역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부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생각합니다. 끝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어느 사회적 기업의 말로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살맛나는 행복한 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과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도 63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봄과 여름, 가을, 주말을 맞아 복잡한 극장 대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하늘 아래 시원한 전주천과 함께 영화와 연극을 즐기는 것을 제안할까 합니다. 전주시의 야외극장은 총 3개소가 있으며 3개소에는 삼천둔치, 서신근린공원, 덕진공원으로 완산구 2개소, 덕진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야외극장 상설무대는 시민들에게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에 있어 완산구와 덕진구 형평성 차원과 전주시의 중심지이자 여름철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중의 하나인 덕진구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둔치에 야외극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여름 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 영화와 연극을 선사한다면 시민들은 새생명을 얻은 것처럼 삶의 활력을 얻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 활기차게 전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 둔치 야외극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주천변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천부지에 야외극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와 시민들의 안전성과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변은 여름 장마철에 취약하여 갑작스런 폭우시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 및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진북동 전주천변에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삼천둔치 야외극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야외극장 시설 설치부터 프로그램 편성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깊이 검토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또한 영화와 연극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영화, 연극 관람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병행설치하여야 하며 여름철 불철개인 모기로부터 해방 될 수 있도록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 곳에 머물러 자기의 현재 이득만을 생각하고 정제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새롭게 깨끗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전주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본 의원이 살피본 전주시 군경묘지 부대시설물들은 길게는 54년이 넘는 시설물들이 너무 오래된 탓에 부서지고 파손돼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스스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의 자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전주시는 군경묘지 정비사업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동 낙수정 군경묘지 조성 현안을 살펴보면 1950년 6.25 이후 1953년 3월에 조성되었었다. 군경묘지 전체 평수는 3,000평이며 조성 묘지는 묘지의 평수는 1,050평이고 전체 묘지기수는 483기수이며, 군인기수 313기고 경찰기수는 86기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 기수는 84기가 남아 있으며 부대시설물들은 대략 기념식을 하는 제각과 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은 하나같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홍물로 전락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식 행사장 제각지붕 단청 색상이 거의다 퇴색되어 지워져 버렸고 제각 납쪽 지붕기와가 파손되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각각 흩어져 있으며 현화하는 제단 바닥 주변은 크고 작은 실금들 마저 적지않은 문제가 생겨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다음 양쪽묘지 중심 계단 난간들이 금이 가고 파손되어 있으며 묘지주변 시멘트 경계석 또한 부

식되고 조잡해서 차마 유족이나 방문객들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음 묘지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기초석 웅벽들은 낡은 잡석돌로 설치되어 있어 균형과 질서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전주천에 설치한 자연석보다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주시 군경묘지 관리하는 능력 부재도 있거니와 임실, 울산, 심지어는 인근에 익산시까지도 재정비사업을 이미 다 끝마쳤는데도 유일하게 전주시가 단 한번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이행치 않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성도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군경묘지 관리부재와 비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리도 없습니다. 2006년도 8월 14일 언론사 톱뉴스 문화일보를 참고해 보면 지난 3월 9일 청소년개발원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 나라의 청소년 대상으로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41.1%로 가장 높았고 중국과 한국은 14.4%와 10.2%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광복 61주년 시점에서 한·중·일 3개국 청소년 의식 조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전쟁시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도피형 응답도 3개국 중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식어가는 나라 사랑의 기전으로 보기에다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 군경묘지에는 조국과 민족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과 치안을 확립하다가 순국한 경찰관들이 묻혀있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방치하고 외면하다 보면 어느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이며 유족들의 마음은 어찌할 것인 지 한 번쯤 되새겨 보면 대면 가능합니다. 임실과 같이 승격된 국립묘지 시설이 아닐지언정 다가오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유족들이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손 대대로 정신적 고향인 전주시 군경묘지를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조성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생한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기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제243회 임시회('07.5.15 ~ '07.5.17)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황방산 아래 서곡로에 따른 보행로 미확보와 시내버스 종점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곡지역은 현대, 청솔, 두산, 대림, 엘지, 주공아파트 등과 교회 8곳, 학교 4곳 등으로 12,000여명의 지역민이 거주하고 있는 평온한 곳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전주의 관문인 서곡로가 자연스럽게 개통되었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에게는 출, 퇴근의 교통 편리성은 제공하였지만, 정작 서곡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에는 적극 동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몇 년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 부서의 근무 태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방산 서곡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가장 가까운 접근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노출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도 인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본건과 관련된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으로 본 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하며 그로인해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곡로 도로내 시내버스 종점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 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는 순간을 모면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와 비좁은 도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종점 이전을 아직까지 대안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 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실천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방산 서곡로 보행로 확보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방산을 오르는 산행객과 교회, 스포츠센터, 원서곡 주민은 시속 70~80km 속도에 인도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뒤 시내버스 종점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상시 정차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좁은 도로가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통해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공아파트 뒤 공터가 종점 자리에 안성맞춤임을 본 의원이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관련부서를 지칭해서 본 의원도 아쉬움은 있지만 긍정적 사고와



신속한 실천만이 위협에 놓여있는 서곡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관련부서는 긍정적 사고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얼마전 한 시각장애인 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맘 놓고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두 다리 모두 상처가 가득하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인 즉 인도위의 고약한 설치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교통약자에게 인도위의 지뢰로 통하는 이 고약한 말뚝의 무분별한 설치에 실소할 수밖에 없는 설움과 소외감을 혼자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모차를 몰고 가는 어머니, 임산부,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었더라면, 것처럼 불합리하게 제작, 설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블라드 설치 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블라드의 해체 및 개선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1,500여개, 덕진구 1,000여개 등 총 2,500여개의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 참여의 편의 증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말뚝은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 함은 첫째, 그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센티미터에서 100센티미터, 지름은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에도 블라드라는 단순 사전적 의미만을 생각한 듯 대형선박을 묶어놓아도 좋을 법한 것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그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가 되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5미터라 함은 무의미한 공간 개념이 아닌 유모차나 휠체어의 최소 통행공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모차나 휠

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주력하여도 모자랄 판에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등으로 설치된 곳이 많으며, 이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가 이동 중에 충돌하여 강한 충격과 함께 넘어지는 등의 큰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그 말뚝의 30센티미터 전면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장애물이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나, 점형블록은 고사하고 세상을 향한 유일한 통로인 유도블록 위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이동편의증진법은 시행부처의 탁상공론과 이해 부족, 설치 사업자의 무지로 인해 악법 아닌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전주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말뚝 중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수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뚝의 설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오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발전과 올바른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추어 저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이루고자 전주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에 발이 묶여 전염병 예방 확대사업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전염병 예방 병의원 집중사업비 4억3천만원에 대해 6월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

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직자에게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예방접종병의원 확대사업이 전주시 자체 사업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 예산 4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 0세부터 6세까지 3종을 우선 실시키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둘째로 2005년도 군포시와 대구시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군포시의 경우 시민들의 98.1%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 향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도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59%인 예방접종률도 1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접근시간을 감소시킴으로서 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같은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의 기 확보된 예산을 기본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영유아의 인구 현황은 2007년 3월 31일 기준 50,419명이며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 사이의 인구는 5천 4백명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 5천 4백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국고보조내 시 단가를 적용할시 5억6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소요예산은 세워진 예산에 1억3천만원을 추가하면 가능한 액수이고,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DPT, MMR, 수두, 일본 뇌염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7천7백만원이 적게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접종 서비스 확대사업은 전주시의 저출산 구조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정이 선회되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를 건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사업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사업에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2006년 8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 1분기에 1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 관리 및 유치된 기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력수급 문제가 우리 지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왜 인력수급이 안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필요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거나 이직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3D업종의 경우 3년 기한의 외국인 연수생을 주로 고용하고 있으나, 업무에 익숙해질때쯤 되면 기한 만료로 인해 귀국할 경우 그만큼 숙련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인력시장은 일할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을 찾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숙련공이 숙련공이 되기까지의 반복되는 기회비용 증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원인은 현재의 단순인력 공급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인력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맞춤형



형 인력양성 사업을 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영진 전문대, 영남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의 훈련생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실습교육을 마치고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미취업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위한 콜센터 여성인력 양성교육을 정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인력공급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도내 대학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인력시장의 실업인구를 데이터화하고 교육을 한 후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단순한 인력공급 시스템이 아닌 분석된 데이터를 통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직업의식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중소기업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보증제란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을 전주시가 엄선하여 보증하는 것으로서,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갖게 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인력시장의 불균형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충기를 난 사해서 32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영문을 모른채 죽임을 당했던 희대의 집단살인 사건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공식적인 애도와 슬픔을 표하는 것은 먼저 전도양양한 꽃같은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둘째, 사건당사자인 조승희씨가 비록 8세때 부모를 따

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지만,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원죄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본 의원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즉 중심과 다수에 대한 소수자 Minority 정책에 대해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들 사이에 애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여자이를 같이 보이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만 뻥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신 송경태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아이들 사이에 이런 유행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서 차별을 정당화해 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혼혈아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만연된 사회의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의식의 저변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세력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그들의 논리속에 포섭하며, 포섭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수자를 만들어 내고,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그들 통치기반을 강화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Minority의 분노를 희대의 집단 살인사건으로 분출해버린 조승희씨 사건을 상기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여성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말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는 664명으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계가 403명,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기타 35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은 고작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호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한 한국어 상설교육장 운영과 사회적응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전부인 형태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고 또 그들 가정의 자녀들이 혼혈인으로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여성 및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떠한지,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정도, 2세들의 학습능력,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정도, 이들

가정의 가정폭력,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일들을 실행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창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원화된 전담인력과 창구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코자하는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과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신매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부 결혼 소개업소들을 정비해서 이주여성들의 입국준비와 결혼과정, 정착과정 등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걸린 베트남여성(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백만원이라는 프랑카드를 보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낮이 뜨겁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전주시의 정책적 배려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한 걸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시는 지난 5월 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 가입을 전국 자치단체 중 18번째로 선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주체인 모든 전주 시민들의 생활과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조성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 모두가 자축하고 환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일시적,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 실질적,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발생 원인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연환경주 오염인 생활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우리사회는 다양화, 다각화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 양도 엄청

니다. 전주시의 경우 이 쓰레기의 배출량이 2006년도 1일 기준 평균 545톤으로 1년에 약 199,217톤 정도이며, 그간 그 처리비용도 매년 약 21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 1천45억1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산구 상림동에 1일 생활쓰레기 40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량화 가능성 배제 및 완전, 완벽한 재활용시스템 구축 미비와 완전한 분리 배출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규격봉투에 여러 물질들이 혼합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전주시측에서 기술적, 기계적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 폐해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태워 버리면 그만이지”라는 편견의 주의적 발상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어 감량화 의식화 및 생활화가 저하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들이 현재와 같이 완전한 분류와 분리가 안된 채 섞여서 혼합배출이 되는 실정에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는 엄청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대충 넘겨버리는 편견주의적 의식으로 소각처리를 선호함으로써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최초로 쓰레기 감량화를 감안치 않고 소각장 처리용량이 과다 책정이 되었고 소각 자체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앞으로 과부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를 위해 발생 원인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중간 선별과정 도입을 통한 원활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아나바다운동의 활성화로 중고시장 확산, 자원재생산 및 추출을 위한 재생산업 확대만이 최선의 대책으로 위의 전과정에 전주 시민 모두의 의식화된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 지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쓰레기 문제는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일부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모든 주민이 시민들의 의식화, 생활화되기까지 위의 전과정에 관한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쓰레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동참하여 전담기구 구성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특정지역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시범 실시할 것을 간절한 호소와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덕진동 새마을 부녀회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양용모 의원

계절의 여왕 5월은 신록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5월과 같은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7일 준공 개관한 전주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배드민턴경기장은 50억 여원의 시비 사업비를 들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해서 덕진동 체련공원에 건설하였습니다. 부지 2,551평에 건축면적 1,184평, 층고 13.5m의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에 16면의 코트를 갖추고 있으며 1,036석의 관중석, 샤워장, 사무실, 휴게실, 관리실 등 참으로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개관된 것입니다.

관리 직원은 현재 행정직 1인, 기능직 2인을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의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개관 이래 2007년 봄철리그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열렸으며 주말에는 클럽대항 리그전이 열리고 일반 시민은 지금까지 한달여 평균을 쳐보니까 22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배드민턴 경기장은 현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인력 부족, 예산부족,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경기장을 지은 것은 대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을 최선으로 봉사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안되어 샤워장을 이용할 수가 없고 등산객이 샤워를 하러 오기 때문에 샤워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운영은 지난 1월 8일에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조를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이용료는 2시간 이용에 1000원, 입장료는 월 회원은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료는 매우 적합한 이용료로서 지금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회비에 합당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중한 세금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용 및 전주가 낳은 걸출한 배드민턴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 계승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익은 그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하루 평균 226명, 230명 정도를 잡아야 월 6,800명, 그러니까 한달이면 월 6~7백만원의 수익이 올라가는걸로 추정이 되는 데이 정도의 수익 창출이라면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배드민턴 경기장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지금 지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간대별 클럽제 운영 등의 운영시간과 이용자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개선을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용요금의 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시민의 편의시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은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월 드립 경기장이나 화산체육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관계자께서는 책임있는 마음으로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배드민턴장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샤워장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오픈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44회 임시회('07.6.15 ~ '07.6.25)

●●●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험콘텐츠를 확충하고, 한옥마을 안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판소리 체험관을 비롯한 5대 체험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옥마을내에 있는 문화시

설들과 앞으로 지어질 문화 시설들의 기능을 비교해보면 중복기능의 가능성이 높고, 변별점을 찾기 어려운 시설들의 난립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생활체험관 옆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판소리체험관의 경우 올 1월,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으로만 보고되었습니다.

즉 2007 년 1월 당초 계획에는 지상 주차장으로만 운영되는 부지아래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판소리체험관 건립계획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발생을 예상케 하는 시설의 건립을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계획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나 2006년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한옥생활체험관의 사무실 및 기념품 판매소 개념으로 지상 주차장의 공간과 조경을 살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이것을 빠른 추진력으로 보아야 합니까? 졸속행정으로 보아야 합니까? 또 시가 다시 제출한 판소리체험관 설립 계획에 따르면 현재도 50대 주차가 가능한 지상주차장에 30억을 들여서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최대 14대가 늘어난 64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소리 체험관의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상 50대와 지하 1,2층 50대, 총 100대의 주차장 계획을 세운 전주시가 현재보다 겨우 14대가 늘어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30억을 들이겠다면 어떤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탄약창을 “빠이올 연극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원형극장으로 전환시킨 브라질의 꾸리찌바나 철거하던 방직공장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예술촌”을 만든 일본의 가나자와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앞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시설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기능을 강화해 낼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오로지 신축만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판소리 체험관뿐 아니라 5대 체험관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체험관 계획의 공통적인 문제는 첫 번째, 현재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한

옥마을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비슷한 기능의 시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 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투자하여 기존 시설이나 문화자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비를 늘려서 프로그램이 충실히 구현되게 하는 등 기존 시설의 활용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번째, 그동안 발표된 전통문화도시계획이나 무형문화유산전당계획, 한문화진흥원계획, 한지산업융합지원센터계획 등을 보면 앞으로도 수많은 시설이나 체험관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5대 체험관을 다시 짓는다면 전주시는 향후 문화시설들의 건립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느라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유바리 영화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바리시가 지나치게 관광자원의 개발에 나섰다가 도시파산을 선언했고 20만 인구가 1만2천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 건립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기존의 시설과 계획된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는게 문화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문화시설로만 채워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민간위탁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도 못하면서, 또 문화활동가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도시문화를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규 시설을 건립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볼거리는 결코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는 만들어내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그림속에서 전주시민 전체가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여러분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조용하면서 따뜻한 시정을 펼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에게도 위민행정이 시민속에서 체감이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인 덕삼종합복지관이 주민과 시민들의 복지공간으로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하며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동료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의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고 법인설립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운영비가 잠정 중단되면서 5개월째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많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기독교원, 덕삼이사회, 해당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매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인해산 등 법적 해산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부지소유권 확보없이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전북도와 전주시, 도덕적 해이를 면치 못하는 기독교 법인학원 다 드러났습니다. 향후 법적 청산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사태의 장기화는 뻔할 것이고,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복지회관인 1차 원인 제공 기관의 사과 한 마디 없이 문을 닫는다면 이용시설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 일 것입니다. “시의원들, 시장은 무엇하냐고?” 보이지 않는 곳의 볼멘소리는 더욱 더 웅성웅성한 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대로 해야겠지만 운영은 시민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도비가 투자되었는데 개관한지 2년만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 아닙니까.

북부권 복지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개관된 덕진노인복지회관은 회원 모집 10일만에 2,800여명이 접수했는데 5대1의 경쟁률속에서 592명이 선정되었는데 아직도 선정되지 않은 65세 어르신들 2,200여명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청소년, 장애인, 노인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이용시설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의 정상화가 최선의 대책입니다. 아웃 리치(Outreach)제도를 도입하여 덕삼종합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웃 리치 프로그램이란 캠프 거점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에 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 시설들이 상호 인적네트워크를 하여 덕삼종합사회복지관에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운영을 정상 화하는 것입니다. 인후동에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은 덕진구 산하 경노동당을 찾아다니면서 요가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조기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사용만 허용된다면 운영의 정상화는 시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 63만 시민 여러분과 북부권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사과드리며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황방산 주변 썸지공원과 삼천둔치, 비전대학 입구 등 잡초제거와 가로등 미설치, 제조작업 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 관련부서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수 가 없었습니다. 황방산 주변 썸지공원은 서곡주민에게 그리고 삼천은 효자동 전 지역민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삼천둔치의 가로등 미설치의 경우는 상임위원회때 담당 집행부에게 이미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천동 수산시장쪽 삼천둔치의 경우는 가로등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여름밤 산책 나온 여성들로부터 기괴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청사 주변, 즉 서곡에서 도청방면 역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산책코스가 매우 불안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천명씩 찾고 있는 황방산 일대 썸지공원과 삼천둔치 일대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해달라고 주문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주시는 열섬화로 인해서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3·4동 주민을 비롯 많은 전주시민들에게는 삼천과 비전대학 앞 산책로는 그로인해 인기 좋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규칙적 방역 활동의 부재로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천둔치 제조작업 역시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동 한강아파트 앞과 수산시장과 주공3단지 사이 징검다리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삼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사업 일환으로 효자동 포스코, 수목도 아파트 앞 징검다리 설치로 전주시민과 효자동 주민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의 징검다리 두 곳 설치하는 자연형 하천경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삼천 천변 회전로까지 얻을 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편의까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때에 맞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 이러한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김철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내일부터 우리 전주시에서 제49회 단오예술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오 예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난장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덕진연못을 가로질러 설치된 단오 다리는 급조되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의원총회를 갖고 자 이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시 노점상 연합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전주시 단오제에 난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단오제는 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답을 듣고 민원인에게 난장이 없으니 그렇게 양지해달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밤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이미 130여개의 난장 부스가 설치되어있고 일부 화물차를 동원해서 난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서 돈을 받고 분양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매일 전주 시민에게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일에 거듭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전에는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제 아무리 더워도, 제 아무리 많은 눈이나 비가 내려도, 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전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의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완전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해 진북동, 완산동, 덕진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에 소재한 일부 산사태와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악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낙뢰 등 이제껏 우리 전주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는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전주 지역 일대의 침수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일부 지역이 폭우에 산사태와 저지대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경험으로 본다면 재난과 재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시의 재난 재해 관리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에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소식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으로부터 전주시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가능한 재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목표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전자문관리단이 전주시와 좋은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면 전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재난 관리는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재난이란 수시로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때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수 십 혹은 수 백명, 심지어는 수 천 명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언제 있을 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평소 재난 대비를 잘 해두었더라면 스나미 하나가 수 십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전주시의 정책을 그리고 지구 온난화, 기후 이변을 불러올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에는 재난이 있더라도 미온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 여름철 장마에 재난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 타결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4,200 농가 1만5천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의회에서는 굴욕적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FTA 협상은 안타깝게도 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에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FTA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통상환경은 현재 발효 중인 FTA 지역협정이 186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전주시 농업의 단순 피해액이 2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협상 발효로 시장이 개방되면 그 누적 피해액은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업정책지원팀, 농업경쟁력강화팀, 기업지원팀으로 3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T/F팀은 우수

축산물유통센터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와 도에 12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 중에 있고, 시 예산도 12억원을 투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주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대응 전략이 농업 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여, FTA를 타개할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농민단체, 농업인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촌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농업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및 생산, 유통부문 혁신을 꾀해야 합니다. 둘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고급브랜드 개발입니다. 생산설비 현대화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전주시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 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면 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물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화, 대형화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어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특화작물로 품목을 전환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수출전략의 수립입니다. 농림부의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정책과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애용 운동이 같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하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와 농업인, 전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FTA를 극복하자라는 호소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함께 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정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의 천년 전주의 옛 명성을 높여 고향에 자부심을 가져다 드리고 싶은 소망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질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사랑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단속이란 단어보다 이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만 근절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행정의 선행이 사랑하는 63만 시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식 CCTV 장착 불법주·정차 차량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또다시 고정식 카메라로 추가 설치하였다니 어떤 이유인지, 행정의 편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주민들의 영업상 피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있을 것이 당연한데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광주시, 파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단속방법의 효과성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동식 CCTV 장착을 불법주·정차 차량에 도입하여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참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행정에서 심도있게 전수조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사 통계는 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량의 주택가 및 도로변 밤샘주차 문제로 시민들에게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화물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량들은 심야 시간에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하지만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전주시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 자동차량들의 차고지 주차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법과 질서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것이 바로 전주시의 무한한 자산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 제일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정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행복과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삼천2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완충녹지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천2동 택지개발이 1990년경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삼천2동의 삶의 터전인 삼천택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전로인 평화동 사거리에서 두일하나아파트 앞 사거리간 북측면에 설치된 완충녹지대로 인하여 인근 건물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재산권 행사 및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삼천2동의 완충녹지대들은 폭 10m정도, 길이 1km정도로 삼천2동내에서 영업활동이 가장 활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상업지역이나 완충녹지대라는 이유로 2중 일반주거지역인 근린생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업지역이 확실함에도 상업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 상태를 보면 일부 구간은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수목의 중간이 잘려나가 흉물스럽고 또한 수벽이 있어 외부에서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한 보완으로 완충녹지대 내에 사람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나무가



없는 곳은 나무를 심어, 산책로 주변에 꽃을 심어 가꾸어 간다면 삼천천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민 및 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여름철 땀별더위에 인도를 이용하게 하므로써 겪는 불편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가꾸자는 전주시 정책에도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본 도로는 폭 35m나 되는 도로로 여름철 도로에서 뿜어나오는 높은 열기를 주변부보다 기온이 높은 도시의 대기 덩어리 열섬효과를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등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충녹지대인 녹지공간을 훼손하거나 줄여서는 안되며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수종 선택의 적절성, 여름철 열섬으로 인한 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충 녹지대라 꼭 개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구단위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대인 삼천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언제 했으며, 차후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본 의원이 제안한 삼천2동 완충 녹지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밖으로 표현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따라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도 없는 표현이나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도 속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때가 있고 본인이 정말 모르는 중에 생각도 못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명보다 차라리 해결하는데 대안을 찾는 모습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13일에서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확충을 위한 시설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성가족부 국비 예산 확정과 2007년도 보육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주시 관내 보육시설 중 2007년 도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신청 공고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로 신축한 보육시설이라는 별도 조건을 내세워 문제가 된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성심껏 모셔야 하는 시민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504개의 보육시설과 18개의 영아전담 시설이 있는데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는 504개의 시설은 전주시가 내세운 별도의 조건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심의 한 번 거치지 않으면서 별도의 조건을 내세워 특정어린이집 한 개의 시설이 신청하게 되었고 그곳이 결정되면서 특혜 시비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논쟁을 해야 했고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본 의원은 아리송한 행정의 무책임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접하면서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덕삼사회복지관'을 생각했지요. 상반기 동안 '덕삼사회복지관' 문제를 놓고 언론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기전 기독교원을 강하게 우리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한쪽만의 문제인가요? 송천동 주민들의 활력소였던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공립시설이라면 적어도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관계자는 더 잘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동과 노인까지 많은 복지정책이 신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또다시 제2의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즉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께서는 보다 투명하고 심도있는 선정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자는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명확한 답변을 요하고 다시한 번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올 여름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장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전주시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본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시정

에 바쁘시지만 장마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검하시어 인제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에게 삼가 송구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송천동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하수 관거사업 공사에 있어서 시민 불편사항 민원이 그렇게 접수되었는데도 시공사에 누차 시정을 촉구하였습시다라는 단 하나도 시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부족함이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천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가칭 아랫물길이라는 희망사와 2006년 3월 9일 실시 협약되었습니다. 우선 시공공사는 2006년 4월 25일에 착공되고 본 공사는 2007년 1월 24일에 착공, 49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1년 5월에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우선시공분 덕진 처리구역인 송천동 지역 12.4km는 금년 1월 24일에 마치게 전주시에 공사 착공계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천동 지역 공사는 현재도 길을 막고 진행 중에 있으며 거리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 사업자는 아랫물길 감리회사,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주무관청인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 시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생업에 지장이 있든 말든 공사로 인해서 보행인이 발목을 빼어 병원에 가든 말든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면 그만입니다. 금년 1월 24일 스스로 시민과 약속한 준공기간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내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연기한다 고 플랫폼까지 써서 5월 30일까지 마친다고 하였으면 마쳐야 되는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어겨서 이제는 8월말까지 마친다고 마음대로 연장해놓고 전주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랑 도면 하나 들고다니면서 8월 30일까지 하겠습니까 하면 그만이나 이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분 공사를 끝내고 마지막 도로포장을 스스로 그분 스스로 말씀하고 다녔다시피 6미터 도로는 전면 포장, 12미터 도로는 반차선 포장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일부만 포장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등 미는등 하여 송천동 지역 도로를 전면적으로 누더기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절대로 그렇게는 안됩니다. 전주시

민 그리고 송천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 하면서 그리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시행사는 우선 시공분에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 적용이 어렵다는 법 조항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면 전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수관거 민투 사업이 이제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덕진 2공구를 위시하여 중앙, 아중, 화산지역 등 8개 지역 이 4년에 걸쳐 송천지역같이 진행된다면 전주시민 전체가 크나큰 불편으로 곤욕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천금같은 것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공기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송천동 전 지역의 12.4km 도로포장을 전면적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45회 정례회('07.7.10 ~ '07.7.24)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마가 끝나면 찜통 전주를 실감하게 되고 결국 집행부에서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실행없이 올 여름철을 맞이하게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4일 집행부에게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한바도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난제인 치산치수 정책부채를 열섬저감 효과과 바람길 확보에 관하여 본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민선 4기 집행부 수장인 시장께서 다행스럽게도 치산치수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중앙시장 실개천 확보라지 분수대와 명품벽천 설치등은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시장의 정책을 더디게 따라가고 있음에도 지적을 하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 열섬저감 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미진도 그렇고 벽천과 분수대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성 부재로 결국은 고통스러운 불벌더위가 지난 후에 사업들이 완공될 것으로 보여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섬저감 효과및 바람길 확보는 관념이 아



년 피부로 다가오는 실질적 사업으로 완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열섬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또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류지는 평화동에 학소제, 만내제, 지시제, 장천제, 작지제를 비롯 완산구에 25곳, 덕진구에 28곳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의 물을 활용하는 즉, 열섬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노거수는 완산구에 20곳, 덕진구에 19곳이 있습니다. 노거수 그늘까지도 열섬저감효과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전주는 몇년전부터 도시화 과정에서 녹지공간과 생태축 파괴로 점토 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주시민은 점토더위를 겪어야만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이 실생활에 반영되는 실사구시의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녹지율이 10%이 늘어날때마다 기온은 0.9도씩 낮아지고 또한 건물의 2.4배의 녹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 환경 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소류지관리와 노거수 그늘확보를 제시하면서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 측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집 행부에 강력히 제안하여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김창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일찌감치 찾아온 삼복더위에 건강유치하시고 각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시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주시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 혁신부문 수상을 63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저는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제 8대 전주시의회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순간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내일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시 의원에 당선되어 제일 먼저 접수한 지역 민원은 인후2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지역 주민들과 시공 회사간에 심각한 마찰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

거 및 우수관거를 개량하여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이 있는데 반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와 안내 설명회 등이 부족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에게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켜 지역 여론 조성에 실패한 무능한 행정이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를 실시하면서 지질조사나 지하 매설물 조사 등 충분한 선행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몇 차례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전주 시청과 감리단, 시공회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노력해온 결과 현재 6세대는 피해보상에 전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가 제일 심각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7-9번지 이상윤씨 건물만 남아있는데 이 집에서는 비가 오면 불안하여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정신적 고통까지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보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관거 정비를 L=7.9km 하는데 비해 우수관거는 L=0.5km 밖에 하지 않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공사효과가 미미하고 아쉬운 사업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 최대발생 사업입니다.

소음, 먼지, 통행제한, 도로파손, 등등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를 할 때 동시에 노후불량 하수관거나 우수관거를 개량해야지 언제 다시 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름철 악취는 물론 모기 서식지인 종전의 기존 콘크리트 하수관 뚜껑을 걷어내 버리고 맨홀과 콘크리트 원형관으로 교체해 버린다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전주시 행정에 박수를 쳐 줄 것입니다. 서양에서 “쇠가 달구어 졌을 때 내리쳐라”와 우리나라 속담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들이 있듯이 적기에 시간을 맞추어 잘 하라는 훌륭한 말들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한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주민정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 행정을 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도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일정이 잡혔으면 하루속히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주시 발전의 전주시 공무원들의 양 어깨에 내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 방청석에 와계신 훌륭한 송천동 지역 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무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삼가 기원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정치란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그대가 솔선해서 바로잡는다면 누가 감히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귀중한 말입니다. 지금 송천동에는 시정에 대한 청송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초나라 노랫소리만 가득 합니다.

송천동을 통과하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주민의 숙원을 외면한 채 지하화는 커녕 단 한 건의 민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사단 이전 사업 또한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송천동 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걱정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전주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대부분의 송천주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전주시 의원으로서 2006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잘못된 협약으로 인한 운영문제를 지적하였고 2006년 정례회의 시 시장 질문을 통하여 운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서면질문을 통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만약 현재의 환경사업소에 건설된다면 송천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제는 가슴을 툭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다. 진정 무엇이 전주시의 발전과 송천동주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여야 하지 않습니다. 취임 하시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주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는지요. 아니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 주민적인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겠습니까.

송천주민은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향기라고 아무리 우겨도 송천동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이 거기 있으니 슬러지 처리 시설은 그 옆에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분명 송천동 주민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송천동 주민의 동의 없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장 건설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송천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강력하게 막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만약 송천동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넘비현상이라고 비난한다면 본의원은 결코 그 비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전주시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 북서지역과 완주 이서지역에 307만평의 규모로 계획 인구 2~3만의 도시로 건설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새로운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슬러지 소각장을 전주·완주 광역으로 건설한다면 매우 합당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전주·완주 미래를 위하여 즉 전주·완주가 통합하는 준광역시의 기틀을 위하여도 좋고, 민원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안 되어 좋고, 건설비용의 절감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완주 광역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 전주 시장이었으니 송천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어 가는 정책에 대하여 바로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과 김완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245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건강하게 정례회를 마칠수 있도록 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지를 앞세운 한 스타일 사업의 좋은 평가로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을 하게 된 전주시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한지산업의 기반육성을 위하여 한지를 소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차 추경



에 의회 회의록 한지제작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며, 각종 기록물, 행사 홍보물, 보존문서, 위촉장, 상장, 졸업장, 명함 등에 전주한지를 사용하였을 때 제작비용의 일부를 보전·지원하는 한지산업 육성기금을 신설할 것을 하여 제안 드리면서 기록문화의 본향이었던 전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주시민의 경쟁력 있는 한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전주의 인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사실에 기반하여 전주한지를 이용하여 조선왕조실록 복본을 제작·전시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전주의 정신을 되살리고 동시에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되살린 조선왕조실록은 자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소장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킴으로 전통문화의 하나인 한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민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원과 도, 그리고 전주시가 약 3개년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복본화 했을때 현재 경기전에 태조어진과 관련 유물이 있으며 경기전 본전 동편에는 지난 1991년에 복원한 전주사고가 존재이유였던 왕조실록을 몸 안에 품지 못한 채 외로이 서있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까지 경기전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조선태조를 비롯한 조선 왕실문화를 주 테마로 하는 전시와 체험관광사업을 추진중 입니다. 이러한 경기전 유물전시관과 전주사고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은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유리속의 문화재를 눈으로만 스쳐가는 것이 아닌 20부 이상 제작할 계획인 조선왕조실록 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나 전주관련 기록 등 전시된 실록을 직접 만져보고, 넘겨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온몸으로 느껴서 추억이 될만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는 후백제부터 조선조까지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천년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고 한韓스타일의 중심도시로서 기록과 출판 등 한지역사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한지생산업체와, 한지공예, 서화인 등 한지관련 인프라가 풍부함은 물론이고 전주시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전주 인근에 심어온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재배사업이 3년차로서 마침내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왕조실록의 복본화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지산업 상품 개발로써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산업형 사업으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때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전주의 미래 설계에 전념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전주시와 송천 주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 시설은 전주시에서 2003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4년 12월 주민의 반대로 중지한 상태에서 2년간을 방치하다가 최근에 와서 재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1990년부터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냄새 없는 시설을 설치한다하여 주민들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동의를 했는데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전주시 재정상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명백히 주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도처리 시설을 하여 냄새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송천동 주민들은 시설이 거기 있으니 송천동을 떠나지 않는 이상 냄새를 맡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하수 슬러지 소각 처리 시설을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여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곳이 적정지라고 말하지만 비용절감을 하려면 이곳보다 더 적정지가 있다는 사실은 업무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 시설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행적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의 진행상황이나 그곳에 투자해온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더 많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백지화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 공청회,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주장대로 하수 슬러지 소각 처리가 무공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소각 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을 보장한다면 상호 윈(win)-윈(win)하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4기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을 통해 주민의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시행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주민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행정은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게 '인식의 전환'과 '방법의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와 심사숙고를 하셔서 주민 동의 하에 이뤄지는 선례를 남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의 근대문화 유산 지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공간으로 남아있는 생활유적이 원형 상실이나 멸실가능성을 보존유지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근대적 문화유산의 지킴을 위해서입니다. 근대유산의 범주는 건축물로 주택, 등대, 망루, 학교 등이 있으며 산업구조물로는 교량, 댐, 굴뚝, 담장들도 있고 생활문화 유산으로는 이발소나 목욕탕, 수퍼, 방앗간, 염정 등 다양합니다. 전주시 한옥마을과 구도심에는 근대문화 유산 지정 미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위기에 원형상의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철거 또는 멸실가능성, 그리고 원형상실에 우려가 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38년도 전주시 가로정비 계획 가로경관을 보여주는 성심여고앞 일방통행로에 있는 삼원당 한약방과 전당포 건물은 기와 수선이 강판 기와로 바뀌면서 기품있는 한옥기와의 멋은 사라지고 짙은 연색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둘째, 최명희 문학관 옆 풍남동 3가 67-5 백양 나염공장의 굴뚝과 부속건물은 철거 위기에 있습니다. BYC최초의 공장 굴뚝은 안전상의 이유로

헐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임실 오수에 가면 오수 지서앞에 BYC굴뚝보다도 더 높은 망루가 있는데 그것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굴뚝은 1938년 한은물산 염색공장 굴뚝은 한국 리트산업, 곧 섬유산업의 원조 굴뚝입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 초창기가 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료적 증거입니다. 문화제적 안목으로 지켜졌으면 하고 호소드립니다. 대구시에서도 잃어버린 흔적과 되찾은 시간을 쫓아서 삼성상회에 터를 기념지화하고 있습니다. 1938년 삼성상회에서 시작되어 현재 삼성그룹의 모체로 근대경제의 발상지로 기념비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5월 사이 월드컵 경기를 치르다면서 공예품 전시관을 신축하면서 문화제적 가치의 식건부족인지 공간상의 문제인지 중요한 생활문화 유산을 우리는 철거하고 흔적을 싹쓸이했습니다.

예를들어 전주시 교동 65-5(3,254m²)의 부지는 원래 전통 양조장으로 1934년도에 지어진 5일 주장입니다. 한옥마을의 근대문화 유산이 하나 또 사라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공간을 만든다면서 문화의 원형을 싹쓸이했습니다. 또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되었습니다. 그 술박물관 전통 양조장에 현재의 술 박물관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는 술 박물관으로써 가치가 소중했을텐데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 전당포, 삼원당 한약방, 일제당시에 관사학인당, 풍남초등학교 강당, 전동성당 사제관, 조선금융조합(현 선각사), 현 춘추당, 자모회관, 성심유치원은 근대문화 생활에서 지정 미지정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전라북도 조사보고서 근대문화 유산 목록화 전주시 현황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추정예산에서 확보한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 조사용역은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일침을 놓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너무나 도시계획, 물리적 측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항이 중요합니다. 근대문화 유산에 건축학적 주거학적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지 도시공학적 접근으로 용역이 발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삶의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 텔링의 문화 콘텐츠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 텔링이 건축학적 주관적 관점에서 용역사업의 무게가 중심이동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습한 장마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손해가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관리에도 각자 지혜를 모아 건강한 여름 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차게 전주지역 경제 살리기 배가운동에 진두지휘 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함께 보내면서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자기계발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바라는 내용도 아니고 도정에 바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 이 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끼칠 심각한 재정운용의 난에 대해 호소하고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인 분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점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008. 1. 1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70세 이상부터 지급하고 동년 7. 1부터는 65세 노인분들의 60%에게 월 89,000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인 데 기초노령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의 비용부담을 해당 지자체의 노인 인구비율과 재정 자립도에 따라 40~9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토록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책은 내부적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비율은 시·도 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는 국비 70% 지방비 30%에 해당되며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3만 3천여명의 노인분들의 기초노령 연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52억 4천여만원이며 지방비는 105억 7천여만원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50:50%로 부담할 경우 우리시는 52억 8천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예산들은 지방비 중에 도와 시비 비율은 50:50 또는 40:60 정도로 유지해 왔으나 시·군·구간의 부담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지자체간에 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떠넘기기식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간의 싸움을 시키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년 시작할 당시는 시 재정부담이 53억 정도로 출발하겠지만 2008년까지 연금가입자 평균소득 10%로 올려주는 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방비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너무나 안이하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와 전국의 지자체간의 불협화음과 불신들이 재정압박과 함께 비례상승 곡선일 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33.7%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수백 가지의 현안사업들이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커다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현행 국비 지원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노인문제의 해결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9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각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와 열악한 지자체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더 나은 각 지자체 만들기엔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여타의 복지부의 지침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각 지자체는 시행령(안)만 가지고 각종 설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 비판 받아 마땅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예산만 잡아먹는 복지정책의 각 지자체의 정체성과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자적인 정책이 발목 잡히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해야 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들 때 전국적인 시민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기초로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재정의 압박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술한 고난과 고통을 함께해 오신 노인분들의 일생에 경의를 표하고 남은 여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함께 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황혼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와 힘을 모아 정책을 입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동 인구 및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증축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축시기 차이가 몇 년이 지난 곳을 비교하다보면 자재비와 인건비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6년 과 2007년에 발생한 내용을 보면 396m²를 증축하면서 1억9천5백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곳이 있고, 198m²를 증축하면서 1억 5천6백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면적은 50% 밖에 안되는데 건축비용은 80%가 들어간 곳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절반 면적의 공사를 하면 모든 비용이 50%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30%의 차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할 수 있겠고 또한 최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증축면적이 207m²인 곳이나 370m²인 곳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하여 부실공사 또는 추가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상되는 문제로 인하여 기획예산과에 질의시 동 청사 증축공사비는 규정이 2억원까지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증축 및 신축 예산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고 다만 2007년 예산 반영 계획수립시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마치 전주시 조례나 그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주시의회와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고 증축면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억지로 짜 맞추기씩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나 증축시 그 지역의 인구와 동민들의 이용현황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시 철거 대상물은 없는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규모의 건축을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등의 사전 조사가 되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본 내용과 별개로 동사무소에 관련된 이야기గా 나온 마당에 신축된 동사무소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동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는 곳이 대체 몇 곳이나 되는지의 문시 되는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전기요금 과다 발생이라는 이유로 멈춰버린 곳이 있다면 전기요금을 그곳에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지원 규정이 없다면 공사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뜻한 미소의 송하진 시장님!

오늘 본의원은 동사무소 증축이라는 한 가지 작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만 그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의 진행과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더운 여름철 장마비와 폭염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 불철주야 의정을 돌보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정우성의장님, 최찬옥부의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천년전주를 자존심을 지키고 경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부시장님의 힘찬 발걸음에 무한한 기대를 걸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평화2동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의 부당함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제기하여 왔으며 현재 상임고문으로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가스 요금산출의 문제와 현황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만전을 기하여 전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산출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도시가스를 0℃, 1기압 상태에서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정이나 업소의 계량기를 통하여 요금을 측정하는데 계량기에서 측정되는 양과 요금은 0℃, 1기압상태가 아니라 상온이어서 가스의 특성상 상당한 팽창을 한 후에 측정되기 때문에 양과 요금이 부풀려 계산될 수 밖에 없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2.75℃ 높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하며 계량기의 고도가 79m 높아져 압력이 10 밀리바(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합니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설치된 옥내 계량기의 경우 저지대 옥외 계량기에 비하여 도시가스가 4-5% 추가 팽창하여 소비자들 사이에도 부당요금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전국적으로 관찰하면 상당히 심각한 부당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산출하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한 총 물량은 111,127,909천 m³인데 이것을 판매한 물



량은 112,084,512천m³으로 실제 구입한 물량보다 956,603천m³을 더 판매한 것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6년 전국 난방용 소매요금 평균값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판매량 차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5,734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2006년도 회사별 수요가와 공급량 비교 자료 보면 전북도시가스인 경우 2006년 공급량이 약 250백 만m³ 인것을 감안하여 지난 7년간 공급량을 추산해 보고 판매량차이를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당이득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한 시민의 재산이 유출되어 왔던 것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산출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999년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이래 7년간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요지 부동이었습니니다. 부당요금 산출문제의 핵심은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반영해서 계량해주는 온압보정기를 통해 얼마든지 실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산출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7년간 질질 끌어들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 온압보정기를 통해 측정할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약 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외국에서 구입하면 1년에 1억3천만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8만3천원정도가 절약됨이 밝혀 졌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에 매겨지는 세금에서도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특소세의 경우도 0℃, 1기압상태에서 세금을 국세청에 내고 온도와 압력차이에 따른 더 거두어 들인 세금은 회사측의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에게 불합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에서 온압보정기사용문제와 비용부담문제가 빠진채로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 선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7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도 중요하지만 향후 더 이상 시민의 손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도시가스사업법의 부당성을 공감하고 온압보정기 사용을 명문화한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발언시간 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여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46회 임시회('07.9.7 ~ '07.9.14)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지난 8월 27일 전주시의회가 주최해서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집행부에게 조치를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큰 틀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적 등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주시 8대의회부터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전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 하였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집행부에게 전주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실시구시적 후속 조치를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틀을 마련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2006년 9월 6일 살기 좋은 생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발언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는 열섬 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대안들이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의 계절풍, 국지풍, 산곡풍, 사면풍, 평야풍, 수류풍, 기류풍과 기후 생태적 보존 지역 분석도 필요하고, 고지대의 공공주택의 바람길 수치 모델링 실시와 바람길 확보에 따른 계획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녹지 축과 물의 축, 바람의 축, 동선 축, 문화의 축, 공간의 축도 계획되어야 하고, 저수지 소류지및 전주천 삼천 의 수량 확보에 대한 대안, 도심 곳곳에 효과적 벽천과 분수대 확보, 전통적 혈자리 조사, 지형에 따른 수종식재 연구, 열섬 저감 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인도와 공용주차장 점도벽돌사용에 관한 연구, 담장 없애기 지속적 홍보, 노거수 그늘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추수려 나갈 수 있는 전문부서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교토대 주위홍 교수나 서울대 이화박사, 역시 서울대 임봉구 연구원, 우석대 박재철교수, 전북대 이명우교수등 또한 발제자나 토론자의 한결 같은 요구에서 들 었듯이 전주 열섬 저감과 바람길 확보를 위한 부서가 더 늦 기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예산과 전담부서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

런 부서 조직화를 위한 결심을 송하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에게 주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출신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부 순환도로 편입 지장물 수용 재결에 따른 전일연립 협의매수 추가보상 요구 민원 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총연장 1,560m로 사업비 368억원을 들여 1998년부터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도로공사 55%, 지장물 보상 80%가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 발생 내용을 살펴보면 전일연립 가동 15세대는 2006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10월 23일 보상협 의 통보를 했습니다. 전일연립 나동 18세대는 2007년 1월 2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2월 5일 보상협 의 통보했 던 것입니다. 가동과 나동 33세대중 22세대는 협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 인 전일연립 나동 12세대가 2007년 5월 11일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평균 2,035천원 정도 상승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서민에게는 큰돈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주변여건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보상금액이 2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되어 기존 협의 매수에 응한 22세대는 형평성에 맞게 재결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취득 또는 보상협 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보상이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일방적 입장에서 무효나 취소 할 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잔여 지장물이라든지 전주에서 현재 진행중인 법원로, 건원로, 한방로, 은행로 등 전주시의 각종 도로 편입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상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주에는 어떻게 앞으로 협의

보상에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행정대집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시민의 고충과 전주시의 명예실추는 물론 그동안에 행정력 낭비, 도로공정에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타시도 사례, 건교부 관계법령 등 어떤 방법이든 세대별 보상금액이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몇일 남지않은 추석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신임 허광 구청장님과 김태수 구청장님,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에서부터 일선 청소업무까지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간 국내 최대의 중등부 축구경기가 있어서 모처럼 전주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소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약 3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유치한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원활한 경기진행에 도움을 주신 전주시 생활축구협회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약 144개 등록선수는 4,350명인데 13개 구장에서 226게임을 소화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연습 및 보조경기장이 부족했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13면중 4면이다보니까 임실 관촌 사전대까지 몸을 풀러가다가 경기시간을 맞추지도 못하는 헤프닝이 있어서 향후에 전주시에서는 축구장을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초등학교에도 많은 축구장을 짓는데 그런것들을 미리 사전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날 송천동 하수처리장 부지 축구장 신설 설계시공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장기간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 완벽시공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첫째, 국제 규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내 13개 구장이 있는데 4개 구장이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고등부나 크럽이나 성인대회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인조잔디 제품을 FIFA가 인정하는 제품을 쓰고 설계시공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조잔디 구장을 지을때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파일의 길이라든지 파일의 형태라든지



잔디는 이중구조가 되어야 하고 고무칩은 페타 이어가 아니고 천연집을 써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시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 관리 계약인데 유지관리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이후에 AS를 잘 받아야 합니다.

평균 8년정도 축구장을 쓰는데 그 이후에 지어놓고 8년동안 AS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체화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브러싱과 크리닝, 연2회 충진재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간은 상황논리에 따라서 구두계약했습니다. 인조잔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계절의 온도변화 때문에 팽창과 파열 균열 또 얼고 쪼개지고 꺾이고 마모되어서 또 고무칩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호흡기 점막 및 기관지에 유해하고 미끄럼 충격 찰과상등의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짓는 시설들은 그냥 잔디구장만 지을것이 아니라 관리도 샤워실을 포함해서 구장에 여유공간,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있어서 국내 스포츠 마케팅으로써 경제적인 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지을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배수공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우중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물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 월드컵 경기장, 덕진종합 경기장, 완주 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연습보조구장으로 아주 좋은데 앞으로 그쪽을 스포츠 타운건설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설계회사는 같은데 제품이 제각각이고 설계가격과 시공가격 단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인조잔디 포설 미숙이 나왔고 설계시방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중 체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55mm가 되어야 하는데 35mm가 되어서 규격이 딱딱하고 구사나 충진재가 한쪽으로 몰려서 투스콘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무칩 유실이 많아서 경기하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놀아서 덕진체련공원은 사회체육과하고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과하고 완산체련 공원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 알찬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경태 의원입니다.

전주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홈페이지가 텍스트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로 읽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로 구성되고 주 메뉴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북도청 홈페이지 및 전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청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비교한 화면을 보셨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겹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홈페이지는 겹은 멀쩡하지만 속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먹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부설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전주시 및 산하기관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주가 43.6 점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6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웹 접근성 평점인 49.8 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웹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웹 기술(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래시나 스크립트, 애플 릿 등)을 적용하고 멀티미디어 매체를 웹상에서 더 많이 제공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는 시각적이고 화려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더욱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2005년 12월 장애인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 홈페이지 제작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개선책으로 첫째, 현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플래시에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체 텍스트만 입력 해주면 됩니다.

둘째, 홈페이지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키보드의 탭 키나 방향키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 웹페이지를 원하는 것도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것

도 아닌 단지 공공기관만이라도 정보통신부 지침을 지켜 웹 제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경제기우기 모악대장정을 전개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전면 중단하고 파쇄·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바로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수거시스템과 정책이 전무한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혼합수거 생활쓰레기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압축·포장된 생활쓰레기는 동년 3월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권광역매립장재활용사업이라는 무엇을 재활용하였는 지 묻고 싶은 허울 좋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거하여 첫째, 아무런 선별 과정없이 압축·포장하여 약 5년간 야적되었다가 베일(Bale)속에 담긴 침출수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소각시설과 소각로에 엄청난 과부하를 야기하여 대당 30억에 달하는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예산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의 기술적 비용에 대한 비교우위만을 검토하여 소각장 시설규모를 과다 산정했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약문을 보면 압축쓰레기의 성상을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라는 처리방향을 정하고도, 실제 재활용방안 계획에서 자료2. 경제성 검토 투자비용과 자료3. 관리비용에서 전처리공정으로 건조안정화공법과 소각장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 Case2를 자료3. 재활용방안별 비교에서 이를 무시한 검토결과로 말뿐인 재활용사업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소각해서는 안 될 전처리 선별과정 없이 야적된 압축쓰레기가 1일 100톤씩, 전주, 김제, 완주 3시군 300톤의 생활쓰레기에 뒤섞여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처리용량을 과다 설계하여 소각장 건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수백억씩 초과 지출하는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5. 쓰레기 성상 분석 내용은 이 같은 실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6. 처리방안 검토결과에도 압축포장 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압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음식물류, 비닐류, 불연물질 비율은 자료 사진에서 보듯이 70%이상이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으로 비산재 및 바닥재가 25%이 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발생율 15%이하의 배가 넘고 있는 상태로 선별처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 및 공공시설 등에서 재활용품을 요일제 수거 등의 정책적인 배출·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쓰레기 성상이 부적합한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 선별처리를 현재 시행하는 굴착·이송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수거·분리사업에 정책적 접근과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전주시의 입장이 없을 때에는 주민감시반을 통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반입 쓰레기에 대한 적법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막아낼 것입니다. 익산시 소각장을 건설하는 대우건설 측은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모든 실상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제247회 임시회('07.10.23~ '07.10.30)

●●● 권정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숙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우리가 그동안 인식해온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을 바꿔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사회를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도 좋을 만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외국인 근로자 264명을 비롯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이주민이 620명에 이르는 등 모두 2,900명의 외국인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주시 인구의 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갈수록 속도를 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주시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새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갖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전주시는 다음달 9일부터 2007 전주 천년의 맛 잔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전주시는 전통 전라도 김장 담그기 시연과 함께 음식문화에 대한 특강을 열어 우리 전통의 맛을 시민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 행사에 이주민 여성들을 초청해 전주의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를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주민 여성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일부 문화축제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축제 이주민 여성을 초청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벌써 7년째 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3국 3색 축제 역시 자리를 잡았으며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의 다문화 축제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주시는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주민의 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이들을 배려하고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 여성들에게 전주의 맛과 멋을 알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음식문화와 생활문화는 물론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문화 교류의 기회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의 입맛에 맞는 전통음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생소하기 짝이 없는 낯선 곳에서 쌀로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해마다 열리는 전주의 각종 문화축제에 이들을 초청해 서로간의 문화를 나누고 함께해 나간다면 앞으로 전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상 유래 없는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온 단일민족 국가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UN에서 마저 우리정부에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전환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으로 보듬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친환경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됨 없이 홍물에 가까운 자율방범초소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완산구에 24곳, 덕진구에 18개소로 총 42개소가 있으며 그곳에는 밤마다 노고를 아끼지 않고 방법 유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1,028명이나 있습니다. 자율방범초소는 대부분 이 시민들의 시각에 잘 띄는 장소로 즉, 동사무소 건물 옆이나 공원 주변 또는 상가 주변에 회색 콘테이너 박스로 대부분 놓여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방범유지를 위한 아름다운 본부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색 콘테이너 박스가 공원이나 공공장소 일부를 미적 측면에서 훼손으로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표적으로 잘못 놓여진 위치를 보면 경기전 뒷담에 있는 풍남동 자율방범대, 평화동에 설타공원입구, 효자3동 상산타운 공원내, 덕진동 덕진공원 입구, 금암2동의 금암체련공원, 우아2동의 산정동 공원내 등으로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형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가 천년전주 녹색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현재 홍물로 전락되기 직전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콘테이너 박스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디자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치안의 상징이면서 경찰의 상징인 해학적인 호돌이를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전주시 상징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통해서 홍물의 콘테이너 박스를 시민들이 따뜻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생활 예술품으로 탄생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시민들과 미적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전주를 새롭게 디자인 하자는 것입니다. 자연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천년 전주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작은 대안들이 실천되어지길 집행부에게 다시한번 기대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모악산 중턱에 걸쳐있는 한가로운 구름 한 점도 없거나 여유로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건지산의 시원한추의 정취도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 주시의 도시계획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난개발이 난무한 도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열섬화에 의한 전주의 기온상승이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도 도시팽창이 계속되고 있는 전주시 북부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곤 합니다.

인간이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의 개발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송천동은 지금 35사단 이전에 따른 60여만평에 새로운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조선조 영조가 시조 묘를 조정단에 봉안할 때 영의정 김치인이 이르기를 중대한 일을 도신에게 전임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전주에 봉심차 내려왔을 때 건지산 일대에서 송천동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송천동 골짜기를 가리켜 건말미초, 가활만인지지라고 하면 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송천동 일대 북부권은 도시의 중심이 될 만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청은 현재 청사부족으로 2국 9과의 사무실로 인근 현대해상 건물 2,5,6층 786평을 임대해 임대보증금 11억7,900만원과 관리비 1억4,891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3년 11월 건축된 전주시 청사는 연면적 1만1,651㎡로 행정자치부의 기준면적인 1만4,706㎡보다 3,055㎡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노송동 소방도로마다 직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제3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출퇴근시 직원들은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며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이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건물 또한 21세기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의원의 역동적 활동에 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그 도시의 얼굴이며 상징이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적정 장소에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 청사 민원실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시청사를 증축하기로 하였으나 적정한 설계자가 없어 없었던 일로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전주시청의 협소한 청사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낙후된 북부권의 도시균형발전과 모처럼 기회를 맞은 35사단 이전에 맞춰서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청사를 35사단 이전부지로 옮길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아니 전

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다면 본의원은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청사를 송천동 35사단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지역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열 교환 시스템 플랜트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추출된 열을 이용한 난방을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사가들이 쓰지만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송하진시장께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으로 평가받아 그 이름이 길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김남규 의원

송천동 오송지구의 주 진입로 진흥 더블파크 완공을 앞두고 주 진입로 확보 및 송천 아이파크 공사현장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송천동 오송지구 도로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당장 급하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한달 보름도 안남았는데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 900세대 주민들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공검사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삿짐을 싸놓고 혼선이 생겨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측됩니다. 노폭20m, 길이 1,335m의 도로가 현재까지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대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 확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첫째 문제의 경과에 대해서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 도로개설을 900세 대 규모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진입로 공사는 2007년 10월 30일 현재 토목공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도 한달 보름내에 도로를 한다고 할 때 밑에 광케이블이 깔리고 상·하수도가 깔린다고 할 때 얼마나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을까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도 대체 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결 기미는 보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00세대 입주주민들은 12월 입주예정만 믿고 입주계획에 의해서 집도 팔고 전세 임대계약도 12월부로 종료하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어려워 서 어려움과 당혹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주



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천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현장은 공사 진입로 확보를 못하여 주변 아파트 사이 6미터 노폭도로에 아파트 사이로 덤프트럭 약 60대가, 적을 때에는 시간당 60대, 많을 때에는 시간당 300대에서 400대 사이가 교행하다보니 그 6미터에 한 150미터를 교행했을 때 아침, 특히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는 아주 일상적인 혼잡도로가 되어서 주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들의 등하교, 시민들의 출퇴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장마철을 제외하고 지금 3,4개월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에서는 이제까지 열두차례 회의를 하면서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진정서와 해결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차량 주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사안은 첫째 공사차량의 주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소음 문제, 분진 문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등하교 안전 문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주민대책위의 촉구건의 내용 중 아파트 주민 성인 578명, 학생·유아 352명, 임산부 8명, 환자 4명, 총 942명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과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아이파크 건설현장 피해대책 추구를 위한 주민회의에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 관리소장, 현장 아이파크 소장님, 시청 담당계장님, 도시건설위 양용모 의원님, 본 의원이 참석하여 10월 31일까지는 공사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 23일에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을 막아 덤프트럭 운전사가 도로의 출구와 입구를 차를 세워 두체 나타나지 않아 3시간동안 승용차가 갇혔습니다. 10월 26일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해당 시공사측에 주민 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들어 건설현장 사전 설명회를 통해 민원 최소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기의 경과에서 보듯 건설현장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 민원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인후2동 출신 시의원 남관우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464여 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몇 퍼센트 아니 몇 백억여원이 증액될지 의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조원 시대 전주시 예산이 도래할 거란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 후면 2008년도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편성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편성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시성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각 지역구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전주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시성 등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동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설명회, 인터넷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시재정 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 매체를 통해 모아진 여론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대안과 의견들이 2008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주시 예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회는 자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땀으로 모아진 진실된 예산을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시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해외 출장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돌아오신 송하진 시장님!

풍성한 만추의 계절인가 싶더니 밤낮으로 차가운 바람에 가을낙엽이 떨어지는 초겨울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고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현안행정으로 동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처리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2002년도 12월과 2004년도 4월 사업시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과 민간투자 하수정비 사업은 총연장 198Km, 총사업비 1,4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도심을 빼고 2010년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도심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구도심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 둘씩 속출 하면서 특히 기린봉 아파트는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전체는 정화조 수거비용도 비용이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마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정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는 99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분이나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만큼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생활 환경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도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책에는 구도심과 기린봉 아파트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정책 입안자의 판단에 대해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마다 구도심에 대한 편견과 무대책이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지적해야 될지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이제 송하진 시장께서는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구도심 오수관 정비사업 예정지는 132km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 정비 사업은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전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 아파트 주민들한테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원망과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관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

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재정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4일 발언한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압축 배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성상에 대한 지적이 있은 뒤, 10월 17일 안세경 부시장의 주재로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위한 불법쓰레기와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주시 청소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 수준의 유례없는 행정력을 발동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공권력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 제기자로서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교과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대안과 정책, 즉 시스템, 조직, 예산 없이 입으로 하는 전쟁은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져 안하니 만 못한 상황, 갈등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전쟁선포 이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시내 중량제봉투 쓰레기 1,135Kg을 수거하여 성상 분석한 결과 아파트, 음식점,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72%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활용배출이 용이하고 솔선수범할 비가정부분 - 교육시설, 업무용빌딩, 음식점 순으로 재활용 비율이 가장부분 66%에 비해 12%가량 높은 평균 78% 가량의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압축배일쓰레기에 대한 전처리 설비 도입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선별과정 없이 포장 하였던 잘못된 청소행정의 상징인 압축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잘 함시다는 설득력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둘째, 단독주택을 비롯한 비가정부분 시설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중 단 하루라도 배출 요일을 정해 수거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작년에 폐지된



구청 홍보계를 부활하여 전담 홍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교육효과가 높은 현장교육을 위한 시민쓰레기 기행 등의 제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홍보에 1억을 투자하면 처리비용에서 10배, 100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품을 비롯한 음식물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과 기준을 단순화하고 이를 성상별로 철저하게 분리 수거해야 합니다. 단순명료한 배출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수거함, 용기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표현을 소각가능쓰레기봉투로 바꾸고 전면 배출기준과 요령을 인쇄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와 불가능한 쓰레기(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라는 구분이 시민의식에서 자리 잡혀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라는 부서명칭도 자원순환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축제, 쓰레기제로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은 이용에 따른 혜택을 다시 제 자리에 돌려주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48회 임시회('07. 11. 22 ~ '07. 12. 20)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입니다.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아닌 전통문화도시의 실현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는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에 필요한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해가며 전통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써 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위해 동(動)과 정(靜)을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자 전주 맛 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공예품 전시관, 술 박물관, 한옥체험관등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달에 실시한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사, 문화도시 가꾸기, 완산근대 역사, 문화권 정비 주민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가 아

직도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한 도시 만들기,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도모, 민간주도형 도시정비 모델구축을 내 놓았습니다. 위 내용은 도심을 살리는 직접적인 콘텐츠는 없었고 구대의연한 주변 환경설정만 있어 아쉬움이 일었던 것 입니다.

그 래서 본의원이 전통문화도시를 살리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에서 기거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종합 창작인촌(문학,건축,국악,무용,미술,사진,연극,연예,음악,영화)을 구도심에 건립하자는 것 입니다.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먼저 2,800여명의 문화예술인을 모시고 상품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전주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제대로 된 민속촌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과감하게 대규모 문화 예술인 창작인촌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창작활성화를 유도하고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관광 상품까지도 충분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추정해 본다면 각종 부대시설을 생산적으로 운영해서 문화 예술인의 인적 인프라 구축까지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생동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문화 예술지식 정보제공과 이를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입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을 문화 향수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의 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구도심에 문화 예술인 창작인촌 건립은 문화예술에 각별히 마인드가 깊은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시장님의 결심만이 가능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2,800여명의 전주시 문화예술인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진부함에서 벗어나야하는 관련된 집행부는 각별히 능동적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오신 우석대 학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은 물론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 정진하고 있는 삼천도서관 등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 역



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의 여건과 지적 실체로서의 전자정보 도서관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서관의 이용객에 대한 행정적 환경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 일반인 등 전체적으로 보면, 삼천도서관 1,476명 송천도서관 943명, 인후도서관 641명 금암도서관 444명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를 보면 삼천도서관 60면, 송천도서관 55면, 인후도서관 80면, 금암도서관 30면입니다.

삼천도서관의 경우 1일 이용인원대비 2%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수의 1일 이용인원 대비 2%가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 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수를 반영한 주차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면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열람실의 경우 1일 이용인원에 비하여 좌석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천도서관 열람실은 1일 1,063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좌석수는 1일 이용인원의 450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천도서관 열람실은 1일 54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좌석수는 280석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 수치는 1년을 365일로 나눈 평균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험기간 중에는 1일 이용인원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험기간이나 여름 또는 겨울방학때는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가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며 아침 일찍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새벽 7시부터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면학 환경만큼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실체로서의 디지털도서관을 위해서는 도서관별 전자정보실 장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천도서관의 경우 PC 작업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 486 수준이라고 심드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버 시대에 시민들의 전자정보도서관을 위해서는 함량 미달인 전자정보실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내 시설물관리가 불결하고 실내 공기가 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또한 실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사물함 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전자정보 도서관으로서 시민의 교양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 여 본 의원이 지적한 주차면수 확충 방안과 열람실 좌석수 확대, 그리고 전자정보실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나은 시민편의 서비

스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계절은 어쩔수 없으나 조그만 인심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훈훈한 전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주의 하시어 힘차고 보람 있는 나날 되시기를 삼가 기원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는 전통 문화 도시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내면을 채워 줄 문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전통문화와 역사가 존재하여 전주를 찾고 싶은 단초가 되어 있는가? 견훤이 도읍을 정한 후백제의 역사가 전주를 대표 해 줄 역사인가? 아니면 풍패지향이라는 조선조를 창 업한 전주이씨의 본향이라서 전주가 역사의 도시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에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주목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는 무슨 거리 거리 하는 거리 다듬고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 어디를 가나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여서 꼭 가보고 싶은 거리나 특별 하게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거리는 몇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등이 조성되었고 또 지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 리가 사랑하는 전주에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빛내고 가꾸 나가야 할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 숭고한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볼 진대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성녀 이순이 누갈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본 의원은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한 성령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참사 중 동정녀 이순이 루갈다의 순교는 세계 순교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순교라고 전 합니다. 성인 루갈다는 참수현장에서 목이 떨어져 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호남의 사도 유향검의 며느리이기도 한 이 루갈다는 조선 왕조 태종의 14대손으로서 지봉 이수광의 8대손인 이윤



하와 권일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두터운 신앙의 가계에 서 자란 그는 성모 마리아를 닮아 평생 동정이기를 결심하지만 이는 당시의 풍속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갈다의 결심을 알고 있었던 주문모 신부는 호남 전교길에 유항검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장남 중철이 역시 동정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가 지고 있음을 알고 혼사를 주선,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와 같은 동정 부부의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4년 동안 오로지 천주의 정배가 되리라는 의지로 정결한 생활을 해 온 이들 부부는 마침내 신유박해를 만나고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성스러운 동정녀의 성혈이 뿌려진 전주 숲정이 성지는 지금 동국아파트 105동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성지에 고작 콘크리트 건물이나 지어버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있는 분들이 마련한 기념비만이 덩그러니 잡초 속에서 있습니다. 지 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성 장대가 있던 순교자인 진북동에 거리를 정비하여 묵상의 거리로 만들것을 제안 합니다. 세 계적으로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거리하나 만들어 천년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내면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 명 연 의원입니다. 올 해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성큼 다가온 겨울이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삶과 춥고 비좁은 곳에서 담요 몇 장으로 온기를 유지하려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슬프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지난 2006년 9월14일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님의 시정 질문 과 2007년 1월 22일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유영국의원님의 5분발언등 수없이 많은 의 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시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에는 2007년 11월 현재 52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 도시가스를 난방보일러 연

료로 사용하 는 곳은 24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283개소에서는 등유나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주시에서는 각 경로당 에 2005년에 50만원, 2006년과 2007년에는 80만원 씩을 난방비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당해연도 11월에서 익년도 3월 까지 5개월간을 난방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1개월에 16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시의 경우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연간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광주시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전시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유사의 난방유 공장도가격 평균을 보면 2005년 11월 1/870원, 2006년 11월 1/850원, 2007년 11월 1/1,010원으로 각 경노당의 평균면적을 66,116㎡(20평)로 보았을 때 1개월에 약 300 l 사용시 2005년 11월 /261,000원 2006년 11월/255,000원, 2007년 11월 /303,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난방 비 지원은 5개월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름철 2~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고 하니 그나마 난방비가 지원되는 5개월 동안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난방비의 약 50%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전주시 노인 복지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차례 강조되어 왔고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전 혀 세우지 못하는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재차 촉구합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세우고 구호뿐인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라 현실이 최대한 반영된 복지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 복지회관에 대해 살펴보면 타 시도에서는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 비율이 경장보조금 대 비 5.1%~20.4%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그중 수탁기관 자체 부담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20%로 확정하 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져야할 노인복지를 수탁 운영권자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주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송하진 시장님!

보건복지부 지정 예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문제를 개선하고 한겨울 경로당 한 구석에서 또는 비인가 경로당 한쪽에서 두꺼운 이불 몇 장 깔아놓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도 아끼지 말고 보여주시 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잣대로 재는 지원금만으로 해결해서



는 안 될 것이며 가슴에서 우리나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삼전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9일간의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금번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보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새해 알찬 계획을 기원해 봅니다. 친 환경 청정미나리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모악대장정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시는 미래 건강산업을 선도 할 생물생명산업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21C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하고 기능성식품과 발효식품 중심의 생물산업과 청정한약 재 한방의 생명산업 특화도 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를 역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발효식품 엑스포, 전주 약령시 한방엑스포, 전주 천년의 맛 잔치 풍납제를 개최해 왔고, 생물산업진흥원과 생물소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발효식품과 한방산업, 전통 장류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 러한 배경에는 전주가 지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예로부터 식재료가 풍부하고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여 지금도 전주를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한옥마을보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의 전주 전통음식을 찾아 전주를 방문한다고 할 정도로 전주는 한국 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전주8미 식재료와 콩나물, 미나리 등이 지역적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 식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에 맞는 지역생산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산품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이며 원 료 생산자와 가공 연계가 가능하고 고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유통이 편의한 미나리 재배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원은 판단합니다.

미 나리는 비타민이 풍부한 식용과 약용으로 애용되는 알칼리성 줄기식물로서 특히, 한국 전통음식 특성상 탕을 이용한 식재료로 많이 애용 되고 최근에는 건강 지향적 소비자 욕구 증대로 채소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타민, 무기질 및 생리활성 성분의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정혈, 웰빙식품으로 대표적인 차별화 채소류로 그 선호도가 증대되고 미나리를 이용한 음식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전국 어느 곳보다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고 예로부터 나라의 진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품질과 재배규모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전주미나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시설재배를 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현재 전주미나리 재배 현황은 5개 작목반의 영농조직에서 2000년도 전국대비 24.5%에서 하락한 16%, 도 대비 92%, 시 대비 97%를 생산하고 있으나 노지재배 로 겨울철 계절생산에 그치고 담수재배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비자인식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과 출하과정에 장비의 노후화와 인력수급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 생산품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친환경 청정미나 리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유통 혁신계획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연중생산과 규모화, 브랜드화를 위한 시설 투자, 친환경 유기질퇴비 지원, 저장보관시설 및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미나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 는 주위에 음식문화가 발달된 대도시가 인접해 공급여건이 양호하여 농가소득 증대 효과와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과 함께 향토음식 본고 장의 이미지와 명성을 드높이는 전주 특산품으로 발굴하여 지역 명품화를 유도한다면 1차, 2차, 3차 생물생명산업을 뒷받침하고 연계 하는 성공적인 식품산업 성공모델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의 근교농업은 친환경농법과 규모를 갖는 재배단지 조성으로 거듭나야 경쟁력을 갖추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집토끼를 지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주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알찬복지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도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냅니다.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예 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장애인에 대하여 더럽다 무섭다 불쌍하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장애인체험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장은 1년에 1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때에 바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여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장애체험공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선도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전주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장애체험공원이라는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매우 적절하게 부합한다면 전국적으로 보급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내 전체 4만여평의 근린공원부지 중에서 1천여평 정도만 장애체험장을 추가 설치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전주시민이 장애인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통합지향적인 전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 근린공원내 전국 최초의 장애체험장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전주시가 장애인 인식개선 복지사업의 전국적인 선두 모델 도시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회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 전주 알찬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조금만 일 짝 의료적 혜택이나 각막이식을 받았더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각막이식을 받을 대상자였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증자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지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으며, 전주시민의 약 0.5%인 3257명이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표 4참조) 금년에 전주지역의 장기기증자는 총50명, 이식자는 총 9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전주에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는 약 4,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나 심장, 신장, 간장부전증이나 백혈병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는 환우들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차원의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기증자를 우대하고 기증자가 많아짐으로써 지역 의료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가칭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자와 조직기증자에 한하여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책이 전혀 없어서 기증운동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하면 따뜻한 도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49회 임시회('08.1.24 ~ '08.1.30)

●●● 국철 의원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



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의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의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1947년에 도립 전주보건소로 설치 운영되어 1963년에는 전주시 보건소로, 1990년 7월에 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1999년 11월에 다시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되어 1소 2과 8담당 4진료소 체제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행정과 최선의 예방활동을 도모하고자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가 통합과 분리의 체제로 운영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분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보건소간 상호경쟁과 협력관계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각종 방역, 예방접종, 방문보건등 거리 축소 등으로 직원 활동영역과 시간낭비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거택보호자 방문시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기대되고, 셋째 독립화 된 보건소 관리 영역이 좁아짐으로서 의료사업의 세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고, 넷째 변방동 및 농촌동등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이고, 다섯째 전염병 발생시 조직화된 기동 성을 이용하여 신속한 사전 차단 효과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상호 근무처 이동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패방지등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보건행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에 배부해드린 자료 표1을 토대로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안산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의 인구대비 보건 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 인구 63만여명에 2개 소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안산시의 경우 인구 725천여명 에 2개 소의 보건소를, 고양시의 경우 인구수 893천여명에 3개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도 983천명의 인구수에 3개의 보건소를, 수원시의 경우는 1,083천여명에 4개소의 보건소를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어, 평균 보건소의 분리 운영 인구수는 27만~36만여명에 1개의 보건소 체제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 한 삶 영위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동과 도시의 차상위 빈곤계층의 건강관리가 적극 필요한 이때, 보

건소 진료 이용자의 70%이상이 노년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버스노선의 불합리로 송천, 조 촌, 팔복동등의 이용 시민들은 덕진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주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접근 현실을 감안 할 때 도심 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의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의료행정의 중 추기관인 보건소를 타시의 예에 비추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체제로 독립, 분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서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시민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간사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제 곧 이명박 새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나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나아지고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더 두툼해지며 가정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에 대한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통일부가 폐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처럼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 음부터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통일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통일부 폐지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그는 그야말로 경제가 화두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뛰어난 처세술로 도덕적 위기를 잘 넘기면서 대통령 에 당선된 기회주의적이며 의심스러운 경제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이당선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통일 부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평화통일 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 처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이 별개의 나라로써 통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남북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간의 단순한 외교문제로 격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겨



왔던 외교 관리들에게 통일문제를 맡기는 것은 통일을 미국 주도하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별개의 나라로 가기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당선인이 친미외교에 혼선을 빚는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지를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 외에 다른 아닌 것입니다.

4.19 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렴하여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범 국민적 합의하에 출범한 통일부는 엄혹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위에는 이유 때문에 존속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부처 축소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차기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북강경책에 기반을 둔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좌초될 수 있으며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과 외교도 구분 못하는 반 역사적인 통일부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과제로 삼고 있는 헌법정신으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노인요양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빠른 노령화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10년에 80만 명, 2020년에는 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 노령인구 65세이상 52,541명으로 노령화 비율이 8.8%입니다.

노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증가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노인장기요양 장기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설변화, 제도이행, 인력기준, 자격요건 등의 준비를 위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전문적

요양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살펴보면,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할 것이고,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요양 보호사(간병인) 자격인정제가 있고, 미인가 시설 등 실종노인 신고의무제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시설충족을 77%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55% 내외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구대비 시설충족율이 100%이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129%입니다. 2008년 현재 현황을 보면, 전주시에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9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중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개축이 8개소이고 장비보강이 4개소이빈다. 2008년 7월부터는 시설개보수로 현재 6인실이 4인실로 개조되어야 하며 4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등 계획이 있습니다. 근 익산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요양법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2007년 1년동안 문제점과 시설대비 보완을 준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전문적요양 서비스가 전달될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도록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에 갈수 없는 형편의 요양대상자 들에게 찾아가는 재가 가정과건 봉사를 생활권역 동사무소 권역별로 홀로사는 노인보호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의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는 등급을 구분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대개 누워있는 와상상태로써 장기요양제도를 필요로하고 4등급에서 5등급은 바우처사업, 재가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는 보타당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수혜자 자부담제도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요양보호대상 뿐만아니라 부양가족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기관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525개 경로당에 홍보하도록 전주시는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생활중심 권역별로 (동사무소 중심)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전주시에는 약 2,500여명 간병인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법 시행에 따라 2008년2월부터 210시간의 교육을 받아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노역으로 살아가는 요양보호사(간병인)들이 한달 보름이상 장기교육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발전적이고 63만 전주 시민이 건강하고 각 가정마다 가호 깃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주시가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단체장인 시장은 동분서주 뛰고 있는데 담당 집행부 관계자는 수장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래된 관습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만큼은 관념이 아니라 실무자 스스로가 절실한 가치관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전주에는 바이 전주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는 바이 전북이 있습니다.

바이전주, 바이전북 상품 및 자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상품시장성, 상품 안정성, 품질우수성, 소비자 만족도등을 포함한 엄격 심사를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 검사자료등을 요청하고 보완 조치후등을 통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정한 심사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이 지역 상품이나 자재들을 집행부 관계자가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 상품 및 자재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 전북의 경우는 수개월동안 수십명의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바이전주, 바이전북 상품들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고 애용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의 경우는 단체장이 직접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감사실에 지역 상품, 건설 자재 및 물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요청해 성과를 얻은 곳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러한 교육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동분서주 뛰고 있을 때, 집행부 관련자도 이에 맞게 빠른 적응력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간단하게 두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전주, 바이전북을 통해 상품과 건설 자재를 구입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치관을 집행부 관계자가 가져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와 연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 건축, 건설, 토목 관계자에게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작은 대안들이 집행부에서 실천되어지길 바라고 이러한 가치관과 특별교육들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함께 인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1969년 팔복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청이 2008년 8월경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지와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7년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팔복동은 70년대와 80년대 전주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황폐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팔복동 주민들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주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는 공단이었기 공해로 인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 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나 문화시설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아 온 것입니다. 산업화와 반비례하여 기본적인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는 불만을 넘어 분노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팔복동 주민에게 그간의 희생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와 관심에 인색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이전에 따른 부지와 건물 활용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청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노인 복지 시설을 해 달라', '문화시설을 해 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요구는 하늘을 찌를 듯 분출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BI(Brend Identity)센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열망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7년 3월 실시한 작은 생활문화복지 공간 조성사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팔복동 주민 대부분이 문화 센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청사를 산업 시설이 아닌 다목적 종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팔복동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9월 제2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12월에 있는 제239회 정례회에서 팔복동 문



화 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 문화 센터 건립 의향이 없는지 시정 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팔복동의 열악함을 공감하고 2007년부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장께서도 관심과 의지를 보인 만큼 본 의원의 제안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팔 복동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고 작더라도 내실 있는 문화시설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기업청 이전과 동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팔복동 지역발전협의회의 최태진 회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팔복동 통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와 그리고 몇 일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주 시민의 가슴속에 항상 희망과 행운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얼마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도 시정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의 큰 틀을 보면 2대 핵심비전과 5대 역동산업 육성 및 아름다운 예술도시(아트폴리스)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민 생활경제, 수준높은 문화와 여가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정비, 알찬복지 실현 등 전주를 살 맛 나는 도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야심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의 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있기에 존재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07년도에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켜 보면서 또한 발표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보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통문화도

시 답게 시민들이 각종 전통악기, 한춤 등 전통문화에 대해 기술을 익혀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 있으나 주변 이웃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 사장되고 있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물론 발표 기회를 수시 개최하여 전 시민들이 향유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전주시에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시 행정에 적극 동참하는 기부금 적립 운영방안 입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위해 최대의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위기가정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는 물론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홍보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방편으로 시장께서 일일이 기업체에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초 질서의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2월 1일 3대 시민운동 선포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선들어 혼치 않은 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꼭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한때 혐악했던 쓰레기와의 전쟁이 이제 서서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 곳곳 주요 노선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잠식된 전주시의 주차 실태는 실로 무법천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 속담을 기억할 때 아주 자그마한 습관의 실천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차문화와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불법주차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중심 도시의 자존심 지키기와 아트폴리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아주 작은 시작과 실천이야말로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일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겨울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기린봉 소나무는 한 설에도 푸르고 중마위 기암은 북풍에도 정중하기만 합니다. 눈을 들어 시가지를 둘러보니 전주 천 물길은 새해를 맞이하여 훈훈한 전주인심을 앓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무자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삼가 기원 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서두에 본의원은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건강하시라는 새해 덕담을 올렸습니다만 인간에게 건강은 만인지사의 으뜸이요 가족 행복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 주는 건지산이라는 시민 건강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이 건지산에는 송천동, 인후동, 덕 진동, 호성동, 금암동등에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이 오르고 뛰고 걷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고 고마운 전주의 보물 이 바로 건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지산에 수십년간 오르 내리던 등산로를 사유지인 주차장을 좀 지나 간다는 이유로 철조망으로 막아 버리는 해괴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철조망도 대충 쳐놓은 것이 아니라 험악하게 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시설물인겁니다. 그곳은 바로 송천1동 현대 4차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장덕사주차장을 통과 하여 건지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수십년 다니는 길이란 관습법에 의하여 아무리 개인소유 땅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막아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종교시설은 정통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공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사 앞 주차장도 종교시설의 주차장으로서 많은 신도들이 왕래하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 으로서 그곳을 지나서 건지산에 오르는 것 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여 험악한 철조망을 치면서 까지 세상을 원망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는데도 무엇하고 있으며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청은 겨우 땅주인에게 사정이나 하는 대책을 세운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조사하여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유지 사유지는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산에 오를 수 있는 항구적인 등산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아울러 장덕산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도 함께 조사하여 엄격한 법의 집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등산로 때문에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끔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언제나 당면문제를 가지고 자기 지역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전주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몇일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즐거운 설이 서민들에게는 즐겁기는 커녕 심란하고 걱정스런 설 명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구도심 형편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져 더 심각해져가는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은 전주시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빈곤과 정책부채의 소산으로써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없이 오직 자기 지역구 발전에 여념이 없듯이 본 의원도 지역구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현안 대책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구도심 내에 한국통신대학교를 구도심에 유치하는 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대학교 서부신시가지 이전 계획과정을 살펴보면 2006. 11.14 통신대학교 측은 47억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교 부지 매입을 전주시에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2년간 양측간의 입장을 맞추지 못하고 난해한 입장에서 통신대학교 총동창회장 출신 양용모 동료 의원의 입장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구도심에 통신대학교 유치를 준비 해 왔습니다. 현재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는 1983년 9월10일 개설하여 21개학과와 1만5천명의 재학생과 5천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일반대학교들이 과감한 자금투자와 신속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통신대학교는 재학생과 동문회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대학교 이전 계획을 요구하여 학교 측에서는 동창회와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신대학교 구도심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신속하고 면밀한 자세로 통신대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와 통신대학교 측과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학교이전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대학교)시설고시 절차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통신대학교가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유치되면 부지매입비 47억원, 건축비 150억, 약200억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시너지 효과 역시 구도심 활성화 및 평생교육센터, 각종 도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녹지공간 확보 평소 휴무시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 등 기대이상의 시너지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을 서부신시 가지로 이전을 이행하고 있는 이때에 통신대학교 구도심 유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듯이 통신대 구도심과 관련하여 모처럼 구도심 활성화 기회를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위기를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통신대 유치 공은 집행부와 송하진 시장님께 넘겨져 결과 여부는 집행부와 송하진 시장님의 의지 결과에 따라 통신대 구도심 유치는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출신의원님과 집행부, 송하진 시장님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 한국방송통신대학 구도심유치가 기필코 성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거듭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구도심 살리기 정책에 대해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라도 본 의원은 주저하지 않고 극복해 내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사랑하는 지역구 주민들과 정우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제250회 임시회('08.2.20)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대보름을 맞이하여 잡귀와 액운은 물러가고 농사일, 사업일, 취업, 인사 모두 만사형통 좋은 무자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올립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의원 입니다. 민 선 4기의 역동적 시정은 경제 살리기와 아트폴리스 추진으로 살기좋은 전주 건설 일 것입니다. 특히

팔목할 만한 성과는 문화의 뿌리들과 성장점들과의 교류, 소통을 통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며 발굴하고, 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부채살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 사업 중 한글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글과 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어식 몰입 교육에 대한 반대급부라서 씁쓸하지만 한글과 국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정신이고 혼이며 언어의 무기입니다. '국어부터 제대로 사용하라', '국민 국어능력 실태조사'라든지 모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대 국가이듯이 우리의 언어 한글도 세계 10대 언어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제경쟁력의 미명하에 일부 계층에 의해 팔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의 역사가 천대받는 민중들이나 백성들에 의해 자생적 사투리 지방언어 어원에서 뿌리깊게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국어와 모국어의 중요성은 아버지 어머니의 일제하 시대의 한국 수난사와 해외 동포들이 그 중 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데 모국에서, 고향에서, 신세대들에게 국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일수도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 제10조 1항 '국가 기관 및 지자체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어 책임관제를 살려서 공공기관에서 외래어, 외국어, 일본의 잔재언어를 구분하여 우리 말 다듬기를 했으면 합니다.

둘째, 한글마을 조성을 통해 한글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으로 교육, 전시,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글생활관, 아름다운 글꼴, 서체개발, 한글 디자인, 한글박물관, 사투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왜 전주의 한옥마을에!! 한글마을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뿌리입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로 1443년 세종 25년 만들어지고, 1446년 반포된 세계 기록문화 유산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 용비어천가의 목판 복원술 간행사업이, 복원 기념식이 지난 1월 3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유래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주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과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역사적 중요성을 계승하는 사업에 전주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록문화 전통이 있는 출판문화 도시입니다. 전라감영지소, 인출방, 책판고 완판본을 찍어낸 지방도시 중 문명이 가장 높았던 곳이 전주입니다. 셋째, 한지의 고향으로 종이와 목판의 만남은 한글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향후 한글은 '미래의 한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산업(스토리텔링)의 꿈의 사회(드림 소사이어티) 핵심열쇠(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4기의 5대 테마 생활체험관 사업과 한스타일 사업중 한글과 관련있는 사업을 연계하고, 조성하고, 발전시키는것일 것입니다. 완판본 테마체험관, 판소리 체험관, 서화마을 조성등은 모두 한글의 뿌리에서 유래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사업중 한지는 한글과 목판체험과 관계가 깊은 문명의 도구입니다. 한글이 한문과 영어 사이에서 위축된 경쟁력 없는 언어가 아니라 한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글의 경쟁력은 한글마을 조성을 통해서 기반조성이 먼저입니다.

전주는 해외 동포 및 2.3 세대에게, 다문화시대, 한글 경쟁력을 위해 외국인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언어, 한글을 계승 발 전시킬 무궁무진한 문화도시 입니다. 자랑스러운 전주의 힘은 전주를 지탱하는 저력입니다. 한글 도시로 전주가 먼저 선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한글사랑에 남다른 어른들과 국어관련 종사자, 국어교사님, 모국어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올립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 입니다.

전통문화도시와 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송하진 시장이 목표를 두고 있는 전통문화도시를 근간으로 한 아트폴리스인데 이는 입체감 있는 스토리 텔링으로 이를 전주천 주변을 중심으로 테마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예술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주천은 이제 쉬리가 돌아 오고 있습니다. 냇물바닥은 잔모래까지 선명하게 반짝이는 맑은 하천으로 변해 백로 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를 상징하는 완산 칠봉과 함께 어우러져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굵어진 물길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유산으로 남 겨 주어야 할 생생한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전주천과 어우러지게 테마공원을 형성한다면 명실상부한 전주의 관광 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전 주천 물줄기를 따라 눈에 띄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꼽아보면, 명필 창암 이삼만 선생, 기축 옥사의 정여립 장군, 동정부부 유충철 과 이순이, 남고산성의 견훤대왕, 포은 정몽주와 이성계, 김 개남장군의 사형터, 가톨릭성지가 된 초록바위

의 두 소년의 죽음, 완판 본 소설을 찍던 서포거리, 양반 명창 권삼득, 전주감영에 집강소 설치하는 동학군, 도토리골의 뚝단배등이 있습니다.

강폭이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 경관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삶들이 역사가 되어 남았을 때 진실로 아름다워 지는 것 입니다. 이를테면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역사물들을 구체화 시킬 때 시민들은 물론 전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흡입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의 비켈란 조각공원이 떠오릅니다. 인구 46만5천의 도시입니다. 한사람의 조각 작품으로 전 세계인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위적인 인공호수와 어우러진 경관으로 전주는 천혜자연의 조건을 갖추어진 곳입니다. 전주천을 중심으로 문혀져 가는 역사 현장을 조각 작품으로 구체화해 되살려 낸다면, 오늘로의 조각공원 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색다른 감흥을 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통문화도시, 예술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전주의 이미지와 상징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각인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입니다.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면 집행부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오목대 양지바른 언덕에 솟아나는 달래, 냉이의 파란 잎에 봄의 향기가 갇히고 있습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 힘찬 출발로 2008년을 시작하시길 삼가 기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4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관용차량 280여대의 관리 문제에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연초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여 추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용차 량 전용주차장 확보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고 차량 관리 전산 시스템인 새을 프로그램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도 발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정책 제안한 개선대책을 수용하여 진 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의 적응기간이 문제이지 본의원이 제안한 차량관리에 대한 개선이 잘 정착 한다면 분명 연간 20%~30%의 예산절



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선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차량관리 운용은 아직도 개선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의 개편이나 효율적 관리체제는 아직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차량관리팀의 신설은 필수인데도 지극히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는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의 근간이고 공무집행에 필수인 차량관리조직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일시에 급격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것이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무릇 정치란 실권자의 지나친 의욕을 현실에 맞게 얼마나 융합해 내느냐 하는 것이 또한 집권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일 것입니다. 전주시 조직개편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산 사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산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요체는 최고 통치자, 즉 임금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간(諫)하는 간관(諫官)이 제 소임을 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관의 직책은 장차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점을 보충하여 임금을 허물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諫官之職 將以匡以補闕 納吾君於無過之地者也)라는 다산의 주장을 음미해야 합니다. 실무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은 곧 시민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오늘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간관은 바로 견제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63만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적 조직개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 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설명절이 있어 대부분은 가족들과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 더 추워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 한줌이라도 나누어 주는 봄날 같은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 자년 새해에도 더욱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이 넘치는 도시,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는 전주시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스포피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과연 전주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시스포피아는 부지면적 1,051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볼링 장, 에어로빅장을 갖추고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인 1998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 관리등 근로복지공단의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또는 이관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설립 1년 후인 1999년 6월부터 2007년 12월 말일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대한불교 조계종유지재단에서 무상으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불교재단에서 수탁 기간중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 및 국회의 평가에서 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 매각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 정부 평가를 수용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전주시스포피아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차례 전주시에 매각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전혀 매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별다른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수탁 운영하던 재단에서는 노후화된 시설과 주변 체육시설의 활성화로 인하여 부실한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장기간 근로자 임금채불이라는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전주시스포피아 규모 정도로 다시 복합 체육시설을 설립하여 전주시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적게는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부 시민들을 위하여 일정한 체육종목의 전용구장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왜이리 인색하고 계획조차 하지 않는지, 혹시 가뜰이나 부족한 문화생활공간을 경제 논리로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불과 10여일만에 본의원에게 전주시스포피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1,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주를 사랑하고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송하진시장님! 시장께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간과하지 마시고 전주시스포피아를 전주시와 무관한 근로복지공단 재산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마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시설이 사유화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을 더 많이 계획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51회 임시회('08.3.12 ~ '08.3.19)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입니다. 전주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0여 억원을 투자하여 4개 생활권역에 연장 280Km로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도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국민생활체육 진흥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 도시 열섬현상 저감효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 각종 캠페인 및 전주시 정책의 홍보활동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한 전주 시민의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교통문화탐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횡단 보도 턱과 요철높이를 차도와 일치시키고 자전거 주차시설 등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켰으며 자전거타기 교육 및 무료 고장수리센터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도로환경을 이용해서 혼용도로와 독립도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는 인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면 을 고르게 유지하고 도로 끝부분을 차도와 연결하는 경계턱 등을 조절하여 장애우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도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버스정류장 옆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연계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분담율 10%를 장기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이외에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이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고 했지만 이용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중단되어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도 자전거 도로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전거 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분담, 도시열섬 저감효과 및 시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벌써부터 하루가 다르게 전주의 기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급하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정책으로 선정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전주의 지세는 숙명적으로 말굽형 산세로 바람 길이 막혀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열섬에 시달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는 비 미래지향적인 수동적 대응으로 난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금은 여름이 다가오면 전국에서 열섬 현상으로 가장 덥고 답답한 도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의 슬로건은 천년도시 전통도시지만 사실은 대기오염과 열섬으로 인해 무더위의 스트레스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의 저지대 사거리의 경우는 바람길이 소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등으로 시계(視界)가 뿌연한 LA형 스모그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출·퇴근길에 시민들은 코를 막고 있는 모습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관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측면으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오염의 주범은 전주시 시내버스 전체를 하루속히 천연가스버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의 발생지는 공사장 먼지와 도로가의 분산된 먼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청소차를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주의 대기 오염도를 전주시민들이 체감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례, 즉 서울시처럼 대기기준을 만들도록 관련조례 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당면 과제인 열섬 저감 대책 부서의 미 설립으로 인해 63만 전주시민들이 더위로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집행부의 약속대로 대기오염, 바람길 확보, 열섬저감 효과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정된 부서에서는 과학적 대안 들의 로드맵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전주시민에게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저지와 열섬저감효과와 바람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그 만큼 시급하게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담하는 집행 국은 전주시가 여름철 내내 건강한 산소를 얻기 위한 실사구시적 과학적 접근을 다시 한번 하루속히 만들고 실행하기를 제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지산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오송제 둔덕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덕진 연못의 물결도 한결 푸른 것을 보면 봄은 우리 곁에 성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8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폭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로 인하여 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가까이서 보고 있노라면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공조직의 개편이란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인사 또한 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단행이 늦어짐으로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08년의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 년 중 한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파악과 조직안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혹 줄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큰 것입니다. 작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송천동 전라고 사거리에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국유지 폐공가가 하나 있는 것을 알았

습니다. 지난해에 대부 계약되지 않은 국유지 및 사유지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 30여 평 정도의 폐공가 땅은 국유지 자투리땅으로서 재활용 품 분리수거함 등으로 이용하면 좋을 듯 하여 관계과에 사용협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 잔재물을 치우기 위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폐공가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은 전주시 그 어느 부서에도 없었습니다. 관계부서는 미루기만 하고 추진부서도 명확치 않고 예산도 없어서 폐건축물을 치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있다가 다행히 2008년에는 폐공가 예산 2억원이 편성되어 이 예산을 집행하여 치울 수 있는가를 알아보니 이 또한 기초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실제 예산 집행이 되어 사업까지는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참으로 본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적응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은 옛날 조직이건 지금 개편된 조직이건 그 어느 조직이 좋고 효율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년 송하진 시장의 직무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조직 개편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송하진 시장께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서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류값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 있고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의 급등은 기본생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소비자 물가 또한 줄줄이 인상 될 것이 우려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 편성된 2008년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강조 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이 절대 향응만 받아도 그 직위를 해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덕목은 전주시 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청렴한 전주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직의 안정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를 각별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국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시의원 국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어 개정된 법률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타 시의 사례에 비춰 우리 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실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인 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주시 및 전라북도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에 봄비와 같은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정비사업 실정을 살펴보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비해 전주시 행정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 선 타 시·도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부담의 경감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려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비사업 관련 행정은 오히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연행정이 만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06년 10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안의 경우 주민 공람과 유관부서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30개 이상의 협의 대상부서를 6개 분야로 축소하고 있으며 협의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타 시의 예가 이러함에도 전주시의 경우는 최초 접수 후 각 부서 협의기간이 타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비구역 지정(안) 공 람·공 고까지 무려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 공람·공고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 부담과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러한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개선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접수 및 협의기간의 최소

화, 중복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 간소화 등의 주민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리 예상하여 도로 공 원 및 녹지의 설치등 도시관리 계획 및 토지이용 측면에 중점을 기울여 검토·협의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법적인 요소만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은 사업시행 인가시에 철저히 검토·협의하며 가능하다면 교통영향 평가시기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비계획의 변경절차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이 적극 협의하여 인수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숙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 맛과 멋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술도시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면서 63만 시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재원을 기존 교통수당으로 채우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 인구는 2008년 3월 현재 21,796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만 65세로 확대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화두는 교통수당 지급 관련 노인생활안정입니다. 물론, 노령연금 실시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수당 관련 예산은 54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각종 노인수당을 일원화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 도입되었으



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지급하였던 교통수당을 축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축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도모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외에 별도로 전액 국·도비를 지원하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 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통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외에 교통수당 확대지급시 해당 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차감 등 패럴티를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정부의 정책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노인들의 생활불안정에 대한 정책 비판을 자치단체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층은 서민들입니다. 노인 서민층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폐지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수당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지하철공사와 원활한 협조속에 만 65세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기존 교통수당 관련 예산이 아니더라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전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이 전액 국·도비로 교통수당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월4일자 시청강당에서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 실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과 연계된 공익형일자리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노인 서민층의 경제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는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연령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오니 시장께서는 돌봄과 배움으로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시는 시민여러

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 전주 알찬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해소대책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서류나 책 등 인쇄물의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은 점자나 녹음을 통한 방법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이 인쇄물의 우측 상단에 우표만한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주시 등록 시각장애인은 2007년 11월말 현재 2716명으로서 2002년 1,773명 대비 약 35%가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 그 증가율은 노령화와 당뇨병 등의 중도실명인구의 증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구가 매우 적고 그나마도 점자 및 녹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의 요금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공보 등은 이미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에 의하면,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1일부터 그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이미 충남도청과 경기도청이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도 하루 속히 도입되어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음성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함께 인쇄될 수 있어 종이 문서를 시각적으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귀로 읽어 정보접근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 지기를 촉구하는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원동과수원 마을과 학전참게쌀 마을로 2005년에 조성되어 현재 정보이용센터 건립 및 정보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과 주말농장 및 직거래등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마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의 목표와 비전을 놓고 볼 때 우수농산물의 직거래, 각종 체험행사의 홍보와 신청을 통한 단일치기형 행사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특색이 무엇인지, 이 특색을 살려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동과수 마을과 학전참게 쌀 마을의 과수와 참게쌀이라는 우수농산물로 과연 그 마을의 미래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관련 체험행사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 원당동학전과 덕진구 곡천마을이 지정되어 체험교육장, 메주체험장, 수생식물장 등 각종 체험행사를 하고 있으며 일정하게 가동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체험 마을이라는 테마속에서 과거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을 나열식으로 단일치기로 진행하고 있어서 특색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과연 전주권에서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 강원도나 충청도 등과 견주어 “특색있는 체험마을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특색있는 마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5대 역동산업중의 하나인 생태관광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보조관광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 생태관광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류형 생태관광사업은 무엇인지 쉽지 않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전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정보화마을과 농촌체험마을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주시 5대 역동산업중의 하나인 생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적으로 특색있는 체류형 농촌생태관광체험 마을을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학전정보화 마을은 주변 자연환경이 모악산을 끼고 있고 앞에 평야와 삼천이 흐르고 있어 좋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도자들이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 온 참게쌀농법, 주말농장, 메주체험장, 야생화체험장, 연간 300명의 중국인방문, 수생식물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체류형생태관광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학전 체류형 생태관광체험 마을은 곤충체험 마을과 야생화체험 마을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기존 농촌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을 병행하자는 데 있습니다. 곤충체험마을은 다양한 곤충을 배양하고 체험할수 있는 곤충체험관과 프로그램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야생화체험마을은 수 십가지 야생화 표본과 식재, 분양, 야생화교실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화마을과 농촌체험교실을 통해 하루에 끝내는 체험이 아니라 1박이상 민박형 농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생태관광하면 모악산자락의 곤충과 야생화체험 마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학전정보화마을 생태관광체험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전정보화 마을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마을 지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민자유치(곤충체험관, 야생화체험관)와 행정지원(다목적체험실, 식당, 민박형 농가리모델링)을 통해 그 단초를 만들어 가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의 생태관 광명소를 학전정보화마을 변화시키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 전주시의 생태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송하진시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34명 의원님들의 권익보호와 63만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의장님과 지역구 현안문제와 당면문제를 관철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칩을 지나 내일이면 춘분이 다가오면서 겨우내 찬바람에 시달리던 가로수에도 어느덧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경제 소비자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데 도



전주시민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오 각성을 촉구하면서 서민경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서민경제 살려야 된다는 정책입안에 대해서 전주시가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한 것 처럼 서민 물가대책 서민경제 살리기 을 최우선 과제와 경제 살리기 전쟁을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드리 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개·폐 회식을 구도심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지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 보조금 관 리조례를 근거하여 2000년 처음 시작하여 8년이 지나 금년 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예산은 평균 1회에 약 23억, 그간 총사업비는 약207억 소요되었으며 금년에는 특별히 29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규모있고 야심찬 전주국제영화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기대와 의아심을 가지고 출발 한 영화제는 횡수를 거듭 할 수록 안정된 프로그램과 관람객 증가로 흥행면 에서 성공한 케이스 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 개·폐회 식만은 영화의 거리가 아닌 덕진 모악당에서 약 5,000여명이 개·폐회식에 참석하여 영화제 기간중에도 영화 매니아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도심 영화의 거리는 통제와 규제를 강요함으로써 지역주민에 게 원성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개·폐회식을 구도심 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9회 전주국제 영화제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에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두 번째 필라멘트 누미나리 시설하고 영화의 거리 전체와 오거리 6로 문화 광장 까지 설치 해 줄 것을 요구 하며 조형물과 누미나리 철거 계획은 영화제가 끝난 이후 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철거 해 줄 것을 주문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주 국제 영화제 기간에 바이 전주 바이 전북 코너를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주 국제 영화제 기념품 구입이 가능한 전라북도 특상품 코너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반듯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도심에서 영화제 개최 식이 유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 드리 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경제, 관광부서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준비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국제영화제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제252회 임시회('08. 4. 14 ~ '08. 4. 17)

●●● 김명지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 전주 미래 설계에 전념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꽃샘 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받으며 전주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라며 이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도시경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시미관을 새롭게 형성하고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안락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자 애쓰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하나가 지자체의 도시경관조례 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경관 관련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여섯곳, 시급 지자체의 경우 21개 곳,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35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도시경관조례는 아직 제정되어있지 못하고 전주 도시계획조례, 전주시 건축조례, 전주시 주택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주시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등에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적 도시(Art-Polis)가 진정한 한국적 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들은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술적 도시 2008년 시범사업으로 가로경관 5개 사업, 생태경관 3개 사업, 역사경관 1개 사업, 공공건축물 2개 사업, 시민참여 2개 사업, 기타사업 1개로 총 1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가로경관에서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신호등 디자인 개선, 한옥마을 간판정비 사업,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공공용 현수막 없는 도시 조성 및 게시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으로는 서부신시가미관광장 실개천 생태호수 조성,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화

산체육관 앞 천수광장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경관으로는 태조어진봉안행렬반차도 탁인형 재현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과 방범컨테이너 정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분야로는 도시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 전주예술도시 현상공모 사업을 그리고 기타 전주역 광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천년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도시 미관에는 요소요소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사업들이기에 본 의원은 미래의 전주미관계획을 새롭게 설립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예술적 도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경관을 책임질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전주시경관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미적인 도시로 디자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망치는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타 도시와 구별되는 전주시 역사·문화적 특색을 빛낼 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하시고 예술적도시 종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축축하게 내린 봄비를 맞으며 떨어지는 꽃잎의 아름다움이 한껏 낭만 스럽습니다. 파릇파릇 돌아나는 잎사귀의 속삭임은 멀지 않아 푸른 산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활기찬 계절을 맞아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관 관련 조례제정을 앞다투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욕구에 발맞추어 전주시에서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산업의 판매 마케팅 중심에는 광고가 들어 있으며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판매의 성공여부도 결정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의 시대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고의 피해 또한 크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광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감을 유발 시킵니다. 광고물의 범람 속에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고통은 자연으로의 가치상

실의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 게시대와 대형광고 게시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각의 거대한 게시판에는 그야말로 판에 박은 광고가 집단으로 붙여져 있어서 누가 얼마나 보는지 몰라도 결코 쾌적한 거리의 유쾌함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해 본즉 전주시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50개, 그리고 시지정 벽보판이 4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의 흡수를 통하여 거리의 미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 욕구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른 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잘 정리 제작된 시지정벽보판은 부천시의 로고와 질서 있는 광고 게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지정벽보판을 잘 관리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시지정벽보판하고는 뚜렷하게 비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와 시지정벽보판을 과감하게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천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한 결단은 지금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이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주시를 위한 아토피리스의 성공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기존의 틀을 놓고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의 고민은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울러서 지난 3월 25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송천동 전라고 사거리의 국유지 폐공가는 발언한지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앞으로 썸지 공원으로 잘 가꾸어져 송천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애쓰신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국철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 철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준공된 오목대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8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종 제거, 화장실 리모델링, 자연석 쌓기, 산책로 및 탐방로 테크



설치, 조정등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 28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한달에 2~3번의 대형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예산보다도 쓰임새가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는 참여 인원 1,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 화전놀이가 공예품 전시관 주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방로 주변 환경정비와 공예품 전시관 부근의 붕괴 위험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의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는 바와같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가옥과 담방로 주변 환경정비의 시급성입니다. 연간 28만 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새롭게 개설된 담방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의 가치는 단순한 산책로의 개념을 뛰어넘어 위치적 특성 하나만으로도 도심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된 오목대 담방로가 환경정비의 미비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예품 전시관 부근의 붕괴 위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200여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중동부 레이테(Leyte)섬의 대형 산사태를 교훈삼아 우리는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상영하며...)이, 공예품 전시관 주변 오목대는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본적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땀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재난의 예방책이 당국의 무관심과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다면 후회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재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비된 정비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남규 의원

4대 축제 관광화와 한옥마을 민박개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북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방역 당국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비상한 예찰과 대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닭과 오리의 가금농가는 실의에 빠져 있고 오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찾지 않아 소비위축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깊은 위로를 드리며 전주시 의회에서도 해당 농가에 대한 대책 대책을 강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 5. 1 ~ 6. 8일까지 연이어서 전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12개 축제중 4대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전통과 역사를 지닌 9회, 12회, 34회 등 연륜이 깊어가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축제의 방향이 축제의 산업화였다면 민선 4기 축제는 관광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 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 지역민들의 음식, 숙박업체, 광고, 기획 및 관련 업계에는 성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축제의 기회는 이제는 체류형 관광축제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해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5만명이라고 합니다.
축제를 찾는 외국인 및 타지인들이 스쳐가는 축제가 아니고 1~2일 정도는 머무르는 축제로 행사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4대 축제 중 그래도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는 9회째 열리는 전주 국제영화제입니다. 초기 1, 2, 3, 4 대회때는 체류형 기간이 길었는데 2007년에는 당일 방문이 43.6%였으며 평균 2일을 체류했습니다.
숙박은 여관, 여인숙이 20%이고 친구, 친지가 27%였으며 PC방, 찜질방, 무박의 형태였습니다.
육구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옥마을 민박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4대 축제를 통하여 전주의 음식과 한옥숙박은 외지인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와 개선점 이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때 입니다. 그래서 연계관광, 체류숙박, 맛투어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 조직위의 행사일정과 축제 산업화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부터는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5월 1일은 드디어 은행로가 개통됩니다. 980m 거리에 130억 예산이 투입된 1m당 1,326만이 투자된 돈으로 깔은 전주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깔았습니까?
이제 축제는 소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한 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민박시설을 원하는 가구는 1차 조사에 따르면 12가구 입니다. 가



장 큰 애로인 이불빨래는 깔끄미 체인 망으로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음식을 주변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가옥들의 기본적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한옥마을 민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 했으면 합니다.

이제 한옥마을 투자는 주민 소득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민박수용 형태는 47실 140여명 숙박 수용으로는 체류형 관광객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문화지구, 향교지구, 은행로, 태조로지구등을 거점화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한옥마을로 거듭나서 4대 축제와 한옥민박이 패키지 상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253회 임시회('08. 5. 20 ~ '08. 5. 23)

●●●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폐쇄문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3월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사실상 행정사건과 재정사건이 광주로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에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헌법상의 권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권리이고 사문화된 종이조각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을 기다리며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단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리가 멀어서 증인채택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주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북도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침내 200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개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을 슬그머니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더니 급기야 지난 4월부터는 전주 재판부 관할의 행정사건과 재정 신청

사건을 광주 본원으로 가져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렵게 설치된 광주고법 전주부가 이러한 사태를 맞게 된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패권주의 의식을 가진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도사리고 있고, 한편으로 전북도민들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방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때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1,000여건이 넘는 전주부의 재판이 고스란히 광주본원으로 넘어간다면 매년 100억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 및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광주·전남 지역으로 유출되어 질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실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전주시만 해도 현재 계류중인 100건의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 그동안 전주부에서 처리하던 항소심 30여건을 광주고 법 본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 공무원 출장비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패소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이라는 변칙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슬그머니 전주부의 재판을 광주본원으로 가져가 버린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에서 고등법원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환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 법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소율이 높아지고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범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환원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오히려 전주부를 확대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은행로 실개천 통수 및 경관



조명 점등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옥마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하나의 명품 거리로 관광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디자인 도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전주 한옥마을은 행로는 서울 인사동, 덕수궁길, 이태원로와 함께 가로환경 조성사업 시범, 성공사례로 등장합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일은 젊은이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외국인 내방객 등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마을과 은행로에 대한 기대감을 반증하며 명품거리로서 성공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문제점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청취 토론을 거쳐 요약했으며 단순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도로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도로의 주 기능인 차도, 보도, 진입로상의 보완점입니다. 설계시 차도의 돌틈이 넓습니다. 지금은 쇠석과 모래로 메워졌으나 여름철 비가 올 때 쇠석과 모래가 씻기고 균열을 잃을 때 돌틈이 벌어지고 흔들리면서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 태조로의 울퉁불퉁한 요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개선공사 했습니까?

아주 이해가 안되는 한 사업업자의 실험적 요소가 아닌가,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로의 돌들이 차도에서 줄눈처리 적절했는지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편 차도에서 보도를 거쳐서 진입할 때, 개인 집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진입로 돌다리 노퍽이 좁아서 자동차가 휘면서 진입할 때 경계석을 묻고 실개천에 자가용 바퀴가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집수정의 보완도 검토 바랍니다.

둘째, 경관, 야간조명, 나무식재 등입니다.

한옥마을의 멋스러움은 지붕의 곡선미, 서까래, 추녀, 기둥, 담장, 창호등의 미적 분위기입니다. 한옥미를 최대한 살려내는 시각적 경관, 식재, 야간 간접조명이 될 때 은행로의 전통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옥마을 분위기와 은행로 분위기가 종합적 시각으로 정리, 정비, 디자인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태조로와 은행로의 교차로 분수대 피석은 어떤 상징과 이미지 정체성을 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정자 앞을 가로막는 분수대 위의 백일홍 나무는 정자의 경관과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개천과 정원의 야간조명이 오방색 무늬인데 전통적인 은행로 거리와 맞는 조명인지요? 세째, 공간은 작지만 가장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틈새공간이 전통 정원과 전통 정자일

것입니다. 명품이 아닌 짝퉁이고 모방이고 인공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가들의 검토, 자문, 감리가 있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5분내에 간추려다보니 전통 정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정자의 지붕 서까래는 노출되어야 하나 판선자로 가려있고, 추녀는 곡선미가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되어있고 또 다른 부재를 덮었습니다. 또한, 나무는 방염과 방부, 방충도 안되었으며 기둥의 조명등은 노출된 두 선이 합선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설계 부실인지, 시공 미숙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명품의 거리로 거듭 났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송하진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작은 생활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민심도 얻자는 일거양득 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두 가지 이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문화적 충족도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상가 건물은 있지만 그 건물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일반적인 경제론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이러한 공간들이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효자3동에도 서도 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난 1994년에 들어섰고 층수는 11층에 해당하며 층당 평수는 700여평에 달하는 공간입니다. 건축 된지는 14년째이지만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간이 활성화 되지 못해 그로인해 그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효자3동 지역 내 단일 상가 건물로는 제일 큰 서도 프라자 건물을 계속해서 방치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살려야 된다는 지역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경



제 활성화와 밀집 주거단지인 상산타운, 현대, 롯데, 래미안,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성화해서 그로인해 지역경제도 함께 살리자는 대안을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이 전주시민갤러리, 동문거리 가로디자인, 인후동 청소년문화거리, 동산 무지개도서관, 선너머 건강치료원, 금암실버마당, 인후 작은 도서관 등 9곳이 있습니다.

현재 호성실버마당, 팔복동 공부방, 완산골 역사문화공간, 남노송동 작은 도서관, 호성 작은 도서관, 풍남동 전통문화마당, 평화사회복지도서관 등 7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은 밀집형 아파트에서 동선이 가까울수록 최상의 위치로 지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도 프라자 건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과 그로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여건이 매우 충족되어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호자3동 지역경제 및 문화공간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주시내에는 많은 나무가 식재되고 식재된 나무가 자라면서 좋은 환경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주시 열섬도시 현상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온통 나무만 식재할 줄 알지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는 가꾸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식재되면서 병해충이 발생하여 해충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시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으로 인한 시민 및 도로변 상가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기 농약살포와 지속적인 살포가 되지 않아 병해충이 계속 발생하여 이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문가에게 문의

한 결과 보통 일반적인 살포식 농약방제는 세밀한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살포한 농약의 지속기간이 짧아서 연속성 있는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방제는 지속적인 적기 방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는 데 나무의 병해충이 발생할 때마다 농약을 살포하면 이 때문에 시민들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농약 살포로 인한 시민건강이 심히 우려되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로 방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에는 소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민에게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이미 서울, 광주, 대구 등 많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좋은 방제 효과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더욱더 확대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사업 시행에는 본격적이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좋은 숲가꾸기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상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살포하여 시민 민원 발생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숲 쾌적한 도시에 걸 맞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병해충과 농약살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푸른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것보다 조성된 숲을 잘 가꾸고 이용하여야 만이 더욱더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될 인후 1·3동, 우아 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전주시 인후도시근린공원은 인후동과 우아동에 걸쳐있는 산림공원으로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수많은 인근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태복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自然風景地)를 보호하고 국



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장소'로서 이를 다시 말하면 공원은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부합할 목적과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18일 이후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후공원 조성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이후동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 예산 52억원을 통하여 자연학습장, 산림치유길, 지압길, 합죽선광장 등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78억원의 민간자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등 유료 운동시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주시 공원지역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은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공간이며 푸른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또한, 전주시 도심생태환경의 최후의 보루로서 훌륭하게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35m 높이, 150m 길이의 지주와 그물망을 치고 특정한 계층들이 특정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및 유료 스포츠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것은 전주시 도시공원의 기본적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게 되는 최악의 주민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민간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이 계획된 부지는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역과 경계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이후동 유일여자고등학교와 바로 담장하나를 경계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과 체육, 위락시설단지가 들어섰을 때 나타날 교통 혼잡, 소음과 조명 등에 의한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골프연습장등 스포츠위락시설을 목적으로 전주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인 사업주체가 해당공원부지의 실소유권자이기에 재산권행사 측면에서 등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대화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고 가능한 요구가 있다면 차분히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 극대화라는 민주적 행정의 근본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5대 시정방침중 하나로서 푸른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맑고 푸른 도시생태 환경 보전, 근린휴양공원, 소규모 체육광장등 자연 친화형 시민휴식공간 확대,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와 함께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한 2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지킴이 운동등 전주시의 녹색도시화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에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이후공원 조성사업은 푸른도시 전주를 향한 전주시의 화려한 구호와 실천의지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으로 연계된 사업으로서 2007년에는 특별교부세로 설립된 1개소를 포함하여 6개소, 2008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총 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중이거나 5월 개관 예정인 작은도서관은 5개소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민들 앞에 그 면모를 드러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작은도서관의 공식 개관을 앞두고 본의원은 설레임과 함께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설은 전주시에서 해솔테니 운영은 알아서 잘 해보라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운영에만 의존함으로써 자칫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상호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자치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자들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욕구 충족 및 자기계발에 만족토록 할 전문가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 노하우나 전문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운영메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전주시 담당부서가 나서서 운영자를 상대로 한 수시교육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메뉴얼에는 운영프로그램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지원 및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고을 시민대학 수료자들을 활용하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포함하여 운영자들이 교과서로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문고도 전주시에 61개소나 있습니다. 이 사립문고는 작은도서관 보다는 적은 규모의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



어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시로서는 사립문고를 활성화하여 작은도서관과 연계시켜 사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시립도서관 5개소와 작은도서관 6개소, 그리고 사립문고 61개소가 주민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평생학습센터와도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 결합되었으면 합니다. 연계방법은 5개의 시립도서관이 거점역할을 하고 이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범위를 설정, 지역내에 소속된 작은도서관과 사립문고를 종적으로 묶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와 지역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횡적으로 연결하여 긴밀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매뉴얼 작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형성, 그리고 예산 확충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본의원이 언급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내용들을 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담아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도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전 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우수울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사비 1,350억, 감리비 50억, 기본계획 용역등 기타 36억원으로, 총 사업비 1,436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수울 제고 사업은 현재 우수율이 6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1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전주시의 시급한 우선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우수율 제고 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의 우수율을 85%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 급수를 위한 미래형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체계구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전 주시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율 제고 사업은 체계화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전주시의 모호한 업체 선정으로 인해 1순위 로 선정되었다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 H 건설업체와 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전주시의 우수율 제고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의 위험도를 극복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기본설계에서 준공 및 사후 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발주청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27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공고 후 3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나 특정업체를 위한 평가기준이라는 이유로 최종 수행능력평가를 제출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전·후의 세부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전주시에서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건설사업관리(CM)를 추진하고자 했던것은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 사업의 효율적 의사결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관리, 각 단계별 경제성 검토, 문제 발생방지 및 대응지원, 전문적 지식을 통한 발주 처의 의사결정에 능동적 지원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가치공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전주시의 우수율 제고사업이 원가대비 얼마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입니다.

전면 책임감리에 비해 다소의 비용부담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부담을 떨쳐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건설사업관리(CM)로써의 추진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운 수돗물이 새고 있습니다. 일년에 약 25백만톤의 수돗물이 지하에 스며 들고 있으며 돈으로 환산하면 2007년도 기준 일년에 약 100억원, 한달에 8억, 하루에 약 2,7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은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 판단과 획기적인 단안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싱그러움이 우리를 활기치게 해주며 며칠 남지 않은 가정의 달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 공단이 출범시기의 계획차질로 인하여 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8개 시설에 전주시 시설관리부서는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예측으로 몇 달째 인력부족의 문제발생에 대해 정확한 인력수요 판단과 예측가능한 행정이 왜 필요한지 시사해 주는 대목과 전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빚어졌던 일부 간부직에 대한 인사공백에 이어 상급자치단체인 전북도와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인사공백 부분은 이미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사와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인사문제로 무려 3개월씩이나 공백상태로 있었던 보건소장과 아트폴리스과장 발령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장직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보직임에도 인사과정에서 빚어진 인사 갈등으로 상당기간 동안 공석이 계속되었습니다.

나 중에는 보건소장 선출과정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목소리를 내는 일이 벌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보건소장을 발령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앞으로 전북도와의 인사교류에 후유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땅한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늦춰야 했던 아트폴리스과장직 역시 수개월 간의 공백기간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생소한 예술도시국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해가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사업 전반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제에 아트폴리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서부터 조직체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화로운 관계설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63만 전주시민들은 미래지향적인 자치단체 간의 관계 설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이나 전북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역시 행정체제와 조직 여건상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두 기관간의 협력과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서

로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로 공동발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인사와 조직, 예산을 둘러싸고 어느 한 쪽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이 원인일 것이나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사업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협력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민선 4기 주요사업들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제8대 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볼 때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경전철 사업의 일방적 취소, 35사단 부지 개발 이익금의 배분 협약등을 들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때 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과 정과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 전에 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간부급 공무원들의 진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초여름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에 63만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 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한국옥외 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와 협약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 시대와 시지정 벽보판의 도시경관사업차원에서 철거를 검토 할 것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전주시 시정벽보판은 즉각 철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협약의 미비로인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적극 추진될 도시경관 혁신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언에 대한 대책으로 보내온 답변의 시설개선및 여기에 편성된 시지정 벽보판 개선비 2억원 집행과 앞으로 편성계획이라고 하는 게시대 시설개선을 위한 2009년 본예산 확보예정이라고 하는 5천 5백만원의 편성은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

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와 현수막지정 게시대 150개의 운영협약을 3년간 체결 하였으며, 2005년 시 지정 게시판 은 2005년 10월 365개에(지금은 늘어나서 440개 됩니다.) 대하여 마찬가지로 3년간 운영 협약 하였 습니다. 이 현수막 위 타물관리 협약서에 의하면 제 13조3항에 탈부착수수료 500원을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다만 일반인 이 납부를 거부 하면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내겠다. 하면 안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 외에 이 협약서에는 그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징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 니다. 다만, 옥외 광고 게첨시 전주시 조례에 의 해서 현수막 게첨수수료는 일주일에 개당 3,000 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운용은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가. 현재의 현수막 게시대 개선시설 비는 개당 약 500만원 소요 되었다고 하며 상단 광고 광고료는 장소에 따라서 틀리나 대략 연간 200만 원에서 22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협회에는 연간 한 개당 월 6,000원, 합하여 72,000 원이 납부되고 광고제작비는 개당 50~60만원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40~160 여만 원은 누가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고 전주시와 협약된 사항도 또한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물 게첨시 150개에 개당 5~6 장을 게첨 할 수 있으며, 게첨료는 일주일에 업체에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중 3,000원만이 전주시 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세입은 2007년 기준으로 116,787,000원입니 다. 또한, 7,000원의 게첨 대행료가 있는데 광고 업체에서 달면 협회에 내지 않아도 되고 협회에서 달면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2007년의 경우 38,929장이 게첨 되어 29,427장은 일반 광고사가 달고 7,665장은 협회 에서 달았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누가 게첨하느냐, 어떻게해서 그 기준이 설정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 설정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에서 운용하 여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현수막 게시대 전체로 보면 상단 광고료 와 게첨료를 합하여 연간 약 15억원의 금액이 발생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시지정 벽보판은 별도로 연간 상단광고 료가(지금 많이 비어있기도 하죠.) 2007년에 150 만원 협회에 입금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 벽보판은 전주시정을 알리는 홍보 광고물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기때문에 유 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의 영업 광고도 매우 중요 합니다. 한국옥외광고 협회 전주시지회의 운영 또한 중요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아트폴 리스 사업 또한 매우 중요 합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이며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시장께 서는 각별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산 쇠 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하십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조류인 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과 굴욕적 협상 은 무효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 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새만금과 연계한 전주시의 발전 전략 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 산군도 일대 등 총 4개 지구 6천698만㎡가 경제자 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우리나라와 전북의 희 망이 담긴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라 북도는 새만금의 비전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 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군장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만 금 산업단지가 개발되며 미래형 신산업의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복합클러스터를 창출할 계획입 니다. 관광레저부문에서는 부안,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가 포함되어 총 8개의 골프장등 레저, 휴양, 문화, 생태가 겸 비된 국제관광 신흥 메카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등 인프라 확충이 검토되 고 있으며, 옥산을 배후주거단지로 주택, 대학, 연구개발센터 및 상업 등으로 복합도시가 조성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현대 중공업 조선소 유치로 종업원 11,000명과 다수의 협력업체 입주로 인한 5,000명을 포함, 16,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경제효과 1조원 이상으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시민의 역량 을 결집하여 산업과 관광의 도시로 거듭 나기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급변하고 있는 새만금과 군산지역 발전을 전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IC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전북의 교통 요지로 수 천 만평의 광활한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 246회 임시회에서 북부권을 개발하여 남부권의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연계하고 전주를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중심도시로서 개발하는 시정 질문도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발언도 당시 시정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직통 고속화도로를 시급히 추진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북부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여 베드타운을 건설하고 특목고 또는 자립형 고등학교와 서울의 명문대 전주캠퍼스 유치는 물론 생태관광명소와 국제적인 호텔 건설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병원설치등 뉴타운프로젝트 같은 특단의 조치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본의원이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북부권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청의 발족에 발맞추어 T/F팀을 구성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북부권 개발 사업단과 같은 체제로 전주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활기 넘치는 전주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현장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내 주요 도로마다 설치 운영되고 운영될 예정인 무인주차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무인주차감시카메라는 지난 2005년 5월에 9개소에 9대, 2007년 5월에 17개소 20대가 설치되었고, 2008년 5월부터 19개소 24대가 소요예산 543백만원을 들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2년 사이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36개소 4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 단속건수는 완산구의 경우 2006년도 15,456건, 2007년도 28,095건, 2008년 4월 현재 12,891건

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설치된 24대가 본격 가동되면 당연히 단속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주차단속증을 발급하는 무인단속기계를 전주시민들은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이어 주차와의 전쟁이 선포되어 하늘에서 이동단속카메라 차량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출몰합니다. 전쟁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설치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카메라 설치사유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시민 모두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전주시는 주차장 확보 노력도 없고, 잘못된 신호체계의 정비, 주차단속이 가능한 도로선 정비도 없이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시설과 주차금지선 등의 보완도 없이 자동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기계에 주차단속을 맡기고 있습니다. 완산·덕진경찰서, 완산·덕진소방서, 완산·덕진구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7개 기관의 설치신청을 받아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했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상가매출에 타격이 있고 위축이 예상되니 운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설치지역 상인들과 민원인들에게 철거나 이설 등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몇 천원에서 1-2만원 짜리 물건을 사러갔다가 4-5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다시는 그 상가를 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채용하여 운전을 하는 부자들이 아닌 이상 주차카메라가 보이면 아예 피해 가는 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우리동네 수퍼를 이용하고 재래시장 가지는 것인데 누가 겁니까?

어디로 겁니까? 주차장 딸린 대형마트로 갑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을 대형마트 업주들이 내었는지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주차카메라 설치하여 단속 건수가 증가 한만큼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 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다양한 정책과 제도,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여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설치 지역 감시카메라의 운영시간을 가장 정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정비와 확대, 버스 베이구역 정비, 신호체계 및 도로선 정비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시민들에게 불법 주차가 우리 전주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니 동의하시고 참여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상을 알리고 설치지역 선정 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내 무인주차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교통량, 불법주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이 공감하는 운영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54회 임시회('08.6.11 ~ '08.6.20)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의원 입니다.

쇠고기, 광우병의 정국에서 농성중 수고하신 33명의 의원을 비롯한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혼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 8일 이틀간 제50회 전주 단오제는 가능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보완, 물맛이 행사의 현실성등 시사점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양일간 행사기간에 비하면 20여만명의 인파로 성황을 이룬 것은 단오가 가진 폭발적 잠재력일 것이며 도심속 덕진 연못이 갖는 장소성 일 것입니다.

풍납제에서 새 등지를 뜬지 2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향후 단오제의 볼거리를 차별화, 특색화 하지 않으면 평범한 축제로 전락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전주 단오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 전통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농경문화적 요소와 전통과 창조의 현대적 계승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축제의 정체성(색깔, 내용, 지향점)이 살아 있을 때 축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첫째, 단오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창포물맛이와 전통 축제로서 주요 메인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랜드마크와 메시지가 없이 많은 프로그램의 나열로 차별화와 특색화가 부족했습니다.

수질이 악화된 더러운 연못에서 더이상 물맛이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머리도 감고 목욕을하며 더위도 타지않고 부스럼 가려움을 방지하는 현대적 해석으로 피부미용의, 보건의료의 상업화 가능성, 웰빙을 넘어서 힐링등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포와 연근에서 녹아내린 효염이 있는 물맛이 체험을 문헌상이나 퍼포먼스 체험 수준이었습니다. 수질을 정화해서 대동적 물맛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 단오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강릉 단오제가 있고 서쪽의 법성포 단오제 축제가 있습니다. 전주 단오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적 요소의 복원과 정체성 강화

는 중요할 것 입니다. 강릉 단오제도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가 성황을 이루며 단오제 보존하는 보존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오 문화권에 대한 문헌규명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성포 파시난장은 조기출어를 위해서, 어부들을 위해서 타시난장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개칭해서 법성포 단오축제로 변경해서 전주를 바로 뒤쫓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축제인 전주 단오제는 옛 모습을 찾고 보존을 하기위해서는 가칭 전주단오제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셋째, 덕진연못 지표조사와 단오 세시풍습, 문화권에 대한 연구자료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오문화권과 세시풍습을 연구하는 외부전문가 9명이 6월 8일날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는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덕진연못의 지표조사와 단오문화권의 체계화된 용역을 주문했습니다.

즉, 문헌상의 기록들을 집대성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사만 있었지 민속 세시풍습, 덕진연못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의 정체성은 매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덕진연못의 지표조사는 예전에 용왕제를 지낸, 기우제를 지낸 용천혈의 사료적 보완과 덕진연못의 물맛이와 관련된 근거를 찾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유가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우리네 서민들은 걱정거리와 함께 마음의 주름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에 부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에서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CEO형 밀어붙이기식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모두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온나라의 국민들을 거리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희망의 불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자랑스런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시장과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가지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 시정발전위원회와 전시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시민공모제를 시장 산하기구로 두어서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각 부처에 맞게 각각



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때 정보에 뒤쳐져서 일을 그르치는 사례를 보아왔으며 그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논리부족으로 인한 설득력 부재, 그리고 다양하고 정확한 근거제시 미비 등으로도 사업을 그르쳐 온게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간에 치열한 생존게임에서 이기기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주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시장은 전주시 발전에 있어 각 그룹의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생산케 해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시민제안제를 만들 것을 아울러 제안합니다. 물론 시에는 각국별로, 과별로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별로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 시민주도형의 시책을 시민이 제안하면 시와 의회가 시민단체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다음 바로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주시민들의 에너지를 한데 묶어 낼 수 있는 전주의 노래를 공모해서 때론 응원가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즐겁게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즉 부산갈매기나 목포의 눈물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래만들기 사업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가 의지를 갖고있는 아트폴리스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고유사업으로 도시전체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특색있는 도시 가꾸기 사업, 그리고 전주에 있는 생태하천 살리기사업 과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한 한옥마을의 실개천 가꾸기사업등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이밖에도 시민과 함께할 사업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디겠지만 시민과 함께 할 때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대대수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반영시켜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발전을 위한 신나는 시민공모제의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줘야합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를 잘 들을 때 그사회는 생동감이 넘치며 전주경제의 2배 키우기가 아니라 전주의 2배 키우기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시민 즉 경쟁력 있는 전주시와 시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원동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나는 전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니다. 경쟁력은 한 두가지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와 문화향유, 전반적인 사회구조등 시민의 경쟁력이 시의 경쟁력입니다. 시의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한미쇠고기 재협상요구와 지방분권의 문제인 혁신도시 추진요구 천막농성과 시민서명운동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6·10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자존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만 오늘날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합의해 버린 매국적 한미쇠고기 협상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6월의 함성이 조국강산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민중의 진정한 함성을 듣지 못하고 졸속적인 미봉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모습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뼈속에서 사무치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저술된 플라톤의 <국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속에서 글라우콘의 정의론은正義(정의)의 기원과 본질은 부정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부정을 당하는 것이 악이지만 부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계약하여 부정을 행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을 정하여 정의란 것을 설정 하였습니다. 이 정의가 바로 최선인 것과 최악인 것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현실로 보면 부정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보다 훨씬 이득을 보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 것은 철인치자사상으로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통치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반듯한 통치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의 타락입니다.

그 원인의 근본은 계급간의 불일치이고 불일치의 시작은 통치자 계급의 욕망의 변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는 인간대신 점차 돈벌이를 사랑하는 인간이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권력은 지식이나 능력대신 재산의 크기 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빈부의 차이

가 커지고 부자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며 혁명이 일어나서 권력의 방종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으로서 동서고금을 통찰하건대 역사상 중국의 요순시대가 백성이 살기 가장 좋은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실체가 너무나 잘 알려져 버린 작금의 사태를 보고 본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땅이 뉘 땅이고 이민족이 어느 민족인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바로 강부자, 고소영의 전성시대라는 비야양의 정부를 지금 보고 통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밤 백만 민중의 함성을 들으셨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므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무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무효입니다. 무조건 재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반듯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나 불편한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지난 6월 3일부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주공·토공 통폐합 반대 철야농성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을 검토 중으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진행에 따라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국책사업으로 2007~2012년까지 전주시 상림동·중동·

만성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약 10,145천㎡의 부지에 토지공사 외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인구 29,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일자리 창출 26,000명, 생산유발 1조 9,300억원, 부가가치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면적의 83%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2008년 3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의 도시들과 연계되어 주변도시 발전의 주요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전주 북서부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만금 시대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주요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기에 전주 완주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고 통합기관을 다른 도시에 이전할 계획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의미가 상실되고 반쪽짜리 혁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힘을 합쳐 완주군과 협조하고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내 타 자치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반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당연논리를 넘어서서 통합되더라도 통합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지리적 이점이나 행정효율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필요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관심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도시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주·완주 혁신도시야말로 통합기관의 이전 적합지라는 논리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건설은 향후 전주·완주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송하진 시장께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통합반대 및 통합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주공과 토공의 통합반대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63만 전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은 나라에 매일 밤 뜨겁게 타오르는 촛불에 전국민들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이 왜 필요할까?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려는 국민들이 생겨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원입니다.

다 가오는 2012년 여수엑스포에 맞추어 국토해양부에서 전라선 철도의 고속열차 운행을 위하여 익산에서 신리간 복선 전철 민간투자 시설 사업을 하던 중 철도시설 및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아중역 위치에 전주 전철 변전소를 계획하고, 한전 동전주 변전소에서 산악 지형에 철탑을 건설하여 송전선로를 구축함으로써 전주 전철 변전소까지 전기를 인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154,000V의 송전철탑이 설치될 덕진구 산정동 백자마을과 행치마을 인근 산에는 기존에 154,000V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철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전류양을 합산하면 308,000V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송전철탑 반경 200M 이내 지역에는 백자마을 308세대 546명, 행치마을 43세대 98명, 한남신학교 학생 100여명 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전임 연구원으로 있는 조용성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송전선로 철탑에서 방출되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면역작용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유해요인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네델란드,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지중화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주시에 설치된 태평동의 태평변전소, 팔복동의 서곡변전소, 여의동의 전주변전소 등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탑을 설치하고 고압선이 우리가 생활하는 머리위로 항상 지나칠 때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왜 이웃도시의 잔치에 전주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전주시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는 기존에 한전에서 시설한 지중전력구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시행처의 예산절감과

함께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시행처가 한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전 송변전 설비계획에 의하여 2013년 10월까지 154,000V 지중 송전선로 2회선 건설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전력구내 추가 송전선로 수용공간이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와야 했습니다. 현재 지역 민원인에 의해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와 행치마을 입구인 아중역 변전소건설 위치 변경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막연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절히 부탁컨대 시장께서는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관련 시행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실의 문제가 올바르게 시정되어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덕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전주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우성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의원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은 학업에 열중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고 시에서는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천동 관내 해성중·고등학교 통학로는 금산사선 지방도로를 1,700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자전거 도로겸 인도 폭 1.5m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 2000년 초에 시설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 제로크고 작은 사고가 비밀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동 농협공판장 삼거리 앞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천시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장님은 현지를 확인하여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 그리고 가로등 시설을 완료하여 전주의 미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239회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한번 문화의집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2000년 진북 문화의집을 개관한 이래 5개의 문화의집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 하는 기본프로그램 20여개와 특징인 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배우고 창작활동을 하는 등 연인원 5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오전 9시부터 저녁9시까지 직원이 근무함에도 5개 문화의집 개관 이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푼도 증가지원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관시 준비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낡을대로 낡고 사양이 낮아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집 근무자 노고와 성과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2009년 본 예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어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정우성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시의원 백현규의원입니다.

더위와 함께 온 나라가 쇠고기 수입 건, 화물연대 파업, 정책의 혼선, 국회의 파행등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총체적 부실의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하는 심정이 의원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은 전통한옥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특색있는 계획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 중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 사업은 공공 공간과 공공 시설, 정보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 있는 예술적 도시의 비전 실현이고,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으로 환경의 질과 도시 이미지 향상, 이를 통해 알기 쉬운 표지판 개성 있는 가로시설물과 건축물로 보는 것이 즐겁고 걷는 것이 편한 가로를 조성하여 모든 공공장소는 카페와 같고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의 다리, 그림 같은 건축물로 어디를 가나 같은 모습이 아닌 시각적으로 활기차고 전주다운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천년 전주의 이미지 부각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 마을의 정비가 아트폴리스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전주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경기전과 주변을 살펴보면 아트폴리스 사업에 역행된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한옥보존 지원 조례, 경기전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허가 및 신고 행정에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태조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블록으로 형성되어 전통적이고 고풍스럽게 만들었지만 차량 통행으로 인해 군데군데 보수하기 바쁘고 보수한 부분이 보기가 흉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공이 되지않고 군데군데 보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시공을 했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과 주위 간판을 보면 통일 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를 통일 내지 조화 균형있게 하여 한옥 마을의 미관과 경관을 한국적인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안내소, 체험관 등의 간판에 외국인 이알 수 있도록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않는데 이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층 건물들에는 돌출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곳이 1층 건물에 돌출 간판이 있으며 지주 간판도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 간판도 규격에 맞게 도로에서 몇m를 떼는 간격이 있는데 바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옥보존 지원 조례 및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한옥 마을이 특정 구역 지정이 안되었는지 가로 정비 및 간판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미관과 환경이 보는 이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 정비나 간판 정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허가, 신고의 제제가 있고 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고 철저한 시행과 의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창 개보수도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며 한옥 마을을 정비하고 있는데 몇몇 군데 지붕을 보면 전통적인 기와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 강판 기와를 사용하고 있어 원래의 전통 한옥마을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 전통한옥마을이 역행되는 일 이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의 장님, 최찬옥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어느덧,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전주시 아파트 관련 행정중 부당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파손 비용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푸른도시를 조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아파트 녹지와 이에 따른 전지목 처리에 대한 전주시의 전지목 수거운반 및 톱밥화를 통한 재활용으로 아파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내에 있는 음식물 분리 수거함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구의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운영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차별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 아파트 음식물 분리 수거함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 세대에서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거점별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고 이 음식물을 음식물 수거운반 차량차가 실어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을 차량에 실기 위해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상차, 하차하는 도중에 수거함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600세대를 기준으로 10개에서 18개수거함이 연간 파손되어 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파손된 수거함의 보수 및 교체비용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주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민간 위탁사업자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저평형 아파트나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담당자의 제량으로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파손의 원인과 대책을 본청과 구청에서 파악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인 파손의 원인은 차량에 상차, 하차하면

서 파손되는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는 것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파손원인에 대한 비디오를 모니터 해봤다든가, 또는 사진으로 모니터한 결과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적게 잡아서 대략 300세대 이상 100개 아파트를 가정하고 평균 파손된 수거함을 7개로 잡고 수거함의 최근 최저가격을 4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천1백5십만원이며, 지금까지 5년간을 역추산하면 1억5천7백5십만원의 돈을 주민이 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의 음식물 수거함의 파손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해법을 들이댄 전형적인 이중행정입니다. 이는 아파트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민간위탁업자와 행정사이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검토하며 해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파트 조경수 전지목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일정하게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녹지공간과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의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특정개인을 위한 정원이 아니고 주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녹지공간이자 조경수이며, 그 공간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겐만 허락된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방된 녹지공간과 조경수는 푸른전주를 구성하는 한축이며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지된 폐목을 2006년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와 전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호동골매립장까지 수거운반을 해주고,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하여 톱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수거운반은 각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에 협의를 한적이 있지만 각 아파트에서 호동골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면 대 답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가로수 전지목과 아파트의 전지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톱밥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푸른도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리사이클링타운에 전주시 전지목전체를 톱밥화하고 자원화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당면해서 호동골매립장의 파쇄기를 활용하여 전지목을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 원배치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전주시 모든 아파트의 숙제이고 민원입니다. 전주시가 푸른도시를 추진하고 아파트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풀기위한 결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700세대의 경우 대략 매년 전지목이 1톤
트럭 4~7대분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전주시장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수많은
아파트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를 요청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제살리기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임기도 이곳 발언대에
서고 보니 수많은 과제를 뒤로 한 채 반환점을 지
나 후반기 임기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델란드의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
다해도 단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
처럼 우리 전주시의회도 소외계층과 삶에 지쳐
어려운 난관에 놓여있는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과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전주
시민들에 분양한 남부시장 대규모 건축물이 미
준공처리되어 무허가 건물이라면 선배동료 의원
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
을 다는 심정으로 남부시장 미준공 건축물 양성
화 축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은 시설 규모나 전통으로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전주시민
의 향수가 담뿍 젖어 있고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적인 재래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 이 서부 신시가지개발과 도청 이전 등으
로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대
체없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찾아오
는 고객마저 현저하게 줄어들어 바람길에 등불
을 지키는 심정으로 다른 방법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활은 이루표현 할 수없는 심각
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전주시장이 1972년도에 대지 면적
11,776 m²상에 350개 점포를 건축하여 전주시민
들에게 분양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 과정에서 허가사항대로 건축
하지 않고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 되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 해결하지 못
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건물이 완공된 지 36
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전주시장이 추진한 사업
의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전체 350개 점포 중

95%에 해당하는 331개 점포가 등기가 현재까지
나지 않아 미 준공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재산권 확보마저 제대로 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시장이 본인
의 지역구라는 이유가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
로서 말없이 어렵게 사는 상인들을 보고 울분이
치솟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하진시장께서는 본 사항을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신지 잘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남부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미 준공건물의 준공 처리가 최우선 일 것입니
다. 실례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남부시장과 동
일한 사항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
러분!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거나 직무를 방기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부시장과 같
은 재래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한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감사합니다.

또, 전반기 의회 격려와 협조를 아끼주시지 않으
신 전주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
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56회 정례회('08.7.10 ~ '08.7.24)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입니다.

올 여름 역시 온난화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운데
전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한,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
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날씨가 이처럼 더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열
섬저감과 바람길 확보에 따른 정책들을 발 빠르
게 개발해서 공기 좋고 시원한 전주를 만들어 가
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맹 더
위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정서
에 맞게 분수나 실개천 벽천공사도 때맞춰 완공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
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
다.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
장님을 비롯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



의 다양한 곳에서 다각적인 문화 예술관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전통문화예술을 기틀로 한 아트 폴리스 전주관을 만들 지는데 이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화(詩畵)가 시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시화를 감상하는 동안 삶에 있어서 작은 여유를 찾아 주는 것이며 외지의 손님들 에게도 전주 문화도시의 특색을 심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시화를 전시 함으로서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 폴리스 전주관을 한층 고조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877개와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 5곳, 근린공원 31곳, 어린이공원 108곳 묘지공원 1곳이 있습니다. 시화를 이러한 공간에 과감히 설치해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아트폴리스 전주관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된 아트폴리스 전주관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 되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동하는 문화적 정보 교류를 제공함으로서 이를 관광자원까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도시다운 낭만적 여유가 있는 승강장의 작은 공간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본의원의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트 폴리스 전주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 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3동, 우아2동지역구 서윤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3만 전주시민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민들의 합심과 연대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내팽개쳐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 내기 위하여 전주시민에 의한, 전주시민을 위한 자위권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63만의 민의의 전당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그리고 전주시 기관 내 공공급식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국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전주시 직속 기관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를 넘어 우리의 땅 전주에서는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미 각계 각층에서 광우병위협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 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서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방침을 밝혔으며, 7월23일 치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2명의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학교 급식에 한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모습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 역시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 및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예산부족분 지원하기로 하고, 시·군 축산물 생산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2008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축산물을 납품하는 5개의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을 하였으며 전국의 48개 병원에서는 구내 식당과 환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한줄기로 모아내고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전주시를 전국의 자랑이 될 만한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협약입니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시민협약은 전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소비자체인 전주시민 등 3주체가 실천 프로그램과의 마련과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산과 행정상의 각종 지원과 쇠고기 유통 정밀감시 강화하고 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금지 지침마련과 친환경식재료 구매 지원하며, 모든 급식소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식자재 구매자료 공개하고 음식관련협회, 대형마트 등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과 협약참여 서명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험협약은 법적인 강제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촛불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듯이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실험협약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힘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4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124명에 직원 55명, 연간 거래량 7만5천톤에 거래액 900억원으로 삼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농수산물 물류 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농수산물 쓰레기는 연간 311톤으로 처리비용으로 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수산물 쓰레기는 241톤으로 법인 자체 보유시설로 운반하여 감량처리 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고 있으나, 수산물 쓰레기는 70톤으로 중도매인별로 수거 전문용기에 수집 보관하면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수산물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거리상 먼 진안에 있고, 연간 처리비용이 고작 1,200만원이다 보니 수익성이 맞지 않아 신속하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다보니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상인들이 인근 배치된 전주시 공동수거용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위생적이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은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산물 쓰레기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법인별로 자체 처리하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에서는 수산물쓰레기 문제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안이나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수산물쓰레기를 전주시 관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다는 것과 폐기물처리법 18조 1항에만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같은 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4조 1항의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수거해가는 '정읍시'의 '공영처리' 방식을 참조하여,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참조 자료 표1,2를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욱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예년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원유값 폭등으로 자고 나면 생필품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는가하면,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색되는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보다 내일의 더 큰 희망을 믿고 있기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한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막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활성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기준으로 막프로젝트의 근원을 찾자면 전주의 넉넉한 인심에 전라도의 맛으로 태어난 자연발생적인 막걸리 문화를 전주시에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전주의 막걸리 문화는



한마디로 푸짐한 전주의 음식과 손맛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주를 찾는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막걸리 집에서 놀라는 것은 막걸리의 맛 보다는 막걸리 주전자를 비울 때 마다 차려주는 각양각색의 넉넉한 안주 인심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막걸리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막걸리 개발을 위해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막걸리를 음식관광산업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막걸리 문화축제나 체험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전주 천년의 맛 잔치'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막걸리 축제를 전 주약령시 축제나 김장 축제 등에 포함시켰으나 이보다는 전주의 맛을 상징하는 맛 축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국 각지의 전통주가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는데다 주류의 속성상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걸리는 푸짐한 안주가 있는 맛 잔치와 더 어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걸리는 기능성 음료가 아니며 푸짐한 전주의 맛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먹거리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막걸리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기능성 막걸리를 개발하고 판매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막걸리를 제외한 주류 판매업소들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막걸리 판매에 앞장서는 모습이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가 막걸리 판매 홍보에 나서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0여개에 이르는 판매업소 가운데 극히 소수의 업소만 비교적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소 대부분의 위생상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주 막걸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관광객까지 막걸리집을 찾아가고 있으나 위생상태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걸리 판매업소가 밀집한 삼천동 주택가에서는 늦게까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쓰레기와 방노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가 하면, 골목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막걸리 판매 매출과 아무런 관련없는 시민들에게 더 이

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 코스에 막걸리 촌을 연계하거나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과 이어지는 먹거리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음식관광산업화의 하나로 막걸리 문화를 채택한 이상, 차별화된 정책으로 막걸리 문화가 또 다른 전주를 상징하는 테마관광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규 의원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폭염과 집중 장마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호성동, 우아2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택행정과,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직무 유기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3차 791세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서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도로 미개설과 가감차선 토지 미확보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택 행정과에서는 6개월간 임시 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할 시민들과 상가 입주자, 전세자, 및 어린이집이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입주한 180여 세대가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등기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 대출금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전북도청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가감차선 도로 부지 중 간부지 16평방미터를 덕진구청 건설과에서는 모회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10년간 사용승인을 허가하여 아예 공사조차 못하고 도로끝 부분인 5평방미터가 사유지 토지로 토지 주인은 엄청난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사용승인으로 791세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감독자인 주택 행정과와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년전 입주한 진흥더블파크 1.2차 1400여 세대 진입로 개설시 입출구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아서 본의원이 전북도청 교통과에 책임을 물으니 전주시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금까지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아 그곳 진흥삼거리 2년 동안 전북지역 도로망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의원이 덕진경찰서와 시당국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요

구하여 설치를 했는데 전주역 방향 도로에 설치를 하여야 그 신호위반 카메라를 반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신호위반 건수가 전북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어 덕진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하니 2km이내에는 같은 방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할 수가 없다는 규정만을 주장하여 본 의원이 그러면 전주역앞 위반시설 감시카메라를 송천동 방향으로 옮겨 설치하게 되면 진흥 삼거리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속히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만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속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심사해야 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상처와 피해를 주는 심사에 다시 한번 철저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시공 업체인 진흥기업과 모건설회사 측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행정착오만을 지적하고 시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하진 시장께서는 잘못된 행정의 실수를 속히 인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 흥 3차 입주민들에게 입주 승인을 허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진흥더블파크 1.2차 입 출입 도로에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전주시 교통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주당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은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전주시 지역주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되어 감동과 행복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한국사회복지 역사에 남을 부도덕한 행정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전주시가 수치를 당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덕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기만한 행정에 화가 났습니다. 시설이 꽤 쇠

어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도 전주시 행정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동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전주 시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초래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입소자 인권침해, 부정한 회계,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사회복지관련 행정업무는 무방비로 일관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민심 이반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 특히 소외된 전주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기존의 관성에 젖은 전주시 복지 행정으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특정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미비한데도 설치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그리고 고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법인시설이 아님에도 법인시설로 인정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한 사회복지법인이 부지없이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신축한 공사가 부실공사되어도 사용승인이나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주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지 않는다면 송하진 시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무능력과 관료성에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시설과 특정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행정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한 번 주장하면서 복지행정의 형태와 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준의 공정성, 형평성이 부재하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시안을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확보 여부나, 보통재산의 기준 그리고 목적사업 외 정관 기재 기준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 부정과 특혜가 예방되게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여 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인 기능보강사업 사업 신청 기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 되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불응하는 만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그 세부적인 토지 확보 여부나 신청자 격 제한을 두는 기준을 홍보하여 현재 특정인에게만 하는 사업 안내를 하는 형태를 버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활용하여 건전한 경쟁 과 살맛나는 전주시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조금지원 기준에 미달



되거나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태를 바로잡고 공평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만이 전주시가 그동안 쏟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애정만큼 효과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전주시가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서비스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한 절차와 홍보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어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마칠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어느 자치 단체장보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대형마트는 2008년 1월 현재 이마트, 롯데 백화점 등 6개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3~4개의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는 점포당 하루 2억원, 연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전주시의 경우 백화점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4,000억원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 순환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피폐됨은 물론,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로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의 피해를 막고자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치, 상생 협의회를 통한 도내 농산물 취급 및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 장동 물류센터와 중소 상인을 연결하는 POS 즉 판매관리시스템 추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상품권 판매 시스템 구축, '전통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점포 개설조건이 '등록제'로 명시되어 있어 규제가 미미하기에, 기타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발생시키는 등, 시간 지연 이상의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고, 기존 입점 업체들은 도내 농산물 취급 등 이행 각서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의

회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치에 고군분투 하는 시장경제 의를 표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이미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과 시민 단체의 힘이 대항력으로 조정 능력을 갖도록 '심의 위원회'에 참여 시키거나,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만 책임지려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행정력으로 담아내는 인식의 전환과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업 발전 상생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추구합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구성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란한 시작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상생 협의회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 기존 입점 업체들이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산품을 애초 약속대로 구매하는지를 살펴보기길 바랍니다. 대형마트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지역산품 구매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함으로 써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지역산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역산품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전주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발언을 시장경제서는 깊이 숙고하시어, 대형마트의 피해로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중소 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나 새로 구성된 제1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는 2004년부터 추진된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저조하 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5천호 정도에 보급된 태양광 주택에서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 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에 대한 부분도 일조량에 비해 보급정도가 적고 대응주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관있는 담당계로 환경정책계, 에너지계, 재활용계, 첨단산업계 등이 있지만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는 없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차질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오는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410억의 국비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가 그린시티, 솔라시티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계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시장께 요구합니다.
두번째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과 태양광발전 보급을 전주에서 적극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 상대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공용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예비비내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건의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동 우미아파트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표1의 산출근거에 의거 옥상면적 2,644㎡중 유효면적을 1,500㎡로 계산할 경우 1일 전기생산량은 2,250KW이며 월간생

산량은 67,500KW이고 이것을 한전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45,697,500원을 전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미아파트가 월간 대략적 평균이 27,000k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43,197,500원이 매월 적립할 수 있고 6대4, 또는 7대3의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볼때 1년에서 2년정도면 초기 자부담 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전주시 전체 아파트 옥상면적 783,623㎡ 중 덕진구는 336,242㎡이고 완산구는 447,381㎡ 이것을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500,000㎡로 가정하여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보급 할 경우를 계산하면 1일 전기생산량이 150,000kw이고 월간 전기생산량은 350,000kw이며 이를 한전에 판매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볼때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뿐만아니라 이를 통한 솔라시티를 구현하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56회 정례회('08.7.10 ~ '08.7.24)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호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입니다.
올 여름 역시 온난화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운데 전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한,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날씨가 이처럼 더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열섬저감과 바람길 확보에 따른 정책들을 발 빠르게 개발해서 공기 좋고 시원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맹 더위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분수나 실개천 벽천공사도 때 맞춰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의 다양한 곳에서 다각적인 문화 예술판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전통문화예술을 기틀로 한 아트 폴리스 전주판을 만들 지는데 이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화(詩畵)가 시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시화를 감상하는 동안 삶에 있어서 작은 여유를 찾아 주는 것이며 외지의 손님들에게도 전주 문화도시의 특색을 심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화를 전시함으로써 문화 예술인과 함께 하는 아트폴리스 전주관을 한층 고조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877개와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 5곳, 근린공원 31곳, 어린이공원 108곳 묘지공원 1곳이 있습니다. 시화를 이러한 공간에 과감히 설치해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아트폴리스 전주관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된 아트폴리스 전주관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 되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동하는 문학적 정보 교류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관광 자원까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도시다운 낭만적 여유가 있는 승강장의 작은 공간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본의원의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트폴리스 전주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3동, 우아2동지역구 서윤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3만 전주 시민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 시민들의 합심과 연대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내팽개쳐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전주 시민에 의한, 전주 시민을 위한 자위권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63만의 민의의 정당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그리고 전주시 기관 내 공공급식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국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전주시 직속 기관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를 넘어 우리의 땅 전주에서는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전주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미 각계 각층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서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방침을 밝혔으며, 7월23일 치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2명의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학교 급식에 한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모습등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 역시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 및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예산부족분 지원하기로 하고도, 시·군 축산물 생산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2008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축산물을 납품하는 5개의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을 하였으며 전국의 48개 병원에서는 구내 식당과 환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한줄기로 모아내고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전주시를 전국의 자랑이 될 만한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협약입니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시민협약은 전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소비자체인 전주시민 등 3주체가 실천 프로그램과의 마련과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산과 행정상의 각종 지원과 쇠고기 유통 정밀감시 강화하고 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금지 지침마련과 친환경식재료 구매 지원하며, 모든 급식소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식자재 구매자로 공개하고 음식관련협회, 대형마트 등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과 협약참여 서명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협약은 법적인 강제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주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촛불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

음을 확인했듯이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실천협약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힘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며 오늘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4개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124명에 직원 55명, 연간 거래량 7만5천톤에 거래액 900억원으로 삼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더불어 전주시 농수산물 물류 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농수산물 쓰레기는 연간 311톤으로 처리비용으로 5,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농수산물 쓰레기는 241톤으로 법인 자체 보유시설로 운반하여 감량처리 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고 있으나, 수산물 쓰레기는 70톤으로 중도매인별로 수거 전문용기에 수집 보관하면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수산물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거리상 먼 진안에 있고, 연간 처리비용이 고작 1,200만원이다 보니 수익성이 맞지 않아 신속하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다보니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근 주민들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상인들이 인근 배치된 전주시 공동수거용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위생적이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은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산물 쓰레기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법인별로 자체 처리하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장께서는 수산물쓰레기 문제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수산물쓰레기를 전주시 관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다는 것과 폐기물처리법 18조 1항에만 의존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같은 1항

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4조 1항의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발언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시에서 직접 수거해가는 '정읍시'의 '공영처리' 방식을 참조하여,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속기사께서는 참조 자료 표1,2를 꼭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욱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예년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원유값 폭등으로 자고 나면 생필품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는가하면,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색되는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보다 내일의 더 큰 희망을 믿고 있기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한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막프로젝트를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활성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기준으로 막프로젝트의 근원을 찾자면 전주의 넉넉한 인심에 전라도의 맛으로 태어난 자연발생적인 막걸리 문화를 전주시에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전주의 막걸리 문화는 한마디로 푸짐한 전주의 음식과 손맛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주를 찾은 대부분의 외지인들이 막걸리 집에서 놀라는 것은 막걸리의 맛 보다는 막걸리 주전자를 비울 때 마다 차려주는 다양 각색의 넉넉한 안주 인심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막걸리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막걸리 개발을 위해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막걸리를 음식관광산업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막걸리 문화축제나 체험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전주 천년의 맛 잔치'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막걸리 축제를 전 주약령시 축제나 김장 축제 등에 포함시켰으나 이보다는 전주의 맛을 상징하는 맛 축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 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국 각지의 전통주가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는데다 주류의 속성상 유행 을 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걸리는 푸짐한 안주가 있는 맛 잔치와 더 어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걸리는 기능성 음료가 아니며 푸짐한 전주의 맛을 바탕으로 한 서민들의 먹거리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막걸리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기능성 막걸리를 개발하고 판매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막걸리를 제외한 주류 판매업소들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막걸리 판매에 앞장서는 모습이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가 막걸리 판매 홍보에 나서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의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0여개에 이르는 판매업소 가운데 극히 소수의 업소만 비교적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소 대부분의 위생상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주막걸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관광객까지 막걸리집을 찾아가고 있으나 위생상태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막걸리 판매업소가 밀집한 삼천동 주택가에서는 늦게까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쓰레기와 방노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가 하면, 골목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막걸리 판매 매출과 아무런 관련없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 코스에 막걸리 춘을 연계하거나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과 이어지는 먹거리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전 주시가 음식관광산업화의 하나로 막걸리 문

화를 채택한 이상, 차별화된 정책으로 막걸리 문화가 또 다른 전주를 상징하는 테마관광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규 의원

친애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무 더운 삼복더위 폭염과 집중 장마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호성동, 우아2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주택행정과,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직무 유기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3차 791세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서 입주는 시작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도로 미개설과 가감차선 토지 미확보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택 행정과에서는 6개월간 임시 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할 시민들과 상가 입주자, 전세자, 및 어린이집이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입주한 180여 세대가 주거생활 불편과 재산권 등기를 이행하지 못해 은행 대출금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전북도청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가감차선 도로 부지 중간 부지 16평방미터를 덕진구청 건설과에서는 모회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10년간 사용승인을 허가하여 아예 공사조차 못하고 도로끝 부분인 5평방미터가 사유지 토지로 토지 주인은 엄청난 토지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사용 승인으로 791세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감독자인 주택 행정과와 덕진구청 건설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년전 입주한 진흥더블파크 1.2차 1400여 세대 진입로 개설시 입 출구 가감차선을 개설치 않아서 본의원이 전북도청 교통과에 책임을 물으니 전주시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금까지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아 그곳 진흥 삼거리에는 2년 동안 전북지역 도로망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의원이 덕진 경찰서와 시당국에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요구하여 설치를 했는데 전주역 방향 도로에 설치를 하여야 그 신호위반 카메라를 반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신호위반 건수가 전북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고 있어 덕진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하니 2km이내에는 같은 방향

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할 수가 없다는 규정만을 주장하여 본 의원이 그러면 전주역앞 위반시설 감시카메라를 송천동 방향도로에 옮겨 설치하게 되면 진흥 삼거리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속히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만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속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심사해야 할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텐데 도리어 상처와 피해를 주는 심사에 다시 한번 철저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시공 업체인 진흥기업과 모건설회사 측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행정착오만을 지적하고 시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하진 시장께서는 잘못된 행정의 실수를 속히 인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 흥 3차 입주민들에게 입주 승인을 허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진흥더블파크 1.2차 입 출입 도로에도 가감차선을 개설하여 시 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전주시 교통행정이 시 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은 몇 개의 사회복지 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전주시 지역주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되어 감동과 행복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회복지법인 덕삼이 한국사회복지 역사에 남을 부도덕한 행정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전주시가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올 하반기까지 덕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기만한 행정에 화가 났습니다. 시설이 폐 쇄되어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도 전주시 행정은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동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전주시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초래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입소자 인권침해, 부정한 회계,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는 무방비로 일관한 행정이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민심 이반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 특히 소외된 전주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기존의 관성에 젖은 전주시 복지 행정으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특정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미비한데도 설치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특혜,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법인시설이 아님에도 법인시설로 인정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한 사회복지법인이 부지없이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 신축한 공사가 부실공사되어도 사용승인이 나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전주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지 않는다면 송하진 시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무능력과 관료성에 엄중한 비판 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시설과 특정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행정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한 번 주장하면서 복지행정의 형태와 구조를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째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준의 공정성, 형평성이 부재하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시안을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확보 여부나, 보통재산의 기준 그리고 목적사업 외 정관 기재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 부정과 특혜가 예방되게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인 기능보강사업 사업 신청 기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 되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불응하는 만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그 세부적인 토지 확보 여부나 신청자격 제한을 두는 기준을 홍보하여 현재 특정인에게만 하는 사업 안내를 하는 형태를 버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활용하여 건전한 경쟁 과 살맛나는 전주시 복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거나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태를 바로잡고 공평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만이 전주시가 그동안 쏟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애정만큼 효과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전주시가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한 절차와 홍보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어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대형마트는 2008년 1월 현재 이마트, 롯데 백화점 등 6개가 운영 중이고, 앞으로 3~4개의 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는 점포당 하루 2억원, 연간 7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전주시의 경우 백화점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4,000억원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선 순환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 경제가 파쇄되는 물론,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로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의 피해를 막고자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치, 상생 협의회를 통한 도내 농산물 취급 및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 장동 물류센터와 중소 상인을 연결하는 POS 즉 판매관리시스템 추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상품권판매 시스템 구축, '전통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점포 개설조건이 '등록제'로 명시되어 있어 규제가 미미하기에, 기타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을 발생시키는 등, 시간 지연 이상의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고, 기존 입점 업체들은 도내 농산물 취급 등 이행 작서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 협의회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치에 고군분투 하는 시장계 경의를 표하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이미 발의된 대

형마트 규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과 시민 단체의 힘이 대항력으로 조정 능력을 갖도록 '심의 위원회'에 참여 시키거나,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만 책임지려 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행정력으로 담아내는 인식의 전환과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업 발전 상생 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추구합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구성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란한 시작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상생 협의회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 기존 입점 업체들이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산품을 애초 약속대로 구매하는지를 살펴보기 일 바랍시다. 대형마트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지역산품 구매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함으로써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지역산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지역산품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전주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발언을 시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시어, 대형마트의 피해로부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중소 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하여, 살기좋은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나 새로 구성된 제18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1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는 2004년부터 추진된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5천호 정도에 보급된 태양광 주택에서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도 일조량에 비해 보급정도가 적고 대응주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설치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관있는 담당계로 환경정책계, 에너지계, 재활용계, 첨단산업계 등이 있지만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는 없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차질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오는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410억의 국비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가 그린시티, 솔라시티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계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시장께 요구합니다.

두번째로는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과 태양광발전 보급을 전주에서 적극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10만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계약 상대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공용전기를 생산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예비비내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건의 아파트 옥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평화동 우미아파트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표1의 산출근거에 의거 옥상면적 2,644㎡중 유효면적을 1,500㎡로 계산할 경우 1일 전기생산량은 2,250KW이며 월간생산량은 67,500KW이고 이것을 한전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45,697,500원을 전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미아파트가 월간 대략적 평균이 27,000kw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43,197,500원이 매월 적립할 수 있고 6대4,

또는 7대3의 자부담 비율을 놓고 볼때 1년에서 2년정도면 초기 자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것을 전주시 전체 아파트 옥상면적 783,623㎡중 덕진구는 336,242㎡이고 완산구는 447,381㎡ 이것을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500,000㎡로 가정하여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보급 할 경우를 계산하면 1일 전기생산량이 150,000kw이고 월간 전기생산량은 350,000kw이며 이를 한전에 판매 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볼때 전주시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뿐만아니라 이를 통한 솔라시티를 구현 하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장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57회 임시회('08.9.5 ~ '08.9.11)

●●●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올여름 살인적인 더위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까지 일고 있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훈훈하고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따뜻한 시정을 만들어 가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정에서 발생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우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들쭉들쭉했습니다. 또한 세무과 공무원이 과세표준을 잘못 이해해서 과다징수 및 과소징수로 인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일로써 전주시 상가 및 단독주택 가로청소 민간위탁도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더 업무 숙지를 했더라면 전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됐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리 만무하며 따가운 질책과 원성만 있을 뿐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업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공무원관련 교육실시 현황 자



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가 컴퓨터 관련 교육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회계와 행정실무 및 창의력 향상과 혁신전략 및 아카데미 교육이 30%, 담당자들의 복지정책과 세무교육 및 법률교육 등 이 약 15%, 기타 교육이 15%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만이 있을 뿐 국별, 과별, 계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전무합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과감한 투자로 국과 그리고 과, 계별로 업무연찬을 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투자하시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 과를 떠나 하나의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의 활성화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직이나 환경, 보건, 사회복지직 등 몇몇 전문그룹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인사는 순환 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행정직들은 인사철이 되면 엄청나게 순환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직무연찬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시민만족, 시민감동의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 조직이 어수선했던게 사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께 제안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고, 식상한 얘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공무원의 칭찬 릴레이를 계속함으로써 미소를 찾고 생기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전에 장성군수가 저술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변화하면 시민이 변화하며 전주시가 또한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시장의 결단력이 전주시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9년 직무연찬과 관련하여 교육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시고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주식회사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거듭거듭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 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무색하다, 전주시는 15년 이상된 19세대 이하 건축허가된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

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전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의 정교함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의 섬세한 관심의 부족으로 소외 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은 분명 법 자체를 위하기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관 심과 배려의 부족으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이 종종 있어 안타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던 「전주시주택조례」 개정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의 대상을 단서조항인 ‘전용면 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주택조례를 시행하면서 3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까지 총 83개의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2008년 본 예산에 3억, 추경예산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의 예산에 31개의 단지가 심사결과로 선정되어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방미터 제한 없이 분양공동주택단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소형다세대 연립주택은 꾸준히 노화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세대 이하의 서민 다세대연립주택은 20년 이상이 경과 되었어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대 수가 적어 충당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조사와 집행부의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15년이 경과되고 85㎡이하로 분양된 서민들이 살고 있는 19세대이하의 다세대연립 주택 현황을 보면 완산구 43개 단지와 덕진구 49개 단지로 총 9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참조하시고 자료사진을 속기사님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이 부끄러울 정도로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1만원에서 2만여원까지의 세대를 방문하여 관리비 납부를 하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미납세대가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의 도움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아트폴리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디자인, 야간경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트폴리스 경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의 회로애락이 시작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 서민을 향한 진정한 알맹이 정책, 전주시의 아름다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법으로 허가된 세대수가 다른 서민들이 살고 있는 85㎡이하의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이야말로 그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하진 시장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알맹이 정책으로 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시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나 행정에서 언제나 서민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부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을 기대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특히 4만여 장애인 형제 여러분!

얼마 후면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봅시다. 그리고 전주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까 합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지난 보름동안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에 환희와 감동을 불어넣어 줬던 올림픽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인 내일부터 감동의 드라마가 새로 연출되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향상되고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장애인들은 제반 사회구조와 편의시설 여건이 미비한 관계로 아직도 문밖에 나와서 사회활동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이용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다중이

용시설이나 관공서, 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교통건축물, 공원 등 많은 일상생활의 편의시설물들을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접근도라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빨간원에 녹색이 그려져 있는 표시가 있는 건물은 모든 장애인들은 와도 아무 불편이 없다는 표시인 것이고, 세모로 되어있는 녹색 표시는 여기는 일부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안되어 있는 시설은 네모로 빨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를 요청하십시오이라고 하는 것이 인증제도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1등급은 별 3개, 3등급은 별 1개로 해서 세 개의 별이 달려 있는 건물은 모든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고장, 맛의 고장 전주에도 하루속히 이 시행령에 의한 편의시설 인증제도를 시행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아무 불편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다중이용시설 및 관공서 124곳 중 69곳이 미비한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 75.8%가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6.7% 높은 82.5%로 되어 있어서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불행하게도 법적 기준 내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시설들은 이때에 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개축·증축되는 편의시설물이나 이용시설물에는 우리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하루속히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명실공히 복지도시로서, 우리 장애인 천국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후면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8월 한가위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우리 같이 함박웃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던 여름의 따가운 햇빛이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알리



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여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실의 가을로 바뀌어 가는데 많은 민원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 오늘 본의원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덕진구 우아동 우정신세계 아파트 입구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안덕로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해져 2001년 1월 길이 28.5미터, 폭 4미터의 보도육교가 설치되고 같은해 3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목적으로 육교옆에 철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철 구조물은 설치된지 7년이 조금 지난 현재, 첫째, 조명시설은 훼손되어야간 경관은 기대할 수 없고, 둘째, 페인트는 탈색되어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물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더군다나 인도위에 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넷째, 철 구조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인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왜 이러한 방식의 철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고, 금년 5월 우아2동에서는 주민 서명과 함께 철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한바 있는데 그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육교 옆에 미관이 몇 년 유지도 못되고 유지관리도 하지 못하는 철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교계단과 육교위에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육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철 구조물 옆에는 인도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자재를 쌓아놓은 토지에 맞닿아 있으면서 갑자기 인도가 없어지고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 대체 보행자는 없는데 도로부지가 남아서 약간의 인도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인도라면 인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가로수라도 심어야 옳을 것이고 꼭 필요한 인도라면 부지를 확보하여 인도를 연결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년째 방치되어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일들은 차일피일 미루어도 되는 일 이 아니라 즉시 현장조사와 함께 시정조치 되어야 할 일로써 말없이 묵묵히 우리 전주시의 바른 행정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며칠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노력하여 비록 푸짐한 음식이 기다리는 추석을 맞이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희망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전주 맛 축제의 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식과 맛에 대한 전주 이미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손맛, 입맛을 세계를 향한 당면 과제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2010년 창조도시 유네스코 분야에서 미식 분야로 전주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비빔밥과 한정식,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발효식품 엑스포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스타일 사업 중 한식 분야는 전주가 가장 타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 맛잔치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준비 과정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주 맛잔치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회를 치루고 올해 2회가 되는데 이것을 축제적 성격으로 갈지 음식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관광적 성격으로 가야 할지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분명히 잡힐때 축제도 살고 맛 음식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음식, 한식의 세계화를 음식의 산업화는 맛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점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어 전주 음식을 통해서 외국인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은 척박한 조건에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요소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년 365일 준비하는 상설팀의 전주영화제 사무국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외부 관광객과 미식가를 끌어들이는 축제라면 음식과 관광 축제로서 대표 음식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음식 명소는 어디인지. 예를들자면 꼭 시식해야 할 인기있는 다섯 가지 한국식품이나 전주음식은 무엇일까. 또 외국인이 뽑은 가장 인기있는 음식 다섯가지 정도를 추천하는 전통음식, 퓨전음식, 신메뉴 개발로 맛으로 승부하는 축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음식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맛 축제 준비는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한지축제의 경우 6개월 이상 실행위원회가 움직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그런 발효와 담금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전주 맛잔치 때 인기를 누린 맛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2008년

에는 아직 만들어지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선정 기준으로 어떤 팀에서 만 들어질지 좀 우려가 됩니다. 맛 가이드북은 축제의 정보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 음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기준속에서 맛의 신뢰를, 추천 음식점 선호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많지않은 시간 행정력과 민간단체, 음식점 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준비있는 내실을 바랍니다.

이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행사팀에서 해야 할지, 한스타일과 한식팀에서 해야 할지 장기적 인 관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관광으로서 승부를 본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맛을 산업화해서 세계화 할려고 하면 한스타일과 한식계에서 해야 하고 두 개를 절충해야 한다면 또다른 전주 맛 연구소같은 전주 한식연구소같은 연구소도 만들면서 음식제전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관과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김현덕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실개천 조성과 웨딩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현실을 간과 해서는 안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실개천 거리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원화하고자, 전통 한옥마을에 남북방향 구간선도로인 은행로에 실개천을 야심차게 관광 테마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도로의 복사열을 차단,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실개천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조경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낭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전주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짜증을 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웨딩거리 역시 전주시가 예술도시다운 도로 재정비로 지역경제와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써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딩거리 역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특화거리로서의 웨딩거리 상징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개천을 비롯한 웨딩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외곽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주차 편의시설 즉 주차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옥마을은 웰빙 워킹관광코스를 조성하여 전주시를 한국적 전통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한옥마을을 관광하기 위하여 타고 온 자동차는 외곽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는 워킹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옥마을의 영세 사업자들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한옥마을 주도로를 제외한 간선 도로는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웰빙 워킹관광코스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한옥마을 및 웨딩거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정차 기초질서 참여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주정차 기초질서에 솔선수범 함으로써,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의 전주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날로 새로워지고, 이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옥마을 주정차 기초질서 대안 제시 및 한옥 마을내 영세 사업자들에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본 대안을 시장께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먼저 전주시를 방문해주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1,300여 세대 소외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분담금 상황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삼일 앞으로 다가와 수확의 계절임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소하고 알뜰한 차림으로 온가족과 함께 나누고 함박웃음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옥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



님!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매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좋은 풍요로운 지역인 진북동, 이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전주시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위 공약사업은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양극화 해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은 2007년 34.7%에서 2010년 8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골목길 공사 분담금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2008년도에는 80만원 정도이며 2009년에는 100만원 이상이 지원 예정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시에서 올해 80만원 지원하면 시민도 80만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 한가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올해에는 평균 28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분담금 80만원 포함하여 기타 200만원, 인입관 30만원, 입상관 62만원, 내관 45만원, 보일러 50만원, 시설분담금 등 13만원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공사분담금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도시가스 공급을 망설이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주민분담금 50% 지원을 70~80%로 상향하여 지원하거나, 분담금 상환제를 통하여 주민분담금이 많은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공급되길 바라며, 특히 진북동 어은골 및 도토리골 도시가스 주민분담금 350~400만원을 주민은 100만원만 분담하고 시에서 25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현재 전주시 33개동 1300여세대의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라도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상식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 제258회 임시회('08. 10. 17 ~ '08. 10. 23)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즈음 전통문화도시를 탄실하게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1월22일 예술인 집단 창작촌을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예술인 집단 창작촌 창출에 있어서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서 전주만의 색을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전통문화도시 창출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주가 전통문화예술도시로서 가치는 문화예술인이 이 도시에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철주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정신적 혜택을 충분히 얻어내면서 그들에게 실제적 혜택을 무엇으로 도와주었습니까?

선진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 예술인에게 교통,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영화관람, 극장 출입 등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시민의장 수상자에게는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문화 예술인에게도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 체육시설, 시영주차장, 공공시설과 영화관람(평일, 사주와 협의)에 있어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영화관 등도 작지만 함께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인도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심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는 풍부한 지역 역사와 문화 예술인의 자원을 활용해가면서 전통문화도시 만들기에 힘써 왔습니다.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위해 정(靜)과 동(動)이 응집해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시 곳곳의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워 왔습니까?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그러한 공간을 두고서 숙명처럼 자신들의 몫으로 알고 묵묵히 채워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 예술인에게 예우 측면에 전주시 집행부가 잠시 소홀히 했다면 이제라도 새롭게 예우정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실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각별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도심에 문화예술인 집단 창작촌 추진에 있어서 문화예술 마인드가 깊은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 추진을 이 자리를 통해 치하 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명의 집행부 관 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김철영 의원

효자 1·2동, 삼천1동 출신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몇일 전 전주시보와 예산서 발행 부수를 조정하고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응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님께서서는 예산안과 전주시보 발행을 축소하는 데 동의해 주셨고, 일부 의원님께서서는 시보 및 예산안 뿐만 아니라 의회에 유인되는 각종 자료 등에 있어서도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보는 매월 1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60부 가량을 발행해서 자체보관 10부, 각 실·과·사업소에 16부를 배부하고, 시의회에는 의원 개인별로 34부가 배부되고 있으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되는 전주시보의 활용가치는 크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는 감축·조정하여 절대 부수만을 인쇄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예산안의 배부는 예산심사 전 배부되는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안, 이렇게 두 겹과 똑같은 예산안이 의원 1인당 3부에서 4부까지 배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전에 배부된 한편의 예산안을 토대로 심의하여 메모하고 분석해서 그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서너권씩 배부되던 예산안을 한부씩으로

축소·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재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경우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집행부는 법제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 낭비적 요소를 의회 스스로 제거하고, 관례와 답습이 아닌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회 본회의장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 필요없는 노 페이퍼 회의를 추구하려는 것도 설치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종이에 인쇄된 안과 함께 이중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인적·물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예산 1조 시대에 이삼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듯이 적은 예산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의회가 될 때 전주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심사에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고유가·고물가 어려운 나라살림에 시민들의 주름은 퍼질날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방울로 만들어진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예산부터, 또 의회와 관련된 예산부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약할때 시민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격려와 박수를 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완산체련공원에 위치한 인공 암벽장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생활체육 기구는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라 해도 일반인들이 이



용하기 어려운 국제경기 전문가용으로만 설치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전주 인공 암벽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외면한 100도 이상의 수직의 벽으로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인공 암벽장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의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암벽장 오름벽 전체의 경사도가 100도가 넘는 오버행입니다. 이를 감쇄하기 위한 넓은 스텐드를 오름벽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중간지점에서 잠시 근육을 풀기위한 틈새 휴식공간도 필요 할 것입니다. 둘째, 하강지점 보강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하강할 경우 자기 몸무게에 오는 지구의 중력을 하강기구의 마찰력으로 감쇄하여 하강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16m 높이에서 독자적으로 로프를 조작하여 하강한다는 것은 추락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강도중 2명정도가 잠시 쉴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단 부분에 폭 1m정도의 안전통로의 개설입니다. 인공벽의 볼트교체, 홀드와 스텐드의 교정, 카메라 촬영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통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외벽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공 암벽장은 초보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름벽이 3코스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사도가 완만하면서도 굴곡이 있는 높이 16m, 폭15m를 추가 건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시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투명성 있는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암벽등반 등 산악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로 하여금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지도로써 리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인공 암벽장 사용료 징수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공 암벽장이 생활체육으로서 저변확대가 급선무입니다. 어느정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정기준의 성인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 암벽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유보는 당연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언한 여섯 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주시민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

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낮과 밤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옥마을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것을 화장실 중심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시의 자랑할만한 경관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한옥마을을 꼽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제26차 아시아문화예술연맹(FACP) 총회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한 데에는 한옥경관을 보존하고, 주민통합 모델로 한옥마을을 혁신시킨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한옥마을이 장애인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한옥마을은 아직도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그 문턱이 높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중 한옥마을에 있는 개방화장실 및 관광안내 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볼 것입니다. 경기전 등 문화재 시설 4개소, 관광안내소 등 공공문화시설 14개소, 한방문화센터 등 민간문화시설 4개소등 총 25개소의 편의시설 화장실을 살펴본 바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안내문이 부족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촉지도 인식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술 박물관 및 한옥생활체험관 뿐이었습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경기전 등 7개소(전동성당, 오목대, 전주명품관, 최명희문학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입구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턱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 등 2개소(향교, 강암서에 관)의 경우는 경사로 및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높은 계단을 통과해야 내부에 진입할 수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아예 화장실 이용은 커녕 내부 관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동성당 내에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무자에



게 물어본 결과 그 안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경기전에 가서 사용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오탁대의 경우 자동개·폐문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의 부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경험하게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뿐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편의시설의 존재입니다. 왜 모두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지난 9월 24일 전주시는 도시경관기본계획과 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전주시내를 5개 축 4대 경관권역으로 나눠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옥마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좋은 계획안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시되는 정책이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되기를 다시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기린봉 북쪽 쪽빛 하늘은 티 없이 맑아졌고 노송광장의 푸른 소나무도 겨울체비를 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힘차게 푸르던 은행잎도 서서히 노란 물감을 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치열한 삶을 이어 가는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에 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챈 사실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며 천인이 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심 강한 전주 시민으로서 훈훈한 인심과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 상쾌한 계절에도 쾌적해야 할 주거지역에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 1동 전주중학교 앞 송천 풍남길 일대 주택가 골목은 우수관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변 주민이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후 판단하기로는 우수관에 인근에 있는 크고작은 정화조의 분뇨가 흘러 들어와서 하수와 우수 그리고 폐수가 섞여 흐르면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악취는 이 건조한 날씨에도 지독했

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여름 고온다 습한 날씨에 주민이 겪은 고통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그 오폐수가 차집관거에서 우천시 오버 플로우(Overflow)되어 그대로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하천을 꿈꾸는 전주천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만경강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며 새만금의 환경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바로 옆 지역인 송천동 지역에서 BTL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전주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라인이 달라서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악취가 너무 심하고 또한 이론이 너무나 궁색합니다. 정책을 입안 하시는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도 좋고 전주천에 쉬리가 노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삶의 기본인 오·폐수처리 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도 실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송천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큼니다만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르게 완벽한 처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송천동 지역의 악취제거 시설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 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의 폐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생필품과 가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에 인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유보되었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사교육비 등의 증가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



화 사업은 전주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선진 민간기법이 가미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과 장묘시설물, 쓰레기 봉투 판매, 주차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도입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으나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밝히고 1단계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의 부설주차장과 건산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경기장 시설의 이용, 주변의 상가를 가기 위해, 타지로 가기 전 카풀을 한다든가 행사나 등산을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든 편리하고 쉽게 약속 하고 만날 수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120면의 주차면수라고 하는데 주차라인 조차 그려지지 않습니다.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은 전북대 지하보도부터 시작하여 경기장 사거리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기반 시설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계시스템만 설치한 뒤 요금을 받겠다는 것 이었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도개설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야간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합경기장 내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곳 또한 주차라인도 없고 입구의 시설보호대로 인한 차량사고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경기장의 예를 들었을뿐 건산천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차장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덕진공원주차장, 동물원주차장 등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와 성과창출이라는 근시안적 사업성과에만 초점을 두어 자칫 시민의 복지와 공익성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동을 위한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청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남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축제에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가을 가뭄에 시달렸던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처럼 조선 태조어진 반환행사가 3시에 노송광장에서 있습니다. 4시에 는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의례를 행한후 국립 전주박물관으로 봉안되는 어진 반차행렬과 봉안의례가 재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제 사무국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으며 그 자부심은 좋은 예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집행부와 프로그램머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세계속에 전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거리조성은 예술문화거리 디자인을 보여주는 볼거리 공간이고 거리입니다. 평상시 영화관을 찾는 분들과 외래방문객들에게 영화거리 조성 효과가 지속적이었으면 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2개의 상영관은 휴관중이고 4개의 상영관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거리를 만들고 오거리광장을 조성하고 빛의 거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는 깔끔하나 골목길과 후미진 곳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다. 모 상영관의 6m폭의 막다른 골목에 세워진 영화제 포스터(1~9회)와 주요 영화인들 페이스프린팅 조형물은 조경식재 위에 설치 되었거나 장애인 주차시설 위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자리에 에어컨 박스로 선조형물은 방치되어 소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영화의 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분위기로 정리되었으면 합니

다. 영화상영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중이용 공간이므로 쾌적성, 접근용이성, 편의성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소방, 대피시설, 주차시설, 정화조, 환기, 편의시설 등은 법적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부대 서비스를 갖추는 문화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후 정기 점검때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사동 모 영화관의 경우 무허가 건축부분이 돌출되어 건폐율을 어기고 경관이 볼썽 사나운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 정화조 시설은 허가 지면과 설치 지면이 다르게 되었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해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가 골목 골목까지 잘 정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의 거리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 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내 고장 전주 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나의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중국산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 식품업계로 건장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만든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다량 검출되면서 먹을거리 전체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사료에서도 검출돼 어떤 종류의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멜라민에 오염된 식품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면서 나라별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식품 및 마약법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산 식품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동꽃게에서 납덩이가 나오고, 찜닭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먹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행태를 보면 먹을거리 문제는 늘 뒷북치는 격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먹을거리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멜라민 파문을 접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멜라민 파문의 원인을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맛과 음식의 고장인 우리 전주시는 이번 멜라민 파문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양념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여러 나라의 손길이 합쳐져 중국산을 먹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돈이 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의 상술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가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 당국의 정밀검사는 17%에 불과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부서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이 허술하고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정부에 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만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초등학교 숫자가 완산구 36개 학교, 덕진구 31개 학교, 전체 67개 학교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식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원산지 표시나 성분표시를 보고 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홍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시당국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먹을거리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3일, 토공·주공 통제합이 골자인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200만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합법인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바랍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은 완산구 15,000등, 덕진구 15,400등을 합쳐 모두 3만여 등이 설치되어 우리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보면 전주시의 가로등은 무선원격 시스템을 사용한 중앙통제 방식이고 보안등은 일부만 무선식이고 그 외에 전자식과 수동식의 3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안등의 50% 이상이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점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작동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고 에너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전력소비가 높고 수명이 짧은 메탈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요구됩니다. 타시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등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을 보안등의 신설과 조명시설 현대화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화성시는 무전극램프로, 고흥군과 정선군은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으로 고속도로에 무전극램프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천 계양구청은 무전극램프로 교체하여 실제 35%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조명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램프는 2008년 대형빌딩과 백화점등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가로등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전형 조명등은 기존의 조명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메탈램프 대비 60%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절전형 램프로 교체 시 연간 10억원이 절감됩니다. 둘째,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램프의 수명이 6,000시간인데 반해 절전형 조명등은 60,000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제품으로서 폐기물 배출 억제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색성과 조도가 뛰어나 쾌적한 환경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교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블록을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BTL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메탈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교체시에 자치단체에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여 LED램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저리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주시 가로등·보안등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 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절전형 조명등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푸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거리와 조건에 따른 독특한 거리와 숲이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아름답고 숲이 있는 전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의 푸른도시조성 기본현황을 보면 공원은 총 146개중 132개를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이 있으며, 가로수는 노선수 124개 노선중 총 39,089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종류를 보면 은행 나무 13,057그루, 느티나무 6,873그루, 벚나무 5,733그루, 단풍나무 3,133그루, 기타 10,293 그루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보면 보호수 26그루, 노거수 67그루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왕버들, 팽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등입니다.

둘째로 전주시는 담장없애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09년 2개 지역 조촌초등학교 및 덕진예술회관지역을 추진

하여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10년까지 3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숲조성, 담장없애기, 옹벽녹화, 교통섬 등 11개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넷째로는 푸른벽면가꾸기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암도서관, 화산체육관, 강변로, 평화로 등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전주시는 푸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도시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푸른도시 조성사업이 터닝포인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 조성과 더불어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현재 식재된 나무가 발육상태와 더불어 식재된 거리와 공간에 맞게 특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주 곳곳의 거리와 공간이 특색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거리와 공간에 식재된 나무의 발육상태와 여건에 맞는 조경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첫째로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의 나무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나무가 식재되었는지? 나무의 발육이 부진한지? 영양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경은 무엇인지? 등 해당지역의 나무에 대한 이력이 정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나무이력제를 전산화해서 전주시 녹지 및 나무의 상태를 종합하여 중장기적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의 상황과 상태를 전산화 해서 빠르게 현황을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산 시스템에서는 발육상태가 나쁜 나무는 어디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푸른전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양구청에 녹지 및 나무관리 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현재 부족한 관리예산에 과감히 30%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청에서 가로수 및 녹지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전담팀을 보강하고 현재 관리예산이 너무나 적어 제대로 보식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과감히 증액하여 중장기적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주가 명실상부한 푸른도시로 조성되고 단순히 나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공간의 특성에 맞는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 주신 동료의원 및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 제259회 정례회('08.11.19 ~ '08.12.17)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6백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발언대에 선 저는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 시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정치와 가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치가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해결은 정치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구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는 이 시대에,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속에서 힘겨워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는 것 역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전주시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보다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데 더 열성을 보이는 대통령과 같은 나라에 사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치의 대표 행위자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책임자들에게 '서민정치 역할강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약자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로서 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즉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지방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져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 계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껏 지방정치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것은 곧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정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주문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서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민생적 사고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날 것이라는 반자치적 중앙 종속적 사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가 빈약하다는 비주체적 사고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애들러가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배제하려는 모든 경향성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주시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쁜 숨결들이 배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곳곳의 식당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법정임금을 받지 못하는 못하는 비정규직 식당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 술집에서,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세대 비정규직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사, 의회청사의 바닥을 청소하며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맞춘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만 10만명 수준의 비정규직이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전주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현황이나 통계조차 갖고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급작스런 동장군의 기세에 몸이 움츠러드는 오늘입니다. 밝은 희망과 미래를 향한 포부로서 새로운 전주를 개척하는 진취성과 더불어서 가난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이들을 껴안는 넉넉한 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따뜻하고 사람의 향기가 풍겨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초동의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999년에 전주시예술상조례개정

으로 폐지된 유서깊은 풍남 문학상의 부활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풍남 문학상은 1989년부터 전주시 조례제정에 의하여 10년간 전주의 문인들에게 수여되던 참으로 명예로운 문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문학상은 없어지고 그 대신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으로 10개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 시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주예술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이 수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장르가 다른 장르와 함께 수상되는 것은 본래의 풍남문학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전주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의 고장이라 할 만큼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습니 다. 전주의 문은 조선왕조 호남의 수도답게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게 발전하였으며 문의 발전은 학문의 근본이기도 하였습니다.

문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주에는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의 대표적 문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최명희 선생의 불멸의 명작 “혼불”은 전주의 자랑이요, 영원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문학을 이어받을 문학상이 소멸되어 버렸다면 이는 전주문학 발전에 크나큰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문학을 논할 때 문득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도 시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벨상중에서 문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에서는 시흥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강릉시에서는 허균문학상을 제정하여 지역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상하는 곳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해에 문학 행사로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크게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문학의 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 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혼불 기념사업회에서 현재 주최해서 시상하고 있는 최명희문학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문학상이 부활한다면 그 명칭과 파라다임은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고품격 전통 문화 도시에 걸맞게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철학이 있는 전통문화는 문으로부터 시작하며
문학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
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달간의 제259 회 정
례회에 건강도 지키시면서 2008년 의정활동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리는 바
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어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고액
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 성
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
다. 종합부동산세는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
하도록 유도하여 다주택보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
금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한 세
금 감면을 해주고 가난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
체에는 손에든 빵마저 빼앗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고 있는
38만 가구 중 서울과 수도권에 속해있는 가구는
36만 가구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강부자 정부라고 부를만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
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종합부동
산세 완화 정책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은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
부동산세를 시행 4년만에 무력화시켰고, 대한민
국 1%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
는 것에 대 해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과 복지, 교육 수요를 감안 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
계층의 복지, 교육을 위한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
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정책과 발맞춘 헌법재
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1조의 예산 시대를 개막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07년 종합부동산 교
부세의 세입 규모는 42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81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
책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서 정부에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궁금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종합부동산
교부세의 완하시 줄어드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인지를 물었으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답변
을 하였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2009년 예산에는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었으나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로 사용했
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줄어드는 종합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예산을 세우면 감소
분 지원을 통한 보전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나
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바뀔
에 따라 세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지금까
지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통계조차
없는 전주시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
정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만 바라
보고 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
는 것과 전주시의 지금의 행정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시·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의
역할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저 전주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
대로 진행된다면 전주시에서도 힘없는 서민들의
삶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
다. 송하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축소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뜰이
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
들의 복지 예산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긴급 대책
을 세워서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을 요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글로
벌 금융 위기를 맞아 극심한 취업난과 어려운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
니까?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
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또한 어려
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
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시설물 컨테이너 사용 실태와 천변로 보행



권을 확보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의 현실을 살펴보면 최대의 관광 명소인 한옥 마을입구의 경기전 주차장과 덕진 공원의 보트장 매표소, 동물원 등 관광명소마다 불법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 의 관광객을 상대하는 전주의 최대 관광 명소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가장 아름다운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 하는데 합당하지 않단 심경을 전합니다.

특히, 전주를 알리고 전주의 대명사인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제일의 명소입니다. 그곳 입구의 경기전에는 태조어진 중 국내 유일의 진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조 역대왕의 초상과 어가 등 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덕진 공원은 도심속의 호수로 단오절 창포와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와 8월의 연꽃 그리고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놀이도 전주에서 가장 해보고 싶어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광 명소를 관리하는 전주시에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해야할 행정 관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경기전앞 주차장과 덕진공원 보트장의 컨테이너를 없애고 전주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한옥형 건축물로 대체하여 아름다운 전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천변로 강변길의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서신2 지구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에서 1992년 준공하여 4만 8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흥 산교에서 마전교 1.2km구간의 천변은 도로폭 15m에 1m정도의 좁은 인도가 있고 이곳에는 서문, 서천초등학교와 서중학교 등 3 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천변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 1m의 좁은 인도에는 전봇대와 가로 등 및 신호등 점멸기· 가로수를 비롯하여 보행에 많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평소 천변로는 전주에서 익산, 군산, 봉동 등 북부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1일 평균 4만 374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주 혼잡한 도로로 보행에 많은 위험이 노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했던 무자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온정을 보내 모두가 훈훈한 세미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 1800여명 집행부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은 올곧은 전주선비정신 살리기 등을 외면한 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외형적 편향, 편중되게 개발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근간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주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향교와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이 확산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때 전라감영이 존치했던 곳으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곳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바른 에너지를 공급했던 대단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전주의 기질과 정신을 지금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인근 광주광역시와 경우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출발 거점 도시로 성장시켜 냈습니다. 전주는 전주정신을 살릴 수 있는 동학과 서학이 교차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인 초록바위 주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는 지역으로 전주의 강한 기질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완산칠봉 끝자락 초록바위 주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학과 서학을 화두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있는 잔반의 식자층과 서민층의 신, 자생조직으로 탄생되었던 동학인의 그들은 목숨까지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주창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창하며 서로 상생의 길을 택해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내자고 외쳐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청주로 진격하려다 관군이 일본군과 합세로 동학군은 패배했고, 김개남장군은 태인에서 (그해 12월27일)잡혀 다음해인 1895년 1월8일 초록바위에서 거룩하게 효수를 당한 곳입니다.

또한 완산칠봉은 어머니산 즉, 곤지산으로 불리었습니다. 이곳 곤지산은 투구봉, 용두봉, 옥녀봉 등이 있고 주변은 반월형의 이팝나무 군락지대가 있어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천주교 순교비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1866년 순교한 성인 남동삼의 장남 명희 14세 소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에서 15세 이하의 처형이 금지됨에 따라 전주옥에서 1년여간을 가둔 뒤 초록바위에서 큰물 난 날을 택해 Y자 나무로 뒷목을 눌러 수장시킨 천주교의 순교 터입니다. 그래서 초록바위 주변은 동학과 서학의 교차점으로 전주의 고난의 상징적 터로 보고, 잃어버린 전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25일 제1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까만, 당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정신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초록바위 주변은 서학과 동학의 교차점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초의 기운이 있었던 그곳을 역사공원으로 활성화해서 어려울 때 일수록 64만의 전주시민에게 전주의 울골은 정신을 찾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따뜻한 시민 여러분의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계획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 년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전

통예술로 승화, 계승시키는 것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천년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천년전주는 전주의 역사와 전통이 천년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의미있는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최근 전주 동고산성 일대를 발굴하면서 후백제의 도성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서 천년전주의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장이 제창하고 있는 천년전주가 피부에 닿지 않고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후백제 유적에 대한 안내판조차 제대로 없고 천년동안 내려온 전통문화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천년전주가 단지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의 전통문화가 복원되고 천년전통의 생활문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도시로써 면모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브랜드의 중심인 한옥마을(교동, 풍남동 일대)이 바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옛 도시공간의 유형문화와 그곳에서 전승된 무형문화가 함께 보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아직도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도시의 공간이리는데에 그칠뿐 실질적으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한옥마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천년전에 전주의 무형문화가 한옥마을에서 살아 전승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 전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전주에서 용왕제와 성황제가 매년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용왕제와 성황제는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식민통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용왕제와 성황제가 전주에서 천년동안 거행된 사실은 역사기록으로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왕제는 전주사람들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자 지낸 기우제였으며, 성황제는 전주부성의 수호신인 김부대왕에게 제사를 올린 전통축제였습니다. 성황제는 전주단오제의 핵심이었습니까만, 오늘날 전주단오제에서는 이러한 무형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년전주의 슬로건에 맞는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가 살아 전승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천년전주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가 판소리와 더불어 무형문화의 고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동안 내려온 무형문화재인 용왕제와 성황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유산을 방치



하는 일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진정한 천년전주의 면모를 갖추려면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전주전통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전통문화도시에 걸맞는 전통무형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의 전통예술인 듯이 세시 풍속과 전통축제로 내려온 용왕제와 성황제도 전통예술로 승화, 계승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년전주를 주창해온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천년 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복원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 박혜숙 의원

본 의원은 의료혜택에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덕진구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 설치에 절실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존 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모범적인 지방의회(像)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전주 건설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늘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수 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건강히 살면서 깨끗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시 되었지만, 현재는 가격보다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먼저 생각 한다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협상 문제도 저렴한 가격보다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최대관심사인 건강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관한 초등학교 주변을 신속 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건소의 대 시민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복된 도시건설이라는 시정

방침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 전주시 보건소 산하에 덕진 진료소와 4개의 보건 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 상담과 건강에 관련한 정보제공과 함께 각종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보건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완산구 평화동에 문을 연 평화보건지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화보건지소가 앞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재활사업은 물론,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들의 보건업무를 완산구 관내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할하였고 덕진구 관내는 덕진 진료소에서 관할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산구는 상림, 중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덕진구는 금상, 도덕보건진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진료소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남부권과 북부권이 나뉘도록 균형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주시보건소는 남부권 완산구 지역에 가까운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 11월 28일 평화보건지소가 개설됨에 따라 남부권 시민들은 손쉽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부권 덕진구 송천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있고 산업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3공단 완주 봉동 경계에 있는 송천동 지역은 근로청소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인구수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많은 송천동입니다. 최근 들어 북부권 송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소가 완산구 중심에 있다보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덕진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보건지소의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더 이상 불편함이 없으며, 덕진구에 산다는 것 하나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도시 개발을 전주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을 빕

니다. 감사합니다.

●●●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산동·중화산 1·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2008년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다.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할 수 있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주의 경제를 살리는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년전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은 전통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그 결과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론은 차가운 눈빛이며 불만족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이며 기린로변에 하루 몇십 대의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하고 도로변에서 내리면 곧바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 이 없어 굉장히 당황하고 전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래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 올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별로 볼 것이 없다, 즐길 것이 없다 하니 이것은 관광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전주팔경이 있으며 최고의 명승지와 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은 동으로 비껴 솟은 기린의 상인 수호봉 정상은 비가 갠 후 달이 솟아오르는 여의주 같은 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경으로 한벽청연은 옥류동 아래 한벽당에서 내려다보는 청아한 풍경은 한 폭의 병풍 같으며 자연생태 전주천을 도심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니 아름다운 전주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한 관광명소가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까. 삼경으로 남고모종, 사경으로 다가사후 오경으로 비비낙안, 육경으로 덕진체련 칠경으로 위봉폭포, 팔경으로 동포귀범이 있어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승지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이 있어 전주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로 경기전을 비롯 한벽당, 오목대, 이목대 등 최고의 관광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통한옥 마을에 가면 온고을이란? 냄새가 물신 풍기는 아름다움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한옥 마을이야말로 인간사가 살아 숨쉬는 자연박물관을 연상케하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민속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오목대가 있는 공원에 만들어 한옥마을과 전주 시가지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오목대 공원 녹지에 조명시설이 안되어 야간에는 어두운데 조명시설을 하여 아름다운 야경의 경관이 비추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오목대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전주변을 보면 태조로를 중심으로 관광명소로 관광객의 시선을 집약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전을 중심으로 담벽 외부를 한바퀴 돌아보면 도로는 비좁으며 건물은 현대건물과 한옥이 불상 사납게 각양각색으로 되어있어 전통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추락시키고 맙니다.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전 주변 담 한바퀴 도로를 확장하고 거리주변을 한옥으로 만들어 전주의 전통 특산물 거리조성을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이곳은 명품의 관광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경기전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60회 임시회('09.2.9 ~ '09.2.13)

●●● 국철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중앙·풍남·노송동 출신의 국철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입춘을 지나 어느새 우리 곁에 봄이 성큼 찾아 왔습니다.

어느 때 보다 춥고 한파가 몰아치는 우리 경제에도 새 봄의 훈풍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한옥마을은 이제 명실공히 전주관광상품으로 확고히 자



리를 잡았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 체제가 출범한 민선4기를 기점으로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반드시 찾는 필수적인 관광코스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통계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찾는 탐방객 수가 연간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500여대의 승용차와 50여대의 대형버스가 한옥마을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기 조성된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수용할 있는 차량은 절반에 불과해 한옥마을 일대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찾아온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구)코아아울렛 부지 매입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로부터 부지매입 절차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넉넉한 아울렛부지를 제쳐두고 멀췌한 인근 한옥들을 헐어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옥에 주차장 설립계획이 알려지자 당장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산까지 확보한 아울렛부지를 놓아두고 왜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주차장을 건립하느냐며 주차장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날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8억원의 예산은 아예 집행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로부터 부지매입 동의 절차를 받고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을 뒤로 미루는 전주시의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주시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64만 시민의 공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주시 발전의 효용성과 시급성이라는 가치를 따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한옥마을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바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당장 한옥마을 일대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행정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

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전주시민을 위한 현안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전주시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17일 전주 정신 살리기 운동 첫 번째 발언으로 초록바위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활성화해서 64만 전주시민들이 당차고, 의롭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재정립하자고 발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4만 전주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전주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두번째 테마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록역사중 하나인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 전주 땅의 이야기들을 꺼내 의로운 땅, 당찬 기운, 멋의 품격과 맛의 격조를 새롭게 재조명해서 당찬 전주를 새로운 각도로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토리 텔링은 전주의 영혼과 감동이 결여된 단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위한 형식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 땅 곳곳에 피와 땀과 한과 멋이 동거동락한 장소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기초해서 진정한 전주정신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주사고 한 곳만 유일하게 화를 면해 오늘날까지 보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관·민이 힘을 합쳐 곰치 전투에서 옥쇄로 호남 길목에 침입한 왜군을 막고 전주성을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사람 안의, 손흥록 두 사람이 목숨을 바쳐 필사적으로 안전하게 옮긴 결과물로, 실록은 무려 60계였고, 말 50마에 실고 내장산과, 태인, 부여, 아산, 해주를 거쳐 묘향산까지 4년간의 신고(新庫)한 끝에 가까스로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주 땅에서 전주사람이 지켜낸 실록으로 전주시민 모두는 민족적 명예와 긍지를 지닐 만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실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록된 전주 기사들이 64만 전주시민에게 제

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고 숨결인 것입니다. 우선 실록에 실린 기사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 선대의 가계 즉,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 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한 것, 또한 완산의 절부 임씨의 정문(旌門)을 세운 것, 완산부윤에게 전지(傳旨)하여 회안대군이 성밀 근처에서 천렵하는 것을 금(禁)하지 말게 하고, 또 관가의 작은 말을 내주게 하여 타게 한 장소, 용담현의 용연과 주졸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장소 등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기사는 19세기 말 전라인들 사이에는 봉건주의 가혹한 조세수탈과 봉건관료들의 무한적 탐학에서 오는 박탈감의 분위기, 정여립사건 이후의 호남인 차대로 인해 심화된 소외감, 문호개방 이후 전라도에 집중된 외래자본의 침투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인하여 반봉건적, 반외세적 정서가 고조되어 있음도 분명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 속에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전봉준 장군이 동학의 평등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혁명이념화해서 국가적, 민족적 위기를 구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1894년 3월21일이었고, 그해 4월 27일에 전주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속에서 민주주의를 최초로 주창해서 현실로 옮긴 것이 전주정신의 근본이었다는 사실들이 스토리 텔링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장태영의원이 지난 제245회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집행부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기사들은 올 곧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대단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끊임없는 발언을 통해 전주정신을 부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전주정신이 살아나야 전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차고, 의롭고 올 곧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더 적극적 사고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박혜숙 의원

“덕진 실내수영장 즉각 재개장하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추구를 시정 또는 도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지어진 전주덕진수영장이 그동안 시민들, 특히 노인들의 체력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전주덕진수영장이 지난 해 11월 12일 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12월 15일, 11월 12일 발생한 보일러 폭발사고를 계기로 덕진수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더 이상 수영장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일방적으로 덕진수영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덕진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체육회도 임시방편으로 수영장을 개장하는 건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폐장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데 최소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면 보수를 시행할 경우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덕진수영장 부지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편입되어있고 이곳에 수영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라북도의 입장은 수영장 보수를 위한 예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근거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지금까지 연간 4억 원 정도의 수영장 운영 적자도 감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 1천 여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개념의 수영장을 폐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자치단체의 존립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용자들의 60%가 50~60대 여성으로 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 덕진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했다는 2억 6천여만원의 적자는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으로 환원됨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천여만 원의 보일러 수리비만 있으면 수리가 가능해 당장 개장이 가능한 데도 전북도와 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

며 아직 구체화, 현실화 되지도 않고 있는 컨벤션 센터 건립계획을 폐장의 근거로 삼고 덕진수영장을 폐장한 것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 덕진수영장 재개장을 요구하며 12월 29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수영동호인들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덕진수영장 폐쇄는 예산의 대부분을 도비로 지원 받고 있는 전북도체육회가 자신들의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전북도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그 불뚝이 엉뚱하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동 호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보듯이 덕진수영장 폐쇄는 전라북도청의무책임과 전라북도체육회의 집단이기주의의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전라북도 지사로 당선된 김완주 도지사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신의 공약에 보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활성화가 분명히 공개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덕진수영장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수영장이었으며 또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한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덕진수영장을 보수비를 과대포장하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수익성 운운하며 폐장한 것은 체육시설의 공익적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김완주 지사는 자신의 공약처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활성화 차원에서도 덕진수영장을 조속히 재개장하여 반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발상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김완주 지사와 전북도청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실현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새다짐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삼례교까지 5.7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 수로 조성, 습지조성, 생태 탐방로 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

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하천을 개간하여 수십년 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만경강 하천 부지 실농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작물 수입의 2년 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은 약 960원으로, 2년분 보상에 1,920원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경우 보상금 총액은 182,400,000 원으로 추산되고, 한 세대 당 고작해 약 4,8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예산은 152억원인데 그 중 보상 예산은 2억원도 안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8세대 경작민들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지장물과 개간비도 포함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금하는 조건으로 경작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규정상 지장물 및 개간비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8세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빈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되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 타시·도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주시고, 일명 생활지원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시에 경작지를 잃고 생계가 곤란한 경작민에게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1년 간 공공근로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수된 경작지는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인력이 소요되는 바, 경작민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에 경작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을 경작민에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보상을 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는 선정을 베푸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연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도서관을 포함하여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각 50억원씩 총100억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가칭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의 설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별 진전없이 고민만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중도서관 예정지역은 기린공원 옆 자락에 위치를 확정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위치의 도서관이 소음이 없고 독서삼매경에 심취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야간에 어둡고 무서운 도서관 길이 접근성이 떨어지리라 생각되며, 주택가에 건립되어 어느때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늦게까지 이용하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올 수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않는 위치 선정이 아니었나 되짚어 봅니다. 다음은 인후3동 주민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주민센터 신축 2순위로 되어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는 지난 2002년 4월에 신축되었으니 이제 7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연면적 2,619㎡ 중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층 한쪽 모서리 201㎡만이 동주민센터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시설로써 사용되고 있고, 이렇듯 작은 공간에서 35,983명이라는 인후3동 인구의 갖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니 언제가 보아도 인후 3동 주민센터는 발디딜 틈도 없이 부족한 시장속 같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실정이며 공무원들의 기피근무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설명드린 가칭 아중도서관 위치와 소요예산의 문제점과 인후3동 주민센터 이용불편과 신축 예산의 문제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축비용의 문제점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 소유로 2,454.6㎡의 면적에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인후3동 주민센터 근처에 위치한 공간에 동주민 센터와 아중도서관을 같이 건축할 것을 제안 합니다. 1,2층을 동주민센터 건물로 활용하고 3,4,5층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지하층과 1층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가뜰이나 열악한 전주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 그리고 이용의 편리성등 일석삼 · 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전 주시에서 신규로 계획하는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 드린 예와 같이 복합센터를 추진 하므로써 비좁은 국토이용에 대응하고 수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헤쳐나가느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

지난 2008년은 전주시민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힘들어했던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신히 2만달러 시대로 진입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금 1만달러 대로 추락하고 산업생산은 둔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 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목표에 불과했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신음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서만이 될 일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누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판만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2009년을 맞이하듯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금년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낙담과 비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차게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 풍남동 ·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빠속까지 전해오는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의 기축년 새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주라는 큰 지붕 아래 떠오르는 새 희망의 빛으로 힘찬 도약의 2009년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광장에서는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제44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대부분의 부와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연설은 최악의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단합과 결속 희망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MB 정부는 종토세 폐지라는 부



자를 위한 정책도 모자라서 사회적 약자인 용산 철거민 화제참사로 인해 얼룩진 역사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64만 전주 시민과 함께 한다면 2009년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구도심 이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전주시는 도심 재창출을 위한 구도심부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향후 5년(2014년까지)간 3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산도서관을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완산도서관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로 시민들의 이용객들이 편리함 보다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협소한데다 진·출입로가 급경사로 겨울철에 매우 위험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이전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많은 유통인구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입니다.

완산도서관이 구도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도심에 드나드는 인구가 늘면 필연적으로 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기존 역할과 함께 새로운 페러다임의 평생교육원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만학도와 주부들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적 분배가 용이 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학습센터, 장애인 도서관 이전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복합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문화공간으로써의 연계성입니다. 완산도서관 이전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가장 적절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복합문화센터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의 도서관이 도심부에 이전됨으로서 도심 기능 재구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전라감영 복원 사업과 시립 미술관 등과 함께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도심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노력과 절차이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정된 과거 도서관이 아닌 전통, 문화, 예술, 교육의 특화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다 기능적인 전주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서 영국의 버밍햄 도심에 셀프리지 빌딩의 예처럼 구도심 경제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 재창조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도심 본관 이전 사업을 조속하고 차질 없는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의원

송천동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오래도록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결의의 말씀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용산 철거민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09-20번지에 대지 354㎡, 건물 66㎡ 규모로 설치된 장애인 사무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방관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사무실은 1995년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양도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한때는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무실은 현판도 없고 운영이 중단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있고 앞마당은 인근 주민의 야적물 적치장이나 타 차량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을 전주시로부터 증여받은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는 장애인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한 사무실을 방치하여 건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자가 건물을 담보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 대표자도 역시 2008년 9월에 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단체 활동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출을 받았어야만 했을까하는안타까운 생각

이 듭니다. 만약 잘못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건물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 갈 것은 뻔 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현직 대표자가 소유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등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이러 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없다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이 무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체 대표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 했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의 관리소홀은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상기 단체에게 또다시 구 전미동사무소 자활자립장을 사용 승인 해주었다는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주시지체장애인 협회는 기존에 전주시에서 지어준 여의동의 사무실을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왜 포기하고, 또 다른 장소에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실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본 건물과 관련된 관리 소홀을 바로 잡고, 일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련의 사태와 전주시 행정에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사무실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 소식은 단비였습니다. 비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송천동 롯데마트가 무상사용 용도로 협약되어 있는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관 준비와 향후 운영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4기 시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화이용시설중 하나는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에 따른 도서관 이용일 것입니다. 전주시 시립 민간 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문고 64개소, 시립도서관 6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작은생활 문

화복지공간이 15개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사립문고, 도서관, 생활 복지공간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 일일 이용객은 평균 1,000명 이상이며 2008년 11월 30일 개관된 서신도서관은 이용객이 3,000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에 전문직 사서직과 역할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담적이고 세분화되어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를 기준과 지표를 결정할 때입니다.

송천동 롯데마트가 개관되면서 송천동에 송천문화관과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서 진행 상태를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마트가 지역사회에 무상사용하도록한 도서관은 2009년 4월 1일 개관 준비하도록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전까지 정식 협약되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마트는 전주 시립도서관과 상호 협의하여 어린이도서관 시설물을 개관 시기에 맞추어 완공토록 이행 약속서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무상사용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 50,000권, 집기, 도서관 운영 경상비 등은 롯데마트 측에서 협약후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인력배치하고 운영 프로그램등 전주시의 사서인력 및 경상비 투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운영의 주체가 위탁이나, 시가 직영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6개소의 작은도서관은 평균 241㎡인데 월 운영비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단체도 종교시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관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전주시에서는 작은도서관처럼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천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평수 995.79㎡로 넓을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임으로 전문 사서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 검토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이 경과된 후 정상화되면은 위탁 시기와 위탁 운영 관리를 잡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특화될 수 있도록 시의 직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어린이 영어 전문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 서윤근 의원

저는 송천동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봄을 재촉하는 그런 따뜻한 비가 내려서 참 가슴이 푸근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운근입니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속에서 이런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으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어느 논객의 표현대로 머리 속에 오직 삼 한 자루 밖에는 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한 이후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소중한 목숨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손에 스러져 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나 존재한다고 배웠었던 그 가공할 속도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상대책상황실 현판이 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에서,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광풍에 온몸을 내맡긴 형국입니다.

물론 서민들 생계 지원 형태의 예산은 가능한 빨리 풀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독거노인, 빈곤층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인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출될 뿐입니다. 결국 조기집행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토목공사이지만 이 역시 원도급자를 제외한 하도급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조기집행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1세기판 개발독재에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관행과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제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긴급입찰제 확대, 지방채 확대 발행,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기간단축, 그간 수의계약은 뇌물, 유착,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낮추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실시공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민주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축되어 왔던 제도와 기능들을 한칼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시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들며 따라 수십억

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이자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게 된다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정부의 추진 근거는 애초 올해 경기 성장률을 상반기 2%, 하반기 4%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뭉땅 돈을 풀어 잘 버티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수정되었고 올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격적으로 대규모의 빚을 내어 내년에 써야 할 돈을 미리 갖다 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의식들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얼마만큼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상황실 문패를 달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한 번 없이 이명박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듯한 전주시의 모습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뿐입니다.

중앙정부 결정 사항의 집행에 노력하는 전주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결정 사항의 집행에 주력하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양용모 의원

송천동 줄줄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봄비도 아주 푸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이 다가오고 계절은 또 이렇게 봄이 오면서 희망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찾겠다는 보수정권의 허세는 지난 10년의 잊고 살았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야 경제가 어려워 지던 말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대해서 09년 10월말까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명분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은 2천만원까지 3회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관급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초 조기집행과 투명성은 매년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나태나 행정 절차상 문제, 또는 부처간 비협조로 인해서 시일만 보내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계약법령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편익을 위한 지나친 특혜를 줄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제약에 의한 졸속 설계와 한꺼번에 시공이 집중되므로써 부실시공 또는 건설자재의 품귀와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실업체의 계약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부실시공, 불 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 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재입찰을 못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 입찰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도 1년만 지나면 입찰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예산조기 집행은 물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 재촉에 의한 조급증이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발주가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부실 발주의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적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은 편법을 동원한 계약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가 부정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즉 특정 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 DC는 해당 가격의 15% 이상 하락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철근의 가격은 지난해에 6월 26일 대비 금년 1월 16일은 무려 27%가 현재 하락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도 최대한의 심의 규정에 의한 제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61회 임시회('09.4.2 ~ '09.4.9)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세번째 발언으로 일제 강점기시대 의도적으로 처참하게 훼손 되었던 전주 지명을 다시 부활해서 민족정서 함양과 우리지역의 올곧은 정신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정신살리기 실천운동 밑그림은 이 지역 곳곳에 다양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의 전개는 그 정신위에 미래지향적인 전주시 경제, 문화, 사회구축을 입체감 있게 설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세번째 테마는 일제 강점기시대 훼손 되었던 전주지명을 다시 부활 하자는 것입니다. 지명은 옛부터 중앙과 지방 역관들이 지명회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지역 정서를 응축시켜 역사를 잇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시대 일본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 지명들만을 찾아 처참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들의 만행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두고 구전으로만 고쳐야한다고 했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전주시내 지명의 경우도 일제강점기때 의도적으로 훼손당한 곳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은 일본의 식민통치 일환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발상으로 우리 행정구역 제도에는 없는 부락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본연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민족성 말살을 피하면서 우리식 마을 명칭들은 생명력을 잃고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령 거북 '구' 자를 사용했던 마을 명칭을 아홉 '구' 자를 써버린 경우, 즉, 구룡리(龜龍里)를 구룡리(九龍里)로 사용한 것과 동서남북, 상중하축의 논리로 고유지명들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전주 KBS가 위치한 산 이름이 구암산입니다. 지금도 그곳 주민들은 아홉구와 거북구를 헛갈려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성고등학교 뒷산이 계룡산(鷄龍山)이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되면서 계룡산 계(鷄)자가 계수나무 계(桂)자로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 시대는 아예 용자를 쓸용(用)으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명칭은 전주시 33개동 전체에 해당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주 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전주시 지명부활을 위한 용역과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야 할 지명은 찾아야 되고, 버려야 할 지명은 어떤 곳인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정서가 스민 지명들은 우리 삶과 함께 한, 우리의 미래를 설명했던 조상들의 지표들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이 헛되지 않게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 나와계신 전주시 새마을협의 회 회원님들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근로장려금 홍보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서민경제의 침체는 지난 3월 전체 실업자수 87만 9천여명과 청년실업자수 43만 5천여명을 양산하였고, 노동·고용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신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올해 전주시도 예산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전년대비보다 54% 증가한 690억 원의 투자를 통해 전주 시민의 민생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칠 을 상반기, 경제적 소외계층은 더 늘어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 빈곤층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접근이 절실하며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장려금제(근로장려금)를 마련하여 근로 빈곤층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절대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

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 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근로 빈곤층에게는 획기적인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가 절실한 이러한 복지제도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나 각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도 홍보하거나 유인물이 배부되는 곳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거나 홍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복지의 다시 한번 후퇴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근로 빈곤층들에게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실적통계만을 중요시하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접하게 하는 지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먼저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시스템을 점검하고 어떤 것을 어디에 적절히 활용하여, 시행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홍보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복지행정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제도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되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뤄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하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접수하며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서민들에게 근로 장려금제도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전주시 새마을협의회 회원님과 회장님, 부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직 시민을 위한 전주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이고 알찬복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올해도 실업자 수는 갈수록 늘고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 체감도는 IMF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주 시민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165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각종 민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6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7,312명의 고용창출과 여성 취업 교육에 1억 2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530명에게 취업을 알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지원사업은 미약합니다.

전주시의 2009년도 장애인복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66명의 고용을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이러한 계획은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참고로 노인 일자리는 1인당 월 90만원 정도이고, 장애인은 월 1인당 35만원 수준의 예산입니다. 약 3만여 명의 전주시 장애인 인구 비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이나 장애인 취업 및 고용에 관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노령화, 장애인의 중증화, 장애인의 중복화 등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고용, 지원고용, 연계고용, 의무고용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의 장애인복지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활시설들의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취업박람회,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등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립되어온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안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정청하여 주신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전주시 새마을협의회 회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열중하고 계시는 집행부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덕진광장에 목련화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금수강산 산천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이 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을 활짝 피워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선 복선화 공사 전주지역 구간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익산에서 여수에 이르는 전라선을 시속 약 150km/h로 달리는 고속철을 복선으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여수 국제 엑스포 개막에 맞춰 현재 전주에서 신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라선 복선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7년에 지하화 촉구 결의안도 내고 주민 서명운동도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서 수없이 전주를 지나는 구간의 민원을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지하화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북부권 개발의 중심축인 35사단의 이전과 함께 추진될 에코타운 건설을 위해서 과 선교를 현존하는 다리 두개를 합해서 5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공사설계로 봐서 3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시를 무시하



는 행위로서 철도시설공단은 단호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64만 전주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이런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금 공사 중에도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는 커녕 시공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송천동 롯데 아파트를 지나 전미동 쪽으로 향하는 차량과 보행인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인 쌍룡건설에서 메가월드 앞 전미동으로 향하는 도로에 임시 가설교를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다리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통행은 완전 무시하고 설계를 하여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의 도로의 차선평은 3M를 기준으로 하되 회전이 심한 구간에는 여유폭을 주어야 하며 인도는 2M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1.5M까지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설되어 있는 임시 다리의 경우에는 급경사가 이뤄져 도로의 폭과 인도의 폭은 정상적인 도로보다 훨씬 넓어야 통과하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려면 대형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으며, 전미동에서 농산물을 싣고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들어오는 손수레는 아예 통과가 불가능 합니다. 인도는 간신히 사람만 통과하게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같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시공사를 찾아갔습니다만 3월 31일까지 가설한다는, 한쪽에만 인도를 가설하고 넓힌다는 약속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언제 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임시가설교에서 그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면 시공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인 전라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척되어야 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아무리 중차대하여도 결코 전주시민의 안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송천동 메가월드 앞 가설교가 시민이 다니기에 불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이 공사는 시정될 때까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인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여러 분야의 51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문화시설의 확대, 청소 부분의 증가 등으로 민선3기보다 더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평가와 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핵심은 최적의 수탁자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월 13일,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시의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또 한 해마다 수탁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되풀이하는 등 민간위탁의 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탁자가 시의 귀찮은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위탁은 시 행정의 민주성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되었는데 모두 같은 조례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는 다른 위탁 동의안들은 모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유독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만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개모집외의 그 어떤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절차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탁자에게 공개모집 절차없이 재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남용된다면 전주시 스스로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던져버리는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평가

따로, 위탁 따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주시가 수탁자를 평가한 결과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는 위탁 심사를 비교해 보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 중 바로 다음해 민간위탁 심사에서 재위탁 된 사례가 무려 7건이며,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 기관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다음 민간위탁과 감사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에도 재수탁을 받았고, 또 다른 모기관은 C등급 이하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평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는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특성화를 매 기획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창출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여” 그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위탁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성과평가와는 상반되는 위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심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최하위 평가기관보다 더 부족한 기관만 참여하여 최하위 실적 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최상위 기관보다 더 나은 기관이 위탁에 응모할 수도 있으나 10개 사례 중 8개가 평가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잘못 되었거나, 위탁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전주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그때 그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민간위탁 평가시에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2년 연속 최하위 수탁기관은 다음 재위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2008년에는 경영평가로 바뀌면서 평가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포상과 패널티의 기준도 해마다 바뀌는 등 성과평가 과정이 도무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기관의 경우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시설이 어린이 안전을 저해한다. 물리적 환경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 기관도 3년 연속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왜 합니까? 때가 되면 평가하고, 때가 되면 민간위탁을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행정이지 않기를 위해서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전주시는 스스로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민간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과 열린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만족감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주시가 아무런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다 원칙적이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투명한 행정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선4기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덕진공원 제방길 주변의 자전거 무단 주차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정문에서 호수를 끼고 좌측으로 나있는 덕진공원 제방길 약 500m가 덕진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값싸게 제공되는 이곳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덕진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 하면서 자전거 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를 벗어나 차도까지 자전거가 주차됨으로써 차량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제방도로는 S자 도로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자칫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서신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며, 회원수는 2008년 현재말 6,000명을 넘어섰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500명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덕진노인복지회관 내에 자전거 주차시설 1조가 있긴 하지만, 평균 15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복지회관 정문으로 통하는 도로가 경사가 매우 심해 자전거 타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복지회관내 자전거 주차시설은 송천동에 거주하는 분들 외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제방길 인도와 차도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구름다리를 통해 덕진노인복지회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회관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홍보하고 유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번 불편하시더라도시설내에 자전거 주차를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진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덕진공원 후문 주차장내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갖추는 것을 생각해볼 만 합니다. 그러나 이곳 자전거 주차 요인이 덕진노인회관 이용자인 어르신들인 만큼 후문 주차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안을 찾자면, 구름다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복지회관과 제방길을 자전거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 주차된 자전거를 복지회관내 자전거 주차시설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를 수용 할 만큼의 주차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제방길과 덕진 노인복지회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 구름다리 끝단과 제방길 옆으로 여분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연초 전주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덕진동, 금암1,2동, 송천1,2동을 아우르는 북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중에 전주 아트홀 건립, 덕진공원, 가련산 테마공원화 사업이 10대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진공원을 포함하여 덕진 예술회관, 소리의 전당, 체련공원, 동물원까지를 문화벨트로 연결하는 대형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구역이 자전거도로를 통한 관광코스로서도 제격인데, 하물며 자전거 무단주차 문제가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어르신들을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자전거 무단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곳 문화벨트를 명소화 하는 도심재창조 사업에도 옥의 티가 될 것입니다.

북부도심권역 개발사업에 덕진공원 제방길 자전거 무단주차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심의를 방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합원들에게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때마다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도 1회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신속 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될 뿐만아니라 아직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자치단체장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의 권한이 명문화 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주시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행정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시 전주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될 것으로 예견되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운영 권한이 전주시로 이관되어 몇차례 심의를 가진 결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 등과 뉴타운 재개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진위원회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과 같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계획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판단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단안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규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겨울내내 준비했던 파란 생명력과 더불어 각종 꽃들이 만개하고 있어 가뜰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깊은 향과 맛과 멋을 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 한가지 사실을 전 전주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일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무차별적이고 싸늘이식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하고 계시는 시민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잊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 24시, 이마트 24시, 롯데마트 24시, 농협 하나로마트 23시, 전주마트 22시 30분 등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관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인 것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만이 그나마 영세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서민을 살리는 유일한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단축에 대해서 준비를 할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초 단체에도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규모 점포 입법” 발의를 한 상태인데 정부의 각 부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외교통상부는 WTO 위반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등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그리고 법무부는 기본권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 폐해 및 부당 담합행위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각 부처의 의견은 제각각임으로 해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경제는 나날이 황폐화되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지혜를 모읍시다. 그래서 함께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의 선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학급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시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만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과일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민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영업제한으로 의무휴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한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62회 임시회('09.5.12 ~ '09.5.15)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SI)로 인해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지구촌의 심각한 상황들을 전주시는 지금 안일 방만하고 있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여름이 시작되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귀가 많도록 바람길 확보와 열섬화 저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자연과 함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자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주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해서 자연 순행을 역행하지 말고 미래 전주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자연의 경외성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함부로 파괴한 대



가로 세계 곳곳에서는 해마다 시한폭탄처럼 이상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의 가속은 대기오염, 환경파괴, 자연의 역행을 우리가 자행해서 만들어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방치 방만하고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재난의 심각성을 저버린 채 홍보 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신종 인플루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촌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있는 것은 순식간에 확산 될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지구촌을 강타했던 치명적 전염병 사례를 보면 1948년 스페인독감으로 5천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이 2백만명, 1968 홍 콩독감이 1백만명,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가 257명, 2002년 사스가 800명을 사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전염병이 한치만 허용되어도 지구촌 인구가 순순간에 1/3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유엔 전문가 집단에서 심각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생각만해도 끔찍한 지구촌 전염병을 두고 전주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유비무환 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 훼손에 나타난 후유증을 막기 위해 치산치수 즉, 바람길 순응과 열섬저감을 기본으로 한 개발을 전주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고, 둘째는 신종 인플루(SI)의 심각성 및 대처 등을 중앙뉴스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6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손발을 수시로 씻고, 외출 후 샤워, 가능한 한번 입은 옷은 바로 빨래하기, 코, 입, 주변에 손가락을 가까이 하지말기,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에서의 요령, 안면 마스크 착용 등을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말미에 언제나 말했듯이 집행부는 본의원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론을 신중히 접근하고, 더불어 신종 인플루(SI) 예방을 위한 홍보를 최대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 그리고 기타 사

람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태양열 흡수, 미세기후 조절효과를 제 공하며, 수관의 가지와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등 도심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각종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곶솔나무길, 녹두길 등 주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교통섬 등에도 큰 나무를 심어 대단위 숲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데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 했지 유지관리 분야에는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심어지는 가로수와 같은 수목은 산이나 넓은 공한지 등과 같이 양호한 생육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건축물, 도로 교통 및 전기 시설 등과 경합하는 열악한 환경속에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생육공간 확보, 시비, 수관조절, 병해충방제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수목관리 상황을 보면 가로수의 경우 년 3~4회 정도에 걸쳐 맹아제거 수목구 제초, 병해충방제, 그리고 민원에 따른 일부 가지치기가 전부이며, 2009년도 본 예산 또한 4억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는 5만여 그루가 넘고 기타 공원 녹지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그루가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예산 등은 우리시 현실정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수년 동안에 걸쳐 관리되지 못했던 팔달로, 남천길 등 주요노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조절한 것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진북동 어은골, 도토리골, 남천로 개일 갈나무는 1979년도에 식재되어 30년이란 세월동안 손 한번 대지 않았던 것을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무의 생육을 좋게하고 주변의 시각적인 경관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숙시원하게 해결한 것은 전주시의 소신 행정의 표본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의 가로수 관리체계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체계적인 녹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타 자 치단체인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20억원의 예산반영으로 가로수관리시스템 개발로 나무의 식재에서부터 생육전반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시 보다 소규모 도시인 김천시 같은 경우도 수목관리에 비중을 두어 도시 전체가 정원같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예산의 소규모 반영에 따른 수목관리의 미비점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



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가로수 유지 관리분야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또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1,800여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혜숙 의원

에이즈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 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공식 확인되고 최근 중국에서도 신종 플루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신종 플루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신종 플루 확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전주시도 신종 플루 확산에 대해 결코 긴장을 늦추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다시 발언하는 것은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아직은 신종 플루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 26세 모택시기사가 6년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승객과 유흥 업소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등과 부적절한 관계 후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충북제천 지역에서는 한 때 시민 대다수가 에이즈 공포에 시달렸으며 대외적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 충북 제천의 문제로만 국한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서도 일부 가정 주부까지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 역시 에이즈 감염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미국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정제도를 통해 전염 사고에 대비한 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관리’와 ‘복지’ 둘 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이 정도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위험 집단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던 성병 검사도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사라져 결과적으로 환자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대체할 방안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이즈 감염자가 거부할 경우 그 동거인에게도 감염자의 질병을 알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헌혈을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검사를 하려고 헌혈하는 사람 이 많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10여 년 전부터 헌혈자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전염 방지 분야에 서는 정부가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복지분야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약제비와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습니다.

앞에서 예시한 충북 제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에이즈 관리제도의 부실을 다시 점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 전주시의 경우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히 언급한 일들이 우리 전주시는 예외일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남성 32명, 여성 3명 등 총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현황과 사후, 만에 하나 제천의 택시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에이즈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대책 강구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골프장 직영방침에 대한 철회와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며칠 전 5월 8일,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기자실내에서의 브리핑을 통하여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검토보고라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의뢰하여 모기관에서 작성한 월드컵골프장 타당성 용역의 핵심내용이 불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전주시의 지적입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실용역의 문제는 이제 제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형식과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며 그 용역의 기본과제인 타당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도록 이루어진 이번 용역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울 난지골프장을 시민공원화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노을공원의 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시장님께서 밝혔던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그 분명한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답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전주시 직영방침 이후 전주시민 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우려 섞인 전망과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와 관련 전문가의 살아있는 제언 등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골프장운영 적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시

가 자체검토를 바탕으로 내놓은 운영수익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300일을 가동하여 하루 개장시간 15시간 동안 최대 75팀이 입장을 하여 발생하는 최대 매출액은 27억 8천만원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비 등의 기본지출액은 22억 7천만원, 하여 연간 5억 1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전문가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경비 지출금액은 예측보다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비구입, 농지전용부담금, 안전망설치 등 개장을 위한 초기투입비용은 예상액이 40억을 넘어 50억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하나 둘 도산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는 몇 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수의 골프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체면을 따지며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지난 민간위탁 과정에서 치룬 혹독한 대가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후 적자손실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전주시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 5억1천만원의 예상수익을 액면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골프장 직접 운영은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인 4만7천평의 잘 조성된 녹지공간에 울타리를 쳐놓고 하루 200~300명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1년에 고작 5억원의 수입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지자체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 전주시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 답변을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역시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의 내용은 이번 월드컵골프장 관련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억이든 50억이든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 액수에 따라서 초기투자한 비용이 바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강제집행 이후 예산이 투입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투움자심사의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실 용역의 문제, 그리고 의회에서 답변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장 최고의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최고의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중요하기 지켜지고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난맥상에 얽혀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과 의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과 답을 도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평음이라는 전주 시민을 불안하게 했던 사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오전 8시 10분경 쿠궁하는 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고 차량경보기가 울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 시민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평음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오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전주 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평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평음이 전투기의 음속돌파시 발생하는 소닉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행정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20일이 지나서도 소방 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무사, 경찰, 기상청, 민간 관계자 등과 함께 평음의 발생 원인을 파악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2일 미공군이 보낸 보도자료에 의해 이 평음이 미군의 전투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주평음 사건이 일어나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와 이후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전주평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담당부서를 찾았으나 전주시에는 이 평음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재난을 당한 시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고 소음에 관련된 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비행기가 음속돌파를 하려면 상부의 승인을 받고 육지에서 약 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1만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공에서 음속돌파를 한 것은 미공군이 명확히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서로 떠넘기기에 바쁜 것이 전주시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는 전주시의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일으킨 미군의 태도입니다. 행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다가 미군의 음속돌파 가능성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20일이 지난 후 관계기관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로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우발적으로 비행했다고 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규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도 태연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내용 또한 전주 시민을 불안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의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행태를 볼 때 전주시와 전주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바로 담당부서를 정해야 할 것이며, 전주평음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 상해 피해나 심리적인 고통을 당한 시민들이 없는지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전주 시민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주시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소한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의 개명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주 시민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도심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의외로 심각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 중 도시가스 배관 확충을 위한 연차적 시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100%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활환경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 후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6%, 2008년 기준 전국 평균 68.8% 보다 앞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3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처럼 전주시의 도시가스 동별 보급 실정을 살펴보면 차별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산동은 99.6%, 효자동 99.6% 등 인구 밀집지역은 100% 가까이 보급율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동 41.6%, 풍남동 25.5%, 노송동은 무려 20.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비해 가면 갈수록 구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특정지역을 통해 비교해 보면, 노송동이 20.7%, 중화산동은 99.6%로 차이가 무려 80% 정도로 심각한 보급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심각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있어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는 전주시가 구도심에 단독주택 등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순위 기준을 정한다면,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도 명분도 상실하게 되고 도시가스 100% 보급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시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 없이 의무만을 강제하여 다른 동보다도 못한 도시 기반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현실은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가 구도심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강제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도 날이 갈수록 쇄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를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태평1, 물왕말, 기자촌, 종광대 2지구만 정비구역이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문화촌, 태평2지구 등 많은 지구들은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도시가스사업 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우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재개발 지구의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 이 문제까지도 현명하게 직시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 공급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구도심 주민들과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의 심화된 취약성을 직시하여 도시가스 공급정책에 일대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도심 재개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과 피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의원

존 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온 도시가 푸름으로 가득한 5월에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과 평화의 푸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송천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입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고, 전통시장은 활성화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곧 서민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위축은 서민경제를 더더욱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주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다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근 3년간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7억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도 16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만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어 홍보, 마케팅 활동, 전주시 타 사업과의 연계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도 적절한 분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모든 사업이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사업 간 연관성을 찾아내어 부어함으로서 각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거나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역시 전주시 문화관광사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티투어에 전통시장 코스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전통시장 코스를 넣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전통시장의 특징적인 판매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의 전통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면 더욱 좋겠지요. 또는 그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전주시민이나 타 지역민이 방문했을 때 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타일 사업 중 한식과 관련해서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는 유명 한순대국밥집과 콩나물국밥집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에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이러한 소재를 개발하고 특성화하는 연구 활동에도 예산을 적절히 분배했으면 합니다. 특히 한옥마을 관광코스에 이렇게 특성화된 전통시장을 테마여행으로 포함시킨다면 한옥마을 관광 만족도도 배가시킬 수 있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제도가 있습니다. 상품권제도는 전통시장 물건사주기 캠페인을 전시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어 어렵습니다. 전주시 축제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자생단체들과 사회단체의 모든 행사에 전통시장 상품권의 일정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9년 사업계획에는 동문상가 특성화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공감하며, 나아가 소규모일지라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타 사업들과 연관성을 갖는 속에서 획기적인 방법

을 찾아내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등등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활기 넘치는 생동감 있는 5월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를 즐기면서 보내왔지만 이제 다시 충전된 에너지를 일 상 속에서 차분히 풀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국회로 때론 각 부처로, 예산부서로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신시가지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부 신시가지 사업은 김원주 전주시장 재임시절 관련 법규인 도시개발법을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외연 확대를 꾀하는 것이였고 세번째로는, 전북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이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모텔과 원룸촌, 시민들에게 짝퉁도시로 인식이 부각되었고, 외연 확대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해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합니다. 원룸촌 용지가 177필지에 일반 주거용지의 20.7%에 해당되며 면적은 52만 4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말 현재 원룸의 건축허가는 242개가 나갔으며 127개가 사용승인이 됨으로써 서부신시가지에 가보면 원룸으로 못자리가 되었으며 도배 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몇 년안에 500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177필지에 1000개 이상 원룸 도시화 가능성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고 저만의 기우로 치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이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 주거용지에 1층에 한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실만을 허용하고 일반음식점, 사진관, 학원 등을 할 수 있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생산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원룸 뿐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토지주들한테 원룸만을 건축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일견 오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적인 원룸촌이 형성되므로써 구청이나 동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데 청 소문제나 치안 그리고 각 동의 각종 행정행위 문제 등은 그나마 점잖은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벌써 아중리나 중화산동, 금암동 등 원 룸의 재계약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의 원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나 친저의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봅니다. 또한 체비지에 대한 전주시의 재정적자가 1300여억 원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압박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공사대금을 갚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잘못해서 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성공한게 한 가지도 없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 뻔한데 전주시의 발 빠른 대책을 호소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본래의 도시개발법 목적에 맞게 착실한 준비를 해 야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대로 방치한다면 서부신시가지는 없습니다. 몇 개의 대형 공공기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 과연 명품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울러 짝퉁만이 존재하는 도시로 전락하면 전주시민의 자존심과 전주시의 야심찬 각종시책들도 짝퉁이라는 오명이 붙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봄인가 하었는데 여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오는데 어려워만 가는 서민경제는 이제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적인 개편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날 행정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없애 버리는 우를 지난 집행부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의로 사업소로 부활하였다가 다행스럽게도 2006년 송하진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업인구 1만 7816명 정도이고 인구대비 2.8%라고 합니다. 여기에 농업 기술센터의 직원은 몇 명이나 하면 현재 16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북의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농업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직원이 최하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의 농민들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지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그 이름에 걸 맞는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의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전주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농업센터 소장은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희망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을 모르느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만 그러나 전문성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이 대거 퇴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2012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오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전주시대를 맞아 많은 농업 정책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농진청의 사업들은 가장 가까운 전주시와 협력하여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는 어떻게 되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진흥청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인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인력, 사업/조직, 예산 운영체제로 종합 개편 되어 농업 R&D 15대 어젠더(Agenda), 12개 지역농업 특성화 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 좋은 전주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농진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실력 있는 농업지도관의 육



성과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2009년 업무보고를 보면 12대 유형별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인근의 군산, 완주, 김제, 무주, 장수 등 전국 51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능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굳이 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잘 하고 계시라고 사료됩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의 내실있는 혁신을 통하여 농진청 이전에 따른 많은 사업의 수혜가 전주시와 함께 하계끔 실효성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9월 제 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석면 처리업체의 허가과정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석 면은 노출시 인체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불치의 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먼지는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까지 비산되며, 단 한번의 노출로도 자각증상 없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결국 시한부 인생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석면을 소리없는 살인자, 언젠가는 터 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위험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석면의 처리시설이 사전 설명회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별안간 팔복동 공업단지 내에 들어섰습니다. 폐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선 곳은 인근에 아파트, 마을, 유치원,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 한복 판으로써 가동 시에 유출되거나 만에 하나라도 폐석면 분진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석면이 비산 되는 반경 2km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주민 20만명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는 잠재적인 비상 사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 대해, 당시 시장의 답변은 허가청이 전주시방환경청이고, 허가과정에서 법률상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활동과 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현재 시장께서는 폐석면처리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석면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안한 시민들은 폐석면처리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전 전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주시 11개 부서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묻는 회신에 대하여, 전주시는 법규상 저촉여부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이 사안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에 도 불구하고 왜 극히 원론적 수준에서만 처리를 했는지 의구심도 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 도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관련법령상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지방자치 정신에는 크게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폐석면 처리업의 허가청이 전주시방환경청이므로 시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폐석면 처리허가를 전면 백지화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폐석면 처리시설의 가동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을 불모로 한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시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업체와의 협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석면의 심각성을 직시하셔서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전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와 성공적인 5월 문화축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보은과 사은의 마음으로 살기 좋고 훈훈한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4. 29 재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진 전주시민의 민심을 잘 받들어 새로운 전주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 3월, 전주시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복지생활권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누고 이를 3대 대권역으로 분류하여 서부권: 서신동, 중화산동 및 서부신시가지(호자4동)의 거주인구가 10만으로 인구증가 속도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조성이 시급하고, 남부권에 호자, 삼천, 평화동지역의 거주인구가 17만으로 기 조성된 문화시설의 수용능력은 과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덕진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덕진동, 즉 북부권은 현재의 인구 상황에서는 문화시설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대한 문화공연장 시설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실합니다. 특히 천년전주의 최초 계획도시 서부신시가지에 도서관, 문화공연시설 등은 부재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특화거리 같은 기능과 용도를 달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설계와 배치가 없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순서에 따라 추진하고 배치하는,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권역별 문화, 복지, 체육, 폐기물, 녹지, 경관계획의 설계와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극단적이고 가까운 예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구도심권과 서남부권의 학부모들은 연말이면 덕진예술회관과 송천동 어린이회관 등으로 갑니다. 그것도 대관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 11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권역별, 유형별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반영된 삼천 경관관리 방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삼천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정비사업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애초 2004년도 의회에 보고하기에 3개월내지는 6개월 정도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하던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삼천동2가 삼천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비포장 하천 제방을 통해 청소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고지 정비사업은 예산낭비의 전형이고, 관련부서 간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위치하고 있는 덕진구 차고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

유와 정비, 세차, 소독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통합 차고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편익시설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각자원센터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완산·덕진구에서 접근성이 높은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대안부지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친환경적인 청소차량 통합차고지 설치·운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완산구 차고지 부지는 6307㎡ 면적의 국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서남부권의 문화공연장 위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곳에서 전승되어 온 전복을 대표하는 전주계룡합굿 즉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및 공연장의 위치로도 최적이라고 봅니다. 전주시는 서남부권의 오랜 숙원인 문화공연장 시설을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을 통합 설치한다면 삼천천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와 여가생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모악산 등산로, 완산체련공원, 삼천 자연형하천, 역사박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국립박물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공연장, 상설 공연장, 친환경 녹색성장 문화벨트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제자리를 찾아 주는 행정, 창조적 사고가 갖는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정책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제263회 임시회('09. 6. 11 ~ '09. 6. 16)

●●●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만금과 태권도 공원의 양대 국책 사업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에 첫삽을 뜬 새만금 사업이 올해 말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차근 차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기지 조성, 신산업·물류중심기지 조성, 차세대 기반의 첨단 기술집적단지 조성, 친환경 복합농산업

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식품클러스터 조성, 자연 환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특화 단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바다와 호수 그리고 산이 어우러지는 국제 해양관광지 개발 등의 목표 아래 길고 긴 여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즈음하여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새만금 방조제 개통대비 관광객 수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600만명, 2011년에는 670만명, 2012년에는 800만명을 넘어서는 관광객이 이곳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권에는 전세계 7,000만 태권도인의 꿈인 무주 태권도 공원이 금년9월 착공하게 되어 수많은 전 세계 태권도인이 전북 무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쏟아지는 관광객이 머물 공간이 없어 잠시 들러 비빔밥, 콩나물 국밥이나 먹고 가는 스쳐 지나가는 전주로 인식되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미래를 맞이할 계획이십니까?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따른 전라북도의 관광객 수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만이 관광벨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금융 등 모든 분야의 중심도시이며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시 건설을 위해 전통 한옥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새만금을 담을 수 있는 전주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미래의 청사진이 될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때 길고 긴 새만금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계획된 미래 첨단도시에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조치원이 같은 해인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두 곳은 광역시로 승격된 반면, 인구 3만8천여 명의 읍 단위에 머물고 있는 조치원의 사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과거 7대 도시에서 지금의 16대 중소도시로 전락한 우리 원인 분석해서 다시 큰 플랜을 세워서 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큰 배가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듯이 새만금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다시 한번 전주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 공원을 연계한 전주시 미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워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호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도 MB정권은 여전히 민주주의 가치관 혼돈으로 인해 나라 정서는 온통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어려워 생각할수록 분위기는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벗어날 줄 모르고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계속 갇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인지, 전주시민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대안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간부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 사업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서 전주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데 매우 아쉬운 것은 정신적 콘텐츠를 안고 있지 않아서, 즉 무늬만 개발한다는 오해를 시민들로 부터 받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주 정신 살리기 4번째 발언은 지난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해 왔던 스마일 운동처럼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쳐서 64만 전주시민에게 긍정적사고와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이웃과 직장동료, 공공장소에서까지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전주시민 의식을 되찾는데 대단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란 웃음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소망도로 개설 보다 정서적 가치관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이를 함께 인식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 짜임새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전주시 64만의 시민의식을 한층 높이는데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انسان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송해진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적 자산인 것 입니다. 웃음으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로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로인해 64만 전주시민에게 여유와 행



복지수를 높이는데 집행부는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보 콘텐츠에 있어서도 웃음과 인사의 의미, 기능,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의학적 가치, 시너지효과까지를 전주시민이 쉽게 설명해서 밝고 활기찬 전주를 6대 도시였을 때처럼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밑그림은 곳곳에서 다양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전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 소재로 활용해서 전주시민의 자존심 높이기와 긍정과 단합의 사고로 바뀌 나가는데 노력해주시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송하진 시장님,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의 표방은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는 이제 녹색의 물결로 물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코폴리스 울산 프로젝트를 통해 태화강의 기적을 낳고 있는 울산시, 국내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그린 빌리지선언, 100만 그루 가꾸기 운동과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시, 하천의 물길을 따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진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광고 신도시 등은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악영향으로 도시 내 건조화에 따라 환경의 질은 날로 악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열섬화 현상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갈수록 도시녹지 보전과 친환경 생태조성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변화는 양적 도시개발보다는 질적인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와 경관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얼마전 전주시는 향후 진행되고 있

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저탄소 친환경 개발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현재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저탄소 친환경 개발 계획을 반영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녹색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전기자전거 40대를 직원들의 업무출장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전거 체험단을 운영하고 워크숍과 보고서 작성등의 시민참여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작은 실천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은 분명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천년 고도 전주를 푸르게 가꾸는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대와 미래를 위해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웰빙과 환경이 전반적인 문화 코드가 된 요즘 보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선진도시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틀을 다질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참여를 이뤄내야 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순히 알리는 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시민과 호흡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탄소 녹색도시 전주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드리며 그분의 서거가 분열이 아닌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전 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6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바이전주 상품지원이 초등학교와 공동조리한 5개교 중학교만 지원되고 있어 중학교 전체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주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품소재 또는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



이 있는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한 후 전주시가 품질보증을 하는 바이전주상품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전주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각종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하고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

우리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 상품의 판로개척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WTO협정으로 한층 어려워진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품목은 주식과 부식 그리고 무료급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2008년 전주시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 쌀이고 부식은 바이전주 상품인 두부, 청국장, 전주콩나물, 김입니다. 무료급식은 농촌동 초등학교 9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식으로 제공하는 두부 등 바이전주 상품이 6월 현재, 전체 중학교 35개교 32,099명 중 공동으로 조리하는 5개 중학교 3,386명을 제외한 30개교 28,713명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사업의 본래 목적인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부식으로 바이전주 상품을 지원받지 못하는 30개 중학교에게 바이전주 상품의 부식을 제공 받고 있는 5개의 공동조리 중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할 경우 180일을 기준으로 1식 3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억 5천 5백 여 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바이전주 상품 중에서 급식재료의 종류가 빈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특별 대책을 수립하셔서 학교급식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바이전주 상품 선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바이전주 상품의 급식재료를 쓰지 않는 학교는 결국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이상 기온 상승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됩니다.

우리 전주시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도시락제조·가공업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알찬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1,800여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총 33곳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참여 계층이 편중되고 자치 프로그램이 일관된 취미활동 혹은 사회교육 분야로 한정되는 한계를 나타내며, 참여대상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은 총 262개이며 이중 장애인 참여인원은 총 8,863 명 중 61명으로 전체 수강인원의 0.7%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또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자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센터의 단순 기능을 넘어 나눔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 프로그램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문화 여가, 사회복지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써의 동질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최소 단위 종합복지시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자치프로그램 시행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일반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즉, 장애인 프로그램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각 자치센터에 순환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스



스로 장애의 불편함을 체험하고 고민해보는 오감체험 프로그램과 점자교육, 수화교육으로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자치센터에 일정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 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독서 교실이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점목 요가 프로그램, 장애인 노래교실 혹은 합창단 운영,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웃음치료교실 문화탐방 교실 등의 신설 운영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위 두 가지의 프로그램 시행 접근 방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과 지역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시범 센터를 선정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단위의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열악한 복지환경의 저편에 있는 전주시 장애인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전주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 유일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자치프로그램의 시행을 희망하며 장애인도 전주시민으로써 당당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으로 일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5월 23일 통한의 역사를 남기시고 서거하셨습니다.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권위주의와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던 서민 대중의 영웅이셨습니다.

모든 국민 저희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본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상인들의 삶의 현장인 남부시장에 대해 말씀드리

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시장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시설들을 정비해 왔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현 상태를 보면, 아직도 재 활성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권의 위축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남부시장에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까지도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인 상황판단을 분석해서 남부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남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을 독점하고 구도심에 있던 공공기관이 신시가지로 이전하여 신 개발지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감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남부시장의 경우 1959년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1993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송천동에 개설후 남부시장, 중앙시장, 금암동 공판장 기능 모두를 수용하면서 전통시장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지역상권으로 자리 잡았던 전통시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과 대책없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곳에 집중 배치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미숙한 정책이 결국 전체 구도심 주민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호남의 물산이 집결되는 경제활동이 중심지였던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시금 개설하거나 기능적 보장 및 재배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상품을 특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시장에 혼수골목 특화거리, 한복골목 특화거리, 잡화골목 특화거리, 먹거리 골목 등 몇가지 상품을 특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관광투어 상품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옥마을과의 접근성과 함께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남부시장의 관광 브랜드가치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부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남부시장에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꼭 부활시켜 영세 상인들의 소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주영은 의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실천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의 아픔을 모아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희생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가치들은 보존되어야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잘못된 시도들은 지난 6월 항쟁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2동, 전미동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도시민의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을 활용한 취미생활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옥상정원, 실내공간농업, 공동 체 정원, 시민 농장, 동물 키우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유익과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가져다주게 되면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녹화 등 생태보호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텃밭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시흥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텃밭 가꾸기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사업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텃밭 농장 조성 분양 100가구, 옥상 베란다 상자 텃밭 가꾸기, 농부학교 운영 등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주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것이 오늘 본의원의 발언 취지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도시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공동체가 실현되고, 둘째 유기농 재배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사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셋째, 짙은 도심속에 푸른 섬을 늘려나가는 푸른도시 가꾸기 에도

일익을 담당하며 넷째, 농업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 영농자에게 영농정보, 기술, 교육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주시 농업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커뮤니티 조직이 형성되기 용이한 자생단체, 경로당, 아파트, 행정기관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지원, 재배일기 공모, 사진공모, 동호회 및 농업후원자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전주시 소유의 체비지 중 무단점유의 도시농업을 합법화하는 방안과 활용 가능한 부지를 공개 임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도심녹지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의 사례를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과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관공서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심에서 웬 경작이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 개인의 건강한 삶과 도시 내 공동체 형성,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권정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이 무르익는 초여름 문턱에서 청천벽력같은 국상을 당하여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한옥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용역 발주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조성을 보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고, 어느 어느 시설은 어느 곳에 또 다른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이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부지를 물색하여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



종 시설이 산만하게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한옥마을 인접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집중해서 시설을 배치했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관광이 될 것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에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 19,800㎡에 연건평 14,418㎡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부지면적 19,800㎡중 건물 바닥면적으로 31%인 6,087㎡를 사용하고 나머지 69%인 13,713㎡는 주차장, 조경, 소공원, 수변공간, 놀이마당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는 알토란같은 토지에 6,087㎡를 사용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19,800㎡에 한지진흥원과 한스타일진흥원 등 2개 진흥원만 건립한다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 3대문화관을 올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한참 신축 중에 있습니다.

3대문화관 위치를 보면, 완판본문화관은 전주향교 앞, 부채문화관은 최명희 문학관 옆, 소리문화관은 한옥생활체험관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3대문화관을 각각 분산배치 하지 말고 한곳에 배치하면 한곳에서 3대문화관을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토지 이용면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대문화관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곳에 배치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조성과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분석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권위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유치갈등과 기피갈등의 문제입니다. 유치갈등이라고 하면 PIMFY라 고 해서 Please In My Front Yard 즉 좋은 것은 내 앞마당에 가져다 주십시요라고 하는 의미이고 기피 갈등은 잘아시다시피 남비현상이라고 해서 Not In My Back Yard 해서 나쁜 것은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무공해 시설이나 공

공기관 등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납골당 등은 다른 지역으로 떠넘길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비현상의 경우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금전적인 보상 요구로 귀결되어집니다. 이런 갈등들은 주로 이웃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주시에서 기피갈등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그동안 전량을 서해바다 남서쪽 200km 해상에 투기해왔던 하수슬러지를 2012년부터는 소각해야 할 상황에서 슬러지 소각장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은 삼천동 종합 리 싸이클링타운으로 결정되었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 송천동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일 90여톤의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리싸이클링타운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매년 시민의 혈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싸이클링 타운이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간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생각하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과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어서 두 건을 동시에 심사해서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의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시청 앞에서는 삼천동 소각자원화센터 설치와 관련된 인근 주민의 보상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상의 타당성은 없어 보이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1993년에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유명무실화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구성 인원을 보면 13명의 위원 중 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 등 8인이 공무원이고 민간 위원은 5인에 불과한셈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폭주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유치갈등 또는 기피갈등과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이 위원회에 민간의 권위 있는 기관의 위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대폭 영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주하는 갈등들을 민선 시장이 모두 떠안고 끔

꾸거리지 마시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갈등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전통과 권위를 확보해서, 갈등의 해소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택시 행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대립교통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8일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노숙을 하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전주시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15일인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대립교통은 전 대표이사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이사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정직, 부가세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립교통은 전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립교통에서 취업식 행사를 하고 사장으로 취임해서 택시노동자들에게 해임통보까지 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는 대립교통의 대표이사임을 자처하면서 11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말이 안되는 이유로 해고한 해임통보 내용증명서입니다. 또한 대립교통은 지난 3월 노조위원장을 회유해 노무관리자로 만드는가 하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들어서자 사납금 인상, 조합원에 대한 시간규제 등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입니다. 2008년 10월 대표이사가 바뀌고 2009년 5월말부터 대립교통 택시노동자들은 불법경영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일해왔고 1년 후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찬 노동자를 예비기사로 발령을 내어 일을 빼앗아 버린 과립치한 행위 등을 용납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잠정적으로 타결을 본 것이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전주시는 법적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노사협상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의견을 구하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지난 8개월 동안 대립교통의 불법

경영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은 파업에 참여한 택시노동자들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장시간의 노동과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시의회가 8대에 들어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는 문제, 전액관리제, 개인택시 신규 면허시 동일택시에서의 7년 근속규정, 유가 보조금 문제, 1인1차제, 전주시에 신고된 노사간 임금협상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감독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택시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립교통과 같은 사안은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요즘 민원현장에 결합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은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전주시의 행정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우리나라 국보 제 1호인 숭례문의 화재 이후 우리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숭례문 화재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문화재 보호 대책이 미진하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들 역시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가 지정하는 지방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문화재가 총 710개로 그 중 전주시에

는 <표 1>과 같이 6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 받지 못하여 방치, 훼손되



고 있는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와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소재한 미지정 문화유적은 현재 충효비, 서원, 정려, 기타비를 포함 40여개가 넘습니다. 이 문화유적들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형태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예 관리자가 없는 곳은 안내판도 없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찾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 방안으로는 먼저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카드를 작성,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해내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판단에 의한 지방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될 수 있게 추진하고,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는 시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가 이렇다 보니, 문화유적들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적이 100개가 넘는데 고작 59개만 소개되고 있어 미흡하기만 합니다.

전주시 문화유적을 총 망라하여 소개하고, 테마 관광의 코스에 포함하여 전주시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여러 곳에 있는 문화 유적들이 무관심속에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100년, 200년이 넘는 역사 유물을 고증을 통한 역사적 고찰없이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아토피리스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산 만땅하지 말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루속히 실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옥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를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주시는 주택공사와 개발사업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375,200㎡ 면적에 4,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진행 중이며, 단계별로 법원 및 법조타운 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두 지구 내에 걸쳐있는 기지저수지(기지제)중심으로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 생태축을 연결하는 도로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명품 신도시로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일상 생활의 교통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절실한 가운데, 시작 단계에서 이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세심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성지구내 계획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연장 6.5km입니다. 내부에 2.0km, 외부 4.5km가 설계되어있고 혁신도시 내에는 약 40km의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전거 도로를 산책로의 기능을 더하여 기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만성지구 기지저수지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에서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과 기지저수지 댐 밑으로 도로 및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면 월드컵로 - 만성지구 - 기지저수지 - 혁신도시 - 만성지구 - 월드컵로의 친환경 생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두 지구 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추진부서가 다르면 인접한 사업지구와의 도시기반시설 연계와 인프라 구축이 갖는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소각자원센터 진입로 개설과 서진로와 연결되는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두 개의 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하나의 사업으로 항방산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주권 폐기물 집적화시설과 영상제작 단지를 하나로 잇고, 북부권과 앞서 말씀드린 만성지구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부권 관문 역할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로를 반 쪽으로 추진하고 그것도 연결하는 개념이 아닌 부서별로 따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태도를 보면서 전주시가 평소 강조하는 비전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안이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담부서를 통해 지가상승에 발목 잡히지 않는 전폭 개설과 종합적인 도로 사업 설계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예산투자 효과

와 인근지역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어울리는 제자리를 찾아주는 행정, 창조적 사고가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정책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64회 정례회('09. 7. 6 ~ '09. 7. 22)

●●●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세 경감액의 77.3%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양도세 등 직접세는 폐지 또는 완화하여 부자들에게 약 11조원의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그 손실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최근 윤 중헌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 등에 포함되어져 있는 간접세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식 감세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주와 담배라도 있어야 울화라도 달랠 수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가리켜 부자들 세금을 빼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서민홍대를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자사고는 부자들만의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가고 점심 끼니를 걱정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해 주

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4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립된지 대략 1년이 지난후부터, 운영비로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학생 1인당 간식비 7백원, 방학중에는 학생 1인당 중식비 3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부터 실시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물론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제 지역만해도 서서학동에 흑석나눔지역아동센터, 단비 지역아동센터, 동서학동에 로템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1동에 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비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섯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기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군대도 면제 받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부자와 재벌 편향의 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예산상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인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빈곤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미래의 전주시를 위하여 가난의 대물림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업비에 대한 시비중액이 어렵다면 아동복리 후생비나 난방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치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희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운동 5번째 발언으로 전통문화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시가 선비정신이 숨 쉬고 있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유할 수 있는 탐방로를 실사구시적으로 연계해서 의미 있는 전주 알리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전통문화도시로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를 깊게 들어가 보면 유감스럽게도 전통문화도 없고 현대문화도 없는 급조된 겉치레 문화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 문화 전체를 급조된 문화로 볼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한옥마을의 경우를 보면 한옥 건축미 없이 기와장판 올려놓고, 그 안의 경우는 상업주의에 편승해 식당, 술집, 찻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을 전주 대표 브랜드 한옥마을로 표방을 해야 옳은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 곳곳에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전주 역사문화를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현대 문화와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해서 64만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주 정신 살리기 운동과 더불어 귀중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시내권을 동서남북으로 범위로 정하고 전주객사 중심의 역사 동맥선은 풍남문, 경기전, 전주사고, 전주향교를, 그리고 전주서원의 동맥선은 화산서원, 서산서원, 황강서원, 반곡서원을, 전주의 산성(山城) 동맥선은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전주주변 고찰(古刹)의 동맥선 등을 찾기 쉽고 문화가 있는 거리로 연계해 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이 있다면 전주는 경기전 돌담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 덕수궁처럼 전주 경기전도 시민이나 연인들이 걷기에 충족한 환경을 연출해서 경기전의 독특한 주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삼천동 막걸리 집, 중앙동 웨딩거리, 중화산동 가구거리, 중앙동 책방거리, 완산동 산비둘기 거리, 삼천 주변 백로떼거리, 백제 로 전자 상가, 전북대·전주대 구정문 앞 청소년 문화광장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담당 부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문화적으로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문화 탐방로에 연극공연과 소형 뮤지컬이 끊이지 않는 소극장이 필요합니다. 365일 스케치 인물화를 그리는 장소,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어린이부터 여고생, 어르신까지 낭만의 거리, 경기전 주차장을 주말이면 쌈지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비보이와 연주회등이 끊이지 않는 문화 창출등으로 전주 역사문화 탐방로를 현재 문화 광장과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4대문 복원과 전라감영 일부복원은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이 바탕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 마다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을 염두 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아가는데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천년전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천동 효자동 거주 시민들은 건강증진과 짝 막힌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삼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에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신 덕분에 삼천변이 밝아져 안심하고 편안하게 천변 산책을 즐길 수가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삼천2·3동 등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은 학교 주변도로는 당연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3동 해성중·고의 학생수가 1,794명이나 뒤편에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한 달에 한 두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성중·고 앞 스쿨존은 전주시 교통행정의 사각지대였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행정의 실책이었는지 시장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해성 중·고 앞 도로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대수가 236대나 되는데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쿨존 미 지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부추겼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방만한 교통행정 운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면에 있는 대형 tv를 보시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째, 먼저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해성중고까지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둘 째, 해성 중·고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스쿨존지정과 동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적색 신호등과 녹색신호등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며 등하교 외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 째,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부터 해성중고까지 자전거도로를 도로 양쪽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펜



스 설치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사유지 및 도유지를 매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자전거를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천변과 해성중·고 앞 계룡길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산책로로써 그리고 생활체육의 자전거 도로로써 틀림없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동 1가 705-3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360세대 1,130명은 전주시의 탁상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천2동 쌍용아파트는 곰솔나무길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광대로변과 맞닿아 있으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박탈하여 행복하게 잘 권리를 전주시는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는 공부할 권리를 소음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자자 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천2동 관내 쌍용아파트 곰솔나무길 광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장마로 인해 축축해야 할 대지는 말라가고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건조하고 후텁지근할때 일수록 여름철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전주 만드기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맛과 멋과 전주의 독특한 향을 빚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도권 기업들의 전주로의 기업유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의 지고지순의 선은 기업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기업이라 전주시에서 볼때 사랑스럽고 또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모두가 자식 같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전주시의 기업유치에 있어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주시는 섬유업체와 관련하여 대형섬유회사 2개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A사는 80억과 직원채용은 300여명, B사는 70억과 500여명의 채용인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주시민중 800명이 신규 채용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명실공히, 니트 산업, 본산지의 옛 영광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다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영세봉제업체가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섬유회사는 약 50인 이상을 중견, 50인 이하는 소형인데 약 130개사가 있고 6천8백여명 정도가 2009년 6월말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봉제업체의 입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는 가용인력 대비 봉제라인 초과로 봉제인력 부족입니다. 두 번째, 신규채용시 전주에 산재한 영세한 봉제공장의 전문인력 빼가기로 기존영세업체 죽이기, 다시 말하면 산 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다 죽이려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세 번째는, 고단가인 대형 봉제업체의 진입으로 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영세업체 자금가중난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존업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난 문제발생에 따른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봉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업 입주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입주한 기업이 최소 5년을 기업 활동을 해야 인센티브를 줍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면 각종 세제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마땅이 조례 개정을 통한 패널티 항목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이키가 2년동안 생산활동하다 철수를 한바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업유치도 이제는 내용 있고 깊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깊은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기업유치의 노력들이 담기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전주시는 기업유치 하는데 불리한 요소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 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밭목 잡힌 35사단 이전사업, 확실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위상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시 역동 프로젝트 5대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으로 35사단 1.16km², 206항공대 0.32km², 사유지 0.54km², 총면적 2.004km² 면적에 사업비 6,803억원의 35사단 이전 도시개발의 친환경 미래도시로 자연이 숨쉬는 생태전원도시, 삶의 여유가 흐르는 휴머니티도시, 미래를 여는 첨단생활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 등 개발 컨셉을 구상 전략으로 2006년부터 임실로 35사단 이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임실군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선고일인 오는 8월14일까지 50여 일간 35사단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40여 세대에 대한 대집행은 물론 하천공사와 대지조성, 토목공사와 실내체육관 등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첫째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둘째 임실군과의 사전협의 여부, 셋째 주민설명회 이행여부, 넷째 공동사업자에서 임실군 배제여부 등을 판단하여 내려지게 되겠지만 특히 이중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를 놓고 원고 측인 임실군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원이 일단 임실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주민들의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35사단 이전 사업이 이전지에 대한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14%가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미이주 세대와 하천하류 감성마을에 대한 재해 위험성 등이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지만 과연 집행정지 효력이 의문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실 주민과 국방부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5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함집할 정도로 매끄럽지 못했던 전주시의 행정행위와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난관에 봉착한 35사단 이전사업이 앞으로 8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앞으로 중심지가 될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 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습한 장마철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삼가 기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의 각종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가칭)전주시 건설 기술 심의제도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성은 수없이 강조해 왔고 오늘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성예산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추어 저희 전주 시의회 예산정책연구회에서는 전주시 재정포럼

과 함께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3일 진지하고 열띤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기 되었던 사업별 예산제도와 성과평가제도는 이제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든 전주시에서 도입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예산 절감과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 집행의 실체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전문성을 갖춘 전주시 건설 심의 부서의 개혁적 제도 도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건설심의 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전처의 전문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와 두고 있는데 건설 심의 소위원회, 건설기술 자문 소위원회, 설계 적격심의 소위원회, 계약분쟁 자문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전주시의 감사관실 일부 기술감사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 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의 모든 문제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에서 수행 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관공공사는 사업비만 차이가 있지 같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일반 사업의 단가나 공사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공사비와 관공공사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관공공사를 맡으면 거저 먹는다는 건설업계의 회자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측 하건대 이 제도가 도입 되어 잘 운영 되면 전주시만의 건설 표준품셈이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예산절감의 크나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시에서 시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천 3백여억원을 들여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이 사업은 절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아니 되는데도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 이 1년간 유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 이 사업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면서 본의원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좋은 제도를 도입 하고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제도의 보완으로 검토하여 볼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상습침수로 고생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모든 게 원상회복 되도록 기원합니다.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적재산권 관리화와 수익화방안에 대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정보, 문화콘텐츠, 생물산업등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무형에서 유형까지 토종에서 새로운 변이까지, 모든 창조물은 지식기반에 경쟁을 가져야 하는 고도의 산업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많은 용역과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프라를 형성하고 관리 운영할 때가 왔습니다. 전주시 역동 5대 성장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지적재산업입니다. 한스타일 분야의 문화콘텐츠, 생물소재산업의 신산업과 연구물, 영화산업의 촬영물, 탄소산업의 원천기술 등,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등 소관 업무를 개발하고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도시국의 디자인사업도 상표나 디자인 창작물들을 복사할 때는 돈이나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설물과 용역과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 재산권이 아주 고도의 기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생물, 문화, 향토자원도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의 범주는 아주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방점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 생활에서는 초상권 침해부터 농축산물의 종자 식물산업까지, 문화컨텐츠에서는 영화 DVD나 음악 CD등 생활문화자원에서 기술특허, 지적저작권까지 다양합니다. 전주시 보유 지적재산 조사 발굴용역서에 따르면 10년간의 용역계약 결과물 1,577건 중 69건 발췌해서 11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산하기관은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탄소기술원 같은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주요조사결과를 보면, 비법밥의 상품권, 쓰레기 계근 시스템, 한옥마을 모형만들기 실용등록 3건, 전주 문화재 브랜드 시스템 구축에 무형문화재 9명 등입니다. 또 다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보유의 지적재산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가 큰 전통향토음식, 한지관련기술, 전통지적자산 30여종, 근현 대 자산 20여종, 용역 및 산학프로젝트



결과물 10여종 등 기타 지식자산까지 60여개가 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주시 향토 지적재산권 취득현황을 보면, 31건의 품목으로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상표권 9건, 디자인권 6건, 저작권 1건, 품질인증 5개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바이전주 상표권, 비빔밥로그, onn브랜드 상표권, 평화동 학전 참게쌀, 조촌동 원동배, 용정우렁농법쌀 등 생활 문화 산업자원 등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값어치를 찾고 마케팅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서 기술의 부가가치성이 있는 세원의 미개척분야의 가치를 찾자는 것입니다. 향후 전주시는 지적재산권 관리 운영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더 심도 있게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풍수해의 위험으로부터 전주시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언론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전국을 강타한 비를 물폭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 15일 147mm 집중호우로 인해 진북동 도토리골, 어은골 도로유실 및 집 침수 피해와 인후동 동초등학교 뒤 주택 가에서 축대가 무너져 주택 2채가 무너져 8세대 15명의 주민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은 연일 전주천과 삼천의 수위를 급격히 높였고 수시로 백제교와 이동교 마천교 등 전주시내 언더패스의 차량통행은 중지되어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전주천변 주변은 폐가구 등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소도 이제는 천혜의 무재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주시역의 최근 몇 년간의 피해 사례를 보면, 2005년 8월 2일 ~ 3일 서해안에서 발달한 저기압대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79.5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총 17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250억원의 복구비가 들었던 아픔이 상기됩니다. 이외에도 2002년 전북지역 18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 2003년 10,975여명의 이재민을 발생 시킨 태풍 매미,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2,790명의 이재민을 낸 풍수해 피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옵니다.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예정없는 국지성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재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치하고라도 그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67 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4.19% 증액된 15 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여 자체 상황근무자를 편성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재난안전에 각별한 준비와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주시는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보완하고, 재해시 필요한 수방자재, 구호물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을 둔 방재정책을 바탕으로 한 재해 침수 우려지역을 지정 대피로, 대피장소를 지정 관리하여 산간지 역 및 야간 집중호우 대책 등의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안전선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혹 있을 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모 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64만 전주시민들의 안녕과 재산도 한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1,800여 공직자 특히 방재 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 를 견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백현규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완산동, 중화산 1 · 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실버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5.1%, 2000년대에는 7%, 2008년도에는 10.3%로 현재는 노인인구 5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3%가 고령화 인구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5년 10월, 사단법인 생활안전 연합에서 제9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69.7%가 보행시 교통안전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82개소에 노인보호구역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노인보호 구역 설치 전에는 한해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곳이 노인보호구역 설치 후에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실버존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도보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실버존 제도를 정착하여 건강한 이동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의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노인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법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인정책을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0~60년대 고난과 역경을 생활처럼 여기고 살아온 경제 성장의 주역이셨던 고령층 인구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실버존 지정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변지역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구의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2천6백여 전주 시 공무원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영세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넘을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언하여 입법의 성과를 내는 등 시민과 영세상인의 입장에 선 지방정부로서의 제 역할을 의미 있게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정책방향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 실천과제를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전주 시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50원에 판매되는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활용의 권장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주요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비닐봉투는 1억 3,356만개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6억 7,800만원이라는 상당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환경적 입장을 넘어 지역에서의 상생을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갖춘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책임감과 의지부족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무료 종이봉투 지급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8곳의 대형마트 중 6곳에서 매장 내에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종이봉투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이봉투를 비치한 곳 역시 자발적으로 계산대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만 멀리 떨어진 고객지원센터 등에서 종이봉투를 제공하였으며 종이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껏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봉투 이용보다도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보호에 가깝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닐봉투를 판매하며 종이 봉투 지급을 꺼리는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종이봉투의 지급과 함께 지속적인 장바구니 활성화 정책을 구사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합니다. 전주시내의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며 사회적 책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지역기여를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주시가 나서서 전주에서 만큼은 어느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1 회용 비닐봉투가 아닌 무상의 종이봉투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철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납동, 노송동 지역구 임동찬 의원입니다.

жат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만난 무재해 지역으로 여겨졌던 우리 전주시가 요즘 진퇴유곡(進退維谷)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해대비를 위한 노력은 시민이 당장 느끼지 못하는 시책일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됨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경로, 팔달로 인도 친화적인 정비사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성을 사수한 이정남 장군에게 내린 왕실휘호 ‘충경’에서 유래된 충경로와 함께,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1번 국도 팔달로는 구 도청 자리에 있던 ‘팔달루’에서 명명되어 사통팔달 통하여 전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도로입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 수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보와 직선제 개헌 등 군부독재 타도라는 외침의 광장으로 일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백골단이 최루탄과 몽둥이를 휘둘러 민주

주의를 탄압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인도에 있던 보도블럭을 깨트려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후 충경로, 팔달로 인도 보도블럭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시 인도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인도를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파손된 부분만 땜질식으로 복구를 하였으며, 거기에 자전거 타기 운동의 열풍에 따라 일부는 투스콘 시공이 접목되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고, 색깔이 퇴색되어 인도가 아닌 누더기 도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작년 9월 이러한 팔달로를 보행자 위주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환영하였고 바로 보행자를 위한 명품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다된 지금 충경로 팔달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금방 할 것처럼 보인 명품거리의 이미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잘 정비된 청소년 광장, 걷고 싶은 거리와는 전혀 융화되지 못하는 지저분하고 이질적인 모습만 남겨져 있습니다.

부서지고 파괴된 낡은 경계석에 풀이 나고, 인도는 움푹 진푹 패인 채 방치되고, 상가에서 내어놓은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진정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전주시가 의지는 있는지 의문점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도로이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여 한옥마을과 연계되어 전주시의 중심 상가인 객사주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고유의 문화속에서 창조된 이미지의 인도개설과 유지관리가 절실합니다. 한옥마을의 실개천의 아름다운 인도를 건다가 전주의 대표적인 중심도시 충경로를 거쳐 팔달로의 누더기 인도를 접하게 되면 민망하고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쉽게 잊혀지고 나쁜 이미지는 오래 간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 순리 일 것입니다. 전통문화도시의 전주는 문화재와 볼거리가 한옥마을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한옥마을과 걷고 싶은 거리의 좋은 이미지보다 지저분한 충경로 팔달로의 인도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 옛 전주시의 이미지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않느냐고 손을 짓거나 혀를 찬다치더라도 그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객사, 사대문, 구도심과의 조화된 천년전주 역사의 계승차원에서 한옥마을, 충경로, 팔달로가 서로 어우러져 최근 화두인 느낌의 미학을 즐기기 위해 천천히 걸으면서 전주를 느끼고 옛 선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품 인도의 개설을 한시바빠 서둘러야

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충경로 팔달로 인도의 주변 친화적인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
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와 민선4기 성공적인 결과와 평가
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
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주시 폐기물 시설 추진과 운영에 대하여 발언
을 하기전에 오늘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만 전주 종합경기장의 테니스장 철거에 따 른 대
체시설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발빠르고 신중
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
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
이는 유행어중의 하나가 토사구팽, 줄여서 ‘팽’
이란 용어일 듯 합니다. 이를 환경분야에 적용하
여 유행하는 말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넘비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
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팽’과 지역이기주의란 두 용어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장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역이기
주의’라는 용어는 주로 행정과 언론에 의해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과 시
설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선
택을 강요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 관
료적인 행정, 지방자치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사
회적 합의 미성숙으로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근거한 협약과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
은 다 빠져 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다름 아닌 지역이기주의의 실
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폐기물시설 지역
을 결정하는 부지 공모 방식입니다. 팔복동 음식
물처리장이 그간 우리에게 준 교훈은 처리규모
를 적게 하여 독점시설이 아닌 2개 이상의 시설
을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
리장 이전, 송천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
리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리사이클종합타운 부지
공모방식에 담아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개선의
여지를 전주시 스스로가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추진과정과 현재의 운영을 보면 시설만 집중해
서 설치하고 정작 주민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기
본적인 약속과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
구하면 난색을 표하고 경제적 논리로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의 담당자는 잘 모르는 일이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주시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천
억대가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리사이클링 종합
타운 사업은 중요한 모든 결정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몇몇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
사나 행정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전
적으로 부지공모를 통하여 선택을 강요했고 이
를 받아들인 주민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반영하
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 뜻에 따름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
인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각각의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을 두 배 이상 초과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중
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을 한다면 철저한 실명제
를 도입하여 시설에 이름을 새겨 놓고 후에 문제
가 발생하면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재정
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정책은 처리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원순환 개념과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유엔과 환경부 방침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
용, 소각, 매립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시
는 이제 배출, 수집운반, 시설운영과 민간위탁 업
무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정
책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
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65회 임시회('09.9.3 ~ '09.9.10)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을 들
어 돌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공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칩
체국면에 있어 요즘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시지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6번째 발언으
로 전통문화도시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에 시립
미술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
동안 역사와 정서적 분위기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문화 내면을 깊
게 들여다 보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주는 아직도 무늬만 문화예술로 되어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주정신 살리기 6번째 발원은 다름 아닌 전시, 공간 예술을 근간에 두고 있는 미술계를 보면 지금까지 전북도립미술관 공간에서 더부살이 형태로 연명해 왔는데, 그나마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조차도 수장고가 포화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상식적 측면에서 말해보면 지역 미술관이 없으면 미술인들의 소중한 작품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고민하는 작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미술관 설립 분포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옛 기무사 자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도시를 포함 70% (전주시미술협회자료) 이상이 미술관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는 고창군립미술관, 순창군립미술관 등이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미술협회 회원 수는 정회원 700여명, 준회원 300여명으로 1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의 예술 메카는 전주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1000명의 작가들은 전시 공간 하나 마땅히 없어 도립미술관을 주로 활용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의 경우는 도심권 내에서 벗어나 있어 미술관을 삶의 일부처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매우 훌륭한 작가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지만 전시 공간 충족도와 수장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작가와 작품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시립미술관 설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도심 내에 설립이 되어서 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전주 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서 문화 예술적 측면의 대단한 콘텐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전주정신 살리기 실천운동을 항상 염두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고,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찾기에 적극적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시장,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최근 진북동 소재 도 교육청사가 효자5지구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도 교육청 청사부지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전주시는 팔달로 권역에 포함된 도교육청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최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후 매입할 것을 천명했던 전주시는 4월 이후 소극적으로 민간 매각을 관망한 뒤 추후 매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우선 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지매각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 매각을 위한 입찰은 유찰이 거듭되어 최초 매각 예정가 70억원 보다 최대 20%가 낮아진 56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일단 매입금을 낮추는 전략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소극적 입장은 청사 인근 주민에게 구도심지역 상권피해 등의 불안요소를 야기했으며, 매입여건이 우선시 된 행정형태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 교육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한 심정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곧 있을 전라북도 교육청사 이전은 공공청사이전에 의한 대규모 지역 상권붕괴 및 인구이동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규모와 인구가 한정된 전주시에서 공공기관의 신도심 이전은 결국, 도심기능의 상실과 함께 심각한 지역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택지개발이 시행된 것도 구도심이 몰락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들고 나오며 도시재개발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 지역은 구도심이라기보다 전주시의 관문이자 북부권을 연결하는 중심부로서, 도 교육청 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신시가지로 인구가 상권을 뺏긴데 이어, 종합경기장 주변 재개발로 쏠리면서 도시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양 쪽 중간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북동 소재의 전북도교육청사는 토지 8788㎡(2658평), 건물 8714.49㎡(2636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팔달로 중심축으로 단순 활용이 아닌 전주시의 얼굴로 중심부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으로써 인근에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수영장 등이 있는 만큼 연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신속한 도 교육청사 이전 부지매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가시적

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도교육청 이전에 따른 진북동 지역 공동화와 관련 하여 이전부지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시 차원에서 종합 복지관을 표방한 복합 교육·문화·복지 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인근에 분포한 전북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 학생회, 수영장 등과 연계되어 구도심의 중심부로서 교육·문화의 거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종합 복지센터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동인구의 구도심 유입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기능 회복과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진동 종합경기장 일원을 비롯한 만성지구 복합단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우려가 많은 진북동도 교육청 부지 지역 주민들의 한 맺힌 울분을 과연 전주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왜, 간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이제 전주시는 도교육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재정확보의 어려움이나 민간부분의 창의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논리보다는,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도심 재창조 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여건을 마련, 복합 교육 문화 복지 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수록 슬럼화 되는 구도심 주민에게 활기를 복돋을 수 있는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의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한 달 후면 일년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함께해야 할 추석명절이 우리 농민들 특히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걱정으로 대신할 것 같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058가구에서 3450ha의 논에 벼를 재배하여 조곡 40kg 기준으로 58만 7천 포대를 생산하였고 공공비축미 수매, 농협수매, 농가자체 소비를 하고난 재고량이 17만 6천 포대(조곡)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생산된 쌀 재고량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20kg 기준으로 24만 6500포대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

시 작년 수준의 쌀이 생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쌀이 남아도는 현상은 부단 저 회 전주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재고 쌀 해소를 위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비롯해서 지역 쌀 선물하기, 신규거래처 확보, 시민 1인 1포대 사주기 운동, 인터넷 판매 활성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지역농협의 쌀 재고량은 정곡 2650만 포대가 있고 2008 년 같은 달 재고량보다 무려 76.6%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그냥 두면 올해 수확기에 수매가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는 등 향후 벼농사 포기 또는 농촌 이탈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세가 지속 될 경우에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8%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의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도 전국적으로 2005년 57만 6천톤에서 올해는 37만톤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욱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최근에 이러 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같이 전주 쌀 팔아주기 협약을 체결하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소비촉진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농촌과 농업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면 식량안보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 할 것이라 생각하고 농촌은 온 나라가 삭막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이 녹색갈증으로 목이 타는 현재 온 국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각국에서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이때에 농촌 자체가 거대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1인 가구 생활 및 대체식품 소비증가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밥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데서 온다고 판단되며 엷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쌀의 지속적인 증가(28만 6617톤 : 2009년)는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더욱 심 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쌀의 수급과잉문제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결론 앞에서 첫 번째, 농업인은 도시인에게 녹색유타를 제공하고 도시인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상생의 관계가 더욱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두번째,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떡케익, 쌀과자, 쌀라면, 쌀국수 등 쌀가공식품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세 번째,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네 번째, 이 시대가 농업과 농촌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의 자
 금심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대단
 위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촌도시가 아니기 때
 문에 타 지역에 비하여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
 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생산되는 쌀 뿐만
 이 아니라 밀과 보리 등 모든 농산물을 우리 전주
 시민이 외면한다면 전주시의 미 래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구매해야 한다는 운동을 시민
 모두가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
 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몫인 문화주권과 복지권
 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우리시의 민간위탁 시
 설에 대한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주시의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시설은
 국·도·시비를 지원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
 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3년여간
 을 돌이켜 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
 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란 모름지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운영진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시설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
 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민
 간위탁시설 평가 방식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입니다. 첫째,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략
 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의 평가는
 경영평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 의 개선점을 도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부재합니다. 평가위원들의 1년
 에 한 번 방문해서 서류와 브리핑만으로 깊이 있
 는 평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평
 가하고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의 미개발 부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개선방안에 대한 과제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평가는 평가지표의 마
 려와 해설,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들

의 소유지는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
 요한 시설투자와 기능보강의 문제는 시의 책임
 입니다. 이렇듯 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매년 같은 결과를 가
 질 수밖에 없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
 째, 서열화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평가 방
 식은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줄세우기입니다.
 평가위원들도 시민이고, 기관 운영자 도 시민이
 다 보니 평가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가
 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
 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하나, 전주시 민간위탁 기
 관에 대한 평가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매년 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이 현
 장으로 지혜롭게 연결되는 과정에 시의 고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 전 문기관에 의뢰하는
 평가 인증방식에 대한 도입과 평가 방식의 전문
 성과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평가는 평가주최인
 지자체와 평가대상기관 이 목적이 공유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증방
 식의 도입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체
 계적인 방안 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셋,
 상대평가에 대한 서열화는 시설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반복케 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우수사업 발굴과 지역의 연계성 사업발굴등 기
 관의 특화사업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 한 것입
 니다.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
 관, 복지관등이 지역과 전주의 색깔에 맞는 기관
 으로서의 다양성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넷,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실무적 개선과제입니
 다. 평가시기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말
 까지로 기관의 연속성이 결여 되어지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략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1년 단위의 평가는 매년 기관의 발전과정을 발
 견하고 시설운영의 부분적 과제 도출 등 긍정적
 인 성과도 있으나, 특이한 내용없이 반복되는 평
 가의 의미 자체가 고형화된 형식으로 전략할 가
 능성이 있음으로 평가시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
 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
 간위탁평가의 본질은 시민들의 문화주권 확보와
 복지권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
 가의 긍정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면서
 기관의 발전이 전주시의 발전임을 다시한번 상
 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맙습니다.

●●● 임동찬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이 우리지역에도 예외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 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폐합과 관련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서 18년간 주춤했던 우리 지역의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연일 유행가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완주군의 자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만 했지 진정성이나 그 어떤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제라도 전주시는 완주군의 자세만 원망치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통합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헌신없이, 자신의 희생없이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완주군수는 군수직을 내놓고, 전주시장은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자세와 각오가 확고하지 않은 한 전주·완주 통합은 공언할 것입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이끌어낸 지도자는 통합 이후 전주시민들의 큰 평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8대 우리 의회도 종반을 넘어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현안이 있으면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반영코자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폐업중인 전풍백화점과 전주백화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개업한 고사동의 전풍백화점과 중앙동의 전주백화점이 구도심의 활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현황을 보면, 전풍백화점이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10,247㎡(3,100평)이고 전주백화점도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9,871㎡(2,985평)로 전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과 모래내 시장의 매장면적 18,796㎡(5,686평) 보다 더 넓은 20,117㎡(6,085)의 구도심의 대표적인 대형상가 점포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를 가진 2개의 백화점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 1997년 당시 IMF의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과 함께 구도심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무책임한 대형마트 입점 및 한도 끝도 없는 자금유출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계속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두 백화점의 휴·폐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는 방치로 주변상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악영향만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개인건물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순한 묵인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적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과 전주시가 더 이상 행정의 무능성이 아니라 행정 생산성을 동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전주시장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성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아름다운 빛과 낭만이 흐르는 아트폴리스 도시로써, 그리고 경제흐름의 정맥을 담당하는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벼라! 활기찬 시정구호처럼 역동하는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정겨운 가을철을 맞이하여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는 한가위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시가 도심하천·생태하천 및 하천 수질개선에 그동안 추진하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은 그 예산 규모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확대·연장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삼천 상류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 상류 농경지 유기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질 악화에 따른 삼천 수질개선과 반딧불이, 다슬기 등 생태서식환경 개선 필요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을 들여 삼천 상류지역 좌안 둔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 같은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1억 4천만 원을 들여 삼천상류(석구보-



원당교) 2km(좌·우안)구간에 불법경작지 정비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삼천 수변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주시가 삼천 전 구간에 적용하는 전주 삼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민주당 완산을 장세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완산구 평화2동-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11km구간에 2010년에서 2013년(4개년)까지 240억원(국비 168, 시비 72)을 들여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변 생태환경 조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도심하천에 대한 수질개선과 예전 모습의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시는 2010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삼천상류 중인동 일대에서 광업권 허가를 남용하여 10년 넘게 골재반출로 인한 불법채광지구 대책이 현재 재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더구나 2008년 12월 23일, 신고 수리된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 때문에 추진 중인 삼천상류 수질 개선 사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전주시 행정 앞에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시, 완산구청은 채광계획인가 지구 불법행위처리대책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첫번째,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두번째, 불이행시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동시 시정명령을 전라북도에 요구하기로 하였고, 세번째, 피허가자 원상회복 불이행시 광업법 제35조에 의한 광업권 취소를 전라북도에 요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라북도의 채광계획인가 취소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시행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업법 사용동의를 구하고, 발과 암을 반입 선별·파쇄하여 골재는 반출하고, 잔재물 토사는 사금채취장 웅덩이 복구토로 활용한다는 모 업체의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2008년 11월 11일, 진출입로가 불법형질 변경되어 고발된 건으로 그 사유로 반려하였다가 전격적으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 2009년 12월 20일까지 1년 사업기간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인 협의허가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광업권 허가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 중이던 전주시는 광업권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형질변경을 유예하고, 추인해서 그 현장에 복구토 반입을 발미로 한 또 다른 불법을 허가한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업체가 주장하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금채취장 웅덩이는 절대 복구되지 않음을 전주시는 누구

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전라북도과 전주시는 당초 대책대로 불법채광지구의 광업권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삼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20일 종료되는 선별파쇄업은 반드시 연장신청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시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66회 임시회('09. 10. 14 ~ '09. 10. 20)

●●●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청소년 복지 및 행정은 타 부문에 비해 적은 예산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전주시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중 사자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사자들의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는 2009년 7월에서 8월에 전주시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연구 활동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낮은 강사료로 인해 수준 있는 강사들이 출장을 꺼림으로서 수준높은 프로그램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사의 경우 시간당 2만원, 최대 3만원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은 육성, 지도 및 선도, 보호 및 관찰이라는 3단계를 거칩니다. 위 표 1의 전주시 청소년

시설은 육성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양성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이후의 시설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찰하여 시설간 긴밀한 협조는 물론 단계별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장 청소년 시설 운영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육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설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공유, 청소년 시설 종사자 연구 과제 발표회, 청소년 시설 종사자 세미나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정은 100년 대계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 자리에 서서 전주시 행정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래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올바른 인재와 동량을 육성하는 실천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2009년 올해는 전주시정 60주년이 되고 또한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묻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은 경기전 600주년이 되는 해로,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전주를 다시 생각하게도 합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전라감영 복원 및 전주사대문 복원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었고 10월 9일에는 동서학동 충경사에서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추모하기 위한 추향제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주학과 전주정신을 위한 대토론회도 역사 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전주는 자고로 조선시대 3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조선 관련 유적과 인물이 많은 고장입니다.

특히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인 절의 사상과 의병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로 많은 조선의 인물과 정책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고 전주는 오직 조선시대 문화와 인물이 가장 많은 전국에 제일 으뜸되는 도시입니다.

호성동 호성로, 호성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전주시는 새주소 시범사업 도시로서 일제 강점기의 도로명과 지명을 정비했습니다.

시민설문과 지명 전문가들의 심의 토론을 거쳐 9월 10일 도로명 변경을 하였으나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공식명칭은 호성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명부여사업으로 호성로는 동부대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에는 4개의 큰 광로 50미터급 광로가 세 곳이 있습니다. 백제대로, 기린대로, 동부우회도로로 로급으로는 충경로, 태조로, 권삼득로, 견훤로, 팔과정로 등 역사적 인물과 지명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호성로가 변경되기까지는 진통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동부대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외곽도로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부우회나 호성로는 더이상 외곽도로가 아닙니다. 북부권 서부권 대체우회도로가 최근 만들어지면서 서부 개통되었고 지명의 부여도 못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역사적 정신도 살리지 못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호성동과 호성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호성동은 호성군 이주 의병장을 기리는 인물의 지명입니다. 호성군 이주는 전주이씨 덕원군파로 호성동 한사월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때는 왜적을 물리친 전과가 혁혁하여 선조임금께서 내려준 작호가 ‘호성군’입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다보니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제대로 안된 의병장입니다. 조선의 3대 기록에 의하면 선조실록, 호남절의록, 선무원종공신록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공신록을 1605년에 정리하였는데 선무원종공신으로 철권과 녹권을 하사했으며, 선조 임금은 전공을 크게 칭찬하여 호성군을 봉하여 초포면 일대의 땅을 하사하고 봉도했습니다. 현재 호성동 한사월은 사패지가 있습니다. 호남절의록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의병장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임진왜란때 평양성을 탈환한 선봉장으로 1등 공신 호성군이 있었는데 전주와 지역에서는 잊혀지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기리는 호남의 정신이 의병정신이고 약무호남시무국가입니다.

지명뿐만 아니라 도로명으로서 후손대대로 전주의 정신과 인물로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3년후에 있을 도로명부여사업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칭 변경때는 제대로 올바르게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
다. 요즘 전주정신살리기 운동이 학계나 문학계
에서 서서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재건 전
주정신 살리기 운동 일곱번째 발언으로 천년전
주 전통문화도시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의 문화
를 문화해설사가 설명하는 단편적 스토리텔링으
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전주정신을 살리는데 또 다른 생명력을 제안하
고자 합니다.

전주는 왕도와 선비정신, 그리고 정여립 장군과
녹두 전봉준 장군이 근간을 삼았던 공화주의 정
신을 밑거름에 두고 이제라도 재건 전주정신의
자존심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의 기운들을 감동으
로 소개할 수 있는 곳을 작품화해서 다양한 전주,
판타지아 전주로 재 탄생시켜보자는 것입니다.
롤프엔센은 드림 소사이터에서 미래사회는 상
품의 정보나 품질이 아니라, 꿈과 감성을 파는 시
대가 된다 라고 말했으며 꿈과 감성이란 곧 상품
에 담겨져 있는 감동적 이야기다 라고 표현했습
니다. 또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중에서 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은 전달된 그 순간부터 내용
의 유용성과 생명력이 쇠퇴하지만 이야기의 전
달은 오랜 시간, 전달 내용의 유용성과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
컨텐츠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화 작업들
은 전주정신을 살리고 더불어 전주 지역을 효과
적으로 홍보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
는 것입니다.

지구촌은 21세기에 들어 문화컨텐츠를 스토리텔
링해서 문화 홍보에 질주하고 있는데 성공사례
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는 해리포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가 된 해리포터는 영
국을 무대로한 줄거리로 소설에 등장하는 영국
의 모든 문화는 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
으며, 그것을 원작한 영화의 시리즈는 또한 큰 성
공을 거둬들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한국음식문화를 소재한 만화 식객의 경우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음식문화 컨텐츠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성공시킨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안동시의 경우도 여섯 명의
소설가를 과감히 기용해서 안동의 전통문화를
소설로 담아낸 동녘, 사랑이 머무는 곳'을 출간
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문화 컨텐츠를 영상물 제
작자들에게까지 영감을 제공해서 현재 영화화가
결정되었고 투자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 컨텐츠로 발현되기
위한 과정으로 원작 컨텐츠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부각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와 또한 전주
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 전주 문화관광자원 6
개 정도의 소재를 택해 문학작품으로 만들어 올
곧은 전주정신을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설집으로 펼쳐낸 '판타지아 전주'를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전주를 적절하게 홍보
하는데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
연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제대로
알리고, 그로인해 전주정신을 부활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소재들을 문학작품화해서 그 소설 무대
를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판타지아 전주'로 재
탄생시키자는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재건 전주
정신 살리기 부활운동을 특별히 염두해 두고 전
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는데, 또한 관광도시
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를 찾는데 적극 노력을 주
문하고자 합니다. 재건 전주정신 부활운동은 전
주를 살려내는데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는 관
념이 아닌 실제 전주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동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로드맵을 짜
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김종철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1동, 3동, 우아
2동 출신에 김종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가로수 녹화사업에 따
른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잘못된 수종 선택의 문
제점과 가로수 하자보수 관리의 안일함과 더불
어 과도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의 시정을 촉구하
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앙분리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수종 선택은 나무
의 특성과 토양, 기온 등 자연생태학적인 사항만
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저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시설물로서의 중
앙분리대의 고유 기능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
함과 동시에, 식재 후 관리하기 쉽고 관리비 비
용을 적게 투입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 후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사업에 총사업비 43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72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중 느티나무는 459본, 이팝나무는 118본, 조형소나무는 112본, 곰솔나무는 33본 순으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사업의 주 식재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주 수종으로 느티나무를 선정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티나무는 배기가스 등의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성장이 빠르고 가지가 넓게 뻗는 특성을 지녀, 3년만 지나면 가지치기가 늘어나서, 대형차량이 도로 1차선을 주행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할 것이며, 가을에는 많은 낙엽이 떨어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우천시 낙엽은 도로위의 차량 제동력을 낮춰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은 배기가스와 건조한 기후에 견딜 수 있고, 지나가 잎이 빈틈없이 자라며 다듬기 작업이 적합한 상록수가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수종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 수종 변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의 가로수 하자보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우리 전주시의 가로수 사업은 3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교목 1,546본과 관목 128,960목이 식재되었지만 하자보수 요구는 교목 123개에 불과하며 관목 128,960개에서 224 약 프로테이지에 따르 면 0.1%에 불과함에 따라 방치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준으로, 준비된 사진자료처럼 하자보수가 절실하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행 태로 인해 하자 점검 및 보수 보식 요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건설 분야에 있어 하자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조경사업입니다. 참고로 통계학적으로 약 식재 후 2년 이내에 20%이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조경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가로수 하자보수 요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임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진 자료에서처럼 우리 의원님 여러분, 한 그루당 저 느티나무가 약 80만원이라는 것이 해가 가십니까? 저 한 그루당 80만원입니다. 80만원 느티나무로 식재된 건천로, 호남제일문, 장동로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다수의 고사목 뿐만 아니라 균일한 수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형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수형이 존재하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전주시는 가로수 사후관리의 의지가 있는지 왜 하자보수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강

력히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가로수 식재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여건에 따른 하자 점검 및 보수 보식 요구와 함께 신속한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대한 전주시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가로수의 고유 수형 유도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78본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의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명목으로 전주시의 성과주의에 입각한 무리한 계획으로, 고목처럼 싹둑 잘려나간 우아동의 버즘나무, 의미없이 과도하게 잘린 백제로의 은행나무, 천변의 운치를 더했던 개잎갈 나무의 과도한 가지치기는 앞으로 늦봄까지 가로수라 하기 보다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보기 흉한 조형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무리한 가지치기 보다는 가로수의 고유 수형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지속적이며 시기적절한 가지치기를 실시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주시의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로수는 인간적인 배려의 하나로서 인식 되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있는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신중히 선정하여 균형 잡힌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 경관에 대한 적기의 하자관리 보수 및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수목관리에 관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토피리스 전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온통 푸른 산과 들이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더니,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농촌 들녘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농부의 땀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풍요로움으로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앞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판매가는 농민의 가슴에 공허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농산물 유통 정책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출범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변방동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촌동 발전을 위해 그간 추진된 사업은 농로 확포장 100% 사업,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수도 100% 공급 사업,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은 농촌의 발전을 한 단계 향상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업적에 대하여 농촌동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농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전주시 15개 지역 990세대 주민 3,000여명은 TV 미시청 및 케이블 방송 미시청 지역으로서 문화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으로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민이면서도 외곽지역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삶의 질 문제는 시내권의 도시민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낙후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시민들에 비해 관심에서 제외된 행정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극도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동부권에 위치한 무주군의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서 케이블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절반의 예산을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미시청을 모두 해소하여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결과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주민들의 삶의 의욕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미방송지역에 대한 현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산구 평화동, 삼천동 등 6개 지역, 덕진구 원동, 호성동, 우아동 등 9개 지역으로 도합 15개 지역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장께서는 흑역 가입자 수가 적고, 예산과다 및 운영비 부담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주군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엇보다 문화적 혜택이 절실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우기 완주군과의 통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무시되고서는 올바른 통합은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말고 온 시민이 형평성 있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케이블TV시청 혜택을 주는 보살핌의 행정을 펼친다면 이곳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삶

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외로움과 절실함을 부디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북도청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전주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강국이라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엔 1640만명의 인구보다도 많은 1,800만대의 자전거가 있으며, 매일 300 만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자동차가 도심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3%가 벨리브라고 하는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파리를 관광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파리 시내 자전거 이용률은 45%가 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400톤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요 도시의 열차역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32억4천2백만을 투자해서 291.3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지만 현재 전주시에 몇 대의 자전거가 있고, 일일 자전거 이용자는 몇 명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 이용 장려에 대한 홍보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부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 출퇴근 및 출장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것입니다.

개개인별 탄소포인트를 관리해주고 탄소포인트를 기준이상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희망근무지 우선권을 주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둘째,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더욱 확보하고 일반 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2~3인용 자전거를 임대하도록 하여서 차없는 한옥마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걷고, 보고, 즐기며 머물러야 할 한옥마을에 대형버스 뿐만이 아니라 중, 소형 차량들이 쾅음을 울리면서 여러 관광객들의 눈살



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송전동, 호성동과 봉동에 소재한 공단을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합니다. 3공단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 통의 혼잡과 정체를 감안하면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주시 지형에 맞는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주시의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길에 마주하게 되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좀더 저렴한 전기 자전거 등이 보급되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섯째, 4차선 이상 도로의 마지막 차선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전주시 도로 여건상 차도도 확장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도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좁은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도로 가장 끝차선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가 없을 시 차로로 병행 운영된다면 예산절감 및 자전거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바짝 긴장하며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전거 이용 대책이 아니고 더군다나 홍보용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적으로 자전거가 붐비는 깨끗한 전주 도시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주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 살리기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집중 투자되고 있는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이 있는 반면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이 있어 또 다른 무관심속에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투자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의 엄청난 액수가 일부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에만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자본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6%의 반 도 안 되는 23.6%인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전주 남부시장에는 무려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중앙시장에는 76억, 모래내시장에는 72억, 동부시장에는 1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이 구도심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시 상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견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웨딩거리, 궁구거리, 차이나거리 등의 특화거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전주 여러 곳의 소규모 동네 장터가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장터 주변의 상가 들은 연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도심동을 제외한 금암동, 팔복동, 우아동, 삼천동, 평화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경기가 전주시 상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의 편중 투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골고루가 잘 살아야 합니다. 금암동에 있는 북부시장에도 상가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팔복동에 있는 공단을 위한 상가, 우아동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가, 삼천동, 평화동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재래시장 살리기란 본분을 잊고 구도심이라는 단어에만 치우쳐 그러한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 정책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기사화됐듯이 현대화 시설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직접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중고를 끼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의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매장 임대료 상승률이 훨씬 높고 위기사처럼 현대화 시설에 따른 매장 임대료는 최고 180% 이상 상승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고통을 당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까지 영세상인들은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도내 재래시장 중 아케이드 설치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 30여개의 매출은 23%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장 내 매장 임대료는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현대화가 실시되지 않은 재래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커다란 목표에는 몇 군데 주목받는 시장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투자를 원한다면 전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권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는 슬로건 아래 전통문화와 첨단 탄소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 산동,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의원 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생에게도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에 재정현황을 보면 2008년도 전주시 인재육성관련 예산액 총 99억 4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78억 5336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초·중·등 교육지원사업에 2008년도 53억 6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44억 8336만원이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2008년도 45억 80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23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에 관련하여 도내 학생에게 지원한 내력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14억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외국어 영어캠프운영에 1억 2000만원, 꿈나무 한자캠프에 2000만원,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에 6500만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 결식 학생 중식지원에 1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에서는 인재육성으로 초·중·고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전주 시민의 경제를 보면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멈출수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경제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현황을 보면 취약한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북지역의 경우 2008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664만원 정도이며 국립대학은 등록금 371만원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200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478억 9000만원으로 도 대학생수 10만 4227명 중 학자금 대출자는 1만 4177명으로 이자 부담학생은 9758명으로 학자금 대출이율은 2008학년도 1학기 기준 이자이율 7.65%를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전라북도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때문에 현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 7월 30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전격 도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학자금 대출현황을 도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억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이자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송하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정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도 학자금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도 인재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전주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구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픈 고통을 감수하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근심을 던져주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의회의 좀더 적극적인 자기혁신의 대안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평가단은 전주시의회 산하 민간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 시민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평가단은 사전 약속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서열매기기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정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전주시의회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만 되고 나면 4년 동안 평가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의회를 향하여 직접 돈 보기를 직접 들이대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일정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결정권을 가진 의회권력의 투명성과 청렴성, 책임성은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요 전주시의 주인은 우리 63만 시민이듯이 모든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조명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속에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의 기본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발전적 평가를 나누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원칙이 지나쳐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며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충북 제천에 제천시의회 평가단 운영 조례를 통한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사랑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고 9대 의회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가단이 당장에 조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것이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나 억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에서 조례를 만들고 9대에 선물로 남겨서 9대때부터 평가단이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를 밝히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과란 가을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노을 속으로 빠져들어난 덕진연못을 보니 한 폭의 동양화가 멋들어지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노을진 덕진연못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는듯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연못이 조성된 것은 동지여지승람에 의하면 후삼 국시대의 견훤에 의해서 이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북쪽이 너무 허하여 지기(地氣)가 얇다는 이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진연못은 그동안 평면적 공원에서 입체적 공원으로 휴식공간과 즐기는 공간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탈바꿈 해왔습니다.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분수쇼도 하고 벽진폭포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모습도 갖추었고 제방에 산책로를 만들어 걷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덕진연못을 둘 것인가. 물론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덕진연못의 역사성으로 보아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진연못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의 문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문제입니다. 덕진연못의 물결은 깊지도 않고 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맑은 호수의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탁한 방죽의 물일 뿐입니다. 보다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수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일이 시급하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확정된 전주시 물 관리 종합 대책에 덕진연못의 물 순환 방식으로 전주천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수된 환경사업소 물을 대량으로 쏟아 붓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에 들어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쨌든 현재와 같이 전주시에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전주 덕진공원에 쏟아 부을 적에 바로 그 밑으로 흐르는 연화천이 작고 길지도 짧지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연화천에 맑은 물이 흘러 또 다른 경치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쪽에 비어 있는 약 4500제곱미터 공지의 활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곳에 5천원의 입장료를 내는 나비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원계획위원회에서 다행히 유보되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덕진공원은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에는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공원계획을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



상회 의원하고 저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덕진공원에 나비골 프장을 만들 자고 있는데 반대하느냐, 나비공원을 덕진공원에 만들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입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덕진공원에는 전주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덕진공원은 우리 시대에 공원이지만 또 다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존 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지방재정의 악재 속에서도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운 찬 총리 청문회 시기부터 세종시 문제가 쟁점화 되어 민주당과 선진당은 당 운명을 걸고 세종시 살리기를 위한 거둬진 논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지역의 핵심 현안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관련 토공 주공 통합본사 유치에는 전북의 지도층,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유리한 진주시는 토·주공 본사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통합본사유치에 미온적일뿐 아니라 토공주공 본사유치 단 한 장의 현수막도 게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토공 주공 본사 유치를 위한 민주당과 정치권, 전주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시 여성공무원 상위직 승진대책은 없는가, 라는 대안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 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월등한 능력으로 각 분야를 주도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행정관리 직 등의 분야에도 여성진출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총 여성취업자 중 19.8%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6.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치 않게 어느 여성 퇴직자가 시에서 평생 죽도록 노력해도 4급 여성국장 승진 한번 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좌괴감에 빠진 하소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일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주시 여성공무원의 승

진 문제에 따른 상위직 진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양성(兩性)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5급 이상고 위공직자에 여성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1812명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도 기준 623명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선4기 이후 5급 이상 공무원 배출은 총 11명에 불과 하여 아직도 4급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보전 소장직이었고 5급 또한 계약직 보전 의사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14년 전 민선 1기 당시 5개월짜리 여성 정규직 4급 승진 말고는 민선 1기에서 4기 현재까지 국장급인 여성 정규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승진되지 못한 고착화된 전주시 여성의 상위직 진출 배제는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도 전주시는 5급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5명뿐이며, 우리시에 비해 시세 규모가 작은 익산시 5급 공무원 3명, 군산시 5급 공무원이 5명을 이루고 있어, 전주시 5급 정규직 여성 공무원 분포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승진기회가 얼마나 차단되어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 조직이나 경찰조직에서도 여성의 장군 승진이나 여성 총경이 다수 진출하여 여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전주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징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267회 정례회('09. 11. 23 ~ '09. 12. 21)

●●● 김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김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여덟 번째 발언으로 전주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즉, 영웅을 만들어서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곳에서 전주의 비범함처럼 골고루 비벼 그 시너지 효과를 전주정신 살리는데 바탕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전주의 미래를 설정하고 다함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근원적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창간 21주년을 맞은 도민일보 21면 ‘그대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에서 ‘사람을 키우자, ‘서로 감싸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도로와 시설 등은 사회간접 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인제는 직접 자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한사람의 스타(인물,영웅)가 적게는 몇 백명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일터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인백년, 수목오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나무는 오십년을 내다보고 심지만 사람은 백년을 바라보며 키운다 라는 것입니다. 전주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재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 지역 왕도, 선비정신과 자존심, 그리고 넉넉한 포용력을 살리고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배척하는 사회에서는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고 사람은 지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먹고 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예비 영웅들과 전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주기 위한 교육장의 하나로 전주천과 삼천 둔치, 각 동의 썬지공원에 인물광장 코너를 만들어 저항정신의 인물과 절의 선비, 효의 인물, 종교적 인물, 예술과 문화의 인물 광장 즉, 요즘 말로 스타광장을 만들어 산교육 현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발언은 서서히 곳곳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나 지난 9월18, 19일 한국소설가 100명을 최명희문학관으로 초청해서 ‘전주정신 소설문학 의 바탕’ 세미나를 열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지역 언론과 시민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 학계에서도 지난 10월 14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주정신 대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을 지속화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전주정신 대토론회’의 본질은 ‘전북정신정립-전주정신정립’이 바로 ‘지역발전 전략에 직결 된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에 불씨가 되도록 의회외에서도 끊임없이 발언과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정신의 바탕인 선비의 울골은 기질과 의로운 상생, 그로인해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운동을 64만 전주시민과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주정신 살리기운동을 강 건너 불구경 관념에서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벗어나서 적극적인 사업을 제시해서 64만 전주시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실천이 가능한지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사는 미래, 올 끈고 힘 있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재건 전주정신을 바탕에 두고 출발해야 만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정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관우 의원

전주시, 방치된 공·폐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화합과 상생의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밝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에 들어 종전의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중심의 밝고 아름다운 명품아트폴리스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도심지내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많은 공·폐가를 지켜볼 때면, 전주가 주력해 온 ‘명품 아트폴리스 도시’가 과연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속 오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648동이 도심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다수의 공·폐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한 주거환경과 함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치된 공·폐가 대부분은 점점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가구 등이 버려져 주변에 악취를 풍기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변이 될 우려가 크며, 슬병과 담배꽁초가 널려있거나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어 겨울철 화재위험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현상이 되거나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철거 등 정비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유주가 자진철거를 하거나 철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으며, 특히 소유주가 추후 개발이익을 노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막대한 보상비를 물



어야 하고 때로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소극적 이고 무능한 방치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공·폐가 철거 희망이 있을시에만 지원하는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통해 공·폐가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진 철거토록, 지속적인 행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이 필요 없이 정비가 가능한 공·폐가는 소유주와 협조하여 철거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쌈지공원, 주차장, 텃밭조성, 간이쉼터, 가림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권에 설정·압류가 되어 있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흙물스러운 빈집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적 관리하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를 제외한 빈집 등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봄직 합니다. 즉 현실적인 철거비 지원, 자진 철거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우선지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일괄 시행등 공·폐가 정비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제도적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폐가 철거 대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폐가 철거 대책을 명확히하여 정비계획을 확고히 수립하여,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하루 빨리 우범 가능 지역을 없애고, 도시환경과 미관을 보다 쾌적하게 변모시킴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아토폴리스 명품 도시 전주 건설의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주만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최주만 의원입니다. IMF 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경기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어 서민들에게 올 해 겨울은 어느해 보다 더 혹독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만 3천3백여 가구에 2만 6천여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무상봉투지원 실적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3억여원을 들여 1인당 월 20리터 기준으로 3장씩 연간 무려 92만여장에 가까운 무상봉투를 통장을 통해 개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사용하는 실질적인 쓰임새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에 이르고 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1인당 3장씩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당 평균 월 20리터 봉투 12장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급된 12장의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면 20리터 봉투 기준 월 평균 세대별 5장이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봉투 지급량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 여분의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수급권자들의 경우 남은 쓰레기 봉투를 헐 값에 판매, 현금화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현물과 교환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음은 물론, 배출시 봉투에 담지도 않고 아파트 단지내나 주택가에 무단투기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 훼손은 물론 일반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물론 일반주택의 경우는 청소원들의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황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이상,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정량의 세대당 지급과 관리사무소에 공동 처리분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봉투를 지급하되, 수량을 대폭 줄이고 줄어든 수량만큼 현금으로 계산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예산낭비도 막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원되는 전주시의 무상지원이 오히려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지 의원

갑자기 인사말이 추가되어서 본 발언이 시간에 쫓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승마협회 회원님들과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새로운 의욕과 기대속에 맞이했던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해오름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연시는 그 어느때 보다 썰렁하게 지내게 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며 따뜻한 손길로 훈훈하고 차분한 송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나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 기준에는 정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며, 친서민 정책사업 중심으로 민선 4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하는데 각종 계속사업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채 표류하는 전주시 예산 편성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준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반영으로 인하여 행정담당자의 소극적 자세가 시간만 끄는 행태가 되면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상호 보완하여 전주발전을 이끌자고 다짐하며 의회가 시작된 것으로 하는데 요즘 행해지고 있는 각종 계속사업의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 문제로 집행부를 믿고 지역 주민들에게 굳게 약속을 한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상호 보완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행정의 연속성 부재를 단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심적인 축을 담당하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기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실무국장이 재임기간 1년이 채 안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그와 함께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바뀐 부서의 담당자들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예로 다수의 시민들이 수십년간 진정해온 잘못된 도로 선형을 계획선에 맞춰 달라는 호소에 시장님의 적극적 대처와

예산반영 약속에 힘입어 현장에 나온 담당부서의 장이 시장님의 약속대로 2년 늦어도 3년 안에 완결 짓겠다는 확언을 하고 돌아갔는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이 시점까지 약속된 예산의 30%도 반영되지 못한채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마저도 어려운 재정 형편상 특별히 세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약속할 때 있었던 담당자들은 다 바뀌고 새로 오신 담당자께서 부단히 노력하시어 확보했다는 예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예산이 본의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시장실에 찾아 온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의 예산편성에 기대를 했던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내년도 전주시 살림살이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받아본 2010년 도 예산서를 보니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과 불편을 느끼는 중장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행사지원비 내지는 각종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 지원금 삭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내년도 예산 계획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망 확충 사업 등 주민들을 분노케하는 예산편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송천동 천변로에 개방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불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여 행정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전주천변 주변을 잘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둔치에 조성된 산책로와 체육시설에서 간단한 몸 풀기 체조를 하거나 또는 걷기, 달리기 등으로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가족간 화합 도모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천변은 이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와 동



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전주의 자랑입니다. 한 벽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7.2km 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시민 휴식 공간 마련 등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은 1급수에만 사는 쉬리와 모래무지, 다슬기 등을 볼 수 있고 돌 징검다리를 건너며 물장구 치고 먹을 감을 수 있도록 모습이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우리나라 자연형 하천 조성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전주천 견학을 다녀갔고 하천 복원의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전주천은 지난 2002년 일본 환경단체와 전국 수환경교류회가 주최한 제5회 일본 강·하천 대회에서 전 세계 79개 팀 가운데 대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주천에서 용산다리를 지나 송천동 천변인 센트럴파크, 서호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변 송천 천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관공서, 주유소, 시장, 교회, 마트, 음식점 등에 지정되어 전주천변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전 주시에서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은 전주천에 1개소, 삼천동에 5개, 총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개방화장실 주인에게 지원하는 분 기별로 10만원 상당의 화장지 등 편의용품이 전부입니다. 너무 미약한 지원과 특히 전주천변에 팔복동 용산다리를 지나 송천천변인 센트럴파크, 서호아파트, 한양아파트, 금성 장례식장, 전미동의 천변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개방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 장소의 민간화장실이므로 우리 전주시도 개방화장실 확대에 아울러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개방화장실을 언론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개방화장실을 제공해주는 건물주나 사업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올 한 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산동, 중화산 1동, 중화산 2동 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2009년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낙후되어가는 동물원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원은 1978년 6월에 개장해서 현재 거의 30년에 가까운 동물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 동물원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사자 모든 동물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얼룩말, 재규어 등 총 106종에 달하는 71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랜드의 놀이공원, 주위 경치 좋은 자연,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 공원 등이 어우러져 시민의 휴식처, 문화공간,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어느 타 도시의 여건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3년간의 재정을 보면 표와 같이 2007년도 세입이 8억 8백23만 5천원, 세출은 22억 9천3백7만원, 2008년도에는 세입이 9억 2천 788만 5천원, 세출은 29억 8,815만 9천원, 2009년도 세입은 8억 8,737만 6천원, 세출은 35억 598만 8천원이며, 입장객수는 2007년도에는 760,988명이 입장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829,960 명, 2009년도 11월 현재는 789,222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와 같이 매년 연간 20억원정도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으로 우리 전주시의 재정은 물론 시민의 부담을 한없이 안고 갈 수 없는 처 지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타 도시의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전주만의 독자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식물원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과 어울려 동, 식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이벤트 행사로 국화 축제나 난 및 분재 전시회 등 야생화 단지등을 조성하여 동물원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우리 전주시민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한옥 마을을 찾아오는 매년 300만명의 방문객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동물원도 적자에서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화 축제나 난 및 분재 전시등은 농업 기술센터, 생명과학고등 동호인 단체의 협력을



받으면 수준 높은 축제를 동물원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가서 보면 전국 시도 어디나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나 함평 국화축제나 이러한 축제들은 거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접목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훌륭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벤트성 축제를 같이 한다면 적자폭에서 흑자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동물원이 되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주시의 명품산업으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 - 완주 통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간이나 추진되어왔던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 11월 9일 무산되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광역도시 건설을 통한 낙후된 전북의 성장동력을 세워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는 취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진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의 절실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통합 실패의 원인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 완주군민의 전주시에 대한 불신, 농촌예산 소외 우려, 해묵은 갈등사업의 미해결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통합을 한다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들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전 달하지 못하여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비전 제시 보다는 당위성에 우선했으며, 논리적 설득보다는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불신감만 더욱 초래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에 따른 선거구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반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합이 무산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첫째, 통합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통합 로드맵이 작성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전주시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지금부터 내용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 버스 요금단일화, 체육시설과 화장장 이용료 인하 등의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법률제정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통합 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구체화된 비전들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통합의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완주군민에게 진정성과 정성을 다하지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이 전주시에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묵은 갈등사업에서의 불신은 전주시에서 발표한 상생발전 사업 계획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어떠한 좋은 내용들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만이 그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게 하고 주민들간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하자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일부 정치인과 기득권의 반발을 물리치고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 대한 예산의 소외일 것입니다. 완주군은 농업정책에 총예산의 10%인 5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할 정도로 농업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농촌예산이 2%로 2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주시와 통합되면 농촌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통합 후의 농촌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특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통합을(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정책을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유사 이래 최대 건축 예산편성을 단행하여 내년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때, 지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완구 충남 지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 또한 철저한 자기 회생을 통해서라도 새만금, 혁신도시, 지역 현안에 대해 몸으로 부딪치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해보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전주시 슬레이트 건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철저한 석면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화하여, 농촌 환경개선을 통해 근대화에 일조해왔으며, 이후에도 슬레이트와 석면 건축자재는 학교, 공공건물, 주택 등에 다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부는 뒤늦게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늦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지한 단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시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정도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1,350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이용한 건축물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면의 섬유는 매우 가늘고 불에 타지도 않지만 백석면은 약 0.02~0.06 μ m(마이크로미터)로 매우 미세하여 눈으로 식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극미량이 폐속에 들어가도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인데도, 현재 전주시의 많은 슬레이트 석면 건축물들은 방치되어 왔으며,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대다수 시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석면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써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전주시의 석면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몇 가

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및 석면 자재 건축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석면농도에 따른 적절 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 구도심, 승암마을, 서서학동, 완산동, 평화동 중심으로 석면 농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특히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 중 석면오염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전주시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석면의 농도와 유해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슬레이트의 지붕 철거관리 및 개량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시말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데, 호당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소외계층 서민들이며, 그들은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을 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소외계층 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석면관련 조례 제정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와 보령시는 석면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정부에서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 13개 법안과 관련된 석면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전주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석면대책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4만 전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주민 여러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 오는 경인년 새해 일취월장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제268회 임시회(2010. 1. 21 ~ 2010. 1. 27)

●●● 국주영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로 기원드립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옥마을을 활성화 방안에서 그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도를 모색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노력으로 한옥마을이 인지도가 나날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은 다양한 관광패키지 개발과 국내는 물론 해외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2008년 130만명이던 관광객이 2009년도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한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자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약 700여개의 한옥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한옥마을입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한옥마을 조성으로 인해 우리시 한옥마을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제외한 10곳의 자치단체가 한옥마을을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9년만 해도 800동이 넘는 한옥을 건축하면서, 규모면에서 우리시를 압도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으로 구례와 고흥, 해남 등 20여시·군에 대규모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행복마을 한옥민박이란 프로젝트로 대규모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정주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마을 사업을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시켜 대규모로 추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옥과 관련한 목재분야 18개 업체, 황토 벽돌분야 11개 업체, 한식기와 3개업체 등 35개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한옥단지를 한옥전통문화 체험단지로 활용하고, 안동시는 장독대프로젝트로 연결하여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우리시 한옥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째, 타 자치단체의 한옥마을과의 차별화 전략과 우리시만이 갖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특징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대항해서 형성되었다는 역사성이 있다는 점과,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정주형 한옥이라는 점, 전통문화 체험형 한옥마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내어 한옥마을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다른 관광요소와 연계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

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한지, 비빔밥, 전통문화 및 특산물과 연계시키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관광중심으로 조성하다보면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관광상품성은 동전의 양면이고 상호 보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상품성을 조화시켜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제2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의 단순한 외연확대가 아닌 예술성을 부여한 내실 있는 프로젝트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나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틀에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쟁력도 더불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송하진 시장님! 오늘도 천년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친 환경적 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9번째 발언으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혈맥 잇기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소회(素懷)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옛부터 전주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타 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 도시로 생성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지형은 남측에서 동·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들로 백두대간에서 뻗어와 도읍풍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대시대 이후 문명의 발달로 철도, 도로 등의 개설 및 확충으로 지역중심도시로 기능하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지형의 단절과 풍수적 공간 단절, 자연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 혈맥 잇기 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주 혈맥 잇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설문조사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비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74%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64만 전주 시민들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안에서 삶을 영유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우선적 목표 설정은 한옥마을 및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환경 정비(26.0%), 공원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및 활력증진 기여(28.4%),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적인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22.4%), 일제 강점기때 훼손된 자연경관 및 생태계 회복(16.8%)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정비시 우선순위로 도시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과 조화도모(43.6%), 도로개설 사업 등으로 혈맥이 단절된 곳의 연계(23.6%)였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야 할 거점지는 오목대와 이목대(40.8%), 용머리 고개(36.4%), 선너머 길(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과 연계해서 동학을 상징하는 역사공원 확보와 초록바위위(시립도서관 흡월대(吸月臺))의 경우는 달맞이 공원 등을 조성하는 구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체 행정을 보면서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은 행정의 모순을 스스로 자인한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은 혈맥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개통했던 전주의 관문으로 지목할 수 있는 한방병원 옆 가련산 자락은 도로공사의 편리성을 내세워 혈맥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전주시의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64만 전주 시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의 의미는 제목에서 내포하고 있지만 전주 시민에게, 그리고 1800여명의 공무원 스스로에게 자연의 경외성을 제공하는 첫 단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도 대 자연환경 앞에 무늬와 형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단시안적 행정이 아닌 거시안적으로 출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잊그제 우리 전주시를 비롯하여 폭설이 내렸을때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출근길을 위하여 철야 밤샘근무는 물론 이튿날 7시까지 이면도로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높게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랑

하는 64만 전주 시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화물차량이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 부과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부과한 것은 법 규정에 의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인데도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액이 전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보다 5,000원이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구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서러운데 과태료 부과까지 높게 차등 부과 한다니 시민의 입장으로는 법 집행 형평성을 잃은 행정 관청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델명까지 같은 차량에 대하여 어느 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고 다른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는 행정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시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 중 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중 주정차 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에게 법 집행 형평성 차원에서 과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용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경기는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찬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온 국민들이 실망과 참담함에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20여회에 걸쳐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안에도 이미 정부부처에 산업·교육·문화 복합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건설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계를 갖다 붙여도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 전주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 침체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9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단을 꾸려 예산을 전반기까지 집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 이 분석하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길 예산은 2009년 6월에 이미 50%가 조기집행 되었습니다만 2010년 1월 현재도 착공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도 결코 이익이 안되고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조기집행 예산을 분석해보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월가능성이 높은 작년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 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조기집행이 이월사업과 불용예산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경험삼아서 예산조기집행은 예산을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정부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 건전 예산집행이 정착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여러분! 앞으로 발언의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배려와 이해속에 협조하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청해 주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희망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뜻하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북부권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용자수는 2007년 55만명에서 2009년 7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2009년에 서신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자수가 하루 평균 2,3천명으로, 이것은 지리적 접근성과 시설현대화 및 관리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입니다. 즉 도서관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주시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렴하고 조정하고자 도서관법 제13조에 의거 2006년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도서관발 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 도서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서비스 환경 개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를 과제로 하고, 인구 5만명당 1개 도서관 확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의 도서관은 절대 부족합니다. 인구 비례 도서관이 13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시는 6개에 머물고 있어 정부 권유안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밀집 지역인 평화·아중·효자동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인 북부권이 계획에 우선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북부권의 문화시설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 곳은 공업과 농업이 혼재되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문화소외지역입니다. 도서관 계획시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비례를 적용하기 이전에 지역안배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조촌·동산동의 인구가 4만 5천여명으로 주변의 흡인력까지 감안한다면 5만 명이 넘어 건립을 위한 인구비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7개교, 중·고등학교 4개교가 있어 충분히 설립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곳에 반드시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곳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가까운 송천도서관보다는 완주에 있는 삼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완주군까지 가야만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주시에서 계획 중인 위 3곳의 건립계획에 팔복·조촌·동산동을 아우르는 북부도서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은 문화적 소외에 대한 상실감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남동·중앙동·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전라북도 제1의 향토 금융사인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산규모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전일은, 한 때 전북은행을 위협할 정도의 수신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회사였습니다.

현재 예금자만 6만 8천명이 넘습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지급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천만원의 가지급금 이외에는 인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보호대상자인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3550명으로 이중 1억 이상 예치고객의 수가 200명에 달해 약 60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수납 등 일부 업무는 진행되지만, 전액 만기연장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일의 대출금액은 1조 천억원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던 지역 영세기업과 가게는 상환 압박에 시달려 부도위기가 지도 물리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부도덕하고 방만한 부실경영과 감독기능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퇴출 명령까지 받았었고, 2007년에는 시정조치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대출을 받고 예금을 증자하는 식의 경영관리를 해 왔고, 무려 5년동안 509억원의 불법 특정대출이 이뤄짐으로서 대형금융사고이며, 인재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부실의 징후에 따른 조기대처가 미흡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의 증자지시에 따라 9개월간 18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으며, 기존 부실화 과정에서 들어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독의 난맥상을 또 다시 보여줌으로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이 큰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자산 실사 결과에 따라 6만 8천여명 서민들의 미래는 좌우될 우려가 큼니다.

또 만약 전일의 자체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매각절차를 밟게 되며, 만약 외지 자본으로 흡수된다면 경제적·정서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11월 파산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 청원, 관계부처와의 면담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여, 지난 12월 24일 정 총리에게서 정부차원의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일 사태도 이러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적극적인 입장 표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 관계당국과 협의와 절충을 위한 지역 경제계, 정치권, 행정, 지방의회를 망라하는 범도민적인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전일 문제는 단순히 은행과 고객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인재이자 재난입니다.

지역민 피해와 지역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서민가계와 영세기업 등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영수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대표적 산책코스 중에 하나인 전주천의 금학보 주변 환경실태에 대해

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학보는 삼천과 전주 천의 합류지점인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의 삼각지점으로써 서신·삼천·송천·팔복동을 비롯한 원거리의 시민들이 1일 평균 20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전주시민의 대표적 산책코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곳은 덕진구와 완산구를 잇는 쉼다리를 설치하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학보 하류에서 추천대교 우안 고수부지 구간에 38억을 투입하여 생태대 습장 사업의 일환으로 수생지구 생태습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의 현실은 전주시의 계획대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야생화를 심고, 테마공원을 조성한 들 오수관의 범람으로 인한 퇴적층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조성된 야생화 단지에서 꽃의 향기가 아니라 하천에 침전된 퇴적물의 악취를 맡아야 하는 실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천의 수량확보를 위해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폐수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관거 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의 하류인 금학보 위 부분에는 퇴적층의 증가로 인해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의 서식지로 아주 적합한 하절기에는 악취로 인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은 물론, 그 주변을 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콘크리트 고정보로 설치되어 있는 금학보를 수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학보는 콘크리트 고정보로써 장기간 퇴적에 의한 오염 등 악취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전주천의 유수량의 증감에 따라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 설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금학보 상류의 퇴적층 예방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속의 변화로 수질이 개선되는 물론 주변지의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의 발빠른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우리 시민의 쉼터이고, 문화적 공간인 전주천 친환경조성사업이 퇴적물로, 악취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완산칠봉 한 쪽 끝자락인 초록바위 일대를 근대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등을 탐방하러 온 전주 방문객들이 300만명에 이른다는 일부 통계를 반영하듯이 전주를 찾는 외부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주의 보물같은 근대 역사문화유적지 하나인 초록바위 인근의 유적지를 새롭게 발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완산칠봉 한쪽 끝자락인 초록바위일대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적 발자취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 소위 동학, 동학농민과 서학, 천주교가 동시에 수난을 받았던 처형장이었습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섰던 동학 농민 혁명의 세 주역인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장군중 가장 강경파로 분류되어 남녘땅을 새롭게 열고자 했던 김개남 장군은 충남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본 의원의 고향마을인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매부집에 숨어 있다가 구한말 봉건적 유림이자 민족주의적 의병장인 임병찬장군의 밀고로 관군에 잡혀 전주로 이송되어 바로 이곳 초록바위에서 1895년 1월 8일 동학 농민군들과 함께 처형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 초록바위 인근에는 두 개의 천주교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1866년 순교한 성인 남종삼(요한)의 14세된 아들 남명희와 홍봉주(토마스)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시 15세 이하는 처형하지 않는 국법에 따라 전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나이가 차자 초록바위 밑 전주천에 수장시켜 처형 시켰던 유적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곡교 인근으로 17세의 나이로 1867년 치명하여 성인품에 오른 조윤호의 순교자이며 그의 부친 조화서도 1866년 전주 장터에서 치명하여 부자가 함께 성인품에 오른 세계 천주교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해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이팝나무 군락지에서 5월이면 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소복을 입은 것처럼 이팝나무의 하얀 눈꽃송이가 만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록바위와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치명자산에는 동정부부인 유요한과 이루갈다를 포함한 유항검 일가 7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치명자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첫 순교자가 나왔던 전동성당터와 함께 이곳을 보기 위하여 해마다 약 10만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찾



아오는 보물같은 전주의 역사 문화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자산과 전동성 당 등은 비교적 잘 정비되고 보존되어 있지만, 동학과 서학의 수난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초록바위 일대는 천변 좌안도로에 의해서 끝자락마저 잘려져 나간 채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복개 구간 일부를 복원시켜 수장터를 재현하고 순교 기념관 등을 개설하여 수 많은 순례객들에게 역사 순례코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것과 아울러 녹지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연계된 역사 문화 코스가 개발된다고 하면 전주의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탐방코스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규 의원

전주성 4대문 복원 유구하라고 하는데 유적지 복원에 대해서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기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감영 및 전주성 4대문 복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으로 새로운 신년에는 첫삽을 떴으면 하는 생각으로 전라감영에 대해서, 4대문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감영에 대한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동안 논의만 풍성하게 했습니다. 두 번에 학술용역, 문화재 시굴 유구조사 용역이 있었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가 있었지만 사업의 축소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논의만 풍성했습니다. 최근 일간지들은 답답하니까 집중하여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에 대한 특집과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해외사례까지 다양한 견해를 꺼내면서 많은 과제와 윤곽이 서서히 구체화 되는 듯 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로 도민들과 시민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기사에 보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목소리에서부터 예산확보만 기다릴 수 없고 시민적, 도민적 공감대를 함께 시작하는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주장 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행정을 압박하여 6. 지방선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이 공약이행으로 메니페스토(Menifesto)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감영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감영 복원이 늦어 지는 것은 예산을 비롯한 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서 입니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전주성 4대문 복원의 논의가 시작되어 전라감영 복원 및 전주

부성 4대문 복원 추진위가 사업의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개의 대안 중 1안은 완전복원이요, 완전복원은 동문, 서문, 북문을 복원하는 것이고 2안은 성문만 복원하지는 안이고, 3안은 절충안 복원이고, 4안은 북문만 복원하자, 북문은 오거리광장있는 곳입니다. 5안은 상징적 복원입니다. 추진위원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3안의 절충적 복원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기전에서 한옥마을 구도심을 연결하는 경기전 현재의 사고석 담장을 성벽으로 연장복원하고 높이는 경관과 보행자를 고려해서 낮게하고 장소와 역사성, 상징성을 복원하는 경계적 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전에서 동문거리, 한스타 일진홍원까지 연계하는 성벽복원과 동문을 복원하는안입니다. 문제는 동문사거리 부근에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을 유구조사라고 합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와 유적지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토지매입에 공유재산 절차를 받을 수 있고 경계측량을 하고 성문의 규모와 복원의 위치, 재원의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유구조사로 유적이 확인되면 그리고 유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풍남문처럼 전라감영지와 연계하여 문화재 지정도 추진하고 국비의 지원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풍남문이 국가보물 308호이므로 같은 위상의 문화재로 정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유구조사가 없는 전라감영이나 동문거리는 폐이퍼 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거리 문화관광 시장사업이 동문거리 활성화 사업과 중첩되어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잘못 시행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연간 250만 명 이상 한옥마을을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동문거리가 활성화되어 문화관광시장의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이 거듭나길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아중체련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실태에 따라 시설보수가 절실하며 방치된 2차 사업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체련공원시설 투자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중체련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라 총 42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 전주시는 당초 총 110억원의 규모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2차 사업으로 X-게임장, 배구장, 배드민턴 장 등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진행을 계획하였지만 2005년 1차 사업이 완료될 당시 전주시는 아중시립도서관을 BTI사업으로 2차 사업부지에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현재 약 2000여평 2차 사업부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중 택지개발사업은 당시 사업순익이 200억대에 이르렀지만 개발이익금은 도시기반정비와 주민복지시설에 적절하게 재투자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당시 아중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전주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 적용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회계에 100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포함됨에 따라 사업의 이익금이 아중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월드컵경기장 등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되면서 지역여론의 거센 반발에 따라 그 보상차원으로 아중체련공원 사업이 급조로 사실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 전주시 3곳의 체련공원 월 평균 사용인원수 현황을 보면 덕진이 3만 3339명, 완산이 1만 2549명, 아중체련공원이 1만 8758명으로 아중체련공원은 완산보다 사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련공원에 비해 시설 규모나 투자시설 면에서 현격하게 뒤쳐져 있습니다.

덕진은 인조잔디구장이 2곳이나 되며, 실내배드민턴장, 야외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완산 또한 피파(FIFA)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과 유소년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등이 고루 갖춰진데 반해 아중체련공원은 시설에 다목적구장, 풋살 구장, 게이트볼장이 전부이며 체련공원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는 시설면에서 너무나 열악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려 산책로라고 표현해도 적합할 정도입니다.

2008년도~2009년도 시설 보수 및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덕진은 11억 170만원, 완산은 16억 5160만원, 아중체련공원은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중체련공원은 다목적 인조잔디축구장과 풋살구장은 시공 당시부터 질이 낮고 가격이 싼 잔디를 사용하여 부실의 지적을 받아왔으며 잔디길이가 3cm로 아주 작아 지속적인 인조잔디의 카펫 현상으로 잔디훼손이 심하여 시민들은 부상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정기관리나 사후관리 체계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중체련공원에 기존 2차 사업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등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 투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아중체련공원을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중체련공원의 전면적인 시설보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방치되어 있는 2차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족했던 체육시설 보강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백호의 기상으로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족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가정에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큰 뜻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따뜻한 시정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가족에게도 희망이 있고 공무원 여러분께 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을 출신국 현황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48명, 조선족 281명, 베트남 274명, 필리핀 101명, 일본 48명, 기타 83명해서 13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전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을 꺼안을 자제가 아직 덜 성숙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시민들의 분위기도 그러하고 시정 또한 적극적인 행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머느리들의 부정확한 발음으로 바담풍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시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학습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고 퇴직한 선생님들의 높은 노후우를 전수시키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의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코리안드림과 전주드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주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머느리들에게 친절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별, 권역별, 단체별로 맺어주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서 김장 담글 때, 쇼핑할 때, 가정에서 식사할 때 등 같이,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인력 활용방안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선생 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일정정도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전주시민의 날에 함께 참여시켜 이질감에서 동질감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입장해서 같이 달리고, 고리도 넣고, 줄다리기도 같이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넓히면서 거리감을 좁혀 나가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국의 문화를 전주시민에게 이해시키는 캠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여름캠프, 가족캠프, 각종 캠프를 만들어 2세대간의 시각차, 온도차를 좁혀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조사 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드조사 후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여섯째, 교육, 의료, 금융, 노동에 이르기까지 전주시가 이분들을 껴안을 포괄적인 정책입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편안하고 편리한 논스톱 (non-stop)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역기능이 많은 것도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입안을 기대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혜숙 의원

보건의료에서 소외된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박혜숙 의원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건강,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건강과 의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는 전주시가 향시고 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제259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의 절실함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보건 전반의 업무를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덕진구 관내는 덕진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며, 농어촌동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설치되었던 진료소가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완산구는 상림, 중인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덕진구는 금상, 도덕동등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8년 9월에는 평화동에 보건지소가 신축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가 개설됨으로써 북부권 시민들이 남부권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시민들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 해당 부서에 건의 하고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전주시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부권 주민들에게 불만과 원성만 가중될 우려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 설치에 송천동에 근접한 위치가 논의되고 있었으나 전주시는 방향을 선회하여 신도청 주변으로 완주군청 주변에 있는 기관등이 이전된 후 적당한 건물을 사용하여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활용하여 전북대병원 근접한 곳으로 의료타운 형식으로 만들 계획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계획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서민을 위한 의료복지정책에 걸 맞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송천동에 사는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 인구비례 등을 생각하고, 농촌마을과 근로자가 많은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설치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주시가 계획 중에 있는 전북대병원에 근접한 지역은 현재 법인이긴 하지만 가족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권 보건지소 개소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월 17일자 언론보도는 본 의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안 보건지소 2곳, 보건진료소 2곳이라는 제목의 부안 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부안군은 농특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한 예산으로 보건지소 2곳과 보건진료소 2곳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된 본 의원의 심경은 실로 착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전 시책,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의료혜택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 북부권 송천동 보건지소 건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69회 임시회(2010. 3. 29 ~ 2010. 4. 5)

●●● 박혜숙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에 살고있는 민주당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속에서 철저히 사장되고 있는 전주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기증 운동이란 희생을 통해 밝고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꺼져 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재 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기증 등록 희망자가 2009년 기준 191,559명으로 2007년 88,951명보다 무려 102,6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한해 평균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람이 800에서 9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 장기이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9년 2월 7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다소 장기 기증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운동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전주시는 제정된 조례의 근본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실적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스스로 행정의 무관심과 조례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자칫 지역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소리마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규정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또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례의 근본 취지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지역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제도적 한계점을 스스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즉시 이뤄져야 하며 이후 추진될 장기기증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전주 송화원 사용료 면제,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예산조차 삭감되어 지원자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장기기증희망자 모집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 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전주시의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시책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 반드시 추진하여 전주 시민의 마음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모든 시민의 가슴에 사랑의 등불이 타오르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정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송경태 의원

먼저 며칠전에 서해 해상에서 천안함호가 침몰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46명의 실종자들이 모두다 생존해서 가족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를 드립니다.

신뢰받고 시민의 사랑을 섬기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벌써 본 의원도 장애인으로서 의정 활동에 임한 지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성의껏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전무함에 따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역 장애



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제공으로 문화 향유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자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 지원에 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작년보다 삭감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무슨 장애인 문화 활성화를 논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이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문화예술 향유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대별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 실태에 따라 그들 또한 문화예술향유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지역 사회 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며, 보다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관람석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은 헌법에서부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이나 문화권 보장을 준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별화된 문화 예술 특화복지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 복지시설에 문화, 복지 교 육 시설과 생활문화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주도하는 방안, 창작 지원금지원 등 행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여전히 몇몇 집단의 전유물 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소외된 계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마치 농사와도 같다고 합니다. 파종을 하자마자 곧 열매를 따려는 사업은 어리석은 것이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햇볕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장애인 문화 활성화라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 파종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과 관심 역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동찬 의원

5분발언하기 전에 먼저 백령도 천안호 침수 사건과 관련해서 좀 조속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국민과 가족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에 시급한 두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담보 상태에 직면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모두 35곳이지만 공사 착공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오랜 기간 관련 사업들이 담보상태에 있다 보니 시공자, 토지주측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감독기관인 전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실로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형국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낙후된 도시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본래의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조합과 조합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 전주시의 행정 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상호간의 소통과 부재를 들고자 합니다.

서로간의 이익만을 위해 대립하는 것은 자칫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지역주민과 전주시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전주권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으로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재함으로써 각 사업에 현안 문제를 지극히 나날 수 있는 소통과 장이 마련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그동안의 행정적 미숙함을 인정하고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호설치운영에 관하여 적극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주시의 재건축 사업

이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마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실내체육관 구도심 이전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한지 37년이나 지난 전주실내체육관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신축 방침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신축부지 선정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2013년까지 총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확보와 위치선정 문제로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실내체육관을 구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숙원사업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특화거리조성, 노송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주 실내체육관을 구도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구도심 활성화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구도심권에 실내체육관이 이전됨에 따라 실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증가되며, 구도심의 정비와 주변 지역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골칫거리로 여기 왔던 현 구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하여 적극 검토해 보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 사업과 연계되어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볼 때 충분한 긍정적 가치를 지닌 전주 실내체육관 구도심 건립은 구도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직시하고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봄 비가 내린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학교마다 새싹 같은 새내기들의 활동이 활기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에 보여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재기발랄하고 진취적인 모습보다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청소년 폭력, 집단 따돌림, 청소년 자살등 입에 올리기도 싫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얼마전에는 도를 넘어서 줄업식 뒷풀이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집단을 이루어 거리를 활

보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사마다 넘치는 어른을 능가하는 폭력과 일탈행위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입니다. 청소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여 준 것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라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였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현재의 관점,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는 자연스럽게 성적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고민하고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에 자유로운 상상력은 모두 교과서와 학습지 속에 가둬놓고 학원과 학원을 쳇바퀴 돌 듯이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출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최고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전주시는 덕진, 전주, 완산, 효자 등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솔내 청소년 수련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만 5091명의 전주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문화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특성별 문화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자유센터는 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을 중심으로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이 가능한 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9년부터 서울특별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열어 연간 13~14억원을 지원해 총 36억원의 규모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로설계, 직업찾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부족한 상담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창안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신동의 경우 관내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가 1만 2921명으로 전주시 33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변변한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2009년에 개관한 서신도서관의 경우 시립도서관 6개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습



니까?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인구수가 많고 아동, 청소년 수가 많기 때문이며, 서신도서관이 서신동 뿐 아니라 인근 중화산 동, 효자4동의 아동, 청소년까지 서부권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 서신동사무소는 청소년전용 창안센터 건립의 최 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서신도서관과 연계하여 각종 도서,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인근 공원과 교회를 활용하여 공연과 창작활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송하진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독 구. 서신동사무소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빈 건물로 있어야만 합니까? 청소년전용 창안센터는 서신동의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주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하시여 지금이라도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인 전주시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옛말에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나무보다 몇 백배 소중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꿈을 심어 주십시오. 희망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오늘 심은 작은 나무가 미래 전주시를 푸르게 하듯이 오늘 청소년을 위해 투자한 공간이 전주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64만 전주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올해 20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던 때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오늘로부터 열흘전인 지난 3월 26일은 일제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불꽃같은 삶을 마감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월이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열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고 전쟁을 부인하는 일본 헌법 9조의 폐지를 위해 애를 쓰는 일본의 우익세력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동아시아 패권주의와 침략주의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을 지향하는 속에서 일본의 우익세력의 망동을 규탄하고 저지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의 우리의 자화상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잔재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일잔재의 그늘을 걷어내고 올곧게 살아 있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목청껏 불러대고 민족적 감정을 앞세운 성토가 우리의 진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왜곡과 굴절 없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려 버려진 가려내고 들춰낸 것들을 들춰내어 현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의 맥락을 바로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역사속의 임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그 빛을 눈부시게 발휘했습니다. 서정주, 채만식 등 전북 지역 128명의 친일인사를 포함하여 총 4776명의 친일인사들을 정리한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청산을 시민사회의 성금과 끈질기고도 완강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친일인명사전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을 보더라도 완산, 송천, 인후도서관 등 세 곳에만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시립도서관, 그리고 전주시내의 모든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여 비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주시내 모든 초·중·고교에도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교육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이 작은 실천은 전주시민과 전주시 미래의 주인공들에서부터 뒤흔든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잡고 역사정의를 세워내는데 기여하는 거대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전주 시민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제270회 임시회(2010. 6. 17)

●●●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5기에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전주코아백화점의 문제를 아십니까? 2009년 10월부터 전주코아백화점은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코아백화점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직접 관여할 만한 행정적 절차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어떤 곳입니까?

1983년 개점 이래 전북 도내 유일한 토종백화점으로 전북도민의 사랑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키워져 온 곳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은 5개 계열사로 늘어날 만큼 전복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한때 연매출 1,500억원을 자랑하기도 했던 곳이 현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세이브존아이앤씨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코아백화점은 단체협약에 매각시 고용승계의무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전하고 근무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전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이라고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한옥마을에 조성된 국내 최고가 주차장을 기억하십니까?

1만 1,999㎡의 면적의 부지를 전주시는 106억원에 매입하고 1면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부지는 옛 코아아울렛 부지였습니다.

지역 업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코아백화점 계열사에 특혜 의혹이 일 정

도의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했던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에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코아백화점에 근무하는 80여명의 직원 또한 일자리를 가진 전주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전주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의 80여명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해 온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8대 전주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온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 조지훈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만고의 진리를 어김없이 보여준 지난 6. 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 확인한 온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견인하고 함께 실천하는 당선자의 자세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천 불법 채광지역에 대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분명한 대책과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0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언과 시정질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법 채광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전라북도의 광업권 인가 취소와 전주시의 원상복구 노력은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고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건축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30미터 깊이의 웅덩이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심지어 낚시꾼이 목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곧바로 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따른 삼천 상류에 쏟아 붓고 있는 수백, 수십억의 사업비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일 따름입니다. 온 나라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파산하고 고사될 지정입니



다.

환경파괴의 경고와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경제적 비용에 있어 심각한 재앙입니다. 복구 비용이 대략 30억에 달하는데 골재파쇄업을 허가하여 그 부산물로 되메우기를 하라는 전주시의 무기력한 행정에 저는 지난해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절대로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 허가하였습니다.

올해 6개월간 트럭 1대분도 안되는 부산물을 되메우기 하였답니다.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께서는 분명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삼천 수질개선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송천 복구사업 다 좋습니다. 삼천 상류에 위성사진으로도 확연히 식별되는 불법 채광지역은 우리들 가슴에 구멍 난 부끄러운 환경재앙입니다. 근본을 해결하고 첫 단추를 잘 꿰고, 기초에 충실하였을 때 환경이 살아납니다. 절차와 과정, 비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고 복구되지 않아 수년째 모내기 와 씨를 뿌리지 못하는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구멍 나 있습니다. 그 가슴을 어루만지고 영화 세트장과 같은 흉측한 채광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도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 록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명단
의회 사무국 직원 명단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 명단

[완산구]

選 舉 區	姓 名	住 所	電 話		
			自 宅	職 場	휴 대 폰
가 (중앙, 풍남, 노송동)	국 철 (鞠 喆)	서노송동 639라도빌딩	243-3754	231-0330	011-653-5000
”	임 동 찬 (林東燦)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106/103	231-6930	286-7036	011-677-3353
나 (완산동, 중화산1, 2동)	백 현 규 (白炫圭)	중화산동 2가 232 새한그린파크㉠ 2111	225-4409	227-6770	011-659-5079
”	조 지 훈 (曹志訓)	중화산동 1가 329 현대1차㉠101/102	284-9247	288-7021	010-6622-9247
다 (동서, 서서, 평화1동)	김 광 수 (金光守)	서서학동 985-1 효성흑석마을㉠602	282-4990	232-6414-5	017-654-0599
”	최 주 만 (崔周萬)	서서학동 977-1 대승푸른맨션 102/1506	286-8171	232-7778	011-683-2318
라 (평화2동)	김 주 년 (金州年)	평화동 2가 259 삼성강남㉠ 1/1007	224-2374	222-7687	011-651-2374
”	이 원 택 (李源澤)	평화동2가 312-6 우미㉠ 101/1901		281-2002	010-2619-1901
마 (효자1, 2동, 삼천1동)	김 철 영 (金哲永)	효자동 1가 383-6	221-3445	221-5560	016-636-7070
”	유 재 권 (劉載權)	완산구 삼천동 1가585-10 세창짜임㉠ 108/503	228-0808	228-0707	011-652-0700
바 (삼천2, 3동)	장 태 영 (張泰榮)	삼천동 1가 723-2 신일강변㉠ 102/1412	228-3003	229-3096	010-3678-3003
”	김 현 덕 (金賢德)	삼천동1가 656-5	223-3771	225-2234	010-4616-4791
사 (서신동)	강 영 수 (姜永洙)	서신동 e편한세상 @ 105/402	902-5068	271-6370	011-651-2341
”	구 성 은 (具聖恩)	서신동 761-2 쌍용㉠ 602/404	254-4637	230-3550	010-5655-4639
아 (효자3, 4동)	박 현 규 (朴賢圭)	효자동 1가 451 삼성효자㉠102/1505	224-5823		017-652-5823
”	김 상 휘 (金相暉)	효자동1가 418 현대㉠ 103/1506	225-6223		017-650-6223



[덕진구]

選 舉 區	姓 名	住 所	電 話		
			自 宅	職 場	휴 대 폰
자 (진북동, 인후2동)	김 창 길 (金昌吉)	인후동2가 1552-3 웅성연립 나/206	244-2221	244-3198	011-659-9100
"	남 관 우 (南官祐)	진북동 416 우성아파트 109동 1103호	251-3610	251-3585	010-9302-3610
차 (인후1,인후3,우아2동)	김 종 철 (金鍾徹)	인후동 1가 858-2 아중현대㉠ 107/503	246-0451		011-659-7637
"	이 명 연 (李明衍)	인후동 1가 500-1 삼호㉠ 2/1109	242-9799	908-8800	010-2022-9934
"	서 윤 근 (徐潤謹)	우아동3가 359 우정 신세계㉠ 101/2016	247-7156	272-5180	010-6515-8853
카 (우아1동, 호성동)	여 성 규 (呂誠奎)	호성동 1가 851 진흥더블 파크 2단지201/302	243-3401	253-8131	011-675-1356
"	김 명 지 (金明志)	우아동3가 285-8 럭키우아㉠ 2/402	243-4427		010-4655-7788
타 (금암1, 2, 덕진동)	정 우 성 (鄭遇成)	금암동 720-35	254-4412	277-6788	010-5190-2999
"	최 찬 욱 (崔贊旭)	금암2동 121-185	252-2525	236-1188	011-675-0001
파 (송천1, 2동)	국주영은 (鞠朱榮恩)	송천동1가621-1 한양㉠111/1102	277-5424	272-7711	011-652-5424
"	김 남 규 (金南圭)	송천동1가 141 현대2차㉠ 204/106	277-1428	286-7034	011-679-1428
"	양 용 모 (梁龍模)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126/1001	902-2612		011-683-2115
하 (팔복, 동산, 조촌동)	유 영 국 (柳永國)	여의동669 여의동제일㉠103/1508	901-9980	211-1361	010-7737-6250
"	송 상 준 (宋尙俊)	여의동 593	212-6310	212-0030	010-8369-2547
비례대표	권 정 숙 (權貞淑)	완산구 효자동1가 640 남양향실㉠ 1/1704	228-3814		011-689-6722
"	송 경 태 (宋京泰)	완산구 중화산동2가 190광진산업㉠104/1303	225-9137	288-9083	010-5262-2211
"	박 혜 숙 (朴惠淑)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주공1차 105/1303	275-5304	232-2030	011-9669-1734
"	오 현 숙 (吳賢淑)	덕진구 호성동1가 900 호성주공㉠ 210/103	245-3614	272-5180	018-623-3614



의회사무국 직원명단

직위 및 업무	성 명	사 무 실	자 택	휴 대 폰
의사국장	이 덕 규	230-3700	278-9260	011-9627-9260
의사과장	윤 재 신	230-3705	272-5432	010-8489-5433
의장비서실	김 장 원	230-3503	252-4846	016-651-4846
의장님수행	최 삼	230-3504	226-3202	010-3651-1721
의장님수행	주 인 중	230-3505	221-3143	010-3670-0390
의장 비서실	윤 소 영	230-3506	274-1369	011-9436-0929
부의장실	임 영 자	230-3514	243-0437	010-3617-0437
운영전문위원	신 점 수	230-3525	223-1673	010-9223-1673
운영위원회 안건검토	오 윤 식	230-3526	275-6491	010-3070-2508
운영위원장실	황 점 복	230-3524	224-8172	010-7247-8172
행정전문위원	노 홍 래	230-3535	225-6683	010-9678-6683
행정전문위원실 안건검토	유 종 철	230-3536	226-5787	010-2974-0578
행정위원장실	이 정 자	230-3534	232-6943	016-9242-4152
복지환경전문위원	이 은 현	230-3545	286-0721	010-2661-2146
복지환경위원회 안건검토	김 형 철	230-3546	224-6361	011-9642-8077
복지환경위원장실	박 수 경	230-3544	226-0206	011-689-8356
문화경제전문위원	박 노 열	230-3555	229-4781	010-3650-4871
문화경제위원회 안건검토	권 기 준	230-3556	241-0896	011-682-0891
문화경제위원장실	여 인 희	230-3554	243-3401	011-1778-3401
도시건설전문위원	박 성 균	230-3565	070-7521-6948	010-2720-6948
도시건설위원회 안건검토	문 성 진	230-3566	275-5571	010-4144-5571
도시건설위원장실	강 은 영	230-3564	255-8268	010-8640-8268
의정담당	박 현 규	230-3710	226-4965	016-650-3339
의전, 의원직원관리	전 명 균	230-3711	222-6146	010-9554-2392
예산사무	이 기 섭	230-3712	226-1938	011-689-1931
의장단업무, 재산등록등	김 주 한	230-3713	245-0719	010-6734-0719
관용차량운행	정 영 모	230-3714	272-5542	010-4315-5542
일반사무 직원의원 급여	임 순 자	230-3715	225-1009	010-4426-1009
국장실	고 서 연	230-3702	255-5623	010-4733-6001
의회청사 방호	박 재 성	230-3740	221-8785	011-653-8568
의회청사 방호	최 현 길	230-3740	221-1747	010-9855-1717
의회청사 방호	김 상 균	230-3740	901-8138	011-9646-8138
의회청사 방호	안 도 형	230-3740	904-1791	011-650-1791
의사담당	채 득 석	230-3720	242-7789	011-9627-7780
의안접수 관리	정 진 호	230-3722	242-6859	016-685-6861
본회의 운영 업무	이 석 재	230-3721	222-2260	010-6487-2261
회의록 관련 업무	배 경 남	230-3723	243-0996	010-9221-0631
회의록 관련 업무	정 순 호	230-3724	226-2365	010-2670-2365
회의록 관련 업무	손 상 범	230-3726	242-3724	010-5858-3724
회의록 관련 업무	권 은 선	230-3725	243-7097	010-4632-7097
홍보담당	백 덕	230-3730	904-1114	011-683-3429
기획보도 및 홍보	김 승 섭	230-3731	245-5210	010-8455-2522
인사문안 작성,의회 체험	장 미 연	230-3732	284-7721	010-6282-7720
의회방송, 통신시설관리	안 방 현	230-3739	255-0114	011-675-1515
의회 홈페이지관리	문 길 순	230-3733	246-3829	010-9462-3829
의회활동전반 사진관리	김 인 규	230-3734	903-4520	011-9474-3448
의회 도서자료실 관리	김 희 정	230-3748	227-1360	010-6678-2301
시정발전연구원	안 성 효	230-3735	070-4065-2345	010-9659-4066



第8代議政白書

발행처 / 全州市議會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60-700

발행일 / 2010년 9월

인쇄처 / 정보출판사(271-5012)

